



한국수출입은행 50년사

50th Anniversary Korea Eximbank

1976 ————— 2026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 수은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치열한 현장에 늘 함께했습니다.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작은 경제가 세계 5위권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목마다, 수은은 흔들림 없이 그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조선과 플랜트, 자동차와 방산, 원전, 반도체와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와 세계화의 모든 여정에는 우리 임직원들의 땀과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50년의 기록입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림 없이 정책금융의 소명을 다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하고 진화해 온 한 기관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50년사를 편찬하면서, 우리 수은이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오늘날의 통상전쟁과 공급망 블록화 등 수은은 언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 기업의 활로를 열어 왔습니다. 그 어떤 파고 앞에서도 수출현장의 최전선을 지켜 온 것, 그것이 바로 수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수은은 새로운 50년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관세정책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은은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이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최일선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중동 위기 상황과 통상 위기의 파고를 넘어 수출활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총력 지원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과 경제안보 강화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AI·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조선·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콘텐츠·뷰티·푸드 등 K-컬처 차세대 핵심 수출산업 육성, 글로벌 사우스로의 경제 영토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생산적 금융 실천을 통해 다가올 100년의 성장과 도약의 여정을 대한민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50년은 수은만의 성과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일궈낸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험난한 글로벌 수출 시장의 최전선에서 수은을 믿고 동행해 주신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모여 오늘의 수은을 완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고객기업과 정부 및 유관 기관, 수은 직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한국수출입은행 50년사>가 수은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소중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며, 더 나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6년 8월
한국수출입은행장 황 기 연

황 기 연

한국수출입은행 50년사

50th Anniversary Korea Eximbank

1976 ————— 2026

일러두기

구성
『한국수출입은행 50년사』는 1책 1권으로 제작했다. 한국 수출입은행의 50년 역사를 주요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는 명장면 50을 시작으로 50주년 기념화보, 1976년부터 2026년까지의 역사를 5개 시기로 나누어 서술한 통사, 주요 업무를 7개 분야로 구분하고 주요 성과를 인포그래픽으로 풀어내 함께 수록한 업무사, 그리고 임원 현황·국내외 네트워크·재무 실적·연표 등을 담은 부록 등으로 구성했다. 책자 내 데이터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간 시점의 최신 내용도 반영했다.

표기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따랐으나,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그 표기를 준용했다. 대부분의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명이나 지명 등 필요에 따라 영문을 혼용하였으며,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만, 억, 조 등 보조 단위를 사용했다.

발간사	002
한국수출입은행 명장면 50선	008
한국수출입은행 50주년 기념화보	060

통사 HISTORY

제1장 고도성장과 수출입금융 시대를 열다 1976~1985

제1절 고속성장 열차, 수출을 동력으로	077
1. 정부주도 경제개발 착수	077
2. 수출중심 경제개발 추진	078
3.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산업화	081
4.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083
5. 시장 안정화와 중화학공업 성장	084

제2절 중화학수출 진흥의 사명감을 안고

1. 수출입금융 시대의 개막	087
2. 수출입금융 지원기능 강화	089
3. 업무대행기 연불수출금융	091
4. 한국수출입은행 출범	093
5. 수출입금융 지원체제 정비	096
6. 수출금융 지원 활성화	099

제2장 세계와 연결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성장하다 1986~1996

제1절 변화와 개혁의 시대, 세계화를 향해	103
1. 국제수지 흑자 전환과 개방화	103
2. 산업구조 개편과 고도성장	104
3. 이념을 넘어 북방·남북교류 증진	106
4. 세계 경제질서 중심국 부상	108
5. 안정적 성장과 해외투자	110

제2절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힘찬 전진

1. 제3차 「수은법」개정과 역할기능 강화	113
2.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수행	114
3. 수출입 저변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116
4. 남북협력기금 수탁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확대	118
5. 첨단기술 지원과 해외투자 활성화	122
6. 국가대표 공적수출신용기관 전환	124

제3장 외환위기 파고를 넘어 국제거래 지원 핵심기관으로 도약하다 1997~2007

제1절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127
1. IMF 외환위기 발생	127
2. 금융기업 구조조정 단행	129
3. 구조개혁 성공과 경제위기 극복	132
4. 내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134
5. 수출경쟁력 확보로 성장세 지속	135

제2절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발돋움

1. 외자조달 수단 다변화로 국가 위기극복에 앞장	138
2.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	140
3.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본격화	144
4. 남북교류·기금사업 활성화	146
5. 수출입금융 지원역량 강화	148
6. 세계적 공적수출신용기관 위상 확보	151
7. 수출입금융 지원 성과의 비약적 발전	153

제4장 글로벌 불확실성 속 정책금융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2008~2019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의 태풍 속에서	157
1. 경제위기 조기 극복 위한 유동성 공급 및 수출금융 지원 강화	157
2. 수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과 히든챔피언 찾기	160
3. 사업지원 가치사슬 완성	162
4. 「수은법」개정과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164
5. 국내 외화 조달시장 선도	165

제2절 지속가능 금융인프라 구축 노력

1. 조선업 위기와 수은	167
2. 리스크관리본부 신설과 혁신안 발표	169
3. 기업 구조조정의 참신한 선례 제시	170
4. 흑자 전환, 극적인 자산건전성 회복	172

제3절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1. 수은이 나아갈 길	174
2.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176
3. 해외 인프라 산업 지형 변화에 대한 대응	179

4. 중소·중견기업 지원 저변 확대 노력	182
5. 대외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184
6. 남북관계 정체기의 경험사업과 회복 노력	190

제5장 뉴노멀 국제질서 대응을 위해 기능을 강화하다 2020~2026

제1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대응	195
1. 신종감염병 급습과 위기 극복 노력	195
2. 수출 위기대응의 선두에서	197

제2절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경제안보 첨병으로

1.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안과 기회	201
2. 경제안보 사수 위한 수은의 역할 확대	202

제3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의 새로운 미션 수행

1.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의 의미	206
2. 최초의 기금 지원성과와 재원 마련	209
3. 기금 규모 확대와 새로운 가능성	210

제4절 수출금융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

1. 「수은법」개정 통한 수출지원과 투자제약 장벽 해소	213
2. 첨단전략산업 육성 핵심기관으로 부상	216
3. 글로벌 인프라·플랜트시장 최전선에서 활약	218
4. 수은 디지털 혁신 열전	221
5. ESG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223

제5절 수출금융을 넘어서

1. 경제 강국 위상에 걸맞은 대외경제협력분야의 영향력 확대	228
2.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굳건한 토대	240
3. 자본시장 업무기반 강화	244
4. 수출 대한민국의 50년 동행,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	246

현황화보

업무사 BUSINESS		제3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		제2절 리스크관리		제3절 국내외 조직	
제1장 수출입금융 업무		제1절 기금 설립 준비과정 및 출범		447		490	
제1절 지원제도의 변화		290		1. 리스크 분석과 관리		447	
1. 2010년대 이전의 지원제도		290		2.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452	
2. 지원제도 전면 개편		298		3. 기술·환경심사		453	
				4. 여신감리		454	
				5. 여신관리와 기업구조조정		455	
제2절 수출입금융 운용과 실적		제2절 지원실적과 전망		제3절 인사관리		제4절 노동조합	
1. 수출 관련 대출		299		458		498	
2. 수입 관련 대출		310		1. 인력관리		1. 조합의 출범과 구성	
3. 해외사업 관련 대출		313		2. 연수관리		499	
4. 채무보증		323				PROJECT STORY	
5. 이행성보증		326		제4절 ESG경영			
6. 외국환		329		463		부록 APPENDIX	
				1. ESG경영의 도입		1. 임원 현황	
				2. ESG금융과 친환경경영		518	
				3. 사회공헌활동		2. 역대 행장	
제3절 개발금융		제2절 기금의 성장과 발전		제5절 디지털금융		524	
1. 도입 배경과 목적		401		469		3. 역대 임원	
2. 경험증진자금		403		1. IT부문의 성장과 발전		530	
3. 개도국민간투자자금대출		403		2. 디지털금융의 진전		532	
				제6절 자산관리		542	
				473		7. 자본금 구성 현황	
				1. 본점과 인재개발원		544	
				2. IT센터 신축		546	
				제7장 조직과 운영		552	
				제1절 정책결정기구		556	
				478			
				1. 운영위원회			
				2. 이사회·경영위원회			
				3. 기타 주요 위원회			
				제2절 본점 조직과 직제			
				481			
				1. 수출입금융 지원체제 구축(1976~1989)			
				481			
				2. 업무·조직 확대와 효율성 제고(1990~1996)			
				482			
				3. IMF 대응체제 구축과 본부제 도입(1997~2007)			
				483			
				4. 사업개발 추진과 조직 슬림화 단행(2008~2019)			
				485			
				5. 개발금융·자본시장 조직 확대(2020~2025)			
				487			
제2절 자금조달		제6장 경영관리 업무					
1. 국외 자금조달		360		제1절 경영전략			
2. 국내 자금조달		377		442			
				1. 경영계획의 수립			
				442			
				2. 경영혁신활동			
				445			

한국수출입은행 명장면 50선

대한민국과 함께 쌓아온 50년, 신뢰의 발자취



1. 「수출입은행법」 제정·공포	26. UAE 원자력발전설비 수출금융 지원
2. 업무대행 개시	27. 선박채권보증 세계 최초 도입
3. 최초 지원사업	28. 직접투자 첫 승인
4. 한국수출입은행 공식 출범	29. 콘텐츠 수출 특례금융 신설
5. 국내 최초 연불어음 국제금융시장 매각	30. 경험증진자금(EDPF) 도입
6. 런던·뉴욕 사무소 동시 개소	31.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금융지원
7. 전대대출 첫 승인	32. 특별계정 설치
8. 직접대출 첫 승인	33. 코로나19 비상 대응자금 공급
9. 본점 준공	34.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로드맵 수립
1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탁	35. 미국 반도체기업 인수자금 지원
11. 최초 EDCF 지원	36. 사우디 Aramco·UAE ADNOC FA 체결
12. 남북협력기금(IKCF) 수탁	37. 新 경영전략 수립
13. 최초 남북협력기금 지원	38. 역대 최대 규모 방산수출 금융지원
14. 미국 자본시장 진출	39. PIPP·PDIF 도입
15. IMF 외환위기 극복 선도	40.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6.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첫 승인	41. EDCF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지원
17. KEDO 경수로사업 용자계약 체결	42. 카타르 담수·발전사업 지원
18.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F) 첫 승인	43.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19. 대외채무보증 도입	44. IT센터 개소
20. 최우수 차입기관 그랜드슬램	45. AI산업 특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21. 외국환평형기금 수탁	46. 2025년 「수은법」 개정
22.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개시	47. 글로벌본드 35억 달러 발행
23.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48. EDCF 혁신전략 선포
24. 금융자문·주선 업무 도입	49. 대기업·협력사·수은 3자 상생금융 모델 가동
25. EDCF 지원제도 고도화	50. 수은 창립 50주년

01 「수출입은행법」 제정·공포

중화학공업 연불수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969.07.28



1960년대 세계 자본재시장은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연불조건이 수출 계약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제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수출 진흥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꾀하던 정부는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중장기 연불수출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69년 7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출입은행법」을 가결하고 7월 28일 공포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02 업무대행 개시

수은 탄생 전 과도기

1969.10.29



1969년 7월 「수은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수은 업무는 동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했다. 한국외환은행은 중장기신용부를 신설하고 정부로부터 1억 원의 재정자금을 지원받아 업무 대행을 개시했다. 업무 대행 기간(1969.10~1976.06) 자금지원 실적은 총 487억 원으로, 조선·해운업이 활성화돼 유조선 2척, 화물선 28척, 어선 15척 등 총 45척의 선박에 대한 수출자금을 지원했고, 산림개발, 원양어업, 선박용선 등 사업에 해외투자자금을 지원했다.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

1971~1972



업무대행 개시 이후 최초 지원사업은 1971년 지원한 동화기업의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해외투자자금(3억 8,800만 원)과 승리기계의 아프가니스탄 직기 155대 수출자금(3억 3,500만 원)이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직기 수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플랜트수출이자 연불수출 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연불수출 지원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대형 조선소 건설에 힘입어 선박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

개발도상국 최초 연불수출금융 전담 ECA

1976.07.01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조선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수출금융 수요와 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다. 업무 대행체제의 한계에 직면한 정부는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했고, 그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식 출범했다. 3부 1실, 80명의 인력으로 출발했으며, 본점은 서울 중구 양동 대우센터빌딩 16층에 설치됐다.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은 554억 원 이었고, 정부는 1981년까지 중화학공업 연불수출액 목표를 27억 6,000만 달러로 책정하고 수은에 이를 위탁했다.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공식 출범한 순간이었다.

국내 최초 연불어음 국제금융시장 매각

해외자금 조달 시장 개척

1977.06.15



출범 이후 급증하는 수출금융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은은 정부 재정자금 외 해외자금 조달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1977년 6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1억 4,900만 달러 규모의 연불어음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당시 연불수출금융 전담기관이라는 업무특성을 반영해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를 넘어 국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첫 사례였다. 연불어음 매각은 수은이 해외 기채활동을 본격화한 1990년대 이전까지 해외자금 조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수은은 이후 1978년 최초 은행차관(2억 달러) 도입, 1984년 일본 자본시장에서 최초 엔화표시 채권(50억 엔) 발행 등에 성공하며 해외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해 나갔다.

런던·뉴욕 사무소 동시 개소

글로벌 금융 양대 거점 최초 진출

1978.06



수은은 출범 초기부터 해외자금 조달 강화와 수출금융 지원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글로벌 거점 설치를 추진했다. 1978년 6월 1일, 세계 금융 중심지인 런던과 뉴욕에 해외사무소를 동시에 개소했다. 양 사무소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지원과 투자자 관리활동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수은은 홍콩(1978), 도쿄(1979), 자카르타(1982), 모스크바(1991), 멕시코시티·호치민(1992), 베이징(1993) 등으로 해외거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수은 금융 지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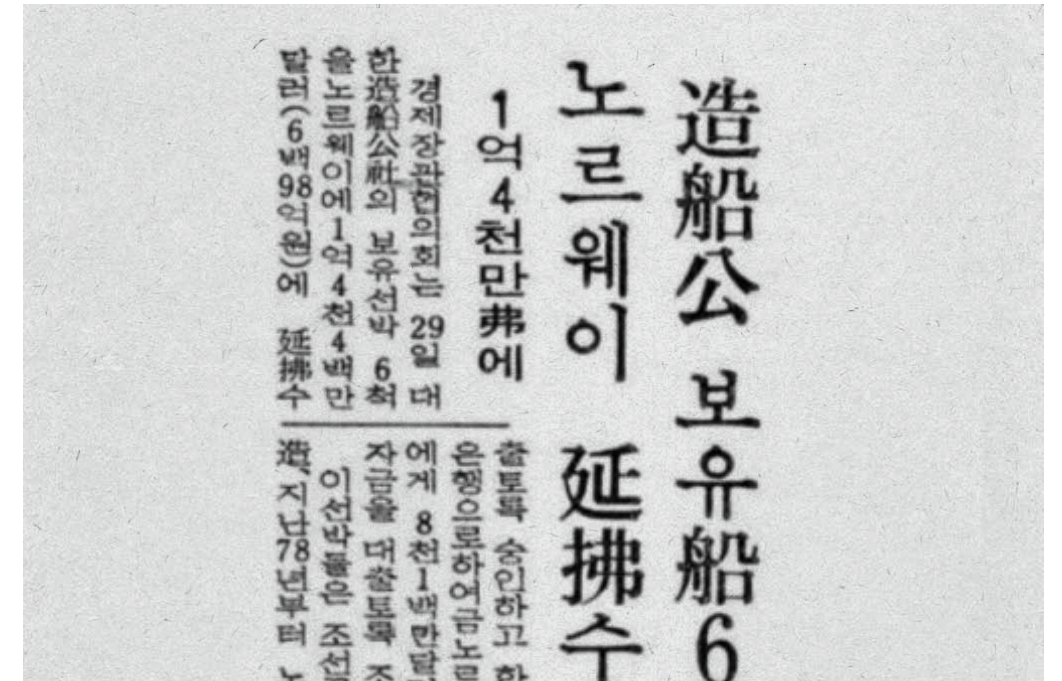
1979.02.06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에 국한됐던 수은의 업무도 제2차 「수은법」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다양화됐다. 이 가운데 1979년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 공여를 개시한 것은 금융 국제화의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최초의 전대금융 계약은 200만 달러 규모로 칠레 Banco Israelita de Chile와 체결했다. 이후 자메이카, 이집트, 아이티, 수리남 등 소재 은행과 잇달아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강재, 전자제품, 건설장비 등 수출을 지원했다.

대한조선공사와 노르웨이 선주 간 선박거래 지원

1979.09.30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선박·플랜트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자를 차주로 한 제작금융과 연불수출 금융 취급만으로는 수출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구매자금용(Buyer's Credit)의 일환으로 해외 구매자를 차주로 하는 직접대출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직후 대한조선공사가 노르웨이 Stolt Nielsen 그룹에 화학탱크선 6척을 매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8,100만 달러를 해외 차주 앞 지원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직접대출로 기록됐고, 당시 언론은 '이 거래로 조선공사가 약 600억 원의 부채를 상환 하며 재정위기에서 탈출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매자신용 방식 도입은 이후 수은이 조선 및 대형 건설사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여의도동 16-1, 대지면적 2,756평,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

1985.08.31



설립 이래 대우센터빌딩을 임차해 사용해온 수은은 업무량 및 인원 증가에 따라 본점 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198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여의도동 16-1 소재 시유지 2,756평을 구입하고, 1982년 12월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약 3년간의 공사를 거쳐 1985년 8월 31일 신축 청사가 완공됐다. 연면적 약 1만 369평의 지하 3층·지상 10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국제금융기관으로서의 대외공신력 제고 및 임직원 복리증진에 기여했다. 이후 본점은 지속적인 사세의 확장으로 2014년 1차례 증축됐다.

대한민국 개발협력의 시작

1987.06.01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됐다. 이에 정부는 1986년 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제정·공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공적수출신용 업무 경험과 해외 프로젝트 심사 노하우를 보유한 수은을 EDCF 수탁기관으로 지정했고, 1987년 6월 1일 수탁 업무가 공식 개시됐다. 한국 전쟁 이후 외국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던 수원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11 최초 EDCF 지원

대한민국 개발원조 역사의 첫 페이지

1987.12.30



수탁 6개월 만인 1987년 12월, 수은은 EDCF 최초 지원 건으로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114억 원,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에 81억 원을 각각 승인했다. EDCF는 이후 세계 전역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갔고 2025년까지 60개 국, 545개 사업에 총 40조 6,029억 원을 승인했다.

12 남북협력기금(IKCF) 수탁

남북경협 전담 금융기관의 탄생

1991.03.20



1988년 정부는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선언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19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공포됐고, 정부는 EDCF 운용 경험을 보유한 수은을 남북협력기금(IKCF)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수은은 1991년 1월 4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2월 1일 남북기금부를 신설했으며, 3월 20일 최초 정부출연금을 납입 받아 수탁 업무를 개시했다. 이후 기금은 경수로사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됐다.

13

최초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단일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출전 경비 지원

1991.03



1991년 3월 일본 지바에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남북한은 ‘코리아(Korea)’ 명의의 단일 팀을 구성해 출전했고, 4월 29일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3대 2로 꺾고 우승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최초 지원 건으로 이 대회의 출전 경비 1억 6,400만 원을 지원했다.

14

미국 자본시장 진출

외화채권 발행을 위한 국제금융시장 개척

1991.05 &
1996.02



수은은 1990년대 들어 외화자금 조달 기반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채권 발행을 추진 했다. 1990년 12월 한국계 기관 최고 수준인 A1(무디스)과 A+(S&P) 신용등급을 획득한 뒤, 1991년 5월 2억 달러 규모, 7년 만기 양키본드를 발행하며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했다. 이어 1996년 2월 미국·유럽·아시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5억 달러 규모, 10년 만기 글로벌본드를 최초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첫 발행임에도 발행 규모의 3배가 넘는 주문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수은은 한국을 대표하는 외화채권 발행기관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한국계 기관앞 벤치마크 역할을 수행했다.

국내 금융기관 최초 ABS 발행

1998.12.30



IMF 외환위기로 해외자금 조달이 극도로 위축됐던 1998년, 수은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외화 자산담보 부채권(ABS)을 발행했다. 보유 중인 연불어음과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6억 9,70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이 조달한 자금 중 최대 규모였으며, 금융위기 당시 혁신적 기법을 선제 도입해 외화유동성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자금 조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초 PF 기법 도입

1999.06



수은은 1994년 직접대출의 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도입했다. PF는 사업주 또는 지분 출자자가 아닌 특수목적회사를 차주로 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금융과 구분된다. 수은 최초 PF 승인 건은 멕시코 마데로(Madero) 정유설비 프로젝트 (2억 달러)였다. 이어 2000년에는 필리핀 최초의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었던 일리한(Ilijan) 민자 발전 프로젝트에 7,000만 달러의 PF금융을 제공했다. 3년의 협상과정을 거쳐 미국 및 일본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승인했으며, 당시 『Trade Finance』로부터 'The Best Deal of the Year'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PF기법 도입은 글로벌 플랜트시장의 발주동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와 해외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KEDO 경수로사업 용자계약 체결

남북협력기금 역대 최대 단일 사업

1999.12.15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수로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1995년 3월 한·미·일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했고, 예상 사업비 46억 달러 중 실제 공사비의 70%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남북협력기금은 KEDO와 3조 5,420억 원 규모의 용자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공사비 675억 원을 시작으로 총 1조 3,744억 원을 집행했다.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F) 첫 승인

선박금융의 새 지평

2002.06.25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tructured Finance: SF)는 사업주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직접대출과 프로젝트 사업성을 기초로 한 PF를 결합해 사업주를 차주로 하되 프로젝트 현금 흐름 등을 채권보전장치로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수은은 2002년 선박금융에 SF를 최초 도입했다. 기존에 취급하던 선박 직접대출과 같이 해외선주를 차주로 하되, 차주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의 자산가치 담보 및 미래 운용수익을 채권회수 재원으로 활용했다. 최초 선박 SF 승인 건은 2002년 싱가포르 스타탱커의 VLCC 1척 구매자금(3,600만 달러)이었다. 선박 SF는 이후 획기적으로 성장해 2025년말 기준 총 562척, 약 295억 달러를 지원하기에 이르렀으며, 수은은 세계 선박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상업금융 보완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의 마중물 역할

2001~2002



플랜트, 선박 등 자본재 수출 규모의 대형화로 단일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상업금융기관 등과의 협조금융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1년부터 대외채무보증을 본격 취급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차주 앞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수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2002년 국내기업이 폴란드에 PET 수지 제조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PF 지원 건(대출 1,400만 달러, 보증 2,700만 달러)은 대외채무보증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와의 최초 협조대출 사례이자 해외 투자사업에 대한 최초 PF 지원건이었다.

『IFR·Finance Asia·The Asset·Euromoney』 4관왕

2005



2004년 수은은 10억 달러 글로벌본드, 3억 달러 유로화본드 등 4회의 공모 발행과 30여 건의 사모채권 발행을 통해 총 34억 4,000만 달러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이에 세계 3대 국제금융지인 『IFR』, 『Finance Asia』, 『The Asset』은 수은을 2004년 최우수 차입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유로 머니(Euromoney)』로부터 정책금융기관부문 최우수차입자로 선정되며 국제금융시장의 4대상을 모두 수상하는 그랜드슬램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에도 2006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한국정보보다 높은 Aa3 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1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한국 대표 외화차입기관으로서의 행보를 지속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은행의 은행’

2008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외화 조달시장은 급속도로 경색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수은은 정부에 외환보유고로 비축해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수출환어음, 무역결제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에서 이를 수락해 2008년 11월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방안’ 등을 수립했고 수은을 통해 국내은행과 기업들에 외화유동성을 지원했다. 수은은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을 수탁해 7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및 3개 국책은행 등 총 16개 은행에 외화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다리

2009



수은은 2009년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개시했다.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부여할 뿐 아니라 기업맞춤형 성장전략 코칭, 해외진출 자문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2026년 5월말까지 총 531개 기업에 약 121조 원의 금융지원과 1만 5,900여 건의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선업 위기 극복의 동반자

2010~



세계 1위 한국 조선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불황은 장기화됐고 조선사들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됐다.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상업금융 지원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은마저 외면할 수는 없었다. 2014년 9월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조선·해양·해운 산업 지원기능을 집중이전한 수은은 개별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조선·해운업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했다. 과도한 헤비테일(Heavy-tail) 거래에 대한 지원 제한 등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선별적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 전체 수익을 증대하는 쪽으로 구조적 전환을 유도했다. 개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중·대형 조선사 간 협력모델 제시, M&A 추진, 출자전환 주식 매각 등 민간 자본시장 원리를 적극 차용해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해외사업 전문성 기반 비금융서비스 강화

2011



수은은 설립 이래 축적해 온 해외사업 금융지원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인프라사업 금융자문 및 주선 업무 확대에 나섰다. 2011년 금융자문 전담부서를 정식 발족하고, 사업구조 설계, 금융자문, 금융주선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구조화 및 금융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했고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해외 PF사업 참여 촉진에 기여했다. 이후에는 국제 수주환경 변화에 대응해 2015년 사업개발 업무도 추가 도입해 사업발굴, 금융자문, 금융주선, 여신지원을 연결하는 전후방 가치 사슬체계를 갖추게 됐다.

EDCF 지원제도 고도화

국제개발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2011~2014



2009년 11월 한국은 OECD DAC 가입을 통해 공식적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공여국이 됐다. EDCF의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됐고 다양한 개발의제가 부상하며 전통적인 정부간 차관 위주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개발수요 충족이 어려워졌다. 이에 EDCF 지원제도는 진화를 거듭했다. 2011년에는 개도국의 정책과제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지원 방식으로 일괄 제공하는 '프로그램 차관'을 도입해 개별 사업단위 지원 관행을 탈피했다. 2013년에는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치적 위험을 보증하는 '협력사업 보증제도', 2014년에는 개도국 법인에 제공하는 '민간협력차관' 등을 도입해 민간투자 및 민간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활성화에 기여했다.

UAE 원자력발전설비 수출금융 지원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 금융 지원

2012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기업은 과거의 단순 도급형에서 사업설계 및 건설(EPC), 플랜트 운영(O&M) 등 사업 전 단계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금융의 중요성은 한층 강화돼 사업주에게 대규모 장기 사업자금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 패키지가 낙찰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됐다. 이러한 수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수은은 2012년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사업'에 31억 달러를 지원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동 사업은 UAE 바라카지역에 APR-1400 원전 4기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기업이 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기술력과 사업수행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선박채권보증 세계 최초 도입

선박금융에 대한 우량 자원 유치 건인

2013.09.30



선박채권보증은 국내 조선사가 제작하는 선박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선주가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하고 수은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상업은행들이 선박금융을 대폭 축소하면서 발생한 유동성 경색을 선진 금융기법으로 풀고자 내놓은 대안 금융상품으로, 해외선주 입장에서 금융조달 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해외 연기금, 보험사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은은 세계 최초로 2013년 미국 스콜피오탱커스(Scorpio Tankers)의 정유운반선 18척 계약건과 관련해 발행된 1억 2,500만 달러 채권에 보증을 제공했다.

직접투자 첫 승인

인도네시아 세망카(Semangka) 수력발전 사업

2014.10.01



2014년 1월 제19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투자 업무에 대한 법적 제약이 일부 해소됐다. 같은 해 6월 수은은 투자 업무를 전담할 투자금융실을 신설했고,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세망카(Semangka) 수력발전 사업’에 대해 총 1억 3,290만 달러 규모의 PF 대출·보증 지원과 연계한 715만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최초 승인했다. 이를 통해 수은은 대출·보증을 넘어선 업무영역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한국기업이 지분투자부터 인프라 건설·운영·기술지원 등 전 부문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금융패키지를 구축했다.

K-컬처 붐의 기틀 마련

2015.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됐다. 문화콘텐츠산업 또한 그 중 하나였다. 수은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중소 제작사 앞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의 후예> 제작 및 해외진출에 기여했다. 더 나아가, 수은은 2015년 콘텐츠수출 특례금융을 신설하여 신용·담보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수출 계약 체결 이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임당 the Herstory> 등 중소 제작사의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류 수출에 기여했다.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의 첫발

2017



신흥개도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 발주 확대 등으로 ECA금융과 EDCF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금융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 확대됐다. 이러한 한계 보완을 위해 수은은 개발금융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개발금융은 개도국 경제성장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첫 시작은 경협증진자금대출(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EDPF)의 도입이었다. EDPF는 수은이 시장 차입한 자금을 활용해 ODA 조건으로 개도국 개발 사업을 지원하되 정부재정(EDCF)을 통해 이차(利差)를 보전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공적 재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비구속성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수은이 기존 수출금융 중심 구조에서 개발 금융 영역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EDPF는 2019년 '네팔 UT-1 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PF금융 5,000만 달러와 함께 5,000만 달러를 최초 지원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를 활용한 ODA로 OECD에 보고됐다.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금융지원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을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2018.03



수은은 2018년 튀르키예 차나칼레 인근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총 연장 3,563m)와 고속도로(88.4km)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PF 대출 3억 유로, 보증 3억 유로 등 총 6억 유로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튀르키예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투자개발형 프로젝트로 발주단계에서 한·중·일 기업들의 치열한 국가대항전이 펼쳐졌다. 수은은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고 통상 동국 인프라사업 금융 제공을 주도해 온 국제금융기구의 참여 없이 최다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 수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편, 수은은 2026년 4월 동 현수교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운영 사업에도 1억 유로 금융 제공을 약속해 우리 기업의 후속 대형사업 수주에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다.

특별계정 설치

초고위험국 인프라사업 수주지원 기반 마련

2019.06



2019년 수은은 기존 수출금융(일반계정)과 구분되는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지원이 곤란했던 국제신용등급 B+ 이하 국가에 한국기업이 수출 또는 해외투자하는 인프라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재원은 정부 출자 및 수은의 이익유보를 통해 마련됐다. 이후 계정 도입 첫째 나이지리아 LNG 액화플랜트 건설사업에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에 기여했다.

코로나19 비상 대응자금 공급

국가적 재난 속 정책금융기관 역할 수행

2020~2021



2020년 2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수은은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팬데믹 장기화에 대비해 2020년 3월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위기대응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던 중소·중견기업에 2020년에만 26.7조 원의 금융지원을 실행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항공업·해운업·조선업·정유업 등 주요 기간산업 또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수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 코로나19 시기 수은은 2020년 총 57조 6,000억 원, 2021년 총 29조 5,000억 원의 대응자금을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로드맵 수립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및 탄소중립 목표 설정

2021.07.01



수은은 2021년 중기경영계획(2021~2023) 전략과제로 ESG경영 선도역할 강화를 제시하고 국책은행 최초로 ESG경영 로드맵을 수립했다. 'We Export Sustainable Growth'를 비전으로 삼아 우리 기업의 글로벌 ESG 경쟁력 강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2030년까지 ESG여신 180조 원 공급, ESG채권 200억 달러 발행, 기관 탄소배출량 50% 감축 등의 목표를 수립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ESG위원회 및 ESG경영부 신설 등을 통해 ESG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반도체기업 인수자금 지원

혁신성장산업 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 육성 견인

2021.10



수은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부응해 1992년부터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시했고, 이후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9년 수은은 300개 이상의 혁신성장산업 품목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지원 방식도 계속 발전했다. 초기 수출입거래를 기반으로 한 운영자금 위주 지원에서 원천기술 확보와 시장선점을 위한 R&D 및 M&A 자금 지원으로 확장됐다. 그 대표 사례로 수은은 2021년 국내 반도체 기업이 세계 1위 미국 종합반도체 회사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데 8억 달러의 해외투자자금을 지원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는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 인수사업이기도 했다.

사우디 Aramco·UAE ADNOC FA 체결

초대형 FA(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통한 우리 기업 수주 견인

2022~2023



수은은 2022년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Aramco)와 각각 50억 달러, 6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FA)을 체결했다. FA는 차주와 주요 금융조건을 사전에 약정해 개별 거래 발생 시 신속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수은은 우량 발주처가 한국기업에 사업을 발주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先금융·後발주 전략으로 FA를 활용했다. 중동 초우량 발주처와의 선제적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수은 2.0’ 기반 청사진 제시

2023~2024



수은은 조선업 위기에 따른 경영 내실화 과정을 거쳐 2018년 글로벌 경제협력은행 도약을 위한 ‘비전 2030’을 선포했다. ‘We Finance Global Korea’라는 비전 아래 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으나, 코로나19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3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수은은 궁극적인 미래 지향점을 ‘수은 2.0’으로 정의하고 전통적 수출신용기관에서 보다 유연하게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의 진화 모델을 수립했다. 이러한 방향성은 정부의 정책금융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24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방안’을 의결하고 수출금융 활용도 제고, 개발금융 고도화, 공급망금융 운용 강화 등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수은 최초로 정부 공식회의체 의결을 통해 수립된 경영전략으로 정부의 금융·통상정책을 이행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방산수출 강국 도약 견인을 위한 전방위 금융지원

2023.09



정부는 2022년 11월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목표를 제시하는 등 K-방산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수은은 이에 부응해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먼저 대형화된 방산 규모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상대국에 맞춤형 금융을 적시에 제안해 글로벌 수주전을 총력 지원했다. 2023년 9월 승인한 폴란드에 대한 총 50억 달러의 방산수출 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 건임과 동시에, 금융의 질적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됐다. 수은은 이러한 방위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해 10월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39

PIPP·PDIF 도입

개발금융 기능의 내재화

2023~2024



수은은 세계경제 진영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익(Korean Benefit)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의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전통적 ECA금융과 ODA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개발 및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 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을 운영하고 있었다. 수은 또한 우리 기업 사업참여 여부와 ODA 요건 충족과 관계없이 개도국 산업 발전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증진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개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먼저, 2023년 개도국 개발효과를 측정하는 프레임 워크인 ‘해외 민간투자 촉진 프로그램(Private Investment Promotion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PIPP)’을 도입했다. 이어 2024년에는 ‘개도국민간투자자금대출(Private-sector Development Investment Facility: PDIF)’를 신설해 비구속성·비양허성·비ODA 조건으로 개도국 민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40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경제안보 핵심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2024.09



관세,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공급망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안보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2022년 공급망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고 필요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수은은 검토 초기 단계부터 법제화 및 기금 신설 업무를 지원했고, 2023년 수은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근거조항이 명시된 「공급망안정화법」이 제정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보증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공급망 밸류체인 각 단계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출범 이후 2025년말까지 총 92건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대해 총 9조 2,448억 원의 금융지원을 승인했다.

EDCF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지원

EDCF 역대 최대 규모 사업 지원

2024.10



EDCF는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실적을 기록하는 등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개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됐다. 대표 사례로 2024년에는 필리핀 정부의 'Build Better More' 인프라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인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약 9억 5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승인했다. 이는 당시 EDCF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으로, 수원국의 초대형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며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개발협력 사례를 확보했다.

카타르 담수·발전사업 지원

'Team Korea' 단위 해외 인프라 수주 성과 창출

20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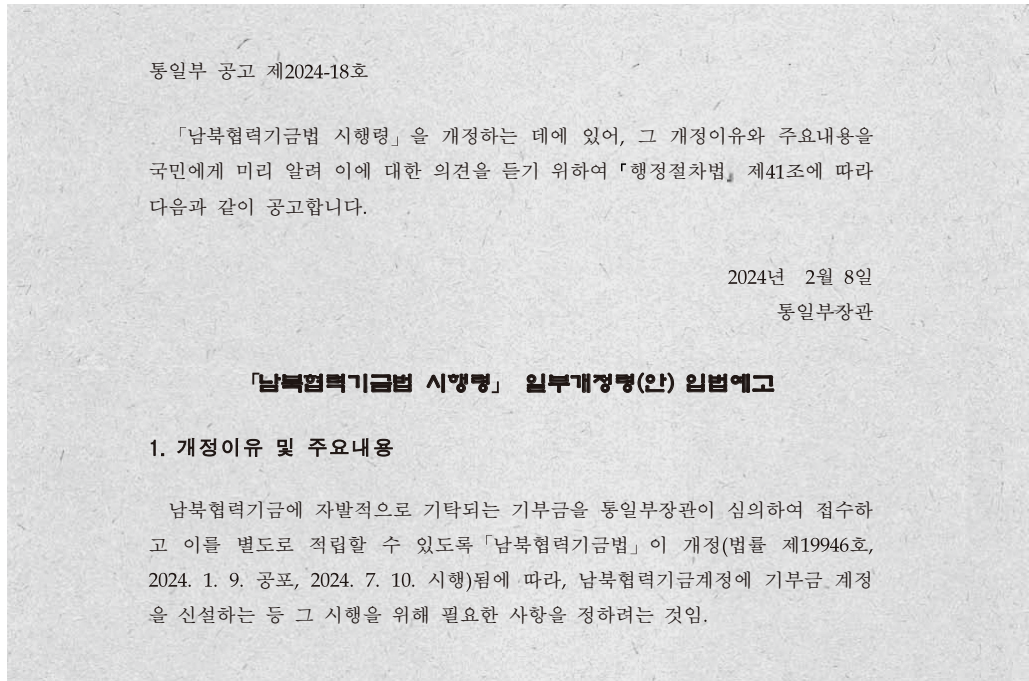
수은은 2024년 카타르 Facility E 담수·발전사업에 11억 달러 규모 PF금융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복수의 우리 기업이 지분투자, 건설, 운영 등 사업 전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투자개발형 사업이었으며, 수출 증대 및 역내 후속 수주기반 구축 등 장기적 관점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젝트였다. 수은은 사업 초기부터 수주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사업주 참여 주선, 여신의향서 발급, PF금융 제공 등 프로젝트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Team Korea' 단위의 해외 인프라 수주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43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기금 설립 이후 최초 민간기부금 적립 성사

2024



남북협력기금 법령상 일반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고 적립이 불가능해 민간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했다. 민간기부금이 독립적으로 적립 및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한 해를 넘기면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재정에 통합되는 구조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 협력기금은 2024년 「남북협력기금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기탁자가 희망하는 용도로 기부금이 적립·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같은 해 11월 기금 설립 이후 최초로 총 2건, 9억 원의 민간 지정 기부금 적립이 성사되는 등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기금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다.

44

IT센터 개소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AI 전환 기반 구축

2025.06



수은은 2022년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일찍이 업무 생산성 증대 및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속해왔다. 2020년대 이후 AI를 필두로 한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은의 디지털 시책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수은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가장 먼저 IT인프라 확충 작업에 착수해 경기도 용인에 독립적인 IT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2025년 6월 완공된 IT센터는 친환경·고효율 건물로, 최신 서버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AI 모니터링 기술 등을 도입해 보안 및 미래 확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IT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은은 향후 업무 및 대고객서비스 시스템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I산업 특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AI 수출산업화 및 상생 생태계 조성 기여

20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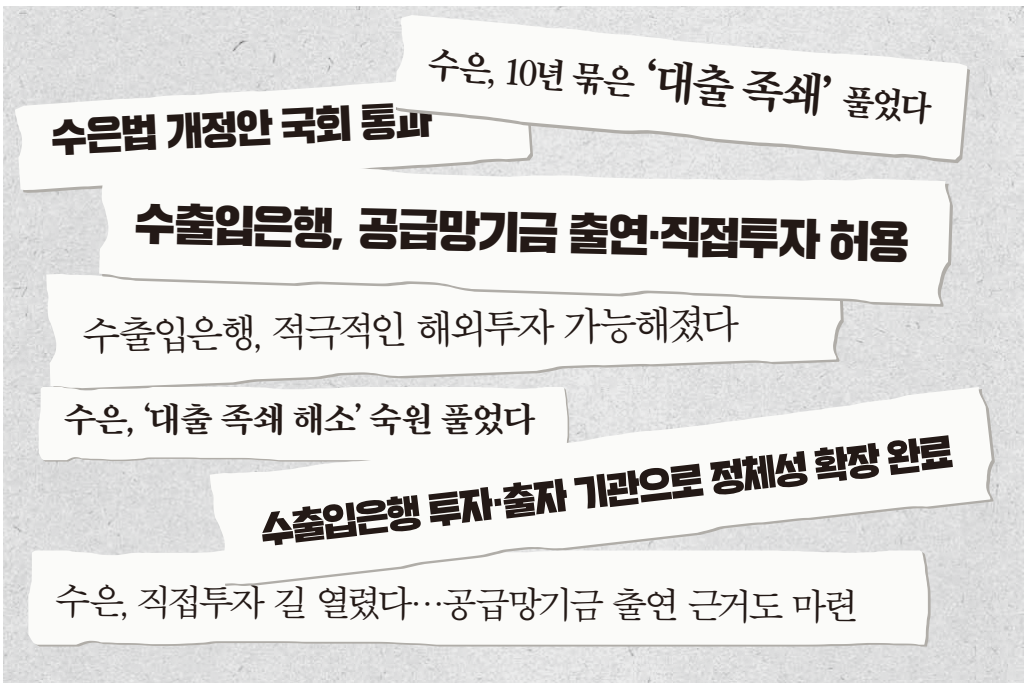


AI라는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수은 또한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방면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5년 12월 우리 AI 대기업 3社와 ‘AI산업 생태계 구축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6년 1월에는 AI산업 종합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AX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향후 5년간 2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은은 국내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지원, 국산 AI 반도체 스타트업 투자 등 AI 대전환에 앞장서는 한편, 중소·중견 협력사를 위한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AX 컨설팅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대한민국 AI산업 전반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견고히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수은법」 개정

수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 마련

2025.12



투자 업무는 2010년대 이후 수은이 대출·보증을 넘어서 새로운 정책금융 수단으로 발전시키고자 공들여 온 분야였으나, 「수은법」상 제약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간접투자 위주로만 운영되던 측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수은의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서 정책금융 역할 확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 업무 또한 영역 확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통해 정책금융 기관의 직접투자 목표액을 2024년 1,500억 원에서 2025년 1조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은 투자 업무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던 「수은법」 개정이 실현됐다. 법 개정을 통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직접투자가 가능해졌고, 간접투자 대상이 확대됐다. 이로써 수은은 투자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투자 업무를 제3의 정책금융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글로벌본드 35억 달러 발행

역대 최대 규모 발행을 통한 Global Issuer 위상 재확인

2026.01



수은은 2026년 1월 총 35억 달러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 1998년 정부가 발행한 40억 달러 외화채권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외화채권 발행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당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수은은 적극적인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통해 두터운 우량 투자자층을 확보했고, 경쟁력 있는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10년 만기 채권에 대해 국내 최초로 AX 지원 내용을 명시해 발행한 점도 특기할 만했다.

EDCF 혁신전략 선포

투명·공정 EDCF 선언 등 미래 비전 제시

2026.06



개도국 개발수요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ODA가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재편되는 등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6년 6월 정부와 수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EDCF 혁신전략을 공동 선언함으로써 미래 EDCF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사업 발굴·승인·평가 과정의 핵심 사업 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 및 사업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2026~2028년 3년간 9조 원 규모를 신규 승인하는 한편, 개도국 수요와 우리 기업 강점 간 접점이 넓고 국가적 중요성이 높은 AI·공급망·문화분야를 중점 지원해 자원 운용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수원국 협의 강화 등을 통해 해외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협력사·수은 3자 상생금융 모델 가동

중소·중견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형 패키지 도입

2026.05~



2026년 5월에는 국내 에너지·배터리 등 대기업과 '공급망 상생금융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사에 금리 및 대출 한도 등을 우대 적용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한다. 이어 6월에는 국내 대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중견 협력사의 재생 에너지 전력구매계약 공동구매 추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은 추천 협력사의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수은은 공동구매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협력사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은은 대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 협력사가 직면한 금융 및 비금융 이슈를 적극 발굴해 상생금융의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은 창립 50주년

새로운 50년의 이정표 제시

2026.07.01



수은은 2026년 7월 1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함께해 온 지난 50년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 50년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정책금융의 3가지 방향으로 경제안보 수호,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실용적 경제협력을 제시했으며,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AI·반도체·바이오·배터리·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경제가 순항할 때는 뜻이 돼 우리 기업을 세계로 이끌고 위기 시에는 든든한 닻이 돼 기업 곁을 지켜온 수은은,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선도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식

‘함께한 50년, 함께 그리는 미래’

한국수출입은행 창립 50주년 기념화보





한국수출입은행 창립 50주년

함께한 50년, 함께 그리는 미래











통사

HISTORY

1976



2026

제1장 고도성장과 수출입금융 시대를 열다	1976~1985
제2장 세계와 연결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성장하다	1986~1996
제3장 외환위기 파고를 넘어 국제거래 지원 핵심기관으로 도약하다	1997~2007
제4장 글로벌 불확실성 속 정책금융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2008~2019
제5장 뉴노멀 국제질서 대응을 위해 기능을 강화하다	2020~2026

제1장

고속 성장과 수출입 금융 시대를 열다

1976

1985

제1절

고속 성장 열차,
수출을 동력으로

제2절

중화학 수출 진흥의
사명감을 안고

제1절

고속 성장 열차, 수출을 동력으로

1. 정부 주도 경제 개발 착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출범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한창 고속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 기점은 1960년대부터 시행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이전 상황은 가난의 연속이었다. 전쟁의 상흔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우리나라는 원조 경제에 의존했다.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된 참혹한 실상을 목격한 세계 언론들은 앞 다퉈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일어설지 못할 것’이란 안타까운 뉴스를 긴급 타진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강력한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경제 개발 본격화까지 숱한 시행착오도 있었다. 1950년대 외국 원조로 국가 재건에 나섰지만, 번번이 정치적 격동기가 발목을 잡았다. 그 사이 가난의 굴레를 떨쳐내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이 쌓여갔고, 이를 기반으로 1960년대 초 정부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본격 시행했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의존적 원조 경제 체제에서 자립적 공업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당시는 산업화, 근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에 따라 음식료나 섬유, 의류 등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 대체의 공업화를 시도했다.

경제 성장률도 연평균 7.1%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는 공업화 기틀 마련과 산업 구조 개편과정에 서 전력·석탄·시멘트·비료·철강·정유 등 기간 산업 전반에 총량지표를 책정하고 육성했다. 1966년 2월에는 선박 건조 목표를 34만여 톤으로 책정하는 등 중화학 공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졌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 개발의 결과, 우리나라는 1차 계획 기간 중 연평균 7.8%의 경제 성장



1962.01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현장

를 달성했다. 산업구조 개선 성과도 이뤄냈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1962년 37%에서 1966년 34.8%로 낮아졌고, 제조업 비중은 1962년 14.4%에서 1966년 18.6%로 높아졌다.

1차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을 시행했다. 이때 산업구조 근대화와 자립경제 확대 촉진을 추진했다. 화학·철강·기계공업을 수입대체산업으로 육성했고, 기존의 경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공업고도화와 수출지향적 산업화 정책을 펼쳤다.

특히 중화학공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다. 「기계공업진흥법」(1967.03), 「조선공업진흥법」(1967.03), 「전자공업진흥법」(1969.01),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69.12), 「철강공업육성법」(1970.01) 등을 잇달아 제정했다.

2차 계획기간 중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수출신장에 힘입어 연평균 9.2%의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산업구조 역시 크게 개선됐다. 제조업 비중이 1967년 19.1%에서 1972년 22.2%로 높아졌고, 제조업 내에서도 화학비료, 금속공업, 시멘트 등 후방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2. 수출중심 경제개발 추진

공업화의 산업구조 개선과 함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이었다. 수출중심 경제개발은 196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수정계획의 핵심 전략이었다.



1964.12.05 광화문에 설치된 제1회 수출의 날 기념 아치

당초 계획이었던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은 당시 개발도상국이 채택할 수 있었던 경제개발 전략의 모범답안이었으나, 실제 실행 과정에서 내수 위주의 전략은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국내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는 물론 부품이나 기계설비 등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존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 특성상 수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수단 그 자체인 셈이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1962년 3%에 불과했으나, 그로부터 62년 후인 2024년에는 36.6%로 눈부시게 성장하게 된다. 이는 고도성장에 이어 선진국 경제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2024년 기준 36.6%의 수출비중은 전체 경제성장률의 95%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진흥의 시초는 1962년 3월 공포한 「수출진흥법」이었다.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수입의 특혜 조치와 해외활동 보장 그리고 수출실적 링크제(수출실적이 있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수입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했으며, 무역금융을 우대하고 경제외교를 강화했다.

수출중심 수정계획이 나왔던 1963년에는 수입상대 지역별 수출액에 비례한 수입의 제한, 수출자동차승인품목의 확대, 수출보조금의 지급, 구상무역 확대 시책을 폈다. 또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고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 탄력관세 제도도 도입했다.

이듬해 1964년에는 시장자유화조치가 시행되고 수입 대체산업 보호를 위해 낮게 유지했던 환율과 금리를 대폭 올렸으며, 무역·외환 거래를 제한하던 정책을 과감히 폐지했다. 적극적인 수출 정책 시행의 결과 11월 30일 사상 처음으로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를 기념해 정부는 이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했다. 수출의 날은 1987년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정부는 강력한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 수입 마진제도 철폐, 수출금융 금리

인하, 수출기업 영업세 전액 면제와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조치, 수출기업 특별감가상각제도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1차 계획기간 중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연평균 44%의 높은 신장률을 달성했다.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도 큰 성과였다. 총 수출 중 공산품의 비중이 크게 상승해 1962년 27.7%에서 1964년 55.2%, 1966년에는 61.8%를 기록했다. 수출상품의 구성도 다양해졌다. 경제개발 초기 증석, 쌀, 철광, 면직물 등에 불과하던 수출품목이 이후 의류, 합판, 가발 등으로 확대됐고, 중화학제품 비중도 점차 늘어났다.

1차 계획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제2차 계획기간에도 수출진흥정책을 강화했다. 1968년 중장기 연불수출 손실 위험에 대비해 「수출보험법」을 제정했으며, 1969년에는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연불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법」을 제정했다.

2차 경제개발 계획 마지막 연도인 1971년에는 미국의 긴급경제조치에 따라 제반 수출여건이 불리하게 전개됐다. 정부는 수출규모의 양적 확대보다는 국산 원자재의 사용 촉진, 품질 향상을 통한 외화가득률의 제고 등 수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역점을 뒀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수출 금융의 이자율을 국제금리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한국은행 재할인자금의 이용 기회를 확대했다. 그 외 수출기업에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2차 계획기간 중 수출실적은 1차 경제개발 종료시점인 1966년 대비 약 4.3배 성장했다. 특히 이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상품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개선도 이뤄냈다. 광산물과 농수산물 등 1차 상품의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공산품의 수출비중이 늘어났다. 섬유, 합판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 수출증가와 더불어 자본집약적 상품인 철강재, 기계류, 수송장비, 화학제품 등의 수출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주요 경제지표(1962~1971)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경제성장률	3.9	9.0	9.4	7.3	12.0	9.2	13.2	14.6	10.2	10.7
수출	55	87	119	175	250	320	455	623	835	1,068
수입	422	560	404	463	716	996	1,463	1,824	1,984	2,394

3.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산업화

1970년 7월 우리나라는 착공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성공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1, 2차 경제개발의 또 다른 성과로서, 성장잠재력을 전 세계에 입증한 우리 자긍심의 표상이었다. 한 마디로 경부고속도로는 수출입국과 산업고도화로 가는 고도성장 하이웨이였다.

1, 2차 경제개발 과정에서 업종별 육성법 제정으로 중화학공업 육성기반을 마련한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때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시도했다. 이는 1, 2차 때 소비재와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을 통해 얻었던 소중한 경험의 산물이었다.

1, 2차 경제개발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 수출진흥,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반 구축이란 성과를 달성했지만,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이후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경공업 제품 위주 수출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국제수지 적자도 심화됐다. 그 결과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의 해결책으로 중화학공업화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중화학공업은 수출규모가 크고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수입규제 장벽도 낮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었다. 고부가가치산업 전환이라는 과제와 함께 당시 닉슨 독트린으로 방위산업 육성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중화학공업 육성은 경제개발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중화학공업 육성에 방점을 두었다. 1972년 ‘공업구조개편론’을 통해 중화학공업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그뿐 아니라 상공부 주도로 조선공업 육성방안과 중화학공업의 업종별 육성계획까지 마련했다. 더욱이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중화학공업 육성방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3차 계획 1차 연도인 1972년에 공산품 수출시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단기 연불수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금리를 인하했다. 외화가득액을 높이고 국산 원자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화가득액 제고형 대출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1973년 이듬해에는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입대체를 도모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수출을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산업육성법을 제정한 후 본격적인 산업구조 개편작업을 실시했다.



1973.01.12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발표 관련 기사



1972.03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기공식

우선 전략산업으로 주요 중화학공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내국세와 관세 감면, 정책적 금융 지원, 수입규제 보상을 위한 국내 판매가격 보조, 기타 행정지원 등을 시행했다. 특히 일부 중화학공업 제품의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필요에 따라 수출진흥책을 적극 모색했다.

1974년 중에는 오일쇼크로 인한 국제무역 환경 악화에 대처하고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금융과 내수용 수입원자재 비축금융을 확대했다. 세계 경제침체는 1975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수출부진을 타개하면서 수출용 원자재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 사전 승인 업무를 개선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을 국산 원자재의 사용 실적과 연계하는 제도개편을 단행했다. 또 철강, 비철금속, 조선, 전자, 디젤엔진 등 30개 중화학업종을 합리화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지원과 함께 국민투자기금과 수출산업확충자금을 지원했다.

1976년에도 정부는 1,000억 원대 규모의 국민투자기금을 중화학공업분야에 지원했다. 또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 대단위 종합기계공업 진흥계획을 활발히 추진했으며, 플랜트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시멘트, 비료, 정유, 제철, 합성고무, 플랜트 등 11개 품목의 표준국산화율을 책정 고시했다. 그 과정에서 국산기계 구입, 계획조선 등에 국민투자기금과 외화대출로 665억 원을 지원했다.

전방위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제3차 계획기간 중 중화학공업부문은 연평균 22%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1976년 중화학공업 비중도 48.6%에 이르렀으며,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비중 역시 1971년 15.6%에서 1976년 29.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이 철강업과 더불어 중화학공업화의 선도 역할을 담당했다.

1973년 7월 포항제철소 준공은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를 견인했다. 산업의 쌀인 철강생산 자립 성공에 이어, 이즈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197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1975) 등이 설립되면서 조선, 자동차산업의 고속성장이 가능해졌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울산석유화학단지(1972), LG화학 울산공장(1976) 등이 이 시기 태동했다.

4.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우리나라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을 통해 중화학공업부문 산업구조 고도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1차 연도인 1977년 중화학공업 시설 근대화와 국제화 촉진을 위해 기술집약·자원절약적 산업인 일반기계,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을 중점 지원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또 적정 시설규모의 기준을 설정하고 국민투자기금을 지원했으며, 특별감가상각 범위의 확대와 관세감면 등 세제지원도 단행했다.

중화학공업 수출촉진 방안으로는 '조선공업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자동차공업 '수출전략산업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 생산시설 등 4개의 석유화학시설과 제철시설 등에 표준국산화율을 고시하고 국내산업 자립도를 제고했다.

중화학공업 외 소재·부품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 제철, 제강 등 소재산업과 기어, 베어링 등 일반 기계부품산업, 반도체 등 전자부품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수출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형 기계공장을 적극 지원했으며, 그밖에 시멘트, 비료 등의 플랜트건설에도 표준국산화율을 고시하고 국산 기자재 이용률을 높였다.

수출진흥과 중화학공업 고도화에 힘입어 1977년 우리나라는 마침내 수출 100억 달러 돌파의 위업을 달성했다. 경제개발 첫째인 1962년 5,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1971년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경제개발 10년 만에 약 18배 성장한 수출액에 고무된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 10년 만에 그 10배인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그 목

1970년대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인당 국민소득(달러)	320	401	554	602	818	1,034	1,431	1,676
경제성장률(%)	7.3	15.0	9.6	7.9	13.3	12.4	11.1	8.7
소비자물가상승률(%)	11.7	3.2	24.3	25.2	15.3	10.1	14.5	18.3
수출(백만 달러)	1,624	3,225	4,460	5,081	7,715	10,046	12,711	15,055
수입(백만 달러)	2,522	4,240	6,852	7,274	8,774	10,811	14,972	20,339
무역수지(백만 달러)	△898	△1,015	△2,391	△2,193	△1,058	△764	△2,261	△5,283

표를 단 6년 만에 이뤄냄으로써 우리나라는 또 다시 전 세계에 한민족의 저력을 입증했다.

100억 달러 수출 달성 이듬해인 1978년에도 산업정책은 중화학공업부문 산업구조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연관도가 높고 수출전략품목에 속하는 일반기계, 전자, 자동차, 제철 등 13개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해 설비투자를 확대했다. 합병·계열화도 추진해 규모의 경제실현을 유도했으며, 시설 근대화를 통해 생산성도 높였다.

그 외 전락부문인 기계, 금속, 조선, 화학, 전자 등의 선진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기술도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내 연구역량 배양 과정에서는 대덕 연구단지와 창원·구미 공업단지에 전문 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했다.

수출진흥 전략으로는 기계공업의 수출산업 육성방침에 따라 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연불수출도 강화했다. 소형 자본재의 중장기 연불수출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 중장기 연불수출 금융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그밖에 중화학공업 제품과 플랜트의 연불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은의 대출비율을 75~80%에서 90%로 높였다.

제4차 경제개발 3년차인 1979년 우리나라는 8.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2차 오일쇼크로 다소 부진했지만, ‘중화학공업화 선언’이 있었던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8.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1973년, 1976년, 1977년에는 각각 15%, 13.3%, 12.4%를 기록하며 두 자리 수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중화학공업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공업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제조업이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 역시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1977년부터 경공업을 추월했다.

식료품, 의복, 가구 등 소비재산업과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낮아진 반면,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기계, 정밀기기 등 에너지 저소비, 기술집약적 조립 가공산업의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또 창원 기계공업단지(1978), 여천 석유화학단지(1979), 호남 석유 여수공장(1979) 등이 조성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했다. 수출비중에서도 중화학공업 수출산업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수출 품목은 경공업 제품에서 중화학공업 제품 위주로 고도화됐으며, 품목 중에서도 기계류·운반용 기기 제품의 비중이 높아졌다.

5. 시장 안정화와 중화학공업 성장

1979년 2차 오일쇼크는 한국경제 고도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세계경제가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더욱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외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이는 수출산업화로 내달려온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 주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경제성장률이 1980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1.5%)를 기록했다. 오일쇼크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제조업 성장률도 전년 대비 △1.6%를 기록했다. 일반기계(△23.7%), 전기기기(△13.3%), 수송기계(△16.4%) 등 주요 중화학공업도 동반 부진했다.

물가도 심상치 않았다. 도매물가 상승률이 38.9%에 이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 높은 물가는 수출가격을 끌어올렸으며, 이는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결국 무역수지 적자가 47억 8,7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그동안 감춰졌던 우리 경제의 민낯이 속속 드러났다. 중화학공업 집중에 따른 경공업 투자부진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기업과 경공업 중심의 중소기업 간 불균형도 심각했다. 고도성장기에 이뤄진 중화학공업분야의 중복·과잉투자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끌어내린 셈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좌절하지 않았다. 정부는 1981년 4월 산업합리화 조치를 발표하며 반전을 모색했다. 중화학공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화된 생산체제 확립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를 꾀했다. 복수기업으로 다원화된 자동차·발전설비 부문을 통폐합해 단일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의 신규투자를 가급적 억제했다.

통폐합 구조조정의 정책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중화학공업 부흥을 포기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 ‘조선부문 장기 수출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4개 조선소 증설, 기술용역회사 설립, 선박설계 집중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조선업과 함께 플랜트산업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했다. 플랜트산업의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외건설 면허가 없더라도 수출용 기자재 설계·제작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산업설비 설치공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전략산업인 기계공업도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했으며, 해외건설기업의 국산 건설장비 사용을 의무화했다.

중화학공업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으로는 ‘전자공업 고도화 장기계획’(1982~1991)을 수립했다. 이후 반도체·컴퓨터 개발과 전자교환기 등의 양산화를 추진했다. 1983년에는 전자공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인 합작투자를 장려하였으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기업화자금제도도 신설했다. 자동차부문의 경우 차종별로 전문 생산기업을 지정했고, 자동차 수요 증대를 위해 소비자 금융을 확대했다.

세계경제 불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선 결과, 198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 부진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했다. 이후 다시 고도성장 시대로 회귀하며 1982년 8.5%, 1983년 13.5%, 1984년 10.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성장의 중심에는 중화학공업 부흥이 있었다. 1981년 9.8% 성장에 이어, 1982년에는 선박수출이 무려 236.9%나 증가했다. 자동차의 국내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수송기계부문이 14.5%, 건설

1980년대 초·중반 주요 경제지표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인당 국민소득(달러)	1,744	1,918	2,031	2,244	2,469	2,541
경제성장률(%)	△1.5	7.4	8.5	13.5	10.6	7.9
소비자물가상승률(%)	28.7	21.4	7.2	3.4	2.3	2.5
수출(백만달러)	17,505	21,254	21,853	24,445	29,245	30,283
수입(백만달러)	22,292	26,131	24,251	26,192	30,631	31,136
무역수지(백만달러)	△4,787	△4,878	△2,397	△1,747	△1,387	△853

중장비와 일반 기계류도 13.5%나 성장했다. 중화학공업 성장은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그 비중이 1979년 45.1%에서 1984년 58.1%로 상승했다.

중화학공업의 부흥은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했다. 1980년 47억 8,700만 달러에 달하던 무역수지 적자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1985년 선진국의 수입·수요 저조에 따른 수출 감소와 투자·생산활동 위축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8억 5,30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중화학공업 성장과 함께 원유를 비롯한 수입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 그리고 수출 증가 또한 국제수지 개선에 일조했다.

제2절

중화학수출 진흥의 사명감을 안고

1. 수출입금융 시대의 개막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화와 함께 1억 달러 수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출 시대도 열었다. 정부는 1차 경제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출진흥 확대를 시도했다.

그러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관련법의 잇따른 제정에도 기존의 경공업 위주 공업구조를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수출진흥 확대 역시 중화학공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경공업 위주 전략에 머물면서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증가, 기업 부실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고도성장의 지속과 획기적 수출신장을 위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산업화가 절실히 요구되기 시작했다.

중화학공업 중심 수출산업화 전략 모색 과정에서 정부는 세계 무역시장을 탐색했다. 1960년대 세계 자본재시장은 공급자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생태계가 변하면서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구매자에게 유리한 장기에 걸쳐 대금을 지불하는 연불수출이 활성화됐고, 제품의 질과 함께 연불조건이 구매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자리 잡았다.

연불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결제대금의 일부는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 대금은 여러 해 동안 나눠서 받는 수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경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신용경쟁의 심화를 불러왔다. 선진 각국은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해 왔다. 1919년 영국을 시작으로,

1930~1950년대에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이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설립하고 자국 기업의 수출입금융을 지원했다.

세계 무역시장 탐색을 통해 연불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중화학공업 제품 중심의 연불수출 전략을 모색했다. 연불수출 지원을 전담할 공적수출신용기관 설립은 1964년 수출진흥정책 수립 때 최초로 검토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재정 문제로 유보됐다가, 1968년 상공부가 연불수출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면서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제1차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상공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화학공업 제품 연불수출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7개 국을 대상으로 선박, 버스, 기계류, 직물 플랜트 등 1,900만 달러 상당을 연불수출한다는 내용이었다.

최초의 중화학공업 제품 연불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떨어졌다. 특별지시의 내용은 연불수출을 통한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증대 방안 마련이었다. 특별지시에 따라 재무부는 '중장기 수출지원 금융제도 확립방안'을, 상공부는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방안'을 마련했다.

두 기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금 확보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전담기관 지정과 설립에는 다소 이견을 나타냈다. 재무부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되, 당분간 업무량이 많지 않을 것이니 한국외환은행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 상공부의 방안은 전담기관으로 한국은행 또는 한국외환은행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립하자는 내용이었다.

전담기관 지정과 별도 전담기관 신설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정부는 일단 별도 전담기관 신설에 무게를 두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수출 지원을 위해 전담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고, 특수·전문적인 연불수출금융 업무 내용을 감안해 전담기관으로 수은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제정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은법」 제정으로 연불수출금융 전담기관의 설립근거가 마련된 것은 수출신용경쟁이 격화되던 세계 자본재 수출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적절한 선택이었다. 「수은법」은 1969년 7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7월 28일 마침내 공포됐다.

1960년대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설립 현황

국가	공적수출신용기관	설립연도
영국	해외무역부 내 수출신용보증국(ECGD)	1919
미국	수출입은행	1934
프랑스	무역은행(BFCE)	1945
독일	부흥금융 금고(KfW), 수출금융회사(AKA)	1948
일본	수출입은행	1950
이탈리아	중기신용중앙금고(Mediocredito Centrale)	1952

최초 「수은법」 주요 내용

목적	•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담당, 외국시장 개척과 무역증진 통한 대외경제교류 촉진
성격	• 전액 정부출자의 특수법인.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적용 예외
주요 업무	• 국내업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및 기타 제품 수출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국내업자에 대한 기술제공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수입자금, 기술도입자금의 대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에 필요한 중요물자 수입자금의 국내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국내업자에 대한 해외사업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의 대출 • 대출과 관련된 업무의 보증
자금의 조달	•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 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경과 조치	• 수은이 설립될 때까지 한국외환은행이 업무대행. 한국외환은행 본업무와 분리된 독립회계

2. 수출입금융 지원기능 강화

「수은법」은 제정 4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국내 상황에서는 '중화학공업화 선언'이라는 국가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1차 오일쇼크라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수은법」은 대외경제정책을 폭넓게 뒷받침하도록 수은 기능의 확대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 기대를 담기에 아직 「수은법」은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1차 「수은법」 개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수은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작업에 들어가 제정 5년여 만인 1974년 12월 26일과 1975년 2월 28일 각각 법률 제2736호와 대통령령 제7561호로 개정, 공포했다.

제1차 「수은법」 개정에서는 수은 지원기능의 확대와 함께 설립목적도 폭넓게 규정했다. 기존의 목적인 외국과의 경제교류 촉진을 더욱 확대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촉진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화학공업화와 국제화를 뒷받침하는 막중한 임무를 새롭게 부여받았다.

개정 당위성의 핵심이었던 수은 지원기능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본재의 연불수출과 해외투자 그리고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자원개발자금을 신설하고 수입자금과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협



신문에 게재된 「수은법」 전문

력자금'과 '외국정부 대한(對韓)결제자금'도 신설했다.

수입자금 지원 확대에서는 연불수출에 필요한 원재료 등에 한정했던 지원대상 범위를 해외 수출입시장의 확보·개척에 필요한 중요 물자로 확대했다. 또 지원 가능한 중요 물자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해외투자자금 역시 기존 수출용 원자재와 필수적인 기초 기자재의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에서,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거나 해외교민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또는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와 개척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해외에 제공되는 기술의 범위에 해외건설공사를 포함해 해외건설 수출 지원의 물길도 틀 수 있었다.

대출 상환기간도 확대했다.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포함한 수은 자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 이상 5년 이하에서 6개월 이상 10년 이하로 확대했다. 신설된 주요자원개발자금과 대외경제협력자금의 대출기간도 20년으로 설정했다.

1차 「수은법」 개정은 수은 지원기능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자금조달 기반도 확충했다. 법정자본금을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부로 국한했던 출자자의 범위도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수출업자 단체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로 확대했다.

당시 법정자본금의 확대는 국내 금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서, 국내 대표 국제금융기관으로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차입 범위와 규모도 확대했다. 소요자금의 국내차입선을 출자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해외차입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에 외국정부로부터의 차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 외 업무의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재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수출업자 단체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은 업무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도 구성했다.

제1차 「수은법」 개정 주요 내용(1974)

설립목적 확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촉진
지원기능 확대	• 주요 자원개발자금 신설. 수입자금,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지원범위 확대 • 대외경제협력자금, 외국정부 대한(對韓)결제자금 신설 • 해외투자자금 지원범위 확대
대출 상환기간 확대	• 6개월 이상 5년 이하에서 6개월 이상 10년 이하로 확대 • 주요 자원개발자금,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기간 20년
자금조달 기반 확충	• 법정자본금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 • 출자자 범위 확대. 국내 금융기관, 수출업자 단체, 국제금융기구 • 국내/해외 차입 범위 및 규모 확대.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업무운영 및 의사결정 책임소재 명확화	• 정부부처,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수출업자 단체대표로 운영위원회 구성

이는 지원 여부가 개별거래의 채산성보다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수은 여신의 특성을 고려, 이사회 권한과 기능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3. 업무대행기 연불수출금융

1969년 7월 「수은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공포된 이후 수은 업무는 「수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했다. 한국외환은행은 이에 앞서 1969년 5월 중장기신용부를 신설하고 업무대행을 준비해 왔다. 「수은법」 제정 직후에는 정부로부터 1억 원의 재정자금을 지원받아 10월 29일부터 수은 업무를 수행했다.

수은 업무 대행기간 중 지원된 수은 자금의 종류는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최초의 지원자금은 해외투자자금이었다. 업무대행 3년째인 1971년 인도네시아의 산림 자원 개발을 위해 3억 8,800만 원의 해외투자자금을 승인함으로써 첫 실적을 기록했다.

첫 수출자금은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플랜트 수출이었던 승리기계제작소의 아프가니스탄 수출건이었다. 직기(織機) 155대의 연불수출 거래에 3억 3,500만원을 지원했다.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중반이었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이 무렵의 대형 조선소 건설에 따라 연불수출금융이 크게 증가했다. 부산 영도에 조선소를 둔 대한조선공사(현 HJ중공업)가 1972년 거제도에 옥포조선소(현 한화오션, 구 대우조선해양)를, 현대중공업도 1973년 울산조선소를 건설했다. 해운업도 대한해운공사(구 한진해운)를 중심으로 1973년 경 40여 개 업체가 번창했다.

조선·해운업 활성화에 힘입어 업무대행 기간 동안 유조선 2척, 화물선 28척, 어선 15척 등 총 45척의 수출선박을 수출자금으로 지원했다. 그 외 섬유기계, 목재기계, 철도차량, 전화교환 시설 등에도 수출자금을 지원했다. 해외투자자금 역시 수출자금보다 규모는 작지만 꾸준한 지원실적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투자에 이어, 모로코와의 원앙어업 합작투자, 대한조선공사의 노르웨이 선박용선(船舶傭船) 사업 등에 해외투자자금을 지원했다.

사업 초기, 연불수출 거래가 늘어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 다소 어려움도 나타났다. 계약 체결 후 지원대상 거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에 관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수출시장 개척과 지역 다변화 그리고 대외경제협력 증진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중화학공업 자금지원이라는 수은의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지원도 종종 있었다. 타이어류, 어망류(漁網類), 면혼방직물(綿混紡織物) 등이 특정 지역의 시장개척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불수출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업무대행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사정이었다. 대출승인 때마다 자금조달이 가능한지의 여부



1969.10.29 한국외환은행의 수은 업무대행 시업식

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수은자금의 주요 재원인 정부의 지원자금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금요청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다행히 제1차 「수은법」 개정으로 자금사정에 숨통이 트였다. 1975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지원규모에 맞춰 국민투자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한국은행이 한국외환은행에 출자한 500억 원 중의 일부도 수은대행 업무의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수은의 자금지원 실적이 급신장했다. 1969년 업무대행 이후 1974년까지 56억 원에 불과했던 실적이 1975년 271억 원, 1976년 상반기에만 16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대행기간 동안의 지원 규모가 총 487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원실적의 성장에도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연불수출금융

의 효율화·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고심 끝에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한 선별 지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1976년 3월 경제장관간담회의를 통해 1976년도 연불수출 지원 금융기준을 수립했다. 지원 대상 품목을 선박, 철도차량, 플랜트, 산업기계로 한정했고, 유리한 연불조건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금률, 연불금리, 연불기간, 외산자재의존율 등 지원대상 거래요건을 강화했다. 또 수출계약 체결 30일 전까지 대출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외투자자금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사업 현장

4. 한국수출입은행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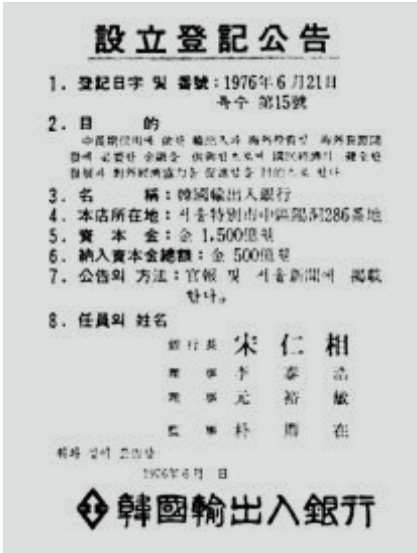
「수은법」 제정과 업무대행은 재무부가 수립한 ‘중장기 수출지원 금융제도 확립방안’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당분간 업무량이 많지 않을 것이고 재정형편상 정부출자의 조속한 실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설립을 잠시 미루고 한국외환은행이 수은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수은법」 제정 이후 4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고 울산 조선소가 건설되는 등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중화학 제품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1차 오일쇼크는 연불수출금융 확대의 기폭제가 됐다. 세계 조선 시장이 불황에 직면하면서 연불조건인 선박수출이 일반화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업무대행의 한계 지적과 함께 연불수출 확대를 위한 독립 전담기관 설립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수은 지원기능 확대가 목적이었던 1차 「수은법」 개정은 사실 독립기관 수은 출현의 서막이었다.

1975년 2월 20일, 제1차 「수은법」 개정으로 신설된 임시운영위원회는 첫 활동으로 ‘수은 업무대행준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수은 설립 적극 지원이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975년 7월 정부는 한국외환은행의 중장기신용부를 기획부와 업무부로 확대 개편하고 수은 설립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9개월 뒤, 수은 설립의 밑그림이 나왔다. 수은 설립계획의 최종 확정과 함께 1976년 4월 10일



1976.06.22 <서울신문>에 공고된 수은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로 결정된 대우센터빌딩 전경



1976. 04. 10 수은설립위원회 출범

수은설립위원회가 출범했다. 10명의 인사 중 남상진·조충훈 당시 재무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하영기 당시 한국은행 부총재가 설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출범 직후 설립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4개 반의 사무국을 편성하고 실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어서 5월 12일 정부는 송인상 초대 은행장을 임명했고, 6월 1일 2차 설립위원회 회의에서는 2명의 이사과 1명의 감사를 선임해 초대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 이때 수은 설립예산안과 정관을 의결했으며, 수은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6번지(대우센터빌딩 16층)로 정한 것도 제2차 회의 때 결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6월 10일 예산안·정관안을 재무부 장관에게 승인받았다.

6월 17일에는 한국은행 출자금을 최초 자본금으로 납입했다. 설립위원회는 한국은행 출자금 200억 원 중 한국외환은행 수은 계정에 올라 있던 재정자금 대출금 53억 원을 6월 21일자로 수은 자본금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1976년 6월, 수은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갈 즈음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981년 13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액을 60억 달러로 정했다. 그 중 연불수출액을 27억 6,000만 달러로 책정함으로써 신생 수은에 막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했다.

지대한 정부의 기대 속에 설립위원회는 6월 21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수은 설립등기를 마쳤고, 이튿날인 6월 22일 이를 〈서울신문〉에 공고했다. 수은이 대외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설립위원회는 「수은법」 부칙 규정에 따라 6월 23일 수은 은행장과 함께 설립 경과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그 임무를 종료했다. 곧이어 재무부 장관이 「수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은의 업무개시일을 1976년 7월 1일로 지정했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수출입 전문 국책은행 수은이 공식 출범했다.



1976 수은 현판식

수은은 당시 개발도상국 최초의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전담 국책금융기관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수은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자본도입국에서 벗어나 자본재 수출과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남다른 의미만큼 국내 언론의 관심도 사뭇 컸다. 사실과 특집 기사를 통해 수은의 출범을 일제히 환영했다. 수출입국의 기반이 한층 공고해지고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명실상부한 대형화와 국제화 시대를 열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뿐 아니라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3부 1실의 조직과 80명의 소수 정예로 출범한 수은은 업무개시 다음날인 7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운영위원회, 직원임용, 직제분과, 회계 등 24개 규정을 제정하고 기본 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행가, 행훈, 행기, 휘장, 캐치프레이즈 등을 정하고 신생 수은의 경영이념 체계도 확립했다.

‘중화학수출 진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며, ‘진취적 기상’, ‘인화단결’, ‘자기계발’을 행훈으로 삼았다. 휘장은 ‘수출입’의 ‘수’자를 형상화한 도형이었다. 송인상 초대 은행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투자재원 극대화’, ‘산업구조 중화학공업화 촉진’, ‘금융국제화 선도 인재양성’, ‘세계경제 정보활동 강화’를 4대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수은 설립과정(1969~1976)

시기	내용
1969.07.10	• 「수은법」 제정·공포
1974.12.26	• 제1차 「수은법」 개정·공포
1975.02.20	• 임시운영위원회 신설, ‘수은 업무대행준칙’ 제정
1976.04.10	• 수은설립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남상진·조충훈 재무부 차관 • 4개 반 12명의 설립 사무국 편성
1976.05.12	• 송인상 초대 은행장 임명
1976.06.01	• 2차 설립위원회 회의, 이사 2명 감사 1명 선임 • 수은 설립예산안, 정관 의결 • 본점 소재지 확정
1976.06.10	• 예산안·정관안 재무부 장관 승인
1976.06.17	• 최초 자본금 납입(한국은행 출자금)
1976.06.21	• 한국외환은행 수은 계정 재정자금 대출금 53억 원, 수은 자본금으로 전환 •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수은 설립등기
1976.06.22	• 수은 설립 관련 <서울신문>에 공고
1976.06.23	• 재무부 장관에 수은 설립 경과보고서 제출
1976.07.01	• 재무부 장관, 수은 업무개시일 지정 • 수은 출범
1976.07.02	•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24개 규정 제정. 행가, 행훈, 행기, 휘장, 캐치프레이즈 제정 • 송인상 초대 은행장 4대 경영방침 제시

5. 수출입금융 지원체제 정비

수은 설립 이후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자금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 역시 시급히 요구됐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수은 출범 이듬해인 1977년 12월 19일 법률 제 3022호로 제2차 「수은법」 개정을 공포했다. 수은은 각종 지원제도의 정비와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그리고 해외 자금조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업무기반을 확립해 나갔다.

제2차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은 1,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정부는 수은 업무의 경제·외교적 중요성을 감안,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외무부장관이 지정한 1인을 추가했다. 무엇보다 이사회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경영체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설립 목적에서는 ‘중장기 신용에 의한’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일람불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의 이행 또는 대출금의 상환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거래 역시 수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 중심의 수은의 대출업무는 제2차 「수은법」 개정을 거치면서 크게 다양해졌다. 중동건설 특수에 따라 해외 건설공사 지원을 위해 1977년 기술제공자금을 처음으



1977.01 대한재보험공사와 수은간 수출보험 업무 인수인계

로 지원했다. 1979년부터는 구매자신용 방식 직접대출과 외국금융기관 전대자금 공여를 시작 했다.

구매자신용 방식은 국내 수출자가 차주가 되는 기존의 공급자신용 방식과 달리 해외 구매자 를 차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이 방식은 국내 수출자의 재무 구조 건실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전대자금 역시 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 써 중소기업 중심의 잠재수요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수은은 1981년부터 주요 자원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외 대출업무로는 급증하는 연불수출 금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 국내 금융기관 협조대출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이후 지원대상 사업과 협조대출 대상기관이 점차 확대되면서 자본재 수출기업 자금수요 충족에 큰 힘을 보탰다.

1985년 국제금융시장은 고금리 추세와 남미 국가들의 외채위기 상황을 맞아 불안감이 고조 됐다. 수은은 이때 저금리통화 대출로 자본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종통화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대출업무 외에도 수은은 수출보험 업무, 보증 업무, 외국환·수출입 업무 등을 확대했다. 수출보 험 업무는 1977년 1월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인계받아 시작했다. 이후 수출보험기금을 증액하 고, 수출보험의 인수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했으며, 아울러 새로운 수출보험상품을 도입하는 등 수출보험 업무 기반을 확충했다. 보증업무의 경우 1977년 선수금환급보증 업무와 계약이행보증

업무를, 1980년부터는 협조대출 금융기관 채무보증 업무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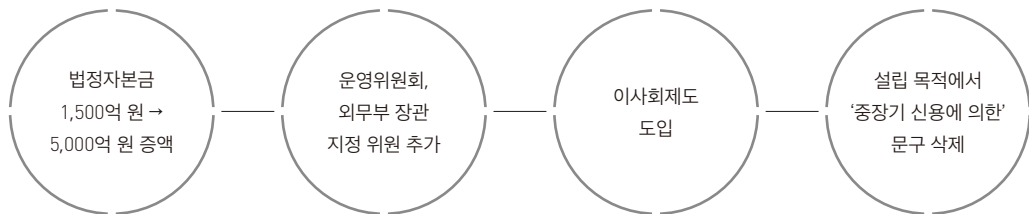
외국환·수출입업무는 1976년 10월 갑류 외국환은행 인가를 받아 시작했다. 이후 1978년 내국신용장 업무를, 1979년 국내 산업기자재 반출확인과 외국 기자재 수입승인 업무를, 1982년부터는 그동안 상공부에서 맡아오던 산업설비 수출허가 업무 중 일부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자금조달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본확충과 조달수단 다양화를 통해 수출기업 지원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나갔다.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이 554억 원에 불과했으나, 「수은법」 2차 개정을 통해 1985년 말 납입자본금을 4,279억 원으로



1976.10 갑류 외국환은행 인가 공문

제2차 「수은법」 개정 주요 내용(1977)



설립 및 업무기반 구축기 주요 업무활동(1976~1985)

시기	내용
1976	갑류 외국환은행업무 인가
1977	기술제공자금 지원, 수출보험업무 개시 선수금환급보증업무, 계약이행보증업무 개시 국내 최초 1억 4,900만 달러 연불어음 국제금융시장에서 매각
1978	내국신용장업무 개시 2억 달러 은행차관 도입
1979	구매자신용 방식 직접대출, 외국금융기관 전대자금 공여 개시 국내 산업기자재 반출확인, 외국 기자재 수입승인업무 개시
1980	국내 금융기관 협조대출제도 도입, 시행 협조대출 금융기관 채무보증업무 개시
1981	주요 자원개발자금 지원
1982	산업설비 수출허가업무 일부 취급
1984	50억 엔 규모 엔화표시 채권 발행
1985	이종통화 대출제도 도입

확충했다. 자본금 외 수은은 급증하는 수출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 협소한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를 딛고 해외조달을 강력히 추진했다.

먼저 1977년 6월 국내 최초로 1억 4,900만 달러 규모의 연불어음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매각했다. 이어서 1978년 8월 2억 달러의 은행차관을 도입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가 조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차관이었다. 그 여세를 몰아 1984년 수은은 처음으로 일본 도쿄 자본시장에서 50억 엔 규모의 엔화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다양한 방식의 왕성한 해외조달은 수출금융 주요 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국제수지 개선과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수은 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6. 수출금융 지원 활성화

수은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수출산업화의 선봉에 나섰다. 수은의 자금지원 범위는 2차래 「수은법」 개정을 통해 해외투자자금, 전대자금, 기술제공자금, 주요자원개발자금 등으로 늘어났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자금지원의 대부분은 수출자금이 차지했다. 수출자금 지원실적은 1976년 473억 원으로 출발, 1985년 8,401억 원으로 늘어나며 9년 동안 약 18배 성장했다.

연불수출금융을 중심으로 한 수은의 수출자금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전체 공업생산 중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수은 설립 이후 1977년 51.5%, 1980년 53.6%로 크게 높아졌다.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2년 21.3%에서 1980년 41.6%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

무엇보다 수은의 수출자금 중심에는 선박수출이 있었다. 수은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승인된 수출자금 중 76.5%를 선박수출에 지원했다. 당시 대한조선공사(현 HJ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의 선박수출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수은의 집중적인 선박수출 지원은 1975년 이후 찾아온 전 세계적인 조선 장기 불황에서도 세계 2위 조선강국을 견인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이 기간 중 선박의 수출규모는 1975년 이후 연평균 2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선박수출의 비중도 1977년 4.7%에서 1984년 6.5%로 성장했다. 1970년대 후반 일본과 유럽의 선진 조선국들이 불황 타개를 위해 조선소 통합과 폐쇄조치를 단행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은의 수출자금 지원을 버팀목으로 조선산업의 수출전략사업화를 더욱 강화했다.

플랜트수출은 선박과 더불어 '자본재 수출지원'이라는 수은 설립목적의 근간이 되는 산업부문이자 수은 연불수출금융의 또 다른 한 축이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세계 플랜트 수출시장은 연평균 17.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해상유전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해양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 등의 수요가 급



1984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

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은은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 플랜트 및 기계류 수출을 위한 수출자금을 활발히 지원했다.

수은은 1973년 아프가니스탄 인견직물설비 수출, 1977년 필리핀 자동전화교환시설 수출에 각각 수출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1978년 1,600만 달러, 1984년 1억 달러, 1985년 2억 900만 달러로 지원규모를 꾸준히 확대했다. 지원대상 품목도 화력발전설비, 해수담수화설비, 해상 석유시추·생산설비, 시멘트 플랜트, 타이어 플랜트 등으로 대형화·다양화했다.

해외투자자금은 수출자금에 이어 꾸준히 많은 규모로 지원된 자금이었다. 1976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980년대 전반에는 2차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확산된 자원민족주의 대응 과정에서 자원개발 투자 또한 활발히 이뤄졌다.

해외투자자금 및 주요자원개발자금 지원은 1977년 156억 원, 1978년 161억 원, 1982년 64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후, 자원개발 투자가 부진했던 1984년부터 감소해 1985년에는 87억 원으로 축소됐다.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례로는 동남아 국가 원목개발사업과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추진한 유연탄개발사업, 코데코에너지의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 개발사업 등이 있었다.

제2차 「수은법」 개정을 계기로 도입했던 기술제공자금 지원은 쌍용이 가봉에 건설한 백화점 건설공사가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아세아항공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한 항공지도제작 용역계약도 이 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었다. 기타 제조업 투자 역시 1980년대부터 플랜트수출에 수반된 해외투자와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시장지향형 또는 생산요소 지향형의 투자진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설립 및 업무기반 구축기 자금지원 실적(1976~1985)

단위: 억원

연도	수출자금				전대자금	기술제공 자금	해외투자 자금	주요자원 개발자금	합계
	산업설비	선박	기계류·기타	합계					
1976	-	429	44	473	-	-	61	-	534
1977	1	717	16	735	-	70	156	-	960
1978	360	584	107	1,051	-	60	161	-	1,272
1979	502	905	55	1,462	10	4	110	-	1,586
1980	380	2,517	66	2,963	17	2	21	-	3,002
1981	450	4,556	39	5,044	16	0	115	65	5,241
1982	1,353	4,927	65	6,345	20	6	513	133	7,016
1983	1,856	4,731	92	6,679	6	2	317	192	7,195
1984	891	7,417	42	8,350	-	-	144	45	8,539
1985	1,613	6,751	36	8,401	17	-	36	51	8,506

제2장

세계와 연결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성장하다

1986

1996

제1절

변화와 개혁의 시대,
세계화를 향해

제2절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힘찬 전진

제1절

변화와 개혁의 시대,
세계화를 향해

1. 국제수지 흑자 전환과 개방화

우리 경제는 1981년 다시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데 이어, 1986년에는 국제수지 흑자 시대를 열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착실히 수행해 온 경제 안정화 시책과 대외적으로는 3저 현상에 힘입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됐다.

달러 약세, 유가 하락, 국제금리 하락 등 이른바 3저 현상은 물가의 안정을 가져왔다.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엔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졌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적자를 이어오던 국제수지가 마침내 흑자로 돌아섰다.

국제수지 흑자 전환은 개방화와 자유화를 촉진했다. 당시 국가 간 통상마찰은 개별상품 수입규제보다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더욱이 대규모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에 상품·서비스는 물론 자본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제 통상질서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는 개방화·자유화로 글로벌 경제체제 편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통상마찰



1986 경상수지 흑자 실현 관련 기사

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자유화 확대, 관세 인하 등을 추진했다.

먼저 1986년 7월 1일 수입자유화를 단행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도 과보호하던 품목, 시장지배적 품목이지만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품목, 추가투자가 필요 없는 데다 국제적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수입 원자재로서 그 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의 수입을 자유화했다. 이후 공산품 수입개방이 크게 증가했다. 수입자유화율은 1985년 89.8%에서 1989년 99.5%로 거의 전 품목의 수입 자유화가 이뤄졌다.

수입자유화에 이어 관세가 인하되고 외환거래 규제가 완화됐다. 이는 계속된 고도성장의 대가였다. 국제사회는 저개발국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선진국과의 정당한 경쟁을 요구했다. 국제사회 목소리에 부응해 1988년 우리나라는 199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춘다는 ‘관세 인하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988년 11월에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8조국에 가입했다. ‘8조국’이란 IMF 협정 제8조의 의무규정 준수국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경상지불 환제한 철폐, 차별적 통화조치 철폐, 외국보유 자국통화의 교환성 부여 등 3가지 의무를 준수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GATT 제18조 B항에 따라 그동안 누려오던 수량적 수입제한 특혜도 1990년 1월부터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부문에서는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를 단행했다. 여신금리 자유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금융에 적용해 오던 연 10%의 우대금리제, 지방은행 대출금리의 연 1% 포인트 가산제 그리고 연체대출의 연 19% 최고금리 등을 모두 폐지했다. 그 외 무역금융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무역어음제도를 도입했으며,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콜시장 개설과 함께 외환집중제도 일부 완화했다.

2. 산업구조 개편과 고도성장

개방화·자유화와 함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산업구조 개편을 지속했다. 당시는 급속한 원화절상, 노사분규 그리고 임금 급상승으로 국내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계속



1988.12.01 금리자유화 시행 관련 기사

된 시장개방으로 대외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었다. 게다가 후발개도국의 추격, 선진국 보호무역과 기술장벽 등이 우리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우선 정부는 1986년 「공업발전법」을 제정했다. 자동차, 발전설비, 전자교환기, 동제련, 디젤엔진, 중전기기, 건설 중장비 등 7개 분야를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는 종전의 선별적 산업육성법을 대체한 것이었다. 이후 정부는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국산화를 제고, 수출 증대 등을 꾀했다.

이 시기 조선업종도 합리화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중화학공업 수출산업화를 이끌었던 조선업은 1983년 이후 세계 조선경기 불황을 계기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선박수주량 감소, 선가 하락 등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부 조선기업의 경우 재무구조의 악화로 도산마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1989년 8월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조선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했다. 공동기술개발 확대,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신증설 억제, 저가수주와 과당경쟁 방지, 계열기업 처분·자산매각·출자 등의 재무구조 개선을 합리화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조선산업의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합리화 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대한조선공사는 1978년 거제도 옥포조선소를 대우그룹에 넘긴 이후, 1989년에는 부산 영도조선소마저 한진그룹에 매각하고 국내 조선업에서 쓸쓸히 퇴장했다. 조선업에 앞서 진행됐던 해운 합리화 과정에서도 1987년 국내 최대 해운사였던 대한해운공사가 한진해운에 흡수됐다.

산업구조 개편 못지않게 기술경쟁력 확보도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중 하나였다. 이 시기 정부와 기업은 R&D 투자를 크게 늘렸다. 그 결과 GDP 대비 R&D 투자규모가 1980년 0.9%에서 1989년 2.2%로 크게 높아졌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수도 1986년 297개에서 1989년 749개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 공공복지기술, 대형·복합 첨단기술, 국제 공동연구 등 민간이 담당하기 곤란한 기술개발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1980년대 중후반 주요 경제지표(1986~1989)

구분	1986	1987	1988	1989
1인당 국민소득(달러)	2,911	3,658	4,895	5,990
경제성장률(%)	11.5	12.9	12.1	7.2
수출(백만 달러)	34,714	47,281	60,696	62,377
수입(백만 달러)	31,584	41,020	51,811	61,465
무역수지(백만 달러)	4,710	10,058	14,506	5,344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7,905	9,144	12,340	14,978

중소기업 문제 역시 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부문의 상대적인 부진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했다. 더구나 밖으로는 통상마찰과 수입개방 압력, 안으로는 노사분규와 임금상승 등으로 당시 국내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989년 6월 처음으로 해외투자 관련 특별외화대출자금 1억 달러를 한도로 설정해 지원했다. 사업 전환에 따른 유휴설비의 해외이전 촉진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다. 기술개발 촉진방안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했으며, 자금지원 확충방안으로는 부산과 대구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했다.

1986년 첫 국제수지 흑자 달성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산업구조 개편과 개방화를 이어나온 결과,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1986년 총 저축률이 국내 총 투자율을 처음으로 상회하며 투자재원의 완전자립이 가능해졌다. 외채도 이때를 고비로 감소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1986년 11.5%, 1987년 12.9%, 1988년 12.1%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달성하며 고도성장을 이어갔다. 경상수지는 1986년 47억 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198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988년에는 145억 600만 달러로 흑자규모를 더욱 늘렸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도 1986년 4.2%에서 1988년 7.7%에 이르렀다.

고도성장과 국제수지 흑자는 수출실적을 끌어올렸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26.7%에 달했다. 자동차(82.5%), 일반기계(54.1%), 전자제품(43.2%) 등이 수출을 주도했고, 철강제품과 화학제품도 26.1%로 평균 증가율을 따라붙었다.

특히 반도체, VTR, PC 등의 첨단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실적을 견인했다. 한발 앞서 생산시설을 확충했던 발 빠른 대응이 획기적 수출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부진을 면치 못하던 선박수출은 1980년대 후반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1986년과 1987년 각각 △64.0%, △37.3%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1988년 5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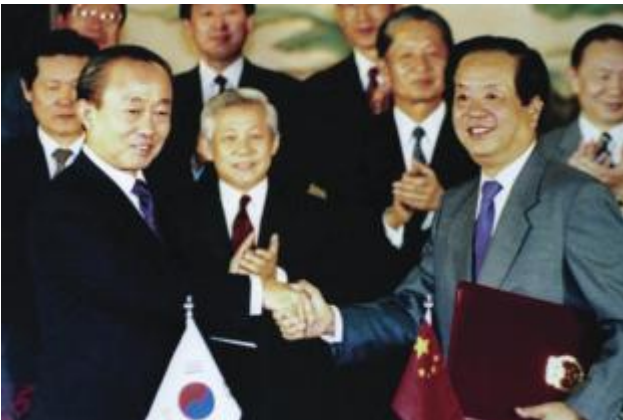
3. 이념을 넘어 북방·남북교류 증진

1989년을 끝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마감한 우리 경제는 1990년대 더욱 복잡한 대내외 환경을 맞이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에 걸쳐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변화가 일어났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됐다.

정부는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다. 마침 동서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고, 구 소련의 붕괴로 이념 대립과 갈등 대신 전 세계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1990.09.30 한·소 수교 체결식



1992.08.24 한·중 수교 체결식

탈냉전 시대를 맞아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 도입도 빠르게 진행됐다. 동서 화해무드는 냉전과 이념의 최전선이었던 한반도에도 순풍을 밀어 넣으며 우리 경제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제공했다. 분단의 상징성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이 시기 정부는 북방외교를 강력히 추진했다.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선점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이었다.

가장 먼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천명하며 1989년 냉전을 종식한 구소련과 손을 잡았다. 1990년 6월 한·소 수교를 체결했으나, 이듬해인 1991년 12월 구소련 해체를 계기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이 탄생했다. 이때 정부는 구소련을 법적으로 승계한 러시아와 다시 수교했고, 이를 필두로 각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80년대 말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교류가 점차 늘어나던 중국과는 1991년 무역대표부를 설치한 데 이어, 1992년 8월 정식으로 수교했다. 베트남 역시 1992년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에 이어, 1992년 12월 서울·하노이에 각각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정식 수교했다.

북방·남북교류 주요활동 및 성과(1990~1996)

시기	내용
1990.06	한·소 수교
1991.12	소련 해체, 이를 승계한 러시아와 수교
1992.08	한·중 수교
1992.12	한국·베트남 수교
1994	중국·러시아·베트남 3국 교역규모 150억 달러 달성, 연평균 30.8% 신장 중국 3대 교역상대국 부상(116억 7,000만 달러)
1996	남북교역 2억 5,000만 달러 달성(한국, 북한측 4위 무역대상국 부상)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경제교류 확대를 의미했다. 정부는 수교 이후 무역과 투자 보장, 이종과세방지협정 등 경제 관련 일반협정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을 통해 상호교류 기반도 더욱 넓혀 나갔다.

외교적 노력은 마침내 교역 확대를 불러왔다. 중국·러시아·베트남 3국의 교역이 크게 성장했다. 1992년 77억 3,000만 달러, 1993년 114억 7,000만 달러, 1994년 150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달성하며 연평균 30.8%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 3국 교역량 확대는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했다. 우리가 전자·섬유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3국으로부터 농수산물, 자원 등 1차 상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무역구조가 정착되면서 미국·일본에 쏠린 수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3국 교역 확대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다. 중국과는 1994년에만 116억 7,000만 달러의 교역량을 달성하며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탈냉전은 남북교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남북교역은 연간 승인기준으로 1989년과 1990년 1,000만 달러 수준에서 1991년 1억 1,000만 달러로 급증한 이후 1996년 2억 5,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북한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 대외무역국으로 성장했다. 교역방식도 제3국을 경유한 간접교역에서 벗어나 1991년 이후 직접교역, 임가공교역으로 발전했다.

4. 세계 경제질서 중심국 부상

개방화·자유화 물결 속에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1993년 출범한 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화두로 앞으로 10년 후 선진경제 진입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행정쇄신의 제도개혁, 국민편의의 생활개혁, 미래대비 세계화, 경제활성화의 규제개혁 등 국가혁신을 통해 선진국가 건설을 시도했다.

특히 무역 적자와 물가 불안의 경기침체를 맞아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을 수립했다. 이후 정부는 대내외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과 자율성 보장 그리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재정·금융·행정 등 전 부문에 걸친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신경제 구호 아래 이 시기 정부는 금융 측면에서 금융자율화도 적극 추진했다. 이미 진행된 1991년 11월 단기 여신금리와 거액의 단기 금융상품 금리의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에 이어, 1993년 11월 2단계 금리자유화, 1994년 7월과 12월 3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했다. 이로써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 2년 이상의 정기예금금리, 회사채, 금융채, 국공채, 통화채의 금리자유화가 이뤄졌다.

금리자유화와 함께 1993년 8월 정부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금융실명제를 전격



1994.04.15 WTO협정 합의

실시했다. 당시 조치는 지나친 개혁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도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금융의 효율성 제고, 지하경제 척결 등의 성과에 힘입어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개방화·자유화 물결은 세계화를 관통하며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했다. 그 시작은 1947년 국제교역의 전면 자유화를 내세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GATT의 출범이었다. 이후 GATT는 다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했다.

그 결과 8차에 걸친 협의 끝에 세계 각국은 1994년 4월 마침내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WTO(World Trade Organization)협정에 합의했다. WTO협정은 상품 이외에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를 포괄했고, 관세·비관세 장벽의 완화는 물론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 보호주의 수단의 남용을 억제하는 분쟁해결 절차 도입까지 명시했다.

1967년 4월 GATT 가입으로 세계경제 질서에 편입한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한 WTO에도 가입하며 새로운 경제질서에 참여했다. 당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에서 타격이 예고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의 대폭적인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세계시장에 폭넓게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세계화 파고는 WTO 합류를 넘어 우리나라를 OECD 가입으로 이끌었다. 경제성장의 대가로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미 1980년대 말부터 OECD 가입 촉구 목소리가



1996.10.25 OECD 가입 서명식

높아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개방에 따른 성장위축 부담 때문에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화 물결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경제 질서의 방향이었고,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화를 통해 선진화에 도달한다는 전략에 따라 OECD 합류를 결정했다.

먼저 1990년 3월, OECD 비회원국 최초로 아시아 신흥공업국 6개 국을 포함한 OECD 비공식 경제정책협의회 회의의 서울유치에 성공했고, 이때부터 OECD 산하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1991년 4월에는 OECD 가입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1996년 12월 마침내 OECD 가입과 함께 세계경제 질서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

5. 안정적 성장과 해외투자

탈냉전과 세계화 물결이 거세게 몰아쳤던 1990년대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 적자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경상수지는 1990년 28억 달러 적자에 이어, 1991년에는 80억 달러의 적자 폭을 기록했다.

그나마 경제성장률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호조에 힘입어 1990년과 1991년 1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92년 경제성장률은 6.4%를 기록,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수출은 1990년 4.2% 증가에 그쳐 그 상승세가 다소 꺾였으나, 1991년부터 차츰 회복해 1993년까지 연평균 8.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995.03 WTO체제 하 수은의 역할을 다룬 관련 기사

신경제 추진 이후 우리 경제는 그간의 부진을 털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세계경기의 부진 속에서도 1993년 경제성장률이 7.0%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후 1994년 9.4%, 1995년 9.7%, 1996년 8%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갔다.

특히 신경제 기간 중 정부는 기술·지식집약적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했고, 세계화에 대응해 해외투자 기반도 확대했다. 그 결과 수출실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선박, 반도체, 전자제품 총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 1995년 1,251억 달러, 1996년 1,297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994년 13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단일 품목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첨단 제품 수출 증가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외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일본 엔화의 강세에 따른 반사이익의 영향도 있었다.

수출규모 확대와 함께 정부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도 크게 늘어났다. 해외투자는 1988년 이후 각종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상품교역과 생산을 포함한 기업활동 전반에서 국경이 사라지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고, 정부 역시 「외국환관리법」 등 해외투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자유화·개방화를 뒷받침했다.

특히 1994년 외환제도 개혁의 하나로 단행된 해외 직접투자 자유화 확대 조치로 해외투자 규모가 급증했다. 1994년 총 해외투자액이 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늘어났으며, 1996년 역시 44억 4,700만 달러를 기록, 2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해외투자 급증에는 해외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해외투자 지원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산업별·지역별로는 제조업과 미주·아시아지역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1994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이전 주요 경제지표(1990~1996)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인당 국민소득(달러)	6,811	7,870	8,385	9,179	10,732	13,006	13,859
경제성장률(%)	10.0	10.9	6.4	7.0	9.4	9.7	8.0
소비자물가상승률(%)	8.6	9.3	6.2	4.8	6.3	4.5	4.9
수출(백만 달러)	65,016	71,870	76,632	82,236	96,013	125,058	129,715
수입(백만 달러)	69,844	81,525	81,775	83,800	102,348	135,119	150,339
경상수지(백만 달러)	△2,804	△8,034	△2,901	1,688	△4,794	△10,230	△24,401



1988.02 해외투자 지원제도 설명회

년 투자비중의 27.6%를 차지, 제1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993년과 1994년 연간 200%가 넘는 급격한 신장세를 기록했다.

산업별 우위를 나타낸 제조업의 경우 1996년에만 64%의 투자 비중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 기계류, 섬유·신발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섬유와 신발업종의 투자는 아시아와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이 지역의 값싼 노동력이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수출·해외투자 확대 성과가 무색하게 경상수지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원화절상과 시장개방의 확대로 수입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을 키웠다. 1993년 17억 달러 흑자 실현으로 겨우 적자를 모면했으나, 1994년 마이너스 48억 달러로 다시 적자로 회귀했다. 더구나 이듬해인 1995년 적자 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심지어 1996년에는 무려 244억 달러로 불어나며 1990년대 들어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제2절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힘찬 전진

1. 제3차「수은법」개정과 역할기능 강화

1977년 제2차 「수은법」 개정 이후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외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대외적으로는 3저 현상과 엔화 강세로 우리 경제가 국제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내부적으로는 고도성장에 맞춰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었고, 기술개발과 해외투자도 확대되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 제3차 「수은법」 개정을 단행했다. 「수은법」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법정자본금 증액, 수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해외 현지법인 투자자금 지원, 국내외 법인 출자근거 신설 그리고 자율기능 제고 등의 내용을 제3차 「수은법」 개정에 반영했다.

제3차 「수은법」 개정 주요 내용(1986)

구분	내용
법정자본금	5,000억 원 → 1조 원 증액
수입자금	수출·내수용 구분 없이 주요 물자·자원 지원 확대
국내기업 외국법인	장기자금 직접 지원
수은 자회사	국내외 자회사 설립근거 마련
자율기능 제고	여유자금 운용방법, 자체 신축적 운용
기타	운영위원회 규정
	대출이율, 어음할인율 및 채무보증료율 규정
	업무방법서 규정

3차 개정의 결과, 법정자본금은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 증가했다. 법정자본금 증액은 대외신인도 제고를 고려한 판단이었다.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은 수은의 특성상 국제 금융시장에서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 불어나는 납입자본금의 압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실제 수은의 납입자본금은 1986년 4,579억 원으로 불어나 법정자본금 증액이 필수적이었다.

수입자금의 확대는 시장개방 조치에 따른 전략이었다. 국제수지 흑자를 계기로 선진국의 대외 개방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는 수입자유화 확대 등의 조치로 대외압력에 대응했다. 그리고 제3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수입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해외 수출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필요한 수출용 원료·재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물자’로 제한했으나, 이를 ‘국민경제상 장기 안정적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물자·자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물자 또는 주요자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수출·내수용 구분 없이 주요 물자·자원의 수입자금 지원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수은은 통상마찰 완화와 국제수지 관리 적정화라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경제상 필수적인 물자·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87년 수입자금 지원제도를 정비한 데 이어, 1988년부터 수입자금 지원을 개시했다.

3차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지원대상의 글로벌화였다. 국내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이 출자한 해외법인의 현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지원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자국 기업의 해외법인에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지급이자의 원천세 면제 혜택을 제공했고, 이는 해외투자사업 활성화로 이어졌다.

개정 수은법으로 수은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차 개정에서 국내외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수은은 조사·연구는 물론 해외차입·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등 자금조달업무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여유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보유, 한국은행 예입 등 한정된 운용방법에서 벗어나, 수은의 자금지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수행

「수은법」 개정으로 업무기능이 확대된 수은은 정부수탁 업무수행으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그 계기가 바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의 시작이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공적개발원조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중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

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ODA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정립한 개념으로서, 증여(Grant) 또는 양허성을 기준으로 하는 원조자금을 의미한다.

그 중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차관보다 낮은 이자율, 긴 상환·거치 기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양허성 차관을 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았던 MSA(Mutual Security Act) 원조 역시 ODA 성격이었다.

우리나라가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배경은 경제성장이었다. 1980년대 국제사회는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그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좀 더 개도국 혜택을 유지하길 원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참여는 미온적이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국제개발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출자, 개도국 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무상 기술용역 제공 등 소극적 활동에 머물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수지 흑자로 국제사회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개도국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희망하기 시작했다. 개도국은 각자 의욕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벤치마킹에 나서고 한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개도국과의 협력은 우리 입장에서조차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개도국은 당시 우리



1987.06.01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수탁 현판식



EDCF 지원을 통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1989.05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식

나라 전체 교역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해외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외건설 역시 대부분이 개도국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더욱이 시장 다변화와 선진국 신보호주의에 대응해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이 절실했다.

1983년 1월 정부는 '해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도국 협력확대 방안, 경제협력 방향, 경제협력 증진방안 등을 잇달아 마련했다.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 작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1986년 9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안)을 수립, 같은 해 10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1986년 말 국회통과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정식으로 발효됐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자로는 수은이 적임자로 떠올랐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인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는 수은이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였다. 정부는 그동안 수행한 공적 수출신용 업무는 물론, 해외프로젝트 축적경험과 노하우를 높이 평가해 수은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은에 위탁하도록 명문화했다.

이후 수은은 1987년 12월 인도네시아 파당시(市) 우회도로 건설사업,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에 각각 114억 원과 81억 원을 승인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3. 수출입 저변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1980년대 중후반 유례없는 경상수지 흑자 시기, 여전히 수출자금이 수은의 지원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간 1조 9,679억 원의 수출금융을 승인했다. 해외투자자금과 수입자금은 각각 1,297억 원과 902억 원을 승인했다.



1987.11.25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촉진간담회

1988년부터 시작한 수입금융은 제3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철광 등 55개 품목의 중요물자와 원당·생고무 등 주요자원에 해당하는 45개 품목으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 시행 첫해인 1988년 전체 승인실적의 5.6%에 해당하는 163억 원의 승인실적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1989년에는 813억 원의 실적을 달성, 단 1년 만에 약 5배 성장했다. 그러나 수은 금융의 근간인 수출자금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지원액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던 선박·플랜트의 수출부진과 연불금융 수요 감소로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

원인은 세계 조선시장의 불황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장기불황이 1988년까지 계속되다가 1989년에서야 겨우 활황세로 돌아섰다. 해운업의 호전과 선박수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초대형 유조선(Very Large Crude Carrier: VLCC)을 중심으로 노후선박 교체 수요가 많아지고, 선가 급등에 대비한 해운사의 조기 발주가 세계조선 경기회복을 견인했다.

이 시기 우리나라 선박수출은 기복이 심했다. 1983년 374만 G/T(Gross Tonnage)에서 1985년에는 134만 G/T로 떨어졌다가, 1986년 이후 엔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1987년 사상 최고 실적인 416만 G/T를 기록했다. 세계시장 점유율 역시 30.2%로 일본(34.7%)을 바짝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88년 원화가치 급등과 노사분규·임금상승의 영향으로 278만 G/T까지 다시 급감했다. 다행히 1989년 세계조선 활황에 힘입어 322만 G/T로 다소 회복했지만, 시장점유율은 16.7%에 머물렀다.

플랜트 역시 선박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플랜트수출은 1980년대 후반 유가급

락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개발수요 감소 및 해양유전개발사업의 철회, 외채위기에 직면한 개도국의 개발계획 축소 등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980년대 후반 대개도국 경제협력 강화 기조 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세를 나타냈다.

선박·플랜트의 수출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의 영향으로 연불수출거래 비중 또한 감소했다. 신용이 양호한 해외선주들이 상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선박인도 시까지 선박 구매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일람불 결제 조건 발주가 일반화 된 것이다. 복합적인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이 시기 수은의 수출자금 승인실적은 부진했다. 1986년 3,009억 원으로 급감했고, 1987년 9,489억 원으로 다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1988년에는 2,3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로 감소했다. 1989년에도 4,838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은은 수출자금 지원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갔다. 가정용·사무용·오락용 기계류와 전기기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류, 광학기기와 정밀기기, 의료용기기를 신규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중소 자본재·기계류 수출에 필요한 단기 수출거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강화해 선박·플랜트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자재산업 육성과 국산화율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4. 남북협력기금 수탁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확대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1986 서울아시안게임, 19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국가적 위상을 드높였다. '화합과 전진'을 기치로 내건 1988 서울올림픽은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동서 이념대립으로 앞서 열린 1980 모스크바올림픽과 1984 LA올림픽이 반쪽짜리 대회란 명예를 쓴 반면, 1988 서울올림픽에는 160개 국 1만 3,626명이 참가했다.

이 시기 한반도 정세에도 훈풍이 불었다. 정부는 1988년 7월 국민적 열망을 담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했다.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문호개방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북 경제개방 조치의 물꼬를 튼 7·7선언에 이어 정부의 두 번째 행보는 남북교류 촉진의 법적제도 마련이었다. 1990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의결하고, 3월 5일 제148회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8월 1일 법률 제4240호로 「남북협력기금법」을 공포했다. 곧이어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1990.12.3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1991.03.27),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1991.02.13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식

(1991.04.17) 등 하위법령을 잇따라 제정하며 법적 작업을 완료했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 IKCF) 운영 책임자로 수은을 선택했다. 수은은 1991년 1월 4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1991년 2월 1일 남북기금부를 신설했다. 때마침 1991년 3월 일본 지바에서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남북한은 '코리아(Korea)'라는 이름으로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했다.



1991.03 남북협력기금 헌판식



1991.06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8강에 진출한 남북단일팀



1994.10.21 제네바합의

수은은 1991년 3월 20일 최초의 정부출연금을 납입 받아 수탁 업무를 개시했다. 수은의 최초 남북협력기금 1억 6,400만 원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지바대회에 출전한 남북탁구 단일팀이었다. 현정화, 유남규 그리고 북한의 김성희, 리분희 선수 등이 참가했고, 4월 29일 열린 여자단체전 결승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세계 최강 중국을 3대 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식에는 전 세계 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반도기’가 높이 걸렸고, 남북한 국가 대신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수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같은 해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도 닿았다. 또 다시 단일팀을 구성한 남북한은 아르헨티나 등 강호들을 물리치고 8강까지 진출했다.

협력과 화해 무드는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어졌지만, 이후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다행히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로 북·미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같은 해 11월 정부는 남북 경제활성화 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됐다.

남북협력기금과 함께 수은은 개도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도 확대했다. 무엇보다 사업 초창기 업무기반 확립에 적극 나섰다. 우선 기금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에 주력했다. 또 경제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를 중점 지원했고, 개도국 개발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지원을 위해 수혜국과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추진했다.

특히 탈냉전 시대를 맞아 시장경제 전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했다. 구소련 수교 후 1991년 모스크바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1992년 베트남에 호치민사무소를, 1993년에는 중국에



1992.11 호치민사무소 개소식



1991.04 모스크바사무소 개소 기념 리셉션

대북 이슈 및 남북협력기금 주요 지원실적(1991~1995)

시기	내용
1988.07	대북 경제개방 조치 특별선언 발표(7.7선언)
1990.08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1.03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지원(1억 6,400만원)
1991.06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지원
1991.07	천지무역 대북한 쌀 반출 관련 손실보조
1991.09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2.09	8·15 이산가족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지원
1993.03	북한 NPT탈퇴 선언, 남북협력 냉각
1994.10	북·미 핵협상타결(제네바 합의)
1994.11	남북 경제활성화 조치 발표, 남북경협 확대
1995.06	쌀 15만 톤 무상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제정·수탁 및 주요 지원실적(1983~1996)

시기	내용
1983.01	정부 해외협력위원회 설치, 개도국 경제협력 방안연구
1986.1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1987.06	수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수탁 업무 개시
1987.12	인도네시아 파당시(市) 우회도로 건설사업 지원(114억 원)
1987.12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지원(81억 원)
1987~1996	전체 23개 국 58개 사업에 총 7,113억 원 자금지원 승인

베이징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경제협력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 결과 수은은 1996년까지 23개 국 58개 사업에 총 7,113억 원의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베트남에는 도로건설, 상수도 건설, 복합화력발전 설비 등 3개 사업에 총 798억 원을 승인했고, 중국에는 9개 사업에 총 740억 원의 기금지원을 승인했다. 그 외 루마니아가 644억 원, 폴란드가 382억 원을 차지하는 등 총 승인액의 43%에 해당하는 3,042억 원 규모의 기금지원이 시장경제 체제 전환국가에 집중됐다.

5. 첨단기술 지원과 해외투자 활성화

정부수탁 업무 수행을 통한 역할 증대와 함께 1990년대 수은 수출입금융부문의 주요 변화는 단연 중점 지원 수출산업분야의 전환과 해외투자 활성화였다.

수은은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첨단산업에 주목했다. 당시는 TV를 비롯해 전자제품들의 경량화, 소형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선박·플랜트 산업의 ‘쌀’인 제철의 시대에서 전자제품의 ‘쌀’인 반도체가 경박단소 시대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자금 지원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반도체 수출 지원이 단기수출거래지원이라는 시각에서 수은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반면에 반도체 수출 지원은 대외거래 관련 정책금융으로서 산업정책의 하나로 추진된다는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당시 제기된 ‘신국제무역이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육성과 수출지원정책으로 자국의 경쟁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이었다. 당시 미국은 항공, 우주, 원자력 등에 집중했고, 일본은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특히 두 나라는 수출보조금 등 각종 지원으로 그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0년 이후 플랜트·기계류,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기술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했고, 연구개발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결국 대규모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산업 특성상 수은의 수출자금 지원은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었다.

첨단기술산업분야 중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 육성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 시기 이미 일본을 바짝 추격하며 오늘날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능케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1990년대 초 반도체 불황기에 공격적인 투자로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다. 1994년 삼성전자 단독 수출량이 국내 수출비중 10%를 넘어선 데 이어, 1995년에는 100억 달러 수출을 실현했다. 그 이면에는 수은의 수출자금 지원이 큰 버팀목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반도체는 1995년 최대 수출품으로 성장했고, 수은의 반도체 수출 지원비율 역시 1992년 1% 수준에서 1996년 5% 가까이 상승했다. 이후 반도체 기술은 휴대폰과 LCD TV 등 IT 분야 성장을 이끌었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역시 반도체와 컴퓨터·휴대폰·LCD·자동차 등 첨단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이 시기 첨단산업 수출지원 못지않게 해외투자자금의 지원 규모도 크게 늘었다. 당시는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 블록화 경향의 가속화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일어났다. 또 고임금, 높은 토지가격, 고금리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높아진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관련 업종의 해외이전도 빠르게 진행됐다.

수은은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정책에 부응해 해외투자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종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했다. 이로써 일부 금지대상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해외투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해외투자자금 지원실적은 1986년 181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3년 만인 1989년 무려 76.7배 성장하며 1억 3,887만 달러를 달성했다. 1994년의 경우 우리나라 해외투자 총액이 전년 대비 82% 상승해 23억 달러에 이르렀고 그 중 13.4%인 3억 740만 달러가 수은의 몫이었다. 1995년

해외투자자금 지원실적(1986~1996)											단위: 백만달러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전체	1.8	6.6	41.7	138.9	194.7	131.4	122.7	96.0	307.4	527.0	356.9
중소기업	0.9	2.2	22.1	63.0	104.9	77.6	78.3	70.0	77.1	161.6	129.6



1987.05.20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심포지움

수은의 지원실적은 5억 2,696만 달러로 더욱 높아졌다.

수은은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 금리, 대출비용, 지원 절차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으며, 1996년에는 전체 해외투자자금 지원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6%에 이르렀다.

6. 국가대표 공적수출신용기관 전환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책금융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은의 지원범위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대출 승인실적 증가율이 연평균 39.7%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1990년 9,029억 원에서 1994년 3조 8,725억 원으로 4년 만에 약 4.3배 증가했으며, 이후 2년 만인 1996년에도 5조 2,074억 원으로 1.3배 늘어나는 등 대출승인 누계액이 19조 7,091억 원에 이르렀다.

그 중 수출자금이 전체 누계액에서 79.3%를 차지하며 15조 6,202억 원을 기록했고, 그 외 자본재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후 구 포괄수출금융 및 현 수출성장자금대출로 발전) 6,263억 원, 전대자금 4,509억 원, 기술제공자금 172억 원 순을 나타냈다. 수출자금의 경우 특히 산업설비에 대한 지원이 1990년 78억 원에서 1996년 2조 1,012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금융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1995년 1월 수은은 WTO체제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

이했다. WTO체제의 ‘보조금·상계조치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

vailing Measures)’은 수출금융 지원 규제

규정으로서, 보조금을 무역왜곡 효과에 따

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규제조치를 마련했다. 다행스럽게도 자본재

연불수출을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의 경우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한다는 효과를 인정받아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계기로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 등의 수출금융과 직접세 감면을 통

한 수출보조금 등 주요 수출지원제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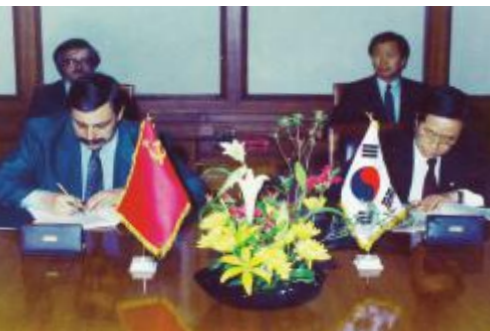
WTO규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장경제 도입 속도도 빨라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 또한 불가피해졌다. 선진국보다 낮은 기술 및 생산성 수준, 중간재의 국산화 부진 등으로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거래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금융

지원 방식인 수은의 공적수출신용 지원 역할이 WTO체제의 돌파구로서 한층 더 강조되기 시작

했다.



1991.04.16 러시아 VEB와 원료 및 소비재차관 계약 체결식

IMF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 주요 지원자금 승인실적(1990~1996)								단위: 억원
구분	승인 총액	수출자금				전대자금	기술제공 자금	자본재수출 중소기업 대출
		총합	산업설비	선박	기계류			
1990	9,029	5,940	78	5,619	243	6	-	-
1991	14,806	8,155	790	7,034	332	3,667	-	-
1992	13,374	10,954	2,376	5,076	3,502	77	-	-
1993	31,323	28,562	13,346	3,071	12,145	120	-	-
1994	38,725	33,416	11,192	5,521	16,702	144	-	-
1995	37,760	29,395	14,765	4,808	9,822	106	107	1,424
1996	52,074	39,780	21,012	6,208	12,560	389	65	4,839
누계액	197,091	156,202	63,559	37,337	55,306	4,509	172	6,263

제3장

외환위기 파고를 넘어
국제거래 지원 핵심기관으로
도약하다

1997
2007

제1절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제2절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발돋움

제1절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1. IMF 외환위기 발생

7~9%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는 별개로 1990년대 중반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1993년 40억 달러대에 머물던 적자 폭이 1996년에는 무려 232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경상수지의 급작스런 악화는 대외채무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1996년 중 외채규모가 GDP의 30%를 넘어서며 1,6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심각한 건 외채구조의 빠른 단기화였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장기외채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IMF 외환위기 과정의 주요 시장지표 추이(1996~1997) 단위: 포인트, 원, 억달러, %

구분		1996	1997					
			3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본 시장	종합주가지수	651.2	677.3	745.4	647.1	470.8	407.9	376.3
	상승/하락률	-	4.0	10.0	△13.2	△27.2	△13.4	△7.7
	회사채수익률(AA-)	12.6	12.5	11.8	12.6	12.6	15.1	29.0
	상승/하락폭	-	△0.1	△0.7	0.85	-	2.5	13.9
외환 시장	원/달러환율	844.2	897.1	888.1	914.8	965.1	1,163.8	1,415.2
	절상/절하율	-	△5.9	1.0	△2.9	△5.2	△17.1	△17.8
	외환보유액	332.4	291.5	333.2	304.3	305.1	244.0	204.1



1997.11.21 IMF 구제금융 요청 발표 기자회견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신규사업 진출과정에서 대규모 중북·과잉투자과 세계경제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많은 기업이 수익성 저하와 유동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의 부도는 위기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기업어음 부도율이 급증하더니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등이 차례로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기업부도 확산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여신관행으로 대기업의 부도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기업의 재무상태나 수익전망의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기보다는 담보의 크기, 차입기업의 규모, 경제적 영향력 등에 의존하며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었다. 기업부도 증가에 부담을 느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억제하면서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됐고, 주식시장 침체기마저 겹쳐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외환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외자유입 부진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환율이 상승했다. 더욱이 기아사태 처리지연, 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등이 겹치면서 한국 상황을 지켜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도 깊어만 갔다. 그 결과 100% 이상을 유지하던 국내 은행의 단기외채 차환비율이 80%대로 하락했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순유출로 돌아섰다.

실제로 1997년 10월 23일, 홍콩증시 폭락과 더불어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해외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됐다. 무디스 역시 국내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각각 하향 조정했다. 무엇보다 신규 외화 자금조달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단기 차입금의 만기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 결국 단기외채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가 권고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36억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직전 외환보유고는 24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단기 현금화가 어려운 선물환계약 90억 달러를 제외하면 가용 외환보유고는 단 150억 달러 수준이었다.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그 사이 외환보유고는 계속 줄어 5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마저도 매일 갚아야 할 단기외채 8억~10억 달러를 감안하면, 국가부도 상황이 불과 5~6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칼자루를 쥔 쪽은 IMF이었다. 마침내 1997년 12월 4일, 정부가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 많은 것을 양보한 끝에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됐다. 이후 IMF와 8개 선진국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조기 자금지원 약속을 받고, 1998년 1월 채권은행단과 단기외채의 중장기 전환계약이 타결되면서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2. 금융기업 구조조정 단행

IMF가 요구한 조건은 긴축적·신축적 통화·환율정책, 금융·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산업의 개선과 개방이었다. 금융 구조조정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금융산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다.

정부는 먼저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그다음 회생 가능한 기관의 합병, 경영진 교체, 조직·인력 축소 등의 1차 구조조정(1997.11~2000.08)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 조성, 관련법제 정비, 금융감독 기능 강화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의 첫 대상은 부실 정도가 가장 심했던 제2금융권이었다. 2000년 8월까지 21개 종합금융사를 비롯해 10개 은행, 10개 증권사, 6개 보험사, 1개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이 정리됐다.

공적자금 조성의 목적은 금융기관 재무구조 개선이었다. 1차 금융 구조조정 기간에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과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에서 64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도 27조 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조성했다. 그 외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금액 25조 3,000억 원 등 총 116조 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자금을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출자, 예금대지급 등에 투입해 금융기관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했다.

이 시기 정부는 관련법제 정비와 금융감독 기능 강화에도 적극 나섰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개정했다. 또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



1997.12.15 30개 기관의 부실채권양도양수 계약 체결식

기관·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제도(Asset-Backed Securities: ABS), 주택저당유동화제도(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등을 도입했다. 특히 일련의 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금융기관 경영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건전성 규제, 공시·회계제도 강화 등 금융시스템도 국제기준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1999년 대우그룹 부도에 따라 금융권에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2차 금융 구조조정(2000.08~2003.06)을 단행했다.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건전성이 떨어지는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1·2차 구조조정 결과, 은행은 1997년 말 33개에서 2003년 6월 45.5% 감소해 19개로 줄어들었고, 비은행 역시 2,068개에서 37.3% 감소해 1,362개로 줄어들었다. 가장 큰 폭의 구조조정은 종합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종합금융회사는 구조조정 결과 93.3%나 감소해 2003년 6월에 단 3개 사만이 살아남았다.

금융권 구조조정의 잣대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들은 퇴출, 합병, 해외매각 등의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동화·동남·대동은행이 퇴출되고, 경기·충청·충북·강원 등 4개 지방은행이 퇴출됐다. 보람·장기신용·조흥·상업·한일은행 등이 합병됐으며,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해외자본에 매각됐다.

공적자금으로 겨우 회생한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됐으며, 경남·광주은행 역시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됐다. 그 결과 국민은행(국민+주택+장기신용), 신한은행(신한+조흥+동화), 한빛은행(상업+한일+평화, 현 우리은행), 하나은행(하나+보람) 등 대형 은행이 탄생했고, 4개 선도는 행과 함께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뉴브리지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2개의 외국계 은행으로 재편됐다.

금융과 마찬가지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기업의 부침이 많았다. IMF는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정부에 민간자율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형식의 기업 구조조정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정부는 IMF와의 협의내용을 토대로 1998년부터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법령·제도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1998년 1월 재계와 대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에 합의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사업 부문 선정, 지배주주·경영진 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총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 정도를 평가하고, 그 중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했다. 부실기업은 청산, 매각,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회생 가능한 부실장후기업의 경우 자산매각, 외자유치 등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5대 그룹의 9개 중북투자업종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도 진행했다.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억제,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지배 차단, 변칙상속과 증여 방지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 때와 마찬가지로 대우채 사태는 2차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2000년 9월 정부는 1차에서 정리하지 못한 잠재 부실의 조기 정리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상시 구조조정체제 정착을 2차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로 정했다.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인 잠재 부실기업 2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했고, 그 중 52개 기업을 정리했다.

1, 2차 구조조정 결과 가시적인 기업 구조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와 채권은행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상시 기업 구조조정체제가 빠르게 정착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을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1997~2003) 단위: 개, %

금융권 별	1997년 말 기관수(A)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2003년 6월 말 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해외·파산, 영업이전등	계(B)	비중(B/A)		
은행	33	5	10	-	15	45.5	1	19
비은행	2,068	152	151	469	772	37.3	66	1,362
종합금융	30	22	6	-	28	93.3	1	3
증권	36	5	3	2	10	27.8	18	44
보험	50	8	6	2	16	32.0	13	47
투자신탁	30	6	1	-	7	23.3	9	32
저축은행	231	100	27	1	128	55.4	12	115
신협	1,666	2	106	463	571	34.3	9	1,104
리스	25	9	2	1	12	48.0	4	17
합계	2,101	157	161	469	787	37.5	67	1,381

추진한 83개의 기업 중 2000년 35개 사, 2001년 9개 사, 2002년 11개 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하거나 자율 추진으로 전환하는 등 2002년 말까지 총 55개 기업이 정상화에 성공했다.

3. 구조개혁 성공과 경제위기 극복

구조조정과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회사채금리는 1997년 28%대에서 1998년 8%대로 하락했으며, 환율도 1998년 1달러당 1,200원대, 1999년 말에는 1,100원대로 안정됐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크게 개선되어 1998년 3월 112조 원에 이르던 부실채권 규모가 1999년 67조 원으로 떨어졌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1997년 평균 7.04%에서 1999년 10.8%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역시 점차 개선됐다.

경제지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1999년 11.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경상수지 또한 1998년 401억 달러, 1999년 218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거시경제 흐름의 개선과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으로 전환했다. IMF 긴급자금과 만기 연장된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고도 1999년 9월 이후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를 상회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우·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IT 버블 붕괴, 미국 9·11 테러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 와중에도 정부는 2차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했고, 그 결과 2000년에 9.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경상수지 역시 102억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금리 인하 그리고 그 간의 구조조정 성과에 힘입어 2001년도 4.7% 성장을 달성했다. 1·2차 구조조정 결과 은행부문의 수익성이 1998년을 기점으로 개선되어 2001년 흑자로 돌아섰다. 기업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부채비율 또한 1997년 396.3%에서 2001년 182.2%로 낮아졌다.

IMF 위기극복 과정의 주요 경제지표(1997~2002)

단위: %, 억달러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제성장률	6.3	△4.9	11.6	9.2	4.7	7.7
소비자물가 상승률	4.4	7.5	0.8	2.3	4.1	2.8
실업률	2.6	6.8	6.3	4.4	4	3.3
경상수지	△108	401	218	102	22	41
외환보유액	89	485	741	962	1,028	1,214

외환보유액 또한 크게 증가하며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997년 89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이 2000년 962억 달러, 2001년 1,028억 달러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정부는 IMF 지원자금 210억 달러 중 1999년 5월까지 195억 달러만 외환위기 극복에 사용했다. 그 중 135억 달러는 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상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60억 달러 역시 2001년 8월까지 전부 되갚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MF 지원자금의 조기 상환에 성공하고 그 관리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IMF 외환위기 조기 극복의 원동력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행, 구조조정으로 이룩한 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경쟁력 확보였다. 더욱이 전통 주력산업의 빠른 회복과 함께 IT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로 대표되는 IT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주도 산업으로 부상했다. IT 수출비중이 1998년 20%에서 2000년 이후 30%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를 넘어섰다.

IMF 조기 극복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2002년 우리나라는 ‘2002 한일월드컵’ 개최로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사상 첫 16강에 이어 4강까지 진출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스포츠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거시경제 지표도 탄탄했다. 7.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외환보유액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1,214억 달러에 이르렀다.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되어 수익률이 1997년 △0.6%에서 2002년 0.4%로 높아졌으며, 국가신용등급 역시 1998년 BB+(S&P 기준)에서 2002년에는 투자적격수준인 A-로 올라섰다.

IMF 외환위기 진행과 극복과정(1997~2003)

구분	내용
1997.01	한보철강 부도
1997.10	국가 신용등급 하락
1997.11	IMF에 구제금융 요청
1997.12	IMF 구제금융 최종 결정, 이후 IMF 관리체제에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단행
1997.12 ~2000.08	1차 구조조정. 55개 금융사 퇴출, 55개 부실기업 정리
1998.01	10개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 정부, 재계와 대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 합의
1998.06	5개 퇴출은행 발표(대동·동남·동화·경기·충청은행)
1998.09	하나은행 보람은행 합병, 국민은행 장기신용은행 합병
1998.12	조흥은행 강원은행 현대종합금융 합병, 제일은행 해외매각
1999	대우그룹 부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발생
1999.01	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
1999.02	서울은행 해외매각
2000.08~2003.06	2차 구조조정. 52개 부실기업 정리, 55개 기업 정상화(2001년 기준)
2001.08	IMF 지원자금 전액 상환 및 조기 졸업
2002	국가신용등급 A-(투자적격) 회복

4. 내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은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저금리 정책, 가계신용대출·신용카드 활성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등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은 양날의 검이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시장도 과열양상을 띠었다. 이는 신용카드사 중심의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졌다. 2002년 중 연간 가계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38% 증가해 61조 원을 돌파하며 은행대출의 60%를 차지했다. 2000년도까지 연평균 20%대를 유지하던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50%에 육박했다. 결국 2002년 말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며 우리나라는 가계신용 버블붕괴 상황을 맞이했다.

카드대란이 본격화한 2003년의 대외여건도 불안했다. 북한의 NPT 탈퇴로 북핵 위기가 고조됐고, 곧이어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SARS)가 발생하며 더욱 힘든 상황이 찾아왔다. 심지어 카드대란에 이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까지 발생하며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다.

정부는 국내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했고,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과 추경예산 편성으로 민간부분의 부족한 총수요를 보완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임시 투자세액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했다. 그 결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는 안정을 되찾았으나, 이미 부실에 빠진 신용카드사의 구조조정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였다.

사실 카드업 구조조정에 앞서 우리 경제는 자산운용업 구조조정이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대우채 대규모 환매사태에 따른 금융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자산운용업의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 투자신탁회사였던 한국·대한·국민투신 등 3개 회사의 매각을 추진했다.

그 중 국민투신은 현대그룹으로 넘어가 현대투자증권으로 영업하다가 2004년 2월 미국 프르덴셜금융에 다시 매각(현 한화투자증권)됐다. 2005년에는 한국투자신탁이 동원금융지주(현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대한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각각 매각(현 하나증권)됐다.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와 함께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회사채시장이 경색되면서 2003년 카드대란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금융시장의 카드채 만기연장 거부로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는 연체율 증가 억제에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카드채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았고, 카드사 역시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2003년 말 국민카드가 국민은행과 합병했고, 2004년에는 외환카드(현 하나카드), 우리카드가 모(母)은행과, 삼성카드는 삼성캐피탈과 합병했다. 그러나 국내 1위 카드사였던 LG카드는 부

실을 견디지 못하고, 2006년 8월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현 신한카드)됐다.

내수 활성화와 함께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시장경쟁 강화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2003)하고,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2004)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경쟁력 강화 과정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200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과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2003),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2006~2007) 등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WTO 출범을 전후로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에 주목하고, 수출기반 확충과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다각적인 FTA 체결 협상을 벌여나갔다. 그 결과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FTA를 체결했다. 그 외 ASEAN, 인도, EU, 페루,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과도 FTA 협상을 계속 이어나갔다.

5. 수출경쟁력 확보로 성장세 지속

내수부진 극복에 이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확대 지속으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수출은 원화강세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 1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2004년에는 수출이 연 31% 성장세와 함께 2,53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5년에도 연 12% 상승해 2,8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수출국으로 우뚝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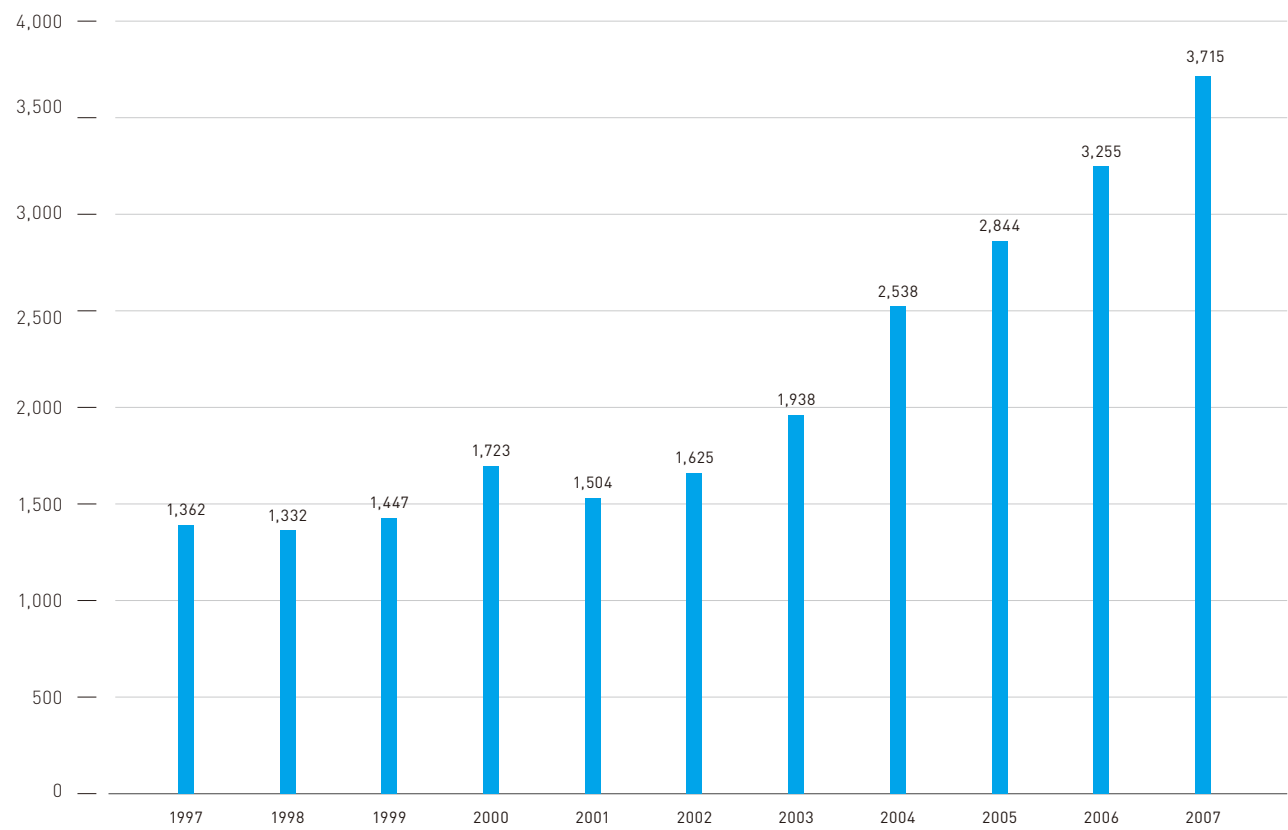
수출증가의 배경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들은 체질개선에 성공했고, 이는 자연스레 기술·품질·디자인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주력 수출상품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다.

특히 IT산업의 경쟁력이 우리나라 수출신장을 이끌었다. 반도체·LCD 업계는 매출의 7~8%를 R&D에 투자하며 신제품 경쟁력을 높여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시장을 주도했다.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기 역시 디자인 역량과 다기능의 기술이 결합하며 고급 이미지를 구축,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갔다. 그 결과 IT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견인했다.

자동차·선박 등 전통 주력산업도 수출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자동차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체질개선과 기술혁신을 이뤄내 기존의 저가품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제품경쟁력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생산공정이 합리화되며 품질결함수치가 산업전체 평균 이하로 떨어져 품질이 세계수준에 올라섰다. 이를 통해 2005년의 경우 전년 대비 판매가격 상승률이 미국, 일본 등을 능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업 역시 일본을 제치고 세계정상에 올랐다. 수주량은 1993년 이후 2002년까지 4차례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건조량에서는 2000년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이후 조선업은 계속 세

IMF 외환위기 전후 수출실적(1997~2007) 단위: 억달러



계 정상의 위치를 고수했다. 생산효율화로 건조량을 확대할 수 있었고, 육상건조, 해상 플로팅 도크 등 혁신적인 공법개발로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성공했다. 수출의 질적 측면에서도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확대로 수익성을 제고했다. 그 결과 이 시기 세계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했고, 특히 고부가가치선 점유율은 60%대를 기록했다.

수출경쟁력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노력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국·일본 등에 편중됐던 수출지역이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이오, 나노기술, 문화콘텐츠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의 급성장이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2005년에 7억 2,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K-POP, 드라마, 영화, 뷰티, 패션, 음식 등 본격적인 한류(K-Culture)의 세계화는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끌었다.

한류의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세가 결합되며 연평균 4.8%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7년에는 마침내 1인당 국민총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첫해인 1962년 87달러와 비교하면 45년 만에 무려 300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었다. 2007년 경상수지 또한 높은 수출신장세를 바탕으로 105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면서 1998년 이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2000년대 초·중반 주요 경제지표(2003~2007) 단위: %, 억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3.1	5.2	4.4	5.2	5.8
생산자물가상승률	2.2	6.1	2.1	0.9	1.4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실업률	3.6	3.7	3.7	3.5	3.2
경상수지	113	293	122	21	105

제2절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발돋움

1. 외자조달 수단 다변화로 국가 위기극복에 앞장

IMF 외환위기는 1996년부터 그 조짐을 보였다. 외채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단기외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외화차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화차입기관에 차질 없는 조달을 주문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은은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했다. 1997년 1월 5년 만기 5억 달러 채권을 발행했으며, 곧이어 3월 5억 마르크의 유로본드를 프랑크푸르트에서, 6억 5,000만 달러 채권을 뉴욕에서 발행했다.

그러나 한보철강의 부도로 시작된 기아·진로·해태 등 중견그룹의 도미노 부도 현상으로 외화조달 환경은 더 나빠졌다. 결국 국가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으로 우리나라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은은 외화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1997년 11월 20억 달러 규모의 유로 중기채(Euro Medium Term Notes: EMTN)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EMTN은 일정한 금액 내에서 자금소요 시거나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여러 통화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외환사정이 어려운 국가에 유리한 자금조달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도입이 확정되며 우리나라는 외화차입 불능 상태를 맞았다.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수은은 외화차입 방안을 모색하며 조달수단 다변화 전략을 펼쳤다. 먼저 뱅크론(은행차입)을 적극 활용했다. 1997년 12월 2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조달했다. 1998년 4월에는 정부의 외채구조 개선책에 부응해 218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무를 만기 1~3년의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뱅크론과 함께 1985년 이후 중단했던 차입한도 설정도 재개했다.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1998

년 5월부터 12월까지 일본수출입은행, 노르웨이 수출보증공사(GIEK), 영국 수출신용보증국(ECGD) 등의 지원을 받아 각각 1,300억 엔, 5,000만 달러, 7,500만 파운드 규모의 차입한도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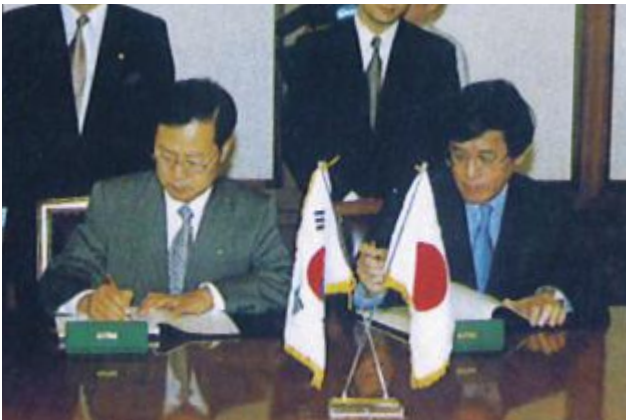
외화조달 다변화 전략은 최대 규모의 ABS채권 발행으로 발전했다. 1998년에 국내기관 최초로 6억 9,700만 달러 상당의 외화 자산담보부채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했다. 연불어음과 대출채권을 담보로 했던 당시 ABS는 아시아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자산을 근거로 채권발행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외자조달에 새 지평을 열었다.

국가 외환보유고 증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했던 수은은 IMF 외환위기 시기 6차례 「수은법」 개정을 단행했다. 국제거래 금융지원 기반 확충과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 지원이 주된 개정 사유였다.

주요 개정 사안으로는 1998년 1월 5차 개정에서의 법정자본금 한도증액(1조 원 → 2조 원)이었다. IMF 관리체제 BIS비율 제고가 목적이었다. 수은의 차입과 채권발행 한도 역시 확대했다. 배경은 환율 급등이었다. 환율 급등으로 추가차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수출지원자금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한도를 확대한 것이었다.



1997.11 외화 확보를 위해 실행된 수은의 EMTN 프로그램



1998.05.27 일본수출입은행과의 차입한도 설정 계약 체결식



1998.12 국내 최초 ABS채권 발행계약 체결식

1998년 9월 제6차 개정에서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또다시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증액했다. 대외거래 지원 역할의 증대에 따른 자금지원 여력 확대가 목적이었다. 대출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대출기간을 6개월 이상 25년 이내로 개정했으며, 대통령이 정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탄력적 수출금융지원을 도모했다.

2.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

IMF 외환위기 때 수은의 최우선 과제는 본연의 임무인 수출금융지원이었다. 지난 시절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활성화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와 함께 당시 수은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국제거래 지원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상업금융 시장실패의 보완이었다.

「수은법」개정 주요 내용(1998~2002)

개정연차	주요 내용
제5차(1998.01.13)	• 법정자본금 증액(1조 원 → 2조 원) • 차입 및 채권발행 한도(납입자본금·적립금 합계액 10배 → 30배) • 검사 위탁기관 변경(한국은행 은행감독원 → 금융감독원)
제6차(1998.09.16)	• 법정자본금 증액(2조 원 → 4조 원) • 대출지원범위 확대(6개월 이상 25년 이내, 대통령령에 따라 6개월 미만도 가능)
제8차(2002.03.30)	•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등 취급 근거 명백화 • 외국환 업무, 부대 업무에서 본 업무로 개정 • 차입기관 확대(은행 외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 추가)

수출 활성화 과정에서는 대외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로 막힌 수출길을 여는 열쇠였다. IMF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이미지 추락으로 수출 판로가 위축되자 정부는 ‘국내기업 대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수은이 정부정책에 부응해 신용도가 낮은 수입국 정부에 대한 보증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개도국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할인)하는 포페이팅(Forfaiting) 업무와 개도국 신용장을 수은이 지급보증하는 확인 업무 등의 ‘개도국 무역촉진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수은의 적극적인 대외위험 수용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 진출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자금난을 겪던 수출기업도 효과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투자 금융지원 제도개선도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우회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금융지원 금지 업종을 모두 폐지했으며, 해외투자 관련 대출상품의 금융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해외사업자금 중 국산화 기자재 사용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실에 맞게 일부 해외조달을 허용하는 등 해외사업자금의 효용성을 높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와 수수료를 산정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또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높은 이자율로 추가 부과되던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지연배상금률 자체도 종전에 시중은행이 부과하던 20% 상당의 높은 요율에서 연체기간별로 정상 대출이율의 3~9%를 추가 부과하도록 인하했다.

이 시기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상업금융 보완 역할’을 요구하는 시장 목소리에도 적극 부응했다. 1998년 무역어음재할인 업무 시행과 ‘특별수입신용’ 취급이 대표적이었다. 무역어음재할인은 민간 상업금융시장의 단기 외화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상업금융기관이 우

IMF 외환위기 주요 업무활동

구분	내용
수출 활성화 지원	• 저신용 수입국 보증거래 지원 • 포페이팅 업무 도입 • 개도국 무역촉진 프로그램 도입 • 해외투자 금융지원 개선(금지업종 폐지, 지원비율 상향조정 등)
상업금융 역할 보완	• 무역어음재할인 업무 시행 • 특별수입신용 취급 • 저신용 건설사 이행성보증서 발급
시장변화 대응 맞춤형 상품 제공	•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선박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도입 • 대외채무보증 및 이자율지지 업무 취급 • 기본대출약정(Framework Agreement) 도입



2001.09 JBIC와의 제1차 연례회의

리나라 기업에 무역금융 지원과 관련해 발행한 무역어음을 다시 할인하는 업무로서, 이를 계기로 수은은 상업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을 수행했다.

‘특별수입신용’은 외화수입자금 특별지원제도이다. 외환위기 당시 수은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으로부터 조달한 특별자금으로 외화수입자금을 지원했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외화자금조달을 할 수 없었던 국내기업들에게 수입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관련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손쉽게 수입할 수 있었다.

저신용건설사 이행성보증서 발급업무 역시 상업금융 보완 역할에 한몫했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해외발주자들이 국내 상업금융기관이 발행한 입찰보증서와 선수금환급보증서 등 이행성보증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에게도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건설·플랜트 수출기업들이 어렵게 수주한 해외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부응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수은은 선진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해 자본재 수출지원의 새 지평을 열었다. 1990년대 후반 산업설비 등 대규모 자본재 수출에 대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 방식 금융지원을 개시한 데 이어, 2000년대 초반 선박금융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tructured Finance: SF) 방식의 금융지원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지원대상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차주로 해 사업자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사업 운영수익 등을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하는 금융기법이다. 사업주 또는 지분출자자의 신용과 분리해 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리스크

및 프로젝트 자체가 창출하는 미래현금 흐름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기반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수은이 과거 해외차주의 신용도 및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취급했던 전통적 직접대출과 구분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플랜트시장에서 PF금융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수은도 발빠르게 전담 조직과 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1999년 멕시코 마테로 정유설비 프로젝트(2억 달러)에 대한 최초 PF금융 지원 이후 수은의 핵심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뒤이어 도입된 선박 SF는 사업주를 차주로 하되 프로젝트 현금 흐름 등을 채권보전장치로 활용하는 금융기법으로, 사업주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직접대출과 프로젝트 사업성을 기초로 한 PF를 결합해 고안됐다. 수은이 기존에 취급하던 선박 직접대출과 같이 해외선주를 차주로 하되 차주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의 자산가치 담보 및 미래 운용수익을 채권회수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2002년 싱가포르 스타탱커(Star Tanker)의 VLCC 1척 구매자금(3,600만 달러)에 대한 최초 SF금융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선박금융의 주요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채무보증과 이자율지지(Interest Rate Support) 업무도 취급했다. 특히 대외채무보증은 해외차주 앞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수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자본재 수출 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단일 사업의 규모가 확대돼 국제상업금융기관 등과의 협조금융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됐다.

대형 자본재 수출 거래에서 차주와 대주 간 지원조건을 사전에 확정해 개별 거래 발생 시 신

IMF 외환위기 자금지원 실적(1997~2002)

단위: 억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승인	82,318	91,418	120,146	79,277	81,801	75,408
수출자금	68,344	58,357	93,957	78,109	77,607	57,071
해외투자자금	6,718	1,083	109	210	1,478	5,291
수입자금	3,034	364	510	505	1,823	4,849
보증승인	1,367	4,044	48	730	1,443	1,613

수은 수출기여도(1997~2002)

단위: 백만달러,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수출액	136,164	133,233	144,685	172,268	150,439	162,471
수은 지원액	7,797	6,984	8,658	8,353	15,642	19,090
기여도	5.7	5.2	6.0	4.8	10.4	11.7

속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FA)도 이때 도입됐다.

수출 활성화 지원, 상업금융 역할 보완,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등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은이 보여준 노력은 우리 기업은 물론 국내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실적 증가는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기여해 IMF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했다.

이 시기 수은의 총 대출 승인실적은 적극적인 수출자금 지원에 힘입어 1999년 12조 146억 원을 기록,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후 IMF 외환위기 진정과 함께 정부의 정책기조가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전환하면서 대출 승인은 2002년까지 8조 원대 내외를 유지했다. 수출기여도 측면에서는 2002년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총 수출액 1,624억 7,100만 달러 중 수은이 190억 9,000만 달러를 소화해 내며 총 수출액의 11.7% 지원에 기여했다.

3.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본격화

IMF 외환위기를 맞아 EDCF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원조환경이 위축되던 상황이었다. 냉전시대 선진국들은 자국의 안전보장 확보, 국제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원조를 제공해 왔으나, 구소련 붕괴, 독일 통일 등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원조의 방향성이 희미해졌다. 게다가 1990년대 후반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의 원조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진전하면서 이에 빠르게 대응한 국가들이 더욱 부유해진 반면, 세계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개도국들은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됐다. 더욱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하면서 개도국의 환경오염, 불법이민, 국제테러 등이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로 부각됐고, 양극화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후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상호의존주의 인식 아래 공적개발원조가 크게 활성화됐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승인실적(1997~2007)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승인건수	6	6	8	11	6	5	7	12	11	15	19
승인액(억원)	947	1,078	1,794	2,423	1,142	1,166	1,628	2,222	3,111	3,645	6,445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EDCF의 운용환경도 크게 변화했다. 양허성 차관에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큰 변화 중 하나였다. OECD 수출신용협약에 반영된 헬싱키 패키지(Helsinki Package)에 따라 상업성이 있는(Commercially Viable) 사업과 중고소 득국에 대한 구속성 원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이 최빈국 50% 이상, 기타 개도국은 35% 이상이어야 구속성 원조가 가능해졌다. 또 OECD 사전 통보를 통해 수출신용협약 준수 여부가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기금운영 제약에 이어 1997년 IMF 외환위기 발생으로 EDCF 사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원실적이 1996년 3,027억 원에서 1997년 947억 원으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원실적은 1,000~2,000억 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에 우리 경제는 2000년부터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재진입했고, 2004년에는 경제 규모 세계 11위, 무역 규모 세계 13위에 등극했다. 경이적 회복에 대한 찬사와 함께 국제사회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요구했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EDCF 사업 확대를 추진했다.

EDCF 사업 확대 과정에서 수은은 개도국 경제발전은 물론, 기금 주도의 국가 수출유망사업 발굴체제를 도입했다. 2004년부터 중점 지원국가, 지역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적극 활용해 EDCF 정책방향과 개도국의 개발계획을 충족하는 사업발굴에 착수했다. 2005년 베트남, 필리핀 등 경험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프로그램(Country Program)을 도입했고, 2006년에는 기금주도의 능동적 사업발굴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주재원을 파견했다.

EDCF 업무절차도 간소화했다. ‘정부 간 기본약정(Framework Agreement: F/A)’을 체결하는 대신, 시행약정(Arrangement: A/R)을 생략했다. 이는 사업 진행관리를 강화하고 차관집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업지연에서 오는 원조효과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원 방식도 다양화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MDB와 공동 지원하면서 MDB가 보유한 원조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쳤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후 이 같은 지원 방식은 MDB 사업시행 경험과 국제경쟁력을 토대로 개도국 해외사업을 직접 발굴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2004년에는 선택적 지원조건 제도를 도입했다. 표준 조건과 동일한 양허성 수준 범위 내에서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금리와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수원국의 EDCF 접근성을 제고했다. 신규 제도 도입으로 수은은 신흥경제권인 아시아지역에서 원조 지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적극적인 사업개발 결과, 2004년부터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승인 실적은 2006년 3,645억 원을 달성해 10년 전 수준을 달성했으며, 2007년에는 6,445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약 2배 성장했다.

4. 남북교류·기금사업 활성화

1991년 남북 탁구 국가대표 단일팀의 세계 제패라는 감동의 역사에 기여한 최초 남북협력기금 지원 이후에는 쌀, 비료 등 정부차원 인도적 지원 위주로 기금이 집행됐다. 대규모 자금 집행은 경수로 건설사업이 시작되던 1998년 무렵이었다.

경수로사업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다. 1995년 3월 한·미·일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를 설립하고 대북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KEDO와 북한이 경수로발전소 공급협정을 맺고, 1998년 11월 사업비 분담안을 의결했다. 이때 예상사업비 46억 달러 중 실제 공사비의 70%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 자금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나왔다. 1999년 12월 수은은 KEDO와 3조 5,420억 원 규모의 용자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KEDO와 한국전력이 100만 kW급 경수로발전소 2기 건설계약을 체결했으며, 마침내 2001년 9월 주요 공정인 본관 기초 굴착공사를 개시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1998년 초기 공사비 675억 원을 시작으로 총 1조 3,744억 원을 집행했다. 특히 수은은 경수로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은 미완의 작품이었다.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이 불거지면서, 2003년 12월 1일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도 북핵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2006년 5월 31일 KEDO가 경수로사업 종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금강산 관광 또한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이었다. 1998년 금강산 관광 개시에 이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협력기금의 경협사업 지원은 본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의 3대 경협사업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농수산 협력사업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됐다. 특히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을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 조성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조성된 개성공단



2006. 05.12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설명회



2003.09.08 남북 청산결재은행 지정 공문

먼저 개성공단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어 2002년 11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협력이 더욱 구체화됐다. 특히 2003년 8월 4대 경협합의서(투자보장·상사중재·이중과세방지·청산결재)가 발효되고, 2005년 10월 남북경제협력협의회 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 모습을 갖췄다.

남북협력 및 남북협력기금 주요 일지(1997~2007)

구분	내용
1995.0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대북경수로사업 추진
1995.12	KEDO-북한, 경수로발전소 공급협정 체결
1998.08	통일부, 현대 금강산 개발 협력사업 승인
1998.11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1998.11	사업비 분담안 의결(한국정부 70% 부담)
1999.12	수은-KEDO, 3조 5,420억 원 규모 용자계약 체결
2000.06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교류 본격화
2000.08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02.10	북핵 위기. 북한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2002.11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2003.02	금강산 육로 관광 개시
2003.06	개성공단 착공
2003.07	남북경제협력 실무협의회, 청산결재은행 선정
2003.08	4대 경협합의서 발효
2003.12	대북경수로사업 공사 중단
2004.04	남북당국, 청산결재합의서 가서명
2004.06	수은-조선무역은행, ‘청산결재 업무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2004.12	남북 간 연결도로 개통
2005.10	남북경제협력협의회 사무소 개소
2006.05	KEDO, 경수로사업 종료를 선언
2007.12	경의선(문산-문봉) 화물열차 정기운행 개시

남북협력기금 지원실적(1997~2007)

단위: 억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금액	191	875	343	5,307	5,544	6,495	7,708	4,763	6,744	4,710	7,157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남북 간 청산결제은행으로 수은이 공식 지정됐다. 2003년 7월 29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협의회는 ‘청산결제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한의 수은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양측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선정했다. 그다음 3차례의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회의를 거쳐 2004년 4월 남북당국은 청산결제합의서에 가서명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4차례에 걸친 남북 청산결제은행 간 접촉을 통해 청산결제대상, 결제기간, 결제통화, 대금지급절차 등에 합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6월 25일 수은과 조선무역은행이 ‘청산결제 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남북 간 직접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개성공단은 2003년 착공되어 2005년 18개 사가 입주했으며, 남북 간 연결도로는 2004년 12월 개통했다. 통일대교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연결구간은 개성공단의 인원·물자수송, 동해안 최북단 고성 제진에서 금강산까지의 동해선 연결구간은 금강산 관광에 주로 이용됐다. 철도의 경우 2007년 12월부터 경의선(문산-문봉) 화물열차가 정기운행을 시작했다.

개성공단 조성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내부 기반시설 건설비용과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 사업비를 지원했다.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입주기업 또한 2007년 말 65개 사로 늘어났다. 또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연간 생산액도 2007년 1억 8,478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했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도 1만 명을 넘어섰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수로사업 등 남북협력기금이 활성화됐던 이 시기 기금 조성 규모와 지원실적이 크게 성장했다.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이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정부출연금은 4,850억 원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출연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금의 수요가 급증했고, 정부출연금 역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3조 2,114억 원으로 불어나 전체 조성규모가 총 8조 6,176억 원에 이르렀다. 지원실적도 마찬가지였다. 1999년 343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단 1년 만에 약 15.5배가 증가하며 5,307억 원을 달성했다. 2007년에는 지원실적 규모가 7,157억 원에 이르렀다.

5. 수출입금융 지원역량 강화

수출 활성화 지원과 상업금융 역할 보완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해 온 수은은 이후에도 꾸준히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대외정책금융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을 목표로 「수은법」의 선진화를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2004년 1월 ‘중기경영 로드맵’을 수립했다. 「수은법」 선진화 과제로는 지원대상거래의 확대, 지분 참여방식 지원,

최단 대출기간 제한 폐지 등을 설정했다.

그로부터 11개월 뒤인 12월, 때마침 대통령의 러시아, 인도, 동남아, 남미 순방외교 과정에서 「수은법」 개정의 당위성이 거론됐다. 순방외교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은 중심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 ‘해외플랜트·건설·정보인프라 참여확대 방안’이 나왔다. 이때 자기자본 확충, 여신한도 확대, 프로젝트회사 출자 허용 등 「수은법」 개정 당위성이 강조됐고, 그 결과 2005년 5월 31일 제10차 「수은법」 개정이 이뤄졌다.

10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대외거래 확대, 해외프로젝트 출자 지원, 첨단산업 단기수출금융 지원 등이었다. 먼저 지적자산이 결합된 형태의 대외거래,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혼합된 형태의 대외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대외거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성공적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뿐 아니라, 지분참여 방식의 해외프로젝트 출자 지원 근거도 확보했다. 또 6개월 미만의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정보기술·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의 단기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6개월 미만 업무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제 10차 「수은법」 개정을 계기로 수은은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국내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수은법」 개정을 통한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 기반 확보와 함께 이 시기 수은은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강화에 주력했다. 변동금리부 직접대출 확대,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 선박 직접대출 확대,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 신설, 여신지원 비적격국가 개념 폐지 등에 힘을 쏟았다.

변동금리부 직접대출은 플랜트 수출거래 지원에 주로 사용됐다. 종전 고정금리부 직접대출만을 취급해 오던 관행에 비춰볼 때 이의 적용은 획기적인 다각화 조치였다. 스트럭처드 파이낸스의 경우 2002년 4월 개정된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상환기간이 8.5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고 최저이자율도 연 8%에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CIRR)로 변경되는 등 지원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 역시 선박금융 지원실적 증대에 기여했다. 종전까지 수은은 해외선주를 대상으로 국내 조선사 수주 선박의 구매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내 선주 대상의 외항선박 구매자금지원은 제도 미비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내 해운사들은 고금리의 해외리스금융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해운사들의 강력한 요청과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수은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03년 1월 해외사업자금 형태로 국내 해운사 대상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이후 이 제도는 저리의 선박금융 조달, 외화유출 방지, 국내 조선소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에 기여했다.

여신지원 비적격국가 폐지 또한 수출금융지원 강화에 기여했다. 여신지원 비적격국가란 세계은행이 지정한 고채무·저소득 국가들과 수은의 국별 신용등급 최저 국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2004.01 초대형 컨테이너선 구매를 위한 외항선박구매자금 지원



2005.12.20 수출팩토링 업무 도입

그동안 이들 국가의 경우 정부 신용담보 거래라 해도 원천적으로 지원이 금지돼 왔다. 그러다 2005년 2월 여신규정 개정으로 그 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여신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이었다. 이후 정부 신용담보 거래의 위험인수제도 정착과 함께 수출금융 지원실적도 증대됐다.

이 시기 수은은 수출금융지원 강화뿐 아니라 단기수출 거래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포괄수출금융 지원제도 개선, 수출팩토링 업무 도입,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등을 도입했다. 포괄수출금융(현 수출성장자금대출)은 1995년 ‘자본재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제도로, 수출계약건별이 아닌 과거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향후 같은 기간동안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괄 지원하도록 한 제도이다. 기계류 등 자본재 및 첨단제품을 소규모로 자주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대출승인 및 집행을 수출계약건별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 시기 제도의 편의성을 토대로 중견기업 및 5대 계열기업군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2003년에는 사후 송금방식의 수출거래에 따른 외화매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해 주는 수출팩토링 업무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5년 3월 도입된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 소액대출은 중

전의 특례수출신용제도를 개선한 것이었다. 제작능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상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제작기술과 수출거래 안정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했다.

6. 세계적 공적수출신용기관 위상 확보

국가적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며 수출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해 온 수은은 2004년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차입 관련 최우수기관으로 각광을 받았다. 2004년 2월, 세계적 선박금융 전문지인 미국의 「마린머니(Marine Money)」로부터 ‘2003년 최우수 거래(Deal of the Year)상’과 ‘신규 참여기관(New Entrant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5월에는 세계적 국제금융 정보회사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행하는 「트레이드 파이낸스(Trade Finance)」에서도 ‘2003년도 최우수 금융거래(Deals of the Year 2003) 기관’에 올랐다.

이 시기에는 수은의 금융지원뿐 아니라 자금조달 업적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세계 최고 국제금융지 「IFR(International Financing Review)」, 「파이낸스 아시아(Finance Asia)」, 「디에셋(The Asset)」 등 3곳으로부터 ‘2004년도 아태지역 최우수 차입기관’으로 선정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최우수 차입기관 선정 때는 매년 각국 정부, 은행, 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차입기관이 수상의 물망에 오른다. 평가에는 각 기관의 1년 동안 차입실적을 토대로 시장상황에 따른 차입전략, 차입조건, 투자자 반응, 중간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뒤따른다. 그뿐 아니라 2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와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로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는 만큼 수은이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셈이었다.

수은의 2004년도 실적은 충분히 그들로부터 주목받을 만했다. 그해에만 34억 4,000만 달러를 해외에서 차입했다. 10억 달러 글로벌본드, 3억 달러의 유로화본드 등 4회에 걸친 공모와 30여 건의 사모채권 발행과정에서 적절한 차입시기의 선택, 다양한 발행통화와 만기구조 등 차별화된 차입전략을 선택한 것이 시장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또 하나의 원동력은 투자자관리활동(Investor Relations: IR)이었다. IMF 외환위기 때 중단한 채권발행을 2002년부터 재개한 수은은 이후 각국 대상 투자설명회는 물론, ADB, IMF 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해외 로드쇼를 펼쳤다.

신용도 측면에서도 수은은 국가를 뛰어넘는 신용등급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6년 10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Aa3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우리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이었다. 과거 개별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2000년대 초중반 주요 수출지원 역량강화 활동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강화	단기수출 거래지원
• 변동금리부 직접대출 확대 •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 선박 직접대출 확대 •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 신설(2003) • 여신지원 비적격국가 개념 폐지(2005)	• 포괄수출금융 지원제도 개선 • 수출팩토링 업무 도입(2003) •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 소액대출 도입(2005)



2005.01.15 Finance Asia 최우수 차입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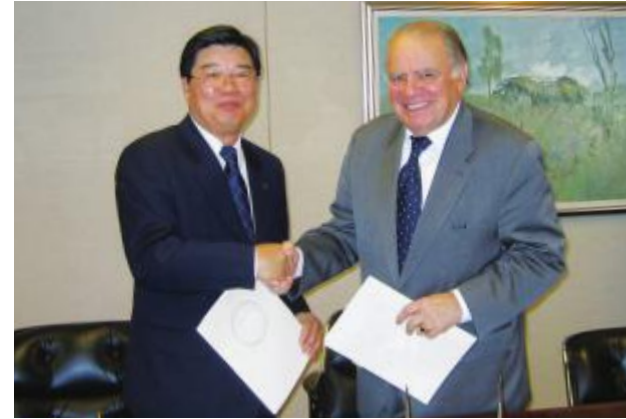


2005.02.01 IFR 아태지역 최우수 차입기관 선정

원칙이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 개별기업이 자국 국가신용등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수은도 국가신용도를 뛰어넘는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각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최상위 기관투자자 가운데 Aa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한 곳이 많았다. 최고 신용등급의 반사이익으로 새로운 대형기관 투자자 유치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다. 2007년 10월 수은은 아시아 지역 최우량 차입기관 가운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미달러화 1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도 성공했다.

한편, 수은의 세계적 위상과 신용도는 국제협력에서도 빛을 발했다. 먼저 2005년 2월 우리 정부의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회원가입을 기반으로 IDB와 ‘협조용자 확대 및 상호협력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2005년 9월에는 미국수출입은행과 대한항공의 항공화물기 도입지원을 위한 공동보증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이는 수은이 미수은과 체결한 기본협약을 실제거래에 적용한 최초의 공동보증거래로서 수은은 이 계약을 통해 화물항공기 지원에 대한 국제관행을 파악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2007년 기준 수은은 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 수출신용기관을 포함해 총 46개 기관과 5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며 대외거래 전문은행으로서 수은의 입지가 크게 강화됐으며, 이는 수은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 됐다.



2005.02.10 IDB와의 협조용자 확대 및 상호협력증진 업무 협약 체결식



2005.09.23 미국수출입은행과의 항공기 도입지원을 위한 공동보증계약 체결식

7. 수출입금융 지원 성과의 비약적 발전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차질 없는 외화조달을 이끌어내며 적극적으로 대외거래 금융지원을 강화해 온 결과, 수은의 대출지원 실적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수은의 대출지원 실적은 IMF 외환위기의 공식적인 극복을 선언한 2002년 이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3년에 11조 8,944억 원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22조 9,453억 원을 달성, 2003년 대비 2배 가까운 신장세를 보였다.

수출관련대출의 경우 전대자금대출, 포괄수출금융 등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대자금대출은 2001년 34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472억 원으로 약 7배 이상 늘어났다. 포괄수출금융 또한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통화전환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입어 2001년 8,945억 원에서 2005년 3조 6,852억 원으로 실적이 4배 이상 급증했다.

선박금융 지원실적도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대출지원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업무는 2001년 도입 이후 2005년까지 총 115척의 선박 수출거래에 대해 53억 달러의 자금을 승인했다. 초대형 컨테이너와 유조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잇따른 수주를 지원하며 우리나라 선박산업 고도화에 기여했다.

외항선박 구매자금 역시 2003년 첫 승인 이후 2007년까지 총 44척에 17억 5,983만 달러를 지원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통해서도 총 11개 선박투자회사에 5억 5,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IMF 외환위기 때 실적이 저조했던 해외사업관련대출은 2003년 외환위기 이전 최고 수준이었던 1997년의 6,519억 원을 초과해 8,054억 원의 지원실적을 달성했다. 지원내역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해외투자자금대출(국내 모기업에 대해 해외자회사 앞지분·대부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이후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



2003.11 이란 사우스파 가스개발 프로젝트



2004.03 현대상선 앞 VLCC 외항 선박 구매자금 지원

업자금대출(현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국내 모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에 대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제공)이 해외투자자금대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자원개발사업 관련 자금 소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해외사업관련대출 지원실적은 2007년 3조 7,672억 원을 기록, 2003년 대비 약 4.7배나 늘어났다.

수출관련대출, 해외사업관련대출과 함께 수은 3대 대출 중 하나인 수입관련대출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업무가 크게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전 수은 전체 대출의 1~2% 수준에 불과했으나, IMF 외환위기 중 수출제품 제조용 원부자재의 해외 수급 애로를 경험하면서 수출제품 원재료의 적기 수입 관련 대출지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품목이 IT 제품을 중심으로 소형·경량화되고, 수출 운송수단도 선박 대신 화물기 이용으로 늘어나면서 국적항공사의 화물기 도입 대출이 증가한 것도 수입관련대출 지원 실적 증가의 한 요인이었다. 외환위기 이전 2,500억 원을 넘지 못했던 수은의 수입관련대출은 2002년부터 매년 실적을 경신하며 2007년 2조 8,07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증 업무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수은에 해외 발주자의 이행성보증 수요가 집중된 결과였다. 1997년 1,367억 원에 불과하던 보증실적은 2003년 16조 2,178억 원으로 6년 만에 무려 약 118.6배나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28조 1,856억 원을 기록했다. 보증지원내역은 채무보증보다 이행성보증이 많았으며, 이행성보증 중에서도 선박건조계약의 선수금환급보증이 전체 이행성보증지원의 약 85%를 차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자금지원 실적(2003~2007)

단위: 억원

연도	대출총액	수출	해외사업	수입	보증총액
2003	118,944	85,211	8,054	9,563	162,178
2004	155,303	112,663	13,873	13,533	157,875
2005	171,834	113,088	19,378	16,612	173,412
2006	196,989	118,675	24,100	24,886	224,037
2007	229,453	132,582	37,672	28,077	281,856

수은 수출기여도(2003~2007)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총 수출액	수은 지원액	기여도
2003	193,817	27,340	14.1
2004	253,845	37,623	14.8
2005	284,419	40,437	14.2
2006	325,465	55,703	17.1
2007	371,489	69,150	18.6

외국환 업무 또한 설립 이래 수은의 부대 업무로 취급해 오다가 2002년 3월 「수은법」 개정을 통해 본 업무로 전환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01년 629억 원 수준이었던 실적은 2005년에는 2조 983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수은의 금융지원 효과는 총 수출액 대비 기여도 측면에서도 크게 성장했다. 수은의 수출기여도는 2002년 역대 최고인 11.7%를 기록한 이후 매년 경신되어 2007년에는 18.6%에 이르렀다.

제4장

글로벌 불확실성 속 정책금융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2008

2019

제2절

지속가능 금융인프라
구축 노력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의
태풍 속에서

제3절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의 태풍 속에서

1. 경제위기 조기 극복 위한 유동성 공급 및 수출금융 지원 강화

2007년 여름부터 표면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대 경제 역사에 있어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2000년대 초 경기 부양을 위한 미국의 초저금리정책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대출 이자 인하와 함께 통화량이 증가하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다.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줘도 부동산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너나없이 저소득층 대출을 확대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결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비정상적인 규모 확대가 위기를 초래했다. 2004년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우선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의 파산이 시작됐다. 이후 꼬리를 물고 파산 행렬이 이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파생상품(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에 투자한 은행과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며 줄줄이 파산했다. 특히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거대 금융기관들의 파산은 전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됐다.

대외 의존도는 물론,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직후, 외국인 투자가 순매도로 돌아서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시장 불안은 외화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2008년 9월 말 기준 국내 단기채무 비중은 51.9%까지 치솟았다. 이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해 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나 감소했다. 이처럼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었다.

위기 탈출이 지상과제로 떠올랐다. 수은은 국내 금융시장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창구 역

할을 맡았다. 2008년 하반기 정부로부터 250억 달러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을 수탁받아 무역어음재할인 등의 방식으로 국내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했다.

자체 외화조달도 활발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7

년 아시아권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멕시코 페소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2008년에는 태국 바트화와 말레이시아 링깃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또 2009년 1월에는 글로벌 신용경색을 뚫고 자체 신용만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해 막대한 외화자금 조달의 물꼬를 텃다.

이로써 수은은 국제금융 전문지 『IFR』이 평가한 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아시아 차입자의 채권 발행에 물꼬'를 트며, 이후 한국계 기관이 연이어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기반을 놓았다.

국가차원의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수출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상업 금융기관들의 자금 지원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만한 분야로 판단되는 발전, 정유, 석유화학, 담수 등 해외 인프라·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 금융을 먼저 확정 짓고 사업을 발주하는 이른바 '선(先)금융 후(後)발주'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었다.

수은은 사업단계별 맞춤형 금융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PF 방식 여신 수요가 크게 증가해 2008년 1조 7,025억 원이던 집행액이 2014년 3조 4,089억 원까지 증가하는 등 취급 규모가 급증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도 다각화했다. 먼저 PF 방식의 금융지



리먼브라더스의 영업정지 관련 긴급 공고문



2008.10.23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원을 석유, 가스, 광물 등 자원개발분야로까지 확대해 2007년 국내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PF 방식 여신을 승인했다. 이어 2008년에는 자원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탐사, 광구 인수, 개발, 생산, 운영 등 자원개발 전 단계에 걸쳐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지분 출자 없이 장기구매계약자(Off-taker)로만 참여하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법인에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 시기 선박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크게 늘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주들이 선수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수 선박의 인도가 지연돼 국내 조선사들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자, 수은은 기 수주 선박의 원활한 수출이행을 위해 조선업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또 드릴십, 부유식 생산저장설비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위기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세계 정상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정부는 이 시기 경제 도약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잇달아 수립했다. 2008년 8월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주력했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2008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 및 시행했다. 이어 2010년 3월에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중견기업 지원 규모와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과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에 힘입어 국내경제는 2010년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외환보유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보유액을 웃도는 2,9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중에 떠돌던 '제2 외환위기설'을 완전히 잠재웠다.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일지(2000~2008)

시기	확산 내용
2000.03	닷컴 버블 붕괴 시작
2001.12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지속(2003년 6월 1%까지 인하)
2004.06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시작(2006년 6월 5.25%까지 인상)
2007.02	HSBC 모기지사업 손실 발표
2007.10	시티그룹 등 모기지사업 손실 발표
2008.09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 BOA 메릴린치 인수, 미국 정부 AIG에 85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2010.12.08 신성장산업 육성 회의

그러나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는 2011년부터 성장의 속도가 둔화됐다. 특히 하반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악재가 확대되며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며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했다.

2. 수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과 히든챔피언 찾기

세계적인 신용경색의 위기 속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섰다. 안정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 확충이 필수인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12월 수은 6,500억 원, 산업은행 5,000억 원, 기업은행 5,000억 원 등 총 1조 6,500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했다. 2009년 1월에도 수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에 총 2조 3,000억 원의 현금출자를 단행했다. 수은의 경우 같은 해 3월과 5월에도, 각각 5,000억 원의 현물과 2,500억 원의 현금 출자를 받으며 수출 중소기업 지원 여력을 확충할 수 있었다.

늘어난 자본력을 기반으로 수은은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적극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태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던 2008년, 자금 부족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신규 자금 지원, 또는 대출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시행 첫째, 7개 업체에 175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60개 사에 5,418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또 목전의 위기에서 벗어난 2010년에는 34개 사에 1,63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며 수출 중소기업 조기 경영정상화에 일조했다.



2012.03.30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



2012.07.20 한국형 히든챔피언 인증식

수은은 정부의 동반성장정책 전개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1년 12월 중소·중견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상생수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는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법인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상생수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는 수출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제조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 물품 제작 등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2013년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제품 경쟁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수출시장을 열기 위한 정보가 부족해 제자리걸음 중인 수출 초보기업들이 많았다. 이에 수은은 수출 초보기업을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발굴에도 적극 나섰다.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중소·중견기업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개선내역

구분	주요 내용
후보기업 선정체계 개선	• 2인 이상 외부위원의 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 • 1, 2차 정량점수의 최종 선정결과 반영
일자리 창출 장려	• 후보기업 선정 시 고용창출 실적이 높은 기업 앞 가산점 부여
4차산업 육성	• 수출형 신성장산업 영위기업의 후보기업 신청 자격요건 완화
사후관리 강화	• 법적분쟁, 횡령 등 상시 사후관리 항목의 경보기능 강화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 마련

육성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니즈에 맞는 성장전략 코칭, 해외진출 자문 등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 해외판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화 전단계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유망 수출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수혜기업 입장에서 효능감이 높은 제도인 만큼 기업 선정과정의 신중함이 요구됐다. 이에 수은은 2017년과 2023년 2차례에 걸쳐 후보기업 선정체계를 크게 개편했다. 이때의 개선 작업을 통해 선정 과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시행 전 과정의 세부를 보강했다. 무리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육성’보다는 ‘우대지원’에 집중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며 실질적 지원에 집중할 수 있었다.

3. 사업지원 가치사슬 완성

수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2008년부터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 수요가 폭증하며, 여신 규모는 급증한 반면 BIS비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BIS비율은 2007년만 하더라도 11%대를 사수했으나 2008년에 들어 8%대까지 급감했다.

긴급처방전이 필요했다. 정부와 국회는 2009년 1월 30일 제14차 「수은법」 개정을 시행하며 법정자본금을 기존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했다. 개정 공포 직후에는 2,600억 원의 현금을 추가로 출자했다. 이로써 2009년 말 기준 BIS비율을 9.3%까지 회복시키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개정법 핵심 내용은 법정자본금 확대뿐 아니라, 수은의 미래 발전방향까지 포괄했다. 수은의 역할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제약을 일부 해소하며, 신규 업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인 추가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수은이 해당 채권에 대한 인수와 보증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수은은 일본과 미국 등 주요 경쟁국의 수출신용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채권 매입과 보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자금조달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펀드투자 업무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이전만 해도 수은은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분 출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사업이 국가차원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며, 수은의 정책적 지원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었다. 특히 녹색산업 관련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와 탄소배출권 확보 이슈에 대해 정책금융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2009.09.29 탄소배출권 특별자산 펀드 약정식

이에 정부는 제14차 「수은법」 개정과 그에 뒤따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 수은이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의 효과는 첫 해부터 바로 나타났다. 그해 9월과 12월, 수은은 탄소펀드와 자원개발펀드 1호 투자에 참여했다. 이어 2010년 8월에는 자원개발펀드 2호에 투자하며 수은 업무 역사에 있어 최초로 펀드 투자의 길을 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2011년에는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플랜트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업무를 신설했다. 해당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정식 발족하고 사업구조 설계, 금융주선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갔으며, 그 결과 2011년 업무 도입 이후 2019년까지 총 68건, 488억 달러 규모의 금융주선을 수행했다.

한편, 2014년 1월에는 제19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투자 업무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기존에는 투자 시행과 관련해 많은 제한요소가 있었다. 특히 출자 업무 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한 건별 승인의 문제, 펀드투자 업무의 투자대상 및 분야 제한 문제, 투자 지분을 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시행기관인 수은으로서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4년의 법 개정을 통해 건별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투자 분야 및 지분율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투자 업무가 가능해졌다.

법 개정에 수반되는 내규 정비를 거쳐 2014년 6월에는 투자 업무를 전담할 ‘투자금융실’을 신설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대출·보증 연계 투자를 승인하며 기관 최초의 직접투자를 단행했다.

2015년에는 국제적인 수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개발 업무를 추가 도입했다. 주요 산유국의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설계·조달·시공(Engineering·Procurement·

Construction) 가격경쟁력이 하락해 해외사업 수주환경이 날로 척박해지던 시점이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진출에 있어 금융전문성 확보가 필수요소로 인식되던 때이기도 했다.

국내 민간 상업금융기관들과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은이 전면에 나서야 했다. 수은은 사업개발 업무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우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 및 개발수요, 투자환경, 우리 기업의 진출수요 등을 고려해 ‘국가별 종합진출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발주처, 금융기관 등을 포괄하는 수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기업들과 공유해 나갔다. 또 초기 사업개발 단계부터 수출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금융조달 가능성을 높여 가며 프로젝트 위험관리에도 공동 대응했다. 이로써 수은은 ‘사업발굴, 금융자문, 금융추진, 여신지원’을 연결하는 수출촉진 전후방 가치사슬을 완성할 수 있었다.

4. 「수은법」 개정과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수은법」에 기재된 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제한은, 한국수출입은행 50년 역사를 통해 꾸준히 해소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은 기관 운영의 기본 방향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해이자 또 한 번의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그해 1월 21일 제19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업무 규정체계가 14개 호에 달하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수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수요나 신규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수은은 법 개정 이후 급변하고 있던 글로벌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과거에 비해 더욱 능동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은 타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늘렸다. 기존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충했다. 이와 함께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이로써 수은에 대한 정부 측의 현물출자가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출자 및 펀드 업무에 대한 제한은 대폭 완화했다. 지분 출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별 승인’하던 것을 ‘연간 총량 승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펀드투자 대상 분야는 과거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여신 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따라서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성장산업분야까지 펀드투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업무분야에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명시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도 법상 문구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밖에도 대외경제협력기금과의 연계 지원을 위한 ‘개발금융’ 취급 근거도 마련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시대의 변화상과 그로 인한 업무 다양화 필요성을 법에 반영하며,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수은은 대규모 해외 수출사업과 신산업분야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 정책금융 선도기관으로 격상되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엔진으로서 역할을 확대했다.

5. 국내 외화 조달시장 선도

수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통화에 대한 채권을 발행했다. 이후로도 틈새시장 발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차입시장 다변화를 위한 모색을 이어갔다.

2010년, 대만시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미 달러화가 표시된 포모사본드를 발행했다. 또 2011년 8월에는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홍콩시장에서 덤섬본드를 발행했다. 이 외에도 인도 루피화, 필리핀 페소화, 페루 솔 등의 통화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조달했다. 특히 2011년 12월에는 사우디



2011.01.28 우리다시본드 발행 기념식

메이플본드 주요 발행 조건

구분	내용
통화금액	3.25억 캐나다 달러(미화 2.9억 달러 상당)
만기	5년
형태	고정금리 채권
발행금리	GOC*+1.21%(2.711%)
스왑후 금리	US 3M Libor+75bps
주간사	BofA-ML, HSBC, RBC

* 캐나다 국채 수익률

리알화가 표시된 공모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활용하
는 모범사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 통화시장 너머에서도 잇달아 외화조달 성과를 실현했다. 2012년 7월 3년물로 호주 캔
거루본드시장에 데뷔한 수은은, 2016년에는 아시아 금융기관 최초로 10.5년 만기 장기채권 발
행에 성공하며 장단기 투자자를 아우르는 저변 확대에 성공했다. 2014년 12월에는 국내 금융기
관 최초로 캐나다시장에서 메이플본드를 발행했다. 캐나다 달러화 채권 발행 성공으로 인해 수
은은 G10 주요 통화 모두를 대상으로 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외화 조달시장의 떠오르는
플레이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미국시장의 지속적 금리인상과 중
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시점이었다. 이처럼 시장상황이 경색된
상태에서도 수은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체제 전환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
기관 역대 최대인 1,200억 엔 규모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이처럼 수은은 국내 대표 외화차입기관으로서 차입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중통화 시장을 지
속적으로 개척하며 조달시장 다변화를 꾀해 나갔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화 재원을 마련해 수은이 대외거래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절

지속가능 금융인프라 구축 노력

1. 조선업 위기와 수은

영원한 호황이 이어질 것 같던 그 좋은 시절이 지나갔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전과 이후의 상황
이 많이 달랐다. 세계 1위를 달리던 한국 조선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
고 시장이 쪼그라들자 금융권은 돈 빌려주기에 소극적이 됐고, 해운사들은 선수금 지급을 연기
하거나 급기야 선박 제작 및 인수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는 했다.

그나마 대형 조선사는 버틸 여력이라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원한 활황’을 믿고 시장에
뛰어난 중소 조선사들이었다. 환율 급등의 여파와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지며,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중소 조선소들은 연이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쪼머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조선업 불황은 수은에도 타격을 입혔다. 2010년 이후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성동조선, 대선조선, SPP조선 등 중소 조선사들의 경영정
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신규 자금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2013년 말 기준 수은의 고정이하여
신은 총 여신의 1.51%에 달해 1조 3,766억 원까지 급증했다.

해가 갈수록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었다. 2014년 말에는 고정이하여신이 총 여신의
2.02%인 2조 1,492억 원을 기록해 2004년 이후 다시 2%를 넘겼다. 또한 2015년에는 STX조선
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며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3.24%를 기록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됐다.
결국 수은은 2015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여신심사제도,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들
여다보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2016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성동조선해양의 적자 수주
물량을 과하게 허용했다는 이유로 관리 부실을 지적받기도 했다.

수은의 중소조선사 지원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조선업 불황으로 시중의 상업 금융기관



성동조선 사업장 전경

들이 중소 조선사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외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마저 금융지원을 끊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 대출해 준 조선사의 부실을 정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의 측면에서도 수은은 별도 조사권이 없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꾸념은 나중의 일이었다. 주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은 정부와 언론, 일반 국민의 비판을 겹쳐히 받아들이고 위기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에 수은은 과거처럼 개별기업 앞으로 단순 금융을 공급하던 방식으로는 조선업의 장기 불황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조선·해운업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선 2015년 10월, 과도한 헤비테일(Heavy-tail) 거래에 대한 지원 제한조치를 발표하며 불합리한 기존 계약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또 해양플랜트 건조 계약서 불공정조항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선산업 전체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적 전환을 유도해 나갔다. 둘째로 해운 시황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우량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어 나갔다. 수은은 우량 조선사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시행해 위기 속에서도 우대지원과 복합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2015년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진행과정

구분	방향성	세부 내용
대선조선	수은 주도로 소형 컨테이너 등 니치마켓 공략으로 독자생존 추진	• 정상화 방향: 소형 컨테이너(1,000~2,500TEU), SUS탱커, 연안여객선 등 소형선을 건조하는 국내 특화 조선사로 독자생존 추진
SPP조선	M&A를 통한 부실여신 감축	• 2015년 11월 매각 입찰공고, 2016년 3월 MOU 체결 • 기 수주 물량의 정상 인도를 통한 익스포저 축소, M&A를 통한 부실여신 감축 추진
STX조선	다운사이징 추진으로 정상화 도모	• 정상화 방향: 다운사이징(매출 50% 축소, 인력 34% 감축, 선종 단순화) 추진

2. 리스크관리본부 신설과 혁신안 발표

조선업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은은 부문별 리스크 관리시스템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운영리스크, 금융규제 강화 등 리스크관리 업무의 증가와 전문화 요구를 반영해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했다. 이러한 수은의 의지는 2015년 7월 3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표현됐는데, 무엇보다 기존 리스크관리단을 ‘리스크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며 여신부문에 대한 실질적 견제 및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설 리스크관리본부는 리스크관리부, 여신감리실, 심사평가부, 기술환경심의실 등으로 구성했다. 이로써 심사에서 승인까지 이어지는 영업 및 여신 전반의 업무를 기존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췄다. 또 개편 리스크관리부는 리스크기획팀, 신용리스크팀, 리스크평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신용, 시장, 운영 등 부문별 리스크관리 업무를 분할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은 2016년에도 계속됐다. 수은은 조직 슬림화와 핵심 역량 집중을 골자로 하는 2016년 1월의 조직개편을 통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꾀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능의 강화를 위해 ‘여신감리팀’을 신설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신감리 업무를 중장기 및 산업별 여신분야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기존 양적 지원 중심전략의 방향 전환을 위한 전면 채신 수준의 혁신안을 내놴다. ‘수은 혁신 및 기능강화 추진방향’은 같은 달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크게 필수적 정책금융 지원강화와 엄정한 경영관리체계 확립, 두 부문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선도, 수출 전략산업 육성, 건전성 선제 관리, 책임경영



리스크관리본부 내 신용리스크팀

강화, 조직운영 효율화 등 5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여신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인력을 늘리고, ‘구조조정 전문위원회’와 ‘외부자문단’을 신설했다.

6월 혁신안 발표 이후로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외부컨설팅을 통해 조직진단을 받고, 외부 경영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에는 구체적인 혁신안을 도출했다. 리스크관리와 구조조정 전문성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 경영관리 혁신 등을 통한 부실 재발 방지, 조직 슬림화 및 자체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 강화, 신시장 개척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기능 제고가 주요 골자였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혁신 노력으로 수은은 신뢰받는 건전한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의 재도약을 추구했다.

3. 기업 구조조정의 참신한 선례 제시

산업 구조조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특히 여신이 집중됐던 조선업의 경우 부실여신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생태계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수은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구조조정을 전담할 조직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확대해 나갔다.

2013년 1월에는 기존 중소기업금융부 내 배속된 특수여신관리실을 독립 실(室)인 ‘기업구조개선실’로 확대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중소 조선사 및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중소조선금융실’을 신설했으며, 2014년 6월에는 ‘해양기업개선실’로 개편했다. 한편, 2014년 조선·해운 업계 경기가 지속 악화됨에 따라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시황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산업적인 위기 속에서 수은 내부에서도 해양산업 구조조정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수은은 기존 기업구조개선실과 해양기업개선실을 통합해 2015년 6월 ‘기업개선단’을 출범시켰다. 통합 단(團)의 출범 이후로는 업무방향의 물줄기를 크게 돌렸는데, 과거처럼 부실이 발생한 이후 금융을 지원하던 패러다임에서 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화를 예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출범 이후 기업개선단의 당면 과제는 성동조선의 처리 문제였다. 2010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로도 경영정상화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상화에 탄력을 붙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은은, 민간 자본시장 중심의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8월 성동조선 및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경영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최장 7년 동안 성동조선을 공동 경영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4년 동안 성동조선의 영업·구매·생산·기술부문에 대한 경영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조선업 시황의 회복이 지연되며 수주 부진이 이어진 결과, 2018년 3월 성동조선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 전략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대형 조선사 간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때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은 분명 의미 있는 선례였다. 삼성중공업 및 성동조선 케이스를 시작으로 수은은 M&A 성사, 출자전환 주식 매각 등 민간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채권 회수율을 극대화하고 여신자산 건전성을 제고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조조정’ 적용 사례를 다수 산출할 수 있었다.



2014.11.10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식



2015.08.31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경영협력협약 체결식

4. 흑자 전환, 극적인 자산건전성 회복

조선업 위기로 인해 2015년 수은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부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총 여신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등의 수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수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가운데, 부실여신 감축과 적정 자본비율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갔다. 2016년 9월에는 ‘중장기여신 감리제도’를 도입해 리스크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잠재적 부실의 내재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어 10월에는 여신 공급과 자금조달, 그리고 리스크관리와 자본확충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업무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지관리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매년 진행 목표이익을 확정하고 부서별 이익목표를 배분해 달성 현황을 수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지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를 위한 위원회급의 의사결정기구와 부서 간 협의체를 신설하며 진행 차원의 ALM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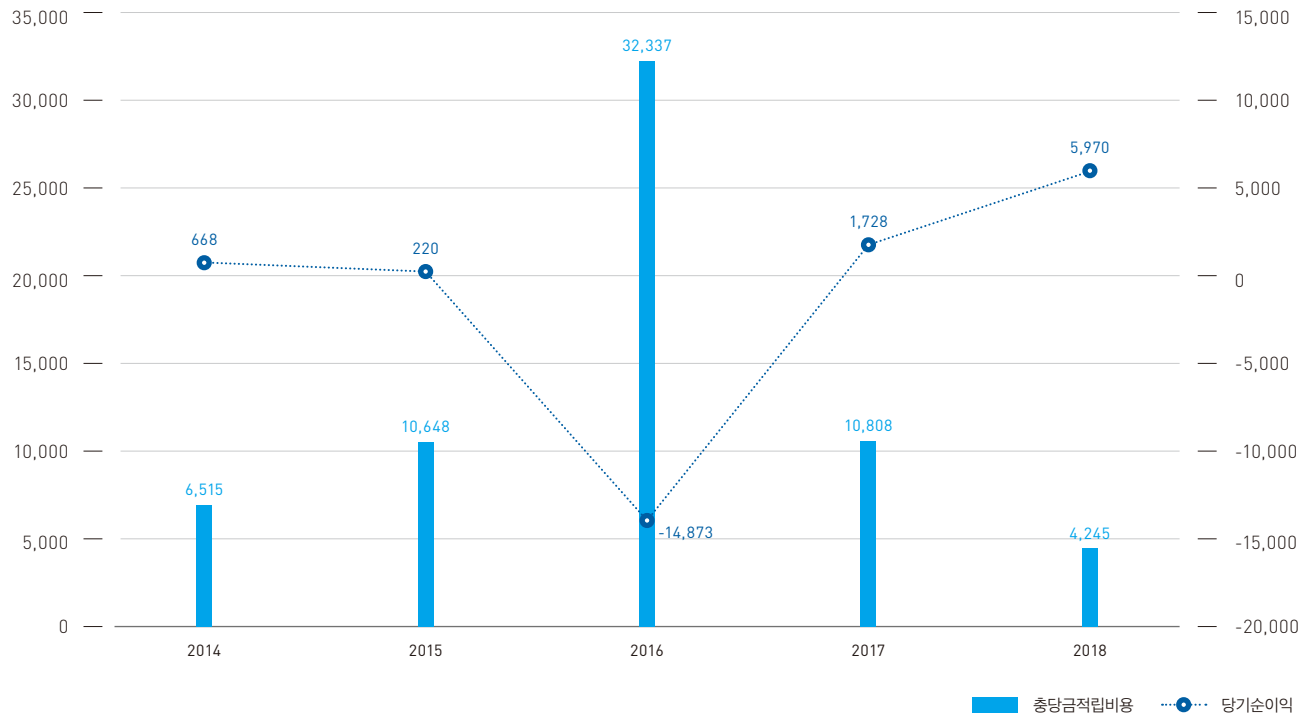
파생상품 거래, 용역·컨설팅 제공사업 등 비여신부문의 업무를 확대하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이자수익 외에 수익기반을 다변화하는데도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아부다비 개발기금(Abu Dhabi Fund for Development: ADFD)의 수출금융제도 구축 컨설팅사업 등을 통해 주목할 만한 수익창출 사례를 작성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다방면의 수지관리 및 수익확대 노력에 힘입어 수은은 단기간 내 위기 탈출을 실현했다. 2017년 이익 규모 확대 및 총당금 적립비용 축소를 실현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 역시 전년 대비 2.13%p 상승하며 반등했다.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2018년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역사상 최고 수준의 재무실적을 시현했다.

수은은 대규모 순손실 발생 후 단기간 내 재무 성과의 비약적 개선을 이뤄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소임을 다해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상황을 일단락 짓고, 자산건전성 회복을 통해 재도약의 기반을 신속히 구축해내며 대내외에 그 저력을 보여줬다.

당기순이익 및 총당금 적립비용 변화추이(2014~2018)

단위: 억원



조선업 위기 극복을 통한 흑자전환 실현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증감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12,795	13,198	403
총당금적립비용	32,337	10,808	△21,529
당기순이익(개별 재무제표)	△14,873	1,728	16,601
BIS 자기자본비율	10.77	12.90	2.13

제3절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1. 수은이 나아갈 길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었고, 금융부문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기능강화 및 부실예방에 집중하며 은행 경영의 내실을 다져왔고, 앞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수은은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협력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비전 수립작업에 돌입했다.

비전수립 작업은 외부 컨설팅 없이 임직원과 고객,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모아가며 진행했다. 특히 구성원들의 실제 목소리와 의지를 담아내고자 Bottom-up 방식으로 조직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의견을 취합했다.

비전 수립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행내 각 부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방향을 설정하는 일이었다. 지난 역사에 대한 자성을 통해 수출입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기능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각 업무 기능별로 축적된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은행 전체 차원에서 일관된 목표를 향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었다. 따라서 수은은 이 3개 축의 고유영역을 ‘삼위일체’로 묶어 유기적인 맞춤형 금융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청사진을 설계해 나갔다.

밈그림 작업 끝에 2018년 7월 3일, 창립기념식 자리를 빌려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새로운 ‘We finance global Korea’ 슬로건은 한국경제의 제도약을 선도하기 위해 수은만의 차별화된 정책금융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다. 비전 2030은 구체적으로 ①글로벌 수주 지원 및 자체 자본여력 확보 ②산업 성장과 시장 보완 및 사회적 가치 기여 ③수출금융·대외경제협력기금·남북협력기금의 융합을 3대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글로벌 금융 전문기관, 시장보완 안전망,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 대북경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별 조직재편 내용

5대 전략목표	조직 정비
1 글로벌 리딩 ECA	• [해양금융단 신설] - 전통 수주산업인 해양산업 부문 프로젝트금융 및 기업금융 전담조직을 통합해 ‘해양산업 종합지원 체제’ 구축 • [신성장금융본부 개편 → 혁신성장금융본부] - 본부 내 투자금융실을 배치하는 등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본부 운영
2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동반자	• [아시아4팀 신설] - 매년 증가하는 연도별 EDCF 지원목표 달성을 위한 경험 사업조직 확대 • [경험지원실 개편 → 사업협력부] - 수원국 구매절차 지원 등 개발도상국과의 파트너십 기능 강화
3 남북경제협력 Initiator	• [교류협력팀 신설] - 남북회담, 북·미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사업 확대 지원
4 위기에 강한 금융전문가	• [구조조정 조직 통합] -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전담 조직과 중소·중견기업 정리대상여신 전담조직 통합 • [환경심의회 개편 → 환경사회심의회] - 사회심사의 국내외적 중요성 증대에 대응한 전담조직 운영
5 신뢰받는 혁신 선도기관	• [사회적가치추진반 신설] - 중장기경영전략 전담조직(경영혁신실)에 사회적가치추진반을 신설해 사회적가치 경영 및 인권 경영 추진

협·개발 금융기관,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세부 목표의 달성을 통해 2030년에 이르면 여신 잔액 200조 원, 순이익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처럼 원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장 실행 원년인 2018년부터 현장 적용이 필요했다. 이에 수은은 비전의 전략목표와 실행과제를 곧바로 기관 경영평가 및 부서 업적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그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같은 해 10월부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또 5대 전략목표별로 전담조직을 명확히 설정하고, 비전 실행에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재편했다.

이 밖에도 수은은 비전 실현을 위해 직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력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했다. 또 경영진과 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효과적인 경영전략 전파를 위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성화하고 의견수렴 도구를 확대했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노력의 결과, 수은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재정립된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대한민국 정책금융의 질적 전환을 선도해 갈 수 있었다.

2.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며 저성장 기조가 세계경제의 기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제조업 중심 수출구조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방향으로 키를 고쳐 잡아야 했다. 수출 최전선에 서 있는 수은이 먼저 나섰다. 2013년 새로 출범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세우고 관련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전부터, 수은은 콘텐츠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지식·문화콘텐츠 전담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펴기 시작했다.

창조산업 선정 뒤인 2015년 1월에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전담할 ‘서비스산업금융부’를 신설하고 3개 팀으로 구성했다. 수은은 이러한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SW·ICT, 물류, 금융 등 유망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산업 특성에 맞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갔다. 이 시기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했다. 2013년과 2014년만 해도 2조 원 규모의 지원에 머물렀으나 2015년에 이르면 3조 5,092억 원까지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혔다.

이후로도 멈춰버린 성장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한 유망산업들을 가리키는 명칭은 정부의 교체에 따라 2016년 ‘신성장산업’, 2018년 ‘혁신성장산업’ 등으로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 지향점은 같았다. 우선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에 유망한 산업분야를 가려내 집중 육성하려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양산하려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해 수은은 적극적으로 지원부문을 넓혀 나갔다. 2016년에는 기존 서비스산업에 유망소비재, 미래성장산업 등을 추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7조 원까지 확대했다.

2017년에는 지원분야를 서비스, 유망소비재,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 등 5대 분야로 새로 분류하고 194개 품목을 ‘수출형 신성장산업’으로 지정했다. 이 해에도 전년 대비 2조 원 증가한 규모로 지원을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실현에 일조했다.

2016년 4월 금융위원회 산하에 신성장정책금융센터가 출범하고 2018년 7월 ‘혁신성장 공동 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수은의 혁신성장산업 지원 정책에도 소폭의 변화가 있었다. 같은 해 8월 공동기준을 바탕으로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목록을 재정비하며 5개 분야 338개 품목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9년 수은은 혁신성장산업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7,000억 원을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신성장산업 발굴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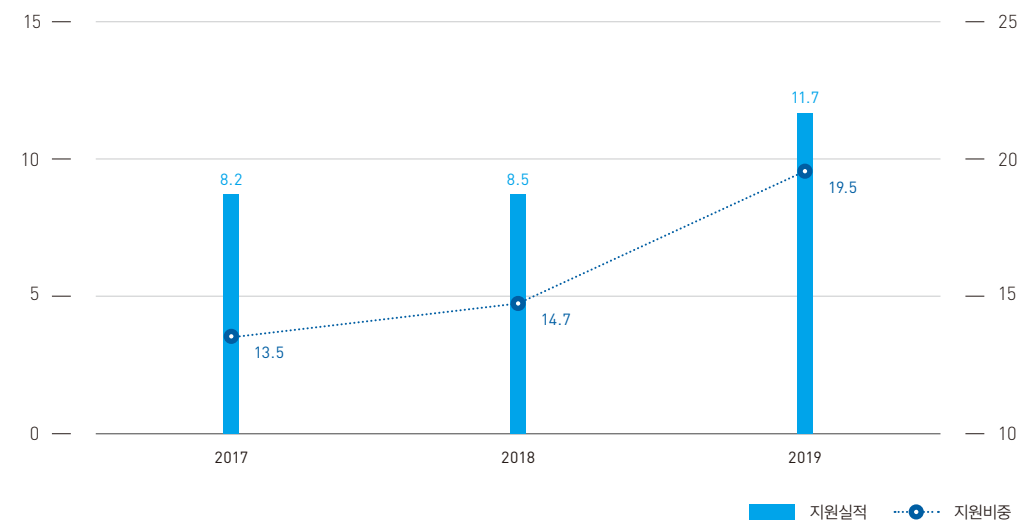
지원분야와 규모만큼이나 지원방식도 지속적으로 다변화했다. 과거만 해도 수출입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자금 지원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신성장산업 육성이 시대적 과제로 인



2018. 07 신성장정책금융센터가 발간한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혁신성장산업 지원실적 변화(2017~2019)

단위: 조원, %





프로젝트펀드 투자 방식으로 참여한 스웨덴 스타브로 풍력발전

식된 이후부터는, 원천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이 중요한 미래 성장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과 기업 인수·합병(Merge and Acquisition: M&A) 영역까지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또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고려해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금융수단 외에도 금융 자문 및 주선, 채권보증, 파생·외환거래, 직접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원 방식의 도입 이후 오래지 않아, 다양한 최초의 실적들이 출현했다. 특히 2018년에는 기획 및 개발 단계 드라마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용한 대출을 최초로 지원했다. 또 2019년에는 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CGIF)와 위험분담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이 설립한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해외발행채권에 대해 최초로 공동보증을 제공하며 새로운 금융협력모델을 제시했다. 같은 해, 재무적 투자자로서도 주목할 만한 면모를 보였다. 한국의 중부발전과 독일의 지멘스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스웨덴 풍력발전 건립사업에 프로젝트펀드 투자 방식으로 참여해, 74억 원의 초기자본을 지원했다. 이로써 국내 정책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 풍력발전시장 진출 및 관련 기자재 수출 성과를 건인할 수 있었다.

3. 해외 인프라 산업 지형 변화에 대한 대응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해외 인프라 사업 발주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우리 기업의 기술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단순 도급형에서 EPC, O&M(Operation & Maintenance) 등 사업 전 단계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사업주에게 대규모 장기 사업자금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 패키지가 낙찰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으로 인식됐다. 금융경쟁력 확보는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며, 수은은 이러한 수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사업인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사업'에 2012년 31억 달러를 지원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2015년 이후로는 '신 3저 현상'이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 및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정유, 석유화학 등 전통 수주부문의 해외 발주량이 급감했고 원화 약세 또한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 환경에 경고등이 켜졌다. 또한, 그간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중동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던 대형 건설인프라사업의 경우 저유가 영향으로 발주가 감소하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신흥개도국의 발주는 도시화 수요로 인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은은 먼저 신흥시장을 향해 발길 닿는 범위를 넓혀 나갔다. 2016년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을 계기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시장 진출에 힘을 쏟았다. 수출금융뿐 아니라 금융자문,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F/S) 등 전방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배후기지로 기능했다. 동남아지역 밖에서도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에서 금융협력



UAE 바라카 원전

이니셔티브, 혹은 공동금융지원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협력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 2017년에는 매년 1,500억 달러 내외의 인프라 수요가 예상되던 아프리카시장에 진출하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수출금융 지원 지도를 완성했다.

또한, 수은은 글로벌 인프라 발주 시장의 지형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금융지원 방식을 고도화해 나갔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업의 부가가치는 커졌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증폭됐다. 국가 간 수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금융경쟁력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돼 대출 규모, 금리 등 금융조건이 수주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은은 해외 건설사업 유형을 시공자 금융주선형, 투자개발형, 패키지형 등으로 세분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정립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과거에 비해 더욱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의향을 표명했고, 사업개발 단계부터 자금조달 계획 및 리스크 경감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17년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자원개발과 운영에 참여하는 ‘모잠비크 Coral South FLNG 사업’에 PF금융 5억 1,000만 달러와 보증 4억 9,0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10억 달러를 지원했다. 또 같은 해 한국중부발전이 민자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로 참여하는 ‘인니 Cirebon 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PF금융 4억 1,800만 달러와 보증 1억 4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5억 2,200만 달러의 금융지원을 승인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SK건설과 대림산업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한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PF금융 3억 8,000만 달러와 보증 3억 5,6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7억 3,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차나칼레 현수교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로 사



세계 최장의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업 수주를 위한 치열한 국가대항전이 펼쳐졌으며, 수은은 적시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성사시키며 우리 기업의 세계적 랜드마크 건설사업 수주에 공헌했다.

2019년에는 ‘영국 런던 실버타운 터널사업’에 PF금융 2억 4,300만 달러, ‘말레이시아 Mari-gold 정유·석유화학설비사업’에 PF금융 3억 9,800만 달러와 보증 1억 9,8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5억 9,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산업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금융지원 노력이 계속됐다.

수은의 혁신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수은은 기존 금융지원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원조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이 도입됐다.

개발금융의 첫 시작은 경험증진자금대출(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EDPF)의 도입이었다. EDPF는 정부재정이 아닌 수은의 시장차입자금을 활용해 개도국사업을 지원하되 정부재정으로 이차(利差) 보전을 받음으로써 ODA 조건의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한 상품이다. 재정 제한을 극복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사업수주와 반드시 연계하지 않는 비구속성 지원을 허용해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효과가 있는 개발협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은은 2016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개정하며 개발금융 실행기반을 마련했고, 2017년에는 EDPF 취급을 위한 내부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의 효과는 금세 증명되어 2019년 ‘네팔 UT-1 수력발전사업’에 PF금융 5,000만 달러와 연계한 EDPF 5,000만 달러를 최초로 지원했다.

2019년에는 기존 수출금융계정과 구분되는 특별계정의 도입을 통해 해외 수주 지원 드라이브에 또 한 번 박차를 가했다. 2019년 6월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특별계정은 기존에 국가신용도가 낮아 취급이 불가했던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 기준 B+ 이하 초고위험국사업

개발금융 도입 실적(2016)

추진단계	단계별 주요 실적
전담조직 구성 (1월)	• 사업개발부(인프라금융팀) - 개발금융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 임무 수행
제반법령 개정 (상반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개정(3월 시행) - 개발금융 운용에 따른 EDCF의 이차(利差)보전 근거 마련 •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5월)
후보사업 선정 (하반기)	• 대외경제장관회의(7월), 해외인프라 수주협의회(8월)를 통해 우선검토대상사업 8건 선정 (승인후보 2건, 검토대상 6건) * [후보사업 선정 시 고려요소] - 정책적 필요성, 우리기업 수주가능성, 리스크 대응조치

에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인프라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도 차주가 될 수 있고, 제3국의 우량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해당국 내에 소재하면 특별계정 이용이 가능했다. 계정 도입 첫째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나이지리아 LNG 액화플랜트 건설사업에 대한 3억 7,500만 달러 규모 금융지원을 최초로 승인하면서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

수은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 수출금융의 고도화, 개발금융 등 신규 금융지원 수단 개발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금융의 질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4. 중소·중견기업 지원 저변 확대 노력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특성은 소규모 거래 건이 많아 금융심사의 절대적 건수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수은 조직은 일반 상업은행에 비해 영업 및 심사 인프라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급증하는 지원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었다.

지원기업 저변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 이때 시중은행의 폭넓은 지점망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내부에서 제출됐고, 이는 ‘해외온렌딩’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주요 상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현장 적용은 2015년 9월 이후 이뤄졌다. 도입 첫째 수은은 5개 국내 시중은행과 해외온렌딩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597억 원의 지원실적을 거두며 제도 안착의 기반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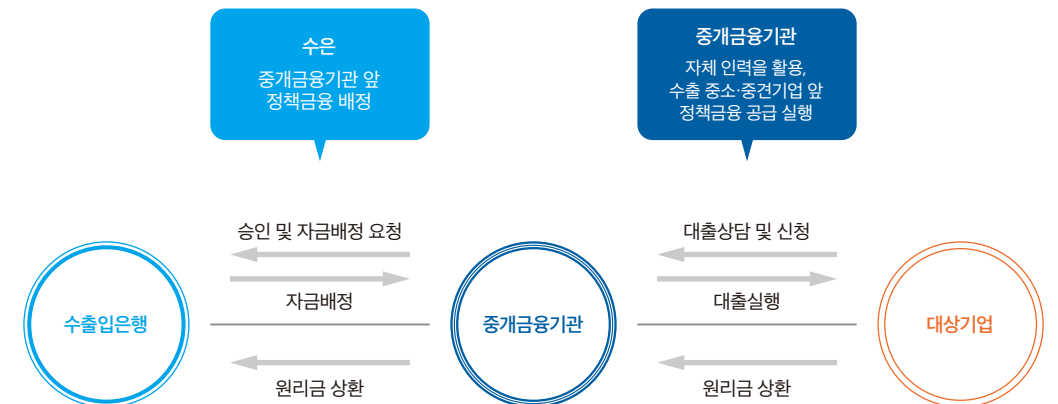
이후 지원 범위를 점차 넓히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16년에는 해외 현지은행으로 협력대상을 넓히고 중개금융기관과 온렌딩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중개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인하, 우대지원 적용 확대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 장치를 보강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지원기업 수가 3,057개까지 늘어났다. 이는 제도 도입 원년에 비해 40배 급증한 것으로, 해외온렌딩이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수단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방증하는 수치였다.

양적인 성과를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내실있는 실적을 기록했다. 중개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과, 2019년 혁신성장산업 영위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54개 사, 4,012억 원이 증가한 실적을 실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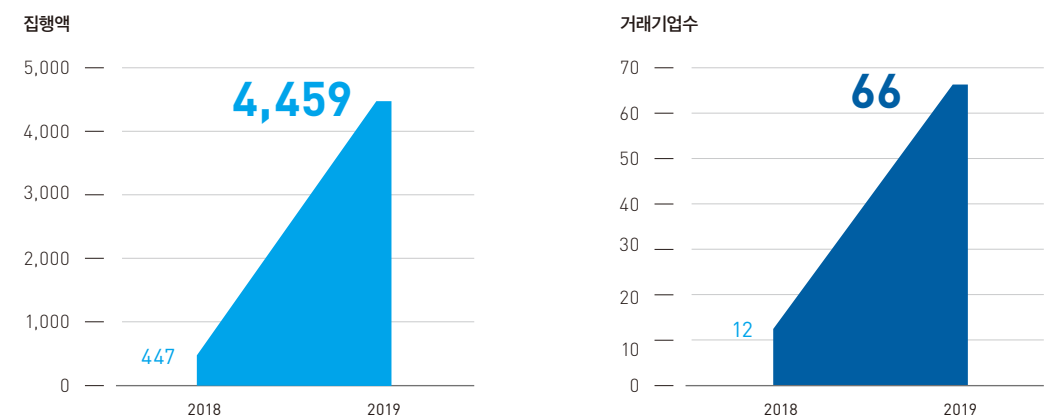
한편, 이 시기 외국은행에 대한 전대금융(현 간접대출) 방식의 금융지원도 더욱 활성화됐다. 해외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현지금융 접근성을 강화해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저변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해외온렌딩제도 지원 방식



혁신성장 중견기업 해외온렌딩 지원실적 변화(2018~2019)

단위: 억원, 개



2018년에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신용한도를 설정해 총 1조 9,000억 원을 지원했다.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등 국가의 11개 금융기관과 총 2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어 2019년에는 외연 확장에 집중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들과 공동 현지마케팅 행사를 실시하면서 고객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등 5개 국의 6개 은행이 신규 신용한도 설정 대상으로 합류했다.

이 시기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수단을 국내외에서 확장해 나가며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현지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신평방정책 등 이행에도 힘을 보탰다.

5. 대외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OECD DAC 가입과 EDCF의 위상 강화

OECD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를 논의하고 지원하는 OECD 산하 위원회로, OECD 가입국이라 해도 까다로운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그 일원이 될 수 있다. 가입이 어려운 만큼 그 소속이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위상 변화가 적지 않았다. 비로소 신흥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해, 2008년에는 OECD DAC 특별 동료평가를 받았고, OECD DAC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작업을 전개했다.

1년 만에 걸친 준비반 운영 끝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2009년 11월 25일 OECD DAC 가입 심사특별회의가 회원국 전원 합의로 대한민국을 24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했으며, 2010년 1월부터 공식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OECD 설립 이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였다. 따라서 OECD DAC 가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OECD DAC 가입은 EDCF 선진화의 촉진제로 작용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가입조건 준수를 위해 우리 정부는 ODA 예산 증액 속도를 높였고, EDCF 지원 규모 역시 빠르게 늘렸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개선도 급속도로 이뤄졌다.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민간 부문의 무역과 투자활동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영 방향성을 새로 정립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EDCF 중기지원계획(2010~2014)'을 세우고, 인프라 개발협력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갔다.

EDCF 수행기관인 수은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한국의 ODA 통계기관으로서 관련 통계 작성 및 제출, 관련 회의 참석 및 의제 검토, 통계 보고, 조회시스템 운영, 관리 등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OECD DAC 통계작성지침을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하고, 정확성 높은 통계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OECD DAC 통계자료의 질은 201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평가 최고등급을 달성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유·무상 통합추진체계 출범

OECD DAC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한 이상, 국제사회의 수준과 흐름에 맞춰 ODA 체계를 정비해야 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뼈대를 갖췄다. 주요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이를 위한 제반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와 상호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등이었다.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대외원

조 운영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2006년 설치된 국무총리 주재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대한민국 대외원조 총괄 기구로 격상시켰다.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ODA 집행기관 등의 참여를 전제로 ODA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확대했다.

유·무상 통합추진체계의 중심으로 거듭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후 국내 ODA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갔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1·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은 이 중장기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체계였다.

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수원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원조역량을 감안해 2015년과 2016년, 중점협력국별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작성하고, 시행기관별로 CPS에 부합하는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로써 OECD DAC의 유·무상 통합 CPS 수립 권고가 반영된, 맞춤형 ODA 시행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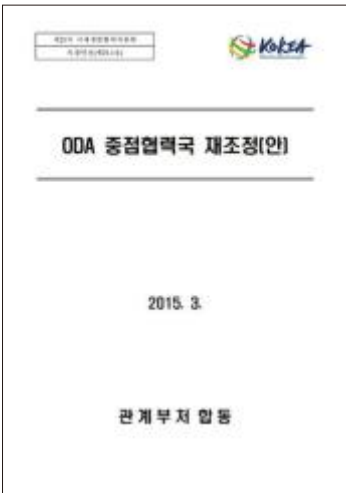
혁신적 금융협력 수단 도입 및 활용

다양한 글로벌 개발의제가 부상하며 기존의 한정된 대외원조 지원 방식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웠다. 더욱이 일부 수원국의 경우 과거의 정부 간 차관위주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적 개발환경의 변화와 개발재원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EDCF는 혁신적인 금융협력 수단을 꾸준히 개발하며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왔다.

2011년 6월에는 개발도상국의 정책과제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지원(Budget Support)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을 도입했다. 이는 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원국이 특정분야 개발을 위해 자국의 예산절차에 따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차관이다. EDCF는 2011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베트남 기후변화대응사업에 3차에 걸쳐 프로그램차관을 최초로 지원했다.

2013년에는 '협력사업 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낮은 국가신용도는 큰 걸림돌이 되곤 했다. 따라서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금 제공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EDCF가 자본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보완제로 기능함으로써 민간투자 및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편 EDCF는 PPP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민자사업차관에 대한 비구속



2015.03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



2012.10.09 제1회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



PPP사업 형태의 모범사례가 된 솔로몬군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성 금리를 인하했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PPP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2012년 베트남, 필리핀 등 협력대상국들과 '사회간접 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대내외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활성화 움직임에 힘입어 오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2014년에는 베트남 남딘 석탄화력발전사업의 부대시설로 진행되는 '틴롱교량 건설사업'에 최초로 PPP사업 지원을 승인했다.

2015년에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중에서, 민자사업 범인에 라오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출자지분을 민자사업 차관으로 지원했다. 또 2017년에는 WB,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ADB 등과 협력해 '솔로몬군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를 이끌어냈다. PPP사업 형태의 국제경쟁입찰에서, 혁신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주를 도왔다는 측면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모범적인 사례였다.

2014년에도 참신한 금융협력 수단을 도입했다. ODA 적격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범인에 제공하는 '민간협력차관'과 개발도상국 금융기관을 통해 민간협력차관 지원대상인 개발

프로젝트 원조와 프로그램 원조 비교

구분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지원 대상	개별사업	다수의 정책과제
지원 방식	구속성·비구속성	비구속성
자금 집행	사업자 앞 지급	예산지원(Budget Support)

도상국 범인을 지원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이 그것이었다. 제도 신설 2년 만인 2016년, '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에 최초로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지원했다. 이러한 선례 출현으로 인해 EDCF는 수원국 내 중소기업 육성, 남녀평등 수준 향상,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새로운 형태의 금융수단을 갖출 수 있었다.

개발금융 도입을 통한 신흥국 진출

더 이상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ODA 방식만으로는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민간 재원의 유입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주목한 정부는 개발금융의 도입 및 운용을 염두에 두고 2013년 11월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관련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그 결과 2016년 1월 EDPF 운용에 대한 EDCF의 손실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개발금융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개정 법령을 근거로 2017년에는 EDPF를 도입해 하위중소득국 대상의 구축성 지원 위주였던 EDCF와 달리 중·고소득국 대상 비구속성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ODA 규모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을 확보했다.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정착

EDCF는 2011년 9월,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성과평가지표 설정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후평가 대상사업 외에도 평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폭을 넓혔다. 또 국별, 분야별, 주제별로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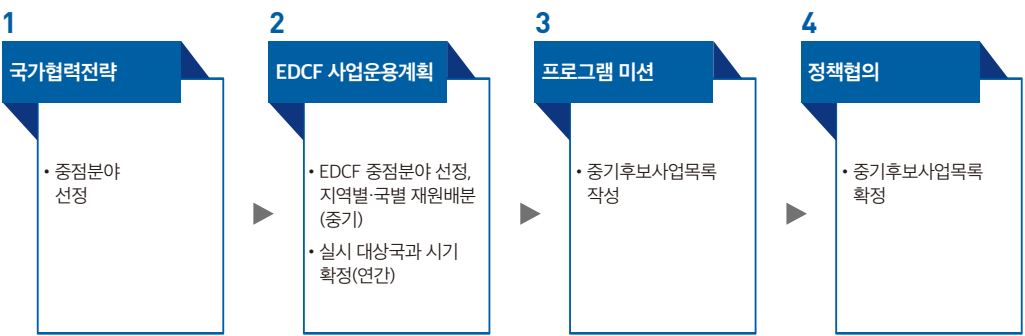
2016년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EDCF 사업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성과평가지표 설정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지표와 보건 관련 사업지표를 보완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흐름을 고려해 '전력·발전 분야 지표'를 신설했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분야별 젠더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EDCF는 사업승인에서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했다.

한편 EDCF 운용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사업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중기 관점으로 사업을 발굴 및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수은은 2013년 개발도상국의 경제상황과 개발계획, 국제개발기구와 타국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해 5년 내외의 중기비전을 제시한 '국별 프로그램(Country Programme)'을 도입했다.

이와 같은 중기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원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업발굴 작업의 지침서가 될 가이드라인도 정립했다. 'EDCF

국가별 프로그램 방식 사업발굴체계



분야별 모듈화 가이드’는 크게 중점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뉘어 있고 각각 교통·인프라, 에너지, IT·서비스, 지역개발 등 4개 분야 13개 섹터와 도로, 교량, 수자원개발, 건축 등 4개 섹터로 구성돼 있다.

지원효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 위한 협력 강화

제한된 예산이 사업 발굴 및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EDCF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예산과 정보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대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주요 MDB와 포괄적 협력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협업을 확대했다. 그 결과 ADB, IDB, AfDB, WB 등 10개 기관과 협업하며 지속적으로 협조용자를 지원했고 특히 2015년 3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제56차 IDB 연차총회 자리를 빌려 해당기관과 공동협력기금을 신설했다.

2006년 출범한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KOAFEC) 또한 중요한 대외경제협력 창구로 기능해 왔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번영의 길을 찾기 위해 구성된 이 회의는 200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EDCF는 한정된 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여러 ODA 기관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해왔다. 특히 1990년대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KOICA와는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효율적인 협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계 모델을 정립했다. 또 2015년에는 분야별 구체적인 협업 목표와 발전 과제를 담은 ‘협업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협력관계를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며 구체적인 협업사항을 확대해 나갔다.

EDCF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및 적용

사업개발 과정에서 환경·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된 고체폐기물 처리장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비자발적 주민이주 이슈가 발생했다. 도시 통근열차 사업에서도 비



2015.03.26 공동협력기금 신설의 기반이 된 제56차 IDB 연차총회



2008.10.28 제2회 KOAFEC 회의

자발적 주민이주 문제가 생겨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도 했다.

선진 ODA 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환경·사회영향 심사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EDCF는 2016년 2월, 환경·사회 영향심사 시스템인 ‘EDCF 세이프가드’ 제도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수원국 정부의 개발사업에 환경·사회관리 이니셔티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국별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EDCF는 기존의 신속한 사업 발굴과 승인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도, 선진 ODA 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환경·사회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지원 규모의 비약적 성장

2006년까지만 해도 4,000억 원 이하의 승인 규모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해, 이후 5년간 승인 실적이 기금 설립 이래 누적 지원금액의 약 57%를 차지할 정도였다.

또 과거에는 5,000만 달러 이하의 사업을 주로 지원했으나, 2010년에는 2억 달러 이상 대규모 사업의 승인도 이뤄졌다. 점점 대형화되어 가는 글로벌 인프라시장의 흐름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한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 결과 2017년 이후로는 매년 역대 최대 규모 기금지원 실적을 갱신했다. 2017년 승인 1조

EDCF 업무 실적(2007~2019)

단위: 건, 억원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승인건수	19	27	24	20	19	18	26	28
승인액	6,445	10,434	10,791	13,301	15,025	17,382	19,489	31,193
누적승인액	32,721	52,908	75,320	100,386	129,645	160,431	179,920	214,213

7,382억 원, 집행 7,487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승인 1조 9,489억 원, 집행 8,579억 원을 실현했다. 또 2019년에는 승인 3조 1,193억 원, 집행 1조 518억 원을 달성하며 정부의 ODA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6. 남북관계 정체기의 경험사업과 회복 노력

남북관계 경색과 마지막 불씨로서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2008년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북한 당국에 사과 및 공동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북한과 이견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후로도 서해 NLL 주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은 개성공단 지속 가동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이어나갔다. 북한 수해복구 지원 등 긴급구호활동은 계속 이뤄졌고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2008년에서 2014년까지 보건·의료, 어린이 영양개선,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총 1,488억 원이 지원됐다.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위한 지원

남북관계 경색기 동안 남북경협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에 노출됐다. 특히 2013년 4월 3일,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공단 내 입주기업들은 제품 납품,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에 당장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수은은 개성공단 TF를 편성하고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협력기금은 27개 사에 146억 원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조치했고, 105개 사를 대상으로 신규 특별대출 556억 원을 지원했다. 이후 남북, 양측 정부는 7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끝에 같은 해 8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며 9월 16일부터 생산을 재개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며 2016년 2월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수은은 정부 합동대책반에 참여하고 입주기업 지원 TF를 구성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5,625억 원의 신속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시행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남북 간 군사적 위기

2009.11	2010.03	2010.11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2019년 대북 거래기업 및 유관기관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지원실적	
개성공단기업	대출기간 연장·상환유예	385
	보험금 지급	8
	지원재단 운영경비	88
	합계	481
내륙·금강산 관광기업	대출기간 연장·상환유예	847
	투자·유동자산 피해지원	66
	합계	913

동북아 경제협력 시대의 최전선에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하류의 지대. 이곳은 그간 개발이 적 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다자 협력의 장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이러한 미래 성장성에 주목한 수은은 2016년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의 협력채널로서 동북아 수은협의체를 결성하고 초국경 경제협력사업 발굴에 나서게 된다. 결성 원년에는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본협약을 제정하고 시범사업 선정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7년 파일릿사업인 ‘러시아 자루비노항 곡물터미널 건설사업’의 MOU를 체결하며, 공동지원사업의 현실화 기반을 놓을 수 있었다.

한편, 수은은 2014년 4월, 정부의 통일 구상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과 동북아 지역 다자 개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북한개발연구센터(현 북한·동북아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설립 이후 학술적 연구뿐 아니라 현장의 업무 노하우가 반영된 차별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북한 및 동북아 개발을 위한 국내 핵심 싱크탱크로 자리잡았다. 매년 남북관계에 대한 책자와 시의성 있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개최, 자문활동, 간담회 개최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남북교류협력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기능했다. 이처럼 내실 있는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전개한 결과, 매년 국내 최고 권위로 평가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 KCI)급 외부 학술지에 연구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산출하며, 대한민국 주요 북한개발협력 분야 싱크탱크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2014.04.15 북한개발연구센터 개소식

남북협력 재개 기반 조성

2017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으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 올랐다.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 구상의 발표 이후,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비하는 대응체제 구축작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계기로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며 남북관계는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남북은 사회문화교류를 시작으로 남북 간 안정적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철도·도로 등 주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남북교류협력 재개 주요 일정(2018)

구분	사업 내용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2월)	• 女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통한 성공적 행사 개최 - 국제이미지 제고 및 남북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8월)	• 2년 10개월 만에 남측 89명, 북측 83명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 인도주의 확산 및 향후 인적교류 지속기반 조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9월)	• 남북 간 교섭·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편의 보장 등을 위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 남북 간 협의체널 상설화 및 신뢰회복에 기여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12월)	• 경의선·동해선 등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 실시 -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 조성

남북협력기금 집행액 증가 내역(2017~2018)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사회문화협력 지원	37	100
경제교류협력보험	1	96
이산가족교류 지원	7	51
인도적 지원	13	26
경협기반조성(무상)	600	1,818
경협기반조성(유상)	26	26
총계	684	2,117

또 2018년 5월에는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해 TF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종합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빙기의 무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684억 원에 불과하던 집행액이 2018년에는 2,117억 원까지 불어나며 전년 대비 21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제5장

뉴노멀
국제질서 대응을 위해
기능을 강화하다

2020
2026

제1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대응

제2절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경제안보 첨병으로

제3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의
새로운 미션 수행

제4절
수출금융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

제5절
수출금융을 넘어서

제1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대응

1. 신종감염병 급습과 위기 극복 노력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건 2020년 2월이었다. 종교단체 등에서의 사람 간 접촉 증가에서 시작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월 마지막 날 900명대를 넘어섰다. 한 번 불붙은 확산세를 잠재울 방법이 없었다. 3월에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적 대유행이 공식화됐고,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하게 유지되던 시민들의 평범한 삶은 일순간 정지되고 말았다. 항공편은 줄줄이 취소됐고, 국가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됐다. 되도록 집에 머물며 필요한 물품은 택배로 받아야 했고,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비중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미술관, 공연장 등은 잇달아 폐쇄됐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기며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은은 1차 대유행의 시작과 함께 즉시 경영기획본부장이 주재하는 ‘대외리스크 비상대응반’과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위기관리대책반’을 가동했다. 그러다 3월 들어 정부의 비상체제 전환에 대응해 2개 대책반을 통합하며, ‘비상경제 종합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이처럼 은행장이 직접 주재하는 종합적인 회의체를 1년 내내 가동하며, 대외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기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갔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시 영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체제를 유지했고, 컨설팅을 통해 이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갔다. 정교한 물적·인적 운영체계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영업연속성을 이어간 덕분에, 수은은 그해 국가기반체제 재난관리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며 파고가 더 높아진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그간 체계적인 감



2020.03.19 비상경제 종합 대책회의

염관리 역량을 보이던 수은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유행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전국 감염자 수가 1,000명 선을 돌파하던 시기였다. 또 겨울철로 접어들며 실내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환기가 어려워진 계절적 요소도 방역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철저한 사전 방역작업과 직원 개개인의 꼼꼼한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확진자 발생을 피해 가지 못했다.

다만 환자 발생 인지 뒤의 신속한 처리로 추가 감염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정부 보건당국의 확진자 발생 통보가 전해지자 위기상황대책본부 주도로 즉각 감염병 BCP를 가동했다. 밀접접촉자 29명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고 PCR 검사를 실시했다. 또 야간소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본점에 대한 완전 폐쇄조치를 단행했고 대부분의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 실시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최소한의 영업연속성은 유지해야 했다. 이에 '부서별 필수업무 처리방안'과 '임직원 근무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자금 이체와 IT 등 필수업무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장 근무를 지시했다.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초동대응과 대체사업장 가동, 필수인력 투입 등 미리 훈련된 프로세스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이 불안에 떨던 신종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서도 수은은 업무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할 수 있었다.

2. 수출 위기대응의 선두에서

코로나19의 흔적은 전 세계경제 상황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중국은 큰 폭으로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다.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미국의 경우 2020년 2분기에 들어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중국과 미국, 일본까지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던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3%를 기록했다. 또 이는 2분기에 더욱 악화되어, 1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수은은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 3월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같은 해 9월에 이를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위기대응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던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해 그들의 유동성 애로 해소와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각 기업을 분류하고 그 사정에 따라 지원 방법 및 정도를 달리함으로써 금융지원 효과를 제고했다. 그 결과 수은은 2020년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6.7조 원의 금융지원을 실행했다.

이 중 '중소 스피드업 대출'은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등급 평가만으로 중소기업에 우대지원을 제공한 상품이었다. 이와 같이 취약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입금융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신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은은 한시적으로 특별한도를 운용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어 2021년 5월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신용평가지침을 개선해 '미래 회복가능성'을 신용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이로써 수은은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과거와 같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그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기업 경영 및 자금조달 어려움 완화에 기여했다.

또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 극복 지원을 통해 다수 업체

2020년 2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전년 동기(2019년 2분기) 대비	전기(2020년 1분기) 대비 연율
한국	△3.0	△12.7
미국	△9.5	△32.9
중국	△3.2	△54.6

의 어려움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사에 배터리 보호회로를 납품하는 제조 중견기업인 아이티엠반도체에 대해 총 1,500만 달러의 베트남 공장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경 폐쇄와 달러화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던 고객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바이어의 주문이 취소되고 결국 잠정적으로 영업까지 중단해야 했던 영원무역에 대해서는 총 2,000만 달러의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이처럼 수은은 급격한 수출 감소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해 해외사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자금 기반을 제공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항공업·해운업·조선업·정유업 등 우리 주력산업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 2월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수은은 정부 방침에 대응해 항공산업 지원에 주력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나갔다. 항공기 구매자금뿐 아니라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 등을 수입자금으로 지원했다. 또 해외노선 유류비와 해외사무소 운영비 등 해외사업 운영자금을 신규 대출 지원했다.

그러나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자, 같은 해 4월 22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추가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통해 항공업과 해운업 등 기간산업의 안정을 위해 별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고, 기금 설치 전 긴급히 수요가 충족되어야 할 자금에 대해서는 수은과 산업은행이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 흐름 속에서 수은은 주요 기간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했다. 특히 항공업·해운업·에너지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출산업 생태계 보존에 크게 기여했다.

우선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5개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를 대상으로 긴급유동성 자금 1,577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2020년 5월 1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수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 내용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최대 1년 만기연장(기존 대출금액 유지)
신규 유동성 공급 (대출·보증)	피해기업에 수입선 다변화 자금 등 신규 운영자금 지원 시 대출금액 및 금리 우대, 금융보증 시 보증료를 우대
중소 스피드업 대출	외부 회계감사 대상 신규 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지원
긴급 경영자금 대출	코로나19 등 재난 및 재해, 경제위기, 경제 불황 시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피해액으로 간주해 자금 지원
수출성장자금대출	코로나19 피해, 혁신성장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대기업 앞 수출실적 기반 자금지원



2020.02.20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개최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설치 이후 제주항공의 최대 채권은행으로서 기금 의결절차에 참여해 적극적인 지원을 주도한 결과, 2020년 12월 저비용항공사 앞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첫 지원사례를 도출해냈다.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던 양대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도 적기에 긴급유동성 자금을 지원했다. 먼저 2019년만 해도 화물운송 기준 세계 6위 항공사로 부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채무불이행 위기에까지 직면했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며 2020년 말 기준 고용률 97%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시아나항공에도 4,800억 원의 긴급유동성 자금을 공급해 재무안정성 확보와 영업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그 결과 M&A 재추진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도약의 토대를 놓을 수 있었다.

세계적인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던 해운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기관들과 공동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장금상선 계열에는 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폴라리스취핑에는 1,050억 원의 선박금융을 제공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석탄화력 등 전통 발전분야에서의 실적 둔화와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부담으로 재무구조가 이미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 경색이 촉발되자 단기채 차환 경로가 막히며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수은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첫 지원사례가 된 제주항공



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자료

산업은행은 유력 종합 발전 기지재기업인 두산중공업의 부실이 국가 에너지 공급계획 추진을 비롯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2020년 3월과 5월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와의 논의를 진행한 끝에 지주회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직원들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을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했다. 이에 긴급경영자금으로 1조 5,000억 원을 신속 지원했다. 이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1조 7,000억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지발전 원천기술을 확보한 국내 유일 종합발전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긴급자금 수혈 이후로는 2단계로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구조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외부 컨설팅을 거쳐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미래형 사업구조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가스터빈·신재생에너지·수소·차세대 원자력발전 등을 4대 성장동력으로 삼는 구조 혁신 작업이었다.

이처럼 2단계에 걸친 구조조정 작업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두산그룹은 수은과 산업은행에 긴급경영자금을 요청한 지 23개월 만인 2022년 2월,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했다. 개별기업의 입장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모범적인 구조조정 사례였다. 첫째로 에너지 분야 대표기업의 긴박한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낸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뿐 아니라 미래형 사업구조로의 새 출발까지 견인해 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연계한 진정한 구조조정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수은은 이처럼 장기화돼 가는 경제위기 속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 차원의 재난피해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이 시기 수은은 2020년 57조 6,000억 원, 2021년 29조 5,000억 원의 코로나19 대응자금을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점진적인 국가 정상화 과정의 한 축으로 기능했다.

제2절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경제안보 침병으로

1.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안과 기회

코로나19가 불러온 유례없는 팬데믹은 전 세계 공장을 멈춰 세웠다. 때로는 돌발적으로, 때로는 간헐적으로 생산라인이 마비되자, 자연스레 공급망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반도체는 각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가 됐고, 주요 강대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커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경쟁이었다.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양국의 통상정책은, 외교·안보적 패권경쟁의 핵심도구로 활용됐다. 먼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하며 동맹국 위주로 반도체와 같은 핵심산업 공급망을 재편했다. 중국 또한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호주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했다. 이처럼 세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두 나라는, 상대 진영에 대한 경제적 강압조치를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등 국지전들이 연이어 발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공급망 분절’의 위험성은, ‘공급망의 진영화’로 전이되어 갔다.

숨 막히는 속도로 크고 작은 글로벌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더구나 각 이슈는 서로 연결되고 중첩되며 전 세계의 경제적 방향성에 대한 과거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마야호로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당장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 그리고 완제품의 전 세계 공급과 관련된 경제안보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희토류의 공급망 안정성이 쟁점이 됐다. 차량용 반도체, 요소수 등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제품이라도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면 평범한 시민의 일상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요소로 떠올랐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시장 논리에 따라 촘촘히 형성되어 왔던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이제 전 세계 공급망은 과거의 효율 중심에서 안정성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실현에 필수재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였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중추국(Pivot State)으로, 강대국들의 영향력 경쟁 속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혼란 속에서 위기와 기회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에 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외교적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특히 핵심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했고,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 경제안보 사수 위한 수은의 역할 확대

혼란스러운 세계질서 속에 빚어진 갑작스러운 공급망 분절은 우선 위기로 다가왔다. 2021년 발생한 요소수 품귀현상은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리했다. 2020년 봄 호주 총리는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 정상과의 통화에서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중국은 바로 관세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해 10월 들어서는 호주산 석탄 수입도 중단했다.

문제는 이후 중국의 석탄수급 상황이었다. 보복조치 당시 중국은 인도네시아 석탄으로의 대체 전략을 세웠지만, 기대와 달리 물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례적인 전력부족 현상으로 연결됐다. 이와 더불어 겨울 밀농사를 앞둔 시점에서 비료가격 안정화 필요성까지 제기되며 2021년 가을 중국은 요소 수출 중단조치를 전격 발표하게 됐다.

2021년 10월, 우리나라는 중국이 취한 요소수출 중단조치의 직격탄을 맞았다. 요소수가 물류의 중심인 화물트럭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품귀현상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물량 부족으로 평소 10리터당 1만 원 수준이던 요소수 가격이 10배 가까이 치솟았고, 그마저 구하지 못해 밀려드는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서울 시내 대형마트들은 정문에 '요소수 품질 안내문'을 붙일 정도였다.

현실의 위기는 일상 중단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 물류대란 위기는 청소차,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부문과 대중교통 중단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됐다. 요소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도 바닥을 보이면서 이듬해 밥상 물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요소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때 당겨진 불씨는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로 확대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은은 K-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을 목표로 2022년 첫 달부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역할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은행장

신년사를 통해 구체화된 수은의 적극적인 의지는 다음과 같았다.

“팬데믹과 미·중 갈등에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는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은은 K-공급망 구축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자재 확보, 글로벌 물류 인프라 재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의지 표명 이전부터 이미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 세계 3대 자원 트레이딩회사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트라피구라(Trafigura)에 우리 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광물자원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금융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세계 각국에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트레이딩사를 활용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하고 다양한 경로로부터의 자원 수급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큰 성과였다.

2022년 1월에는 원자재 확보, 수입 대체, 물류기반 확보,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등을 목표로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공급망금융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금융으로서 공적 기능을 크게 강화해 전방위적 지원체제를 신설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원년임에도 당초 목표액을 넘어선 총 21조 9,000억 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국내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2022년 12월 포스코인터내셔널, S&S INC와 ‘공급망 안정화 및 상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밸류체인 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 강화, 온라인 공급망 팩토링 프로그램 활용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2023년에도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어 갔다. 이에 수은은 같은 해 8월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을 큰 폭으로 개편했다. 우선 지원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지원 사각지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 기존 5대 지원분야를 수정해 12

싱가포르 트라피구라와의 광물자원 공급 조건부 금융지원 세부사항

구분	내용
개요	• 트라피구라에 우리 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광물자원 공급을 조건으로 1억 5,000만 달러 금융지원
조건	• 공급실적 미달 시 부족분 상당의 여신 조기회수 • 대출 1억 2,000만 달러, 보증 3,000만 달러
의의	• 연간 공급실적 의무를 부과해 대출기간 중 자원도입 안정화에 기여 - 실질적인 장기구매계약 확보 효과 •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던 광물자원 조달처 다변화 효과 •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한 다수 국내기업의 자원도입계약 확보 효과 실현



2022.12.13 공급망 안정화 및 상생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대 세부분야로 폭을 넓혔다. 또 기업들의 금융수요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향후 3년간의 지원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끝으로 핵심광물과 주요 식량자원에 대해서는 우대지원방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알루미늄, 구리 등 7대 핵심광물과 밀, 대두, 옥수수, 팥, 유 등 4대 식량자원의 수입 및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시 0.5%의 금리 인하와 0.3%의 우대보증료를 적용했다.

이 밖에 수은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해 관련 금융지원도 크게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249개 업종 중 특히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이차전지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첨단산업 핵심품목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했다. 그 결과 2020년 2조 9,000억 원에 머물던 지원실적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1%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 지원내역

단위: 억원, %

구분	지원목표	지원금액	달성률
원자재 확보, 해외자원개발 등	50,000	75,532	151
수입대체, R&D 및 M&A	10,000	18,236	182
물류기반 확충(선박 구매자금 등)	13,000	20,453	157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65,000	89,153	137
중소·중견기업 긴급유동성 공급	12,000	15,597	130
합계	150,000	218,971	146



2021.01.19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프로그램 협약식

상승한 5조 원까지 늘어났다.

또 2021년에는 한국성장금융, SK하이닉스, 산업은행 등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 원 규모 전용펀드를 조성했다. 펀드운용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시스템반도체분야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전후반공정에 집중투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정책펀드 참여를 통해 수은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미래선도 산업 육성에 일조할 수 있었다.

2022년에도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여신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특히 정부에서 조성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집중 지원하며 지역별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기여했다.

제3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의 새로운 미션 수행

1.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의 의미

2024년 9월 5일,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안보 차원의 위험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금 출범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다. 기금이 그 출발을 알리기까지 2년여 준비기간을 주도했던 수은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신설된 기금의 의미와 향후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그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설립한 특화 정책금융입니다. 공급망 밸류체인의 각 단계별 금융 수요에 대한 맞춤형 대출 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금 설립을 위한 첫걸음은 2022년에 시작됐다. 수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법제적 기반 마련 작업과 기금 신설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에는 입법발의가 이뤄졌고, 12월에는 국회 기재위 소위에 ‘수은 앞 공급망기금 설치’가 명시된 법안이 상정됐다. 입법발의를 기점으로 수은은 TF팀을 가동해 본격적으로 기금운용방안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2022년 10월에서 2023년 3월까지의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하며 촘촘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업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2023년 12월 26일, 1년여의 노력과 물밑작업이 결실로 돌아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2024.09.05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은 과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를 기재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이 컨트롤타워를 바탕으로 국가 및 국민의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의 공급망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이었다. 「공급망안정화법」은 구체적으로 경제안보 품목 지정 및 관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기반 마련 등의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담고 있었다.

다음 단계의 핵심과제는 기금 설립이었다. 수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정 직후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금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 인력을 확보했고, 이듬해 1월에는 1단 2팀으로 구성된 기금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새로 구성한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기금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체계적인 기금 운용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기금의 자금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해 2024년 2월, 제도 시행 원년 분으로 5조 원 규모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한도를 확보했다. 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체계를 완비했다.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그에 특화된 내부제도 수립과 내규제정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수은의 기존 상품과는 차별화된 금리체계와 승인절차, 그리고 리스크관리 방안을 갖춘 별도 상품라인을 갖추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수은은 2024년 연초부터 기금 맞춤형 IT시스템 구축, 주요 산업별·기업별 간담회와 면담 등을 통한 후보사업 발굴, 신설 기금에 대한 대외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기금 업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운용체계를 완비하고 2024년 9월 5일, 기금 출범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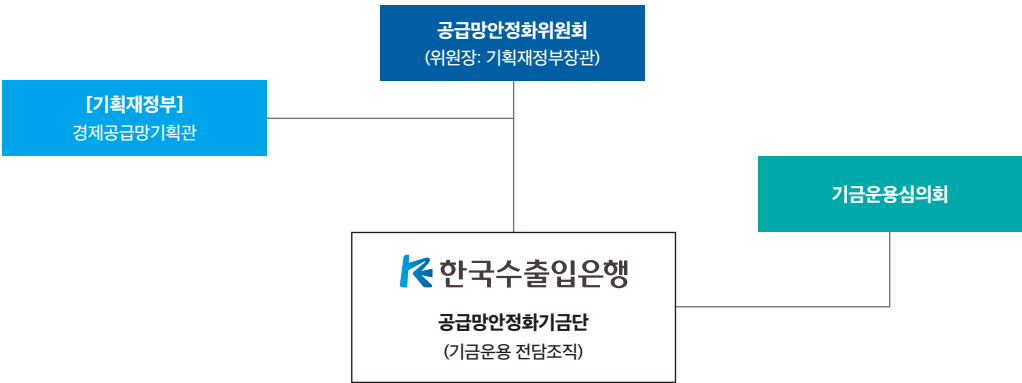
공급망안정화기금 설립 관련 제도 개선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공급망안정화법」 제정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2023.12.26)을 위한 제반 입법절차 대응 - 2023년 경과: 입법공청회(2월), 경제재정소위(4회, 2022.12~2023.08), 기재위 전체회의(8월), 법사위 본회의(12월) 등
「수은법」 개정	•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취급 근거 명확화 - 제18조(업무)에 ① 공급망 안정화 분야 금융지원 및 ②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취급 명시 등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설립 목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
기금 재원	•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기금채권 발행
기금 회계	• 수은의 일반회계(고유계정)와 구분
지원대상 분야	•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에서 정한 다음 각 분야 ① 경제안보품목 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②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투자 및 운영 ③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④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⑤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체계(2024)



다. 기재부장관, 국회 기재위원장, 기업 대표 등 내외빈 90여 명이 참석한 출범식 자리에서 수은은 기금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

2. 최초의 기금 지원성과와 재원 마련

기금 출범식 당일,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공급망안정화사업 지원에 특화된 부문별 기금 제도 및 내규를 제정했다. 2024년 9월 27일에는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4개 사업에 1,520억 원을 지원하며 첫 승인을 기록했다.

이후 기금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기금은 출범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총 92건의 사업에 대해 9조 2,448억 원의 지원을 승인했다. 특히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 필수재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승인사업 중 45건이 중소·중견기업 지원 건으로 대외여건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굵직한 지원 사례들도 잇달아 산출됐다. 우선 2024년 10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호주 리튬 광산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2,700억 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했다.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광산기업인 라이온타운(Liontown)으로부터 15년간 연평균 15만 톤 이상의 리튬정광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024년 12월에는 LS-L&F배터리솔루션이 전구체 생산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에 1,200억 원 규모의 기금지원을 승인했다. 이는 전북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연 생산 4만 톤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차전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핵심소재인 NCM 전구체의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했다.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기금은 2024년 12월 지원수단 다변화를 위해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망안정화펀드’ 조성도 승인했다. 기금과 수은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1조 원 규모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펀드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하고자 설계됐다. 2024년 12월 운용사(General Partner: GP)를 선정한 이래 현재 총 1조 8,337억 원 규모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24년 9월 첫 사업 승인 이후,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기금은 첫 원화표시 공급망안정화기금채 발행에 도전했다. 반응이 뜨거웠다. 당초 발행 목표액이 1,500억 원이었으나 총 4,400억 원 규모의 응찰을 기록했다. 예상을 웃도는 시장 반응에 유연하게 대응했다. 수은은 목표액을 즉각 상향 조정해 2024년 10월 4일 1,900억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원화채권을 최

공급망안정화 펀드 투자분야 및 지원대상

구분	내용
투자분야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수은의 합산 약정액의 1.5배 이상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투자
지원대상	① 소부장 영위 기업 ② 핵심전략기술 확인 기업 ③ 첨단전략산업 확인 기업 ④ 에너지·광물자원 영위 기업 ⑤ 해외 농업자원 전략품목 영위 기업 ⑥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초로 발행했다.

2026년 4월에는 글로벌 조달시장에서 5억 달러 규모로 최초의 기금 외화채권을 발행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금채권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기금의 정책적 중요성과 수은의 축적된 사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3. 기금 규모 확대와 새로운 가능성

통상환경을 좌우하는 글로벌 이슈들이 그치지 않고 줄을 잇고 있다. 2025년에는 새로운 미 정부의 출현과 함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또 한 번 급격히 확대됐다. 이러한 대외여건 속에서 기금은 외부연구 용역, 1차 선도사업자 선정기업 84개 사 사업계획 분석 등을 통해 정부의 채무 보증 필요 규모를 도출했다. 면밀한 산정 절차를 거쳐 2024년 대비 2배로 확대된 10조 원의 정부 채무보증 한도를 확보했다. 이로써 2025년 기금지원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기반을 구축했다.

2025년 2월에는 채무보증 규모 확대 및 정부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기금운용심의회 인정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수단 다각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금은 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산업 소재 기업들의 영업 기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 이에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2025년 3월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후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산업 영위 기업이 국내 소재업체로부터 원재료 구매 시 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25.11.19 중소·중견기업 초청 경제전망 세미나

2025년 7월에는 8개 공급망 핵심 분야 및 산업구조 개편분야에 대한 금리 및 한도 우대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타격이 큰 핵심분야 기업들에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시행하며 우리 기업의 사업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또 2025년 11월에는 저신용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공급 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로써 기금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급망 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다.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했다. 2025년 1월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공급망 관련 산업·품목별 연구 및 분석 역량을 강화했고 관련 정부정책 수립 지원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이 밖에도 신설 연구조직은 2025년 기금성과평가를 시행해 향후 기금 지원방향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더욱 고도화된 기금 지원전략 산출에 기여했다.

지원수단을 다각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대출 및 보증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거나 사업타당성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투자도 검토했다. 특히 2025년 7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핵심광물·에너지 펀드 조성, 공급망안정화 사업 앞 프로젝트 펀드 승인 등을 추진하며 다채로운 자금 수요에 대응했다.

그러나 기금 설립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했다. 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은의 기금 앞 출연 허용, 면책조항 도입 등을

위한 「수은법」과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이 필요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기금은 더욱 견고한 업무수행의 토대를 갖추게 됐다. 기금은 지원제도 개선에도 집중해 대출 및 투자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도록 내규를 개정함으로써 시장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은 2026년 10조 원의 국가채무보증한도 이내에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 확보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기능 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지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향후 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유동적인 대외 환경 속에서 경제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제 4 절

수출금융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

1. 「수은법」 개정을 통한 수출지원과 투자제약 장벽 해소

수은의 법정자본금 규모는 2014년 이래 15조 원으로 고정돼 있어 수은의 큰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간 수출경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된 상황에서 이는 수은의 금융지원 여력에 대한 의구심과 직결됐다.

2023년 폴란드와의 1차 방산 수출계약에 대한 수은의 50억 달러 규모 수출금융 지원으로 법정자본금 한도가 소진되면서, 이후 동국과의 2차 방산 수출계약 체결과정에서 국내 방산업계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당시 폴란드는 방산물자를 수입하면서 수출국에 대규모의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요구하던 터라 수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투자 제약 해소 관련 「수은법」 개정(2014)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업무 분류	• 주 업무(「수은법」 제18조) 외의 업무로 별도 반영	• 본 업무화(「수은법」 제18조)
투자대상	• [법인앞 투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	• 전과 같음
	• [펀드 투자]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펀드	• 투자분야 제한 폐지
「펀드투자 근거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전과 같음
투자한도(시행령)	• 투자대상 주식 또는 펀드의 15% 범위 내	• [법인앞 투자] 전과 같음 • [펀드 투자] 15% → 25%
승인절차	• 건별 기재부장관 승인	• [법인앞 투자] 연간 총량 기재부장관 승인 • [펀드 투자] 전과 같음



2023.07.17 한국무역보험공사, 폴란드개발은행과의 3자간 업무협약 체결식

맞춤 처방전이 필요했고, 이는 결국 10년 만의 수은 법정자본금 증액 성과로 이어졌다. 2024년 3월 19일 개정된 「수은법」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10조 원이 늘어난 25조 원으로 규정했다. 수은은 법정자본금 확대를 기반으로 폴란드에 맞춤형 금융을 제안해 글로벌 수주전을 총력 지원했다.

한편, 수은의 또 다른 오랜 숙원은 대출 및 보증을 넘어선 새로운 정책금융 수단으로 투자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투자 업무는 수은이 공들여 발전시키고자 한 분야였으나, 「수은법」상 제약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간접투자 위주로만 운영되던 측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선 수은의 정책금융 역할 확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 업무 또한 영역 확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직접투자 목표액을 2024년 1,500억 원에서 2025년 1조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은 투자 업무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던 「수은법」 개정 이 실현됐다. 개정을 통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직접투자가 가능해졌고, 간접투자 대상도 확대됐다. 이로써 수은은 투자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투자 업무를 제3의 정책금융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은은 1986년 「수은법」에 지분출자 근거를 마련한 이래 꾸준히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2005년에는 해외사업 입찰 시 발주처의 ECA 지분참여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 및 보증과의 연계를 조건으로 지분투자 업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2013년 8월 대외경제장

관회의를 거쳐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그 후속조치로 「수은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투자 업무의 범위와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과거에만 해도 지분투자 승인 시 기재부 장관에게 건별 승인받던 것을 연간 총량 승인 방식으로 변경했고, 펀드투자 대상도 기존에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로 제한돼 있던 것을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처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도 수은은 다른 정책금융기관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다. 핵심적인 문제는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었다.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의 경우 대출에 선행해 투자자 모집과 구성이 완료된 이후 대출을 추진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수은이 「수은법」에 따라 대출과 함께 직접투자를 추진하려 할 때는 투자 참여의 기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음에도 사업 초기 개발비·인건비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 특성상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받기 어려운 기업이 많아 여신과 연계가 전제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년간 수은의 직접투자 건수는 12건, 금액은 총 604억 원에 불과했다.

간접투자로 선회하려 해도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문제였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는 통상적으로 이미 성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수은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초기 기업투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 출범한 새로운 정부가 첨단 및 벤처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천명하면서 「수은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조성됐다.

이에 2025년 12월 23일, 「수은법」 개정을 통해 투자 업무에 대한 제약사항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우선 대출이나 보증 등 여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에만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수은은 이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간접투자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기존 PEF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투자대상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은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민간 벤처캐피탈 등에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025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수은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수은 경영의 새로운 전기가 펼쳐졌다. 수은은 이제 과거의 대출·보증 중심 정책금융기관에서 벗어나, 첨단전략산업에 직접 자본을 제공하는 선진적인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2. 첨단전략산업 육성 핵심기관으로 부상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은 전통적인 무역 분야를 넘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으로 확산됐다. 미국은 2021년 최우선 전략 목표를 급속하게 성장 중이던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견제로 두고,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집중 검토를 행정명령 형태로 공표했다. 중국도 자국 반도체기업들에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첨단산업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글로벌 수준의 분절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국내에서도 고조되어 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2년 2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라 당장 국무총리 산하에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설치됐다. 이러한 기반조작을 바탕으로 2023년 5월에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 계획안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를 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며 2027년까지 5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투자 이행방안을 담고 있었다.

한편 수은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신설되기 전인 2021년 8월, 정부의 BIG3 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해 ‘글로벌 핵심 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때부터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배터리 등 4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분류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핵심 전략산업 크레딧라인제도를 신설하며,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여신 제공 노력을 기울였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펀드 조성에도 앞장섰다. 2022년 5월 선정절차를 거쳐 PEF 3곳을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약 1,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며 민간 재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또 2025년에는 새로운 미 정부의 출현과 함께 관세정책 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규모를 늘려 2,000억 원을 출자했다. 첨단전략산업을 넘어 친환경·저탄소분야에 대한 투자의무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25년 5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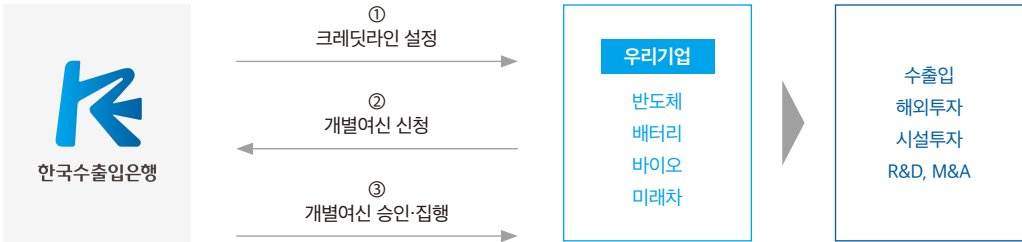
2023년 6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전략산업분야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산업군이 추가된 ‘첨단 전기·전자’부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도 기존 48개에서 69개까지 확대됐다.

분야별로 눈에 띄는 지원성과가 산출되기 시작했다. 우선 반도체분야에서는 미래성장성과 사업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주안점을 뒀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원자재 확보 측면에서도 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 개요

구분	내용
비전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
4대 분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4대 목표	①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③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④ 산업계 필요인력 적기 육성

핵심전략산업 크레딧라인 구조도



시적인 지원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2월에는 LG이노텍의 시스템반도체 부품 생산시설 증설사업에 1,00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4월에는 SK실트론의 실리콘 카바이드(Silicon Carbide: SiC) 반도체 웨이퍼 양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현지법인에 1억 달러를 지원했다. 또 2024년 6월에는 SK하이닉스의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4,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차전지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시설투자사업에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3년 2월 삼성SDI의 헝가리 배터리셀 2공장 건설사업에 1억 4,800만 유로를 지원했다. 2024년에는 미국시장 진출 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상품을 설계해 제공하기도 했다. 삼성SDI가 미국 현지에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하려 할 때 미국 에너지부의 보조금 수령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착공시점과의 시차로 인해 금융 수급에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발생하자 수은은 미국 보조금과 연계한 Step-up 금리 대출상품을 고안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동 사업에 총 2조 9,0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했다.

미래차분야에서는 주력시장 국가들의 리쇼어링(Re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정책을 주시하며 현지 생산거점 확충을 위한 지원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23년 6월과 2024년 2월, LG마그나의 멕시코 신설 법인과 헝가리 신설 법인에 각각 3,0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의 금융을 지원했다. 또 2025년 6월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미국공장 증설자금으로 6억 달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실적(2023~2024)

단위 : 조원

구분	2023	2024
반도체	2.1	2.4
이차전지	2.8	2.9
미래차	1.0	1.4
바이오	1.1	1.2
첨단 전기·전자	1.2	1.3
합계	8.2	9.2
지원기업 수	324	348

러의 금융을 지원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기술개발부터 시설투자, 원료 확보 및 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주기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대표 지원사례로는 2025년 11월 셀트리온의 미국 바이오 의약품 생산설비 인수자금(3,500억 원) 지원이 있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내 생산 및 판매체계를 일괄 구축함으로써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첨단 전기·전자분야에서는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2022년 이후 관련 산업에 대한 생산기반 확충과 R&D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먼저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의 2022년 베트남 생산법인 증설 사업에 5억 달러, 2023년에는 국내 생산시설 증설사업에 2,000억 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LG이노텍의 중점사업분야인 카메라모듈 등 광학솔루션부문 생산시설 투자에 1,000억 원을 지원했다. R&D와 관련해서는 특히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총 2,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2023년에는 HD현대로보틱스가 개발한 지능형 산업 로봇 및 서비스로봇의 해외판매 촉진을 위한 자금(380억 원)을 지원해 차세대 시장선점에 기여하기도 했다.

3. 글로벌 인프라·플랜트시장 최전선에서 활약

이 시기에 들어 해외 대규모 인프라·플랜트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수주 초기단계부터 정부, 기업,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Team Korea’ 단위의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금융지원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개도국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 부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데다 선진국 간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됐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의 형태 또한 지분투자, 건설, 운영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부가가치 창출을 요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늘어났다. 이러한 수주환경 변화에 대응하

고자 수은은 수주활동 초기부터 사업주 참여 주선, 여신의향서 발급, PF금융 제공 등 프로젝트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Team Korea’ 단위의 해외 인프라 수주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미국 괌 우쿠두(Ukudu) 가스복합발전사업(3억 2,600만 달러), 노르웨이 소트라(Sotra) 고속도로 PPP사업(3억 100만 달러), UAE 해저 초고압송전망사업(12억 100만 달러), 칠레 소규모 분산형(PMGD) 태양광발전사업(3,000만 달러), 사우디 자푸라(Jafurah) 열병합발전사업(2,700만 달러) 등에 PF금융을 지원했다. 이중 미국 괌 우쿠두(Ukudu) 가스복합발전사업은 복수의 우리 기업이 단독 수행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수행 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또 사우디 자푸라(Jafurah)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동 사업 수주를 통해 우리 기업의 역내 후속사업 수주 기반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트랙 레코드를 축적했다 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특히 친환경·탄소중립분야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2023년에는 오만 마나(Manah) 1 태양광발전사업에 1억 9,000만 달러 규모의 PF금융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서부발전이 동 사업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공동사업주와 추가 공동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2024년에는 카타르 Facility E 담수·발전사업에 대해 11억 달러 규모의 PF금융을 지원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은의 사업주 참여 주선, 선제적 금융지원 의사 표명 등 전방위적 지원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2024년 3월 「수은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이 확대되자 그 해 7월 초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지원을 위한 더욱 전폭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향후 5년간 인프라, 원전, 방산 등 분야에 대한 85조 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초대형 수주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다. 금융지원 확대, 금리경쟁력 강화, 무역보험공사 등과의 공동지원 플랫폼 구축, 발주처와의 금융협력 강화, 대외채무보증 활용 강화 등으로 구성된 특별 프로그램의 출범을 통해 초대형 사업 수주

주요 투자개발형 사업(2022~2025)

사업명	사업주	EPC(설계·조달·시공)	O&M(운영·유지관리)
UAE 해저 초고압송전망	한국전력	삼성물산	한국전력
미국 괌 Ukudu 가스복합발전	한국전력, 동서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	한국전력, 동서발전
칠레 PMGD 태양광발전	남동발전, KIND, Spratt 펀드	한화큐셀	남동발전
사우디 Jafurah 열병합발전	남동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	한국전력, 한전KPS
노르웨이 Sotra 고속도로 PPP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	-
오만 Manah 태양광발전	서부발전, 프랑스 전력공사	-	서부발전
카타르 Facility E 담수발전	남동발전, KIND	삼성물산	남부발전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금융지원 확대	• 인프라·원전·방산 부문 향후 5년간(2024~2028) 85조 원 지원 * 2024년 중 14.5조원 금융지원(전년 대비+26.2%)
금리경쟁력 강화	• 대출금리 우대하고 전후방산업과 중소·중견 협력업체까지 지원 * [인프라] 최대 △0.5%p, [원전·방산] 최대 △1.2%p
공동지원 플랫폼 구축	• 수은-무보 분기별협의를 초대형사업 협조용자 협의체로 운영 • 공공금융기관 금융투자협의체를 정례화(반기별)
발주처 금융협력 강화	• 주요 발주처 F/A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 해외수주 견인 - 사우디 아람코(2023년 3월, 60억 달러), UAE ADNOC(2022년1월 50억 달러) 등 기체결 F/A에 대한 개별사업 발굴 및 지원 추진
대외채무보증 활용 강화	• 초대형사업에 대한 탄력적금융 제공을 위해 필요 시 대외채무보증 건별·총액제한 〔수은법〕시행령 제16조) 예외취급 적극 활용 * [건별제한] 수은 지원액 50% 미만 → 기재부·산업부 합의시 예외 [총액제한] 무보 보험액 50% 이내 → 공동지원, 무보 합의시 예외

지원을 위한 또 다른 구심점이 마련됐다. 글로벌 인프라·플랜트 수주성과 창출을 위해 그간 수은이 축적해 온 모든 노하우와 금융수단이 총망라됐고 ‘Team Korea’의 응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라는 점에서도 큰 기대를 모았다.

한편, 특별계정을 통한 금융지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춤했다가 2022년 탄자니아 철도차량 수출사업과 앙골라 소난골 원유운반선 수출사업에 각각 1억 5,200만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를 승인하며 재개됐다. 2023년 특별계정 지원사업의 활성화 흐름이 조성된 가운데 수출투자책임관회의,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재원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수은은 총 2,500억 원(정부 추가출자분 1,000억 원 및 수은 분담금 1,5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확대된 재원을 기반으로 같은 해 글로벌 석유화학그룹인 인도라마가 나이지리아에서 추진 중인 비료플랜트 건설사업에 대해 3,000만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IFC, AfDB, EIB, DEG, 인도 수은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이 대거 참여한 사업으로, 수은이 이들과 초고위험국 내 공동사업 발굴 경험을 축적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계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 특별계정에 출자된 정부예산은 원금 상환 시 국고로 환입됐으나, 2024년 원금 상환분과 취소분을 계정 재원으로 복원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특별계정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수은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해외건설 수주 300억 달러 돌파에 기여했다. 2025년 4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해외건설 60주년 기념 10대 프로젝트’에 수은이 금융지원한 사업이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건설 및 운영사업 포함 4건이나 선정되기도 했다.

4. 수은 디지털 혁신 열전

2018년 수립된 비전 2030의 두 번째 막이 열렸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은은 새로운 미래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관련 TF를 구성해 2020년 1월부터 1년간 운영하며 중기경영계획의 실행과제들을 도출해 나갔다. 이렇게 구성된 중기경영계획은 Export EXIM, Digital EXIM, ESG EXIM을 기본방향으로 수출 6,000억 달러 탈환, 디지털 혁신, ESG경영 확립을 목표로 했다.

이 중 ‘디지털 혁신’ 실현은 전 금융권에서 디지털 전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수은도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였다. 이에 수은은 대고객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기반 업무 방식 전환, 내부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를 세부과제로 정하고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달랐고, 비대면으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의 완비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에 수은은 2021년 5월, 우선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승인-약정-집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기업금융 업무의 전 프로세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년여에 걸친 구축작업을 끝내고 기업금융 전용 플랫폼이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4월이었다. 플랫폼의 오픈 이후 고객기업들이 대출 신청, 약정 체결,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절차 전반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해외온렌딩 상품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화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다. 2021년 8월 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입통계정보시스템과 수은 내부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수출입 실적 자동입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수은과 중개금융기관, 고객기업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이 플랫폼의 오픈과 함께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더 이상 금융중개기관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연평균 4,229건에 이르던 해외온렌딩 대출심사도 전면 전산화됨에 따라 수은 내부 직원들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

데이터 기반 업무 방식 전환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사업도 서둘러 착수했다. 시스템 설계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2021년 8월부터 착수해 내외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심사모형 개발용 머신러닝 솔루션 선정 등 기초적인 개발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구축사업에 착수해 2022년 11월 자동심사모형과 IT시스템에 대한 개발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현장 실무에 대한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뤄졌는데, 우선 1단계로 2023년 5월부터 중소·중견여신부점이 취급하는 대출 건 중 약 45%를 대상으로 기업 신용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동심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분석 담당자가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기존 통계정보시스템을 고



2021.06.09 고객 디지털 플랫폼 구축 착수 보고회

도화했다. 이처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인 덕분에 수은은 2023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나갔다. 우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의 적용업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도입 원년이었던 2021년에만 해도 자금세탁방지제도 고객확인, 활동성 경비 집행기준 부합여부 검증 등 18개의 업무에 RPA 기술을 적용하며 매달 326시간 정도의 업무시간 단축을 실현했다. 그러나 2022년에 이르러 11개 업무에 대해 RPA를 확대 적용하며 매달 총 776시간의 업무 단축효과를 실현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상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AI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해외투자신고(2종)·무역금융(4종) 등 담당자가 서류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업무에 적용해 문서분류 및 필기체 문자 인식의 정확성을 크게 제고했다. 2023년에는 AI 기술이 적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그 해 9월에는 PF 등 영문 금융계약서에 특화된 AI 번역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PF 계약서 문장을 업선해 사전학습을 수행한 덕분에, 수은은 월 평균 70회 이상 양질의 번역결과를 제공하는 우수한 번역시스템을 갖추고 여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2025년에는 숙원사업 중 하나이던 독립 IT센터 구축을 마무리했다. 2019년 용인시 소재 인재



2025.06.25 IT센터 개소식

개발원 내 건축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기공식을 개최하며 차세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데이터센터 신축사업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7월에는 IT 인프라 구축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설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AI 모니터링 시스템과 PaaS(Platform as a Service) 플랫폼을 도입해 운용 효율성 확보 및 선제적 장애 예방을 도모했다.

2025년 6월 25일, IT센터가 공식 개소했다. IT센터는 9,877㎡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전산동과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규모의 업무동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시대의 본격 개막을 대비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하며 지역사회와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 건물로 지어진 점도 고무적인 성과였다. IT센터는 전행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며 향후 50년의 디지털 미래를 열어갈 전진기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5. ESG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2021년 수립된 중기경영계획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ESG EXIM'을 표방한 수은은, 그해 국책은행으로는 최초로 ESG경영 로드맵을 마련했다. 'We Export Sustainable Growth'라는 비전을 세우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ESG경쟁력 강화 지원, 국가 탄소중립 목표달성 기여,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3대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7대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미래 경로를 그려 나갔다. 2030년까지 ESG여신 180조 원 공급, ESG채권 200억 달러 발행, 기관 탄소배출량 50%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한 만큼 세부과제 이행도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 이에 수은은 2021년 7월 ESG경영부를 신설하고 해당 조직을 중심으로 ESG경영을 내재화해갔다. 같은 해 9월에는 중장기 ESG 경영전략과 그 성과를 관리하고 감독할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11월 제1차 ESG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2022년에는 ESG위원회 산하에 사회공헌운영 위원회를 설치했고, 해외현지법인 ESG경영 확산을 위한 ESG경영협의체를 도입했다.

효과적인 ESG금융 지원을 위해 2021년 7월 'ESG 여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장 품목, 에너지 전환기업, ESG경영 실천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2021년 7개, 2022년 3개 등 단계적으로 도입을 완료했다. 체계적 실적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기업 규모 및 프로그램별 지원실적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2단계 '역량 강화기'에 진입한 2023년에는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더욱 세밀한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ESG여신·투자 및 채권발행 규모 확대, 기후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기관 ESG활동 이행·모니터링 등 ESG전략 내재화와 관리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2024년에는 2030년까지 친환경 여신 155조 원 이상, 사회적 여신 65조 원 이상, 탄소배출 37.4% 이상 등으로 ESG 정량목표를 확대했다.

2025년에는 2026년 3단계 통합 확산기 진입을 앞두고 최근 동향을 반영해 ESG경영 전략체계를 개편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포용적 사회를 선도하는 대외정책금융기관'을 미션으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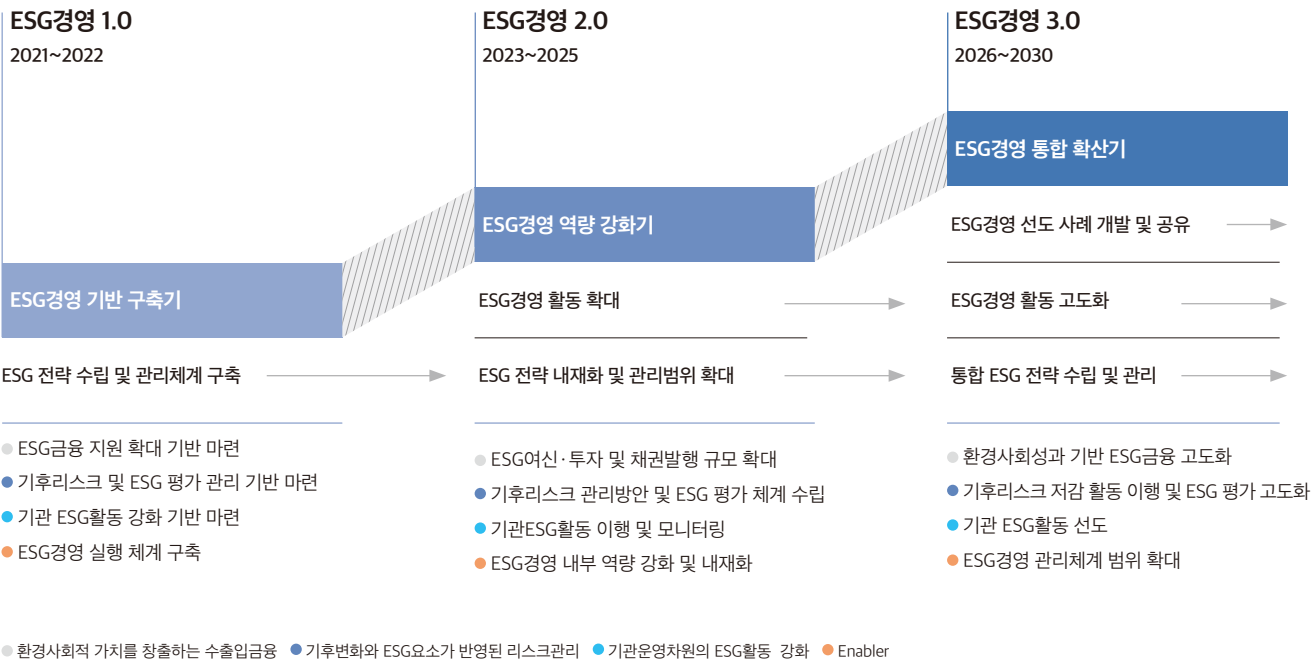
수은의 ESG경영 7대 기본원칙

- ❶ 우리는 ESG 금융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ESG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에 기여한다.
- ❷ 우리는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고려하여 기관을 운영한다.
- ❸ 우리는 경영 활동에 있어 발생 가능한 환경사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❹ 우리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와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ESG 원칙을 실천한다.
- ❺ 우리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으로 포용적 문화를 확산한다.
- ❻ 우리는 국제협약 및 정부정책에 연계하여 ESG 경영을 이행한다.
- ❼ 우리는 원칙 이행사항을 책임감 있게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한다.

ESG경영 전략체계



ESG경영 로드맵 단계별 목표



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수출금융 강화(Export),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Embrace),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영체계 강화(Execute)를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수은은 2023년 2월 정책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같은 해 5월에는 관련 내규를 제정하고 6월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마쳤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배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수은 스스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5월 G20 내 금융안정·기후변화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에 지지 선언을 하고, 2023년 5월 기후리스크 관련 정보를 최초로 공개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수은이 공급하는 여신에 따라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탄소회계금융협의체(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에 가입했다.



2021.11.24 제1차 ESG위원회 개최



2023.09.07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제5절

수출금융을 넘어서

1. 경제 강국 위상에 걸맞은 대외경제협력분야의 영향력 확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통한 개도국 피해 최소화

코로나19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ODA 추진전략을 수립해 신속히 발표했다. 지원부문 측면에서는 보건 및 의료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재원 측면에서는 우선 기존 프로그램 차관제도를 보강해 긴급대응 예산을 편성했다. 동시에 긴급재난대응 기자재차관과 섹터개발차관을 재난상황에 맞도록 운영함으로써 재난대응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 시기 긴급대응차관 패키지를 구성했던, EDCF의 핵심 지원수단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속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대출기간과 금리에 대한 조건은 상세히 마련함으로써 업무적용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EDCF는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만으로는 소화가 어려웠던 급박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수원국의 긴급 보건의료 물품 및 예산 수

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다. 특히 2020년 4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에티오피아의 사례는, 모범적인 지원성과였다. 통상 개발사업차관은 신청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EDCF는 수원국이 처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 의료 기자재 공급용 자금인 3,000만 달러의 기자재차관과 코로나19 비상대응계획 실행을 위한 긴급 대응 예산 지원용 자금인 4,000만 달러의 프로그램차관을 8개월 만에 집행했다. 이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극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한편 수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수립한 'Post-코로나 EDCF 운용전략'에 적극 부응해 2021년 EDCF 온라인 사업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우선 기존 업무의 비대면 처리를 위해 수원국에서 사업단계별 필요서류를 제출받았고, EDCF로부터는 원리금 회수기일, 상환 여부 등 사업 단계별 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이어 온라인 포털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거쳐 같은 해 8월 소요비용에 대한 기금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2022년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고 2023년 5월 개발을 마친 뒤 시스템을 오픈하며 수원국 앞 자금집행 및 회수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큰 대한민국에 걸맞은 개발협력 외연 확장 의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K-방역'을 전 세계인이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브랜드의 위상이 달라져 있었다. 높아진 위상만큼 국제사회의 기대는 커졌고, 이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또 다른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ODA의 청사진과 미래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높아진 국격에 맞춰 그 실현 목표를 올려 잡았다. 2030년까지 ODA 총규모를 2019년 대비 2배 확대하며, 세계 10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구상이었다.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전 세계인이 합의한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선두에 나서면서도, 우리의 정책목표도 함께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비전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고,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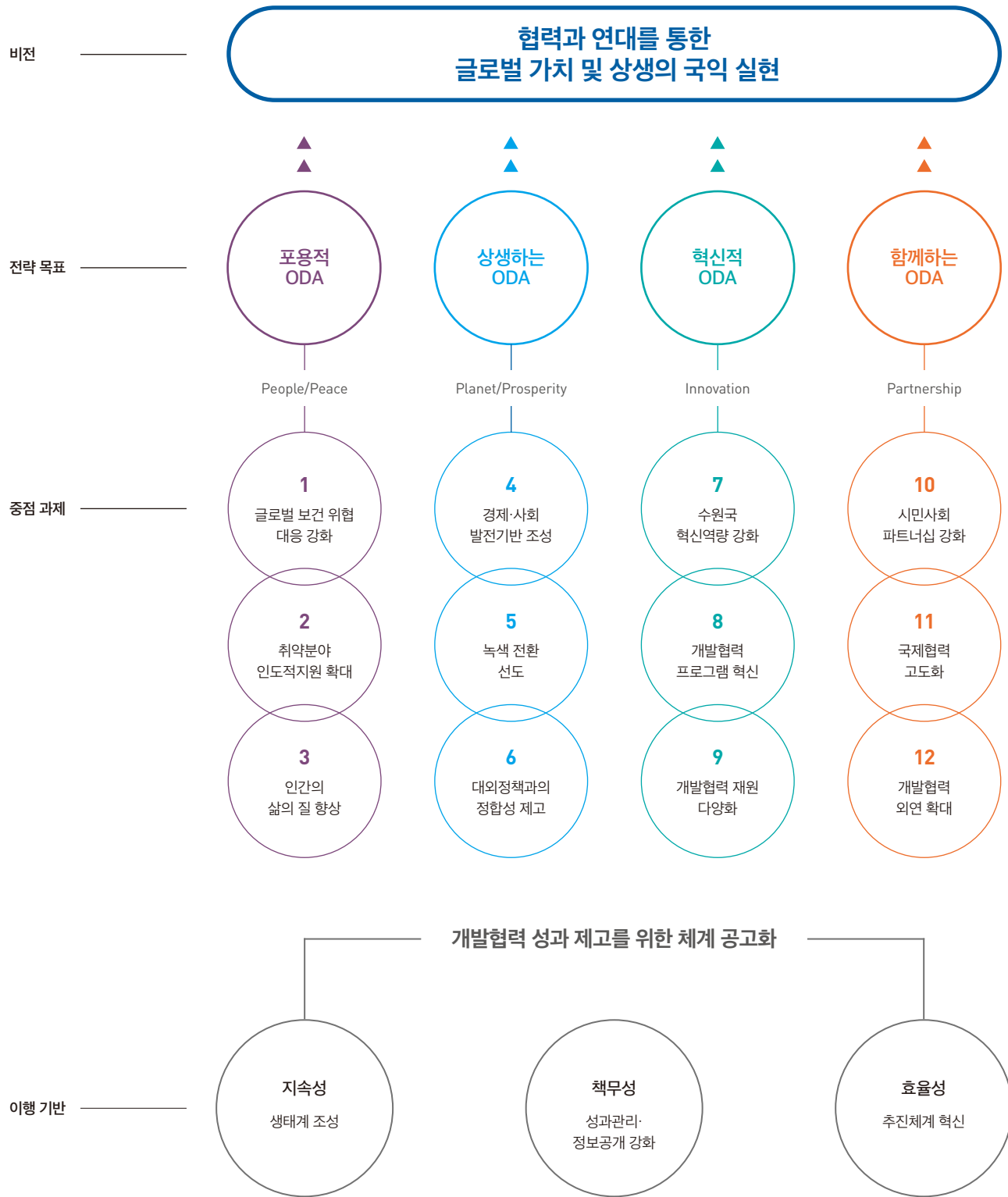
전략목표별로 분명한 발전 지향점을 제시했다. 우선 ‘포용적 ODA’ 구현을 위해서는 2020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며, 2022년까지 보건·의료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생하는 OD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녹색 전환 흐름의 선두에 나서려 했다. 특히 2021년 5월에 열릴 P4G 정상회의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면밀한 준비작업을 전개하며, 그린뉴딜 ODA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도 수립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던 ICT 기술과 ODA를 접목해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에 기여하게 될

코로나19 긴급대응차관 패키지 구성요소

구분	내용
프로그램차관	개도국의 중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차관
기자재차관	개도국의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자재(진단키트 등) 조달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섹터개발차관	천재지변, 전염병 등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한도를 설정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개념도



‘혁신적 ODA’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소셜벤처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갔다. 또 민간재원인 EDPF를 활용해 복합금융 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개발금융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 했다.

2021년 1월 마련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함께하는 ODA’도 실현하려 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우선 WHO, UNICEF, WFP, UNDP, UNHCR 등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창의적인 국제협력 방식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선제적 노력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로서 기능하던 과거의 역할을 넘어, 선진국 수준의 ODA 선도 국가로 거듭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개발금융 기능의 내재화 실현

ODA 외연 확장을 추구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수은은 EDCF와 수출금융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ODA 방식만으로는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 2017년 EDPF를 도입한 터였다. 이는 수은이 운용하는 금융의 범위가 개발금융까지 확장돼 개도국 개발 원조자금 공여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ODA 지원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2019년 8월 네팔 UT-1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5,000만 달러 EDPF 승인을 통해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 활용 ODA 프로젝트를 OECD에 보고한 이래, EDPF 지원성과는 꾸준히 창출됐다. 2021년 9월에는 이집트 룩소르-하이담 철도 현대화사업에 5,150만 유로의 EDPF를 승인하며 EDCF와의 연계 사례를 창출했다. 2022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건설사업에 2억 700만 달러 규모의 EDPF를 승인하며 EDCF와 EDPF, 그리고 수출금융(지원 예정)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한 복합금융 지원사례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개도국 진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다.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이 이미 전통적인 ODA의 테두리를 넘어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을 통한 금융지원 수단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을 활용해 자국기업에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ODA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개도국 등 특정 지역에서의 산업발전과 자국과의 경험증진효과가 예상되면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존 EDCF와 EDPF,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지원수단이 필요했다.

이에 수은은 실질적인 DFI로서 기능하기 위해 2023년 5월 ‘해외 민간투자 촉진 프로그램(PIPP)’을 도입했다. 이는 개도국 내 개발사업의 효과를 검토하는 프레임워크로, 개발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발을 위한 F/S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금융 및 투자를 우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었다.



네팔 UT-1 수력발전사업 조감도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사업 구축 구간

수은의 개발금융 기능 내재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2024년 10월에는 개도국민간투자자금대출 (Private-sector Development Investment Facility: PDIF)을 새롭게 도입했다. PDIF는 지원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여부나 ODA 요건 충족이 필수요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출금융, EDCF, EDPF와 확실한 차별점이 있었다. PDIF 도입을 통해 수은은 ‘비구속성, 비양허성, 비ODA’ 조건으로도 개도국 민간사업에 금융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 수 있었다.

PDIF의 도입을 위해 수은은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개발금융팀’을 신설하며 PDIF 운영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닦았다. 이후로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2024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시작으로, 9월 수은 이사회와 운영



인도네시아 상수도 공급시스템 금융지원 모델



2025.10.27 IDB Invest와의 3억 달러 규모 금융협력 MOU 체결식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10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기존 PIPP의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이를 ‘개도국 개발효과 검토기준’으로 확대 개편하며 내규화했다. 이로써 과거보다 정밀한 개발효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며 실무 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후 수은은 2025년 9월 이탈리아 CDP-SIMEST와 다자 MOU, 2025년 10월 IDB Invest와 양자 MOU 등을 맺고, 글로벌사우스 민간 부문에서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전환 등 양질의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다.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ODA 개발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EDCF는 2021년 지원조건을 전면 개편하며 수요자 맞춤형 제도로 탈바꿈했다. 구속성 원조금리의 인하, 비구속성 원조 금융조건의 다변화, 운용체계 정비 등 중심의 개편을 통해 EDCF 활용 증대를 위한 새로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2022년에는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던 국제 수주시장의 경쟁 양상을 고려해 우리 기업에 양허성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낙찰조건부 제도’를 큰 폭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OECD를 통해서만 경쟁국의 양허성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중국을 비롯해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양허성자금을 조건부로 국제 경쟁입찰에 참여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OECD 통지 외에도 개도국 정부 서한 등 관

련 자료를 통해 경쟁국의 양허성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처럼 경쟁국의 양허성자금 지원여부에 대한 확인 요건이 완화되자, 제도 개선의 효과가 드러났다. 2022년 4월, 이집트 정부가 요청한 우리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의향서 발급 건에 대해 수은은 불과 석 달 만에 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낙찰조건부 차관 지원 의향서를 발송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현대로템은 중국과 스페인의 유력한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22년에는 'EDCF 비구속성 지원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정부의 비구속성 원조 확대 요구에 충실히 대응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EDCF 사업 참여자격을 기존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은 데 있었다. 또 EDCF 비구속성 지원비중 확대 목표를 2025년까지 60%, 2030년까지 70% 이상으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비구속성 경제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은 또 한 번 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이 실행된 해였다. 우선 전반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사업승인부터 구매계약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더욱 촘촘한 사후관리와 평가를 위해 환류체계도 고도화했다. 먼저 사후지원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렸고, 기존 사업 수행기업과의 사후지원 직접계약도 허용했다. 또 무상 ODA 제공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최초로 공동평가를 실시하며 연계 평가의 기초를 쌓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필리핀 현지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업의 성과 제고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대외 파트너십 강화 및 유·무상 연계 활성화

2020년대에 들어 MDB와의 협력부문에서도 최초의 지원 사례들을 다수 산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긴급대응차관 중 42%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달러를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신속 지원했다. 또 2019년 설립된 ADB의 아세안 녹색금융 퍼실리티(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 ACGF)를 활용한 최초의 금융지원 성과도 창출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분야 개선사업에 프로그램차관 방식으로 6,0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승인함으로써 MDB와의 협업 저변을 또 한 번 확대했다.

2021년에는 높은 개발협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양자협력 기반으로 인해 지원 성과가 미미하던 중남미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지원성과를 창출했다.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I)을 통한 '국제개발금융기구차관'을 최초로 활용해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 5개 국에 지원했다. 이는 EDCF 최초의 전대금융 방식 차관 지원이란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깊었다.

2022년부터는 MDB와의 협조융자 플랫폼 한도금액을 매년 확대하며,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발굴과 협조융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먼저 기존 29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한도금액을 소폭 늘렸다. 한도 확대의 효과를 확인한 이후로는 조금 더 과감한 확대 움직임을 보



2021.05.27 CABI와의 EDCF 차관공여계약 체결식

였다. 2023년 42억 달러까지 한도금액을 확대하며 에너지 등 주요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총 4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승인 실적을 거뒀다. 이어 2024년에는 단일 MDB 협조융자 한도금액 중에선 역대 최대 규모로, IDB 협조융자 한도를 크게 늘렸다. 기존 9억 달러에서 19억 달러까지 한도를 늘리며 우리 기업의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던 중남미 진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가파르게 확대된 협조융자 한도를 기반으로 이 기간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잇달아 승인하며, 대한민국은 중남미시장에서 ODA 선도국가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이 시기 실효성 있는 유·무상 연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2022년 1월 기금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무상 융합모델 구축'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협업 성과 창출을 위한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이에 2023년 분야별·주제별로 정책 수립부터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사업화를 실현했다.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교량 건설 및 관리, 인근지역 개발 등 2개 파트로 구성된 해당 사업은 건설 단계별로 유·무상 기관 및 기업의 정책 역량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력이 촘촘히 배치된 연계 고도화의 모범사례였다.

2024년에는 EDCF 범부처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건의 후보사업을 발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배가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ODA 효과 제고정책이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 도출기에 진입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한국·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내용

구분	내용
개요	캄보디아 프놈펜의 대표적 랜드마크 교량에 대한 유·무상 융합 패키지 사업화
지원 규모	EDCF 2억 5,000만 달러
Part1 구성 (교량 건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KSP)+교량 건설(EDCF)+교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국토부)+교량 브랜드화 역량강화(부산시) +e-모빌리티사업(민간기업)
Part2 구성 (인근지역 개발)	칸달주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시내교통시스템 개선(국토부)+사회주택 개발(민간기업)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마련과 기후사업 전환 실현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의 중단을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OECD DAC은 탄소배출 저감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ODA 지원을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 속에서 수은은 그린 EDCF 사업 발굴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11월 24일,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 ‘그린 EDCF 선포식’을 계기로 수은은 OECD, ADB, GCF 등 주요 개발협력기관과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 전략을 공유하며, 글로벌 기후분야 협력을 공고화해 나갈 수 있었다.



2021.11.24 그린 EDCF 비전 선포식

또 이 해에는 EDCF 사업의 발굴·실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요소를 내재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는 모든 EDCF 사업을 기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중위험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경감방안을 구축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였다.

환경사회 심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한 것도 2021년이였다. 이해 1월 수은은 환경사회팀을 신설하며 심사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는 외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EDCF 환경사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함으로써 환경사회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 역량을 갖추 수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의 EDCF 사업에 대한 전면 적용 목표 시점은, 2025년으로 정해졌다. 이에 수은은 2022년 ‘일반사업의 기후사업화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며 3년에 걸친 확대 계획을 세웠다. 2023년 25%로 시작해 2024년에는 50%의 이행 목표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0% 기후사업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었다.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의 효과가 오래지 않아 드러났다. 2022년 사업타당성 조사 발주단계의 시범사업 3건에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정량적 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며, 본격적인 기후 위기대응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50%라는 기후사업화 적용 확대 목표를 달성한 2024년에는 온실가스 측정모델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질적 고도화를 실현했다. 이해에 들어 수은은 폐기물과 하수처리분야 측정모델을 신규 개발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분야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며 국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모델을 갖추 수 있었다.

2024년에는 MDB 협력 기반을 활용한 창의적인 기후변화대응 EDCF 금융지원 성과도 산출했다. ‘ADB 아태기후 혁신금융 퍼실리티(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2021.12.01 제1차 EDCF 환경사회자문회의

and the Pacific: IF-CAP)’를 활용해 ADB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대출사업에 EDCF 최초로 채무보증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여국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 여력을 확보한 ADB는, 보증액인 1억 달러의 4.5배 이상 자금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DCF 지원수단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기후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이는 새로운 기후변화대응분야 협력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역대 최대·최고 지원성과 행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 이 시기 대한민국 EDCF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 덕분에 기금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하며,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수 개도국들이 연이어 국경 문을 닫아진 상황에서도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의 승인 및 집행 실적을 달성했고 이러한 흐름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신종감염병 확산 여파가 지속되며 글로벌 경기가 침체됐던 2022년에도 EDCF는 대규모 복합 금융 지원 사례를 산출하며 3조 4,072억 원의 승인 실적을 기록했다. 또 한 번의 역대 최대 수치를 넘어선 기록이었다. 2년 연속 95% 이상 집행률을 달성한 것도 고무적인 성과였다. 이처럼 정부의 ODA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확실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인정받아 이해 11월에는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EDCF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3년에도 주요 수원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며 대규모 인프라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모습을



2022.11.25 2022 개발협력의 날 행사, EDCF 기여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보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9.8% 상승한 총 4조 813억 원의 금융지원 승인 실적과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조 3,961억 원의 집행 실적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초대형’ 사업 발굴에 더해 ‘고부가가치’사업 탐색에도 집중했다. 그 결과 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다. 승인실적은 역대 최대로 4조 3,975억 원 규모였고, 집행실적은 전년 대비 32.4% 증가한 1조 8,485억 원을 기록했다.

몸집만 키운 게 아니었다. 이 시기 지원사업의 체질도 크게 개선됐다. 개발효과성이 크게 향상된 초대형 인프라사업 발굴에 집중하며, 매년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지원을 실현했다. 2022년에는 ‘이집트 전동차 공급사업’에 4억 6,000만 달러의 EDCF 금융지원을 승인했다. 이처럼 파격적인 EDCF 지원에 힘입어 우리 기업은 스페인, 중국 등 경쟁한 경쟁국 업체들을 제치고 국가대항전 성격의 경쟁입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가장 유력한 수출대상국 중 하나인 이집트와 더욱 공고한 협력기반을 다졌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지원 성과였다.

2024년에 이르면 1억 달러 이상 사업의 비중과 건당 평균 승인액이 각각 83.7%와 1억 5,000만 달러에 달해 있었다. 이러한 사업 규모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 또 한 번 역대 최대 실적을 산출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동쪽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 1단계 사업’에, 총 9억 500만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승인한 것이다. 초대형 사업 발굴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한 지 얼마 안 되어 작성된 성과였기에 더욱 고무적이었다. 이와 같은 대형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지원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대한민국 EDCF는 이제 국제 수준에서도 주목받는 초대형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 수 있었다.



EDCF 지원을 통해 수주한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 1단계 사업 조감도

2020년대 EDCF 승인 실적 및 집행 실적 변화추이(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승인 실적	29,539	34,072	40,813	43,975	32,812
집행 실적	12,267	12,176	13,961	18,485	18,710

EDCF 대형사업 승인 실적(2021~2025)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형사업 비중	53.3	66.1	78.8	82.3	97.2
사업 한 건당 평균 승인액	76	118	129	146	566

2.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굳건한 토대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토대 마련과 남북협력 모멘텀 유지

정부는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실질적 교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12월 개정이 이뤄지고 2021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했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지방 분권형으로 확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역시 그에 맞춰 손을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수은은 2021년 9월 지자체 대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기준 명확화, 지원사업의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실행 추진을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상 보건·의료 협력 등 지자체 교류지원 예산 311억 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한편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까지 겹쳤다. 남북경협기업 입장에선 눈 위에 서리친 격이었다. 이에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채무 재조정, 보험·피해지원 추가약정 체결 등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피해기업들의 경영난이 계속되자 2022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지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4년 만에 총 425억 원의 자금을 신



2022.12.05 남북경협자문위원회

규 공급할 수 있었다. 수은은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22명 규모로 TF를 운영하며 478개 사를 대상으로 특별대출, 피해지원금, 운영관리 경비 등을 지원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 교류협력 채널이 경색되어 있던 기간에도 인도적·문화적 교류는 지속됐다. 특히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을 통한 북한 영유아 및 여성에 대한 식량 원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한 방역 협력 등은 계속 이어졌고 이산가족 교류 추진을 위한 지원도 중단 없이 이뤄졌다. 경제제재와 관련성이 없는 사회·문화 협력부분에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매년 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이 시행되며,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경협 재개에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은 매년 고정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다. 더해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한강하구 생태조사, DMZ 평화지대 조성사업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협력 준비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경제협력 로드맵 수립

2022년 새로 출범한 정부는 그해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다양한 경제지원책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들은 대규모 식량 지원 및 주요 인프라 구축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등 북한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한 공식적인 선언은 광복절 행사 자리를 빌려 이뤄졌으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던 대북정책 방향성이기도 했다. 이에 수은은 2022년 3월 ‘북한 비핵화 연계 중장기 남북경협 로드맵’을 수립하고 남북협력 재개에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마련했다. 이 로드맵은 3단계 협력 진전 프로세스를 뼈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제재 완화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1단계 ‘경협 준비기’에는, 지식협력을 통한 북의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국제금융기구 공동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비핵화 이행을 통한 대북제재의 공식 해제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2단계 ‘경협 재개기’에는, 남북협력기금과 국제금융기구 등의 자금을 활용한 공적원조의 재개를 꾀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방 진전과 민자 유입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조건으로 하는 3단계 ‘경협 활성화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자금 확보와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개발사업 전개 및 자생적 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편 수은의 북한개발연구센터는 비핵화 진전 시에 이행되어야 할 대북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북한개발연구센터는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지식공유사업,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통

북한 비핵화 진전 단계에 맞춘 남북한 경제협력 실행 로드맵

구분	1단계 경험 준비기	2단계 경험 재개기	3단계 경험 활성화기
선행조건	北 비핵화 진전에 따른 美 제재 완화	비핵화 이행을 통한 대북제재 공식 해제	北 개방 진전 및 민자 유입 기반 조성
협력수단	北 역량 개발, 국제금융기구 공동컨설팅 실시	IKCF 및 국제금융기구 등 글로벌 ODA 자금 활용	FDI 등을 통한 대규모 개발자금 확보, 신용보강 활용
재원조달	IKCF(무상),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등	IKCF(유상), 원조자금(양자·다자), 경험증진자금 등	민간금융, 국제금융기구 협조용자, 수은 정책자금 등
주요과제	경제협력 재개 대비 北 제도개선 및 역량 강화	北 개발 본격화 대비 필수 인프라 (전력·도로 등) 구축	개발 본격화로 민간투자자 유치 및 자생적 경제체제 구축

해 정부의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제안을 실시했다. 또 통일부와 기재부, 통일연구원 등에서 의뢰한 정책용역을 수행하며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상응하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처럼 다른 북한 연구기관과 달리 정책제언에 집중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남북 경험 재개에 대비한 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다.

대북정책 이행역량 확보 위한 제도 정비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 학생 86명이 “북한을 도와달라”며 기탁한 6만 5,310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꾸준히 기부가 이어져 2023년 7월 기준 총 89건, 약 28억 5,000만 원이 모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귀중한 돈의 쓰임에 의구심이 따르고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이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그해에 미사용된 금액은 이듬해 국고로 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니, 예를 들어 고령의 실향민이 북한의 고향에 학교를 세워달라며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해도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쓰이기가 어려웠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7월 민간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 법안이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작업이 완료됐다.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 등이 진행되며 제도 완결성이 갖춰졌다. 그 결과 2024년 11월 열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 기부금 2건이 1991년 기금 설립 이래 최초로 남북협력기금에 적립될 수 있었다. 이처럼 기탁자가 희망하는 용도로 기부금이 적립, 또는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민간 참여 촉진과 기금 재원조성 다변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 시기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작업도 활발히 이뤄졌다. 수은은 2023년 8월 무상지원사업 집행 프로세스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며, 사업종결 시에 전 단계에 걸쳐 그 진행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무상지



2024.11.18 한반도 미래전략을 위한 대북정책 세미나

원사업의 업무 개선점과 사업별 특이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무상사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 수 있었다.

2024년에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기금관리 매뉴얼을 정비했다. 그간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의 변화가 잇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기준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수은은 ‘남북협력기금 집행 및 정산 세부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이 개정과정에서 유엔, 미국 등에서 시행한 대북제재 관련 최신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함으로써 통일부와 수은, 그리고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본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식을 통일하고 기금사업 시 단계별 유의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해 수록했는데, 이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2024.01.09)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자본시장 업무기반 강화

2010년대에 들어 수은은 새로운 정책금융 영역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행내 공감대 결여와 법적 제약, 취약한 전문성 등의 한계를 드러내며 시동을 건 신사업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산출하지 못했다. 투자 업무의 경우 「수은법」의 제약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간접투자 위주로만 운영되며 여타 정책금융기관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금융주선 및 자문 업무의 경우 활성화 실패 후 업무가 유명무실화되기도 했다. 채권·외환파생 업무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는 했으나, 안정성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영된 데다 영업 인력도 부족해, 타 금융기관 대비 취급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영역 확대 모멘텀이 다시 마련됐다. 2023년 도출된 ‘수은 경쟁력 제고’ 컨설팅 결과, 그리고 2024년 7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의결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방안’ 이 두 문건의 산출을 계기로, 수은 정책금융의 역할 확대와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경로 설정이 화두로 부상하게 됐다.

더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작성한 ‘2025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통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직접투자 목표액을 2024년 1,500억 원에서 2025년 1조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책금융의 축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흐름이 선포해짐에 따라 수은은 개발금융 강화, 비여신사업 강화, 해외 네트워크 최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Beyond Core’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 전환을 꾀해 나갔다.

이에 과거부터 추진해 온 투자, 금융 주선, 채권·외환파생 등의 업무를 묶어 전담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실 자본시장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했던 점도 수은이 비여신분야 업무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은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는 가운데 ‘자금조달’을 자본시장 업무의 본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신중심의 조직구조 속에서 자본시장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다 보니, 이를 핵심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며 수은의 미래방향성 중 하나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했다.

따라서 핵심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던 ‘자본시장’에 행내 구성원들 간의 개념 통일이 필요했다. 이에 수은은 여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 민간금융시장과의 비교작업 등을 진행했고 그 끝에 자본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행 내에 공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자본시장 관련 업무의 경계를 채권자본시장(Debt Capital Market: DCM), 자기자본시장(Equity Capital Market: ECM), 펀드·지분투자, PE, 채권·외환파생(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 FICC) 등 은행권의 Front Office 업무로 규정했다.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한 뒤로는 본격적으로 조직 신설작업에 돌입했다. 투자와 주선, FICC 등 직접적인 자본시장 업무에 더해 기존 자금조달 조직과 글로벌 업무 지원 조직까지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은은 2025년 7월 ‘글로벌·자본시장본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본시장 업무를 하나로 모은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먼저 단일 본부장의 리더십 아래 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단·중기 발전전략의 수립과 즉각 이행이 가능했다. 또 본부 내 순환보직, 사내직원공모제(Job Posting) 등을 활용한 관련 전문성 축적과 경력개발 경로 확보가 가능해졌다. 끝으로 자금조달, 글로벌 업무 등 유관 업무가 하나의 본부 안으로 수렴됨에 따라 업무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자본시장 업무의 단기간 내 가파른 성장을 이끌 조직적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때마침 투자업무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던 「수은법」 개정이 2025년 12월 실현되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제한하던 제약 요소가 사라졌다. 이에 글로벌·자본시장본부는 정책우선분야, 투자개발형 사업 등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2030년 여신잔액 대비 투자잔액 비율을 2.5%까지 확대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또 가까운 미래에는 투자 업무 강화를 통해 확보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 GP)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활발한 역외펀드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을 견인하고 중후기 및 딥테크 기업에 대한 앵커투자자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투자 규모와 영역을 확장하며, 투자업무를 제3의 정책

금융시장 내 자본시장 분류

금융시장 분류		내용	은행권 업무
자금시장		1년 미만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상품 거래시장	CP, RP, CD 등 발행/중개/인수
협의 자본시장		1년 이상 장기자금 조달 및 장기자산 거래시장	DCM(채권 발행 주관·인수 등)
			ECM(IPO, pre-IPO 자문·주관·인수 등)
			펀드·지분투자, PE, M&A자문 등
광의 자본시장	외환시장	이종통화간 거래가 일어나는 금융시장	외환거래·환전, 해외송금, 외환헤지
	파생시장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시장	옵션·선물·스왑거래, 헤지 서비스 등
대출시장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	기업·개인대출 등

글로벌·자본시장본부 구성

구분	부서	담당업무	비고
자본시장업무	투자금융부	직간접 투자	해외 투자개발형 지분투자 포함
	국제투자실	채권·외환파생 운용	-
자금조달	자금부	자금조달·운용	자금시장단 명칭 변경
	자금결제부	자금결제	-
글로벌업무	글로벌사업개발부	금융주선, 해외조직 통합, 경제협력 지원	경제협력성과지원부 명칭 변경

금융 축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금융주선부문에서는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나눠 성장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 CF) 중심으로 주선 규모와 관련 네트워크를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법인을 활용해 PF 주선 업무를 강화해 나가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채권운용부문에서는 운용 규모를 2030년까지 외화 40억 달러, 원화 4조 원 수준까지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트레이딩 운용 규모도 유가증권 운용 규모의 10%까지 확대함으로써 눈에 띄는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익창출 기반 강화와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현실화하려 하고 있다.

외환·파생상품부문에서는 원자재 파생, 장기 선물환 등 민간금융의 사각지대를 찾아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외환시장 안전판으로 기능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 공기업 외화조달에 관련된 부채스왑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자체 고객기반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수은은 이와 같은 자본시장 업무의 분야별 과제를 2030년까지 완수해 내려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출·보증 이외 비여신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며, 다방면의 자체 수익기반을 갖춘 든든한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4. 수출 대한민국의 50년 동행,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

2026년,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반세기 세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 1976년 설립 이후 운영 초기에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부응해 선박과 플랜트 등 대규모 자본재 수출의 물꼬를 텄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EDCF와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며 경제외교와 민족화합의 기틀을 놓았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는 외화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며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원전, 방산, 문화콘텐츠,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대외 경제영토 확장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핵심자원 확보와 미래 전략기술 육성에 집중하며 경제안보 파수꾼 역할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난 50년 역사를 통해 우리 기업과 늘 함께하며 대외경제협력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해 온 수은은 이제 다음 50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한국수출입은행 앞에는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한 네 개의 전략축이 놓여 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금융지원, 생산적 금융지원 확대,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이 그것이다.

수은은 우선 제1 목표인 국가 차원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여신잔액을 16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산·조선·원전 등 전략산업부문에서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체계를 확대하고, 반도체·바이오·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진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핵심 기술 및 원자재 확보에 기여하고 생산기반 내재화를 주도해 나가려 한다.

생산적 금융의 지속적인 확대도 주요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2025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직·간접 투자가 전면 허용된 만큼, 2028년까지 3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 건을 발굴해 총 15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AI 등 첨단산업분야와 해외개발형 사업 분야로 투자영역을 넓히며,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11조 원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더해 비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2026~2028 전략목표 및 중기경영지표

3대 발전방향	전략목표	중기경영지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여신잔액(외화 및 원화) • 중소·중견기업 집행금액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선도 성장지원 강화	• 첨단전략산업 여신잔액 • 첨단전략산업 투자잔액
	국제 통상질서 재편 대응 지원 강화	• 대미 투자 관련 여신 집행금액 • 공급망안정화기금 승인 건수 및 금액
	• Core Business Evolution (핵심사업의 고도화)	• EDCF 중점분야 승인금액 • EDCF 투명성·책임성 강화 •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 및 평화경제 이행 역할 활성화
	• Beyond Core (신사업의 전략적 확장)	• PDIF 승인 건수 및 금액 • 개발금융 전담 추진체계 구축
	• Embedding Strategic Capability (전략실행 역량의 내재화)	• 투자 승인 금액 및 잔액 비중 • 직접투자 승인건수 • 투자업무 성장기반 구축 및 역할 확대 • 금융주선 건수 • 외화채권 운용 잔액
	자본시장업무 성장기반 구축 및 영역 확대	• BIS 자기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지속가능경영 기반 확보	• ESG경영 성과관리체계 도입
	AI 전환 가속화를 통한 전략 실행력 강화	• 생성형 AI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통한 디지털 전환 이행

수은은 또 2025년 8월부터 진행된 정비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ESG경영 로드맵을 바탕으로 기후대응 및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려 한다. 우선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동시에 ODA·EDCF 운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한층 높인다. 심사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함으로써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 전환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KEXIM AI' 플랫폼을 구축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AI 거버넌스와 보안 인프라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포부가 아무리 커도 현실의 한 걸음이 중요한 법이다. 비전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그 한 걸음을 위해 수은은 이미 기존 중기경영계획을 전면 개편하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نس 및 경영관리수단으로서 '중기경영지표'를 신설했다. 이와 같은 정밀한 중기 성과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3개년 목표치의 달성도를 상시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체계적인 환류시스템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은이 구상하고 있는 원대한 꿈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한다.

다가올 50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또 현장에서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최적화된 금융솔루션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50주년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은 이처럼 신뢰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며, 더욱 친근하고 든든한 동반자로 우리 기업 곁에 다가가려 한다. 더하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획자로 거듭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 구성원들의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수은은 전통적인 수출금융의 테두리를 넘어, 글로벌 정책금융의 미래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Korea Exim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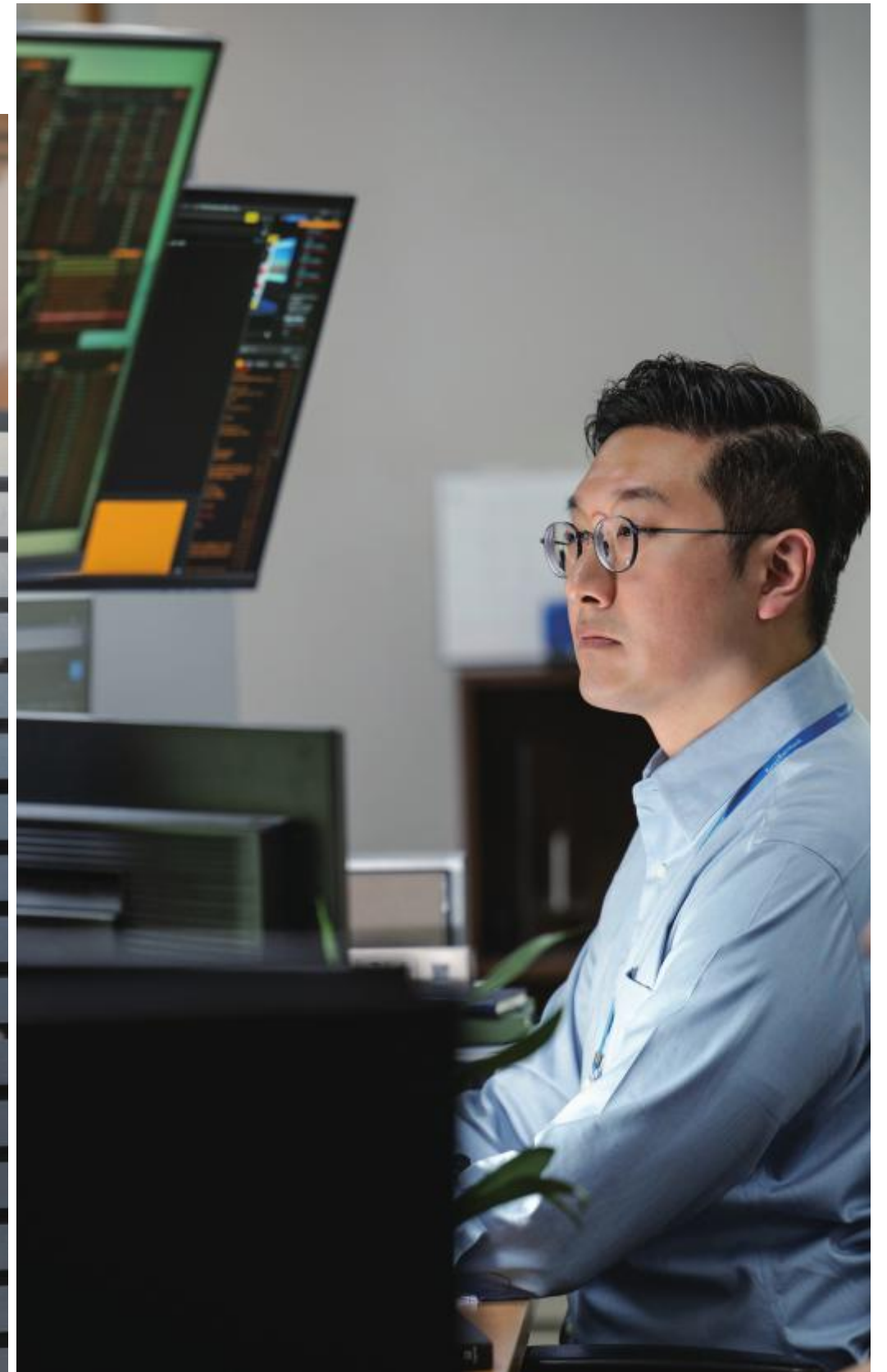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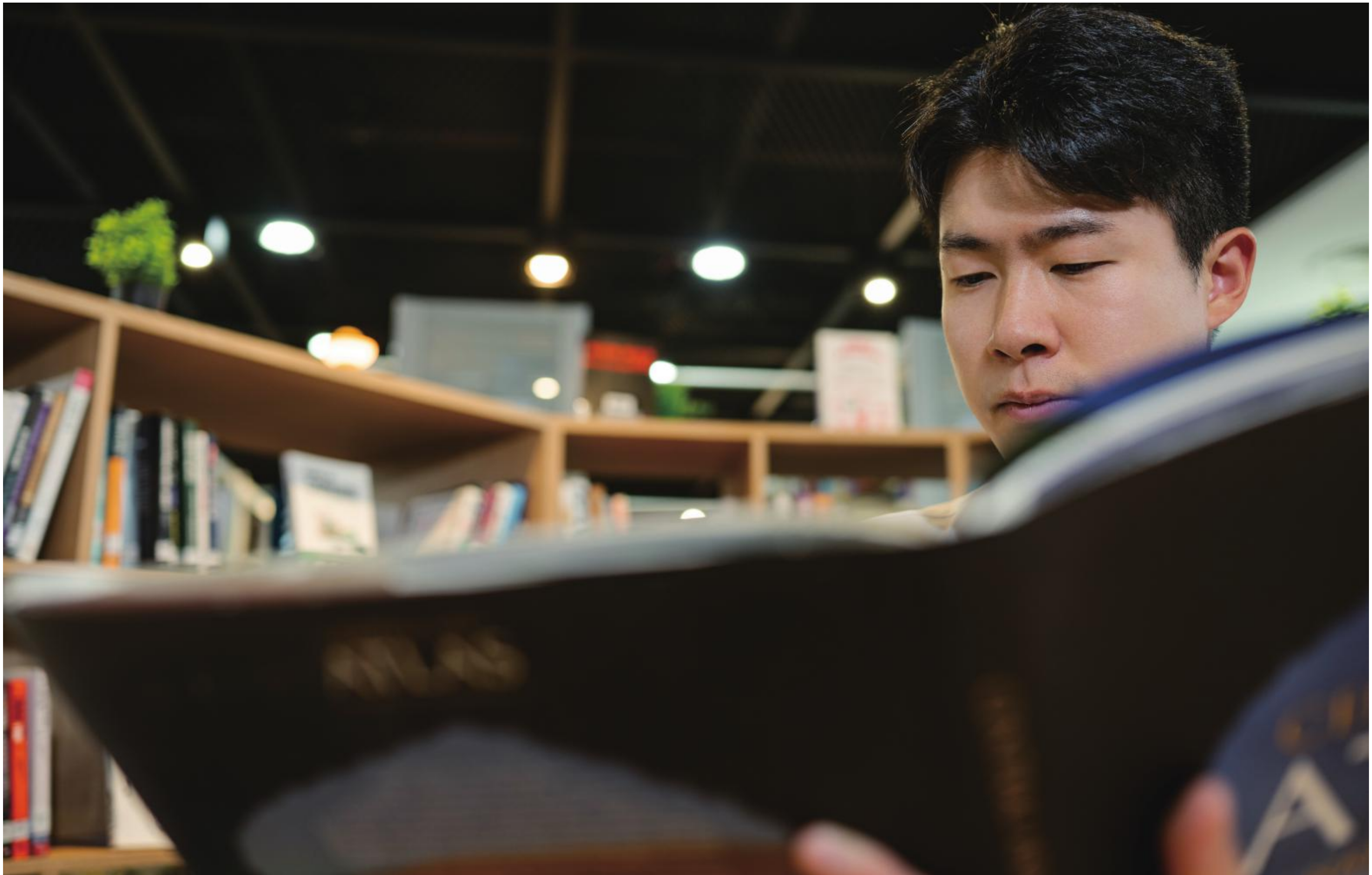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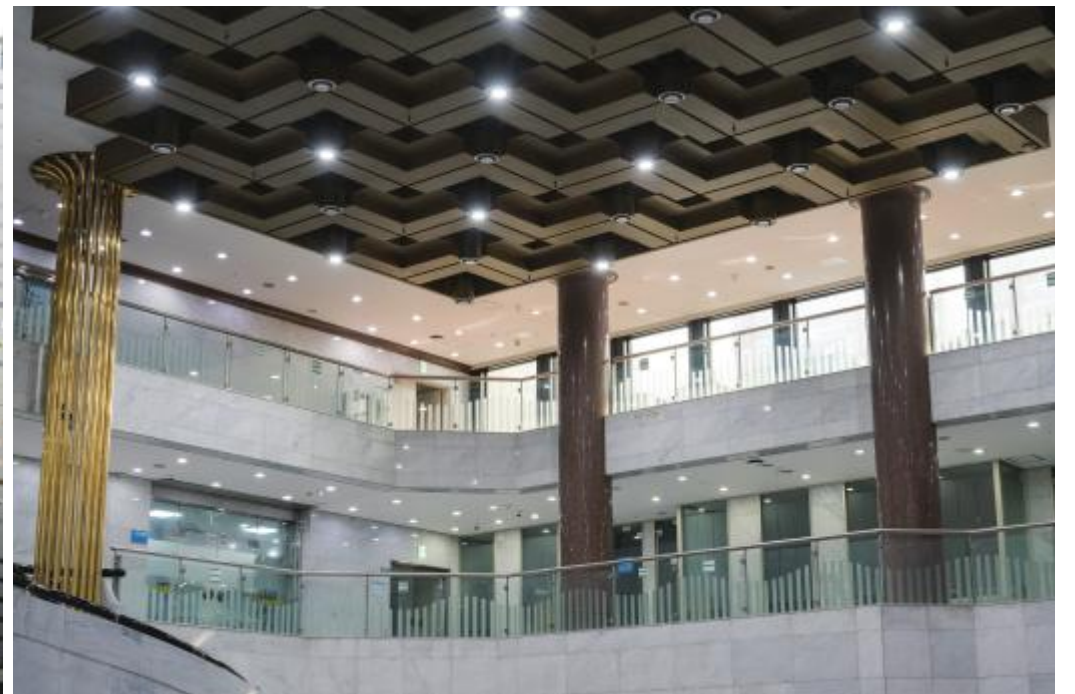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50주년
1976-2026







업무사

BUSINESS

1976



2026

제1장 수출입금융 업무

제2장 자본시장 업무

제3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

제4장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제5장 남북협력기금 업무

제6장 경영관리 업무

제7장 조직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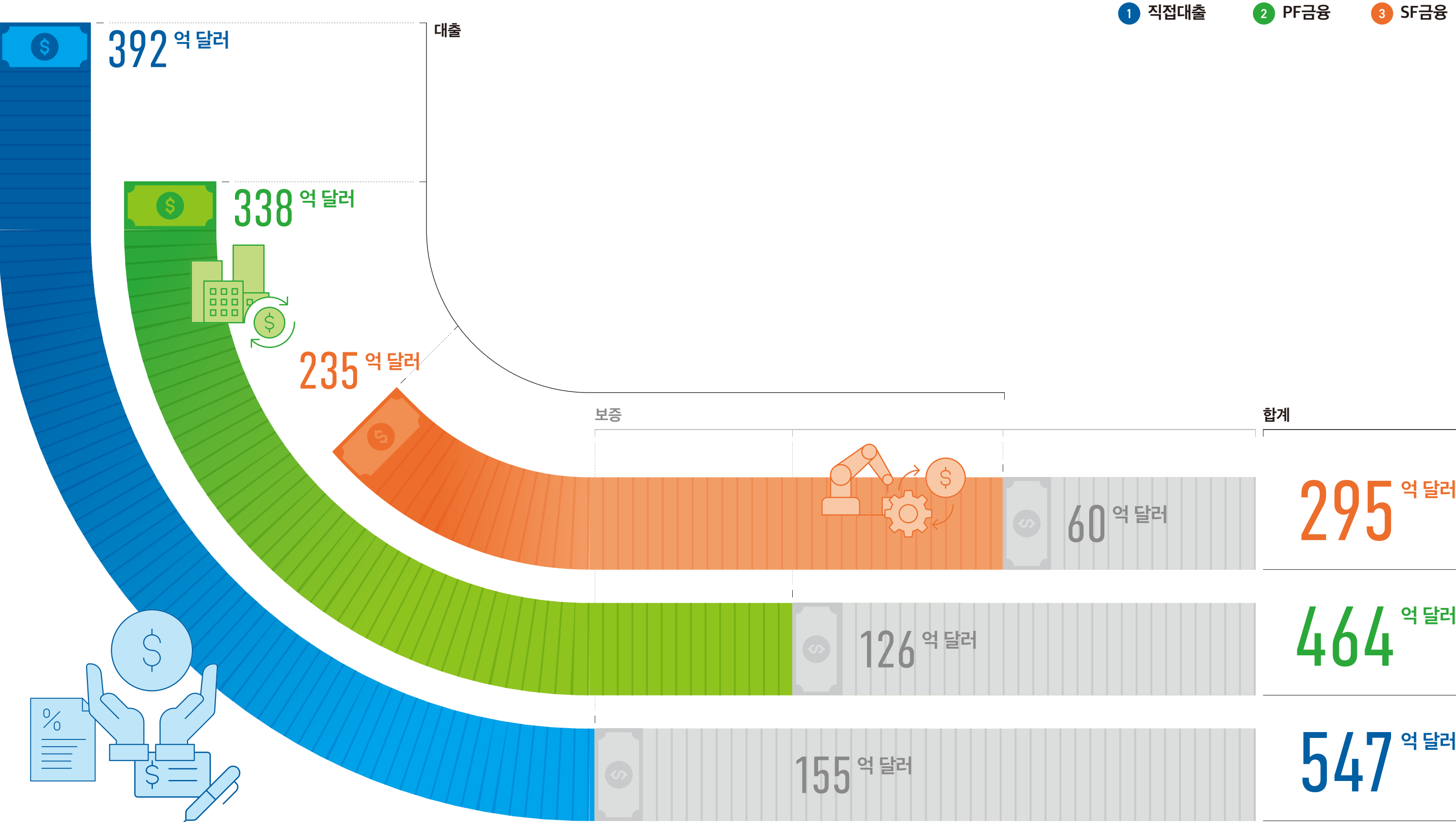
제1장

수출입금융 업무

1절
지원제도의 변화

2절
수출입금융 운용과 실적

3절
개발금융



여신종류별 지원 실적

단위: 조 원

1

대출 68.6%

1,205.4 조 원

1-1	수출	40.7%	713.9
1-2	수입	10.0%	176.2
1-3	해외사업	17.9%	315.2
1-4	기타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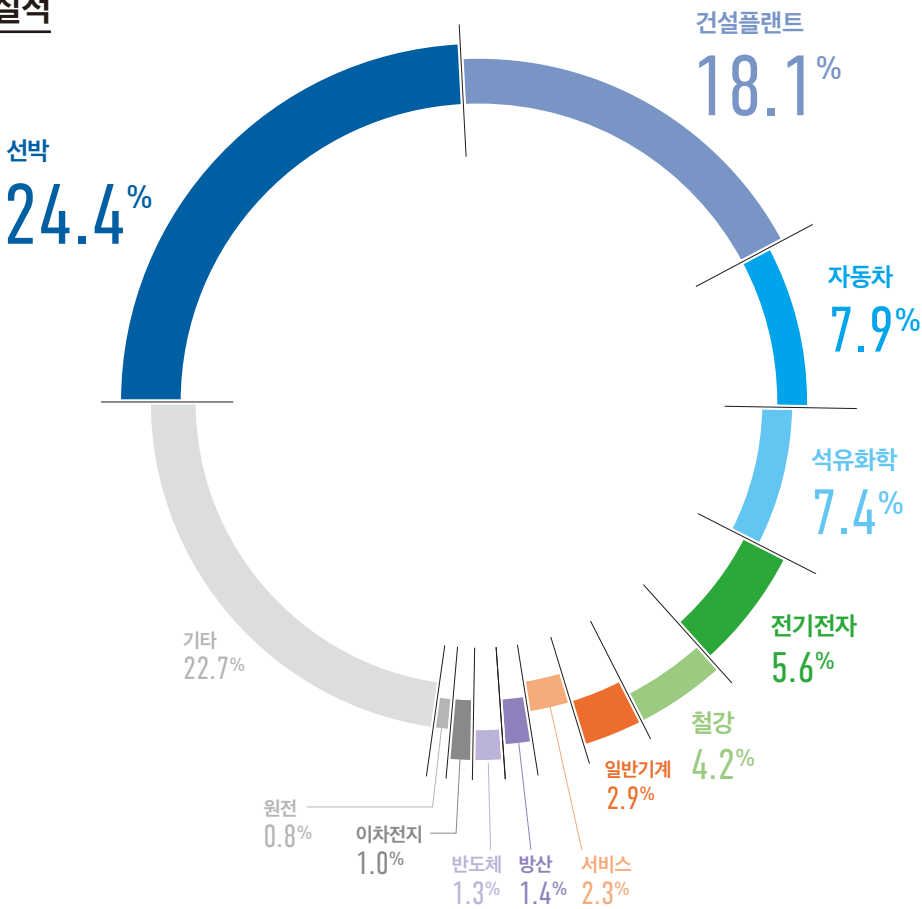
3

투자 0.1%

2.2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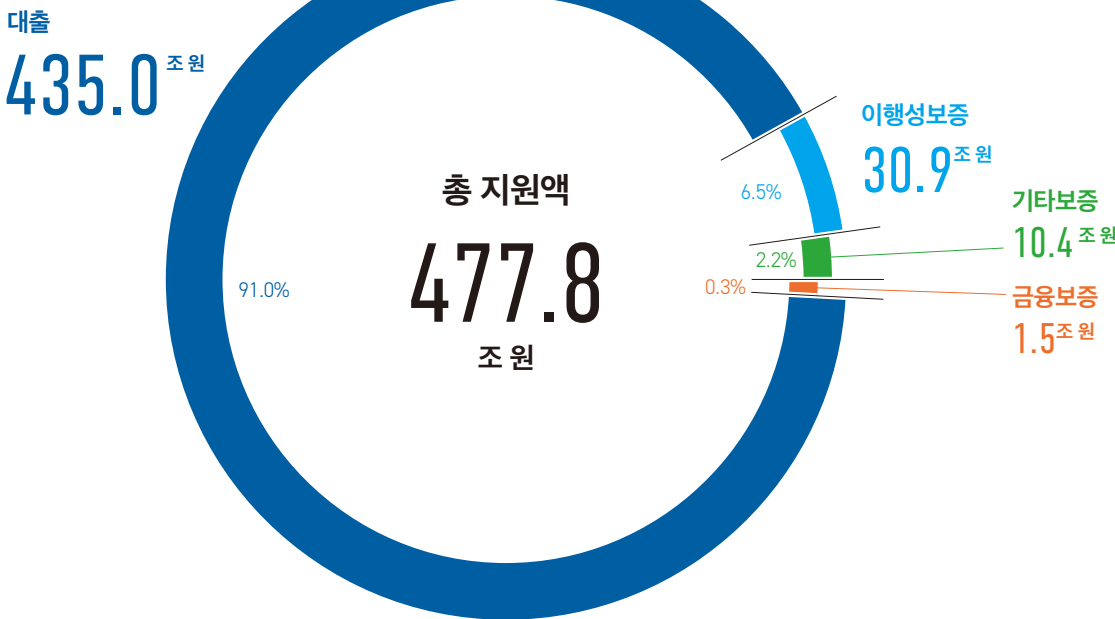
2-1	금융보증	3.3%	58.6
	수출		28.4
	수입		7.3
	해외사업		22.9
2-2	이행성보증	25.0%	439.3
	수출		427.6
	수입		1.3
	해외사업		10.4
2-3	기타보증	3.0%	52.3
	수출		8.5
	수입		41.9
	기타		1.9

산업별 지원 실적



중소·중견 지원 실적

단위: 조 원



제1절

지원제도의 변화

1. 2010년대 이전의 지원제도

지원제도 개괄

수은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거래 발전에 발맞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제도를 고도화해 왔다. 이를 통해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한다'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다. 수은의 수출입금융은 2014년 「수은법」 개정 이전까지 크게 자본재 등 상품과 용역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자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해외투자지원자금', 주요 자원 및 필수 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입자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자원개발자금' 등 형태로 이뤄졌다.

수출입금융의 근간인 수출지원자금은 국내 수출자를 차주로 하는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과 해외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을 차주로 하는 구매자신용(Buyer's Credit)으로 구분된다. 수출대금의 지불을 연기하는 연불수출거래 지원을 위한 연불금융, 수출자의 수출대상 물품 제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금융 등 공급

자신용 방식 지원제도가 수은 설립 이래 가장 먼저 발전했다. 특히 연불금융은 대형 자본재 수출시 국내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장기간 분할하여 수출대금을 결제받아야 하는 부담과 물품 인도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외상 채권을 담보로 국내 수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중장기 수출금융으로, 제작기간이나 거래비용 규모가 큰 선박은 연불수출거래의 대표적인 품목이었다. 이에 수은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선박수출거래에 대한 중장기 연불금융을 집중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조선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장기 채무부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점차 연불금융을 기피하게 되면서, 1970년대 후반 해외선주 앞 직접대출 도입을 시작으로 수입자가 직접 차주가 되는 구매자신용의 취급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는 연불금융이 급격히 감소하는 한편, 직접대출이 선박, 해외건설·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거래에 대한 주요 수출금융 지원방식으로 정착됐다.

직접대출은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

다. 국내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아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연불금융 차입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수 있었고, 목적물 인도로 거래가 종료돼 사후관리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인력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해외 구매자 입장에서는 직접대출금이 공공차관으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거나 가속 감가상각이 허용되고, 수출대금이 전액 일시에 지급되므로 협상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었다. 자금을 대출하는 수은도 수출입자 간의 수출계약과는 별도로 수은이 해외 구매자와 직접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채권보전 등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었다. 직접대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장기의 계약체결 시간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후 제도 개선 및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직접대출은 선박, 플랜트, IT제품 등 전략산업 수출 지원의 핵심 여신제도로 자리 잡았다.

한편, 수은은 1990년대 후반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 방식의 금융지원을 개시함으로써 직접대출의 방식을 다변화했다. 해외차주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기업금융방식 직접대출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를 차주로 하고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PF 금융기법을 도입해 자본재 수출지원의 새 지평을 열었다.

PF는 지원대상 사업의 운영수익을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하고 사업 자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금융기법으로, 세계적으로 1970년대 후반 원유개발사업에 적용되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도국의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 등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후에는 에너지, 화학, 제조업,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 금융조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자본재시장에서는 민영화 추세와 위험분산 필요성에 따라 대형 사업 대부분이 PF 방식으로 진행됐고 특히 자원개발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됐다. 또 수출시

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발주처가 입찰 참가자에게 수출신용기관의 금융추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PF 추선 능력이 기술력과 더불어 수주의 핵심 요소가 됐다. 세계 자본재시장에서 PF 활용이 확대되자 수은은 1990년대부터 전담 조직과 제도를 마련해 이를 본격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래 특성에 맞춰 PF 및 스트럭처드 파이낸스(Structured Finance: SF)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SF는 사업주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직접대출과 프로젝트 사업성을 기초로 한 PF를 결합해 사업주를 차주로 하되 프로젝트 현금흐름 등을 채권보전장치로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2000년대 들어 선박수출을 중심으로 SF 방식 금융지원이 보편화됐다. 기존에 취급하던 선박 직접대출과 같이 해외선주를 차주로 하되, 차주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의 자산가치 담보 및 미래 운용수익을 채권 회수 재원으로 활용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불금융 지원

수은의 국내 조선사에 대한 연불금융 및 제작금융 집중 지원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1975년 이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1970년대 후반 세계 2위 조선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조선소 통폐합과 폐쇄를 통해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를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신생산업 단계였던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산업의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선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됐다. 실제로 1972년 0.1%에 불과하던 선박수출 비중은 1977년 4.7%, 1984년 16%로 급증했는데 그 배경에는 수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이 있었다.

1980년대 들어 석유파동과 해운경기 침체, 정부의 중화학공업 합리화 조치로 조선업도 위기를 맞았으나 조

선소 증설정책과 수은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성장 기반이 유지됐다. 다만 2000년대 들어 조선사들의 장기 채무부담 및 연불채권 회수위험 우려가 커지며 연불금융은 점차 줄어들고 해외선주가 직접 차주가 되는 직접대출이 증가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제작금융은 1990년대 이후 국내 조선사의 시설 확대 및 숙련 노동력의 증가, 해운경기 호황 등 영향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2000년대 후반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조선 경기 침체, 헤비테일(Heavy-tail) 결제 방식의 일반화 등 악조건 속에서 조선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작금융 수요가 또 한 번 급증했다.

연불금융 취급 시 초기에는 수출가액의 20% 이상을 인도 전 결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OECD 수출신용협약 기준인 20%로 선수금률을 조정했다. 대출이율 역시 1980년대에는 8~9% 단일이율을 적용했으나 2002년 4월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개정 이후에는 CIRR(고정금리)에 신용위험가산율을 더한 방식으로 운영했다.

대출기간은 수은 설립 당시 선박의 경우 8년으로 규정했다가 1985년 12월 업무방법서를 개정하며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의 기간과 같은 8년 6개월로 연장됐다. 이후 2002년 4월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의 개정 에 따라 12년으로 연장됐고, 상환방법은 선박의 경우 연 1회 이상 원금을 정기 분할해 상환하도록 했다. 대출 한도는 대출금액 산정 기준(수출계약금액에서 선수금을 공제한 잔액)의 100%로 시작해 1977년 1월 80%로 개정했고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이 활발해지면서 1980년 7월 7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1985년 6월 다시 85%, 1991년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체계에 맞춰 100%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건설·플랜트 연불금융 지원

플랜트 수출금융은 선박금융과 함께 수은 설립 목적의

근간인 ‘자본재 수출 지원’을 대표하는 분야로 국내기업의 플랜트 및 기계류 수출을 뒷받침하는 전형적인 수출금융이다.

수은 설립 첫해인 1976년에는 자본재 수출금융 수요의 대부분을 선박금융이 차지해 플랜트 수출금융 수요는 크지 않았으나 1977년부터 연불금융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수은은 같은 해에만 8차례 업무방법서를 개정하는 등 지원체제 구축에 집중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자금지원 종류를 다양화하고 협조대출제도를 마련해 국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자금 수요에 대응했다.

또 1982년에는 국산 기자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기자재 사용거래에 대한 우선지원지침’을 제정했고 1985년에는 해외건설 수주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별도의 해외건설공사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섬유산업 설비 및 해외건설 중장비 등 유휴산업설비 수출도 지원했다.

1987년에는 수출용 원자재를 제작·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내국신용장의 수혜자에 대한 대출취급 규정을 마련했으며 1990년에는 차주의 신용도와 대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신용대출 지침도 신설했다. 1991년에는 연불금융 조건을 OECD 수출신용협약에 맞춰 조정했는데 대출기간이 2년 미만인 거래는 협약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1992년에는 여신규정과 여신요강으로 내규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기존의 각종 우선지원 지침은 새롭게 ‘여신운용지침’에 통합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해 여러 제도가 신설됐다. 1994년 ‘수출용 원자재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처리지침’, 1995년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 대출제도’가 그 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연불금융이 급감하고 직접대출 방식의 지원이 늘어났다.

해외건설·플랜트 직접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

1978년 8월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가 한국산 자본재 구매자인 외국기업에 대해 수은이 직접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직접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은은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유사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직원 파견교육을 실시했으며 1979년 8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직접대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취급규정을, 11월에는 표준대출계약서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직접대출의 이율은 기본운영규정 제정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연불금융 대출이율과 국제금리 수준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는데 초기에는 연불금융 대출이율보다 0.5% 높게 책정돼 차주에게 불리한 면이 있었다. 이에 1985년 9월 제9차 개정을 통해 수출자금 대출이율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어 1991년 6월 수출자금 대출조건이 OECD 수출신용협약에 맞춰 개정되면서 직접대출도 같은 해 7월 제12차 기본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조건을 변경했다. 제13차 개정에서는 선수금, 대출비율, 상환기간 등을 업무방법서의 수출자금 지원조건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1993년 9월 제14차 개정에서는 기술용역 수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했고 채권보전 요건도 완화해 신용도가 높은 차주의 경우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도 직접대출이 가능해졌다.

직접대출 규모는 1990년대 중후반 PF가 도입되면서 크게 확대됐다. 수은은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고자 PF를 직접대출의 한 형태로 도입했으며, 이를 위해 1994년 해외 연수를 통해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같은 해 9월 산업설비금융부에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1998년 구매자금융부를 신설하고 1999년 구매자금융부 내 전담팀을 설치했으며 2000년대 들어 조직을 계속 확장했다. 이때부터 수출금융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신용 방식으로 지원됐고 1999년에는 현지비용과 건설기간 중 이자까지 직접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넓혔다. 여기에

대외채무보증과 이자율지지 업무 도입도 더해져 해외건설·플랜트 수출거래 지원수단이 한층 다변화됐다.

2000년 4월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 취급규정’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 취급요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 이후 개정을 거치며 업무 범위가 크게 확장됐는데, 처음에는 ‘프로젝트 회사를 차주로 하는 비소구 금융’으로 한정했으나 점차 SF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또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금리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지원자금이나 역외금융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선박금융 직접대출 및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지원

수은 선박금융의 핵심은 직접대출 제도였다. 조선업 금융지원은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에서 출발했으나 1978년 정부가 해외선주에 대해 직접대출을 허용하면서 해외선주 앞으로 직접 여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국내 조선업 발전에 중대한 전기가 됐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신용도가 양호한 해외선주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서 수은을 비롯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당시 OECD 기준금리가 연 8%로 고정돼 있어 유럽 상업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어려웠고 1992~2002년 사이 수은의 선박 직접대출 실적은 1994년 단 1척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 일본 등 주요 선박 수출국의 요구를 반영해 2002년 4월 개정안이 발효됐고 상환기간은 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최저이자율은 연 8%에서 통화별 CIRR(표시통화 국가의 국제 수익률에 1% 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변경되는 등 지원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직접대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면서 수은은 새로운 금융기법 개발에 나섰다. 먼저 OECD 선박수출신용양

해를 준용한 PF 업무 취급규정 개정을 통해 2002년부터 선박 SF를 본격 취급하기 시작했다. 선박 SF는 선박 운용에서 발생하는 용선 수입을 대출 상환의 주요 재원으로 삼으면서 선박 담보나 운용수익 등 채권보전을 다양화하는 금융 방식이다. 차주의 신용도, 중고선가 수준, 운임 수준, 사업성을 분석해 개별 프로젝트마다 맞춤형 채권보전 장치를 구성한다. 이는 해외선주의 국내 조선소 발주를 촉진해 2000년대 국내 조선업이 세계 1위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은은 이후에도 비소구(Non-recourse) 방식의 PF형 선박금융, 선박담보부 대출, 해외 ECA와의 협조용자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며 선박금융 경쟁력을 강화했다. 2013년 1월 선박 리스거래에 대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에 대해 정기용선, 나용선, 장기운송계약 등 용선계약 형태별로 리스거래 여부를 판단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2013년 10월에는 용선계약 미확정, 선주 신용부족으로 SF 방식 여신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본선담보를 주된 채권보전 수단으로 취급하는 '선박담보부 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 해외 ECA와의 협조용자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노르웨이 수출보증공사(GIEK)와 협력 MOU를 체결해 공동금융지원과 리스크관리 노하우 공유를 추진했다. 국내에서는 2013년 한국선급, 2015년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보증보험 등과 협력해 해양금융의 업무영역을 확장했다.

수출지원자금

수출지원자금은 국내 공급자신용 방식의 수출자금대출과 기술제공자금대출, 해외 구매자신용 방식의 직접대출,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전대자금대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국내 공급자신용 방식 수출자금대출은 그 골격이 설립 이전 업무대행기에 이미 갖춰졌다. 설립 이듬해인 1977년 기술제공자금대출을, 1979년에는 해외 구매자신용 방식 직접대출과 외국 금융기

관에 대한 전대자금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수출자금대출은 수은 설립 목적 중 '수출 촉진'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설립 이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장기 연불수출거래 지원을 위한 제작금융과 연불금융, 단기수출거래 지원을 위한 단기수출자금대출, 중소기업자본재 수출자금대출, 수출환어음부 수출자금대출, 수출용원자재 등의 공급자에 대한 대출,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등이 이에 해당했다.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 정책자금 특성상 수출자금대출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금지품목을 제외하고 일정 외화가득률을 충족한 전 품목 지원 △수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선수금 수령(단기수출관련대출과 포괄수출금융 제외) △대출기간 제한과 채권보전책 확보 △정해진 상황 및 결제방식 준수 등이 요구됐다. 수은은 경제 성장과 기업의 수출 여건 변화에 맞춰 수출지원자금의 종류와 적격대상 요건, 대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설립 초기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선박·산업설비 등 중장기 자본재 수출을 중점 지원했다. 1990년대에는 조선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반도체, 컴퓨터 등의 첨단기술제품과 산업설비에 대한 지원비중이 단기수출금융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다. 수은은 단기수출자금대출, 수출용원자재 등의 공급자에 대한 대출, 포괄수출금융, 수출환어음부 수출자금대출, 중소기업자본재 수출자금대출,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등의 제도를 도입해 이를 지원했다.

이 중 포괄수출금융은 1995년 '자본재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제도로 수출계약 건별 지원이 아니라 과거 6개월~1년 동안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향후 같은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였다. 이는 자본재·첨단제품을 소규모로 자주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계약 건별 대출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겪는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포괄수출금융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리스크관리 지원을 위해 대출통화가 외화인 경우 이를 다른 외화 또는 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제도, 대출통화에 대한 환율의 상한을 미리 정할 수 있는 환율상한옵션부 대출제도 등도 도입됐다.

기술제공자금대출은 해외시장 개척, 경제교류 촉진,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대외 기술제공거래(해외건설 포함)를 지원하는 제도였다. 지원대상 기술에는 △산업시설(선박과 차량 포함)과 이를 위한 원료, 예비품, 부분품 및 부속품의 설치 또는 운영에 수반되는 기술 등의 용역 및 조사, 설계, 감리 △해외 건설공사와 건설용역 △기타 해외 수출시장의 개척 및 확보와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기술용역을 포함했다. 기술제공자금대출은 엔지니어링 또는 컨설팅 기업의 활용을 전제로 했으나 실제로는 해외건설·플랜트사업과 연계해 운용됐다. 지원조건은 수출자금대출의 지원조건을 준용했고 해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1985년부터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지원조건 등을 규정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침을 수차례 개정하고 대출대상과 지원조건을 완화해 우리 건설기업들의 주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전대자금대출은 수은이 신용도가 양호한 해외 금융기관에 대출한도 설정 후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수은의 대출금을 자국 수입자에게 재대출(Re-lending)해 우리나라 상품의 수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금융지원 방식이다. 전대은행은 자기자금 부담 없이 자국 기업의 수입을 지원할 수 있고 수입자는 자국 내 거래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 대출을 받아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즉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1978년 대개도국 연불수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본격 시행됐으며 초창기에는 '전대차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했으나 OECD 수

출신용협약이 엄격해지면서 점차 일반 상업금융에 가까운 조건으로 전환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단기·중장기 전대자금대출, 리파이낸싱 등으로 발전했다. 단기 전대자금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수출계약금액의 100%까지 대출 가능했으며, 중장기 전대자금대출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수출계약금액의 85%를 한도로 하고 15% 이상의 선수금을 요구했다. 리파이낸싱은 2,000만 달러 이하 거래에서 수출신용장을 매입한 뒤 이를 신용장 발행은행인 전대은행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는 제도였다.

해외투자지원자금

2014년 「수은법」 개정 이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사업을 돕기 위해 운영한 금융지원제도로는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등이 있었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은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이 외국법인에 출자(주식취득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우리 국민이 출자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외국인이 출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우리 국민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설비를 대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즉 해외투자자금대출은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 또는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출자자금과 시설대여자금을 지원했으며 차주는 외국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우리나라 모기업이었다.

수은은 설립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유일의 해외투자지원 전담은행으로서 자원개발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개척 필요성이 커지고 국내의 높은 생산요소비용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수은의 해외투자자금대출 지원도 증가했다. 또 국내 다른 금융기관들도 해외투자자금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수은은 지원조건 개

선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금지원 경쟁력을 유지했다.

해외사업자금대출은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이 해외 수출입시장 개척, 중요 물자·자원 확보, 외국과의 경제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설비를 신설·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차주는 해외 현지법인이 아니라 국내의 개인이나 모기업이었으며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 지원대상이었다.

해외사업자금대출은 통상적인 투자와 다른 방식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대규모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녔다. 설립 초기에는 지원 실적이 많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국내 해운사가 외항선박을 구매할 때 이 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활용이 크게 늘었다. 이는 기존에 국내 해운사가 외국 해운사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한 것이었다. 또 2004년 이후 세계적인 광물가격 상승으로 석유·천연가스 등 해외자원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더욱 확대됐다.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은 우리 국민이 이미 출자한 외국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기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출 차주는 국내 모기업이 아니라 외국법인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해외 현지법인은 적기 자금조달, 비용·인력 절감,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국내 모기업도 직접적인 차입 없이 지급보증서 또는 담보제공을 통해 현지법인 운전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 제도는 1986년 12월 「수은법」 개정과 1987년 5월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신규 진출 지원을 우선시한 해외투자자금대출에 비중이 쏠리면서 시행이 지연되다가 1994년 3월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서 운영이 본격화됐으며, 이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확산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이 보편화되면서 중요한 금융지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수입자금

수입자금은 국내 수입자가 국가경제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거나 적기에 들여와야 하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해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당시 우리나라 수입의 대부분이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돼 있어 원활하고 적시성 있는 수입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었다. 또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정책적·전략적 차원에서 수입금융 지원이 필요했다.

수입자금 취급의 법적 근거는 수은 설립 초기부터 마련돼 있었지만 제도적 기반은 1986년 말 「수은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갖춰졌다. 개정법에는 ‘국민경제상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가 필요하고 적기 수입이 긴요한 주요 자원 및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1987년 3월에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규정이 제정됐다. 시행령은 지원대상 품목을 재무부장관 또는 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하는 중요물자 및 주요자원으로 규정했고 철광·동광·아연광 등 14개 기초원자재와 동광석·원유·원목·생고무 등 자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1988년 12월 「수은법」 시행령 제3차 개정으로 중요물자 지정 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서 수출입은행장으로 변경됐다. 1989년 3월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정에 따라 금광을 포함한 33개 광물이 주요자원에 추가됐고 1990년 7월에는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첨단산업용 시설재와 연구용 시설재가 중요물자에 포함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핵연료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이후에도 수입자금 지원대상은 점차 확대됐다. 2001년 8월에는 공장자동화물품과 환경오염방지물품이 포함됐고 2003년 3월에는 첨단제품과 LPG, LNG가 추가됐다. 2006년 7월에는 첨단제품 및 시설재의 성능 유지를 위한 부품과 부분품까지 지원대상이 넓어졌으며 2009

년 6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 제품, 부속품, 기술 등이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규정한 11개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를 모두 포괄하는 조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내 사료산업의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 대두박, 채종박, 소맥피, 야자박, 팜박, 주정박 등 사료용 원료와 공업용 소금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2012년 8월에는 IT 및 녹색산업의 성장에 맞춰 희토류, 리튬, 게르마늄, 실리콘 등 희유금속 35종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금지원비율을 100%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0.5%p까지 추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987년 5월부터 수입자금 지원품목은 주무부서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1990년 제도 효율화를 위해 이 제도가 폐지됐다. 지원대상자 역시 1987년에는 ‘국내업자’로 한정됐으나 1990년 7월 연구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국내수입자’로 바뀌었다. 대출금액 한도는 초기 70%에서 1989년 4월 수입금융의 활성화와 외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지원조건을 고려해 80%(중소기업은 90%)로 상향됐으며 2006년 7월에는 수입신용장(LC) 개설 거래의 경우 100%까지 확대됐다. 이율은 1990년 7월까지 연 10% 고정금리였으나 1990년 8월 이후 원화대출은 일정률의 고정금리를, 외화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2가지로 적용했다. 고정금리는 CIRR을 변동금리는 LIBOR을 기준으로 해 중소기업 여부, 담보유무, 대출기간 정도에 따라 가산금리에 차등을 뒀다. 2000년 5월부터는 원화대출이 부활하면서 원화대출의 경우는 KORIBOR에 일정 가산율을 더하는 변동금리부

대출과 일정률의 고정금리부 대출로, 외화대출의 경우는 LIBOR에 일정 가산율을 더하는 변동금리부 대출로 운용했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가능했으며, 해외 수출자에게 자금을 미리 대여하고 자원으로 상환받는 개발수입거래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에 따라 10년 내에서 설정이 가능했다. 2001년 8월에는 회전한도 방식의 대출제도가 도입됐으며 사용기간은 1년이었다.

주요자원개발자금

주요자원개발자금은 국민경제상 장기적·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이 자금은 상환의 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다른 자금과는 달리 대상 사업 자체의 위험이 높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기에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서 차이가 있었다. 1974년 12월 제1차 「수은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고 1980년대 초반 처음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200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광물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자원개발기업들의 해외 유전·광산 진출이 활발해졌고 이에 주요자원개발자금 지원도 더욱 활성화됐다.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외경제협력자금은 해외 특정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지원된 자금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나 기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했다. 2000년 7월 업무방법서가 개정돼 정부 간 합의가 없더라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은행에 최초로 대외

경제협력자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기타 자금지원 업무

외국환 업무는 2002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본 업무의 하나로 편입됐다. 수은이 수행한 외국환 업무에는 포페이팅(Forfaiting), 수출 팩토링(Factoring),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신용장 통지 및 확인, 전대자금 관련 리파이낸싱, 수입자금 지원을 위한 수입승인,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입화물선취보증 등이 포함됐다.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위한 보증 역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에 속했는데 2002년 「수은법」이 개정되면서 본 업무로 편입됐다. 보증 업무에는 협조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조대출기관에 제공하는 채무보증과 수출계약 달성에 필요한 선수금·계약이행 등을 보증하는 이행성보증이 있었다.

채무보증은 수은이 지원대상 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 차주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자본재 수출 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단일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상업금융기관 등과의 협조금융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1년부터 본격 취급됐다.

이행성보증은 IMF 외환위기 시기 국내 은행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선박과 산업설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활용됐으며 그 규모가 대출 실적에 상당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는 수은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수은은 할인 업무를 통해 간접적인 금융지원도 수행했다. 이는 수출자금대출, 기술제공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등을 수은이 직접 취급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할 경우에 해당 대출에서 발생한 채권을 수은이 할인해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원대상 거래를 간접 지원하는 제도였다. 수은은 「수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1998년부터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무역어음재할

인 업무를 수행했다.

이 제도는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시장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도입됐다. 수은은 국내 은행의 무역어음을 재할인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상업금융 시장을 보완했다. 이는 이후 수은의 제한된 점포망과 인원으로 인한 직접 자금지원 여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했다.

2. 지원제도 전면 개편

수은은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월 21일 「수은법」을 전면 개편했다. 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이 기존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어나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수은의 업무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의무가 규정화됐으며, 대규모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타 금융기관과의 협력·보완 기능도 법에 명시됐다. 업무규정 체계도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이 폐지되고 대출, 보증, 증권투자 등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편돼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4월에는 「수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대외채무보증 규정을 완화해 기존에는 미화 1억 달러 이상이면서 대출 비중이 55%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지원 규모와 무관하게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은은 2014년 수은법 개정을 계기로 수출입금융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기존의 개별 지원 항목을 지원 목적에 따라 통합·정비해 정책자금의 활용도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제2절

수출입금융 운용과 실적

1. 수출 관련 대출

가.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촉진자금대출은 국내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수출기업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수출 증진은 신규 수출 확대뿐 아니라 수출 감소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포괄하며, 해외시장개척활동은 해외시장조

사,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바이어 발굴, 박람회 참가, 해외 홍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을 포함한다. 이 제도는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시설 확장·증설용 수출자금,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등을 통합해 마련됐다.

수출촉진자금대출은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해당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우수한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서비스산업: 보건의료, 콘텐츠, SW/ICT, 관광, 기타 · 친환경에너지신사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산업
자금용도	· 시설투자,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활동,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기타 수출증진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
대출금액	· 실 소요자금의 90% 이내(수출기업 인수인 경우 50% 이내) · 단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중소기업 30억 원, 그 외 50억 원)
대출기간	·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수출기업인수, 제작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담보 없이 지원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해외 네트워크 운영 등 관련 비용을 적극 지원했다.

대출금액은 실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며 수출기업 인수 목적일 경우에는 50% 이내(협조대출의 경우 40% 이내)로 제한된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은 기업 별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타기업은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16년 4월에는 콘텐츠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수출촉진자금대출 취급요건을 개선했다. 콘텐츠 해외판매 수익금액의 확인서류와 산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수출실적 또는 해외판매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수출촉진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상환방식의 제한을 완화해 최저상환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총 상환기간 5년 제한을 폐지해 기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반영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2016년 12월에는 수출형 신성장산업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수출기업 인수를 위한 수출촉진자금대출 자금용도에 유·무형자산 인수를 포함하고 관련 M&A 소요자금 대출한도를 50%에서 90%로 상향했다. 동시에 바이오·계약기업의 신약개발 등 기술개발 목적 대출에 대해 대출금 사용 확인 방식을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기업을 대상으로는 제작자금 용도의 수출촉진자금대출을 수출이행자금대출에 준해 취급할 수 있도록 해 6개월 소요자금의 선집행을 허용했다.

2019년에는 시설투자 용도의 수출촉진자금대출 기간을 기존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정부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타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 관행을 반영한 조치로써 장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대출기간 확대에 맞춰 10년 초과 구간에 대한 상환방식도 새로 마련됐다.

2021년에는 수출촉진자금대출 담보취득 요건을 완화해 시설투자 용도의 경우 대출심사 시 외부용역이 필요한 대출금액 기준을 상향했으며 기계설비 양도담보 취득 시에는 내용연수까지 대출기간을 확대했다.

2024년에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신규 기술개발과 관련이 적은 경상적 연구개발비까지 수출촉진자금대출의 자금 용도에 포함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기술개선 및 제품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2025년에는 K-콘텐츠 지원강화를 위해 글로벌 OTT(Over-The-Top) 등을 통한 콘텐츠 국내외 일괄판매계약에 대한 대출금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경상적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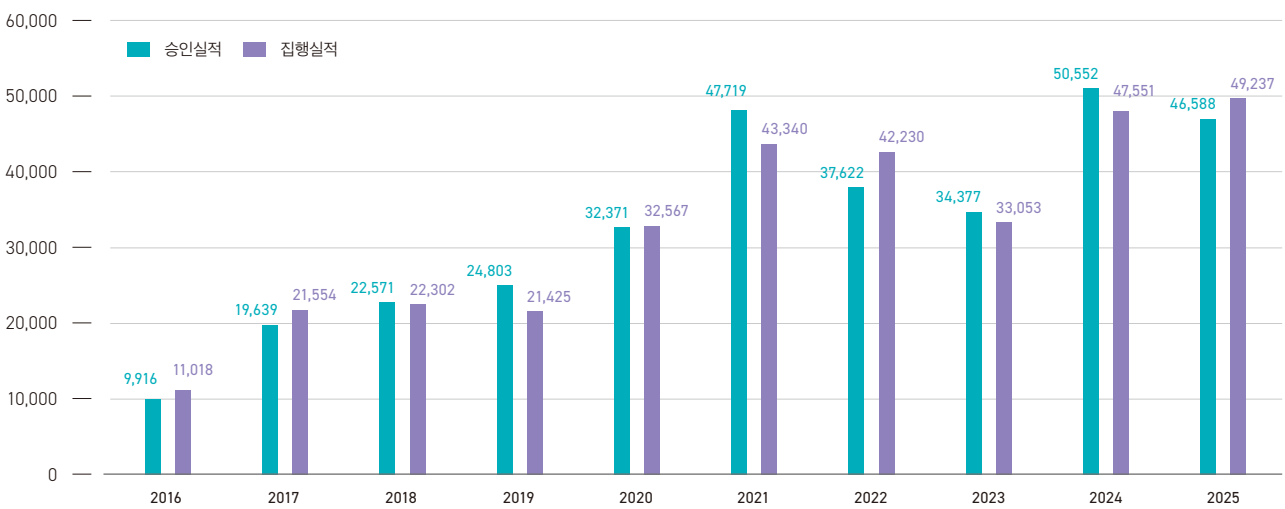
2016년 승인 9,916억 원 및 집행 1조 1,018억 원, 2017년 승인 1조 9,639억 원 및 집행 2조 1,554억 원, 2018년 승인 2조 2,571억 원 및 집행 2조 2,302억 원 등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촉진자금대출에 대한 자금 수요는 빠르게 확대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강화 등 영향으로 지원 실적



2015.04.02 KBS와의 방송·문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3조 원대였던 실적은 2024년 승인 5조 552억 원 및 집행 4조 7,55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5년에는 승인실적 4조 6,588억 원, 집행실적 4조 9,237억 원을 기록했다.

대표적 지원 사례로는 2016년 KBS(350억 원)와 JTBC(50억 원)에 지원된 수출촉진자금대출을 들 수 있다. 수은은 예능·드라마·교양·스포츠 등을 제작하는 방송사에 콘텐츠 기획·제작·수출 전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수출 촉진을 통해 K-콘텐츠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나.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은 일정한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관련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으로 기존의 단기포괄수출금융, 중기포괄수출금융, 상생자금대출(포괄), 지식재산권 수출자금대출 등을 통합해 마련됐다.

최초에는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2001년 당시 포괄수

출금융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고 2002년에는 5대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2004년에는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 5대 계열기업군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1년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소속 기업은 제외했다. 이후 코로나19 위기 당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재개됐으나 2024년부터 다시 대기업 지원이 중단됐다.

수은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주력산업 업황 부진, 첨단·혁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경제·산업 여건 악화를 고려해 2025년 초부터 대기업에 대한 수출성장자금대출 재개를 추진했다. 2025년 2월 정부의 수출전략회의 및 같은 해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했고, 감사원 사전컨설팅 과정에서도 정책적 타당성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대기업 지원 재개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관련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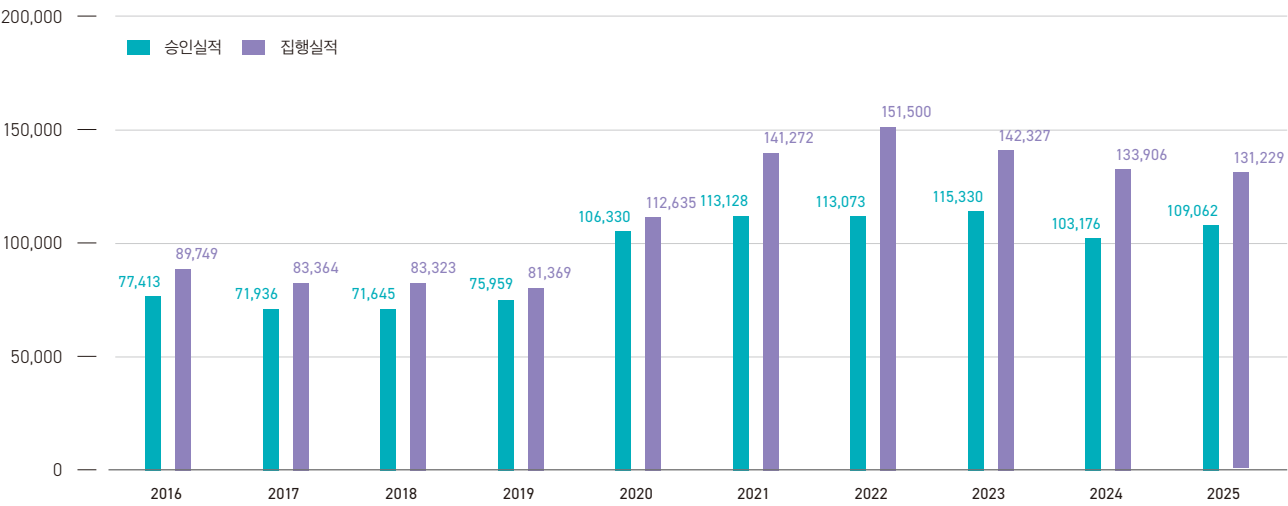
초기의 수출성장자금대출 지원품목은 산업자원부 장

수출성장자금대출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기업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단, 기업별 대출한도 500억 원(중소기업 350억 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800억 원(중소기업 500억 원)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수출성장자금대출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관 고시 자본재산업 육성전략 품목과 수출입은행장이 지
정하는 품목으로 한정됐으나 점차 업종 구분이 모호해
지고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다. 대출기간은 최
초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설정되고 보증
서 담보부의 경우 보증기간을 대출기간으로 인정한다. 대
출한도는 초기에는 기업별 30억 원으로 제한했으나 기업

의 수출 규모 확대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대출금액은 대출기간 6개월의 경우 과거 6개월 실적의
80% 이내(중소·우대중견기업은 90%, 우대기업 및 우대
지원산업 관련 실적은 100%)이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 1년 실적의 50% 이내(중소·우대중견기업은 70%,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 관련 실적은 100%)이다.
2019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편입되는 경



2013.05.28 창조산업 금융지원제도 설명회

우에도 기존 수출성장자금대출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 규모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대출 회수를 방지해 일시상환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함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정책금
융 수요 증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따른 대기업 수출
성장자금대출 재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주별 대
출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한도는
250억~400억 원에서 350억~500억 원으로, 중견·유예
중소기업은 350억~600억 원에서 500억~800억 원으
로 확대됐다.

2024년 중견기업의 차주별 대출한도를 600억 원으
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대외교역 확대 및
통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 전반에 대한
차주별 대출한도를 추가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한도는
350억 원에서 400억 원(우대 시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중견·유예중소기업의 한도는 600억 원(우대

시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수출에
대한 수출성장자금대출은 해외기업 앞 IP 양도 등을 통
해 라이선스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국내기업에게 기
존 IP 유지·관리 및 신규 IP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민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용역 수출 영역을 발굴·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2013년 이랜드월드의 의류 브랜드 상표권(250억 원),
팬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저작권(60억 원), 엠게임의
게임 판권(80억 원) 등 총 57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지원액(1,080억 원)이 2배 가까이 증가했
다. 이후 한류 콘텐츠 및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해
외 진출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콘텐츠 소비 구
조 변화 등을 거치며 실적은 등락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2024년에는 승인 1,973억 원 및 집행
1,961억 원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2025년에
도 승인 1,558억 원 및 집행 1,646억 원을 기록했다.

수출성장자금대출은 수출거래가 빈번한 기업에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장점에 힘입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말 기준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37조 6,144억 원) 중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 이용 기업도 2005년 857개 사에서 2025년 948개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은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과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출대상은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이다. 대출한도는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자금으로 산정된다. 대출기간은 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설정되며, 향후 6개월 소요자금 이내에서 선집행할 수 있다.

수출이행자금대출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으로 지원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기존에는 제작금융, 단기수출자금대출,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등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수출이행자금대출은 수출거래 형태의 다양화와 대·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 확

산을 반영해 상생금융 중심으로 제도 보완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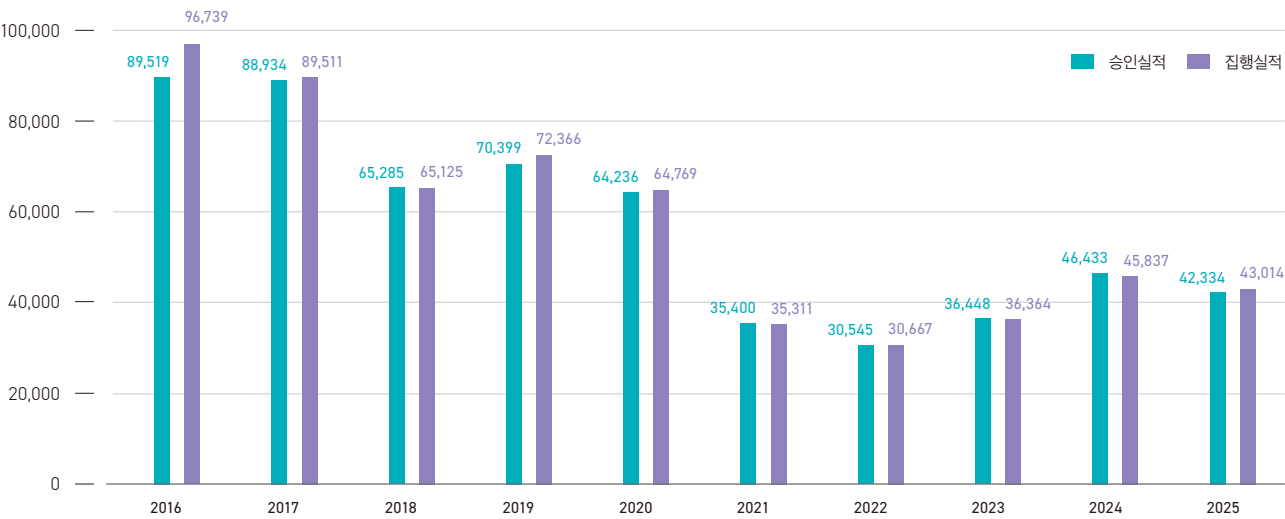
2017년 7월에는 보세판매장(면세판매장) 내 외국인 대상 판매가 수출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세판매업자와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세판매업의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생대기업에 대한 수출이행자금대출 제도를 보완하고 개별 대출금액 산정기준, 대출 관련 서류, 납품사실 확인방법 등에 관한 특칙을 신설해 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상생 방식 수출이행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상생금융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등급 제한과 관련한 사후관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이어 2020년에는 상생대기업에 대한 수출이행자금대출의 개별 대출금액 산정 시 차주가 현금으로 결제한 대상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상생대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대금결제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사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1년에는 상생대기업에 대한 수출이행자금대출의 지원대상 거래에 방위산업을 포함했다. 또 방위산업물자의 특성인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수출 여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외의 서류로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수출이행자금대출 지원실적(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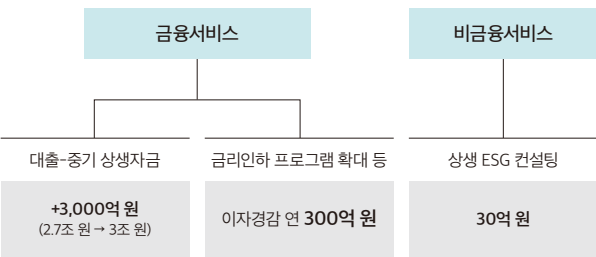
단위: 억원



한편, '수출중소기업 상생자금대출'은 2011년 수출대기업 등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도입 초기에는 지원대상을 수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기업, 혹은 수은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수출기업·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으나 2013년 공동심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지원대상을 상생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으로 단순화했다. 지원대상 거래도 초기에는 수출기업 또는 그 현지법인에 물품·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수출거래에 필요한 물품·원자재를 제공하는 거래로 한정했다가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된 물품 수출거래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2013년에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상생협력대출'을 도입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다 위기 완화와 함께 어음결제 관행이 개선되며 2011년 폐지했던 제도를 재도입한 것이었다.

2015년 말 수은은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등 47개 국

3-3-3 상생금융 개념도



내 주요 수출산업의 대표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대기업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과의 MOU를 통해 2·3차 협력사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2015년 말 기준 894개 협력사에 총 2조 2,000억 원을 공급했고, 이후에도 상생금융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인 '대·중소 동반성장'을 촘촘히 뒷받침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당시 '상생협력대출'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해 2020년 말 기준 지원 실적이 3조 5,000억 원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2024년 도입한 '3-3-3 상생금융' 등을 통해 연 3조 원 수준의 건실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제작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 대출'과 '콘텐츠수출 특례금융' 등의 제도를



수은의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개봉한 3D 애니메이션 <다이노타임>



수은의 콘텐츠수출 특례금융을 통해 제작된 <사임당 the Herstory>

운영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 대출은 수출계약을 체결한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술보증기금에 재원을 출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수은이 대출하는 제도이다. 제작사의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제작능력, 작품

성, 수출거래 안정성이 검증되면 제작비의 최대 70%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9월 수은, 문화체육관광부,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수은은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12억 5,000만 원을 출연했으며 보증한도는 출연금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설정했다. 첫 지원 사례는 국내 창작 3D 애니메이션 <다이노타임>으로 제작사 토이온이 2차례에 걸쳐 총 35억 원을 대출받아 약 160억 원 규모의 제작비 중 20%를 충당했고 작품은 2015년 5월 성공적으로 개봉했다.

2015년 신설된 콘텐츠수출 특례금융은 신용·담보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대출하는 제도로 수출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완성보증부 대출과 차별화됐다. 제작·홍행 리스크 등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 제도의 첫 성과는 2015년 11월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가 제작한 TV 드라마 <사임당 the Herstory> 지원(10억 원) 건이었으며, 드라마 <대장금>으로 한류 붐을 이끈 배우 이영애가 주연을 맡아 해외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공동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라. 수출기반자금대출

수출기반자금대출은 국내기업으로부터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4년 「수은법」 개정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의 직접대출과 전대자금대출 등을 통합해 신설됐다. 신설 당시 자금 용도를 기존의 수입결제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수출 기반 마련은 신규 수



2014.04.02 투르크메니스탄 키안리 석유화학플랜트 조감도

출 창출뿐 아니라 수출 규모 확대, 수출 중단 또는 축소 방지의 경우까지 포함하며, 대출 대상자는 수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한정되고 수출자는 제외된다.

국제 거래구조의 변화, 대형 프로젝트 증가 등에 대응해 수출기반자금대출의 집행 기준 및 제도 운영 방식은 계속 보완됐다. 2017년에는 집행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개선해 기존의 선적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 외에도 과업달성 보고서 등 수출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적격 대출서류로 인정했다. 이는 대형 EPC 계약에서 전통적인 기성금액 지급 방식이 아닌 과업달성부(Milestone) 지급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였다. 2019년에는 선박 구매자금 지원과 관련해 협조용자 기관의 대출기간에 맞춰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OECD 협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1년에는 수출목적물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대출의

거치기간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제작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자금흐름을 반영함으로써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해외건설·플랜트분야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직접대출 도입 후 2005년까지 PF를 포함한 직접대출 승인실적(총 58건 및 35억 달러)은 같은 기간 연불금융 승인실적(총 185건 및 43억 달러)보다 규모가 작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 총 여신의 약 80%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수출입금융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다 2014년 이후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 재정 악화로 카타르 알카라나(Al-Karanna) 석유화학 콤플렉스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Aramco) CFP 프로젝트 등이 연이어 발주가 취소되는 등 우리 기업 수주가 급감했다. 수은은 중동지역 부진 속에서 신규시장 개척에 나서 2014년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가 발주한 키안리(Kiyanly)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에 대출 7억 달러를 지원했고, 같은 해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에도 대출 9억

달러 및 채무보증 4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전통적 플랜트시장인 중동을 넘어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국내 건설·플랜트기업의 수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Barakah) 지역에 APR-1400 원전 4기를 건설·운영하는 바라카원컴퍼니(Barakah One Company)에 3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93억 1,0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이 기획·건설·운영 등 사업 전 단계에 참여한 최초의 해외 원전 사업이었다. 2017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SO-CAR) 비료플랜트 수출사업에 대출 2억 7,000만 달러 및 채무보증 2억 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발릭파판(Balikpapan) 정유설비 현대화사업을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회사 페르타미나(PT Pertamina)가 운영 중인 발릭파판 정유설비를 일산 26만 배럴에서 36만 배럴로 증설하고 개보수하는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정유설비 증설·개선 및 신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63억 2,000만 달러 규모였으며, 수은은 대출 6억 달러 및 채무보증 5억 9,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Amiral) 석유화학설비 건설사업 지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Aramco)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의 합작사인 사토프(SA-TORP)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Jubail) 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정유시설과 연계한 석유화학설비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147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수은은 대출 6억 달러 및 채무보증 4억 달러를 지원해 주요 발주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내 입지 강화에 기여했다.

선박·해양플랜트분야 지원실적은 선박 SF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한다. 선박 SF는 2002년 하반기부터 취급해

2003년 23척에 대해 8억 달러, 2004년 79척에 대해 35억 달러를 각각 승인하는 등 단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선박 SF는 이후 획기적으로 확대돼 2025년 말 기준 총 562척, 295억 달러를 지원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수은은 세계 선박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지원 선종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점차 확대됐고 드릴십 등 해양플랜트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면서 수은 선박금융은 종합 해양금융으로 발전해 나갔다. 특히 2010년대 초반 고유가 등으로 해양플랜트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은의 해양플랜트 지원 규모도 2012년 14억 5,000만 달러, 2013년 12억 1,000만 달러 등으로 늘어났으나, 2015년 이후 유가 하락 및 신흥국 경기침체 등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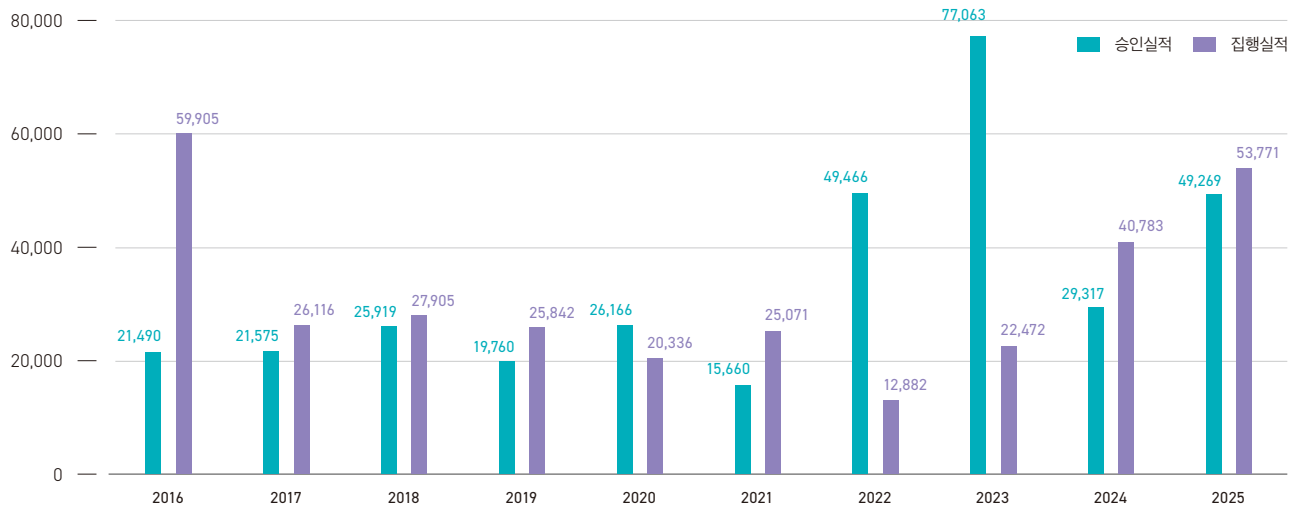
2021~2025년 지원 선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선종은 컨테이너선(45.7%), LNG선(30.2%), 탱커선(12.5%) 순이었으며 해양플랜트는 3.3%를 차지했다. 최신 대표 지원 사례로는 카타르 국영 선사 나킬라트(Nakilat)의 LNG 운반선 구매사업을 들 수 있다. 수은은 2024년 나킬라트와 35억 달러 규모의 F/A를 체결했으며, 2025년에도 나킬라트의 LNG 운반선 구매사업에 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는 한국 조선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사업이었다.



2016.10.20 UAE 바라카원전 건설사업 금융계약 서명식

수출기반자금대출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한편, 수은은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 당시 기존 전대자금대출을 지원 목적에 따라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간접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간접대출) 등으로 개정했다. 이 중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은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전통적 전대금융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자금의 최종 수혜자는 한국산 물품의 수입자였다. 2016년에는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간접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간접대출)의 지원범위를 기존 무역결제자금에서 시설 및 운영 자금까지 확대했다. 2020년에는 전대은행이 다양한 자금 수요를 반영해 우리 기업 또는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과 거래하는 현지기업에 무역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대은행 앞 직접대출을 하는 ‘무역금융 증진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전대은행을 수은의 대출금을 자국 수입자에게 재대출(Re-lending)하는 매개가 아닌 우리 기업의 수출기반 마련 또는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체로 보고, 전대은행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한국계 현지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현지기업에 제공한 무역금융 실적을 근거로 전대은행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역금융증진프로그램은

전대은행이 취급한 무역금융의 대상거래 종류에 따라 수출기반자금대출 또는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로 지원됐다. 전대금융 상품의 다변화와 더불어 국별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MDB 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전대금융 지원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2022년에는 ADB 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몽골에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했고 2024년에는 IDB 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파나마에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했다.



2022.12.16 페르타미나와 발릭파판 정유공장 증설 PF금융 지원약정 체결식

2. 수입 관련 대출

가. 수입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은 국내 수입자가 국민경제에 필요한 중요 물자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요 원자재 확보와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돼왔다. 수입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원자재나 자본재를 수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먼저 지원하고 이를 활용해 생산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회수된다.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을 통해 포지티브 방식의 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대출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2016년에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설비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재 수입거래에 대한 수입자금대출 지원한도를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으며, 2020년에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부응해 유·가스, 전략자원, 희유금속 등 자원개발 관련 수입거래에 대한 수입자금대출 한도를 80%에서 90%로 확대했다.

2021년에는 기술집약적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수입거래를 수입자금대출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수입거래도 시설재(유형자산)와 동일한 금융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2025년에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경제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수입기업이 보다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선집행 대상 기간을 기존 ‘향후 3개월 결제예정 금액’에서 ‘향후 6개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확대했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화전환옵션 지원 대상에 수입자금대출을 추가했다. 또 해상풍력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재 수입거래에 대한 대출기간을 확대했다.

수입자금대출 지원 규모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

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산업구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승인 6조 2,159억 원 및 집행 6조 2,606억 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승인 8조 4,983억 원 및 집행 8조 5,696억 원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연간 지원액이 8조 원을 상회했다. 이후 2020년대에 들어서는 에너지·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며 2021년 승인 10조 1,004억 원 및 집행 10조 201억 원을 기록해 지원액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돼 2023년 승인 11조 2,245억 원 및 집행 11조 6,166억 원, 2024년 승인 12조 1,349억 원 및 집행 12조 2,099억 원 등 사상 최대 지원 규모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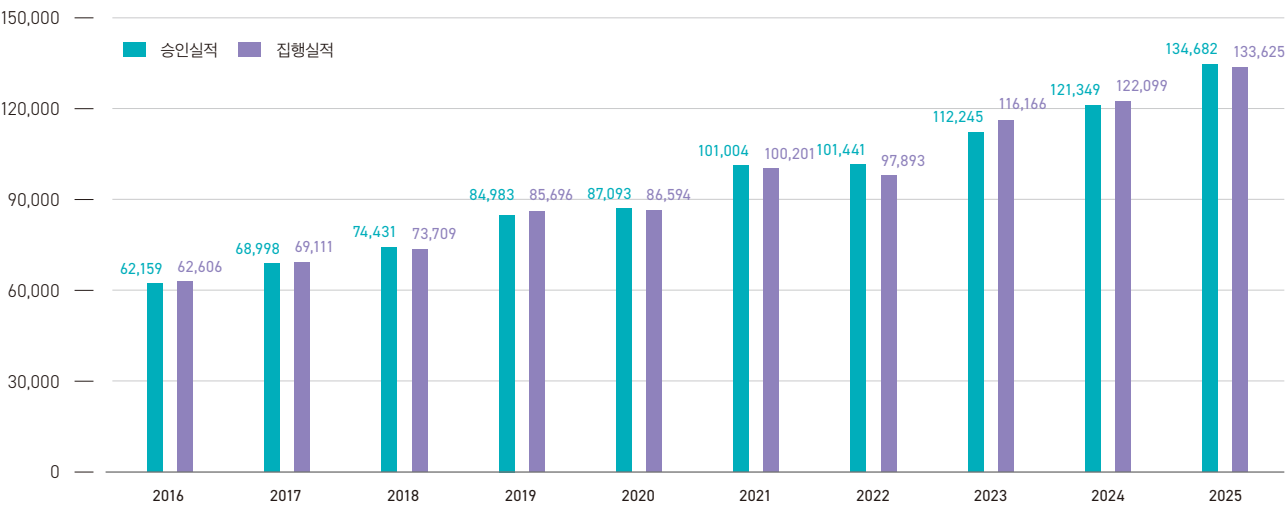
나. 수입기반자금대출

수입기반자금대출은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내에서 주요 자원을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자원을 확보·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시설건설 자금을 제공하며,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품을 제작하는 해외 수출자에게 제작금융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기존의 수입자금대출이 지원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을 대출대상으로 한정했던 반면 수입기반자금대출은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도입 이후 수입기반자금대출은 자원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운용 범위와 방식을 단계적으로 보완했다. 2020년에는 한도방식 운용이 가능한 여신 종류에 수입기반자금대출을 추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과 자원 장기구매계약(Offtake Contract)을 체결한 해외자원개발기업의 시설 및 운영 자금 또는 자원 개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또 유·가스, 전략자원, 희유금속 등

수입자금대출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수입자금대출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기업	· 국가경제의 성장,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 「개발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 제외(에너지 관련 물품은 포함)
대출금액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금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우 9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대상물품 등에 대한 과거 수입실적(개발수입 및 시설재수입 실적 제외) 기반으로 지원 가능 · 대출기간 6개월: 수입실적의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수입실적의 60% 이내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2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 시: 6개월, 1년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거치기간 3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 시: 만기 일시상환

주요 자원의 안정적 수입과 관련된 시설자금 용도의 수입기반자금대출에 대해 1년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선집행을 허용했다. 2022년에는 수입기반자금대출의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수입자금대출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수입자금대출 대상자 본인과 해당 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 제도의 활용성 및 정책효과를 제고했다.

수입기반자금대출의 최초 지원 사례는 2014년 보령 LNG 수입터미널 건설사업(300억 원)이었다. 보령 LNG 수입터미널은 국내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수은의 지원을 통해 주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

수입기반자금대출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기업	·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2014.12.23 보령 LNG 터미널 조감도

적 도입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수은의 신속한 금융지원이 성공적 자원수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앞당겼다.

2021년에는 싱가포르 소재 원자재 트레이딩기업 트라피구라(Trafigura Pte. Ltd.)에 우리 기업에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대출 1억 2,000만 달러 및 채무보증 3,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대출 1억 5,000만 달러 및 채무보증 1억 4,990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 거래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연간 광물 공급금액을 여신잔액의 3분의 2 이상 유지하고 그중 배터리용 광물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는 최초 공급유지조건부 금융지원 사례로, 트레이딩 기업에 구체적인 자원 공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원안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에 기여했다.

2024년에는 호주 아라푸라(Arafura) 희토류 개발사업에 대출 7,510만 달러 및 채무보증 7,49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호주 중소 광산기업 아라푸라가 호주 중북부 지역에서 희토류를 채굴·가공해 전기차용 영구자석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Nd)과 프라세오디뮴(Pr)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높은 중



2024.07.01 호주 희토류 광산 개발사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식

국산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2016년에는 수입기반자금(간접대출)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주요 원자재 등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외국 기업에까지 전대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3. 해외사업 관련 대출

가.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투자자금대출은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해외 자회사에 필요한 대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기관으로부터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이내 여부, 투자계획이 시설 규모, 시장 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자본비용 등에 비춰 적정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 신고수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은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업종에 3년 이상 사업경력을 가진 국내기업이며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은 수은 설립 초기부터 운용돼왔다. 지원 초기 중요 물자 및 자원 확보, 경제협력 증진, 해외교민 지위 향상, 시장개척과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투자 등으로 제한됐던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됐고, 1994년 정부가 해외투자 업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수은도 제한사업을 제외한 모든 해외투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999년에 해당 해외직접투자지침까지 폐지되면서 2002년 수은 역시 지원금 지엽종 규정을 없앴다. 이후 2005년 「수은법」 개정을 통해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참여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상업금융기관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2014년에는 지원대상을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

해외투자자금대출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기업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자금용도	· 해외직접투자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기간 1년 미만의 대출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상 국내기업으로 규정했다.

대출한도는 설립 초기 소요자금 총액의 70%였으나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 1999년 대기업 70%, 중소기업 80% 등으로 설정했고 자원개발사업에 한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90%로 정했다. 이후 2004년 자원개발사업은 100%까지, 2005년 첨단기술 습득 목적의 해외투자사업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대출한도는 이후 한 차례 더 상향조정돼 소요자금 총액의 70%에서 80%로 늘어났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90%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출이율은 도입 초기에 수출자금대출과 같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했으나 중요물자 및 자원 확보사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1993년부터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해졌고 1999년에는 원화표시 대출의 취급 근거를 마련했다. 2006년부터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우대금리를 도입해 시장조정을 차감적용 한도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제공했으며, 2009년부터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대출이율을 기준금리와 기간가산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치기간도 점차 개선했다. 2002년에는 3년 이하의 단기대출 중 우량기업에 한해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했고 자원개발사업에는 5년의 거치기간을 인정했다. 2007년부

터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거치기간을 확대해 일반사업은 3년에서 5년, 자원개발사업은 5년에서 7년으로 거치기간을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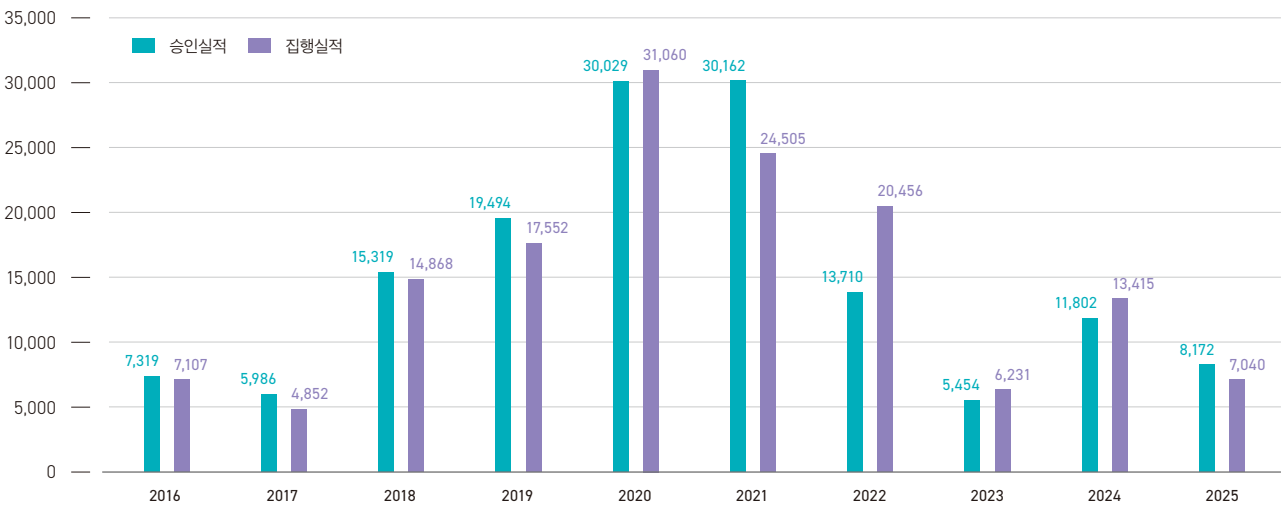
이후에도 제도 보완을 지속했다. 2016년에는 ‘수출형 신성장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우대지원산업으로 선정·고시된 수출형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소요자금의 80%에서 90%로 상향함으로써 전략산업 중심의 해외투자를 촉진했다.

2019년에는 해외 M&A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편했다. 해외 M&A 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되 동일 사업에 대한 총 대출금액은 인수금액의 80% 이내로 제한했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의 지원실적은 1980년대 초반까지 자원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자원개발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초기에는 원목개발이 주를 이뤘으나 1980년대 초반에는 유전 및 유연탄광 개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제조업과 무역업 중심으로 전환됐으며 M&A 형태의 해외투자도 등장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해외투자자금대출은 2005년 이후 자동차 및 부품산업 중심으로 확대됐으며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지원 실적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2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등 관련

해외투자자금대출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해외투자 유치정책 등 영향으로 2021년 승인 3조 162억 원 및 집행 2조 4,505억 원, 2022년 승인 1조 3,710억 원 및 집행 2조 456억 원 등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대표 지원 사례로는 2021년 SK하이닉스의 세계 1위 미국 종합반도체회사인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지원 건(8억 달러)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 인수사업이기도 했다.

나. 해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수출시장의 개척 및 확보, 중요물자 및 주요자원의 확보, 외국과의 경제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또는 비영업조직인 해외지사 등을 통해 수행하는 해외사업에 대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해외시장 개척이나 수출 증대 효과가 큰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개발·습득 사업 등이다.

해외사업자금대출 또한 해외투자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로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쳤다. 1999년에는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소요금액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고 2002년에는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만기일시 상환을 허용하고 석유·가스 등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을 5년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2004년에는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소요자금 총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2005년에는 대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또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사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가산율을 일정 범위 내 차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소요 자재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만 자금지원이 가능했으나, 2014년 여신제도 개편으로 이러한 제한이 폐지돼 우리 기업이 수행하는 해외사업은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외사업자금대출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해외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나 자원개발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고도의 탐사·개발기술을 요구할 뿐 아니라 사업 성공 가능성도 낮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

해외사업자금대출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기업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법령을 제정해 제도적 지원을 이
어왔으며, 수은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일반 해외사
업 관련 대출과는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우대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통상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생산분배계
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PSC)에 기반한 개발
참여 방식으로 이뤄져 이에 대해 해외사업자금대출 형
태의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제도 개선은 꾸준히 진행됐다. 2007년에는 기존
개발·생산단계 중심에서 탐사단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했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투자자금대출
및 해외사업자금대출에 한도 방식 운용을 도입해 자금
의 활용도를 높였다. 2009년에는 이 한도의 사용 기간
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기존 개발 직전 단계에 국
한되던 탐사자금 지원범위를 초기 탐사단계까지 확대했
다. 또 지원 광종을 기존 8대 전략광종에서 산업소재용
희유금속까지 확대했고 업체별 연간 자금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0년에는 탐사사업의 사업주가 자
원공기업이나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을 고려해 대출한
도를 연도별 탐사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해 설정했고, 10대 핵심 희유금속 탐사사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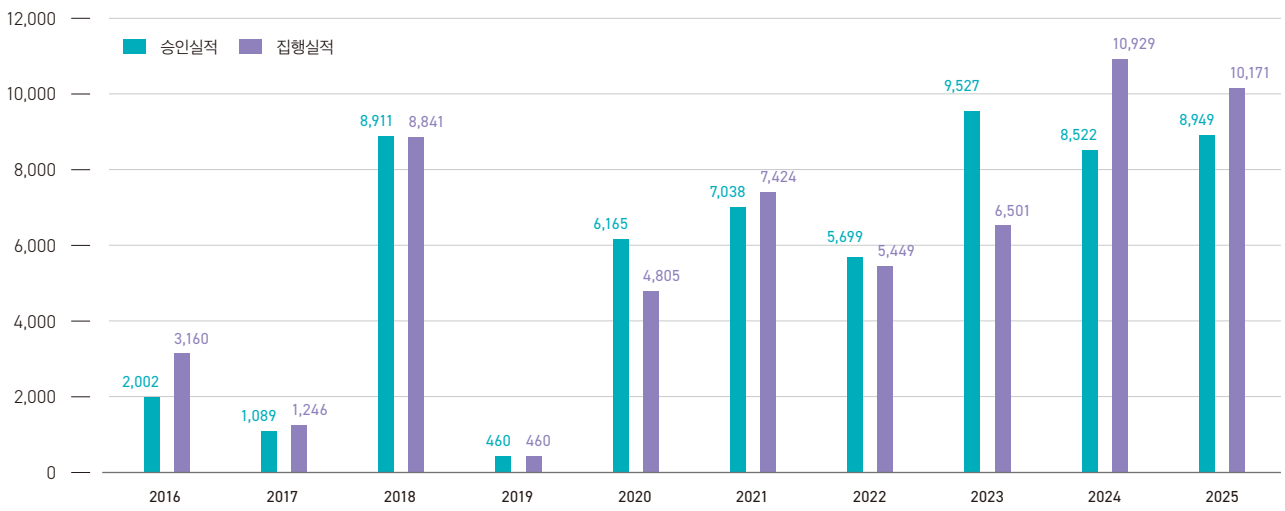
경우 대출한도를 연도별 사업비의 100%까지 확대했다.
2011년에는 사업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부득이한
경우 외국 정부나 외국인도 차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
정을 개정했으며 2013년에는 탐사자금의 중복지원을 방
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통지 절차를 신설하고 자금별 대
출 기간 범위 내에서 개별대출의 기간 제한을 완화했다.

해외사업자금대출은 선박금융에도 활발히 활용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해운사들이 부채비율
을 줄이기 위해 보유하던 선박을 해외 선사에 매각한 뒤
재용선(Sale and Lease Back)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
는 국내 해운사의 높은 용선료 부담으로 이어졌다. 당시
수은은 해외선주를 대상으로 국내 조선소의 선박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국내 선주를 대상으로 한 선
박 구매자금 지원제도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은은
정부 협의를 거쳐 2003년 해외사업자금대출 또는 현지
법인사업자금대출 형태의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
를 신설했다. 이는 국내 해운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
고 외화유출을 방지하며 국내 조선소의 안정적 수주물
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외항선박은 국내 해운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외
항-외항 또는 내항-외항 간 운송사업에 투입되는 선박

해외사업자금대출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을 말하며, 해운사는 외항선박 운항을 통해 국제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인다.

외항선박 구매자금은 해운사가 직접 차주가 되면 해
외사업자금대출, 해운사가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이나 해외 자회사가 차주가 되면 현지법인사업자
금대출로 지원된다. 전자의 경우 선박은 대한민국에 등
록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통상 파나마나 마셜아일랜드
등 편의치적국에 등록된다. 금융지원 조건은 국외 선주
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대상 선박 금융지원에
적용되는 선박 SF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
에 따라 지원대상은 국내 조선소에서 신규 건조되는 외
항선박으로 한정되며 내항선박, 여객운송선박, 외국 조선
소 건조선박은 제외된다. 다만 중고선 구매자금이나 외
항선박 리파이낸싱 지원의 경우에는 외국 건조선박에 대
해서도 일부 지원이 허용된다. 2013년부터는 국내 해운
사의 자금조달 여건개선을 위해 만기 일시상환(Balloon
Payment) 조건을 허용하고 대출기간도 1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수은은 2003년 최초 지원 이후 2025년까지
총 381척, 101억 2,363만 달러를 지원했다. 외항구매자
금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해운업은 국제 경쟁

력을 회복해 2021년 독일을 제치고 중국, 그리스, 일본
에 이은 세계 4위로 도약했으며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
지하고 있다.

다.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은 국내 모기업이 설립한 해외 자
회사(현지법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영자
금, 출자자금 및 대여금(직접투자자금) 등 각종 사업수행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차주
는 국내 모기업이 아닌 해외 자회사가 되며 이때의 해외
자회사는 국내 모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외국기업으로 해외 손회사나 증손회사 등을 포함한다.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취급 근거는 1986년 「수은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당시 수은의 해외투자자금대
출을 지원받아 설립된 외국법인만이 자금 지원대상이
되도록 명시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폭넓게 지
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1993년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해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해외투자자금대출 수혜 여부
에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1994년 '외국
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기본운영규정 제정으로 본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직접투자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의 경우 설립 5년 이상 대기업 매출액의 30%, 5년 미만 설립초기 및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 우대
대출기간	· 운영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격적인 취급을 시작했다. 2000년 1월 기본운영규정 폐지 이후 대출요건 등은 여신규정으로 이관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2001년에는 회전 한도 방식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2002년에는 대출한도를 소요자금의 100%까지 늘리고 우량기업에 한해 만기 일시상환도 허용했다. 2006년에는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중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최대 25년으로 연장했으며, 2015년부터는 운영자금은 3년 이내, 운영자금을 제외한 시설자금 등은 최대 30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했다. 2014년 「수은법」 개정 때에는 자금 용도를 확대해 기존 시설자금, 직접투자자금, 운영자금에 M&A 자금·제작자금·단기 Bridge Loan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했다.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지원실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다가 IMF 외환위기 직후 일시위축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이 급증하면서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2020년대 초에도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실적 이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넥센타이어 유럽현지법인(Nexen Tire Europe s.r.o.) 지원건을 들 수 있다. 체코공장 건설

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2017년 6,000만 유로(1차) 및 2023년 6,000만 유로(2차)를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넥센타이어의 매출 비중이 높은 유럽지역 내 대규모 생산거점 및 안정적 영업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에도 활용됐다. 대표 지원 사례로는 2012년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대출 7억 달러 및 채무보증 3억 달러), 2013년 호주 로이힐 철광산 개발사업(대출 5억 5,000만 달러, 채무보증 4억 5,000만 달러)을 들 수 있다. 2023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사업에 대출 1억 6,700만 달러 및 채무보증 1억 6,690만 달러를 지원해 이차전지의 필수 원자재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투자개발형 사업의 중요도 증대 등으로 인프라·플랜트 건설사업에도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이 지원됐다. 2010년대 이후 저유가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우리 기업의 단순도급 중심 수주 여건이 악화되자 투자·건설·운영 전 단계를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수은의 입장에서도 수출금융에 적용되는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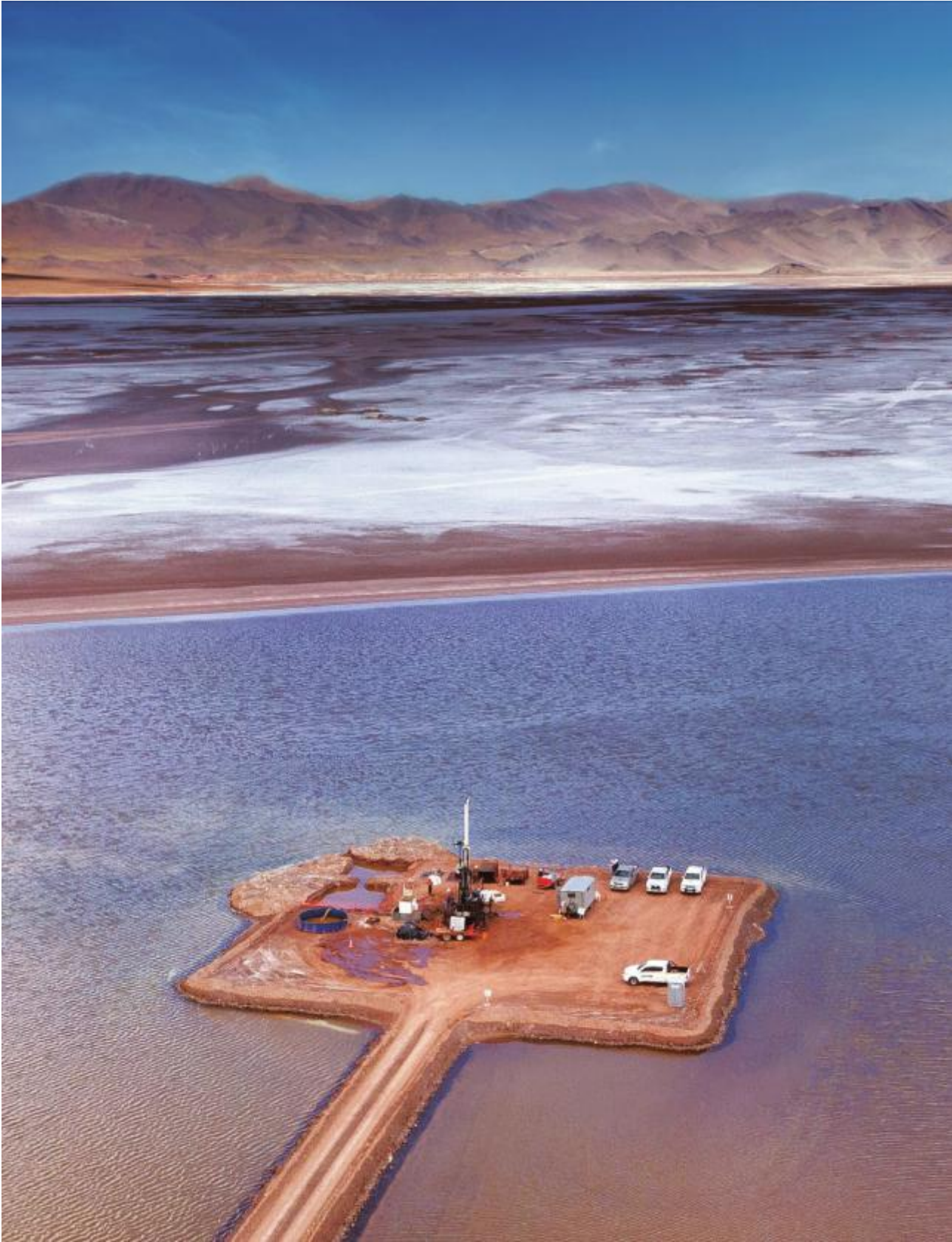
2차래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설립된 넥센타이어 체코공장

가이드라인의 제약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금융지원이 가능하고 지분투자자와 연계한 패키지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컸다. 2011년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사업(대출 1억 1,000만 달러)과 2014년 칠레 켈라(Kelar)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대출 2억 1,000만 달러 및 채무보증 1억 7,000만 달러), 2018년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대출 3억 8,000만 달러 및 채무보증 3억 5,600만 달러) 등 다수의 지원 사례를 창출했다. 2020년대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도 본격 활용돼 2020년 아일랜드 배터리 에너지저장설비 건설사업(대출 6,100만 달러), 2024년 UAE 아즈반(Ajban) 태양광발전사업(대출 1억 5,000만 달러), 2025년 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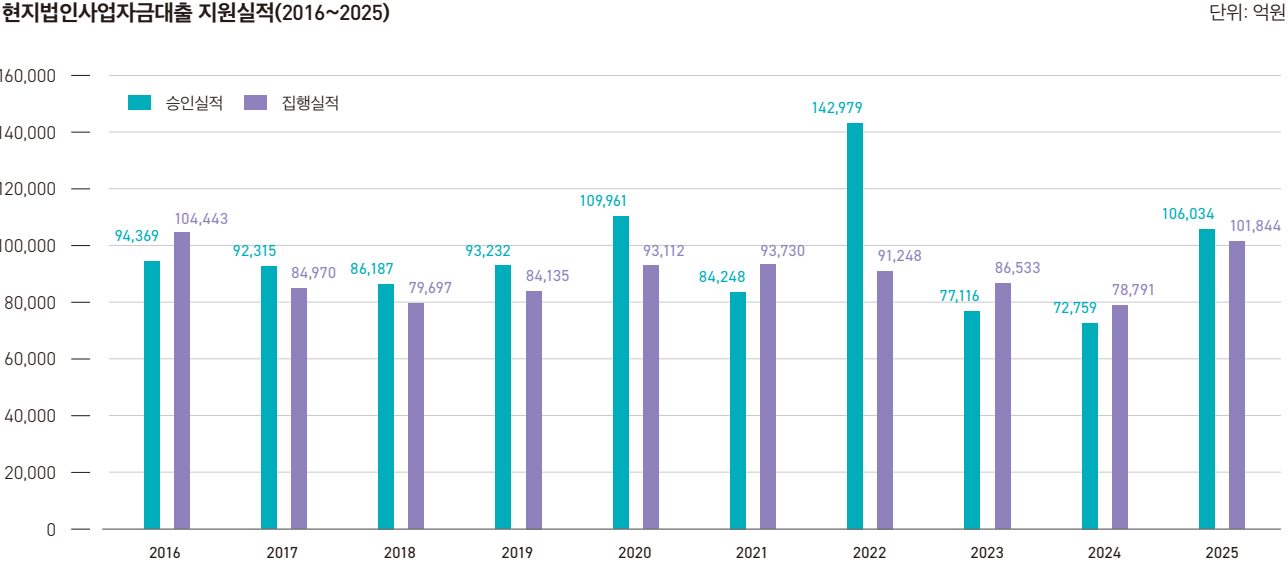
디아라비아 사다위(Sadawi) 태양광발전사업(대출 2억 2,500만 달러) 등 지원에 활용됐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을 통한 전대금융 지원도 이루어졌다. 2007년 이전에는 수출지원용 전대금융(현 수출기반자금(간접대출))만 취급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이 급증하면서 현지 영업 영위를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은은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현지 생산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투스텝복합금융’을 신설하고, 수출지원 시와 동일하게 전대은행에 대출한도를 설정하되 최종 수혜자를 한국산 물품의 수입자가 아닌 국내기업 현지법인인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여신 제공을 통해 포스코홀딩스가 확보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현지 해외기업 등으로 했다.

이후 2014년 4월 「수은법」 개정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 당시 최종 수혜자가 국내기업 현지법인인 경우 현지법인사업자금(간접대출)으로, 국내기업 현지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현지 해외기업인 경우 해외사업활성화자금(간접대출)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

현지법인사업자금(간접대출)은 2007년 인도 ICICI은행과 첫 크레딧라인 계약을 체결한 이래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을 제공했으며 2023년에는 총 지원액이 5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표 지원 사례로는 필리핀 PSPC 반도체 생산설비 지원(2014년 3억 4,000만 달러, 2015년 3억 9,000만 달러 등)을 비롯해 2020년대 두산중공업 인도 법인, 현대캐피탈 브라질 법인, 만도 튀르키예 법인 등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건이 있었다. 국외 중개기관을 활용한 온렌딩 방식의 현지법인사업자금(간접대출)도 지원했다. 일례로 수은은 2021년 KEB하나은행 및 신한은행의 멕시코법인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 4개 사의 현지법인에 자금을 제공했다.

라.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은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해외사업 또는 해외투자 활성화’란 신규 해외사업이나 해외투자의 추진, 기존 사업 규모의 확대, 나아가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를 방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는 2014년 「수은법」 개정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으로 신설됐으며 기존에는 외국정부 출자자금 대출 등이 일부 기능을 담당했다.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은 우리 기업 해외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의 거래상대자 사업자금 지원에 활용됐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2015년 미국 Sabine Pass LNG 사업(대출 6억 달러 및 채무보증 4억 달러), 2020년 사우디 Yanbu 4 해수담수화사업(대출 2억 4,500만 달러), 2021년 호주 North East Link 터널 건설사업(대출 6억 5,400만 달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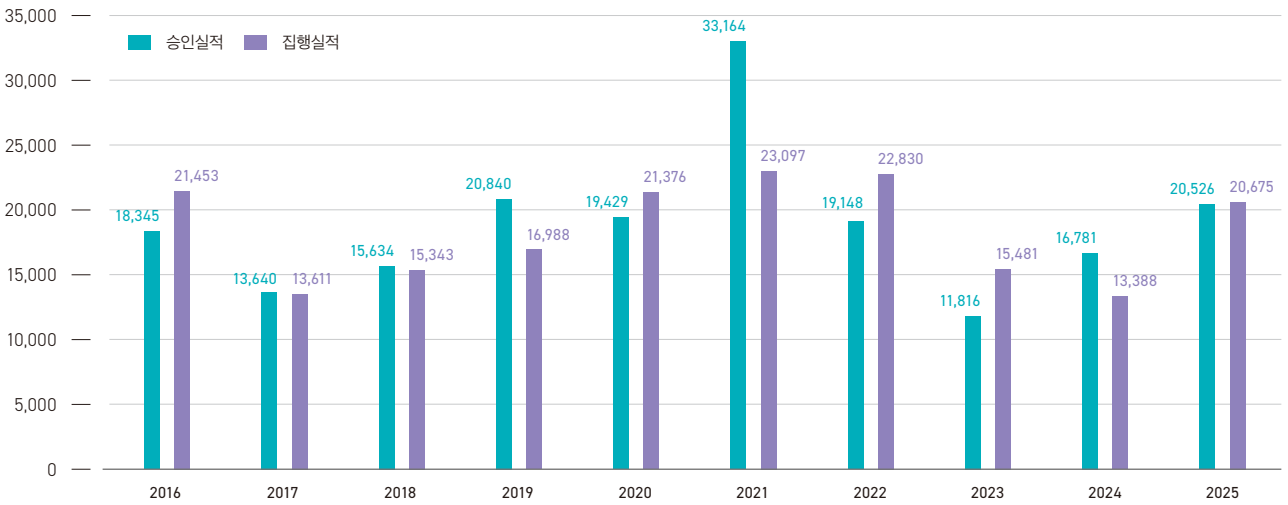
또 2007년 투스텝복합금융으로 도입된 해외사업활성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기업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대상의 간접대출방식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회사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거래에 대한 결제자금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회자금(간접대출)도 꾸준한 성과를 냈다. 2020년에는 리스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금융회사를 통해 현지 수입자 및 구매자의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해외사업활성화자금(간접대출)은 우리 자동차기업 현지법인 제품을 구매하는 현지기업의 수요 등을 바탕으로 2010년 4억 달러, 2013년 전대금융 단일상품 최초 10억 달러 등 지원 실적을 달성했다. 이외 무역금융 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전대은행에 대한 직접대출을 취급할 때에도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이 활용됐다.

마. 대외경제협력관련대출

대외경제협력관련대출은 2014년 「수은법」 개정에 따른 여신제도 개편 이전 운용된 대외경제협력자금, 특별계정 대외경제협력자금대출, 경험증진자금대출(EDPF), 개도 국민간투자자금대출(PDIF)을 포함하는 제도이다. 2019년 도입된 특별계정 대외경제협력자금대출은 초고위험국(국제신용등급 B+ 이하 국가)에 우리 기업이 수출 또는 해외투자하는 인프라사업 등 지원을 위해 설치된 특별계정을 통한 금융 제공에 사용됐다. 주요 지원 사례는



대외채무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그레이터 창화2 해상풍력사업

나이지리아 LNG 액화플랜트 건설사업(3억 7,500만 달러), 탄자니아 철도차량 수출사업(1억 5,200만 달러) 등이 있었다. EDPF 및 PDIF는 제3절에서 후술한다.

4. 채무보증

가. 수출금융보증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차주 앞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발생 시 수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1980년대 들어 자본재 수출 관련 단일사업의 규모가 확대돼 거액여신 취급에 따른 자금부담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해 국제상업은행과의 협

조금융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은은 1981년 6월 11일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대외채무보증을 부대 업무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입자·구매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점에서는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험의 중장기수출보험과 유사하지만, OECD 수출신용협약은 대외채무보증을 ‘Above Standard Product’, 중장기수출보험을 ‘Below Standard Product’로 분류해 리스크 부담 범위가 다른 별도의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채무보증 상품은 지원대상 대외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으로 분류된다.

2002년에는 「수은법」 개정을 통해 부대 업무로 취급

하던 대외채무보증을 외국환 업무에 근거해 본업무화했으며, 같은 해 국내기업이 폴란드에 PET 수지 제조 플랜트를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과 함께 해외사업금융보증 2,70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최초 지원 사례를 창출했다. 선박부문에서는 2007년 프랑스 CMA CGM의 1만 1,4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거래에서 최초로 채무보증이 활용됐다. 이후 수은은 본격적으로 대외채무보증을 취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인프라·플랜트, 선박 등 대형 자본재 수주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금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에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채무보증 지원 관련 법적 제약요인이 일부 해소됐다.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연계되어 지원돼야 하고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했으나, 미국 달러화·유로화·일본 엔화·영국 파운드화·스위스 프랑화·호주 달러화·캐나다 달러화·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현지화 거래의 경우 대출 연계 없는 대외채무보증 단독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현지화 금융 문제 등으로 개도국 인프라 사업 등 진출에 곤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

는 효과가 있었다. 또 현지화 거래 이외에도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합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대출 연계 없는 보증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중장기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해외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여력이 확충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수은은 2025년 대만 그레이터 창화 2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대만 현지통화(TWD) 기준으로 대출 연계 없이 미화 1억 5,3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대외채무보증(수출금융보증)을 지원했다.

수출금융보증은 수은의 지원대상 수출거래와 관련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해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주채무자는 수출 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자이며 보증수혜자는 주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거나 채무증권을 인수한 자, 또는 기타 계약상 채권자이다. 국내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보증 시 대내채무보증으로, 국외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보증 시 대외채

무보증으로 분류된다.

수출금융보증 중 선박채권보증은 국내 조선사가 제작하는 선박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해외선주가 프로젝트 채권으로 발행하고 수은이 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상업은행들이 선박금융을 대폭 축소하면서 발생한 유동성 경색을 선진 금융기법으로 풀고자 내놓은 대안 금융상품으로, 해외선주 입장에서 금융조달 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해외 연기금, 보험사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은은 세계 최초로 2013년 미국 스콜피오탱커스(Scorpio Tankers)의 정유운반선 18척 계약건과 관련해 발행된 1억 2,500만 달러 채권에 보증을 제공했다. 이후에도 중국계 리스사를 활용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구조로 선박채권보증이 지원됐다.

나. 수입금융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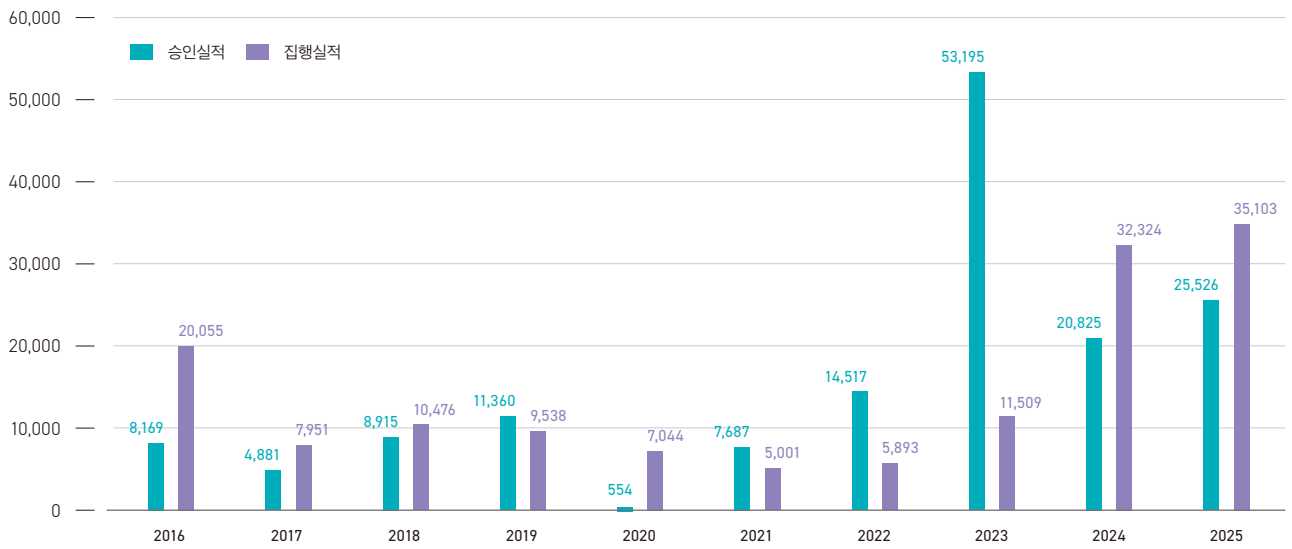
수입금융보증은 수은의 지원대상 수입거래와 관련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해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보증

하는 제도이다. 보증의 주채무자는 수입 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자이며 보증수혜자는 주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거나 채무증권을 인수한 자, 또는 기타 계약상의 채권자이다. 국내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보증 시 대내채무보증으로, 국외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보증 시 대외채무보증으로 분류된다.

수입금융보증은 주로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사업 지원에 집중됐다. 수은은 2004년 미국 수출입은행과 F/A를 체결하고 화물항공기 수입에 대한 공동보증을 개시했으며 2007년에는 여객기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내 항공사가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 등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장기 대출을 받을 때 미국 수출입은행, 프랑스 무역보험공사(COFACE)가 이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공하면 수은은 보증기관에 대해 복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했다. 202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Aramco)와 F/A를 기반으로 원유 수입거래 지원 등을 위해 약 1조 4,200억 원 규모의 수입금융보증을 지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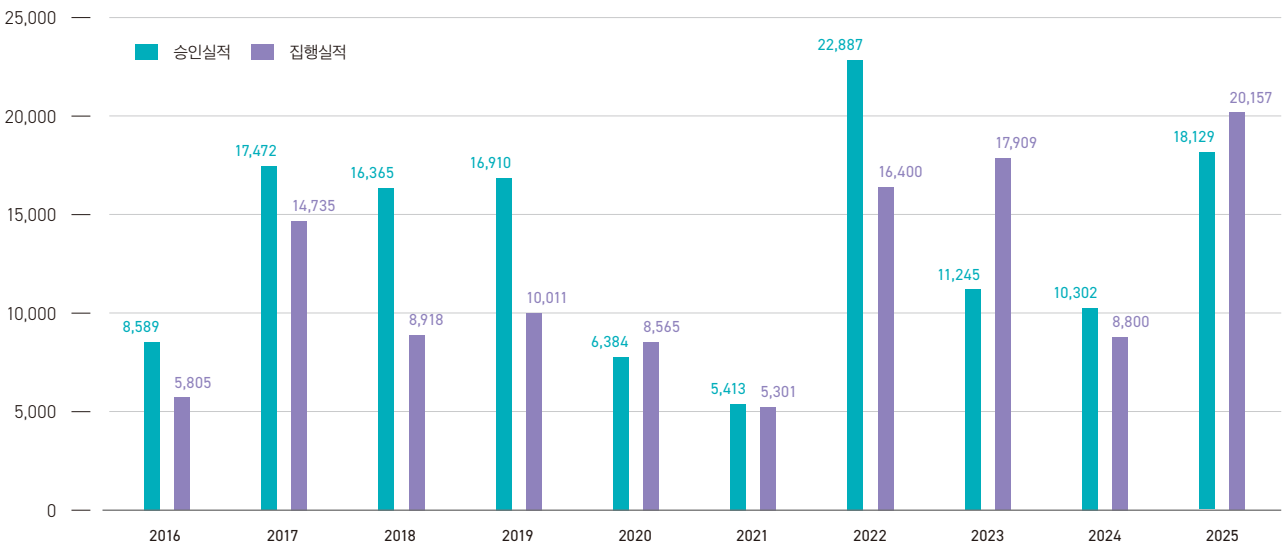
수출금융보증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해외사업금융보증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다.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은 수은의 지원대상 해외사업 관련 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대신 채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주채무자는 해외사업 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자이며 보증수혜자는 주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거나 채무증권을 인수한 자, 또는 기타 계약상의 채권자이다. 국내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보증 시 대내채무보증으로, 국외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보증 시 대외채무보증으로 분류된다.

5. 이행성보증

가. 수출이행성보증

이행성보증은 수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 외의 제3자(통상 금융기관)가 수출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은은 1977년 이행성보증 업무를 개시해 우리 기업의 대외거래 성사 및 수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했다. 이행성보증 상품은 지원대상 대외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으로 분류된다.

수출이행성보증은 수출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입찰보증(Bid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Refund Guarantee),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Warranty Bond), 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등 프로젝트의 단계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됐다. 보증 대상은 수출 촉진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관련된 제반 거래이며 국내기업 또는 해외 현지법인의 보증의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보증수혜자가 된다.

입찰보증은 입찰 참가자가 낙찰 시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지급보증이다. 통상 입찰유효기간은 90일에서 6개월로 짧으며 보증금액도 입찰금액의 3~5% 수준으로 비교적 적다. 선수금환급보증은 발주처가 착공비용 등으로 지급한 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급보증으로 수출자가 성능이나 납기 등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발주처에 선수금 상환 및 환금을 보장한다. 특히 선박 수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40~80%가 보증대상이 돼 전체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계약이행보증은 수출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통상 수출금액의 10~20%를 발주처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하자보수보증은 완공된 공사나 납품 품목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수할 의무를 담보하는 보증으로 보증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5~20%이다. 유보금보증은 발주처가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지급을 유보한 대금을 수출자가 수령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유보금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한다.

수출이행성보증은 도입 이래 주요 수주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특히 선박 및 해양플랜트 수출거래 지원에 선수금환급보증이 집중 활용됐다. 선박 건조계약 체결 시 발주사는 선박대금의 일부를 선수금 형태로 조선사에 지급하는데 조선사의 귀책으로 선박을 기한 내 인도하지 못할 경우 발주사가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용도였다. 이외에도 조선사의 귀책으로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는 계약이행보증과 선박 수출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하자보수보증 등이 지원됐다. 선박 발주 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은 필수 조건으로 전체 수출이행성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01.14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개소식

2000년대 중반까지 수은은 높은 신용도와 국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선박 수출이행성보증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해외 선주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때 선수금환급보증 발급기관으로 수은을 지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산업은행 및 주요 시중은행이 국내 조선사의 우수한 제작이행능력과 안정적인 건조실적을 근거로 선박 수출이행성보증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했다. 이 시기 중국의 고도성장, 해운시장 확대 등으로 선박발주가 급증하고 유가상승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출이행성보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도 컸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세계 경기침체, 2014년 국제유가 급락 등 영향으로 조선업 전반이 급속히 위축됐고 부실 위험도 커졌다. 이에 수은은 수출이행성보증 심사를 한층 강화했다.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를 설립해 사업성 평가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해양플랜트 건조계약서 표준 심사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계약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과도한 헤비테일(Heavy-tail) 거래 조건 여부 등에 대해 심사했다.

한편 수출이행성보증은 해외 인프라·플랜트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활발히 지원됐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수주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13년 정부가 발표한 '해외건



2015.07.09 해외건설·플랜트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체결식

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수출이행성보증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보증심사 개선 등 과제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은 최대 0.18%p, 중견기업은 0.07%p, 대기업은 0.05%p까지 보증수수료를 인하했다. 2014년에는 상생형 수주이거나 사업성 평가가 우수한 경우 보증수수료를 최대 0.15%p 추가로 인하하는 '상생협력 보증제도'를 도입했고, 수은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의 공동수주 시에는 한 단계 상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상생보증'도 실시했다. 심사 기준을 기업의 신용도 중심에서 프로젝트의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작능력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도 이뤄졌다. 이에 더해 보증거래별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고 대기업과 공동수주한 경우에는 선수금 관리요건을 완화했다. 또 담보제공기관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기관별 한도 제한을 완화해 수출이행성보증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했다.

2015년에는 유관 금융기관과 함께 '공동보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협약기관 및 시중은행이 함께 사업성을 평가하고 공동으로 이행성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간 리스크를 분담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10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가스공사의 키안리(Kiyanly)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을 수주한 현대엔지니어링의 1차 협력사인 성장이엔씨에 대해 최초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협약기관 공동으로 970만 달러의 이행성보증을 제공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에서 양호 등급(B+)을 받은 이 프로젝트에는 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이 각각 25%씩 동일한 비율로 보증을 제공했다.

2023년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방위산업공제조합 등 인정 보증기관을 추가해 수출이행성보증의 지원 저변을 확대했다. 같은 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Amiral) 석유화학설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총 4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대규모 이행성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했으며, 이듬해인 2024년에는 해당 사업에 총 10억 달러(대출 6억 달러 및 채무보증 4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 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모범적 선례를 창출했다. 2024년에는 공제조

합 보증을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인 수주 규모와 자금 소요를 반영해 공제조합의 건별 보증한도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보증 활용 여력을 확대했다.

나. 수입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은 수입 계약에서 요구되는 이행 사항에 대해 수은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거래와 관련된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 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 등으로 구분되며, 국내기업 또는 해외 현지법인의 보증의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보증수혜자가 된다.

수입이행성보증은 주로 항공기 리스 관련 거래에 활용됐다.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나 엔진을 해외 리스사로 부터 임대할 때 리스계약에 따라 정비이행보증(Maintenance Reserves)과 임차보증(Security Deposit) 등 이행성보증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를 수입이행성보증을 통해 지원했다. 정비이행보증은 리스사가 항공기,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정비를 국내 항공사에 의무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증이며, 임차보증은 항공기 및 엔진 임대차 계

약에서 임차료 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증이다.

다. 해외사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은 해외사업 관련 계약에서 요구되는 이행 사항에 대해 수은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 등을 지원하며, 국내기업 또는 해외 현지법인의 보증의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보증수혜자가 된다. 해외사업이행성보증은 주로 해외건설공사 지원에 활용됐다.

2021년에는 해외사업이행성보증의 외화가득률 요건을 완화해 사업의 실질을 반영했다. 해외건설공사는 기자재 및 인력의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아 일률적인 외화가득률 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였다. 엔지니어링 역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술용역의 특성상 수주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외화가득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외화가득률 요건을 폐지했다.

6. 외국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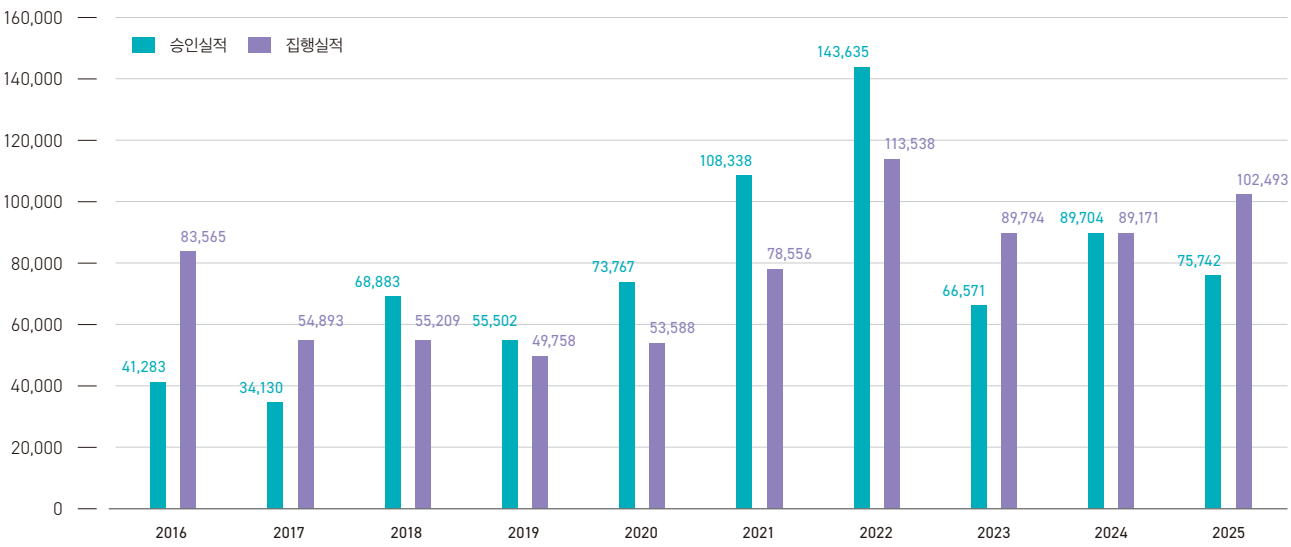
가. 수출 관련 외국환

수은의 무역금융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업은행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위한 조치로 1998년 무역어음재할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됐다. 수은은 부대 업무로 취급하던 외국환 업무를 2002년 「수은법」 및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해 본 업무화하고 취급 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며, 같은 해 무역금융을 전담하는 외환업무실을 신설했다.

수출 관련 외국환업무로는 무역어음재할인, 포페이팅(Forfaiting), 수출팩토링(Factoring),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신용장 통지 및 확인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수은은 2020년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업무도 도입했다.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은 수입자가 공정률에 따라 대금지급 확약서를 발급하면 수은이 이를 할인 매입해 수출자에게 선지급하는 제도로 인프라·플랜트 건설 등 장기간에 걸쳐 대금이 회수되는 수출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수단이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2021년 파나마 메트로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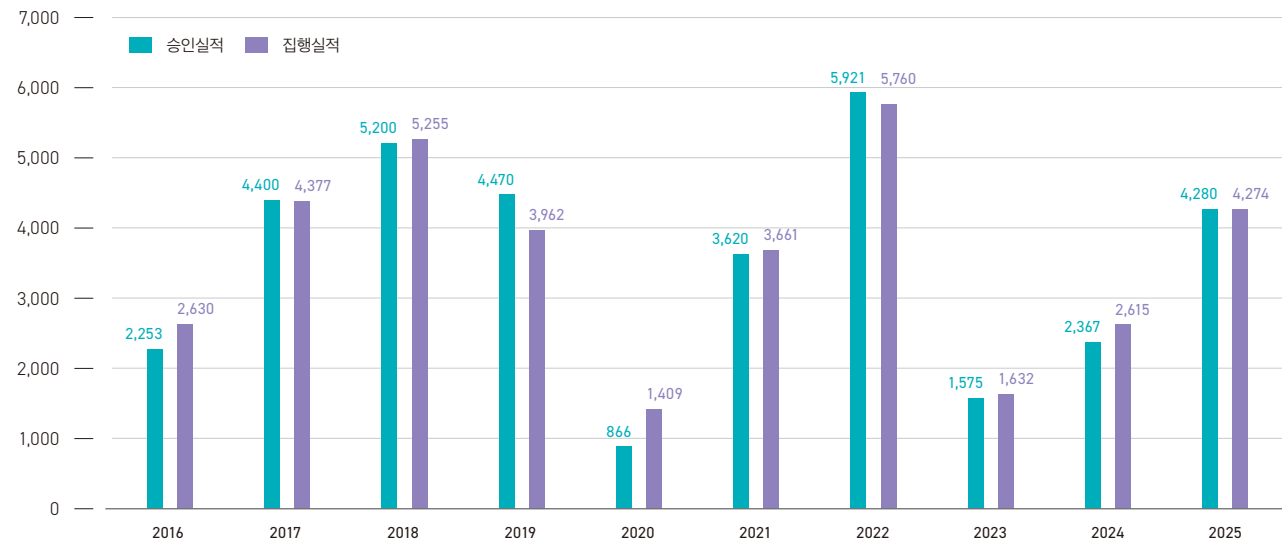
수출이행성보증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지원실적(2016~2025)

단위: 억원



포페이팅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기업	· 신용도가 양호한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기업
대상거래	· 당행 기준 일정 등급 이상 소재국가의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중계무역포함)
대출통화	· 달러, 엔, 유로 등
대출금액	·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상 5,000만 달러 이하
대출기간	· 30일 이상 2년 미만
채권보전	· 신용

선 건설사업(매입 회전한도 5억 5,000만 달러), 2025년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해저터널 건설사업(매입 회전한도 5억 달러) 등이 있었다.

무역어음재할인은 IMF 외환위기 당시 마비된 국내 상업은행의 무역금융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수은은 1998년 5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수출입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같은 해 6월 ‘수출입금융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수출환어음에 대한 재할인 업무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단기 외화자금의 최종 조달창구로서 기능했으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은행’ 역할을 수행했다.

무역어음재할인은 이후에도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국내 외화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던 상업은행의 수요가 급증하며 당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다시 한번 그 역할을 분명히 했다. 무역어음재할인은 2020년 한 해 동안 5조 1,626억 원이 집행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수준이었다.

포페이팅은 수출품 제작 역량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개도국과의 거래에서 겪는 자금조달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수은은 ‘개도국 무역촉진 프로그램 전담작업반’을 구성하고 24개 국 128

개 우선지원 대상 은행을 선정했으며 같은 해 삼성물산의 중국 HDPE 수출거래에서 발행한 28만 2,000달러의 수출환어음을 최초로 매입했다. 2008년에는 2차 포페이팅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을 소구조건으로 1차 매입한 후 수은이 이를 다시 무소구조건으로 2차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시중은행은 수출기업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수은은 국외은행의 국가·신용위험을 인수함으로써 리스크를 분담한다. 2차 포페이팅은 시중은행의 영업망을 활용해 지원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으며, 이후 2차 팩토링으로도 확장됐다.

2009년에는 외화유동성 확보 등 목적의 포페이팅 수출채권 유동화 업무를 개시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외국계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1차 시장을 넘어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매입·매각이 가능한 2차 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수은은 2005년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팩토링을 도입했다. 수출팩토링은 사후송금방식이나 D/A방식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해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수은은 국내 단기 무역금융시장에서 외국계 은행의 과점구조를 완화했고 신용장, 추심, 송금 등 모든 결제수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2014.01.20 경남은행과 포페이팅 및 수출팩토링 업무협약 체결식

수출팩토링 지원조건

자금구분	내용
대상거래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송금 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 ① 국내기업의 직접 수출거래 및 중계무역 거래 ② 국내기업의 위탁가공무역 거래 ③ 국내기업이 국외현지법인을 경유해서 판매하거나, 동 국외현지법인이 직접 국외 수입자 앞 판매하는 거래
대상 수출채권	· 직접 방식: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수입자 신용에 따라 최장 1년 이내) · 제휴 방식·디지털 공급망금융방식: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
대상기업	· 수출자: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 실적이 있거나 동일 해외 수입자와 고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수입자: 외국기업, 외국정부, 국내기업의 국외 현지법인 등
거래방식	· 수출거래 별로 수출채권 매입한도(수출팩토링 회전한도)를 설정해 한도 내에서 수출채권을 개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
채권보전	· 수입자 신용
비용	· 직접 방식·디지털공급망금융방식: 할인료 · 제휴 방식: 할인료 및 팩터 수수료(단, 요율은 수출자·수입자의 신용등급 등 세부조건에 따라 결정)



2022.12.13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공급망 안정화 및 상생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단기 수출금융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수출팩토링은 운영 방식에 따라 제휴 방식(Two-factor System)과 직접 방식(One-factor System)으로 구분된다. 수은은 제휴 방식 수출팩토링을 운영하기 위해 2005년 세계 최대 국제팩토링기구인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에 가입했다. 2020년에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디지털화 및 공급망 중심 거래 확산에 대응해 수출팩토링의 기능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했다. 2020년 디지털 공급망금융(Digital Supply Chain Finance: DSCF)의 취급 근거를 마련했고 내국수출팩토링 업무를 재개했다. 내국수출팩토링은 수출용 원자재 공급과 관련된 하청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제한 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다. 2022년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대림 등 구매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식의 내국수출팩토링을 지원했다. 2021년 공급망금융 방식 팩토링 상품도 새롭게 도입됐다. 도이치뱅크(Deutsche Bank)가 인수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입자(미국 Gap) 대상 수출채권을 수은이 재인수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그 시작이었다. 수은은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신용장 확인은 국외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해 수은이 수출대금 결제를 약속하는 제도이다. 2002년 뒤

르키에 가란티 방카시(Türkiye Garanti Bankası A.Ş.)가 발행한 26만 달러 규모 신용장에 대한 확인을 통해 SK 네트워크의 석유화학설비 수출을 지원한 것이 최초 지원 건이었다. 2004년에는 전대금융 표준계약서에 외국환 업무를 통합하면서 전대은행들의 신용장 확인 수요를 충족하기도 했다.

나. 수입 관련 외국환

신용장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은행이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이다. 신용장은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독립성’과 실제 물품이 아닌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수은은 1990년대부터 소맥,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고무, 목재 등 천연자원 수입을 중심으로 신용장을 개설했다. 이후 제도가 정착되면서 방위산업체의 원자재 및 시설재,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주관하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 등 정책금융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수은은 2005년 수입팩토링 업무도 개시했다. 수입팩토링은 사후송금(D/A 방식 포함) 거래로 발생한 수입팩토링 채권을 수은이 국외 팩토링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채권대금을 추심해 국외 팩토링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제3절

개발금융

1. 도입 배경과 목적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뿐만 아니라 시장성차관, 보증, 출자 등을 포함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제한된 정부 재정 하에서 개도국의 대규모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원과 민간자본을 결합하는 방식인 혼합금융(Blended Finance)과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시장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 활용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으로서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개도국 개발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확대, 개도국의 재정여건 악화 등 환경변화 속에서 기존의 수출금융이나 EDCF 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영역이 점차 확대됐다.

특히 개도국 공공부문 인프라사업의 경우 개발효과는 크지만 높은 위험으로 상업금융의 접근이 제한되는 반면, 사업규모는 대형화돼 전액을 정부 재정기반의 EDCF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은은 시장성 자금(수은 재원)을 활용하되, 정부 재정수단(EDCF)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금융 수단(독일, 프랑스도 각각 KfW Development Bank, AFD를 통해 시장차입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개발재원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선진국 시장 침체와 내수 한계 속에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ODA 확대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상차관(EDCF) 및 민간금융의 역할을 아우르는 경제증진자금(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EDPF)이 도입됐다.

한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외교·안보·경제 환경에 맞춰 DFI 및 ECA 등 정책금융기관의 개발금융을 활용(유

럽 15개 국, 미국 DFC, 캐나다 FinDev 등이 DFI 형태로 운용 중이며, 일본 JBIC과 호주 EFA는 자국 ECA가 DFI 기능을 수행)해 경제·안보 블록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래산업 패권경쟁 등 산업구조 및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외교 등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범용적인 금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선진국 DFI가 보유하고 있으나 수은에 부족한 기능을 확충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민간부문 개발금융 수단으로 개도국민 간투자자금대출(Private-sector Development Investment Facility: PDIF)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은의 개발금융은 국제 개발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책금융 수단을 전략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단순한 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을 넘어 국제협력금융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단계적으로 정립했다.

2. 경험증진자금

EDPF는 수은이 시장에서 차입한 민간자원을 바탕으로 개도국 개발사업을 ODA 조건으로 지원(정부자원을 통해 대출소요비용과 지원금리 간 차이를 보전)하되 우리 기업의 사업수주와 반드시 연계하지 않고 비구속성으로 지원하는 개발금융 지원수단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은은 제한된 정부재정하에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EDCF 중심의 ODA 유상자원의 다원화를 통해 원조자금과 상업금융 사이에 존재하던 중간 공백을 메움으로써 개도국 개발협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EDPF는 개도국 개발사업에서 원조자금과 상업금융 사이에 존재하던 중간 공백 영역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은이 시장자원과 정부재정을 적절히 결합해 개도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은금융의 외연은 기존의 수출금융 중심 구조에서 개발금융 영역까지 확장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용 측면에서도 융자지출 전액을 정부재정으로 부담하는 EDCF와 달리, 이차차이만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은 제한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ODA 요건을 달성하고 사업 규모 확대를 가능하게 해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DPF는 2013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공식화됐고 이후 「수은법」(2014.01) 개정을 통해 수은 내 운영 근거 등이 신설됐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법」(2016.01) 개정 등을 통해 EDCF의 이차(利差)보전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2016년 1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금융의 ODA 활용을 위한 운용방안이 의결됐으며 마침내 2017년 9월 수은 내 EDPF 취급규정 신설을 통해 새로운 ODA 프로그램으로 출범했다.

EDPF의 운용 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개도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원하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정한 ODA 인정요건을 준수하면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상 국가를 특정하지 않는 비구속성(Untied) 지원이라는 점이다.

OECD DAC 기준에 부합하는 ODA 적격국, 특히 EDCF 지원대상국 중 수은 국별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국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수은은 이들 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정부 보증이 있는 지방정부 또는 국영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EDPF는 비구속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교류증진 효과가 확보돼야 하는 운용원칙에 따라 개도국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들을 지원해 왔다.



네팔 UT-1 수력발전소 전경

EDPF 최초 지원사업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에 위치한 트리슐리(Trishuli)강에 216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UT-1 수력발전사업으로, 2019년 5월 수은은 우리 기업이 네팔 정부와 초기 사업발굴부터 건설·운영단계까지 협업하는 네팔 최대 규모의 PPP 발전 사업에 5,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사업에는 EDPF 외에도 수은금융 5,000만 달러를 비롯해 ADB, IFC, AIIB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 사업은 2015년 네팔 대지진 이후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허성자금 지원을 통한 사업성 확보로 우리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투자를 활용한 ODA(PSI ODA) 사례로 OECD에 보고됐다.

이후 EDPF는 2021년 9월 이집트 룩소르-하이담 철도 현대화 사업에 5,150만 유로의 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철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EDCF가 지원한 2억 5,200만 달러와 연계된 것으로 EDCF의 재원만으로 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형 해외사업 참여 기회를 증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2년 4월 2억 700만 달러 규모의 EDPF 금융을 지원한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건설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상수도 공급시스템(탐-도수로-정수장) 구축 카리안프로젝트 중 도수로 부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카리안탐(EDCF 지원)과 세르퐁정수장(수은금융 지원 예정)을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2023.08.30 건설 중인 카리안댐 전경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상수도 공급시스템 전 과정에 걸쳐 수은의 금융지원이 이뤄짐으로써 해외 유망분야에 대한 통합 금융지원모델, 이른바 'K-Finance Package'의 좋은 사례를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EDPF는 개도국 개발효과가 큰 인프라부문에 대한 금융을 수은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수은의 인프라 개발금융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ODA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이에 향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EDPF는 효율성과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지원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개도국민간투자자금대출

경제안보의 블록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우리 국익확보를 위해 협력 필요성이 큰 개도국 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개발재원과 자체 차입 여력에는 구조적인 한계와 제약이 존재해 개발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개발에 필요한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선진국 간 개도국 진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은은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의 한계

를 넘어 국익(Korean Benefit)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거래에 대해 보다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유럽과 북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도국 신흥시장 진출과 민간부문 개발, 나아가 개도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단순한 수출금융이나 전통적인 ODA를 넘어서는 금융지원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DFI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들 DFI는 기존 수출금융과 달리 비구속성을 원칙으로 해 개별사업의 개발효과를 우선하는 지원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개도국과 지원국 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개발금융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발금융기관을 설립·운영해 온 유럽 각국의 경우 DFI의 자립경영을 목표로 정부 단독 또는 민간과의 지분공유를 통해 독립기관 형태로 DFI를 운용하는 사례(프랑스 Proparco·영국 BII 등)와 개발금융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수은과 같은 ECA의 자회사 형태로 DFI를 운영하는 사례(오스트리아 OeEB·독일 DEG·캐나다 FinDev 등)가 있다. 또한 DFI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주지역 국가들도 독립기관 형태(미국 DFC, 정부 지분 100%, 2019년 설립) 또는 ECA 자회사 형태(캐나다 FinDev, 2018년 설립)의 DFI를 설립해 운용 중이다.

이들 기관은 공여국 정부 재정에만 의존해 수원국 공공부문 개발에 집중하는 전통적 ODA의 한계를 넘어 시장재원을 개발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목표로 민간부문의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고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개발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은 역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개도국 진출 확대를 위해 ODA나 수출금융이라는 제한적 수단을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협력 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개도국사업 수행과정에서 시공 등 직접적인 사업 참여를 중심으로 지원해 오던 기존 수은 금

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참여 여부나 ODA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개도국 등 특정지역의 산업 발전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증진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수은이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수은은 수출금융과 EDC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해외사업 및 개도국사업 지원·심사 역량과 함께 경쟁국 DFI와 유사한 금융지원수단을 이미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해외투자금융, 해외사업금융 보증, 투자, F/S 지원 등 이른바 개발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품을 통해 연간 평균(2018~2021년 기준) 약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해 왔다. 다만 이러한 지원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개도국 개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개발금융 지원수준은 주요 해외 DFI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개발금융 전용의 별도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존 개도국 민간사업 발굴 및 심사과정에서 개도국 개발효과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했고 금융지원분야 역시 경제·산업부문에 편중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충족하기 위한 섹터 다양성도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수은이 운용하는 EDCF 역시 개도국 민간분야보다는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차관 지원 중심으로 운용돼 민간부문 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은은 개발금융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DFI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해외 민간투자 촉진 프로그램(Private Investment Promotion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 PIPP)'을 도입했다. 아울러 '해외사업의 개도국 개발효과 검토지침'을 제정해 운용한 후 이를 내규화했다. PIPP는 개도국 개발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프레임워크로, 이를 통해 개발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



2024.10 미국 DFC, 일본 JBIC과의 DiGi 프레임워크 업무협약 체결식

발을 위한 F/S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대출(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 활성화자금대출), 보증(해외사업금융보증), 투자(지분증권투자) 등을 제공할 때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 적용한다. PIPP는 수은의 여신지원체계에 개발금융기능을 내재화함으로써 수은이 지원하는 개도국 여신의 개발효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부각하고 수은이 DFI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궁극적으로 PIPP는 기존 수출금융이나 EDCF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영역을 보완해 개도국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다변화,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IPP 도입을 계기로 수은의 개발금융 기능 내재화가 본격화됐으며 2024년 10월에는 기존 수은 금융지원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PDIF를 새롭게 도입했다. PDIF는 캐나다 FinDev, 미국 DFC 등 선진 공여국의 개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상품으로 개도국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발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민간부문의 성장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현지 경제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외교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PDIF는 2024년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시작으로 9월 수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기



2025.10 IDB Invest와의 MOU 체결식

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이후 PDIF 취급규정이 제정되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PDIF의 지원대상은 IMF가 지정한 155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해당 국가의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개발효과성이 인정되는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등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뿐 아니라 설계, 운영, 유지·보수(Operating and Maintenance: O&M)단계까지 포괄하는 사업 전 주기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여부나 ODA 요건 충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DIF는 기존 수출금융, EDCF, EDPF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즉 수은은 PDIF를 통해 비구속성·비양허성·비ODA 조건하에서도 개도국 민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PDIF는 사업의 금융적합성(Bankability)뿐 아니라 개발효과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효과를 핵심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개발효과로서는 △지원국의 개발격차(HDI 지수 기준) △고용창출 및 소득확대 효과 △사업 산출물의 파급효과 △시장개발 기여도 △기후변화

대응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경제교류 증진효과로서는 △경제 외교 지원 △경제안보 지원 △해외수주 촉진 및 수출 수요 창출 △해외투자 환경 개선의 4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수은은 PDIF 제도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2024년 1월 ‘개발금융팀’을 신설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기존 PIPP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이를 ‘개도국 개발효과 검토 기준’으로 내규화함으로써 개발효과 평가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해당 기준은 지원대상 상품과 국가 선정에 적용되며 사업의 개발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업에는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했으며 항목 통합과 등급 세분화를 통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정합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수은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DFI로서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협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 DFC, 일본 JBIC, 캐나다 FinDev, 유럽의 Proparco·DEG·FMO 등 주요 글로벌 DFI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투자 및 협조요자를 추진함으로써 국제 개발금융 생태계 내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DiGi 프레임워크(Digital Infrastructure Growth initiative for India, 인도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 2025년 9월 이탈리아 CDP-SIMEST와 다자 MOU, 2025년 10월 IDB Invest와 양자 MOU 등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사우스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전환분야 등에서 양질의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제2장

자본시장 업무

1절
자본시장 업무 본격화

2절
자금조달

통화 조달 국가

Americas미주

	미국 : USD (미국 달러)
	캐나다 : CAD (캐나다 달러)
	브라질 : BRL (헤알)
	멕시코 : MXN (멕시코 페소)
	페루 : PEN (솔)

Europe유럽

	유럽 : EUR (유로, 유로존 공통)
	영국 : GBP (파운드 스텔링)
	스위스 : CHF (프랑)
	노르웨이 : NOK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 SEK (크로나)
	덴마크 : DKK (덴마크 크로네)
	체코 : CZK (코루나)
	폴란드 : PLN (즈위티)

Asia아시아

	대한민국 : KRW (원)
	일본 : JPY (엔)
	중국 : CNH (위안, 역외 거래용) 중국 : CNY (위안, 국내 거래용)
	태국 : THB (바트)
	싱가포르 : SGD (싱가포르 달러)
	홍콩 : HKD (홍콩 달러)
	말레이시아 : MYR (링깃)
	인도네시아 : IDR (루피아)
	인도 : INR (루피)
	필리핀 : PHP (필리핀 페소)
	사우디아라비아 : SAR (리알)
	튀르키예 : TRY (리라)
	대만 : TWD (대만 달러)

Oceania & Others대양주, 기타

	호주 : AUD (호주 달러)
	뉴질랜드 : NZD (뉴질랜드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 : ZAR (랜트)
	러시아 : RUB (루블)

제1절

자본시장 업무 본격화

1. 추진 배경과 업무진행 방향

자본시장은 일반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거나 장기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거래의 국제화와 복합화에 따라 파생상품과 외환거래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은행권에서 자본시장 관련 업무는 기업공개(Equity Capital Market: ECM), 채권발행(Debt Capital Market: DCM) 펀드 및 지분투자, 그리고 금리·외환·상품거래(Fixed Income·Currency·Commodity) 등 이른바 프론트오피스(Front Office) 영역으로 분류된다. 수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투자, 채권운용, 외환·파생상품 및 민간금융기관을 상대하는 프론트오피스 업무인 금융주선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업무를 하나의 본부로 집중시켜 업무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업무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자본시장 업무 본격화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과 금융환경에서 기인한다. 최근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산업분야에서는 신속한 기술혁신과 시장확장이 성공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산

업의 안정·확장기에 필요한 대출 중심의 금융지원 외에도 지분투자나 간접투자 등 자본성 금융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원전·방산·플랜트 등 국가전략산업의 수주 규모가 초대형화되면서 단일 기관의 대출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수은은 여신한도 제약과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여신 편중 위험을 완화하고, 민간금융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주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정책금융 역할의 확대도 자본시장 업무 활성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소기업, 첨단산업, 공급망안정화 등 금리우대 대상이 넓어지면서 여신 마진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여신 기반의 신규 수익원 발굴이 필요해졌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수은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여 정책금융 이행역력 또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환경과 금융수요 변화 속에서 수은은 2025년에 자본시장 분야별 업무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투자 업무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신성장산업, 해외투자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직·간접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다. 첨단기술·혁신산업분야에서는 기술의 국산화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첨단기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단계 투자가 중요하다. 특히 초기단계기업은 대출보다 재무부담이 적은 투자 방식의 지원을 선호하므로 지분투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지분투자를 늘리고 선도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수주사업이 초대형화되고 공급망 확보와 해외 생산기지 구축 등으로 대규모 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수은은 여신한도 제약, 외화조달 부담, 자산편중위험 등에 대응해 금융주선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또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발굴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사업구조화 및 금융주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채권운용 업무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선진국 및 고신용등급 채권 중심의 운용 비중을 확대하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출자산의 신흥국 편중 위험을 보완하고 안정적 비여신 수익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외환·파생상품 업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이 겪는 파생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기업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2. 투자

세계 인프라·플랜트시장은 프로젝트의 대형화와 신흥개도국의 인프라 수요 증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이에

해외건설 및 플랜트사업의 형태도 과거 단순 도급 중심에서 벗어나 시공자가 직접 금융을 주선하는 시공사금융주선형 사업이나 사업주로서 지분참여 또는 사업 전반에 투자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조달능력이 해외 수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프로젝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본조달과 투자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투자개발형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구조적 특성상 민간금융의 참여가 쉽지 않아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수은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투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6월 ‘투자금융실’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2015년 업무계획에 자금공급 및 조달계획 항목 중 대출과 함께 ‘투자’를 처음으로 포함했고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연간 승인한도를 받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투자 업무의 법적 근거는 이미 2005년 5월 「수은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바 있다. 당시 수은은 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 또는 보증대상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해당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어 2009년 1월 「수은법」 개정을 통해 집합투자구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졌으나 그 목적이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제한돼 실질적 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은은 대외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월 「수은법」 개정을 통해 투자 업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분투자 업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건별 승인 폐지 및 연간 총량 승인 도입 △펀드투자 업무에 대한 투자 대상 분야 확대 및 지분율 한도 상향

조정 등으로, 이로써 수은의 투자 업무 확대를 위한 실질적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 개정 이후 수은은 본격적인 투자 업무 추진을 위해 내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여신규정을 개정해 '투자'를 대출·보증과 함께 여신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지분투자와 연계한 주주대여금 취급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세금절감 및 투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지분투자와 후순위 대출을 병행하는 시장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은도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주대여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2025년 12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은은 대출·보증과의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투자개발형 사업 등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졌다.

수은의 간접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며 2009년과 2014년, 2025년, 2026년 4차례의 「수은법」 개정을 통해 투자대상 요건이 완화됐다.

도입 초기 간접투자는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2014년 제19차 「수은법」 개정으로 그 범위가 수출입, 해외사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까지 확대됐다. 또한 수은의 투자금액 한도 역시 건별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15%에서 25%로 상향돼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으로 운용하거나 투자한 집합투자기구 △타 공적수출신용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조성한 집합투자기구 △지분증권 투자목적의 프로젝트펀드 등이다.

수은의 투자 업무는 크게 직접투자,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직접투자는 주로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형태

로 이뤄지며 대출·보증과 연계한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나 채무증권 인수를 통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분증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10% 이상 투자한 법인에 한해 가능하며 수은의 출자금액은 피투자법인 자본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채무증권의 경우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금액은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간접투자는 수출입 및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는 형태로 펀드 조성액의 25%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처를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펀드를 먼저 조성한 뒤 결성 이후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확정하는 형태이다. 반면 프로젝트펀드는 투자대상과 규모를 사전에 확정된 뒤 이에 동의한 투자자들이 출자해 결성되는 구조이며 정책펀드는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추진된다.

블라인드펀드는 출자사업 공고를 내고 제안서 접수와 서류심사, 현장실사, 제안서 발표 등을 거쳐 운용사를 선정한다. 투자약정액은 정량·정성평가를 종합한 순위에 따라 배분되며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확대여신위원회, 여신위원회 등 내부 전결 절차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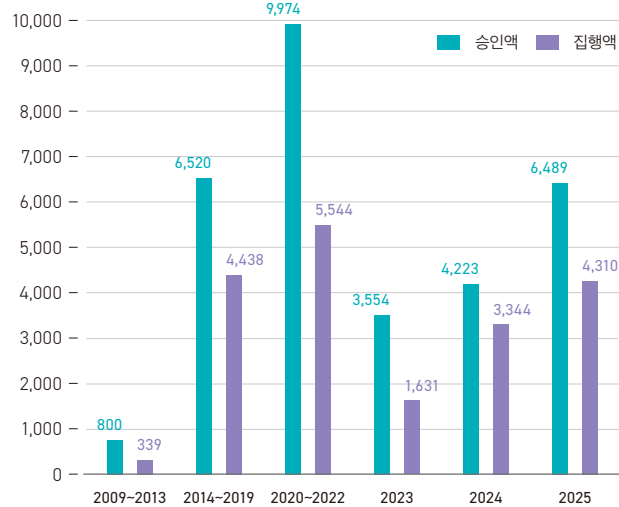
수은의 투자 업무 실적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원개발과 탄소펀드 등 정책 목적의 투자가 중심이었으며 승인액은 총 800억 원, 집행액은 339억 원에 그쳤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투자 업무의 제도화와 내부 기반 구축이 이뤄진 도입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 승인액은 총 6,520억 원, 집행액은 4,438억 원으로 이전 단계보다 5배 이상 확대됐다.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투자 업무 실적(2009~2025)

단위: 억원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친환경 전환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승인액은 9,974억 원, 집행액은 5,544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수은의 투자금융이 확고한 성장세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총 3,554억 원이 승인되고 1,631억 원이 집행됐으며, 2024년에는 승인액이 4,223억 원, 집행액이 3,34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도 총 6,489억 원이 승인되고 4,310억 원이 집행되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 직접투자

수은은 「수은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직접투자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형태로 수행 중이다.

지분증권 투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방식으로 2025년 「수은법」 개정 이전에는 수은의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허용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단독 투자 형태의 지분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수은은 투자개발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투자구조 설계단계부

터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됐고 사업의 구상·형성단계에서부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다.

투자대상 기업은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을 촉진하며, 해외 생산·판매거점 구축이나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등 정책금융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수은의 투자업무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변화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대상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한정된다. 수은의 투자금액은 피투자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15% 이내이며 수은은 대한민국 국민 중 최대 출자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투자 형태는 우선주, 보통주, 주주대여금(지분증권 투자와 연계된 PF형 사업에 한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무증권 투자는 수은의 대출 대상자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은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금액은 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대출 종류의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일반 채권뿐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형태의 투자도 가능하다.

채무증권 투자는 특히 해운업 구조개선 지원을 계기로 활성화됐다. 2014년 이후 국내 해운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수은은 대출과 투자를 결합한 복합금융 형태로 채무증권(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 투자 지원을 시작했다. 또 투자금융 활성화를 계기로 연기금,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공동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코셉펀드 활성화 및 글로벌 해양펀드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수은은 2014년

「수은법」 개정 이후 발전, 제약, 해운,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를 확대했다.

2014년 「수은법」 개정 이후 최초의 직접투자 사례는 인도네시아 세망카 수력발전사업이었다. 수은은 약 1억 3,290만 달러의 대출·보증과 연계해 2014년 10월 715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이 발행한 우선주를 인수하고 주주대여금을 제공함으로써 지분 15%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지분 투자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 운영, 기술지원 등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고부가가치사업이었다.

2015년 12월에는 국내 바이오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를 승인하며 새로운 분야로 투자영역을 확장했다. 수은은 2,000만 달러 규모의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과 연계해 1,000만 달러 상당의 우선주를 인수했다. ECA인 수은의 투자는 사업실패도를 높이고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수은은 해운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증권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 말 한진해운의 자본확충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구교환사채(30년 만기)에 투자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해당 사채는 모기업 대한항공의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구조화돼 안정성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한진해운은 부채비율을 대폭 개선하고 2,0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확보했다. 2021년에는 자동차용·산업용 전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원전선(주)의 수출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 제조사인 (주)이녹스리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 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수산화리튬 국산화를 통한 이차전지 수출 경쟁

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다.

나. 간접투자

간접투자는 펀드 운용사에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및 자산매각 권한을 위탁하는 구조이므로 운용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펀드투자운영기준을 제정해 공정한 운용사 선정 및 체계적인 펀드출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간접투자가 가능해진 이후 수은은 우선 정책적 지원 성격의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 경험을 축적했다. 2009년 탄소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탄소배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129억 원의 투자를 승인했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2개의 자원개발펀드에 총 600억 원을 출자했다.

2014년 「수은법」 개정 이후에는 투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면서 간접투자 업무가 한층 활발해졌다. 2015년 4월에는 300억 원의 투자 약정을 통해 1,325억 원 규모의 글로벌에너지인프라펀드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에너지·인프라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지분 인수, 건설·운영 수주, 주요 자원 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자본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는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수은은 중소·중견기업, 의료서비스, 에너지·인프라, 중동지역사업, 해운업 선박 운항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5개 집합투자기구를 결성해 2015년까지 총 1,864억 원의 출자를 승인했다.

특히 2014년 말 수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불황에 빠진 해운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국내 조선사의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에코쉽 펀드를 조성했다. 에코쉽 펀드는 수은이 앵커 투자자(Anchor Investor)로 참여하고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와 함께 조성한 민·관합동형 선박투자펀드로 정책적

목적과 상업적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모델이었다.

수은은 자체적으로 에코쉽펀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펀드약정총액(LTV의 100%까지), 투자금액(펀드 약정금액의 25%), 표시통화(원화 또는 외화), 투자기간(5년), 존속기간(15년), 프로젝트 등급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대상은 우량 화주와의 장기용선계약을 기반으로 한 신조 발주 프로젝트로 선박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 등급(BBB- 이상), DSCR 1.1 이상, LLCR 1.15 이상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수은의 첫 번째 에코쉽 프로젝트펀드는 2015년 3월 현대상선의 유연탄 수송사업을 지원하며 출범했다. 15만 톤급 벌크선 4척의 신조발주에 304억 원의 펀드자금을 투입해 후순위 채권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수은과 외국계 금융기관이 선·후순위 금융을 동시에 제공한 복합금융 구조의 첫 사례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은은 기존의 외항선박 대출과 후순위 대출 중심의 에코쉽펀드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 패키지를 완성했다. 그 결과 해운사는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고 조선사는 일감을 확보했으며 수은은 정책성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블라인드 펀드도 지속적으로 조성해왔다. 2014년 1

차(3개 펀드, 0.6조 원 규모), 2017년 2차(3개 펀드, 0.9조 원 규모), 2023년 3차(2개 펀드, 총 0.2조 원 규모)를 거쳐 2025년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직면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총 2,000억 원을 출자하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순차적으로 첨단전략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에 중점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차세대 주력 수출산업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을 지원했다. 2023년 1차(1,451억 원), 2024년 2차(1,500억 원)에 이어 2025년 3차 펀드 조성 시에는 앵커 투자자로서 총 2,000억 원을 출자했다.

블라인드펀드와 더불어 프로젝트펀드 투자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2024년 5월 LIG넥스원의 미국 방산 4족 보행 로봇 제조사(고스트로보틱스) 인수 지원을 위해 25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차병원그룹의 해외 의료사업 확장 지원을 위한 병원 건설 사업 등에 200억 원을 투자하였다. 2025년에는 에코프로머터리얼즈가 생산하는 전구체의 핵심소재인 니켈 공급망 확보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펀드에 200억 원을, SK그룹의 반도체, 이차전지부문 중간 지주사인 SKC(주)의 유리기판사업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펀드에 25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3. 해외사업개발 및 자문

수은이 사업개발 업무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변화에 있다. 세계 인프라·에너지시장은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금액은 2010년대 초반 연간 600억 달러대에서 2019년 223억 달러로 급감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



2015.03.04 제1호 에코쉽 선박펀드 투자약정 서명식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지분투자를 완료한 인도네시아 니켈제련소 건설 현장

다. 이에 단순 도급 위주의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기획, 개발, 지분투자, 금융조달, 시공, 운영관리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었다. 주요 해외 발주처 및 발주국 정부 또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 개발형 사업 발주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인식 아래 수은은 2019년 12월 우리 기업의 사업개발 활성화를 통해 해외 수주를 견인할 목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F/S)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F/S는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과 최적의 사업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기술·재무·경제·법률 등 다각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단계이다. 수은은 해외 프로젝트 금융에 참여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비용의 80~90%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며 2026년 기준 연간 약 50억 원 규모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과 금융조달의 구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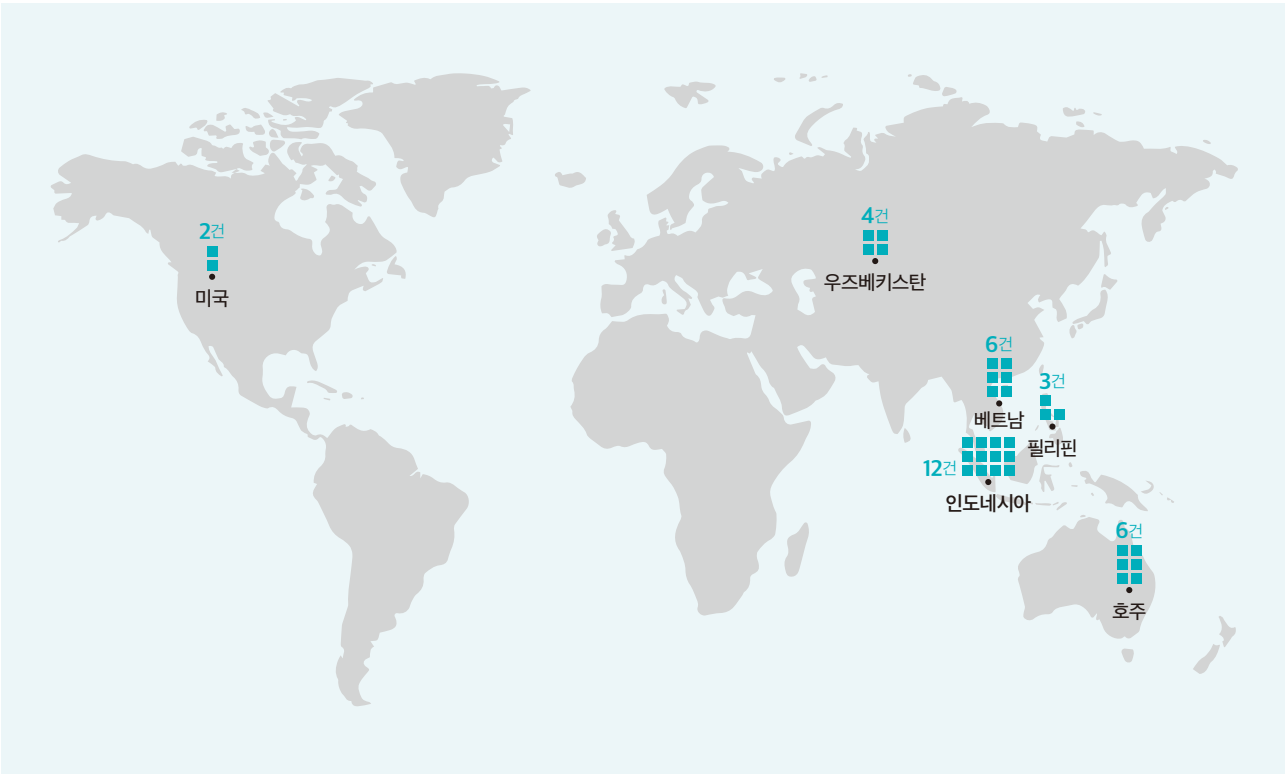
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발주처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F/S 지원대상은 수은 고객기업이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이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공모, 선정된다.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은 ‘착수-중간-최종보고’로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 체계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금융 연계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6월 기준 수은은 총 39건의 해외사업 F/S를 선정했으며 이 중 26건이 완료되고 12건이 진행 중(취소 1건)이다. 주요 국가는 인도네시아(12건), 호주(6건), 베트남(6건), 우즈베키스탄(4건), 필리핀(3건), 미국(2건) 등이며 사업 범위도 수력·양수발전, 가스발전, LNG, 도로 등 전통 인프라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원전, 송변전 등으로 산업군이 확장되고 있다.

한편 수은은 2025년 1월 기준 경제외교기획팀과 경제외교사업팀의 기능을 포괄하는 글로벌사업개발팀을 신설하며 국별 진출전략 수립, F/S 지원, 사업발굴 및 개발 등으로 구성된 해외사업개발체계를 구축했다. 국가별로

해외사업 F/S 현황



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거점인 사우디아라비아, 공급망 협력국가인 호주, 우리 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사우스 대표국가인 인도, 신정부 출범국가인 미국 등에 대한 산업 분석과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인프라, 에너지, 방산 등 전략사업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수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사업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2025년 2월 KIND와 분기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례회의를 통해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및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등 국제행사에 참여하며 협력기반을 넓히고 있다. 동시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내 에너지, 인프라 공기업과 국내 주요 건설사 등 주요 사업

주와의 협업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신도시 개발, 수력발전, 수소암모니아 등 유망 해외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수은은 프로젝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수주 및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금융조달 구조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문을 통해 우리 기업에 금융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향후 금융조달 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갖춰야 할 요소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 사업자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사업 채원조달 방법에 관한 자문 △사업타당성분석 내용 중 금융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 △주요 관련기관과의 금융 관련 이슈 협상 지원 △수은 내부의 타금융 관련 부서들과의 협의 지원 등이 있다.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고 종합적



2025.02.19 KIND와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진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14년 1월 수은은 본점 내에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원스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센터는 수은을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 플랫폼으로 해외수주정보 제공과 금융컨설팅을 통합적으로 수행했다. 센터는 수출자금지원, 이행성보증 등을 지원하는 도급사업팀, PF와 자본 투자 자문 업무를 맡은 투자개발사업팀, 사업구조지원과 해외수주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기획팀으로 구성돼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했다.

해외건설·플랜트 관련 정보제공 부문에서는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ICA, EDCF 등 각 기관에 산재된 발주정보를 통합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며 ‘해외발주정보의 포털’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업계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주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컨설팅부문에서는 기업별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제시하고 금융 지원으로 연계했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다. 또 사업성은 충분하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공동 분담하는 공동보증제도를 도입해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지원 실무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2019년 1월까지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각 기관별 담당조직에서 해외사업 개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은은 국제계약 및 법률상담서비스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관리도 지원했다. 소속 국제변호사(In-house Lawyer)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무료 자문을 제공하면서, 2004년에는 이러한 노하우를 집약한 실무자료집 『영문국제계약 해설』을 발간해 국제계약의 기본 이론에서 분쟁 해결까지 폭넓은 실무지침을 제시했다. 2015년 말 기준 3명의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3명의 국내 변호사가 전문 자문을 담당했으며 이는 전문 컨설팅기관 자문료 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됐다.

한편 수은은 강남, 시흥, 천안, 의정부, 목포, 제주 등 6곳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출입금융 및 해외투자금융 상담,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마케팅, 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남센터는 1997년 지점으로 출발해 2009년부터 수출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전환됐고, 시흥센터와 천안센터는 2013년 개소해 활발히



2025.03.20 제주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식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밀착 금융지원에 박차를 가하고자 2025년에 의정부센터와 목포센터, 제주센터를 새롭게 개소했다.

또한 수은은 2010년부터 중소·중견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기업의 환위험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실무 담당자에게 환율 리스크대응 교육을 실시해 독자적인 위험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2024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컨설팅제도를 마련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ESG 규제 대응,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그 범위를 확대해 미 관세대응 등 통상리스크분야까지 포괄하게 됐다. 이는 단순 진단형이 아닌 경영현안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형 컨설팅으로 고객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의 수은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금융수익 일부를 중소·중견기업

에환원하는 컨설팅제도 운영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이처럼 수은의 해외사업개발 및 자문기능 강화는 정책금융과 사업기획이 결합된 통합형 수출지원체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금융·투자 솔루션을 결합함으로써 수은은 글로벌 인프라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금융주선

최근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초대형 수출사업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ESG·친환경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자본구조와 금융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은은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자본을 결집하기 위한 금융주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업대형화에 따라 개별 기관의 여신한도 제약과 계열 편중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비여신 수익기반 다변화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은 정책금융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그동안 외부 IB에 의존해 왔던 금융주선 기능을 점진적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주도적인 금융구조화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주선은 수은이 주도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을 모아 프로젝트의 대주단을 구성하고 금융조건 협의, 심사 지원, 금융계약 체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다. 특히 2025년 1월에는 금융주선 전담조직을 재건해 신디케이션 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업금융 중심의 딜을, 중장기적으로는 PF, SF, 인수금융 등 복합금융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수은의 금융주선 기능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먼저 2012년 금융자문부를 신설해 IB 업무를 도입하고 금융자문과 금융주선 업무를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는 외부 전문인력 채용과 타 금융기관 인력 파견 등을 통해 금융주선 역량을 초기 단계에서 축적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2016년에는 금융주선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주선을 본격적으로 확대했으나 금융자문 업무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코로나19 등 대외환경 악화로 자체 금융주선 실적이 감

소하는 가운데 M&A 인수금융 파일럿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영역을 모색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전담조직이 폐지되면서 금융주선 기능은 부서 내 단위 업무 형태로 유지됐다.

수은은 2019년 이후 다양한 인수금융 및 시설자금 거래를 통해 금융주선 역량을 단계적으로 축적했다. 2019년에는 KCC-모멘티브 인수사업(2억 달러)과 원익큐엔씨-모멘티브 인수사업(4,000만 달러)에 대해 각각 국민은행·산은·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산은 등이 참여하는 인수자금 금융을 주선했다. 같은 해 현대케미칼 HPC 프로젝트(2억 달러)에 대해서는 산은·농협은행, ICBC 등이 참여하는 시설자금 금융을 구조화했다.

2020년에는 효성의 베트남 화학시설 구축 사업(9억 8,000만 달러)에 대해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BOC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설자금 금융을 주선했으로써 해외 대형 제조·화학 프로젝트에 대한 주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2021년에는 SKC의 동박 생산시설 건설(1,750억 원)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신한은행·SC 등이 참여하는 시설자금 금융을 주선했으며 디티알오토모티브의 두산공작기계 인수(3,000억 원)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산은·우리은행 등이 참여하는 인수금융을 주선했다. 첨단소재 및 기계·제조분야로 금융주선 영역을 확대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총 21건, 약 69억 달러 규모의 금융주선 실적을 달성했다. 2022년에는 LG 디스플레이 베트남공장 증설 지원 5억 달러, 한화에너지 미국 그린본드 채권보증 지원 3억 달러, K-컨소시엄 카타르 LNG 운송지원 13억 5,000만 달러 등 대형 해외사업을 주선했고 2023년에는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 지원 12억 달러, 현대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설비 증설 지원 11억 9,000만 달러 등 글로벌 제조·플랜트부문에서 금융주선 역할을 확대했다. 2024년에는 한화오션, HD현대미포 등 조선업



2025.03.28 현대차-SK온 합작법인 공장 건설현장 방문

중심의 수출금융 주선을 통해 약 8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실적을 쌓으며 선박금융부문에서도 지원을 강화했다.

2025년에도 금융주선은 첨단산업 및 해외투자 중심으로 이어졌다. 한화에너지 미국 현지법인 채권보증 위험참가계약 4억 달러, 현대차-SK온 조지아 JV 신규 시설 투자 7억 5,000만 달러 등의 금융주선을 완료했다. 특히 솔루션첨단소재 캐나다 전지박공장 증설지원 건의 경우 총 5개 금융기관(수은·공급망금융·산은·무보·캐나다 EDC 등)이 참여하는 총 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구조화하고 이 중 2억 2,000만 달러를 직접 주선하는 등 주선 전담조직 설립 이후 국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 대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대형 금

융주선 프로젝트를 통해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민간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은은 금융주선을 통한 수수료 수취로 여신부점의 비여신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2억 원, 2025년 상반기에는 2억 6,000만 원 규모의 비여신 활동을 지원했으며 이는 그리스 해양협력포럼, 캐나다 광물컨퍼런스, 인터배터리 유럽, 폴란드 MSPO 참석 등 주요 국제행사에 참여로 이어져 협조용자 및 공동금융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수은은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주요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해외 공동금융 전략, 민간자본 등



수은의 금융주선을 통해 자금지원을 확정한 대한전선 당진 2공장 조감도

반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KOTRA, 한국무역협회(KITA)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금융주선 세미나 및 전문가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케이스 리뷰(Case Review) 중심의 역량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은은 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연계해 'K-파이낸스 패키지'를 구축했다. 수은금융, 공급망금융, 개발금융을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해 기업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분기별 정례협의회를 통해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은의 금융주선 업무 강화는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선도하고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수은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금융주선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금융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5. 채권 운용

수은은 여신 중심의 전통적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 비여신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 운용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채권 운용은 외화 및 원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자산운용 기능이다.

외화채권 운용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은은 변동성이 큰 신흥국 자산보다는 안정성과 신용도를 우선시해 선진국 및 고신용등급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외화채권 운용 비중은 금융채 47%, 미국 국채 20%, 일반 회사채 18%, 정부관련채(Sovereigns, Supranationals, and Agencies: SSA) 15%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원화채권 운용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수은은 2020년 관련 내규를 제·개정하고 2021~2022년에 걸쳐 채권 운용 전용 IT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2024년 1월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자금시장단 소속이던 원화채권 운용 업무를 국제투자실 내로 편입하며 체계적 운용체계를 확립했다. 원화채권 포트폴리오는 2025년 말 기준 금융채 47%, 국고채 37%, 통안채 11%, 지방채 4%, 공사공단채 1%의 비중으로 구성돼 있다.

운용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6년 기준 외화채권 운용한도는 미화 30억 달러, 원화채권 운용한도는 2조 8,000억 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약 25%와 40% 증가한 수준이다. 수은은 2030년까지 외화 40억 달러, 원화 4조 원 규모로 운용자산을 확대해 중장기적인 비여신 수익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트레이딩 운용을 활성화해 실질적 운용성과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유가증권 운용한도의 10%까지 트레이딩 운용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능동적 매매를 통해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보유채권 대여나 우량 회사채 비중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수은은 채권운용 확대의 핵심 기반인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운용 규모 확대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인력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2030년까지 외화운용 인력을 현원 대비 3명 증원한 최소 5명(1인당

8억 달러 운용), 원화운용 인력을 2명 증원한 최소 4명(1인당 1조 원 운용)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수은의 채권운용 업무는 단순한 여유자금 관리 차원을 넘어 안정적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자본시장 업무 역량강화에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6. 외환·파생상품

수은의 파생상품 업무는 1991년 외화채권 발행에 따른 환율 및 금리 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예금 수신 기능이 없는 수은은 금융지원 확대에 따라 매년 조달 규모가 급증해 파생거래 잔액도 증가했으나 해당 업무는 조달의 부수 기능으로만 취급돼 독립적인 투자나 운용 업무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은의 파생상품 업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파생상품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시장 공급자 역할이 필요해진 것이다. 글로벌 은행과 국내 시중은행이 보수적 자산운용에 집중하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 파생거래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특히 상업 금융기관들의 불합리한 파생상품(KIKO 등) 판매 및 투기성 거래 권유로 인해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금융기관인 수은의 파생금융 공급이 시장 안정화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수은은 2014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파생상품 업무 확대를 추진했다. 국제금융부 외화운용팀을 중심으로 파생상품의 자체평가 및 운용체계 구축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 파생상품 취급기준을 정식 내규로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시기 히든챔피언기업인 태평양물산과의 선물환 거래를 시작으로 대고객 파생상품 업무를 개시했으며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파생상품 종합관리시

시스템 도입에도 착수했다.

수은은 파생상품 업무를 통해 수익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화, 내부 인프라 효율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2014년 하반기 이후 10년간 누적 2억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2022년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조선사 대상 선물환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파생평가 내부화로 결산 효율성을 높이고 환·금리 고시 자동화를 도입해 고시 시간을 기존 10시에서 9시로 단축했으며 글로벌 금리체계(LIBOR→SOFR) 전환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편 수은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운용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수요가 높은 원자재, 환·금리, 옵션 등으로 운용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항공사(항공유), 민간발전사(LNG) 등을 대상으로 2~3년 만기의 원자재 파생상품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신상품 도입에 맞춰 내규를 개정하고 파생상품관리시스템(OBMS) 업그레이드를 병행하며 거래인프라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에너지전환분야에 선제적 진입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수은의 ESG 등급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선물환계약에서 은행 간 거래라인 확대, 장기 스왑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및 거래를 확보하고 시장조성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운용 전략 및 IT·회계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7. 향후 발전방향과 전망

수은은 대출과 보증 중심의 전통적인 정책금융 모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본시장 기능을 전략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책금융 수단을 다변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기

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업무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투자, 금융주선, 채권운용, 외환·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업무 전반을 대출·보증에 이은 '제3의 정책금융 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장기적 목표이다.

투자 업무는 자본시장 업무 확대의 핵심 영역으로 수은은 법·제도 개선과 조직·인력정비를 통해 단계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투자 요건과 대상, 절차 관련 제약을 「수은법」 개정을 통해 해소했으며 이를 토대로 투자 규모와 조직 역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신잔액 대비 투자잔액 비중을 현행 0.6% 수준에서 1.1%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해외투자개발형 직접투자 업무를 투자금융부로 이관하는 한편, 조직을 확대 개편해 투자전담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와 외부기관과의 인력교류를 통해 투자 전문성과 네트워크 기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업무를 명실상부한 제3의 정책금융 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투자 규모와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우선분야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을 중심으로 여신잔액 대비 투자잔액 비중을 2.5% 수준까지 확대하고 대출·보증 연계 요건이 완화될 경우 보통주·우선주 등 주식투자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등 주식연계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자본확충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나아가 축적된 투자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GP 업무로의 단계적 진출, 역외펀드 참여를 통한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 촉진, 중·후기 단계 및 님테크 기업에 대한 앵커투자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주선 업무는 단기적으로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CF) 중심의 주선 실적과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PF주선 역량을 강

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25년 1월 금융주선 전담팀이 신설된 이후 수은은 여신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비교적 주선 기회가 풍부한 CF사업을 중심으로 주선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법인과 국내외 투자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수은 주도의 금융주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금융주선 핵심역량으로서 차주의 프로젝트 소요자금 전액에 대해 대표주선기관이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행위인 총액인수 확대를 위한 셀다운(Sell-down)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CF 주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후 PF 경험과 해외 현지법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프라 건설, 공급망 확보 등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우량 프로젝트 중심으로 PF 주선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콩·런던·싱가포르 등 국제금융허브 소재 현지법인의 PF 데스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사업 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필요 시 현지법인 자본금 확충도 검토함으로써 자체 금융지원 여력을 제고할 전망이다.

채권 운용부문에서는 비여신 수익기반 강화를 목표로 운용 규모 확대와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수은은 2030년까지 외화채권 운용규모를 40억 달러, 원화채권 운용규모를 4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트레이딩 운용규모를 유가증권 운용 한도의 10%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운용을 통한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고 보유 채권 대여, 우량 회사채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화 및 원화채권 운용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기획·신용심사·성과평가기능을 분리하는 등 업무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채권 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외환·파생상품 업무는 비여신 정책금융 제공과 자체 고객기반 확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별도 부서로 독립해 전문성과 영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된다. 장기 선물환, 원자재 파생상품 등 민간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비여신 정책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환율·원자재 가격 리스크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한편, 여신연계 수요를 넘어 국내 공기업의 외화조달 관련 부채스왑 등 자체 고객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외환·파생상품 기능을 별도 부서로 독립시키고 기업 및 금융기관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팀을 신설해 F/X 거래와 이자율 파생상품을 분리·전문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할 전망이다. 이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와의 공조 하에 시장안정판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2절

자금조달

1. 국외 자금조달

가. 조달 방식의 발전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 방식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향상과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설립 초기 수은은 주로 은행차입(Bank Loan)과 보유 연불어음(Promissory Note) 매각에 의존해 외화를 조달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와 수은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직접 차입이 가능해졌고, 이에 연불어음 매각의 비중은 감소하고 외화채권 발행이 주요 조달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후로 수은은 유로시장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제 금융시장으로 진출하며 조달 기반을 다변화했다. 외화조달 규모는 점차 대형화돼 2023년과 2026년에는 한 차례에 35억 달러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으며 조달통화 역시 달러 외에도 엔, 유로, 스위스 프랑 등으로 확대되며 전 세계 30개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됐다.

초기 자금조달의 핵심 수단은 연불어음 매각이었다. 수은은 중장기 연불금융을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수출

자가 해외 수입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확보하고 필요 시 이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매각해 외화를 조달했다. 이 방식은 해외차입이 아닌 대출금의 조기회수를 통해 자금 회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대외채무 증가 없이 외화를 확보해 우리나라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했다.

최초의 연불어음 매각은 1977년 6월 스칸디나비아뱅크(Scandinavian Bank)를 주간사로 하는 차관단에 1억 4,900만 달러를 매각한 사례였다. 이후 선박 수출 호조에 힘입어 1983년에는 7억 4,300만 달러까지 확대됐으나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와 수은의 신용도가 높아지고 해외차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연불어음 매각은 점차 중단됐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과 4월 각각 2억 2,870만 달러와 3,700만 달러의 연불어음이 마지막으로 매각됐다.

1980년대에 들어 수은은 외화조달 다변화를 위해 전 대차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해외 공적수출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공여하는 구매자신용을 수은이 주선·도입해 전대하는 방식으로 1980년 스웨덴 SEB은행(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으로부터



1985.06.18 1억 마르크 채권 발행계약 체결식

1,810만 달러를 차입한 것이 첫 사례였다. 이후 덴마크 DDB(Den Danske Bank), 노르웨이 EKF(Eksportfinans), 영국 NATWEST(National Westminster Bank),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 독일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등으로부터 총 2억 5,400만 달러의 차입 한도를 확보했으나 기업의 수요가 크지 않아 인출금액은 9,500만 달러에 그쳤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8년 5월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일본수은과 1,300억 엔 규모의 차입 한도 계약을 체결했고 11월에는 노르웨이 수출신용기관인 GIE K(Norwegian Guarantee Institute for Export Credits)의 보증으로 EKF로부터 5,000만 달러 규모의 차입 한도를 설정했다. 이어 12월 영국 ECGD(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보증으로 미들랜드뱅크(Midland Bank)로부터 7,500만 파운드 규모의 차입 한도를 도입했으나 기업들의 실수요 부족으로 인출 없이 한도 사용기간이 조기 종료됐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은의 자금조달은 외화채권 발행 중심으로 본격 전환됐다. 1984년 1월 일본시장에서 50억 엔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달러, 마르크, 스위스 프랑 등 다양한 통화와 형태의 채권을 발행했다. 1991년에는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시장에 진출하며 조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1996

년에는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후 유로엔채, 중기채(Medium-Term Note: MTN), ECU(European Currency Unit)채 등 채권 종류 및 표시 통화의 다변화를 이뤘다.

나. 외화채권 발행

미달러화 채권(글로벌본드·유로채권·양키본드)

1984년 11월 수은은 유로채(Euro Bond)시장에서 5,000만 달러 규모의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형태로 처음 미달러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유로채는 표시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는 채권으로 규제가 비교적 적어 발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본 다이이치강교뱅크(Dai-Ichi Kangyo Bank)를 비롯한 18개 금융기관이 주간사로 참여했다.

당시에는 은행차관보다 변동금리부채권의 차입비용이 유리했기 때문에 수은의 초기 미달러화 공모채권은 대부분 변동금리부 형태로 이뤄졌다. 이후 수은은 유로채시장에서 꾸준히 자금을 조달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은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2004년 4월 발행을 끝으로 유로채는 중단됐다. 이후 수은은 보다 폭넓은 투자자층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본드 발행으로 조달의 중심축을 옮겼다.

1990년대 들어 수은은 자금조달 기반의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했고 1990년 12월 한국계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A1(Moody's)과 A+(S&P)를 각각 획득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에 발행신고를 완료하고 투자설명회를 거쳐 1991년 5월 2억 달러 규모, 7년 만기 양키본드(Yankee Bond)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미

국 국채수익률에 0.98%p를 가산한 연 9%로 수은의 미국시장 진입을 알린 상징적인 사례였다.

한편 수은은 국제금융시장 내 신인도 제고를 바탕으로 1995년에는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글로벌본드 발행을 추진했다. 글로벌본드는 유로본드나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처럼 특정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대규모 국제채권으로 통상 5억 달러 이상 규모로 발행된다. 수은은 1991년 SEC에 일괄등록(Shelf Registration)했던 서류를 보완해 유효 승인을 받은 후 글로벌본드 주선 경험이 풍부한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살로몬브라더스(Salomon Brothers)를 공동주간사로 선정하고 일본, 유럽, 미국 등지의 주요 금융기관들을 간사단으로 구성했다.

런던, 뉴욕, 보스턴 등 주요 금융도시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후 1996년 2월 5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발행 조건은 미 국채수익률에 0.77%p를 가산한 고정금리 구조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기관투자자들이 몰리며 발행규모의 3배가 넘는 주문이 접수됐다. 수은의 글로벌본드 발행은 한국계 금융기관의 10년 만기 고정금리채권시장 진출을 이끌었으며 한국계 채권의 유통 가산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

이후 수은은 글로벌본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채권 발행을 확대하며 한국계 기관의 대표적인 외화조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수은은 2차례에 걸쳐 총 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5월에는 3년 만기 고정금리 10억 달러 및 변동금리 5억 달러, 10년 만기 10억 달러 등 2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당시 한국계 기관 사상 최대 규모의 조달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물 최초의 쿼드러플 트랜치(Quadruple Tranche) 구조를 도입해 3년 만기 고정금리 7억 5,000만 달러, 3년



1996.02.08 첫 글로벌본드 발행계약식

만기 변동금리 7억 5,000만 달러, 5년 만기 3억 달러, 10.5년 만기 7억 달러 등 총 25억 달러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이는 한국계 기관이 주로 사용했던 기존의 단일·이중 트랜치에서 벗어나 글로벌 선진 금융기관 수준의 복합구조 발행을 시도한 첫 사례로 평가받았다.

2017년에는 1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각각 15억 달러와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2건 모두 트리플 트랜치 구조로 구성됐으며 투자자들의 주문이 발행금액의 2배 이상 몰릴 만큼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1월 발행은 정부의 외평채 성공 이후 이어진 한국물 투자심리를 적극 활용해 금융시장 내 한국물의 신뢰를 강화했다.

2018년에는 2차례에 걸쳐 총 25억 달러 규모의 듀얼 트랜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5월에는 3·5년 변동금리 채권(총 15억 달러), 10월에는 3·5년 만기의 고정금리 채권(총 10억 달러)을 발행해 시장 수요에 따라 금리 형태를 다양화했다.

2019년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해 목표의 4.7배에 달하는 주문을 받았다.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비중이 54%에 이를 정도로 우량 투자자가 대거 참여했으며 5년물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물 최저 가산금리 0.625%를 달성했다.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시

2026년 1월 발행한 35억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주요 사항

통화	미달러화(USD)			
만기	3년	3년	5년	10년
금리형태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
발행금액	5억 달러	12.5억 달러 (그린본드)	12.5억 달러	5억 달러
발행금리	SOFR+0.40%	T3+0.23%	T5+0.26%	T10+0.30%
주간사	Citi, DB, HSBC, Mizuho, MS, MSFG, WellsFargo, 미래에셋증권			
상장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런던 증권거래소,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장 환경 속에서도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나서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만기 5년의 고정금리 채권으로 미 5년 만기 국채금리에 0.475%p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발행된 정부채를 제외한 한국물 중 최저 가산금리였다.

2021년에는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총 3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2월 발행물은 3·5·10년 만기 전 구간에서 한국 외화공모채권 사상 최저 가산금리를 기록했고 6월 발행물에는 한국계 금융기관 최초의 20년 만기 장기물이 포함됐다.

2022년 수은은 글로벌 시장에서 3차례 대형 조달에 성공했다. 1월에는 총 30억 달러 규모의 미달러화 글로벌본드를 발행해 정부를 제외한 한국계 기관 중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5월에는 한국계 기관 유로화 공모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유로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으며 9월에는 2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2·5·10년 만기의 멀티 트랜치로 발행했다. 특히 데뷔 공모 발행인 2년 물을 처음 선보이며 투자자층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1월과 9월 2차례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1월 발행은 정부를 제외한 한국계 기관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였으며 9월에는 미 달러화 20억 달러와 유로화 5억 유로 등 다통화 발행 구조로 조달하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한국계 기관 발행

의 벤치마크를 제시했다.

2024년 1월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 3년 8억 달러, 5년 8억 달러, 10년 4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유통채권 대비 가산금리가 2bp 낮은 수준으로 발행돼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채권 중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냈다.

2025년 들어서도 수은은 시장의 신뢰를 이어갔다. 1월에는 총 3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변동·고정금리 혼합구조로 발행해 계엄 사태 이후 한국물 외화채권 첫 발행 성공이라는 의미를 남겼다. 이어 9월에는 15억 달러 규모의 본드를 발행, 한국물 5년 만기 기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하며 안정적 신용도와 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6년 1월에는 2023년 1월에 이어 한국계 기관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에 다시 한번 성공했으며, 연이은 7월에도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3년 및 5년 만기 구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해 후속 한국물에 성공적인 벤치마크를 제시했다. 7월 발행 시에는 중화권 투자자들의 역외 투자 수요 증가를 겨냥해 중국어 IR를 실시하는 등 기채 활동의 저변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엔화 채권

일본 국제채시장은 1970년 ADB가 60억 엔을 발행한 이후 꾸준히 성장했으며 특히 1980년대 들어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급속히 확대됐다. 당시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를 모색하던 수은에 일본은 이미 은행차관 도입 등으로 관계를 맺은 금융기관이 많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발행 경험이 축적돼 있던 적합한 시장이었다.

이에 수은은 1983년 하반기 50억 엔 규모의 엔화 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증권(Yamaichi Securities)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첫 발행인 점을 고려해 절차가 간단하고 조건 조정이 유연한 사모 방식(Private Placement)을 채택했으며 금리 및 가격 협의를 거쳐 1984년 1월 도쿄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발행 조건은 만기 7년(4년 후 분할상환), 표면금리 연 8.4%, 발행가격 99.9%였다. 이는 수은의 최초 엔화 채권 발행으로 외화 조달통화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였다.

이후 수은은 1997년까지 엔화 채권을 꾸준히 발행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본드 발행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이후 2007년 6월 350억 엔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하며 시장에 복귀했으나 리먼 사태로 다시 발행을 중단한 이후 2011년 7월 당시 한국계 기관 중 최대 규모인 800억 엔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1990.12.07 250억 엔 규모 채권 발행식

한국 대표 발행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했다.

2018년 6월에는 아시아 기관 역대 최대인 1,200억 엔 규모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수은은 신흥국 자금 유출과 남유럽 재정 불안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일본 투자자의 수요를 포착했으며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남·북평화체제 전환 모멘텀을 적극 활용했다. 수은이 발행한 채권은 1.5년 만기 700억 엔과 3년 만기 500억 엔으로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듀얼 트랜치로 구성됐다. 발행금리는 1.5년 0.16%, 3년 0.27%로 역대 한국계 사무라이 본드 중 최저 수준이었다.

2024년 11월에는 650억 엔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5·7년으로 다양화했고 만기별 금액은 각각 250·334·66억 엔이었

다. 특히 5년물은 그린본드(Green bond)로 발행해 국내 ESG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로써 수은은 6년 만에 엔화채권 시장에 복귀했으며 한·일 정상회담과 2023년 정부 최초 엔화표시 채권 발행에 이어 새로운 한국물 벤치마크를 제시함으로써 한·일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유로화 채권

1999년 유로화 출범으로 독일 마르크화, 프랑스 프랑 등 역대 국가통화 표시 채권 발행이 사라지고 모든 발행이 통합되면서 미국시장에 버금가는 단일 국제채시장이 형성됐다.

수은은 2004년 10월 EMTN 프로그램을 통해 도이치뱅크와 ABN 암로뱅크(ABN Amro Bank)를 공동 주관사로 3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효율적인 발행 전략과 적극적인 투자 수요에 힘입어 공식 발행 발표 후 30시간 만에 3억 유로의 약 4배에 달하는 11억 유로 이상의 주문이 몰렸다. 이에 증액요청이 있을 정도로 시장 반응이 뜨거웠으며 채권금리는 Euribor+0.35%(달러화 스왑 기준 LIBOR+0.35%)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가산금리 0.40%의 벽을 돌파했다.

2008년 5월에는 만기 5년, 7억 5,000만 유로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표면금리 연 5.861%로 발행했다. 이는 당시 한국계 기관의 최대 규모 유로화 채권 발행으로 국제금융전문지 『IFR(International Financing Review)』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경색된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차입자의 채권 발행에 물꼬를 댔다고 평가했다.

이후 5년 만인 2013년 4월 수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계 기관 최초로 유로화 채권 발행을 재개했다. 7년 만기, 7억 5,000만 유로 규모의 변동금리채로 금리는 Euribor+0.95%였다. 발행 직후 유럽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면서 보름 만에 2억 5,000만 유로를 중

액 발행했으며 이는 아시아 기관 최초의 유로화 공모채 증액 사례였다. 추가 발행분은 높은 투자 수요에 힘입어 기존보다 약 8bp 낮은 Euribor+0.865% 수준으로 발행했다.

2016년 3월에는 7억 5,000만 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2014년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후 첫 한국계 유로화 공모채권이자 2013년 4월 이후 3년 만의 유로화 시장 복귀였다. 이 채권은 3년 만기 금리는 3년 만기 유로화 스왑금리 -0.174%에 0.58%의 가산금리를 더한 0.406%로 역대 한국계 유로화 채권 중 최저 금리 수준이었다. 수은은 신규 발행 프리미엄 없이 기존 채권의 유통금리 수준으로 발행에 성공했다.

2017년 5월에는 유로화시장의 낮은 가산금리, 유리한 스왑조건을 활용해 7억 5,000만 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발행채권의 만기는 5년, 발행금리는 5년 만기 유로화 미드 스왑금리 0.222%에 0.40%의 가산금리를 더한 0.622%로 역대 한국물 유로화 벤치마크 발행 중 최저 가산금리 수준을 달성했다. 신규 발행 프리미엄 최소화가 가능했던 데에는 적극적인 현지 IR 실사가 주요했다.

2018년 7월에도 7억 5,000만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을 발행했으며 만기는 5년, 발행금리는 5년 만기 유로화 미드 스왑금리 0.263%에 0.43%의 가산금리를 더한 0.693%였다. 2019년 3월 발행된 유로화 채권은 7억 5,000만 유로 규모로 만기는 5년, 발행금리는 5년 만기

2024년 11월 발행한 650억 엔 규모 사무라이본드 주요 사항

통화	엔화(JPY)		
만기	3년	5년	7년
금리형태	고정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
발행금액	250억 엔	334억 엔 (그린본드)	66억 엔
발행금리	0.835%(TONA MS+0.15%)	1.065%(TONA MS+0.29%)	1.215%(TONA MS+0.34%)
주관사	BofA, Daiwa, Mizuho, MUMSS(MUFG)		

2026년 4월 발행한 7.5억 유로 규모 유로화 채권 주요 사항

통화	유로화(EUR)
만기	5년
금리형태	고정금리
발행금액	7.5억 유로
발행금리	유로화 미드스왑금리+0.35%
주관사	BNPP, HSBC, ING, JPM, Natxis

유로화 미드 스왑금리 0.091%에 0.32%의 가산금리를 더한 0.411%였으며 역대 한국물 유로화 벤치마크 발행 중 최저금리(5년물 기준) 수준을 달성했다.

2020년 4월에는 7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계 기관이 발행한 첫 유로화 채권이며 금리는 미달러화 만기 3년 변동금리 채권의 경우 3개월 LIBOR에 1.20%를 더한 수준으로, 유로화 만기 5년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유로화 미드스왑금리 -0.221%에 1.05%를 더한 0.829%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수은은 유로화 채권시장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발행에 성공해 한국 대표차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025년에는 6월 7억 5,000만 유로, 11월 10억 유로 등 2차례의 유로화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2026년 4월에도 7억 5,000만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정기적 발행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스위스 프랑화 채권

스위스 프랑이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5대 통화 중 금리가 가장 낮고 환율이 안정적이었기에 스위스 프랑화 채권은 1985년 초 독일 마르크화 채권과 함께 발행이 진행됐다. 당시 스위스 증권당국은 외국인 채권 발행의 전제조건으로 스위스 중앙은행의 동의와 발행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같은 해 하반기 수은은 정부보증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1986년 1월 수은은 스위스 3대 은행 중 하나인 스위스뱅크(SBC: Swiss Bank Corporation)를 주간사로 선정해 5,000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만기 8년(4년 거치·4년 분할상환), 표면금리는 연 6.1258%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 수은은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틸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08년과 2009년에 연이어 스위스 프랑화 채권을 발

행했다. 2008년 5월에는 ABN 암로를 주간사로 1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2년 만기 변동금리채권을 CHF LIBOR+0.71%에, 2억 5,000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3년 만기 고정금리채권을 연 3.875%에 발행했다. 이는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로 발행한 채권보다 약 0.1~0.2% 낮은 수준이었다.

스위스 프랑화 채권 발행은 2014년 2월 재개됐다. 당시 수은은 3년 만기 1억 2,500만 스위스 프랑과 5년 6개월 만기 1억 스위스 프랑으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 구조의 채권을 발행했다.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와 UBS가 공동 주간사로 참여했으며 금리는 각각 CHF LIBOR+0.45%와 연 1.12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일 만기 채권 대비 최저 수준이었다.

호주 달러화 채권

2012년 7월 수은은 한국계 기관 사상 최대 규모인 5억 호주 달러의 캥거루본드(Kangaroo Bond)를 발행하며 호주 자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수은은 2010년부터 호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호주 달러화 채권 발행을 검토하는 등 호주시장 진입을 준비했으나 시장 상황과 발행 조건이 맞지 않아 발행 시점을 조정해 왔다. 이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로 유럽 투자에서 손실을 입은 호주 투자자들이 한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고 수은은 이에 대응해 3년 만기, 표면금리 연 5%(호주 스왑금리인 Bank Bill Swap Rate+1.9%) 조건의 채권을 발행했다. 첫 발행임에도 통상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는 프라이싱 과정(채권 조건 확정 과정)이 단 10시간 만에 완료됐으며 발행금액도 당초 계획의 2배로 늘어났다. 이후 수은은 2013년 2차례에 걸쳐 총 2억 호주 달러, 2014년 4월과 11월 각각 5억 호주 달러를 발행하는 등 호주시장을 안정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지속 활용했다.

2015년 8월에는 5.5년 만기, 총 6억 5,000만 호주 달러 규모 캥거루본드를 발행했다. ANZ,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뱅크(National Australia Bank), 다이와(Daiwa), TD 시큐리티즈(TD Securities)가 공동주간사로 참여했으며 3억 5,000만 호주 달러는 BBSW+1.2%의 변동금리채, 나머지 3억 호주 달러는 표면금리 연 3.7%의 고정금리채로 구성됐다. 이는 한국계 캥거루본드 중 최대 규모로 수은이 호주 자본시장의 주요 발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2017년 3월에는 5억 호주 달러 규모의 캥거루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5년 만기 고정금리채 1억 5,000만 호주 달러, 5년 만기 변동금리채 2억 5,000만 호주 달러, 그리고 2016년 11월 발행된 10.5년 만기 고정금리채의 리오픈 형태로 1억 호주 달러(10.3년 만기)를 추가 발행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금리는 5년 만기 채권의 경우 기준금리에 1.17%, 10.3년 만기 채권의 경우 기준금리에 1.2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어 2018년 10월에도 5억 호주 달러 규모의 캥거루본드를 발행했다. 5년 만기 변동금리 채권으로 BBSW에 0.95%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고 이는 한국계 캥거루본드 중 역대 최저금리였다.

2020년 5월에는 7억 호주 달러 규모의 캥거루본드를 발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시아계 기관이 캥거루본드 발행에 성공한 건 수은이 최초였으며 만기 3년의 변동금리채 5억 호주 달러와 고정금리채 2억 호주 달러

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 구조였다. 이후 2022년 3월 6억 5,000만 호주 달러 규모, 2023년 6월 8억 5,000만 호주 달러 규모, 그리고 2025년 3월에는 한국계 캥거루본드 공모 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호주 달러 규모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시장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장기물 발행에 성공한 것도 큰 의의가 있었다. 5년 만기 8억 호주 달러에 더해 10년 만기 2억 호주 달러발행에 성공하면서, 캥거루본드시장 내에서 정부, 국제기구 등 일부 초우량 SSA(Sovereign·Supranational·Agencies)들이 주로 발행하는 10년물을 추가해 역대·외 투자자들의 장기물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어 2026년 2월에는 전년도에 이어 한국계 캥거루본드 공모 사상 최대 규모 발행을 거듭 경신하며 직전 발행 대비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3년 고정금리 5억 호주 달러와 5년 고정금리 10억 호주 달러의 듀얼 트랜치 구조로 투자자 수요가 집중되는 3년 및 5년물을 집중 공략해 역대 한국계 캥거루본드 공모 사상 최대 규모의 오더북(68억 호주 달러·4.5배)을 달성했다. 또한 호주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투자심리를 적극 활용해 5년물 기준 외평채를 포함한 한국계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해 4월에는 2월 발행한 3년물 캥거루본드에 대한 5억 호주 달러 증액 발행을 통해 단일 트랜치 기준 한국계 최대 규모인 10억 호주 달러를 달성했다.

뉴질랜드 달러화 채권

캥거루본드의 연이은 성공적 발행으로 호주시장에 안착한 수은은 2014년 6월 역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첫 뉴질랜드 달러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뉴질랜드 달러화는 안전자산이면서도 G3 통화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역외투자자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에 착안한 선택이었다. 발행 규모는 1억 뉴질랜드 달러, 만기는 3.5년, 주간사는 ANZ와 웨스트팩(Westpac)이었으며 표

2026년 2월 발행한 15억 호주 달러화 규모 캥거루본드 주요 사항

통화	호주 달러화(AUD)	
만기	3년	5년
금리형태	고정금리	고정금리
발행금액	5억 호주 달러	10억 호주 달러(그린본드)
발행금리	4.747%(S/Q ASW+0.42%)	4.910%(S/Q ASW+0.52%)
주간사	ANZ, Mizuho, Nomura, UBS	

면금리는 스왑 후 연 4.875%였다.

이후 2014년 8월과 10월에도 각각 1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역외 공모채권을 5년 만기로 발행했다. 8월 발행은 HSBC와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은행(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이, 10월 발행은 ANZ가 주간사로 참여했으며 2차레 모두 표면금리는 스왑 후 연 5.125%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수은은 2016년 7월 3억 5,000만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첫 카우리 본드(뉴질랜드 역내에서 역외 기관이 발행하는 뉴질랜드 달러화 채권)를 발행해 보수적인 뉴질랜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또한 이듬해인 2017년 2월 4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카우리 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뉴질랜드 시장에 우량 발행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파운드화 채권

영국 파운드화시장은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G3 통화 채권시장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다른 시장과 투자자층이 거의 중복되지 않아 투자자 저변 확대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에 수은은 2013년 3월 최초로 파운드화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도이치뱅크와 영국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 RBS)을 공동 주간사로 3년 만기에 3억 파운드 규모였으며 GBP LIBOR+0.7%의 변동금리였다.

영국과 유럽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지니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됐다. 당시 아시아기관 중에서는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 일부 초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유럽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은은 2013년 2월 북유럽의 초우량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린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계 기관으로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처음으로 파운드화 공모채권 발행에 나서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2026년 7월 발행한 5억 파운드 규모 스털링본드 주요 사항

통화	파운드화(GBP)
만기	2029년 10월(3.4년)
금리형태	고정금리
발행금액	5억 파운드
발행금리	4.580%(SONIA MS+0.48%)
주간사	Deutsche Bank, HSBC, Nomura

이후 2014년 10월 수은은 ANZ와 HSBC를 주간사로 만기 3년 2개월, 스왑 후 표면금리 연 2%, 발행금액 3억 파운드 규모의 2번째 파운드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만기가 다소 이례적인 3년 2개월로 설정된 것은 수은이 수개월에 걸쳐 파운드화 조달시장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미달러화 스왑 후 가장 경쟁력 있는 금리 조건을 찾아낸 결과였다.

또한 2025년 7월 수은은 3억 파운드 규모의 파운드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수은은 투자자들의 보수적 성향이 강한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한국물 파운드화 공모 사상 역대 최대 주문액과 최대 투자자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발행을 완료했다.

또한 2026년 7월 수은은 5억 파운드 규모의 파운드화 공모채권을 발행하며 한국계 스털링본드 사상 최대 규모 발행을 달성했다. 한국물 파운드화 채권 역사상 최저 스프레드를 기록함과 동시에 3년 연속 공모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비유럽계 정기 SSA 발행사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캐나다 달러화 채권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캐나다 자본시장에는 아시아기관 중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 단 두 곳만이 진입한 바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은은 2014년 9월 한국과 캐

나다 간 FTA 타결로 높아진 현지 투자자의 관심을 기회로 삼아 같은 해 10월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월 5년 만기, 표면금리 연 2.711%, 발행 규모 3억 2,500만 캐나다 달러의 메이플 본드(Maple Bond) 발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수은은 29번째 자본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한국계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G10 통화(미국·일본·유럽·영국·스위스·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스웨덴) 전부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어 2017년 2월에는 3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메이플 본드를 발행해 다수의 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보수적인 메이플본드 시장에서 우량 투자자로 인정받았다.

위안화 채권

수은은 2011년 8월 위안화 표시로는 첫 번째 공모채권인 딤섬본드(Dim Sum Bond)를 발행했다. 딤섬본드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표시 채권으로 당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달러화 약세와 위안화 강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에 대응해 발행을 추진했다. 한국계 금융기관 최초로 발행된 이 딤섬본드는 총 3억 9,200만 위안 규모로 1년 만기 2억 6,400만 위안(미달러화 스왑 기준 LIBOR+0.75%), 3년 만기 1억 2,800만 위안(LI-BOR+1.10%) 조건이었다.

2014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홍콩시장과 대만시장을 동시에 활용하는 위안화 자금조달 전략을 선보였다. HSBC를 주간사로 홍콩시장에서 발행한 딤섬본드는 5억 위안 규모의 5년 만기(표면금리 3.625%), 대만시장에서 발행한 포모사본드(Formosa Bond)는 5억 위안 규모의 10년 만기(표면금리 4.5%)였다. 이러한 이원화 전략은 수은의 독창적 자금조달 사례로 평가받으며 국제 금융정보업체 MTN-i로부터 '올해의 랜드마크 딜(Landmark Deal of the Year)'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RBS를 주간사로 10억 위안 규모의 딤섬본드를 추가 발행했다.

2015년에는 총 32억 5,000만 위안 규모의 위안화 공모채권을 3차레에 걸쳐 발행했다. 3월과 8월에는 딤섬본드와 포모사본드를 동시에 활용해 각각 10억 위안씩 조달했으며 6월에는 HSBC와뱅크오브차이나(Bank of China)를 주간사로 12억 5,000만 위안을 딤섬본드 형태로 발행해 3년 만기, 표면금리 3.6%(스왑 후 LI-BOR+0.51%)로 미달러화 공모채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달성했다. 2021년 2월에는 15억 위안의 3년 만기 딤섬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시장 내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타이 바트화 채권

수은은 2008년 8월 한국계 기관 최초로 타이 바트화 채권시장에서 발행에 성공하며 새로운 자금조달시장을 개척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 신용위기 확산과 금융 불안으로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자 국내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틈새시장을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수은을 포함한 9개 국내 금융기관이 태국 정부에 바트화 채권 발행 승인을 신청했으나 최종 승인을 받은 기관은 수은이 유일했다.

수은은 2008년 7월 태국 정부 승인 직후 현지에서 투자자설명회를 열고 같은 해 8월 HSBC를 주간사로 총 35억 바트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20억 바트는 표면금리 5.39%의 3년 만기, 15억 바트는 표면금리 6.28%의 10년 만기 채권이었다. 달러화 스왑 후 금리는 각각 LIBOR+0.81%, LIBOR+1.2% 수준으로 미달러화 등 G3 통화 조달 대비 0.7~1.0%p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했다.

이후 2015년 8월 스왑 여건이 급격히 개선된 시점을 포착해 수은은 3년 만기 100억 바트 규모의 타이바트화 채권을 표면금리 2.18%로 발행했다. 2013년 8월 이후

신규 한국물 발행이 없던 상황에서 이뤄져 태국의 주요 기관투자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중국의 금융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투자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은은 미 달러화 3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스왑 후 LIBOR+0.52%라는 매우 낮은 금리로 조달하며 국내 대표 외화차입기관으로서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 루피화 채권 및 인니 루피아화 채권

2010년 수은은 위안화, 인도 루피화, 인니 루피아화, 필리핀 페소화, 페루 솔화 등 총 5개 통화 채권시장을 신규 개척했으며 모두 한국계 기관 최초였다. 이 가운데 인도 루피화와 인니루피아화 채권은 초기에 사모채권이나 우리다시본드 형태로 꾸준히 발행되다가 2014년 처음으로 역외 공모채권 형태의 조달을 시도했다.

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두 통화 표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수은은 2014년 6월 TD를 주간사로 20억 인도 루피화 규모, 만기 3년, 표면금리 7% 조건의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TD를 주간사로 5,000억 인니 루피아화 규모, 만기 3.75년, 표면금리 8% 조건의 공모채권을, 10월에는 HSBC를 주간사로 6,000억 인니 루피아화 규모, 만기 5년, 표면금리 8% 조건의 채권을 각각 발행했다. 8월에 발행된 인니 루피아화 채권은 투자자 수요에 힘입어 2015년 2월 6,000억 인니 루피아화 규모로 증액 발행했다.

홍콩 달러화 채권 및 싱가포르 달러화 채권

2015년 초 국제유가 급락과 그렉시트(Grexit)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수은은 신규 공모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아시아지역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 통화로 평가받는 홍콩 달러화와 싱가포르 달러화시장에서 한국계 기관 최초로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수은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두 통화로 사모채권을 꾸준히 발행해 왔으나 시장의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일정 시점에 대규모 투자수요를 모으기 어려워 공모채권 발행을 시도하지 못했다.

이후 2015년 들어 투자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자 수은은 바클레이즈(Barclays)와뱅크오브차이나를 공동주간사로 선정하고 홍콩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는 보험사 및 자산운용사 등 핵심 기관투자자층을 집중 공략했다. 그 결과 8억 5,000만 홍콩 달러 규모, 만기 3년, 표면금리 1.57% 조건으로 한국계 최초 홍콩 달러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ANZ를 주간사로 2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 만기 3년, 표면금리 2.04% 조건으로 수은 최초의 싱가포르달러화 공모채권 발행에도 성공했다.

이후 2025년 7월 수은은 24억 홍콩 달러 규모의 완탕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해 국제기구 중심으로 형성돼 온 완탕본드 공모채 시장에서 SSA 발행사로서 위상을 정립했다. 2026년 7월 수은은 다시 한 번 40억 홍콩 달러 규모 완탕본드를 한 자릿수 가산금리 조건으로 발행해내며 우수한 조달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멕시코 페소화 채권

비주류 통화시장은 주류시장과 달리 관할법률과 발행제도가 다르고 현지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은의 인지도가 낮아 자금조달 실패 가능성이 컸기에 진입장벽이 높았다. 그러나 2007년 멕시코 기관투자자들이 아시아계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수은은 즉시 멕시코 자본시장 진출을 결정하고 발행

준비에 착수했다. 이미 1999년부터 PEMEX(Petróleos Mexicanos)가 추진한 대규모 정유사업에 직접대출을 통해 여러 차례 금융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고 국내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무디스 Aa3)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투자자들의 장기채권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은은 메릴린치(Merrill Lynch)를 주간사로 선정해 시장 수요조사를 거친 후 2007년 10월 아시아 최초로 멕시코 페소화 표시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발행규모는 10억 페소, 만기 10년, 표면금리 8.61%였으며 미 달러화 직접조달 대비 약 0.2% 낮은 금리로 발행해 차입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어 2008년 1월에는 12억 페소 규모, 만기 5년의 두 번째 공모채권을, 4월과 5월에는 2007년 10월 발행분과 동일 조건으로 총 11억 페소 규모를 증액 발행하며 멕시코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2019년 8월에는 70억 페소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이는 멕시코 현지 채권시장에서 외국 ECA가 정부에 준하는 발행자의 지위(Sovereign Status)를 획득해 채권을 발행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으며, 현지 투자자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 발행 규모를 확대했다. 주요 발행 조건은 만기 7년, 표면금리 7.93%, 미달러화 스왑 후 금리 LIBOR+0.64%였다.

2021년 1월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현지 금융시장이 냉각된 상황 속에서도 외화채권을 발행했으며 현지 스왑 시장의 계절적 특성을 활용해 미달러화 대비 8bp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스왑 후 기준 한국기관이 발행한 공모채권 중 최저 가산금리(3M LIBOR+0.16%)를 달성했다.

말레이시아 링깃화 채권

2008년 3월 수은은 한국계 기관으로는 최초로 말레이시아 링깃화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5억 링깃은 5년 만

기, 표면금리 4.08%로, 5억 링깃은 10년 만기, 표면금리 4.5% 채권으로 구성했으며 미달러화 채권발행 금리보다 30~40bp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말레이시아 3대 증권사인 RHB 인베스트먼트뱅크가 주간사로 참여했다.

2009년 2월 수은은 다시 RHB를 주간사로 2억 2,000만 링깃, 3년 만기, 표면금리 4.75%의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미 달러화 스왑 후 LIBOR+3.95%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2010년 7월과 2012년 2월에도 각각 4억 링깃, 5억 링깃 규모의 5년 만기 공모채권을 발행하며 말레이시아시장을 안정적인 조달 기반으로 자리매김시켰다.

사우디 리알화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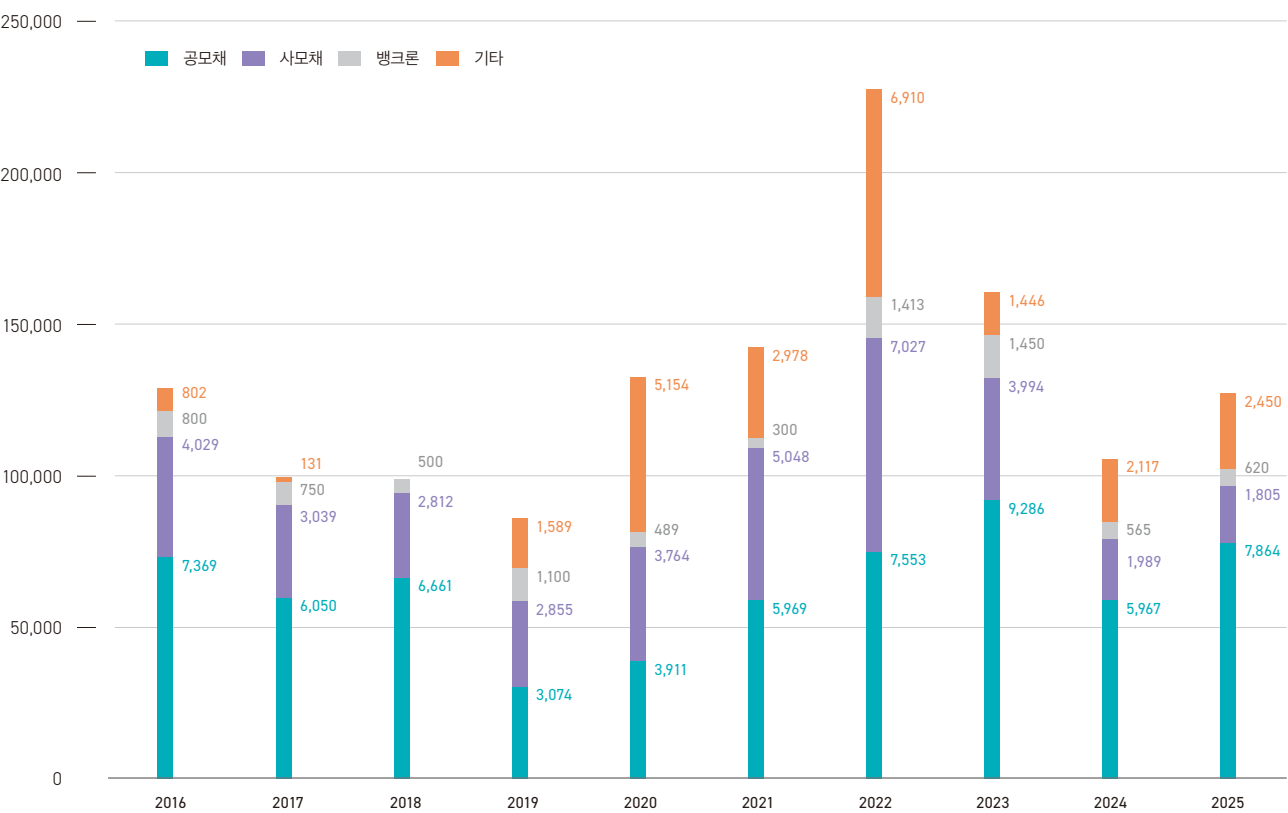
2011년 수은은 아시아 기관 최초로 사우디 리알화 공모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 산유국을 새로운 외화 조달처로 확보했다. 사우디 금융당국은 까다롭고 엄격한 발행자격 심사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리알화 채권은 IBRD와 JP모건 등 최상위 신용등급을 가진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었다.

수은은 오랜 기간 사우디 내 플랜트사업에 기여한 실적을 내세워 채권 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발행 자금이 사우디의 국가 기간산업 건설에 재투입될 것임을 강조하며 금융당국과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6개월에 걸친 설득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2011년 12월 BNP파리바와 사우디 1위 증권사 삼바캐피탈(Samba Capital)을 공동주간사로 7억 5,000만 리알화 규모의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만기는 5년, 발행금리는 사우디 변동금리 지표(SAIBOR)에 1.7%를 가산한 수준이었다. 발행 이후 수은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오일머니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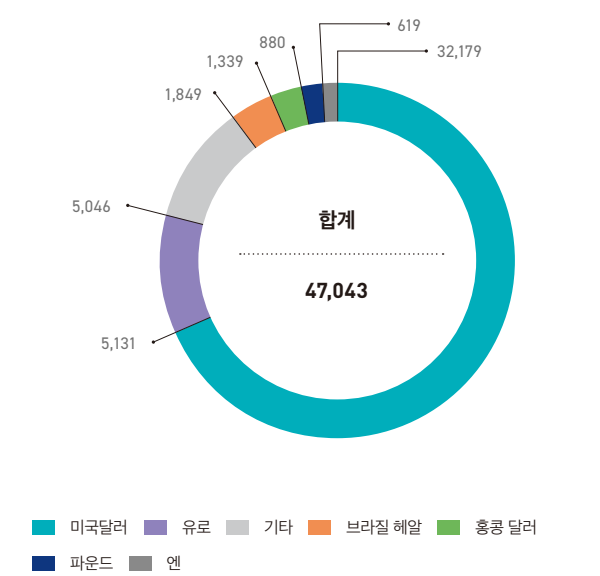
외화차입금 조달 추이(2016~2025)

단위: 백만달러



외화차입금 통화별 잔액(2025)

단위: 백만달러



우리다시본드

2011년 1월 수은은 한국계 기관 최초로 우리다시본드 (Uridashi Bond)를 발행했다. 우리다시본드는 일본 이외 지역에서 발행된 채권을 일본 내 개인투자자에게 소액 판매하는 형태의 채권으로 그동안 주로 신용등급 AA 이상 기관이나 IBRD 등 국제기구만 발행해왔다.

초저금리 기조 속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국 경제로 쏠리자 수은은 이를 기회로 삼아 시장 진입을 추진했다. 첫 발행은 400억 엔 규모, 4년 만기, 표면금리 1.05% 조건으로 다이와증권이 주간사로 참여했다. 수은은 개인투자자 대상의 낮은 기대수익률과 일본 소매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무라이본드보다 0.4% 이상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같은 해 수은은 총 12

건, 약 13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우리다시본드를 추가 발행하며 일본 개인투자자시장에 정기 발행체제를 구축했다.

2013년 5월에는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2억 달러 규모의 우리다시워터본드(Water Bond)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대금을 수력발전, 수처리, 담수 등 수자원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수목적채권으로 일본 시장에서는 ADB만 발행 선례가 있었다. 우리다시워터본드 발행은 같은 해의 그린본드와 함께 수은을 친환경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ESG채권

2013년 2월 수은은 전 세계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하며 외화조달의 새 장을 열었다. 그린본드는 발행대금을 대체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사업에만 사용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2008년 세계은행 발행 이후 주로 EIB, ADB 등 국제기구 중심으로 발행됐다.

그린본드 발행을 위해 수은은 환경·기술심사 체계와 녹색사업 지원성과를 근거로 수개월간 심사를 거쳐 노르웨이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limate & Environmental Research Oslo)로부터 녹색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BAML과 SEB를 주간사로 미국·유럽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5억 달러 규모, 5년 만기 채권을 미국 국채 금리+0.95%로 발행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계 기관 최저 금리 수준이었다.

이 발행을 통해 수은은 미국, 유럽의 연기금, 보험사, 사회책임투자펀드(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und) 등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며 투자자 저변을 확대했으며 국제금융 전문지 『The Asset』과 『IFR』로부터 각각 ‘2013 한국 최우수 딜(The Best Deal in Korea in 2013·South Korea Capital Market Deal in 2013)’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수은은 다양한 ESG 채권을 선도적으로 발행하며 한국계 채권물의 대표 발행기관으로 입지를 강화했다. 2018년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권을 3,50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UN이 제시한 인류 보편적 문제 및 지구 환경문제 해결 목표를 반영한 이 채권을 통해 수은은 ESG 투자자 저변을 확대했으며 조달한 자금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보급 확대, 보건 증진 관련 프로젝트 지원 등에 활용됐다.

이어 2023년 1월에는 한국물 최초의 블루본드(10억 달러)를 발행해 친환경 선박과 해양재생에너지 등 해양 생태계 친화적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이 해양부문까지 ESG 채권 영역을 확장한 첫 사례였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국내 최초의 7억 호주 달러화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고 11월 334억 엔 규모의 그린본드를 추가 발행하는 등 통화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ESG 투자자층 확대에도 성공했다.

2026년 1월에는 한국물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2억 5,000만 달러의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여 한국물 ESG 채권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수은은 2013년 첫 발행 이후 11년 연속(2016~2026) 그린본드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등 총 142억 달러 상당의 외화표시 ESG 채권을 조달해 글로벌 ESG 채권시장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했다.

한편 수은은 발행대금 배정보고서(연 1회, 매년 3월)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ESG 채권 사후관리와 투명성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5년 3월 수은은 아시아 ESG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기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Best Sustainability Bond’상을 수상했다.

다. 신디케이트론

신디케이트론은 2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동일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중장기 융자하는 대출로 대규모 국제 무담보 신용대출의 일종이다. 차입자는 단일 조건으로 효율적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참여 은행은 공동융자를 통해 신용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은은 1978년 12월 미국 퍼스트시카고아시아(First Chicago Asia) 등 6개 은행을 주간사로 한 2억 달러 규모의 은행차관 계약을 체결하며 처음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진출했다. 중동계 은행이 다수 참여했고 당시로서는 우리나라가 도입한 차관 중 가장 유리한 조건(LIBOR+ 0.625~0.75%)이었다. 이어 1981년 6월에는 미국 케미컬아시아(Chemical Asia) 등 8개 은행이 주간사로 참여한 2억 달러 규모의 제2차 은행차관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1980년대 초반 중남미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이 차입자 중심에서 대출자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수은은 차입시장과 통화 다변화, 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자 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3억 달러 규모의 은행차관을 도입했으며 1985년 1월에는 체이스맨하탄뱅크(Chase Manhattan Bank)와 1억 달러 규모의 사모(Club Deal) 방식 은행차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40개 국제은행과 3억 달러 규모의 차관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이 계약에는 양도대출증서(Transferable Loan Certificate) 조건을 포함시켜 자금 공여자의 참여를 촉진한 것이 특징이었다.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개선되면서 정부가 해외차입 축소와 조기상환을 추진하자 수은도 이에 맞춰 차입을 조정했다. 1985년 체결한 300억 엔 차관계약은 인출 없이 종료했고 1986년부터 1987년 사이에는 1983~1984년에 도입한 미 달러화 5억 7,300만 달러 및 엔화 100억 엔 차관을 전액 조기상환했다.

이후 1991년 4월 뱅커스트러스트(Bankers Trust)를 주간사로 1억 2,000만 달러 규모(LIBOR+0.35%)의 은행 차관을 도입하며 국제차관시장에서의 조달을 재개했다. 같은 해 일본 노린추킨(農林中央金庫)을 주간사로 한 100억 엔 고정금리 차관(7.5%)과 뱅커스트러스트를 통한 1억 달러 차관(LIBOR+0.3%)을 잇따라 도입하며 외화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은행차관 활용을 확대했다.

2000년대 들어 수은은 신디케이트론을 중장기 외화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모채권보다 규모가 크고 공모채권보다 조달 금리가 낮으며 위기 시 재대출(Roll-over)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그 비중이 더욱 커졌다.

2009년에는 글로벌 신용경색 속에서도 총 4건, 4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입했고 2010년에는 총 6건, 7억 2,200만 달러를 조달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아시아계 기관 최초로 포모사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 대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포모사론 발행에도 성공했다.

이후에도 수은은 신디케이트론을 꾸준히 활용해 2013년에는 총 6건, 12억 5,000만 달러, 2014년에는 3건, 10억 5,000만 달러, 2015년에는 3건,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외화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2013년 8월 일본 미즈호(Mizuho)와 체결한 5억 달러(5년 만기, LIBOR+1.10%)의 양자간 대출계약은 역대 최장 만기·최



2023.11.24 미즈호은행과의 8억 달러 규모 뱅크론 계약 서명식

대 규모의 양자 뱅크론(Bank Loan)으로 기록됐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BAML, BNPP, BTMU, Commerzbank, HSBC, RBS, Société Générale 등 7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한 6억 달러 규모(LIBOR+0.45%)의 신디케이트론을 도입했다.

2023년 11월에는 미즈호를 단독 주간사로 선정해 뱅크론 8억 달러를 도입했다. 이는 한국계 금융기관이 도입한 뱅크론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총 14개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방식이었다. 만기와 금액은 각각 3년 3억 달러, 5년 5억 달러로 소셜론(Social Loan)의 형태로 도입돼 조달된 자금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전액 지원했다.

라. ABS채권 및 정부·한은 외화유동성 도입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

수은의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은 설립 이듬해인 1977년 한국은행이 보유외화 증가에 대응해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자금 운용을 확대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연불수출자금대출과 외국금융기관 전대자금대출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1987년 한국은행 규정 개정으로 일반 영업자금에도 활용이 가능해지며 용도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예탁 첫째 수은이 수탁한 167억 원(3,460만 달러)은 전체 자금조달의 14.7%를 차지했지만 이후 외환사정 악화로 1980년대 중반까지 한은의 예탁 규모는 크게 줄었다. 이후 외환사정이 나아진 1987년부터 외채 조기상환용 예탁이 도입되고 용도 제한도 폐지되면서 수탁 실적은 빠르게 증가해 1995년에는 1조 7,911억 원(23억 1,000만 달러), 전체 자금조달의 66.8%를 차지할 만큼 확대됐다.

그러나 1997년 IMF 관리체제 진입과 함께 한국은행이 외환보유 확대정책을 시행하며 국내 예탁을 중단함

에 따라 수은의 보유외화 수탁도 종료됐다. 이를 계기로 수은의 외화 조달 구조는 전면적으로 전환됐다.

IBRD 차관 도입

IMF 외환위기 당시 수은은 IBRD 차관을 정부를 통해 전대 받아 외화 조달 기반을 보완했다. 1997년 12월 정부는 IBRD로부터 30억 달러의 경제재건차관을 들여와 이를 산업은행에 전대했고 산업은행은 그중 22억 7,000만 달러를 수은에 재전대했다.

수은은 이 자금을 활용해 한국은행 수탁금 22억 3,200만 달러를 상환했다. 차입조건은 만기 10년 3개월, 금리 LIBOR+1.2%,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방식이었다. 이후 수은은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차관 대출자를 산업은행에서 정부로 변경해 관리비용을 절감했으며 해당 차관은 2003~2004년 2차례에 걸쳐 조기상환했다. 또한 수은은 정부가 별도로 IBRD에서 조달한 20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차관 중 5억 달러를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전대차입했다. 이 차관은 만기 15년 2개월, 금리 LIBOR+0.75% 조건에 5년 거치 후 10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도입됐다.

ABS채권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주택저당채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증권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수은은 같은 해 12월 국내 최초로 보유 연불어음을 기초자산으로 한 외화 ABS채권을 발행했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가 주간사를 맡았으며 구조는 수은이 연불어음을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인 Export Import Securitisation B.V에 매각하고 SPV가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수은은 총 6억 9,700만 달러 규모의 연불어음과 대



1998.12.30 국내 최초의 ABS채권 발행계약 체결식

출채권을 SPV에 매각했고 SPV는 이를 바탕으로 2억 6,500만 달러의 선순위채와 4억 3,200만 달러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선순위채는 전액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됐고 후순위채는 수은이 인수했다.

이 ABS 발행은 IMF 외환위기 직후 국내 금융기관이 조달한 자금 중 최대 규모였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을 기반으로 한 채권 발행 사례로는 아시아 전체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다. 특히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대출자산이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해당 자산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외화를 조달해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외평기금 수탁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외화조달시장은 급속히 경색됐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수은·산은 등 한국물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한 달 만에 3%p 가까이 급등했으며 한국물 미달러채 유통수익률도 급등세를 보였다. 외화차입 통로가 막히자 정부는 2008년 10월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 11월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수은을 통해 국내 은행과 기업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

다. 이는 수출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의 외화 실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수은은 2008년 하반기 정부로부터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수탁해 16개 은행(7개 시중은행·6개 지방은행·3개 국책은행)에 외화를 공급했다. 외평기금은 무역어음재할인 방식의 무역금융 110억 달러와 경쟁입찰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 140억 달러로 구성됐다. 무역어음재할인은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에서 매입한 환어음을 기초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수은이 재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단기무역금융시장 정상화와 금리인하를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했다.

경쟁입찰 방식의 공급은 외화 실수요 은행에 경쟁시장 가격으로 외화유동성을 긴급 공급해 단기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키고 은행이 수출기업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도 기존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해 자연스러운 대출 만기연장을 유도했다. 수은은 이 과정에서 무역금융 108억 달러, 경쟁입찰 방식 긴급자금 92억 달러 등 총 200억 달러를 공급했다.

2014년에도 수은은 정부로부터 150억 달러 규모의 외평기금을 수탁해 국내은행과 기업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했다. 당시 외환보유액이 세계 7위 수준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이를 활용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내수·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화대출제도를 마련했다. 대출한도는 최초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확대됐고 지원 대상도 해외건설·플랜트, 자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대출은 물론, 시설재 수입자금 지원 대출까지 넓어졌다. 국내 16개 은행과 9개 외국계 지점이 기업에 먼저 지원한 후 사후적으로 수은에 차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 국내 자금조달

가. 자본금과 적립금

수은의 자본금은 「수은법」 제4조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은행법」상), 수출업자 단체, 국제금융기구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수은에 출자한 기관은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외환은행이었으나 외환은행은 1989년 민영화 이후 1998년 2월 출자지분 1,150억 원을 반환하고 주주에서 제외됐다. 2025년 말 기준 주주는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3개 기관으로 정부가 76.8%의 지분을 보유했다.

설립 당시 1,500억 원이었던 법정자본금은 연불수출 확대 등에 따라 1977년 5,000억 원, 1986년 1조 원, 1998년 2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해외진출 지원 수요 확대를 반영해 2014년에는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24년 3월에는 법정자본금이 25조 원으로 확대되며 장기적인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납입 자본금도 설립 첫째 554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1993년 6,859억 원에 이르렀다. 1994~1996년은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으로 자본금 출자가 대체됐다. IMF 외환위기였던 1997년에는 현금 250억 원과 담배인삼공사 주식 1,600억 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졌고 이후 여신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자본금은 1999년 2조 4,758억 원에서 2015년 8조 8,781억 원, 2025년 17조 1,73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적립금은 「수은법」 제36조에 따라 결산이익의 10%가 법정적립금으로 먼저 적립되고 정부 이외의 출자기관에 대한 배당 후 잔여이익이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적립된다. 1979년에는 적립금이 자본금과 같아질 때까지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1986년까지 모든 이익을 내부 유보했으며 이후 정부가 배당수입 정책을 강화하면서 1987년부터 배당이 재개됐다. 다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1997~2003년 회계연도에는

배당을 중단했다가 2004년 회계연도 이익잉여금부터 다시 배당을 시행했다.

적립금은 지속적 이익 누적으로 1976년 15억 원에서 1995년 2,954억 원, 2005년 4,625억 원, 2015년 2조 59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2025회계연도 배당금 규모는 6,201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기준 법정적립금은 3,267억 원, 임의적립금은 1조 6,792억 원이었고 2025 회계연도에는 배당금 등 이익잉여금 처분 후 임의적립금 3조 1,654억 원, 법정적립금 8,784억 원을 기록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2015년 말 10.04%에서 2025년 6월 말 17.16%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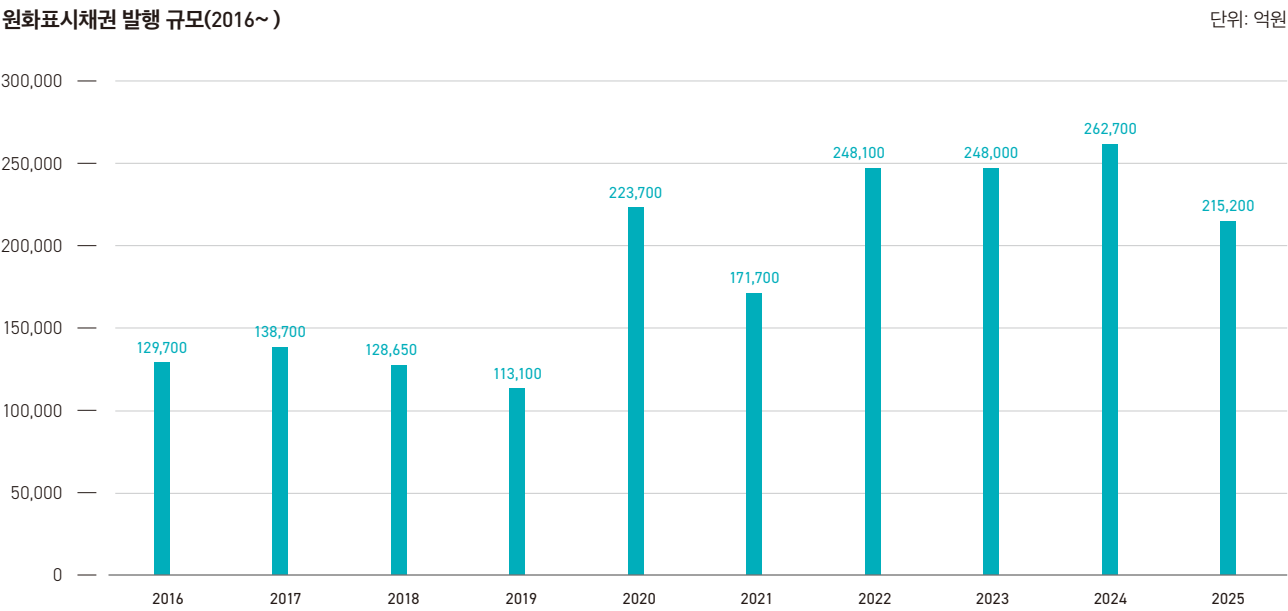
나.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수은은 1984년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최초로 발행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본격적인 기채 활동을 시작했으나 당시 금리 역마진 우려로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은 보류됐다. 이후 1991년 정부가 구소련 소비재 차관 제공을 결정하면서 기존 재원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재차관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했다.

수은은 1991년 11월 264억 원 규모의 첫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 이후 1992년 11월까지 매월 채권을 발행하며 2년간 총 495억 원을 조달했다. 이 채권은 차관 수혜업자에 대한 매출발행 방식으로 발행했고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8%, 이자는 3개월 복리 후 만기 일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화표시채권 발행은 이후 중단됐다가 1999년에 재개됐다. 이는 1998년 정부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수출환어음 재할인 등 수은의 역할이 확대됐으나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외화채권 발행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게다가 당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원화채권 발행에 유리한 환경도 조성됐다.

그러나 1999년 2,500억 원 발행 이후 정부와 수은이



보유한 주식의 유동화가 이뤄지면서 원화 조달 여건이 개선돼 채권 발행이 다시 중단됐다. 2001년 약 2,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며 재개됐으나 2002~2004년에는 발행이 없다가 2005년 들어 5,000억 원의 대규모 원화 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발행자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2005년 이후 원화표시채권 발행 규모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수은의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2007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10조 원 이상의 높은 발행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책금융 수요 확대에 따라 2020년부터 20조 원대 발행이 본격화됐으며, 2024년에는 26조 2,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20조 원을 상회했다.

채권 만기 구조도 다양해졌다. 1991~1992년에는 2년 물이 중심이었고 1999~2005년에는 1년물 중심이었으나 2006년에는 처음으로 3년물(800억 원)을 발행했다. 2007년에는 6개월물과 3년물을 추가해 만기를 다양화했고 2008년 이후에는 3개월·6개월·7개월·1년 등 단기

물이 세분화됐다. 2015년 말 기준으로는 3개월~12개월의 단기 고정금리채와 1.5년·2년·3~5년의 중장기 채권이 함께 발행됐다.

이러한 흐름은 2016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단기물과 중기물을 중심으로 한 발행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만기 구성이 유연하게 조정됐다. 2016~2018년에는 1년물과 2년물이 발행의 중심을 이뤘고 일부 5년물과 10년물, 15년물 등 장기물도 병행 발행됐다. 2020년 이후에는 단기물과 1년물을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3년물·5년물 등 중기물과 함께 20년물, 30년물 등 초장기 채권도 발행됐다.

채권 종류 역시 확장됐다. 2009년에는 최초로 FRN 1,000억 원을 발행했으며 이후 금리스왑을 활용해 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했다. 2011년부터는 구조화채권도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15년 만기에 수익상환부(Callable) 조건을 가진 구조화채권은 2011년 2,500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1,000억 원, 2013년 4,400억 원, 2014년 8,000억 원, 2015년 6,600억 원, 2016년 2,500억 원, 2017년 2,900억 원이 발행되며 일정 수준의 발행이 유지됐다. 이후 한동안 발행이 줄어들었으나 2021

년과 2022년 각각 300억 원씩 발행을 이어갔다. 2023년에는 1,000억 원으로 발행 규모가 다시 확대됐으며 2025년에도 1,000억 원이 발행됐다.

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과 국민투자기금 차입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정부가 출연·출자·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1987년 12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정 후 1988년 1월부터 △정부출자기관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출자·출연을 행하는 출자계정 △국민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상으로 대출하는 대출계정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차관계정으로 구분해 운용됐다.

수은에 대한 출자와 배당은 출자계정에서, 대출과 원리금 수입은 융자계정에서 관리된다. 1996년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투자'가 삭제되며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전환됐다.

수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은 1991년 구소련 소비재차관 제공 등 수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1991년 1,000억 원을 차입한 이후 1992년 225억 원, 1994년과 1995년 각각 1,400억 원을 조달해 수출지원 자금으로 활용했다. 금리는 연 7%, 만기 6년 일시상환 조건이었으나 1996년 이후 신규 차입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은 2004년 말까지 수은의 주요 재정자금 중 하나로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 등 주요 산업 육성과 수출증대를 위한 투융자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1973년 12월 제정된 「국민투자기금법」에 따라 조성됐으며 한국은행이 운용을 담당했다. 수은은 「국민투자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해 1976년부터 이 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금융 축소 기조에 따라 기금 규모가 점차 감소하면서 1992년 전면

폐지돼 신규 차입은 중단되고 기존 차입분만 사후 관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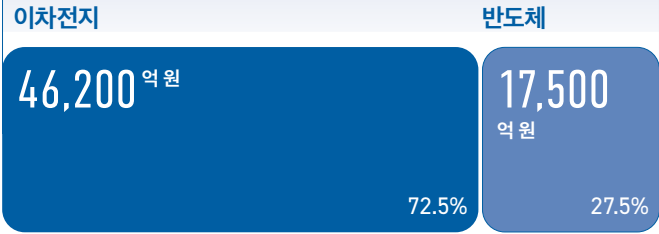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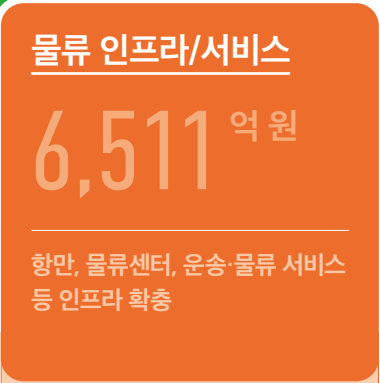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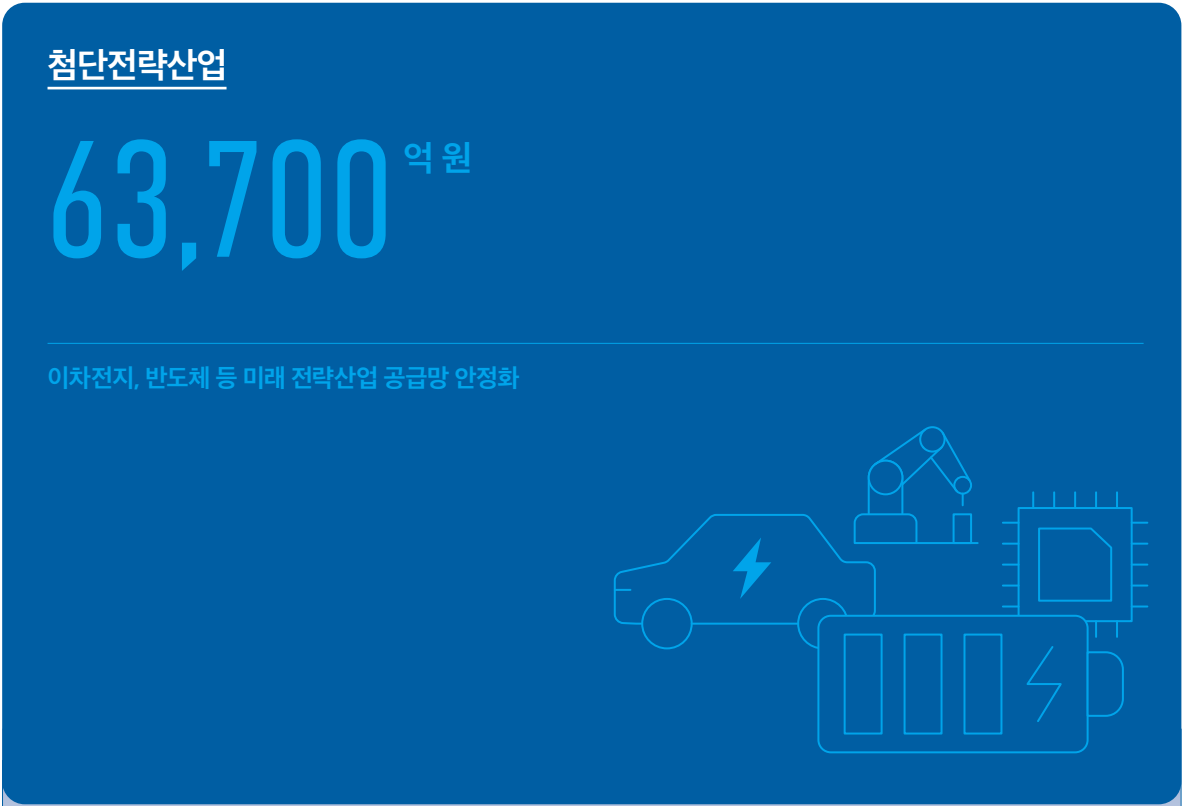
국민투자기금은 폐지되기 전까지 수은의 가장 안정적인 원화자금 조달원으로 연불수출금융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이 기금의 차입금리는 수은의 대출금리보다 연 1%p 낮아 수은의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설립 이후 수은이 이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총 차입 누계액은 1조 122억 원이었으며 당시 출자금 총액 6,859억 원을 크게 상회해 한국은행 수탁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투자기금의 폐지 이후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이 수은의 새로운 원화자금 조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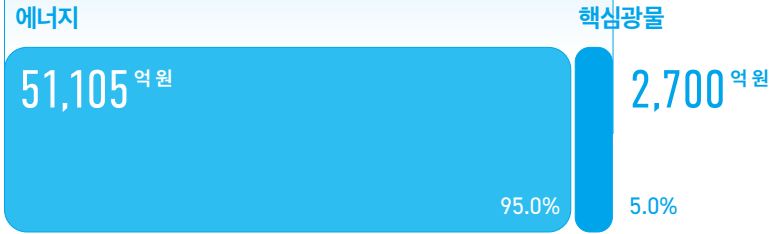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

1절
기금 설립 준비과정 및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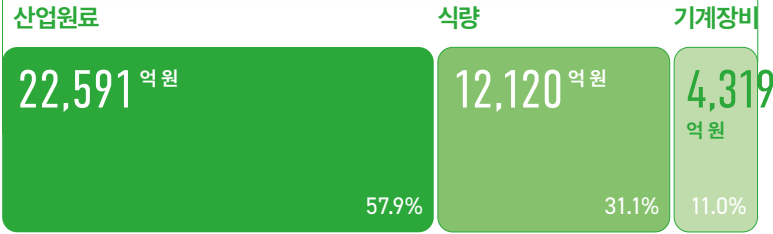
2절
지원실적과 전망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 및 부품, 셀 장비 등
반도체	반도체 소재, 장비, 설계 제조 등



에너지	원유, 가스, LNG 등 에너지 자원
핵심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제1절

기금 설립 준비과정 및 출범

1. 설립 배경

미·중 패권경쟁 등 주요국 사이에 기술·자원 경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같은 주요자원 보유국의 수출규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불안 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핵심 소재·부품의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공급망 충격 가능성까지 커지자 우리 정부는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위기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 20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26일 제정됐으며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수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정과정 초기부터 기금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착수했다. 우선 2024년 6월 시행령 제정 일정에 맞춰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안)을 검토하며 외국환(파생상품) 취급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해 조달비용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금운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같은 달 수은

은 정관과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기금관리·운용·자금지원 업무를 수은의 공식 업무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4년 7월에는 기금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지원 및 조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기금사업부(2개 팀)는 사업발굴과 자금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기금자금팀은 기금 채원 조달을 담당하며, IT기금팀은 공급망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24년 8월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지원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했다. 국회(2인)와 재정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금융위원회(4인), 수은(1인)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협의를 통해 적기에 발족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채원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대규모인 조달 기반 확보가 중요했다. 수은은 기업 금융 수요 조사(641개 사·913개 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한 보증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4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5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보증 승인을 받았다. 국가가



2024.09.05 한국수출입은행 로비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

상환을 보증하는 초우량 채권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수은채 대비 낮은 금리로 기금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향후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9월 5일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금 채원은 정부보증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2024년 보증한도 5조 원)을 통해 조달됐다. 지원 방식은 대출·보증·투자 등으로 구성됐고 지원대상 분야는 △경제안보품목 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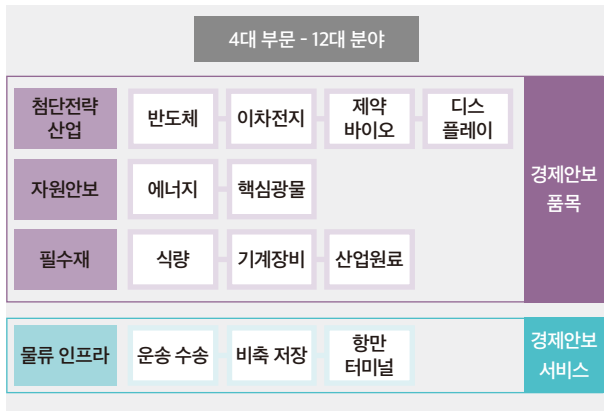
지원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 등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에 규정된 범위 전반을 포괄했다.

2. 기금 지원체계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산업과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점 지원부문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생산기반 강화, 수입선 다변화, 기술자립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경제안보 중요도와 정부의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내역 등을 종합해 4대 중점 지원부문과 12대 세부 분야를 선정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중점 지원 대상



첫째, 첨단전략산업부문은 반도체, 이차전지,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원료와 소재 확보, 국내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한다.

둘째, 자원안보부문은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지분 인수, 도입, 가공,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셋째, 국민경제 필수재부문에서는 식량, 기계장비, 산업원료 등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생산설비 확충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넷째, 물류 인프라·서비스부문은 주요 물자의 운송·유통을 담당하는 해운·항공 인프라 및 항만·터미널 등 물류 기반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포괄한다.

한편 수은은 기금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담회, 개별기업 면담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와 협력채널을 활용해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잠재 지원 후보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수은이 간사로 참여하는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체(산은·기은·무보·신보·기보·해진공 등 10개 기관 참여)를 적극 활용해 산업별 동향, 사업 수요, 유망 프로젝트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을 강화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체계 및 조직도 정비됐다.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의 장 등 2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재정경제부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감독하는 기금감독기관으로서 제도적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추천 2인, 정부 추천 4인, 수은 임직원 1인 등 최대 7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지며 기금운용계획과 자금지원 등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실제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운용기관인 수은이 총괄하고 있다.

수은은 한정된 기금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신,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회계 등 각 부문의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여신 분야에서는 공급망 밸류체인 전 단계의 금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보증·투자를 아우르는 상품체계를 구성하고 마진 축소 및 자본비용 적용 제외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리체계를 구축했다.

자금조달부문에서는 파생상품 취급근거를 마련해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예치 및 유가증권 보유 등 효율적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리스크관리에서는 기금 특성을 반영해 신용·환·금리·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하는 별도 관리체계를 구축했고 회계분야에서는 기금계정과 수은계정을 명확히 구분하며 채권발행비용·인건비 등 직접 비용을 기금이 부담하도록 했다.



2024.06.27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제2절

지원실적과 전망

1. 주요 지원실적과 의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공식 출범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총 92건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대해 총 9조 2,448억 원의 지원을 승인했다. 기금은 특히 첨단 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 필수재 등 우리나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을 집중 지원했다.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부문은 첨단전략산업분야로 지원 규모는 총 3조 7,121억 원(전체의 40.2%)이었다. 특히 기금은 전기차 캐즘 및 무역환경 재편 등의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약화되고 있는 이차전지(2조 5,571억 원) 및 반도체(1조 1,550억 원) 분야 지원에 힘을 쏟아, 우리 기업들의 영업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자원안보분야에는 총 3조 2,899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에너지분야에 2조 2,589억 원을 승인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LNG, 원유 등 에너지분야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했다. 또한 핵심 광물분야에는 1조 310억 원을 지원해 첨단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입선 다변화 등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경제 필수재분야에는 총 2조 229억 원이 지원됐다. 산업 전반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산업원료에 7,990억 원, 식량자원의 안정적 도입과 국내외 생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식량자원분야에 8,920억 원이 투입됐다.

그 외 기금은 수은금융과 공동으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펀드’를 조성하며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 전체 92건 중 45건, 총 1조 1,567억 원이 공급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요 원자재의 확보·도입, 국내외 시설투자 및 운영, 해운물류 등 공급망 안정화의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의 호주 리튬 광산기업 투자사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7월 호주 광산기업 라이언타운리소시스(Liontown



수은의 시설자금대출을 통해 설립된 LS-L&F배터리솔루션의 NCM 전구체 생산공장

Resources)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기로 계약했고 기금은 같은 해 10월 총 2,7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라이언타운리소시스는 서호주 캐슬린밸리(Kathleen Valley) 광산을 중심으로 리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투자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15년간 연 15만 톤 이상의 리튬정광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차 배터리산업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장기 조달 기반이 확보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제련시설 내재화를 추진하기 위해 라이언타운리소시스와의 협력기반도 마련했다.

두 번째 사례는 LS-L&F배터리솔루션의 전구체 생산 시설 신설 투자이다. LS-L&F배터리솔루션은 전북 새

만금산업단지에 연 4만 톤 규모의 NCM 전구체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했으며 기금은 2024년 12월 1,200억 원을 지원했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양극재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그동안 국내 양극재기업은 대부분 중국산 전구체에 의존해 왔다. 이 투자를 통해 구축되는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전구체는 전량 국내 양극재 제조사인 L&F에 공급될 예정으로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공급망의 국내 완결성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배터리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 및 자

원개발 민·관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공급망안정화 블라인드펀드 조성이다. 이 펀드는 우리 기업의 핵심 공급망 관련 사업에 민간자금을 유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금과 수은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펀드 조성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설정했고 전체 약정액의 최소 1.5배 이상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에너지·광물자원, 해외농업자원 전략품목,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2024년 12월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PE, 코스톤아시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총 4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2025년 7월 1조 8,337억 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출범 직후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련 금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며 본격적인 재원조달에 착수했다. 2024년 10월 첫 1,900억 원 규모의 3년물(금리 2.961%)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100억 원(금리 2.82%)을 추가 발행하며 시장 안착을 위한 초기 발행 기반을 다졌다. 이후 2025년에도 발행이 꾸준히 이어졌다. 1월 2,000억 원(2.5년·2.78%), 2월 900억 원(9개월·2.77%)과 500억 원(1년·2.71%)을 연이어 발행했다. 이어 3월에는 1,900억 원(8개월·2.78%), 4월 2,000억 원(6개월·2.7%)과 900억 원(2.65%), 5월 2,700억 원(7개월·2.5%)과 1,300억 원(2.48%) 등을 발행했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발행 규모는 총 6조 1,900억 원에 달했다.

기금채권 발행의 성공에는 적극적인 IR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기금채권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국내에서는 연기금·은행·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총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 IR을 실시했으며, 국외에서는 2024년 11월 런던과 12월 홍콩·싱가포

르 등 주요 금융허브에서 중앙은행과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중심으로 2차례의 IR 출장을 진행해 총 35개 투자기관을 직접 만났다. 이와 함께 수시로 컨퍼런스콜 등 비대면 IR을 실시해 채권 수요 기반을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금채권은 신규 발행 채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신뢰를 빠르게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조달금리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2025년 발행한 기금채권의 발행금리는 수은채보다 0.04~0.09%p, AAA등급 은행채보다도 0.07~0.15%p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재원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금리조건의 공급망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한편, 기금은 2026년 4월 글로벌 조달시장에서 최초의 외화표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했다. 발행규모는 5억 달러, 만기는 5년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자 앞 홍보, 수요 발굴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우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 글로벌 공급망 밸류체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마중물’이자 ‘금융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첫 글로벌본드 주요 발행 조건

통화	미 달러화
만기	5년
발행 규모	5억 달러
금리 형태	고정금리
발행 금리	T5+0.27%
주간사	Citi, DB, HSBC

2. 향후 발전방향과 전망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발표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추진사업 지원 및 자체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대출, 직·간접 투자 등 우리기업의 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국내 도입을 위한 국내의 생산기반 구축, 물류·인프라 확보,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변화하는 공급망 대외환경 및 다양한 금융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공급망 상생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여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중소·중견 특별 한도 운영 등을 통해 신용도가 비교적 열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핵심광물 확보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한 기금투자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핵심광물·에너지분야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생산, 가공, 수송, 저장 등 단계별 사업 투자 등을 위해 공급망 기금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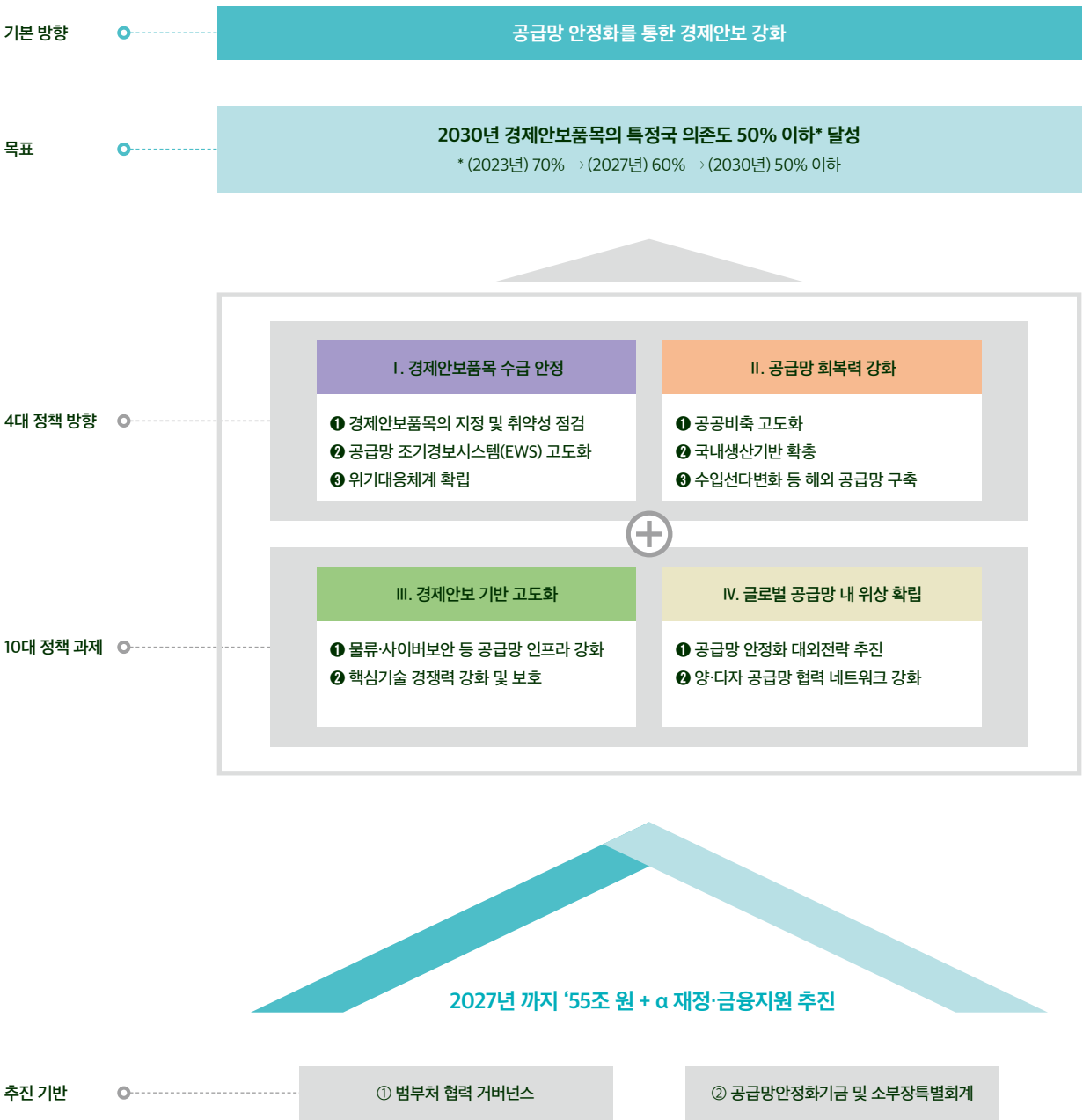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25년 신규로 도입한 ‘공급망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타격이 큰 핵심분야 기업을 저금리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에 지속 기여하는 한편, 기금 운용 고도화에 필수적인 법상 투자·채원 등 제약사항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더불어 2025년 1월 신설한 ‘공급망분석팀’을 중심으로 산업별, 품목별 공급망 연구·분석, 정부 앞 정책 제

언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 대내외적으로 기금의 저변을 확장하고, 수은이 공급망 정책을 선도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국내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등 핵심광물 협력필요 지역의 MDB, ECA 등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금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효과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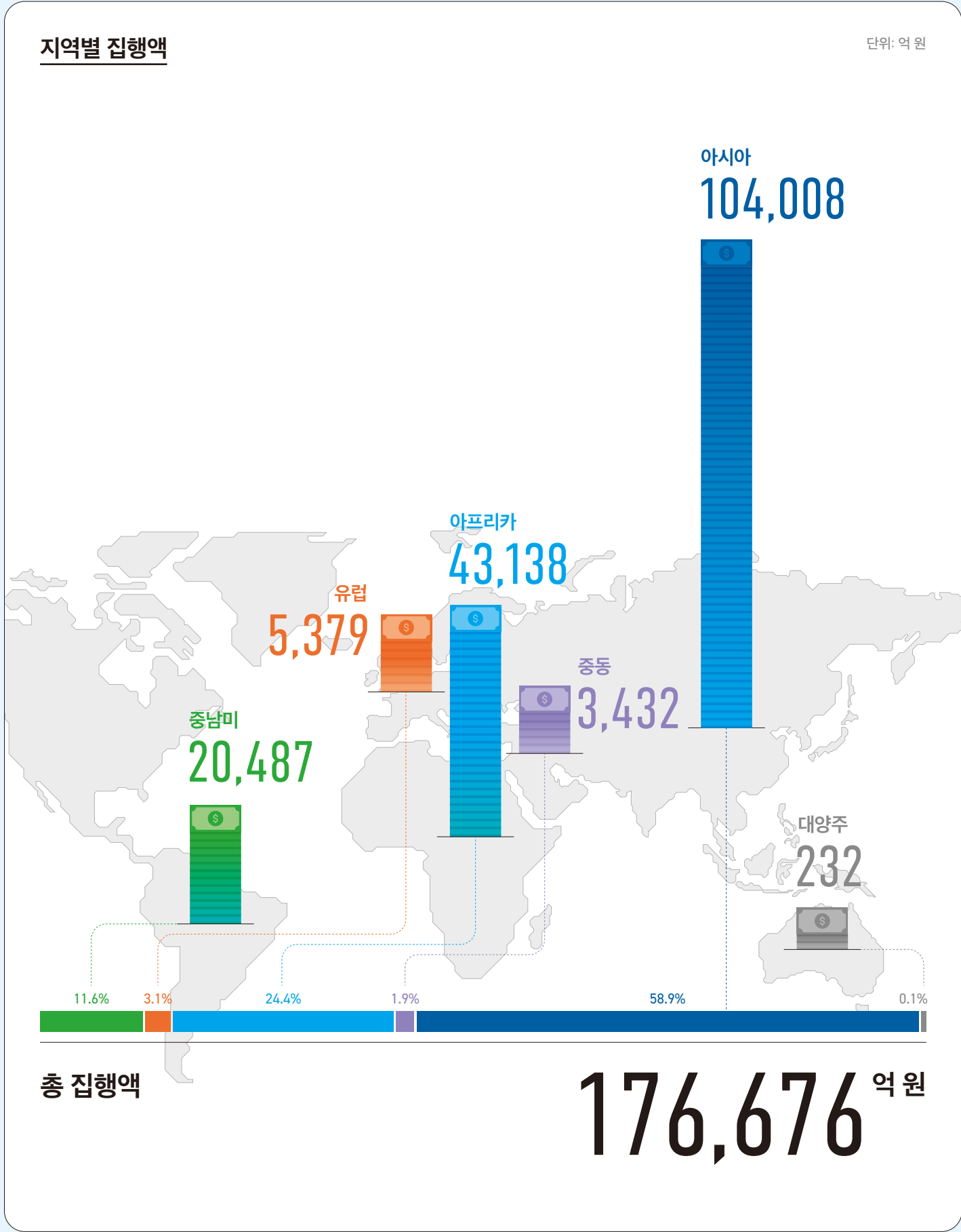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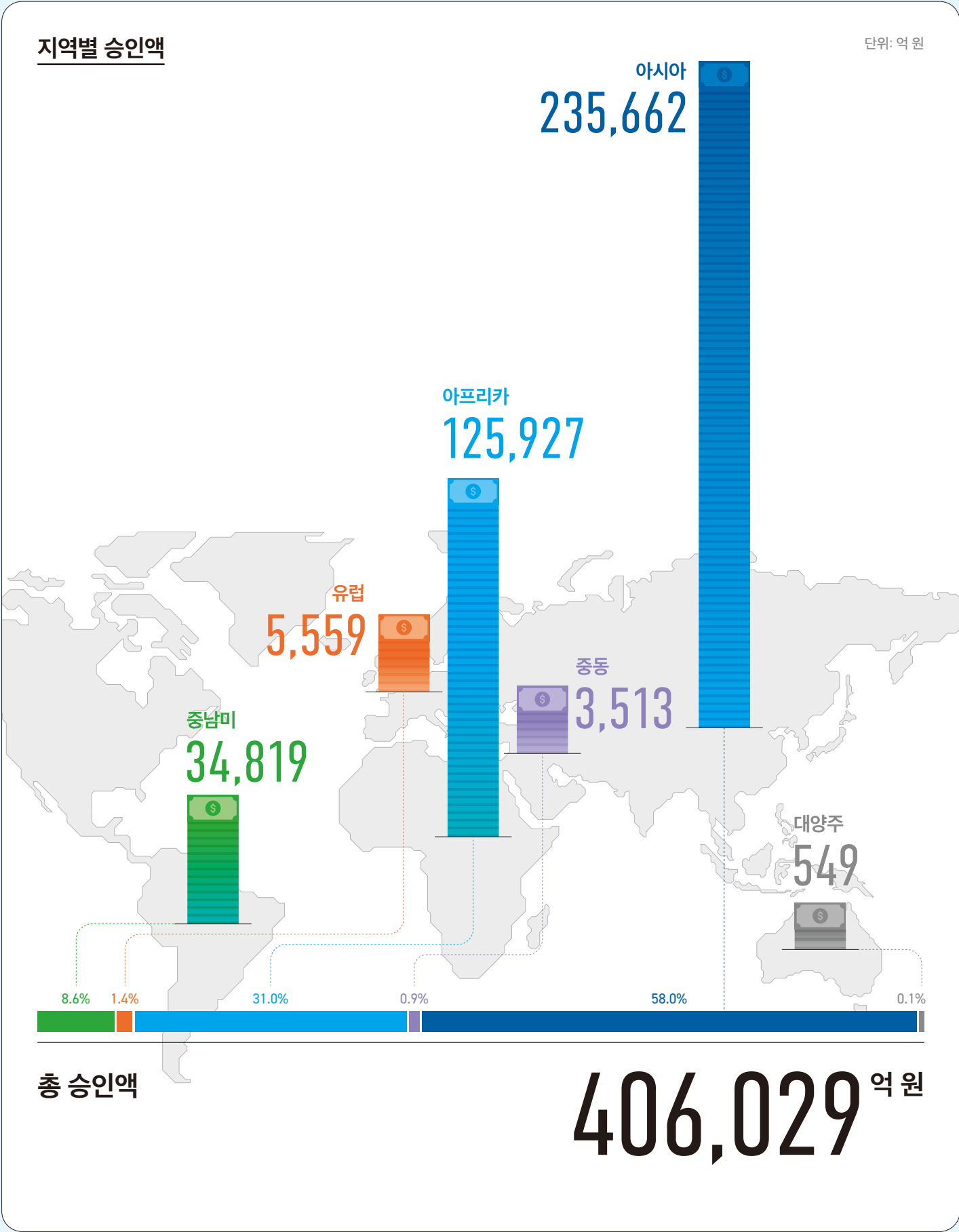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1절
기금의 수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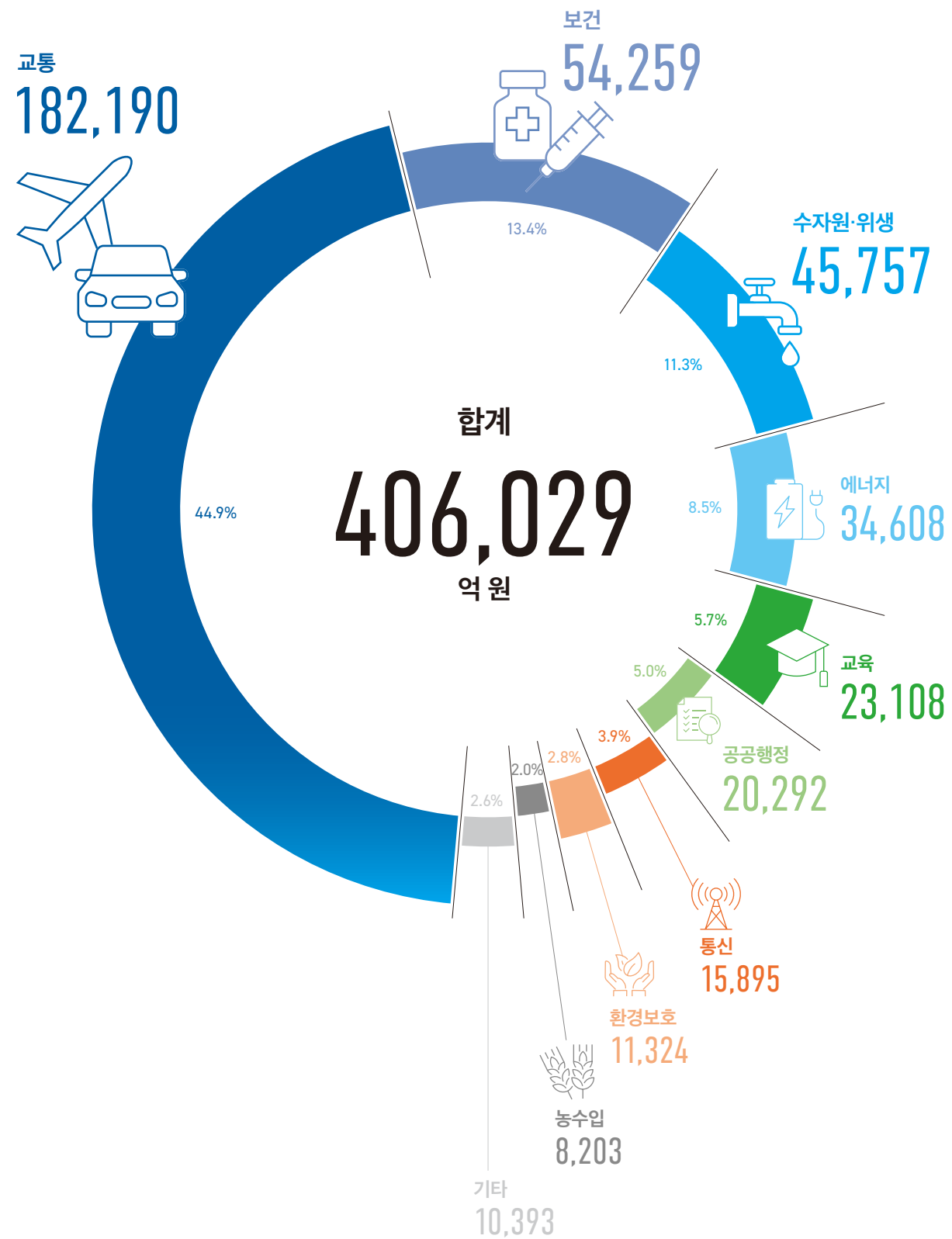
2절
기금의 성장과 발전

3절
업무영역 확대와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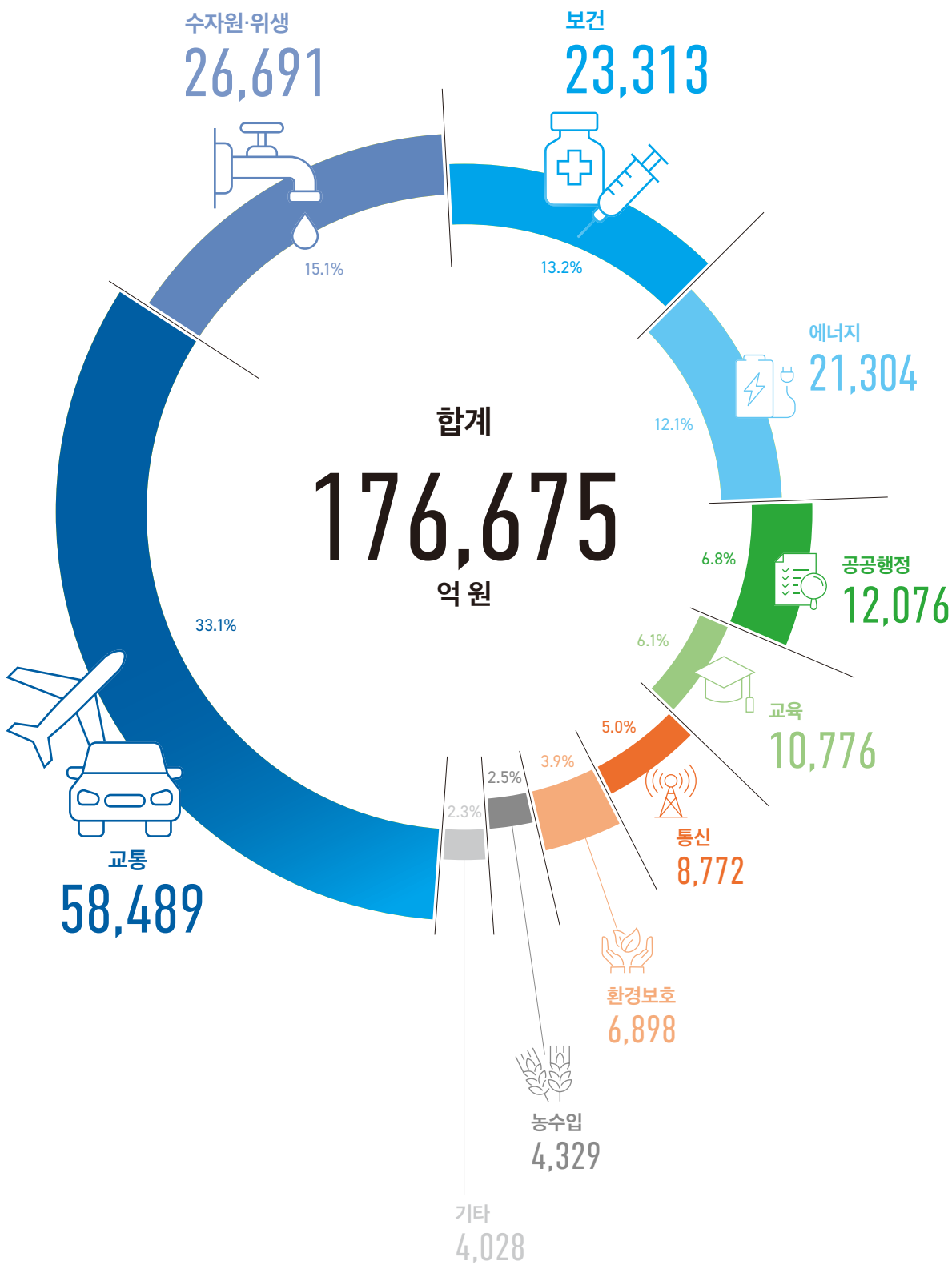
분야별 승인액

단위: 억 원



분야별 집행액

단위: 억 원



제1절

기금의 수탁

1. 설립 배경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1980년대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교류를 꾸준히 확대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해외투자의 절반 이상과 해외건설의 대부분도 개도국에 집중될 만큼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상호 의존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개발 경험과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개도국의 증가, 그리고 장기적 수출 확대와 해외진출 기반이 필요하다는 국내적 요구가 맞물린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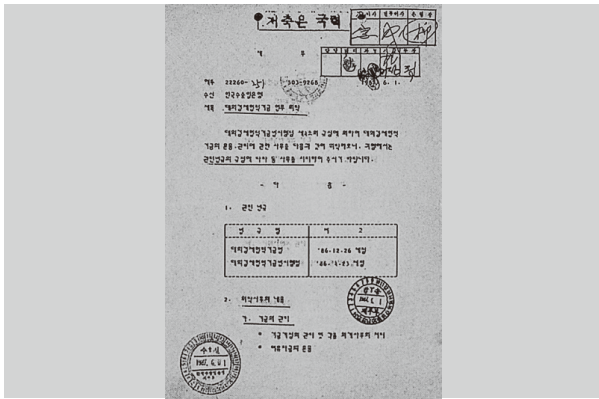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은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적정 기술·설비와 연계해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돕고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와 장기 협력 기반을 강화하

는 상호 호혜적 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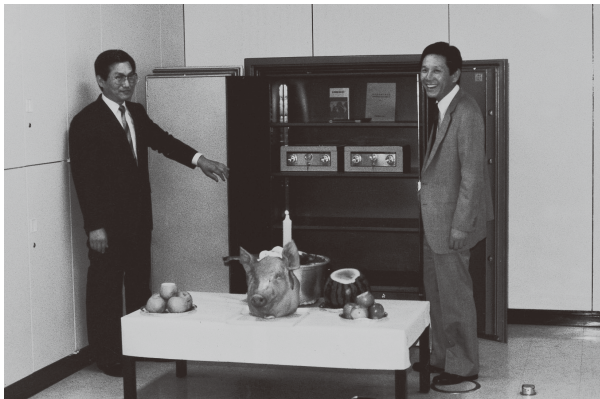
정부는 1983년 1월 해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개도국 협력정책을 논의했고 1983년 9월 ‘개도국 협력확대방안’과 1984년 12월 ‘대개도국 경제협력방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해외협력위원회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로 흡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고 1986년 3월 경제기획원은 TF를 구성해 같은 해 6월 ‘개도국 경제협력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다양한 협력전략을 종합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대외경제협력공사’와 기금 설립을 함께 제안했다.

1986년 7월 3일 열린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는 공사 설립은 뒤로 미루더라도 기금은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은 7월 11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안을 마련했고 8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기금 설립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재무부로 결정됐다.

한편 기금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수은은 1986년 9월 12일 업무연구반을 꾸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기



1987.06.01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공문



1987.06.01 대외경제협력기금 금고 설치행사

금법)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경제기획원 시안을 기초로 자체 법안을 완성해 1986년 10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고 이로써 기금 설립의 제도적 기반이 최종 갖춰졌다.

2. 「기금법」 제정 및 수탁기관 지정

1986년 7월 정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직후 경제기획원은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 문제와 함께 심사·집행 등 관리·운용 사무를 담당할 기관 선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금 설치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수은법」 제18조에 근거해 수은이 경제협력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기금은 수은이 취급하는 공적수출신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ODA로서 정부 간의 개발협력용 자금이므로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경제기획원의 주장이 우세했고 결국 「기금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기금 수탁기관 선정은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에서 수은이 공적수출신용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경제기획원은 「기금법」 시안에서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은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금법」 최종 법안은 주무부서인 재무부가 경제기획원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해 1986년 11월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책 질의는 2가지 쟁점에 집중됐다. 하나는 국제수지 흑자전환 전망이 불확실하고 놓여진 개발이 낙후된 상황에서 기금 설립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었고, 또 하나는 기금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충분히 인정되면서 「기금법」은 1986년 12월 2일 제131회 정기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가결됐고 12월 26일 법률 제3863호로 공포됐다.

수은은 「기금법」 제정에 앞서 1986년 9월 12일 기획부 내에 7명으로 구성된 업무연구반을 발족시켜 재무법령안 제정에 참여했다. 연구반은 1987년 3월 경제협력기금부 설립준비위원회(직인 21명)로 확대 개편되며 「기금

법」시행령안 마련 등 본격적인 법령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1987년 4월 23일에는 「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41호)이 공포됐고 같은 해 6월 25일 「기금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15호)이 공포되면서 관련 법령 제정이 완료됐다.

관련 규정 제정 작업도 진행됐다. 1987년 5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세칙’, 1987년 6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제정했고 1987년 7월에는 수은 내규로 ‘기금지원업무 취급규정’을 제정해 기금 업무 수행절차를 정비했다.

한편 재무부는 1987년 6월 1일자로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은에 정식 위탁했고 이에 따라 수은은 경제협력기금부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1987년 7월 1일에는 최초 정부 출연금 150억 원이 기금으로 납입됐다.

제2절

기금의 성장과 발전

1. 기금운용체계 구축

가. 운용체계

기금은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금 운용의 핵심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운영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실무 집행을 담당하는 수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개발협력분야 최고의 정책기구로 개발도상국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 1월 국무총리직속으로 설치됐다. 이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연간 종합시행계획, ODA평가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산하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가 부의 안전 사전검토와 위임사항 처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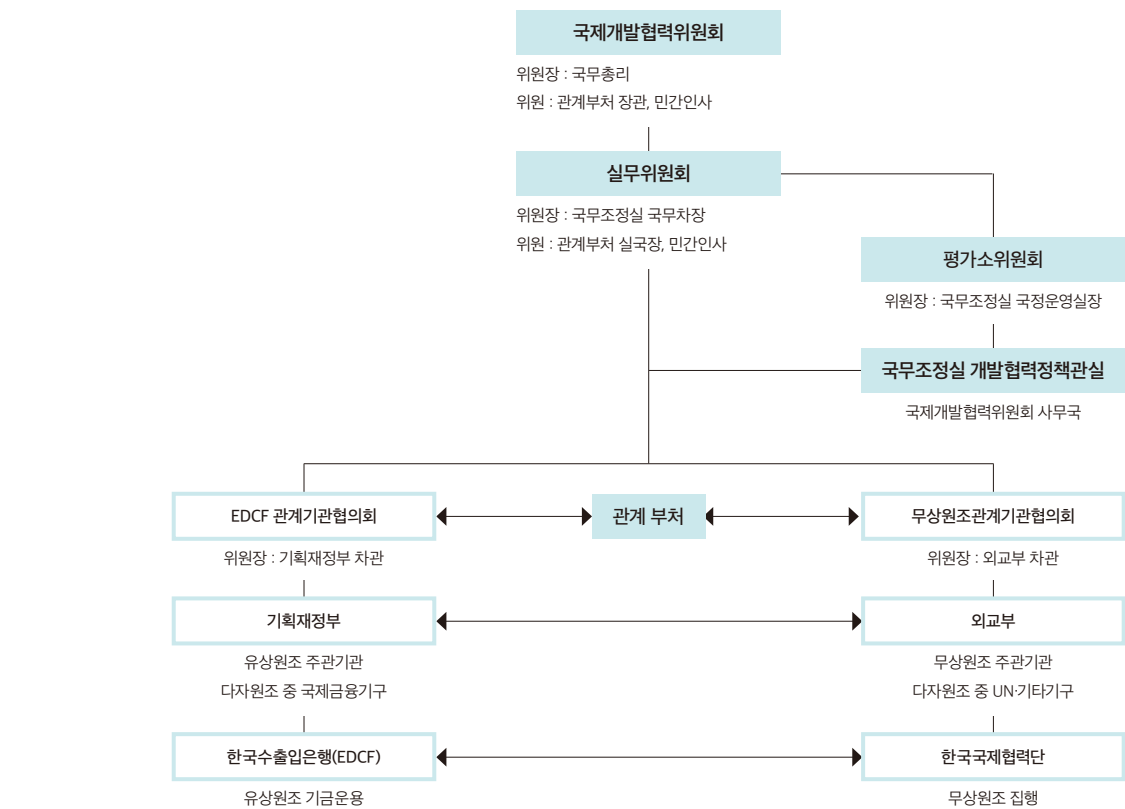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법」에 근거한 의사결정기구로

기금의 운용·관리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 보고사항, 규정의 개정에 관한 중요사항 및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경제협력 관련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처로서 정책 수립,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개도국의 지원요청에 대한 정부지원방침 결정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시 안전작성과 부의 등 제반실무를 담당한다.

수은은 재정경제부로부터 기금 업무를 수탁 받아 실무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경험총괄부문과 경험사업부문을 통해 국가별 진출전략 마련, 사업발굴과 심사, 정부 결정에 따른 차관공여계약 체결, 차관자금 집행 및 사후

설립 당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관리까지 기금 관련 실무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나. 운용방법

기금은 OECD DAC가 정한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는 원조성 차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도국 정부는 국가 개발계획과 전략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차관 지원을 신청하므로 개발효과가 큰 사업이 추진되며 우리 정부는 회수된 원리금을 다시 원조재원으로 사용해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개발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기금은 원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구축성 지원을 통해 개도국 개발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이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도 OECD 규범을 준수해 중·고소득국가나 상업성이 높은 사업에는 구축성 지원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체 사업규모의 절반 이상에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금의 지원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 대상 차관은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프로그램차관, 섹터개발차관, 민간협력차관 등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개발사업차관은 상하수도, 병원, 환경, 농업,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기자재차관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조달만을 지원하는 차관이며 민자사업차관은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한다.

프로그램차관은 국가 또는 특정 부문의 종합개발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섹터개발차관은 특정분야의 여러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민간협력차관은 개도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법인에 직접 자금을 제공해 민간부문의 개발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 이외의 지원제도로는 국제개발금융기구에 제공하는 차관,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민자사업법에 대한 출자,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등이 있다.

차관 지원절차는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수원국의 개발 전략과 목표를 반영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프로그램미션을 파견해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F/S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확정하고 수원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차관을 공식 신청한다. 재정경제부는 신청서를 접수해 수은에 심사를 의뢰하며 수은은 상업성 검토, 현지조사 및 수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토의록(Minutes of Discussion: MOD)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수원국에 통보한다.

이후 정부 간 공여협정(Agreement: A/G)과 시행약정(Arrangement: A/R), 그리고 수은과 차주 간의 차관공여계약(Loan Agreement: L/A)이 체결·발효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컨설턴트 및 구매계약은 수원국의 책임 하에 이뤄지며 계약에 따라 차관 자금이 집행된다. 사업 완료 시 수원국은 완공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PCR)를 제출하고 수은은 완공평가를 시행하며 일정기간 후 사업목적 달성 수준과 개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평가를 진행한다.

기금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

룹으로 나눠 금리, 상환기간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소득그룹 분류 변화에 따라 국가별 그룹조정이 이뤄진다.

2. 지원 규모 확대와 선진 원조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정립

가. 지원제도 발전

기금은 국제개발 환경의 변화와 개도국의 복합적인 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사업의 개발효과와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고도화해 왔다.

2011년 6월에는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차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개별 사업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다수의 정책과제와 개발사업을 예산 지원 방식으로 일괄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정책추진 역량과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다. 이어 2013년 12월에는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신설했다. 보증대상은 수원국 정부의 복보증이 가능한 거래로 한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증범위 역시 정치적 위험에 국한함으로써 공적자금의 안정적 운용과 리스크 분담의 균형을 도모했다.

2014년 9월에는 민간협력차관, 민간협력전대차관, 섹터개발차관,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현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차관)을 신설했다. 민간협력차관과 민간협력전대차관은 민간부문개발 지원을 강화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다. 민간협력차관은 개도국 법인을 직접 지원하는 차관이며 민간협력전대차관은 개도국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법인을 지원하는 전대차관이다. 섹터개발차관은 특정부문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세부목표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고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차관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취약국 지원 기준을 마련해 OECD 취약국 원칙과의 부합여부를 사업준비 및 심사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취약국 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후 2017년에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기금 제도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과 함께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을 마련해 사업설계와 집행과정에서 빈곤 중식, 양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성별에 따른 영향과 불균형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내규 개정을 통해 기금 중기운용전략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준비기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확립했다. 특히 다수의 개별 사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 소진 방식이 도입됐으며 섹터개발차관의 특성을 반영해 주요 심사항목을 간소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해외사무소의 역할도 대폭 강화해 사업개발과 지원전략 수립 등 일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현지에 위임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제도적 유연성을 강화했다. 6월에는 코로나19 대

응을 위한 긴급 기자재차관 업무지침을 제정해 개도국의 보건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K-방역 확산의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내용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설계 변경이나 사업부지 조정, 추가 과업 발생 시에도 원활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기치 못한 사업비 부족 상황에 대비해 보충융자와 예비비 활용을 유연화해 사업중단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사업 효과성을 제고했다.

2021년에는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한층 정교해졌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대응 기자재차관과 긴급재난대응 섹터개발차관제도를 구축했다. 이는 재난의 불가피성과 예측의 어려움을 감안해 명확한 지원근거를 사전에 마련한 것으로 수원국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2022년에는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낙찰조건부제도를 개선했다. 경쟁국의 양허성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제경쟁입찰 참여 시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 제도 개선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정책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비구속성 원조 확대 요구에 대응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비구속성 지원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전략적·체계적 비구속성 경험기반 강화를 통해 대내외 요구에 부응하고 단계적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위험을 보완했다.

2023년에는 지원 규모 확대에 걸맞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정비했다.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중복을 해소해 추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MDB 협조융자와 프로그램차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차관의 법적 근거와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과는 2024년에 이르러 종합적으로 구현됐다. 지원제도 전면개선을 통해 사업승인부터 구매계약 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기금 사업의 실행 역량과 추진력이 크게 향상됐다. 이는 수원국과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 만족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여 경쟁 속에서 기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또한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업관리자문관(Project Management Advisor: PMA)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등 현지에 파견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했다. 더 나아가 기존 스왑거래 중심의 외화조달 방식에 현물 환 매입과 외화 환전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외화 금고은행을 선정해 외화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한층 강화했다.

나. 지원조건 확대

기금은 설립 초기 공적개발원조 기준인 최저 증여율 25%를 충족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금리 연 4~5%, 상환기간 20년(거치 5년 포함) 이내의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탄력적 지원조건은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이에 따라 1989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조건 등 운용지침’을 제정해 개도국을 소득수준별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금리는 2.5~5.0%, 상환기간은 20~25년(거치 5~7년)으로 차등적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6년에는 금리 차등 폭을 1.0~5.0%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25~30년(거치 7~10년)으로 늘리며 국가별 특성에 더욱 정교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양허성 차관의 이점이 줄어들고 구축성 원조로 인해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2004년 12월 금리를 0.5~3.0%로 낮추는 조정을 단행했다. 이어 2008년 7월에는 금리를 0.01~2.5%까지 인하해 선진국 수준의 차관조건을 마련하고 DAC 권고에 따라 최빈국

지원의 증여율을 90%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대조건과 선택적 지원조건도 도입했다. 1989년 12월 운영지침 제정 당시에는 사업준비차관의 특성을 고려해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우대조건을 마련했지만 활용되지 않아 1995년 4월 이를 폐지하고 전략국가의 전략사업에 대해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우대근거를 신설했다. 1997년 1월에는 전략국가·전략사업을 주요국가·주요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우대폭을 1.0% 포인트로 확대했고 1996년 OECD 가입에 따라 구축성 원조가 제한되는 상업성 사업의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상업성 검증절차를 적용하게 됐다. 또한 2004년 12월에는 표준조건 내에서 차주의 필요에 따라 금리·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지원조건이 도입되면서 운영 유연성이 높아졌다.

2007년 8월에는 소규모 기금 차관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액차관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지원 기준은 200만 SDR(약 300만 달러) 미만의 사업이었으며 구축성 원칙으로 운영됐다. 이후 2012년 10월 무이자 조건을 적용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으며 지원 대상 한도를 2013년 12월 500만 달러, 2017년 6월 700만 달러로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2014년 9월에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기금사업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주사업에는 무이자, 중견기업 수주사업에는 현행 이자율의 50%를 적용하는 우대금리제도를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수주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서 동일한 우대를 적용했다.

2021년에는 기금사업 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조건 개편이 단행됐다. 금리와 상환기간을 중심으로 기금지원 조건을 수요자 맞춤형 체계로 전면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었다. 구축성 원조의 경우 저·중소득국에 적용하던 소득그룹별 0.10~0.25%의 차등금리를 일괄 0.1%로 인하해 금융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 비

구속성 원조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일 금리·상환기간 구조를 탈피해 ‘저금리’와 ‘장기상환’ 중 선택할 수 있는 총 4가지 복수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수원국별로 상이한 금융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그룹 체계를 5개에서 4개로 통합·단순화하고 프로그램차관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금리와 상환기간을 신설하는 등 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수원국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확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 협조용자 활성화

기금은 국제개발 환경 변화와 개도국 수요에 대응해 MDB와의 협조용자를 지속 강화해왔다. 도입 초기 협조용자는 MDB와 공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검증된 우수 사업을 확보하고 이들이 보유한 풍부한 원조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이를 위해 1989년 12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해 협조용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1994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에서 ADB와 최초의 협조용자를 실행했다. 이후 2005년 12월에는 튀르키예 전동차 구매 사업을 일본 JBIC과 함께 지원하며 협조대상을 국제개발기구에서 타국 수출신용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협조용자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돼 총 4건, 약 1억 7,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특히 그해 3월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에서는 ADB뿐 아니라 호주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까지 참여하면서 첫 다자 협조용자가 성사됐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자 협조용자는 주요한 지원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지원지역 역시 아시아 중심에서 아프리카와 남미로 확대됐으며 2007년 12월 마다가스카르를 시작으로 2008년 탄자니아, 2009년 모잠비크와 말리, 2010년 우간다, 2013년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지역 지원이 활발히 이어졌다. 남미지역 지원은 2000년 볼리비아와 2003년 온두라스 지원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2011~2015년 니카라과에 3차례에 걸쳐 약 1억 달러를 지원했다.

2016년에는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I)과 협조용자 협약을 체결해 중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WB·ADB와는 랜드마크 및 대형 인프라사업 공동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수원국 간 3자 협조용자 사업추진의향서(Letter of Designation: LOD)를 체결해 에티오피아 농업단지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2017년에는 WB, ADB, IDB, AfDB 등 주요 MDB와 통합형 협의를 연 3회 실시해 70여 개 인프라 개발사업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4건,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협조용자를 승인했다. 아울러 WB와 우간다 농업개발 협조용자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4년간 3억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IDB와 공동으로 Korea-LAC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협조용자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했다.

2018년에는 기금,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EDPF, 수출금융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는 MDB 통합형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조용자 후보사업 70여 건을 발굴하고 이 중 7건, 4억 3,000만 달러를 승인했다. 과테말라 병원 인프라 구축 및 장비 지원사업은 CABI와의 협조용자를 통해 기금 최초로 과테말라를 지원한 사례로 총 7,900만 달러를 승인하며 보건의료 인프라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에 기여했다.

2019년에는 엘살바도르와 파라과이에서 MDB 협조용자사업을 최초 승인했다.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MDB 협조용자사업 최초 승인을 통해 진행된 로스초로스 프로젝트 조감도

건설 및 도로 확장사업에는 총 사업비 2억 6,900만 달러 가운데 기금은 8,050만 달러를 CABI(1억 6,500만 달러)·엘살바도르 정부(2,300만 달러)와 협조용자로 지원했으며 파라과이 농업물류도로 개선사업에는 총 사업비 2억 3,50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IDB 1억 8,500만 달러)를 공급해 축산물 생산거점의 물류 효율성을 제고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MDB 협조용자를 활용해 기금 최초의 긴급대응 차관을 제공했다. 전체 코로나19 대응 차관 가운데 약 42%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달러를 협조용자 방식으로 신속 집행했는데 AfDB 협조용자 3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파라과이에 대해서는 기금 5,000만 달러와 IDB 협조용자를 결합한 코로나19 긴급대응 프로그램차관을 제공해 보건·경제위기 대응과 함께 K-방역의 제도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021년 이후에는 MDB에 자금 운용·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퍼실리티를 적극 활용해 협조용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IDB, ADB, AfDB, CABI, WB와의 협조용자 퍼실리티 총 한도는 24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특히 IDB 퍼실리티는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증액돼 연간 최대 승인실적을 기록했다. 동시에 기금은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중점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그린 협조용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총 6건, 3억 1,600만 달러 규모의 그린 협조용자가 승인됐다.

대표 사례로는 콜롬비아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 프로그램차관’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이행을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이 1억 달러를 제공하고 IDB가 6억 달러를 협조용자로 지원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에너지섹터 프로그램차관은 발전·송배전관리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구조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도모한 사업으로 기금 1억 달러, IDB 2억 달러, CABI 3억 달러가 결합된 다자 협조용자 형태로 추진됐다.

2022년에는 MDB 협조용자 플랫폼의 누적 한도를 확대하며 대형 인프라사업 발굴과 협조용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유망사업을 MDB와 공동으로 발굴한 뒤 사업 범위와 사업비를 분담하고 심사·사업관리·사후관리까지 공동수행하는 협조용자 방식을 본격화했다. 이 가운데 CABI와의 협조용자로 기 승인한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에 기금이 보충용자로 1억 2,667만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CABI 협조용자 퍼실리티의 특성을 활용해 입찰 참여자를 우리 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국내 건설사가 최종 수주에 성공하며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WB와 협조용자 설명회를 개최해 WB 지역·분야별 심사역을 대상으로 기금 재원 활용 방식을 소개하며 WB 주도 사업에 대한 협조용자 기회를 확대했다.

2023년에는 MDB 협조용자 한도를 대폭 확대하며 양적성장을 가속화했다. 에너지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한 총 4억 4,900만 달러의 승인 실적을 달성했다. 대표 사례인 볼리비아 지방전력화 사업은 기금과 IDB가



2023.11.18 EDGF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벨리즈 방문

각각 1억 달러를 지원한 협조융자사업으로 농촌 및 취약 지역의 전력 접근성을 개선해 에너지 빈곤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이는 기금의 그린분야 중점 확대 정책과 수원국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빈곤종식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4년에는 신규 지원국가 발굴성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협조융자 외연이 한층 확대됐다. 보건과 에너지 전환 등 중점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총 7건, 5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협조융자가 승인돼 전년 대비 24.1% 증가했다. 그중 700만 달러를 지원한 벨리즈 보건시스템 개선사업은 벨리즈가 2023년 기금 지원대상국 편입 이후 벨리즈에서 최초로 추진된 사업으로 병원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보건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했다. 또한 2024년 2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IDB 협조융자 퍼실리티의 약정규모를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대폭 증액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MOU의 약정규모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증액하며 단일 MDB 협조융자 한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 1억 달러와 에콰도르 1억 달러 등 협력국을 중심으로 승인 실적이 크게 확대됐으며 중남미정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협조융자 모델을 전수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라. 사업 발굴체제 구축

기금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발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양국 간 정책협의를 활성화했다. 과거에는 개도국 정부가 타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F/S를 완료한 사업 중 일부를 심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선진국의 지원이 보류된 사업이나 준비가 미흡한 사업이 기금 차관 대상으로 포함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1999년부터 개도국과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도입해 기금의 정책방향과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 구조를 마련했다. 2005년부터는 국가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도국의 개발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정책협의를와 사업 준비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업발굴의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했다.

정책협의를 기금이 지원 규모, 중점지원분야, 절차를 설명하고 개도국이 자국의 개발계획과 우선순위, 기금의 지원 희망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상호소통구조는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이해를 반영하는 효과적인 협의를 가능하게 했다. 정책협의를 시행 초기 경험 잠재력이 높은 중점지원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후 일반지원국가로 점차 확대됐다.

2005년 도입한 국별프로그램(Country Program)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중기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선진국 원조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중기 재원계획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국가별 프로그램은 지원규모와 유망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중기 재원 수요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금지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3년에는 국별프로그램팀이 신설돼 CPS 수립과 모니터링, 중기 지원계획 수립, 국가별 프로그램미션 실시 등을 전담하면서 타 기관 연계사업 확대, 비구속성 사

업 확대, 중소기업 참여 강화 등 정책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국별프로그램은 초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점국가로 확대돼 운용 중이다.

사업발굴의 내실화를 위해 F/S 지원도 강화했다. F/S는 기초설계뿐 아니라 운영·유지 방안, 환경·사회 영향 등 사업수행의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필수절차로 기금은 1997년 사업개발지원비 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개도국 개발계획의 우선순위가 높고 경험 증진효과가 큰 유망사업을 대상으로 F/S 지원을 시작했다. 2005년 스리랑카 함반토타 행정단지 건설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는 국내업체를 직접 선정해 F/S를 맡기고 있으며 2025년까지 교통, 수자원·위생, 공공행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34건의 F/S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기금사업의 성공적 수행뿐 아니라 국내업체의 해외실적 축적과 시장 진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는 사업개념이 불명확한 후보사업에 대해 F/S 이전 단계에서 개도국과 협의해 사업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는 사업기본개념서(Project Concept Paper: PCP) 작성제도를 도입했다. 기본 사업개념, 주요 기술사항, 개발효과, 정책·전략적 타당성 등 F/S의 필수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조사의 범위와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마. 글로벌 협력 강화

수은은 1982년 ADB에 직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선진 금융기법 습득을 본격화했으며 1998년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1999년 IBRD에도 직원을 파견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했다. 이후 선진 공적수출기관은 물론 다양한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꾸준히 넓혀 왔다.

2012년에는 OECD DAC 가입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체제를 검토하는 동료검토를 받았다. 동료검토는 회원국 간 ODA정책과 제도를 상호평가해 개선을 도모하는 DAC의 핵심 제도로 우리 정부는 메모랜덤 제출, DAC실사단의 방한 및 캄보디아 현지조사, 최종회의 등을 거쳐 평가에 참여했다. DAC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체계적 ODA제도 개선 노력과 원조 확대의지를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 고유의 개발경험을 활용한 수원국 역량강화 노력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2017년에 수행된 동료검토에서는 지원이 부족한 수원국, 특히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 대한 기금의 높은 지원 비중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2024년에 수행된 동료검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긴급재난대응 차관제도 도입 등이 회원국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상원조분야의 협력을 위해 운영된 대외경제협력기금-JICA 정례협의를 2008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2025년까지 총 14회 개최됐으며 기후변화, 혁신적 개발금융 수단, 민간부문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양 기관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채널로 자리 잡았다. 나이가 인력 교류 및 협조융자 발굴 등 실질적 협력강화 논의도 이어졌다.

아시아공여국 간 협력체제인 4개 국 원조기관회의는 2010년 태국에서 출범해 2025년까지 총 13회 열렸으며 기금, JICA, 중국수출입은행(The Export Import Bank of China: CEXIM), 태국 경제개발협력청(Neighbour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NEDA)이 참여해 환경·사회 가이드라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SDGs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는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경험을 결합해 아시아지역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금융협력 플랫폼을 구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수은은 2005년부터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



2016.01.29 수은 본점에서 열린 제8차 대외경제협력기금-JICA 정례회의

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의 관리·운용을 수행하며 WB, IDB, ADB 등 5대 국제개발기구와 협력을 강화했다. 신탁기금이란 국제개발기구가 실시하는 기술협력, 역량강화, 개발사업의 F/S를 위해 회원국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우리 정부는 2024년말 기준 총 13.2억 달러를 출연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녹색성장 경험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08년 ADB 미래탄소펀드(Future Carbon Fund: FCF)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 670만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했으며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이행기구 등록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리클립과 고채무저소득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채무구제 프로그램(Initiative) 등 국제사회의 채무조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또 코로나19 당시 저소득국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동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및 후속조치인 공동프레임워크에 동참하며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채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4년 기금은 ADB가 운용하는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혁신 금융(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IF-CAP)을 활용해 ADB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대출사업에 대해 최초로 1억 달러



2023.10.25 제27차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IF-CAP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 등 6개 공여국이 참여하는 MDB 최초의 공여국 채무보증 플랫폼으로 개도국 정부가 ADB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여국이 대신 상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공여국 보증을 통해 ADB는 보증액의 4.5배 이상에 달하는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보다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의 IF-CAP 참여는 차관 중심이던 기존 지원 방식을 보증까지 확장함으로써 지원 수단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기후·환경분야 국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기구 및 해외 원조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동시에 수원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기반도 적극적으로 넓혀갔다. 특히 개도국 공무원 연수 등 수원국의 기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수요 발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 정례화했다. 개도국 공무원 연수는 기금의 지원제도와 사업 절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주요 사업현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5년 제1차 개도국 공무원 연수를 개최한 이후 2025년까지 총 31회에 걸쳐 487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2023.08.24 제11회 4개 국 원조기관회의

바. 사후평가 강화 및 사업관리시스템 정비

기금은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제도 단계적으로 정비했다. 1999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으로부터 기금운용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기금은 2002년 기금운용평가에서 교육·문화·외교분야 9개 기금 중 경영개선부문 3위, 사업운영부문 2위를 차지했으며 2003년 평가에서는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에서 10개 기금 중 1위, 2005년도 평가에서는 11개 기금 중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면서 기존 공공기금 평가 중 사업부문 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통합되고 자산운용부문은 별

도로 평가받는 체계로 변경됐으며, 3년마다 기금 운용 실태와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금존치평가도 실시됐다.

기금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했고 이를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했다.

이후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경우 대개도국차관사업이 2006·2009·2022·2024년, 경제협력기반분야 구축이 2016년, 사업진행전설팅분야가 2023·2024년에 각각 ‘우수’ 등급을 받고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2013·2015·2019년 회계연도에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어졌다. 기금은 2021년부터 자산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

성 제고를 위해 완전위탁형(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OCIO)제도 참여를 통해 전문 운용기관에 여유자금을 위탁했는데 이로 인해 기금운용평가는 투자 풀운용위원회가 매년 전담 운용주간사를 평가하고 있다.

기금은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치 의견을 받으면서 그 필요성과 역할을 재확인받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평가 결과는 정부출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국민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평가제도 역시 국제 기준에 맞게 발전해 왔다. 2005년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을 토대로 사후평가체계를 마련하고 2008년에는 외부평가기관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어 2010년 국별 평가, 2011년 분야별 평가, 2012년 주제별 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깊이와 폭을 확장했으며 2011년에는 처음으로 수원국 관계자들과 공동평가워크숍을 개최해 사업관심도를 높이고 수원국의 주인 의식 함양에도 힘썼다.

2012년에는 KOICA와의 교차평가, 2013년 OECD DAC와의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 등 선진 공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고 2014년에는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함으로써 피드백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019년에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조직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평가·감리조직인 경험평가부를 신설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위험 통제 체계를 한층 공고히 했다. 경험평가부는 경험사업본부 산하의 사업부서와 분리됨으로써 명확히 구분된 독립성을 확보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감리기준을 제정하고 정기감리를 강화했으며 주요 감리 결과를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기금감리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차관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유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사업위험을 효과

적으로 경감했다.

아울러 특별관리사업 관리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리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고위험지역 사업을 새롭게 특별관리사업에 포함하고 L/A 체결 지연, 사업공정 지연, 3개월 이상 연체 사업 등과 함께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등 구체적 조치사항을 명문화하고 주요 조치에 대한 전결권자를 부서장에서 특별관리사업위원회로 상향조정해 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역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컨설턴트 고용계약이나 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부정행위에 대해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제재를 상향해 평균 제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업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고채무국 지원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고채무국을 대상으로 한 차관지원에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했다. IMF와 WB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하고 신규 지원 여부를 지속가능채무관리협의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수원국의 재정 건전성과 채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지원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사. 유·무상 연계 협의 강화

2020년부터 기금은 재정경제부 주관 범부처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기금사업과 부처별 무상 ODA사업과의 연계 수요를 심의·발굴하고, 무상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계가 실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신설된 국무조정실 주관 ODA사업전략협의회를 통해 사업 기획단계부터 기관 간 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다부처 연계 사업 패키지화를 논의해왔다.

2013년 KOICA, 2020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

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과 MOU를 체결해 매년 2~4회 정례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찰청 등 무상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수시 면담을 통해 디지털,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베트남 18번 도로 개량사업 이후 2025년까지 유·무상 연계사업은 총 254건, 148억 달러를 기록하며 기금사업의 원조효과를 제고했다.

아. 적극적인 기금 홍보

기금은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국민적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2012년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2014년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특히 2015년 박찬호 홍보대사가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완공식에 참석하면서 기금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청년층과 미래 개발협력 인재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홍보대사 활동과 사업 소식을 SNS로 공유했으며, ‘고교생 ODA 강좌’, ‘대외경제협력기금 대학생캠프’, ‘국제개발경시대회’, 『한국경제신문』 및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계한 ‘개발협력아카데미’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청년인턴제와 해외 사무소에서 개발협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방송·신문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05년 KBS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Power Korea, 대한민국의 힘」을 통해 공중파 최초로 기금 업무를 소개했으며, 이후 KBS 스페셜 「수단의 슈바이처 故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 SBS 「기적을 만드는 씨앗」, SBS CNBC 「E한껏-EDCF」 등을 통해 기금 활동을 알렸다. 2013년 SBS, 2015년 K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송기



2025.06 대외경제협력기금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



2016.10 EDCF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찬호 전 야구선수

한 홍보를 강화했으며, 주요 신문 기획보도와 사업현장 보도도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제공도 꾸준히 이어졌다. 기금은 2005년부터 월간 「DAC 동향」을 발간해 국제사회의 원조사례와 정책동향을 공유했으며, 반기별 「한국의 개발협력」 보고서를 통해 주요 이슈와 국내외 개발협력 흐름을 전달했다. 2015년에는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선진 공여기관의 운영현황 편람을 발간해 정보 제공범위를 넓혔다. 또한 국회의원 초청 현장실사, 시민사회 설명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기금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2019년 이후에는 대국민 홍보활동이 더욱 본격화됐다. 박찬호 홍보대사의 홍보영상 제작, SNS 게시, KTX 영상광고 등 대중교통 매체 활용을 통해 일반 국민이 일상 속에서 기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2020년에는 온라인 이벤트와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해 SNS 조회수가 전년 대비 58.3% 증가한 66만 3,000회를 기록했으며, 온라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캠프 참여 인원도 79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SNS 게시물 352건과 보도자료 61건을 배포하고, 한국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4개 국어 애니메이션과 웹드라마 형식의 영상을 제작해 기금의 개념과 의의를 전달했다. 2022년에는 청년층 워크숍, 신규 홍보 슬로건 공모, 캠퍼스 어택, 찾아가는 특강, 유튜브 출연, 모바일 전용 페이지 신설 등을 통해 홍보방식을 또 한 번 다변화했다.

2023년에는 네이버 광고, 유소년 야구대회 후원 광고, 영문 홈페이지 개편, 성과공유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대국민·글로벌 홍보를 병행했다. 국제개발협력 사진전과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했으며, 8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평가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



2025.04.01 EDCF 청년지역전문가 및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유튜브 콘텐츠

간해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전파했다. 2024년에는 개발협력주간 홍보부스 운영과 여행 유튜버 '또떠남'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젊은 층과의 접점을 넓히기도 했다.

2025년에는 홍보를 전담하는 교육팀을 신설하며 기금홍보에 깊이를 더했다. 11월에는 재정경제부 주최, 수은 주관으로 협력국 대사관, MDB, 학계, 기업 등 225명이 참여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해 2024년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JTBC 「차이나는 클래스」 ODA편, YTN 사업지 소개 영상, 박찬호 홍보대사의 우즈베키스탄 사업지 방문 영상, 대외경제협력기금-KOICA 인턴의 유·무상 ODA 사업지 방문 영상 등을 제작해 다양한 매체로 송출했다.



기금 평가 연차보고서(2022~2024)

제3절

업무영역 확대와 발전방향

1. 업무영역 확대와 다양화

가. 기금 현황과 변화 추이

기금은 1987년 정부가 150억 원을 최초 출연한 이후 사업이 확대되면서 규모가 꾸준히 커져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부터 5년간 정부 출연이 중단됐으나 2003년 정부 출연이 다시 재개됐고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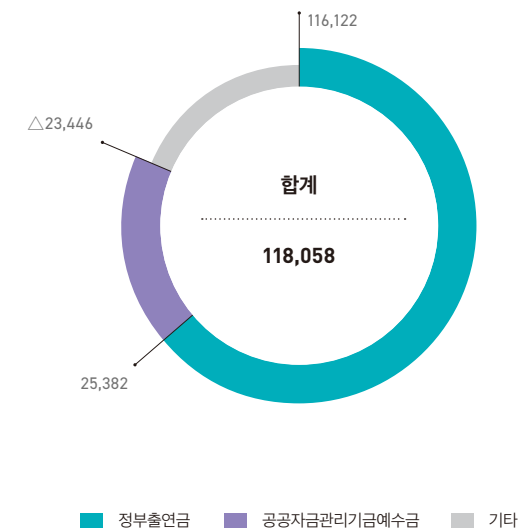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정부의 원조 확대 기조,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 등 영향으로 기금 조성 및 지원 규모는 계속 확대됐다. 2000년대 중반 당시 재원은 1조 7,586억 원으로 개도국에 약속한 차관 공여액 2조 3,738억 원에 미치지 못해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5,766억 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결정했으며, 기금도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1조 2,620억 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중장기 재원 확충방안은 개도국 차관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며, 이후에도 기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계속 강화돼 2010년 이후 재정출연은 기금 조성 총액의 48.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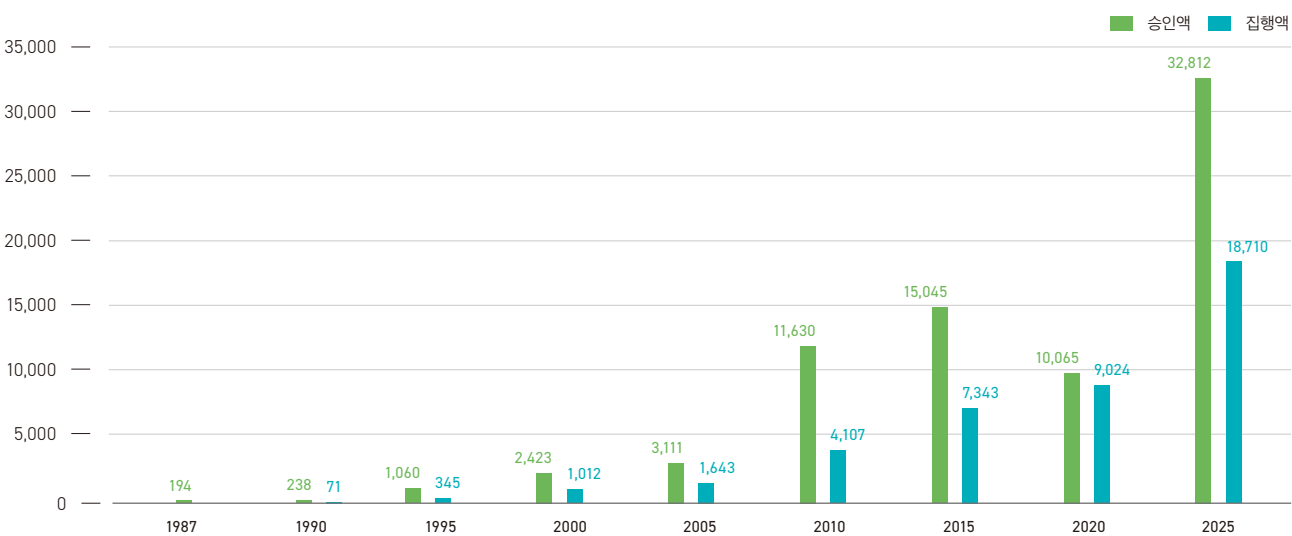
최근 기금조성은 정부 출연을 기반으로 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기금운용수익 등이 혼합된 재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정부 출연금과 공자기금 예수금 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 1조 270억 원, 2025년 1조 1,806억 원을 기록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추이(1987~2025)



나. 사업승인 실적과 지원 현황

기금은 1987년 설립 첫째 8개 국 15개 사업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지원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에 각각 114억 원, 81억 원이 최초로 지원됐다.

설립 초기 기금은 경제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점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용자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발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고 지원 대상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점차 넓혀졌다.

특히 기금 설치 이후 2025년 말까지 분야별 승인 실적을 보면 교통분야가 45%(18조 2,190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건 13%(5조 4,259억 원), 수자원·위생 11%(4조 5,757억 원), 에너지 9%(3조 4,608억 원), 교육 6%(2조 3,108억 원), 공공행정 5%(2조 292억 원), 통신 4%(1조 5,895억 원), 기타 7%(2조 9,920억 원) 순(총 40조 6,0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초대형 사업

발굴로 교통분야 중심의 지원이 이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보건 및 수자원·위생분야 지원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제협력 파트너인 아시아가 58%(23조 5,662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아프리카도 개발수요가 빠르게 확대된 영향으로 아시아에 이어 31%(12조 5,927억 원)를 차지했다. 중남미 9%(3조 4,819억 원), 유럽 1%(5,559억 원), 중동·대양주 1%(4,06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 지원 사례

기금은 다양한 금융수단의 결합을 통한 복합금융 지원 추진, 유·무상 연계 확대, 분야별·지역별 초대형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개발협력의 전략성과 영향력을 크게 강화해 왔다.

먼저 기금은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기금, EDPF, 수출금융 등을 융합한 복합금융 지원 사례를 본격적으로 축적해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 이집트 철도·도시철도 현대화 사업 지원 건이다. 동 사업은 기금 및 EDPF를 융합해 지원했

고, 기금은 동 사업 중 신호·통신 시스템 현대화에 2억 5,161만 달러를, EDPF는 인프라 부문에 6,064만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이집트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제1위 수출국이자 경제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개도국과의 우호 증진 등을 동시에 충족시킨 성공적인 지원 사례였다. 이후 기금은 해당 사업 등을 계기로 이집트 정부와 향후 5년간 총 10억 달러 한도의 기금 금융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ICT 기반 스마트교통, 그린 에너지 등 관련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복합금융 지원 사례로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텐주의 카리안댐과 자카르타 서부의 세르퐁 정수장을 연결하는 상수도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다. 기금은 카리안댐 건설에 총 1억 4,000만 달러(2010년 본용자 1억 달러·2021년 보충용자 4,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EDPF는 카리안댐과 세르퐁 정수장을 잇는 53.1km 구간의 도수로 건설에 2022년 2억 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투자자) 및 국내 중견 건설사(시공사)가 참여 중인 세르퐁 정수장 건설 사업에는 향후 수출금융 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댐-도수로-정수장을 연결한 상수도 공급 인프라 건설이 완료되면 자카르타 서부 등 대상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35%에서 82%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무상 연계 확대 관련 주요 사례로는 케냐 콘자 스마트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나이로비에서 몸바사 방향으로 60km 떨어진 지역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SP,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IPP) 등 유·무상 연계를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 관련 1단계 콘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통합운영센터 도입 자문·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개발(2021~2022년) 및 2단계 지능형 교통체계 및 통합관제센터 예비타당성조사·콘자-나이로비 광역교통

망체계 구축 기본계획·스마트물류 조성 기본계획·스타트업 생태계 조성(2023년) 자문이 수행됐으며, 3단계 스마트팜 구축·인큐베이션 단지 개발·재생에너지 전략 수립 등 자문이 진행 중이다. 기금은 2024년 6월 콘자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2억 8,300만 달러 규모 중 1억 3,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초대형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도 두드러졌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사례는 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건설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마닐라 인근 라구나호 서부 호안선을 따라 고가도로와 제방으로 구성된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기금은 같은 해 전체 37.5km 구간 중 1구간(7.9km)에 9억 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는 기금 역사상 역대 2위 규모의 초대형 시그니처사업이 됐다. 기금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시그니처사업은 모로코 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으로, 2025년 총 110편성(440량) 규모 철도차량 공급 및 시운전 사업에 대해 14억 7,436만 6,000 유로를 승인했다.

기금지원 분야별로는 보건·위생분야에 대한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확대됐다. 먼저 2021년 우즈베키스탄 제약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KSP와 기금을 결합한 유·무상연계 보건패키지 모델 적용사례로, 신북방정책 중점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제약산업 발전과 보건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기금은 국립약학대학 건립에 8,4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약학 교육과정과 운영 노하우 전수, 선진국 수준의 교육 기자재 공급 등을 추진함으로써 약학 교육부터 연구·생산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기금은 보건·위생분야 지원 경험을 지속 축적해오다 2025년 탄자니아 무힘빌리 국립병원 재건사업에 3억 6,390만 달러를 승인하며 동 분야 시그니처사업 지원사례를 창출해냈다. 해



2024.05.0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식

당 사업은 병원 건축, 의료 기자재 공급, HIS 구축, 입찰 지원, 감리, 건설팅, O&M 모니터링 등을 포괄하는 1,301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재건립 프로젝트로, 단일 사업 지원 규모 기준 역대 기금지원건 중 6위, 보건·위생분야 지원 건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원규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후속 대형 보건의료 인프라사업 발굴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2. 향후 발전방향과 전망

기금은 2026~2028년 중기운용방향을 통해 개발협력 환경변화와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EDCF 지원방향에 부합하도록 후보사업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2026년부터 향후 3년간 평균 3조 원, 총 9조 원 규모의 승인목표를 설정하고, 2026년 1.9조 원 집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 등을 고려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 기금 혁신전략으로도 이어졌다. 수은은 2026년 6월 EDCF 혁신전략 보고회를 통해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금운용 방향을 공유하

고,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점분야 집중 및 우리 기업의 사업현장 애로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공여재원은 제한되는 반면 개발수요는 확대되고 ODA가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재편되는 환경 속에서 기금의 전략성과 국민 신뢰를 함께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세계적 흐름과 수원국 수요를 반영해 AI디지털·문화·공급망·그린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았다. 우리의 기술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AI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지원 및 무상ODA와 연계를 강화해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자원안보와 국익에 기여하기 위해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에 공급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녹색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그린분야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지역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은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지속 지원해 지역별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애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보완을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 기금의 발전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전략적 지원체계의 고도화라 할 수 있다. 수은은 기금, 수출금융,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유연하게 융합한 K-Finance 패키지를 통해 사업의 성격과 수요에 맞는 금융을 적재적소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개도국과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상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개도국의 사업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자



2026.06.10 EDCF 혁신전략 보고회

문단 파견을 확대하고 사업완공 후 운영·유지·사후관리까지 강화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개발효과를 제고한다. 동시에 기금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공개해 투명성과 가시성을 높이며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발굴부터 승인·평가에 이르는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나간다. 또한 민간 전문가의 심사참여 확대, 통합 현장점검, 내부 신고 제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사전·사후 통제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행 관련 금융·비금융 서비스 확대도 중요한 운영 축으로 추진된다. 수은은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대외경

제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대상 애로 해소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참여 촉진 제도를 강화하고, 기금 아카데미 교육과정 제공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사업참여 기반 확대를 조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환율 변동과 현지 비용 부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현지 소요비용에 대한 현지화 계약 등 수원국과의 협의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함께 참여하는 개발협력 기반을 넓히고, 우리 경제의 대외 외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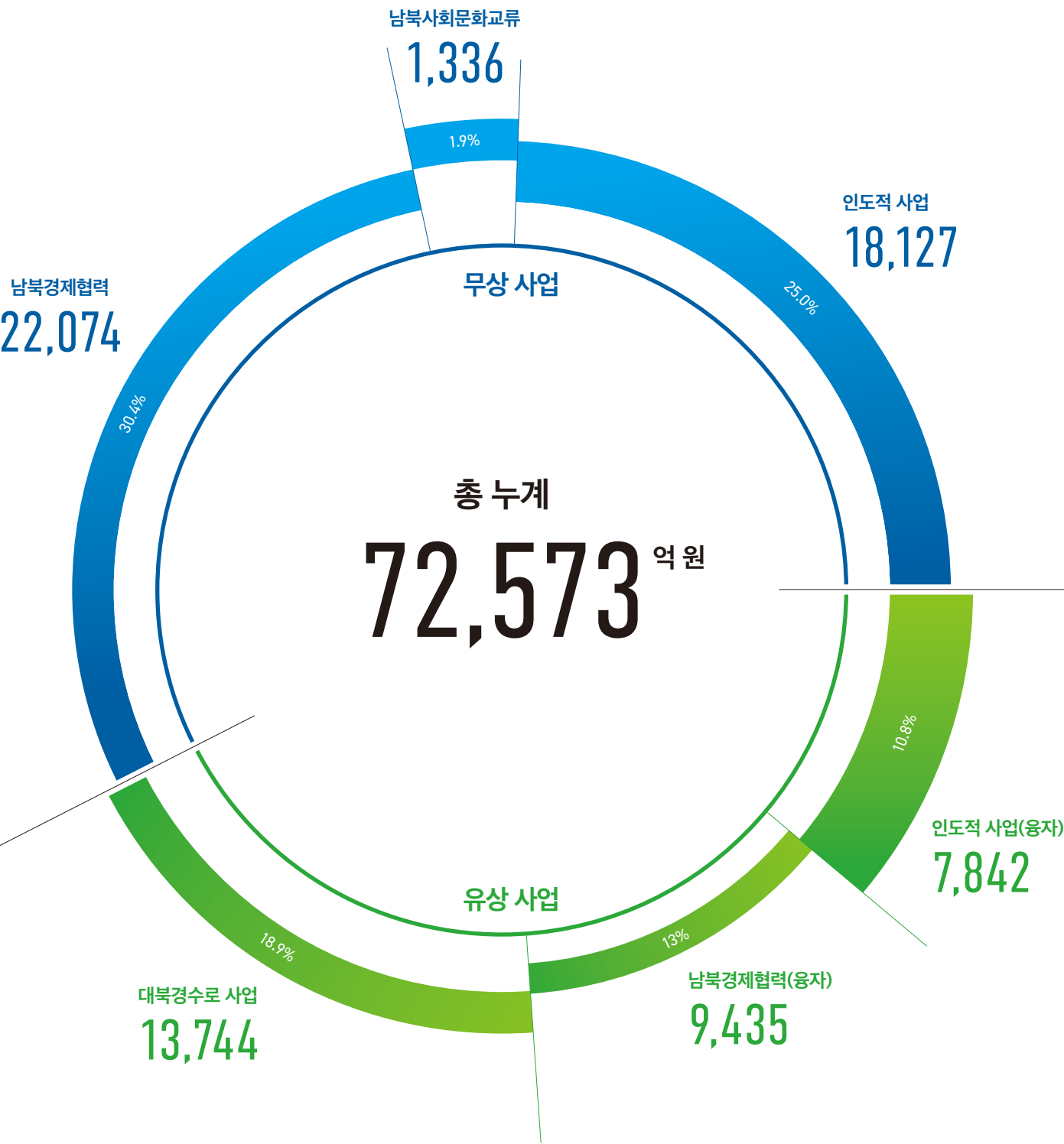
남북협력기금 업무

1절
기금의 성장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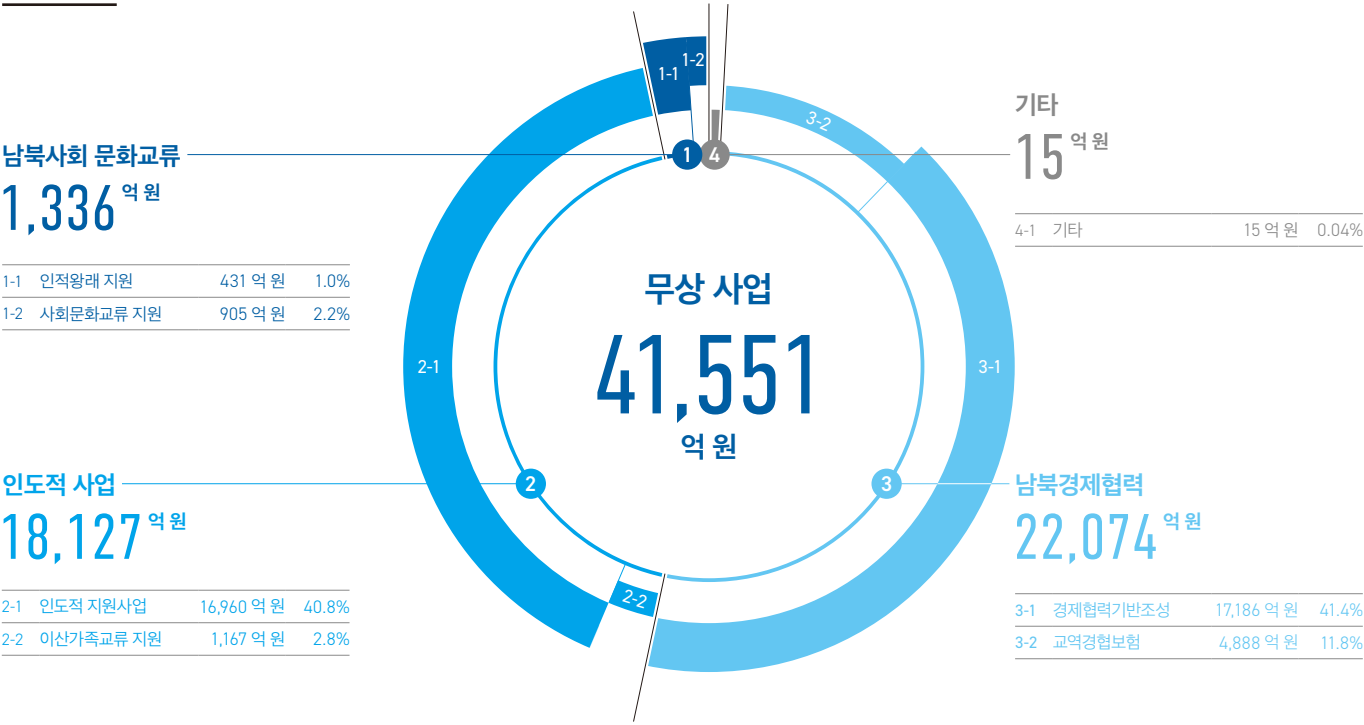
2절
지원실적과 전망

■ 무상 사업 ■ 유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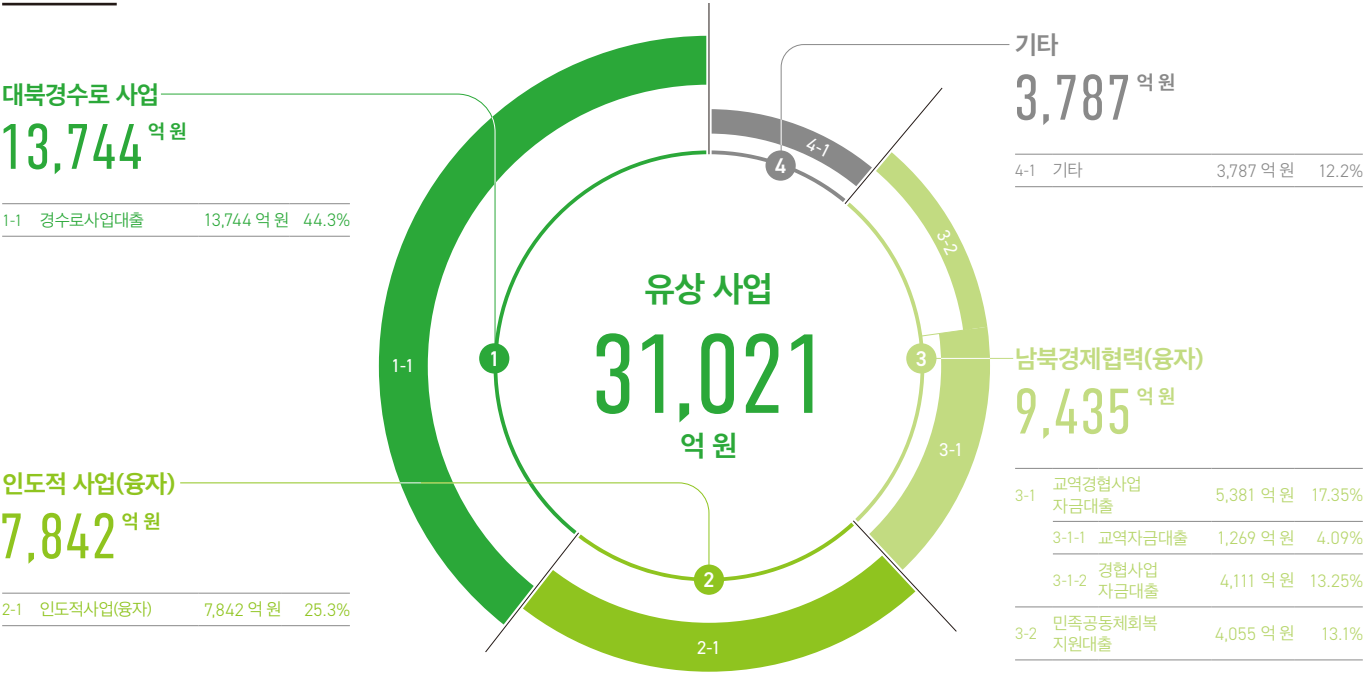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무상사업



유상사업



제1절

기금의 성장과 발전

1. 설립 배경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경색돼 있던 남북관계에도 점진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적십자회담과 체육·경제분야 회담 등 다양한 교류가 이어지며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러한 흐름은 1988년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을 통해 제도적 전환점에 이르렀다. 7·7 선언은 남북 주민 간 상호교류와 방문을 허용하고 남북교역의 문호를 개방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조를 추진하는 등 종전의 대결구도를 공존과 협력의 구도로 전환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정부는 선언의 실천을 위해 1988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남북적십자 실무회담과 교육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전향적인 대북 외교정책 시행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북한 및 공산권 자료를 개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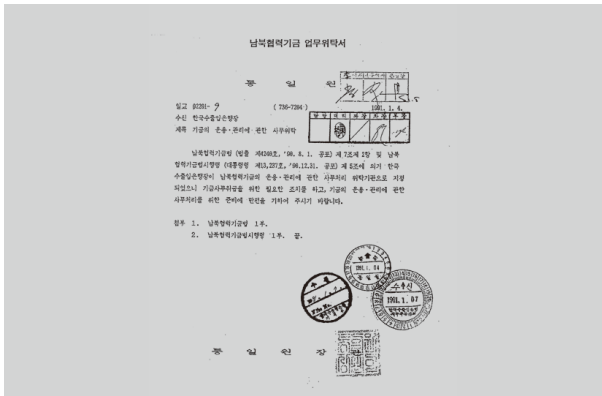
특히 1988년 10월 7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민간상사의 북한 물자교역과 중개 허용,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허용,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부과, 남북 경제인의 상호 접촉과 방문 허용, 북한 선적 상용선박의 입항 허용, 남북 경제교류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남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하며 대북 경제개방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같은 날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이하 기금법)도 공포됐다.

이를 근거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의 설립이 추진됐으며 기금운용을 담당할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이미 1987년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성공적으로 수탁·운용해 온 수은이 유력한 기관으로 검토됐다.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은이 수탁기관으로 잠정 합의됨에 따라 수은은 1990년 9월 25일 정부 위탁사무 준비기구로 ‘남북협력기금 수탁준비반’을 발족해 본격적인 업무수탁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1990년 12월 31일 「기금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1991년 1월 4일 통일부(당시 통일원)가 수은에 기금 업무를 정식으로 위탁하면서 1991년 2월 1일



1991.01.04 남북협력기금 위탁 공문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을 통해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부가 공식 출범했다. 같은 해 3월 20일에는 정부 출연금이 납입됐고 3월 27일에는 시행규칙이 제정, 4월 17일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운용관리규정이 마련됐다.

수은은 기금운용을 위한 내부규정으로 남북협력기금 회계사무처리요강과 남북협력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1991년 10월 2일에는 ‘남북협력기금 업무취급요강’을 제정해 기금 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운용관리규정만으로는 세부사항을 모두 규정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분야별 세부 지원지침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교역손실보조 약정 취급기준,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등이 제정됐다.

2. 지원제도의 발전

가. 지원제도 내용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수단이자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남북경협 금융지원창구로 기능해왔다.

주요 지원분야는 △남북 간 주민왕래 및 문화·학술·체육협력 등 사회문화교류사업에 대한 무상지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등 경제적 교류사업에 대한 대출, 보험 및 채무보증 △당국간 합의사업 등 민족공동체회복증진사업에 대한 유·무상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대금결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로 구분된다.

무상지원은 △남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민왕래 지원 자금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자금이 있다.

이 외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지원하는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자금이 있다. 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지원하는 이산가족교류지원 △비료와 식량 등 인도적 사업지원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 교류협력기반조성지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등이 해당된다.

용자사업은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과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자금지원 대상이면서 북한당국(조선무역은행 등)에 양허성 차관 형태로 지원되는 차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자사업은 △남한기업의 북한과 교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반출·반입자금 대출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경험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당국간 차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대출 등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교류협력기반조성 용자가 있다.

이 밖에도 교역·경험보험,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교역·경험보험은 남북 거래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교역보험과 경제협력사업보험으로 구분된다. 채무보증은 남한 주민이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기금이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지원제도에는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대출, 환전, 대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이자 비용이나 환손실 보전과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남북 간 대금결제계좌인 청산계정에서 발생한 미결제채권을 인수하거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북한 원화를 인수·매각하는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나. 자금별 지원제도

주민왕래지원 자금(인적왕래지원)

주민왕래지원 자금은 남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의 남북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남북한 왕래 당사자이거나 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서 자비에 의한 남북한 왕래가 어려운 경우, 남북한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인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밖에 남북한 왕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비에 의한 왕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 순서는 부모·친자 및 배우자 방문이 최우선이고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방문, 고향 방문, 60세 이상인 자의 남북 방문이 그 뒤를 따른다. 지원범위는 숙식비와 교통비 등 남북 왕래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원칙으로 하되,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따른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자금(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자금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지원범위는 문화·학술·체육 협력사업의 기획과 준비, 실제 시행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진행된 남북도로 연결사업

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기존 조직의 인건비나 행정경비, 접대비·기밀비 등 간접비용,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국내외 여비, 찬조금·후원금·기탁금 등으로 이미 조달한 금액, 통일부장관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에 제공한 물품 등의 금액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원칙적으로 총 사업비의 50% 이내이며 우선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발생한 경비 초과, 추가경비 발생, 예상 수익금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자금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자금은 「기금법」 제8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은 당국간 합의 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5억 원 미만의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 등을 결정한다.



경의선 철도사업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자금의 지원사업은 이산가족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사업,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북한 비핵화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산가족교류 지원은 이산가족의 고통화 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가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하고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과 함께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당위적 가치와 남북화해협력 실현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식량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 지원, 보건·의료 지원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 당국 간 합의사업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개선 등 경제분야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민족문화 보존 등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도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사업은 대북정책 목표와 연계해 북한의 비

핵화 진전에 따라 중유 제공, 경수로 건설 지원 등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된 자금은 다른 사업과 구분해 북한 비핵화 계정으로 별도 관리·운용되고 있다.

교역 및 경험자금대출

교역 및 경험자금대출은 남북 간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지원 제도로 교역자금대출과 경제협력사업대출로 구분된다.

먼저 교역자금대출은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반출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을, 반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품 이동을 의미하며 매매·교환·임대차·중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 교역자금대출은 일반 반출·반입자금대출, 위탁가공 거래를 지원하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그리고 반출·반입자금대출에서 파생된 실적한도대출로 세분된다.

반출·반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은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반입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원금 상환은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모두 가능하다.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은 북한에 원부자재나 설비를 반출해 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해당 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80% 이내(우선지원대상은 90%)이며 원부자재의 경우 대출기간은 반입일에 6개월을 더한 기간 이내에서 최대 1년, 설비의 경우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운영된다. 상환 방식은 원부자재의 경우 분할 또는 일시상환이 가능하고 설비는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둔다.

실적한도대출은 기존 반출·반입자금대출 실적을 기

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교역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역 실적의 70% 이내(중소기업은 80%), 3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이내(중소기업은 60%)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우수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협력사업대출은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의 투자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로 구성된다. 투자자금대출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80% 이내(우선지원대상은 90%)를 지원하며 법인 설립이나 인수·증자, 시설 투자 및 확충, 토지·건물·기자재의 건설·제작·구입, 출자 또는 대부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 등 사업시행에 직접 필요한 자금을 포괄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5년 이하의 거치기간이 적용된다.

운전자금대출은 북한 내 현지법인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추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의 연대보증,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물적 담보 제공, 또는 기금이 이미 지원한 사업 중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된다. 대출금액은 기업 신용등급별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소규모 개보수 투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내에서 한도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은 남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산업용지가 사전 분양되고 입주기업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재산권이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되며 신청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2006.02.09 개성공단 투자기업 착공식

갖추고 대출 취급 후 1년 이내에 경제협력사업 승인 취득과 공장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산업용지 구입금액의 7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은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신설·증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 촉진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일반적인 시장 차입조건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나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하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능력과 경영·기술역량을 갖춘 경우에 지원된다. 아울러 관련 주무부처의 추천이나 지정, 북한 당국의 사업 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받은 경우, 또는 시설 준공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이상 소유권을

유지하는 계약구조를 갖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사업 규모와 미래 현금흐름, 사업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장 20년 이내, 거치기간은 7년 이내로 설정된다.

교역·경험보험

교역·경험보험은 남북 간 거래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비상위험으로 인해 남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기금이 보전해 주는 보험제도이다. 이는 통상의 상업보험으로는 담보하기 어려운 대북 거래 특유의 위험을 제도적으로 완충함으로써 남북 거래를 국내 거래나 제3국 거래와 유사한 환경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귀책사유 없이 발생

한 손실을 남한 주민이나 기업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전에 약정된 담보위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교역·경협보험은 일반적인 해외투자보험에 비해 양호한 조건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 당시 '손실보조'라는 명칭으로 운영됐으나 해당 용어가 제도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0월 「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역·경협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역·경협보험은 크게 교역보험과 경제협력사업보험으로 구분된다. 먼저 교역보험은 북한 기업과의 반출·반입 거래 또는 위탁가공 교역을 수행하는 남한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는 반출보험, 반입보험, 위탁가공설비보험, 개성공단 교역보험으로 구성된다. 반출보험은 남한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계약이나 남한 주민이 제3국에서 위탁가공 또는 생산·가공한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반입보험은 북한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 또는 해당 물품을 남한 주민이 제3국 지사 등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위탁가공설비보험은 북한에서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설비를 반출하는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교역보험은 2008년 12월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에 따른 남한 투자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2009년 8월 도입된 제도이다. 원부자재를 반출한 이후 비상위험으로 인해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제품 반입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한다. 개성공단 교역보험은 다시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납품이행 보장보험으로 나뉜다.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모기업이 개성공단 현지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비상위험으로 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의 합산액 중

70% 범위 내에서 기업별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납품이행 보장보험은 비상위험으로 인해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납품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납품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기업별 최대 5억 원까지 보상한다.

한편 경제협력사업보험은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이후 북한 당국의 수용, 송금 제한, 당국 간 합의 파기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사업이 불능 또는 중단되거나 권리가 침해돼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분 등 투자보험, 대부 등 투자보험, 권리 등 투자보험으로 구성된다. 지분 등 투자보험은 북한 법인의 지분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후 투자원금이나 실현된 배당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 등 투자보험은 북한법인의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사채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투자한 후 투자원금이나 약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한다. 권리 등 투자보험은 북한 지역 내 부동산이나 광업권 등 각종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취득원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지원

금융기관 지원제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금융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금융기관 손실보전, 금융기관 융자자금 지원, 미결제채권 인수, 북한원화 인수 및 매각제도가 있다.

우선 금융기관 손실보전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환전, 대출 및 대금결제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손실보전의 대상은 남한 주민의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환전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대출 또는 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금 수탁관리자가 보전하기로 약정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에 한정된다. 이때 적용되는 보전 이자율과 취급 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 특히 환전 업무와 관련해서는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의 이자손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과정에서 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 수수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에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경비가 손실보전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융자자금 지원은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 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규모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미결제채권 인수는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발생한 미결제채권을 기금이 인수하는 제도이다. 남북한에 설치된 대금결제계좌에서 발생한 미결제채권 중 남북한이 사전에 합의한 신용한도 이내의 금액이 인수대상이 되며 인수조건 역시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북한원화를 기금이 인수하거나 기금이 보유한 북한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통일부장관은 인수·매각 조건을, 재정경제부장관은 환전 시기,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각각 결정한다.

다. 제도 개정과 변천

기금대출제도 도입과 변천

기금대출 지원제도는 1999년 시행 이후 총 9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남북 교역·경협 환경변화와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교역·경협기업들에 대한 기금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했으며 실직한도대출을 도입해 교역실적이 많은 기업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2000년 11월 21일 이뤄진 제1차 개정에서는 대출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신용대출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01년 12월 31일 제2차 개정에서는 대출금리체계를 연 6% 고정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 연동 방식으로 개편했으며 신용등급별 순자산 한도를 증액해 신용대출 한도를 확대했다.

2003년 2월 6일 단행된 제3차 개정에서는 기업당 10억 원 한도의 실직한도대출을 도입하고 재무등급 6등급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특례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출이자율 결정체계를 기간별 기준금리 차등 방식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차감률을 도입했으며 대출 승인 전결권을 조정해 교역 30억 원, 경협 50억 원 이상 건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후 남북교역기업 수와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04년 1월 28일 제4차 개정을 통해 기금대출제도를 한층 확대·강화했다. 반·출입 및 경협자금 대출금액을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상향(기존 80%)하고 실직한도 대출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북한 소재 자산제공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특례와 부분 보증서부 대출특례를 도입했다.

2004년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진출이 본격화되자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이어졌다. 2005년 1월 31일 제5차 개정에서는 개성공업지

구 내 부동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고 기존의 경제협력 사업자금대출을 투자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산업용지 분양자금대출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금 대출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기금재원 부족에 대비해 타 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제도를 도입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지원제도와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 방식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성공단 생산이 본격화된 이후인 2007년 7월 9일 제6차 개정에서는 제도개선의 폭이 더욱 커졌다. 개성공단 투자자산의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하고 후취담보 대출취급요건을 개선했으며 대출조건 예외취급 전결권을 하부 위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였다. 또한 채권보전 방식에 따른 신용위험가산율과 경험 투자자금 소요자금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고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신용대출 특례와 교역자금 실적한도대출 재대출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개성공단 이외 북한소재자산 신용대출 특례 및 단기 반출입거래 신용대출 특례 요건도 강화했다.

2009년 5월 1일 제7차 개정에서는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범위를 물품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했으며 대출이자율 하한선(1%)을 도입해 금리체계를 정비했다. 이후 2009년 9월 16일 제8차 개정과 2011년 6월 22일 제9차 개정을 통해 일부 문언을 정비하고 금융기관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2012년과 2015년에는 규정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2016년 이후에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대출제도의 특별한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금보험제도 도입과 변천

기금보험제도는 남북교역과 경제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위험으로부터 기업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초기에는 ‘손실보조제도’라는 명칭으로 출발했다. 이 제도는 「기금법」 제8조 제3호에 근거해 1991년 기금

이 조성되면서 함께 마련됐으나 1991년 천지무역에 대해 보험금 12억 6,800만 원이 지급된 사례를 제외하면 오랜 기간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 속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증가했고 관련 업계에서는 대북거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2003년 8월 남북 간 4대 경협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거쳐 정식 발표되면서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이에 통일부는 민간 경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1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04년 5월 교역보험, 같은 해 9월에는 경험보험이 각각 시행됐다. 제도 시행초기에는 보상한도가 20억 원으로 설정됐으나 이후 남북 간 거래 규모 확대와 기업수요 증가를 반영해 2008년 12월에는 50억 원, 2009년 6월에는 7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05년 1월에는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요건을 기존 ‘6개월 이상 사업정지’에서 ‘3개월 이상 사업정지’로 완화했다. 이어 2007년 2월에는 약정 불이행 위험의 범위에 남한 당국의 조치를 추가했다. 또한 ‘손실보조’라는 용어가 갖는 오해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10월 「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명칭을 ‘교역·경협보험’으로 변경했다.

2009년 7월에는 지급사유 발생요건을 3개월 이상 사업정지에서 1개월 이상 사업정지로 추가 완화했고 8월에는 ‘개성공단 교역보험제도’를 도입했다. 9월에는 대북 경협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고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험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협력사업 승인

을 받은 사업 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수리사업까지 확대했다.

이후 2013년 개성공단의 일시 가동중단 후 보험금 지급 시 발생했던 문제점 및 보험가입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2015년 1월 보험금 지급 전 사업이 재개되는 경우 손실액 산정 기준을 최근 연도 결산자료로 구체화하고 결산 이후의 추가 투자 및 회수금액도 반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보험금 반납 절차와 대위권 행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에도 기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보험한도 증액, 실제 실물자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자산보험화, 보험가입 의무화 등 여러 제도 개선책이 제기됐다.

제2절

지원실적과 전망

1. 남북관계의 변화와 기금 지원 추이

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며 일부 민간부문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을 포함해 조성·운용되고 있다. 1991년 정부출연금 250억 원으로 출범한 이후 정부출연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재정여건 악화로 일시 중단된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08년에는 연간 6,500억 원 수준에 이르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금 집행이 부진해지면서 출연이 중단됐다. 이후 2012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집행분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재개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은 주로 경수로사업 지원에 따른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1999년 1,498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누적 10조 5,442억 원이 차입됐다. 같은 기간 기금 운용수익은 누적 7,718억 원을 기록했으나 민간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은 각각 38억 원, 2,723억 원으로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 외에 정부출연금 누계 5조 8,265억 원, 대출금 회수액 누계 3,435억 원을 포함한 2025년말 기준 기금의

조성 누계는 총 17조 7,620억 원에 이른다. 같은 시점까지의 기금 사용 누계는 17조 5,528억 원으로 무상지원에 4조 1,551억 원, 유상지원에 3조 1,021억 원을 집행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에 10조 2,370억 원을 사용했다. 아울러 기금운영비로는 585억 원을 지출했으며 여유자금은 2,092억 원이 남아있다.

기금은 1991년 3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북단일팀 구성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첫해에 총 3개 사업, 22억 원을 집행하며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핵 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북핵위기는 한반도를 전쟁위기 국면으로 몰아넣었고 판문점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에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과 미국의 항공모함 전개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금 지원도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전환점은 1994년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김일성 주석 면담 이후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도출됐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경수로 발전소 2기를 제공하

기로 합의했다. 경수로사업은 1994년 10월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1,000MW급 경수로 2기를 건설·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금이 KEDO에 차관 형태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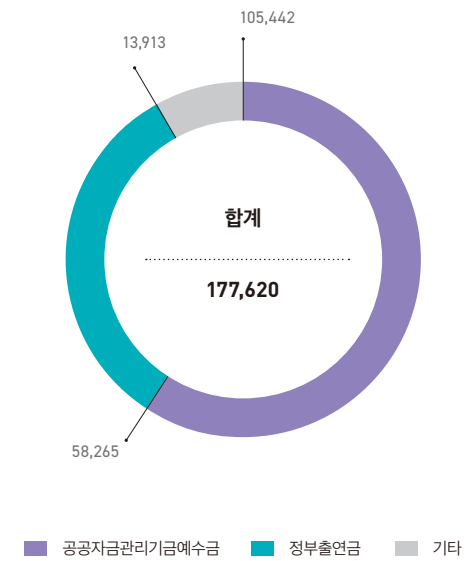
1998년 11월 KEDO 집행이사국들은 총 사업비 46억 달러에 대한 재원분담에 합의했고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2억 2,000만 달러(약 3조 5,420억 원)를 원화로 부담하기로 했다. 일본은 10억 달러 상당을 엔화로 지원하고 미국은 중유 제공 비용과 KEDO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KEDO와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하고 8월 국회 승인 및 1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の本 공사 사업비에 대한 기금 지원방침 결정을 거쳐 경수로차관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KEDO는 같은 해 11월 공급 중단을 결정했고 2003년 12월 경수로사업은 일시 중단됐다.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자 KEDO는 2006년 5월 경수로사업의 종료를 공식 결정했다.

한편 1994년 북핵위기가 일단락되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서 1995년에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 15만 톤, 1,824억 원이 지원됐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1999년까지 이어졌으나 연간 지원 건수와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기금 집행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였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면서 경제·사회문화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고 인적 왕래도 크게 늘어났으며 기금의 지원분야 역시 다양화됐다. 같은 해 시작된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 출발점이었다. 이전까지의 비료와 쌀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경수로사업 중심의 제한적 교류와 비교하면 기금운용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2025)

단위: 억원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였다. 2002년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면서 기금은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에 1,510억 원을 지원했고 2004년부터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 이후에도 생산 기반시설 확충, 기술교육센터와 지원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설 등에 추가로 739억 원의 기금이 투입되며 개성공단 조성의 핵심 재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 대화가 중단되면서 식량과 비료 지원은 중단됐고 기금 지원은 수해 복구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한정됐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는 국제기구 추진사업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의료, 아동 영양 개선, 산림병해충 방제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 총 1,341억 원이 집행됐다.

2016년 이후 기금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위기대응과 교류 모멘텀 유지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운용됐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입주기업에 막대한 피해

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 지원 필요성이 대두했다. 수은 남북협력본부는 정부 합동대책반에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입주기업 지원 TF를 구성해 총 5,625억 원 규모의 금융을 신속히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영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병행함으로써 개성공단 피해 기업의 경영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2017년에는 정치적 긴장 상황 속에서도 보건·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 UNICEF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물품과 영양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증진 인도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과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의 합동 훈련 및 공연을 포함한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방남에 약 7,4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스포츠분야를 통해 남북 교류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였다.

2018년에는 한반도 화해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기금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연간 집행액은 2017년 684억 원에서 2018년 2,1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지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에 100억 원, 8월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행사(남측 89명·북측 83명 참여) 등 교류지원사업에 51억 원을 지원해 남북교류 활성화와 상호신뢰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9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12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경험 기반 조성사업에 1,818억 원을 투입해 남북 간 공식 대화 채널과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대북 거래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도 병행했다. 개성공단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

문과 상담 102건을 실시해 기업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유동자산 피해 지원 등을 통해 총 712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5·24 조치 이후 장기간 경영난을 겪어온 내륙·금강산 교역기업에 대해서도 총 1,968억 원의 지원(대북 거래기업에 대한 집행금액 및 원리금 상환유예·만기연장 금액 포함)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왔다.

2019년에는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했다. 국제기구를 활용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에서 41.9%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UNICEF와 WFP를 통한 북한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제재 국면에서도 교류협력의 최소한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정치적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사회문화협력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했다. 남북 언어체계의 통합과 민족 언어 공동체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후속 사업에는 28억 원을 지원하고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에는 6억 원을 투입해 과거 협력성과의 대국민 공유를 도모했다. 또한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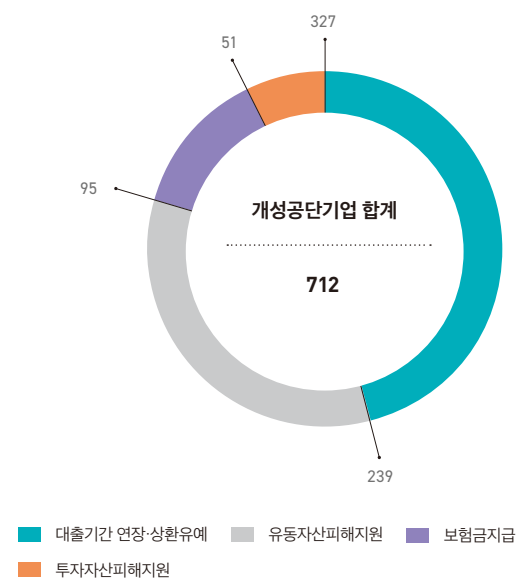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남북단일 여자 아이스하키팀



2018.10.24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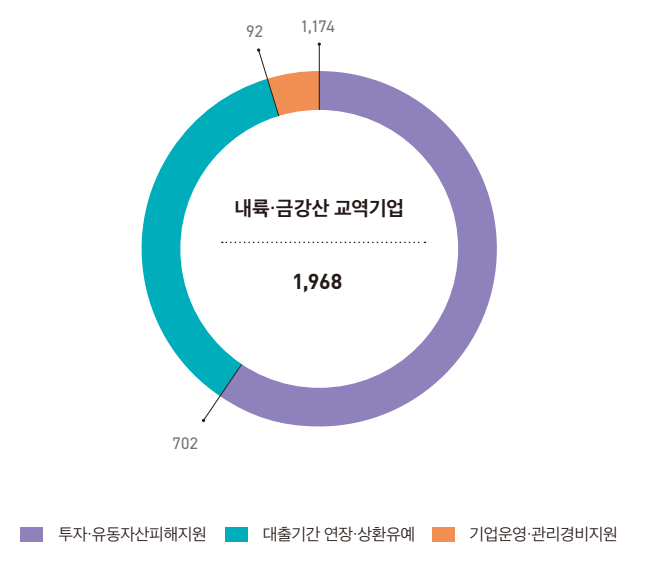
대북 거래기업 지원실적(개성공단기업)

단위: 억원



대북 거래기업 지원실적(내륙·금강산 교역기업)

단위: 억원



구성을 1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도 했다.

2021년 9월에는 기금지원제도의 정비가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며 사업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는 보건·의료 협력과 영유아 지원 등 지자체 교류지원 예산 311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지자체의 자율적 남북협력사업 추진 촉진과 동시에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2022년에는 장기간 중단됐던 남북경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4년 만에 신규 유동성 공급을 재개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총 425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고 22명 규모의 전담 TF를 운영해 478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대출, 피해지원금, 기업운영관리경비 등을 신속히 집행했다.

2023년 이후 기금 재원 구성에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본격적으로 구축됐다. 2024년 1월 「기금법」 개정해 민간 기부금이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 목적에 맞게 적립·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향 학교 설립, 북한 영유아 지원 등 기부목적이 명확한 재원의 관리와 집행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저조한 실적의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졌다.

「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5월 시행령, 6월 시행규칙, 10월 기금운용관리규정까지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한 결과 1991년 기금 설립 이후 최초로 민간 지정 기부금 적립이 성사됐으며 2024년 11월 총 2건, 9억 원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이는 기탁자의 의사가 반영된 기부금 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기금 재원 구성의 다변화를 이룬 의미 있는 성과였다.

2025년 말 기준 기금의 누적 사업지원 실적은 7조

2,573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무상지원은 4조 1,551억 원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의료·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1조 6,960억 원을 집행했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 1조 7,186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과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지원 등 인적 왕래 지원에 431억 원, 이산가족 교류 경비와 방문단 교환 사업,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지원 등 이산가족 교류 지원에 1,167억 원이 사용됐다. 이 밖에도 사회문화협력사업에 905억 원, 교역·경협보험 지원에 4,888억 원을 집행했다.

유상지원은 3조 1,021억 원으로 전체 누적 지원액의 약 43%를 차지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경수로 사업 지원에 1조 3,744억 원을 투입했고 식량 차관과 자재·장비 차관 등 민족공동체 회복 대출에 1조 1,897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금강산 관광사업 대출, 교역기업 대상 교역자금 대출 등 교역·경협사업 대출에 5,381억 원을 집행했다.

2. 향후 발전방향과 전망

오랜 기간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발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렛대 역할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남북관계가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 비중이 높으나 남북관계가 우호적일 때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는 기금지원이 단순한 원조성격이 아니라 남북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 회복을 통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최근 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이지

만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기금지원이 양적으로 증가함은 물론이고 역할과 지원범위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므로 기금은 교통, 항만, 발전 등 인프라 개발협력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민간자금과 국제자금 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비전에 따라 기금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체계화된 지원계획 수립도 요망된다.

현재 기금은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제약 속에서 경협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남북경협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경협기업의 재무부담을 완화해 경영 애로를 줄이고 향후 사업재개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출기업의 재무 상태와 영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춘 관리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남북협력의 동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협력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관계 개선 시 협력사업 재개의 기반을 보존하고 있다.

수은은 기금의 집행·관리 역할과 함께 전문적인 연구조직 운용을 통해 북한 개발협력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다른 연구기관들과 달리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연구에 집중하고 정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한 정책적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및 유관기관, 학계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지식공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내 국제정세 변화와 탄소중립, 재난재해 등 미래 주요 이슈를 반영한 대북정책 담론을 주도

함으로써 북한 개발협력분야에서의 연구 역량과 대외 인식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기금 업무의 확장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경영관리 업무

1절
경영전략

2절
리스크관리

3절
인사관리

4절
ESG경영

5절
디지털금융

6절
자산관리

제1절

경영전략

1. 경영계획의 수립

가. 단위별 경영계획 수립과 변천

수은의 경영계획 수립 체계는 장기경영계획(장기 비전), 중기경영계획(3년 단위 수립, 매년 평가/환류),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이뤄지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 체계에 따라 세부목표와 과제를 설정한다. ‘진행→본부→부서’로 구체화되는 조직단위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공통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고 경영성과 창출이 극대화되도록 하고 있다.

처음으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한 때는 1979년이었다. 기반확충단계(1979~1981)와 선진화단계(1982~1986)의 2단계로 나눠 업무발전과 효율적 경영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1991년까지 두 차례 중장기 업무발전계획을 수립했다.

1987년 중장기 업무발전계획(1988~1992)에서는 수은의 당면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역할중대 방안을 수립했다. 1989년에는 업무기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했다. 1991년 수립한 2차 중장기 업무발전계획인 장기발전방안(1991~2000)은 사실상 수은 장

기경영계획의 근간이라 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3~5년 단위의 중장기경영계획을 넘어서 10년 이상의 장기경영계획을 세웠다. 국제화 진전에 따른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후 수은은 21세기를 앞두고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갔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5차례 개정을 통해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발전방향, 역할 정립, 합리화 방안 등을 탐색했다.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는 1997년 21세기 선진금융기관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 중기경영계획(1998~2000)을 수립했다. 1999년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의 기능과 역할, 추진전략 등을 구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기에 중기경영계획이 정착기로 접어들었다. 1997년 1차 중기경영계획을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 주기적으로 중기경영로드맵을 수립했다. 2003년 중기경영계획(2004~2006) 수립부터는 임직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미션, 비전, 슬로건 등을 확정했다. 수출입과 해외투자, 대외경제협력, 남북협력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과 ‘수출·해외투자 전문은행’을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합

께 이 시기부터 수은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기경영계획을 매년 연동방식(Rolling Plan)으로 조정했다.

10년 이상 단위의 장기경영계획 수립이 정착한 시기는 2010년대였다. 2010년에 ‘비전 2020’을 수립했다. 미션을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설정했으며, 비전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 파트너’로 정했다. 핵심가치로는 ‘동반자’, ‘글로벌’, ‘신뢰’, ‘전문성’을 선정했으며, 5대 전략목표와 10대 전략과제도 도출했다.

비전 2020은 2013년 8월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를 계기로 체계 재정립을 요구받았다. 공격수출신용기관 역할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그동안 급속히 팽창해온 수은 조직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받기 위해 수은은 2014년 ‘비전 2020 재정립 및 조직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비전을 새롭게 정립했다.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을 비전 슬로건으로 삼았으며, 핵심가치의 경우 기존의 ‘동반자’, ‘글로벌’, ‘신뢰’, ‘전문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책임성’을 추가했다. 비전 재정립을 계기로 수은은 이때부터 1년 단위 진행 중점업무 추진계획인 ‘사업계획’ 체제를 도입했다.



2014.07 비전 2020 제정 및 조직진단 프로젝트 보고서

나. ‘비전 2030’ 수립과 신(新) 경영전략

2010년 ‘비전 2020’ 최초 수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수은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고,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해 새로운 미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도 있었다.

수은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2018년 7월 ‘비전 2030’을 수립·발표했다. ‘We Finance Global Korea’를 비전으로, 2030년 여신잔액 200조 원, 누적이익잉여금 5조 원 달성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경영계획 수립 변천과정(1979~2026)

시기	내용
1979.02	최초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 기반확충단계(1979~1981), 선진화단계(1982~1986) 경영계획
1987	중장기 업무발전계획(1988~1992) 수립
1989	업무기능 개선방안 마련, 경영평가제도 도입
1991	장기발전방안(1991~2000) 수립
1991.12	21세기 수은의 역할 연구보고서 기반 경영계획 수립
1993	수은 기능 전문화 방안 수립
1994	경영합리화방안 수립
1995.05	21세기를 향한 수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996	2000년대를 향한 수은 발전방안 용역보고서 기반 장기발전방안 수립
1997	중기경영계획(1998~2000) 수립
1999	IMF 외환위기 이후 수은의 기능과 역할 및 추진전략 수립
2000	중기경영계획(2001~2003) 수립
2003	중기경영계획(2004~2006) 수립, 이후 매년 연동방식으로 조정
2006	중기경영로드맵(2007~2009) 수립
2010	비전 2020 수립
2013.08	정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2014	비전 2020 재정립 및 조직진단 컨설팅 실시
2018	비전 2030 수립(비전: We Finance Global Korea)
2023.06	수은2.0 정의 기반 비전 2030 재정립 (미션: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2024.07	정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방안 의결, 新경영전략 수립 (비전: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국제협력금융기관 도약)
2025	중기경영계획(2026~2028) 수립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방안의 기본 방향(2024.07)



전략목표로는 ①신시장 고부가가치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금융 전문기관 ②정부정책 이행을 통해 우리 산업 역동성을 확보하는 시장보완 안전망 ③국제 개발협력 흐름에 부응해 수원국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 ④인프라 PF금융·개발협력 노하우로 통일시대를 리딩하는 대북경협·개발 금융기관 ⑤사회적 가치 이행으로 지속가능하고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정했다.

그러나 비전 2030 수립 이후 코로나19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은의 기능과 역할에도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왔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던 때였다. 수은은 2023년 6월 사업부문별 전문 가로 구성된 전담 TF를 구성하고 비전의 전면 재검토 작

업에 들어갔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발전테마와 방향, 전략과제를 새롭게 도출했으며, 전통적 수출신용기관 역할에서 진화한 미래 지향점을 '수은2.0'으로 정의했다. 수은2.0은 자국 수출거래에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전통적 수출신용기관 역할에서,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며 국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로의 진화를 의미했다. 수은2.0 정의를 계기로 비전 2030의 미션을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정했으며, 이와 함께 ①Core Business Evolution ②Beyond Core ③Impact Based Strategic Prioritization을 발전테마로 새롭게 설정했다.

비전 2030 재정립의 방향성은 정부의 정책금융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24년 7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대형 수주산업, 미래성장산업 지원 등 수출금융 활용도 제고와 함께 개발금융 고도화, 공급망금융 운용 강화 등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이렇게 마련된 新 경영전략은 '경제·안보 블록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래산업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①역동경제 구현 ②경제외교 뒷받침 ③공급망 안보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국제협력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는 수은 최초의 정부 공식회의체 의결을 통해 수립된 경영 전략으로, 정부정책을 이행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수은의 위상 제고와 실행동력 확보에 기여했다. 이후 수은은 新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장기경영전략, 중기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2. 경영혁신활동

가. 정부 경영혁신에 적극 부응

그동안 정부는 '민영화', '선진화', '비정상적 정상화'를 추진하며 공공부문에 경영혁신을 단행해 왔다. 수은은 그 때마다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IMF 외환위기가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었다. 고객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하고 주력여신이 감소하는 등 위기가 도래하자, 조직·인력 구조조정이란 고통의 경영혁신을 단행했다. 혁신성과에 힘입어 1999년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경영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5년 실시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수준진단'은 경영혁신 상시화와 내재화 계기를 마련했다. 중기경영로드맵의 미션과 비전, 경영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목표로 고객만족경영, 성과중심경영, 업무효율성 제고 등 3대 경영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2008년 정부가 주문한 혁신의 화두는 '선진화'였다.

그 과정에서 수은은 인력, 조직, 보수체계 등 조직운영 전반에 효율화를 진행했다.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총 52명의 임직원이 명예퇴직하기도 했다.

선진화에 이어 2013년에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이 공공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은 역시 중점관리대상 기관에 지정돼, 2014년 10월 퇴직금,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수은은 계속되는 정부의 혁신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상시 경영혁신체계를 구축했다. 경영진 혁신전략회의, 부서장 혁신추진위원회, 팀장급으로 구성된 혁신추진 실무협의회 등을 결성해 추진력을 높였다. 특히 혁신 촉진자(Change Agent)로 구성된 혁신클러스터가 활동을 주도했다.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수은은 임금상한제·임금 피크제 등 성과중심 신인사제도 도입, e-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수출중소기업 멘토제 실시,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혁신성과를 달성했다.

나. '수은 혁신안' 추진

2010년대 중반 수은은 새로운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먼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은의 주요 지원산업인 건설·플랜트와 조선업황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됐다. 또 경기대응적 정책금융 수요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해왔던 확장적 여신정책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본 확충,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6년 수은은 곧바로 자체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외부 컨설팅은 물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같은 해 10월 '수은 혁신안'을 확정했다. '신뢰받는 건전한 대외정책금융기관 재도약'을 목표로, ①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②엄정한 경영관리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③필수적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의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조직 슬림화, 인력 감축, 예산 절감 등의 경영쇄신과 리스크관리 및 구조조정 전문성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 등의 부실방지 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실현하고, 신시장 개척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 재도약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수은은 혁신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금융지원 및 리스크관리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선도적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먼저 제한된 인력상황에서도 전

략적 조직개편, 효율적 인력운영 및 업무관행 개선을 통해 경영쇄신을 실현했다. 또한 경영평가 개선, 준법감시 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했다. 나아가 비여신 수익 기반 강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추진 등 자본 확충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계획 수립, 여신 심사, 리스크관리, 구조조정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고도화해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자산건전성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리스크를 반영한 업무계획 수립을 통해 경영안정성을 제고했고, 심사·승인 분리 등 심사절차 강화를 통해 여신 승인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보완했으며, 구조조정 담당조직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부실여신 축소를 도모했다. 이에 더해 신시장 개척 선도를 위한 대내외 지원체제 정비, 수출형 신성장산업의 선정·육성 등을 추진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 발굴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대외정책금융의 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여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산업 편중 리스크 경감에 기여했다.

혁신안 실행 이후 수은의 정책금융은 조선·플랜트 등 기간산업 중심에서 혁신·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경영 지표 전반이 균형을 이루며 현저히 향상됐다. 공고한 위기대응체계 및 효율적인 조직 거버넌스 확립은 이후 수은의 전방위적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는 견고한 자산이 됐으며, 이러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4월 혁신안은 종결됐다.

제2절

리스크관리

1. 리스크 분석과 관리

가. 조직과 체제의 변천

수은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관리와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를 동시에 수행한 Risk&ALM부에서 출발했다. 1998년 6월 조직 신설에 이어, 같은 해 9월 리스크관리규정 제정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로 리스크관리 업무가 기본적인 체계를 갖췄다. 이후 여러 차례 조직 확대를 거쳐, 2015년 6월 수은은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리스크관리 단위를 본부로 격상했다.

수은의 리스크관리체계에서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의 제정·개폐 등을 의결한다. 리스크관리 기본정책 수립, 각종 한도설정·관리,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998년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한 심의기구에 불과했으나, 2000년 1월 의결기구로 격상되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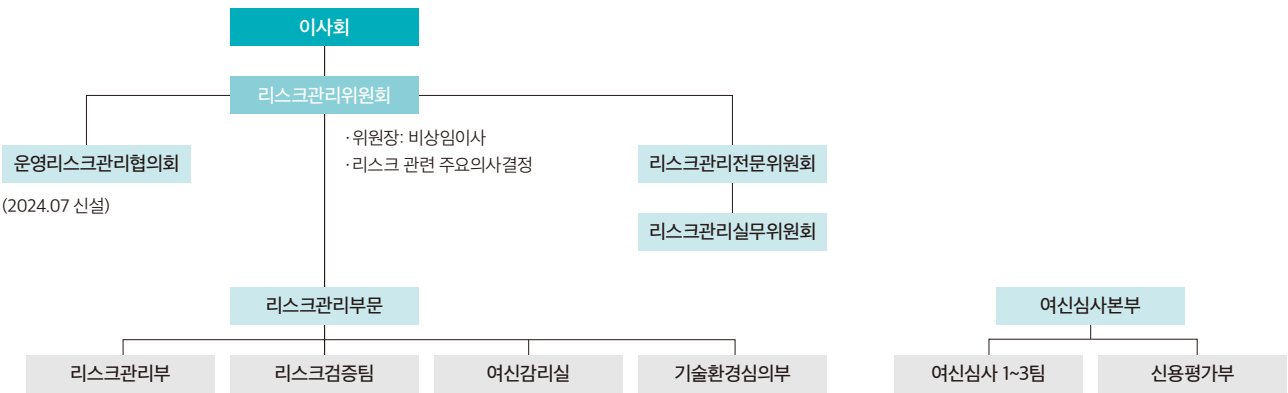
인사 외에도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면서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했다.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도 신설했다. 실무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실무 현안사항의 협의를 통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중점관리차주 관련 사항, 특별한도 설정, 한도초과거래 승인 등을 의결하는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수은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도 더욱 강화했다. 2013년 12월부터 비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보임했다. 운영리스크 관리기능 또한 강화했다. 2024년 7월 업무 프로세스, IT 등 운영리스크 전반의 통제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 협의체로 운영리스크관리 협의회를 신설했다.

리스크관리 실무조직으로는 리스크관리부문 산하에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검증팀, 여신감리실, 기술환경심의부를, 여신심사본부 내에는 여신심사1~3팀, 신용평가부를 두고 있다.

수은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건전성 규제 권고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4년 1월에는 신용리스크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신용

리스크관리체제



리스크팀을 신설했다. 이후 신용리스크팀은 중점관리차주 관리와 차주 신용위험 한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014년 6월 조직개편에서는 리스크관리부를 리스크관리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이듬해 2015년 6월 조직개편에서는 리스크관리단을 리스크관리본부로 승격했다. 아울러 본부 내에 리스크관리부와 심사평가부도 신설했다. 심사평가부 신설을 계기로 수은은 여신본부 견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2016년 11월에는 여신심사 전문조직의 기능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부를 심사평가단으로 확대·분리했다. 리스크검증 업무도 강화했다. 2024년 7월 독립 조직에 의한 리스크검증 업무 수행을 위해 리스크검증팀을 신설했다.

한편 2020년 수은은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위기상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기업 지원,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 비상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상시 영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체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BCP를 개선·보완했다.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격리를 즉각 실시했으며, 방역 강화는 물론 본점·지점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다. 또 자금이체, IT 등 본점 필수업무 인력은 보호장구 착용 후 업무를 처리했으며, 기타 필수인력은 자금결제시스템이 구축된 대체사업장인 인재개발원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나. 자본적정성 관리

은행의 자본적정성 확보는 건전경영 유지에 필수적 사항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는 1988년 7월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협약(바젤 I)’을 제정해 국제기준의 자기자본 규제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해 1992년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했다.

수은은 1999년부터 BIS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 초기에는 신용리스크만을 대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했으나, 이후 트레이딩으로 분류된 자산규모 확대 등으로 시장리스크도 산출·반영했다. 2004년 바젤위원회는 바젤I에 이어 바젤II를 발표했다. 바젤II는 차주별 신용리스크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은행 간 리스크관리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바젤I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금융감독원이 바젤II를 국내에 도입함에 따라 수은 역시 운영리스크까지 반영한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바젤II에서는 은행의 자체 자료와 리스크측정시스템을 이용하는 내부등급법이 도입됐지만, 수은의 경우 거래기업의 수가 많지 않고 대외거래를 지원하는 기관 특성상 해외 익스포저(Exposure)가 많아 리스크 계량측정을 위한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부족해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차주의 외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도를 차등 적용하는 표준방법을 사용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바젤II 도입으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바젤II는 규제자본 관리에 더해 은행의 자체 리스크 특성, 규모, 내부통제환경에 적합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와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수은은 2007년 1월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정책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주요 리스크 부문별 내부 자본한도를 설정·관리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바젤II 규제자본이 손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금융기관 간 부실위험이 전이되는 한계점이 노출되자, 바젤위원회는 2010년 바젤III를 발표했다. 바젤III는 보통주 중심의 양질의 자본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자본보전완충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해 경기순응성을 완화했다. 아울러 최소자본규제를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화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과 유동성규제비율 등도 추가로 도입했다. 이후 바젤위원회는 2017년 12월 기존 바젤III를 개편한 바젤III 최종안을 발표하며 늦어도 2023년까지 바젤III 최종안을 도입할 것을 회원국에게 권고했다.

수은은 바젤III 최종안 도입 등 외부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고도화했다. 2021년 6월 바젤III 최종안 기반 신용리스크부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가중치 단계 세분화 등 리스크에 따른

변별력을 확대했다. 2023년 1월에는 시장리스크·운영리스크부문의 바젤III 최종안 기반 시스템을 가동했다. 시장리스크의 경우 금융상품 리스크 민감도, 금융기관 부도 리스크 등을 새롭게 반영했으며, 운영리스크는 영업규모와 은행 운영과정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과거 손실사건 등도 반영해 리스크량을 산출했다.

바젤III 최종안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수은은 BIS 자기자본비를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025년 1월 스트레스테스트 고도화를 통해 자본건전성 관리능력을 제고했다. 부도율 추정모형 정확성 제고, 분석 자동화 등 분석기법 고도화를 통해 환율·금리 등락, 기업 신용도 하락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BIS 자기자본비율을 추정하고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다. 부문별 리스크관리

신용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는 기업의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 발생으로 은행이 기업에 신용공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즉, 신용손실의 크기를 의미한다.

수은은 국내기업의 수출입·해외투자를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인 만큼, 일반은행과 달리 리스크 집중도가 높고, 대외 리스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자본채를 수입하는 국가에 수입결제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국 등 대외리스크에도 많이 노출돼 있다.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은은 은행 지급보증서 등 담보여신을 주로 취급했다. 독자적인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없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기초해 제한적으로 신용여신을 취급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용여신 취급이 활성화되면서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계기로 내부 신용평가등급에 근거한 차주별 한

도(Total Exposure한도, 이하 T/E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는 T/E한도, 신용공여한도 등 한도관리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여신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노출 집중도가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보완제도를 마련했다. 2014년 4월 익스포저가 일정 규모 이상인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중점관리차주제도를 신설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여신승인 전 점검을 강화해 여신합의체에 부의하기 전에 리스크관리조직이 합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2015년 6월에는 신용평가조직기능에 중소·중견기업 심사기능을 추가해 여신승인단계에서의 리스크 점검을 한층 강화했다.

신용공여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동일인(개별기업)은 은행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는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시중은행과 동일했다. 그러나 2012년 정부는 특정 산업에 여신이 편중되는 수은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2차례 신용공여한도를 증액해 동일인 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60%, 동일차주 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80%로 설정했다. 2018년 8월에는 다시 특정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대한 지나친 여신 편중을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또는 동일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했다. 동일인의 경우 기존 수은 자기자본의 60%에서 40%로, 동일차주 또한 80%에서 50%로 각각 축소했다.

신용리스크관리체계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먼저 수은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컨설팅을 실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체계 개편에 돌입해 2025년 1월 심사분석시스템, 같은 해 3월 新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각각 구축했다. 심사분석시스템 구축은 산업별 등급 변화 추이, 산업재무비율 등 산업위험 분석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수은의 산업심사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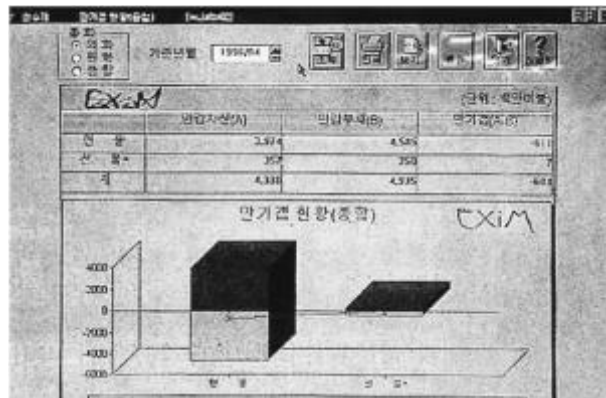
新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서는 관리 목적

이 동일한 중복제도를 정리했으며, 기업별 한도 역시 복잡한 요소를 제거하고 한도 소진율이 낮은 구간의 관리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점관리차주 제도와 관련해서는 거액차주 중 위험차주 식별을 위한 후보군 선정기준을 정비했으며, 후보군 식별 후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2단계 구조로 선정절차도 정교화했다. 잠재 위험차주 모니터링 절차를 신설하고, 위험차주의 한도를 축소 조정하는 등 중점관리차주의 사후관리 절차 또한 효율화했다.

자산부채종합관리(ALM)

ALM은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으로, 그 목적은 자산과 부채 구성의 최적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자유화·국제화·개방화 진전으로 고수익·고위험 자산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기업의 금융자산부채와 밀접한 위험요소의 변동폭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자, 1990년대부터 금융기관들은 자산부채 구성을 최적화하는 ALM 업무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은은 1992년 ALM 업무를 도입했으며, 1998년에는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장기 고정금리대출 증가, 파생상품 거래 증가로 자산·부채구조가 복잡해지고 위험노출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ALM 전산화면

2008년 수은은 자산부채구조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양한 재무영향 분석을 통해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규정, 조직, 업무프로세스, 리스크측정, 한도관리 등 ALM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했다. VaR, EaR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지원하는 新 ALM시스템을 구축했다.

2014년에는 자산부채종합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리스크관리 조직에서 수행하던 ALM 기능을 재무기획담당 조직으로 이관했다. 이후 리스크관리 조직은 리스크지표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재무기획담당 조직은 수지를 감안한 자산부채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新 시스템 구축과 ALM 기능 전문화 이후 수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ALM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했다. 먼저 2019년 ALM위원회 구성을 전무이사, 여신정책담당 본부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또 여유자금 관리, 금리·제가산을 운용방안 등 자산부문 주요정책 심의·보고를 추가함으로써 전행적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 수은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ALM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기존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에서 벗어나 리스크관리 한도 내에서 자산부채 구조 최적화를 통한 재무목표 달성과 순자산가치 증대로 위원회 기능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중기 재무목표 수립, 재무전략·수지관리, 기간가산율 산정기준 등의 심의·의결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2023년에는 LIBOR 대체금리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제사회는 2012년 6월 LIBOR 금리 조작사건 이후 지표금리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 7월 LIBOR 금리 산출을 중단하고, 대체지표금리인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도입했다. 수은은 SOFR 전환에 따른 외화부채 적용금리 갱신주기 변경을 감안해 실제 금리변동

리스크를 반영하는 듀레이션산출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이자율 위험 측정 정확도와 자산부채 듀레이션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시장·운영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 중심이었던 리스크관리는 점차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확대됐다. 정부는 트레이딩 목적 거래의 규모나 비중이 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신용리스크에 더해 시장리스크까지 감안하도록 권고했고, 더불어 바젤Ⅱ 도입으로 운영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높아졌다.

시장리스크는 환율, 금리, 주가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의미하며,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수은은 2008년부터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신용리스크와 함께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도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은의 경우 주식, 채권, 외환 등 시장리스크 노출 금융자산의 트레이딩 목적 거래를 취급하지 않아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외에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운영리스크도 마찬가지로였다. 상업은행 대비 금융거래 건수가 적고, 사고빈도가 높은 소매금융이나 출납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운영리스크는 도입 당시, 10여 개의 주요위험지표를 관리하는 기초지표법을 적용한 낮은 수준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보유 외화자금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방식 다변화를 위해 채권 트레이딩 업무를 실시한 데 이어, 금융거래 증가, 상품 다변화에 따른 업무복잡성 증대 등 운영리스크 발생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2012년 시장리스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트



1991.01 신용정보팀 발족식

레이딩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2014년에는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재수립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운영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정했으며, 운영리스크 관련 IT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췄다.

2016년 4월 수은은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한 차레 더 고도화했다. 시스템 고도화로 기존 수기 방식의 주요위험지표 관리가 전산관리로 전환했으며, 수기수집과 개별관리에 의존하던 손실사건 데이터도 통합수집·관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전에 없던 리스크 자가평가 수행도 가능해졌다.

시장·운영리스크 관리에 이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했다. 수은은 ESG경영 강화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해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고탄소 유의산업과 금융배출량 모니터링,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의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기후리스크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고탄소 유의산업 모니터링체계, 금융배출량 측정 체계 등을 고도화했다.

2.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국내에 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5년 9월 무렵이었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 기업의 어음발행 허용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담보부대출 관행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차등 부여하는 '신용등급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수은 역시 1999년 1월 차주분석 강화를 위해 여신총괄부 내에 '신용정보팀'을 신설했다.

대기업 워크아웃·신용분석 업무는 리스크관리부 대기업신용분석과에서 수행하고, 신설된 신용정보팀은 차주의 은행 전반의 신용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여신감리 업무를 수행했다. 2000년 1월에는 효율적인 기업신용분석을 위해 여신총괄부 신용정보팀과 리스크관리부의 대기업 신용분석과를 통합해 리스크관리부 내에 여신감리팀을 신설했다. 당시 신용등급평가시스템으로는 하나은행의 기업평가시스템을 활용했다.

국내기업 신용등급평가제도 도입 때 수은은 '국외기업 신용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국외기업 신용등급평가 업무도 함께 도입했다. 2003년 8월부터는 수은과 거래관계에 있던 국내외 금융기관 신용등급평가 업무 또한 본격화했다.

2000년대 들어 비로소 신용등급평가 체제를 갖췄으나, 외부시스템의 수은 업무 적용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수은 감사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도입한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이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시스템 보완을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수은은 2001년 4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2018년까지 3차례 모형 개선을 통해 안정성과 예측력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

이후에도 수은은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2014년 7월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권고에 따라 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등급을 신용등급평가에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적출권고에도 적극 부응했다. 금융감독원 보유 분식사례와 기업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 2015년 11월 새로운 재무이상지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수은은 2015년 6월 여신규모 확대,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여신 전반에 실질적 견제와 균형 기반을 마련하고자 리스크관리단을 확대·개편하고 리스크관리본부를 신설했다. 리스크관리본부에는 여신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팀을 확대·개편해 신용등급평가와 여신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심사평가부를 설치했다. 심사평가부는 기존 신용등급평가 업무에 추가해 산업담당자가 중소·중견기업 여신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로써 여신 승인 전반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져 여신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어서 2017년 1월 수은은 여신심사 전문조직의 기능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부를 심사평가단으로 격상하고 본부 외 조직으로 두어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부의안 심사대상 여신을 확대·조정하는 등 심사기능도 강화했다. 2025년 1월에는 심사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기업·계열·산업분석 등 심사자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3. 기술·환경심사

수은은 1992년 8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기술지원실을 두고, 선박·플랜트 중심의 기술심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었다. 이후 2004년 8월 기술지원실을 재설치하고 기술·환경심사를 본격화했다.

기술심사는 선박 건조사의 제작이행능력 심사 필요성이 부각되던 시점에 개시됐다. 당시는 조선시장 호황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시장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대형조선사 외에 중소형 조선사, 대형조선사의 하청업체인 블록전문 제조업체까지 선박 수출시장에 진출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선박금융 심사에 전문화된 수은에 여신지원 요청이 쇄도했으며, 수은은 선제적 부실방지 차원에서 전문조직을 갖추고 선박수출이행능력 심사를 강화했다.

기술심사와 함께 환경심사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었다. 2001년부터 논의된 OECD 환경권고안이 2003년 12월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출신용협약 ECG(Evaluations & Compliance Group) 회원국의 지원사업에 대한 환경심사 이행이 본격화했다. 수은 역시 2004년 2월 '환경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후속조치로 전문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수은은 전문성 확대와 해외프로젝트 지원 강화 차원에서 2005년 6월 기술지원실을 기술심의실로, 2012년 6월에는 기술환경심의실로 명칭을 각각 변경했다. 기술환경심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수은의 위상도 높아져 2018년 11월 수은의 직원이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 의장에 선출됐다.

업무수행 범위도 확대됐다. 2019년 1월 수은은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심의팀의 명칭을 '환경사회심의팀'으로 변경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EDPF와 선박수주가격 적정성 평가 지원 업무를 새롭게 수행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소속본부를 심사평가단에서 리스크관리본부로 변경하고, 부서의 명칭도 '기술환경심의부'로 변경했다.

수은의 기술심사는 선박 기술심사와 기타 기술심사로 분류된다. 선박 기술심사는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을 지원할 때 실시한다. 선박 제작이행능력 기술심사, 중소조선소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조사하는 정기점검, 그리고 선수금 환급보증의 만기연장 시 선박의



2018.11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 의장에 선출된 임동준 부부장



2013.08.27 조선사 방문 점검

건조현황을 확인하는 공정점검이 이뤄진다.

2004년 대한조선의 컨테이너선 6척을 비롯해 8건의 기술심사를 진행했으며, 2005년에는 신아조선 케미컬탱크선 2척을 비롯해 8건을 심사했다. 이후 기술심사 건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나 2025년 말 기준으로 제작이행능력 기술심사 191회, 공정점검 120건, 정기점검 124회를 실시했다. 특히 정기점검은 2017년부터 연간 중소 분기 4회, 대형 반기 2회 실시로 정례화했다. 기타 기술심사의 경우 선박 외 수출물의 제작능력평가와 유·가스전의 매장량평가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10건을 심사했다.

수은의 환경사회심사는 지원대상사업을 환경·사회위험 수준에 따라 A~C등급으로 분류한 후,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한 수입국기준 또는 국제환경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다.

이어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입자가 환경·사회위험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2004년 3건, 2005년 3건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37건의 환경사회심사와 2025년 기준 총 130여 건의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4. 여신감리

여신감리는 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여신 업무의 전 과정을 검토해서 여신취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점검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축소하는 등의 업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은행의 수치·건전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여신감리 업무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수은 역시 2000년 5월 리스크관리부 내에 ‘여신감리팀’을 신설하고 여신감리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여신감리는 일상감리와 수시감리로 분류된다. 일상감리는 심사·승인 결과에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승인감리, 신용평가역 또는 일선영업담당자가 평가한 신용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신용등급감리, 기업의 정태적·동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부실예측과 동태점검을 실시하는 상시 모니터링(조기경보제도)으로 나뉜다.

수시감리는 특정시점의 여신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감리기법으로, 테마감리와 수은 국외현지법인감리로 구분된다. 테마감리는 산업, 여신종류, 여신관행 등 주요 리스크 취약부문의 적시 감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정상적 여신취급, 한도축소, 채권보전 강화 등 여신운용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편, 수은 자사 국외현지법인의 여신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외현지법인

여신감리 업무 구조

항목	내용	
여신 감리	승인감리	· 심사·승인 결과 검증
	일상 감리	· 신용등급감리 · 신용등급의 적정성 여부 판단
	상시 모니터링	· 종합적 지표 토대 부실예측 및 동태점검
	수시 감리	· 리스크 취약부문 감리 · 결과에 따른 여신운용 방향성 제시
	국외현지 법인감리	· 국외현지법인 지원 여신 감리 적기 시행 · 국외현지법인 자산건전성 확보

이 지원한 여신에 대한 감리를 적기 시행해 국외현지법인의 자산건전성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주기적으로 여신 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평가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여신감리 업무는 여신부점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여신건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수은은 부실장후기업 관리를 강화했다. 2012년 선제적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관리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의 특정시점 정태적 재무수치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예측성이 높은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종합평점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도개선과 함께 여신감리 조직도 확대했다. 2015년 1월 팀 단위의 조직을 독립부서로 승격하고 ‘여신감리실’을 신설했다. 이후 수은은 감리기능 강화와 함께 감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갔다. 먼저 2016년 2월 기존 기업여신 외에 PF 등의 중장기여신으로 감리대상을 확대했다.

여신감리 고도화 과정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2018년 7월 新 여신감리시스템을 오픈했으며, 기업 관련 기사, 공시자료, 경제통계 지표 등 각종 데이터 제공서비스 계약 체결과 전용회선 구축으로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확보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주별 부실

가능 유형을 예측할 수 있었고, 여신심사·사후관리 편의성이 제고됐으며 新 여신감리시스템도 안정화됐다.

2020년에는 고위험 여신 감리체계 마련, 시스템 개선, 피드백 강화 등 여신감리체계를 한 차례 더 강화했다. 먼저 EDPF, 특별계정 등 고위험 여신 특성을 감안한 감리 방안을 새롭게 수립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의 부도예측 정확도 검증을 최초로 실시하고, 모형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적시성·정확성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부도 사례 분석도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수은은 자행 국외현지법인 여신 규모 확대와 2024년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시 등의 업무 확대를 감안해 2023년에 국외현지법인 취급 여신감리를, 2025년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여신감리 업무를 추가 수행 중이다.

5. 여신관리와 기업구조조정

여신관리 과정은 정리대상 여신의 담보권 실행, 그리고 강제집행과 관련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수반한다. 여신 관리는 수은이 경락받은 담보물인 유입물건을 관리·매각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어 대손상각 처리한 특수채권을 관리하는 등 정리대상 여신의 발생시점부터 소멸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의미한다. 그 과정은 정리대상 여신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수은의 경우 대기업 대상과 수출입금융 중심의 여신을 취급해 온 업무 특성상 시중은행보다 정리대상 여신의 발생빈도가 적었으나, IMF 외환위기 상황은 수은의 자산건전성과 수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수은은 1998년 1월 여신총괄부 내에 정리대상 여신관리 전담조직인 ‘특수여신관리팀’을 신설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설립된 한화오션

는 해당탐을 특수여신관리실로 승격시키는 등 여신관리
에 본격 나섰다.

여신관리 업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다시 큰 변화를 맞았다.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과 건
설업에 여신이 집중됐던 수은의 부실여신 규모가 증가
한 것이었다. 수은은 2013년 1월 중소기업금융부 내 특
수여신관리실을 독립부서인 기업구조개선실로 확대·개
편했다. 이어서 중소 조선·해운사의 부실이 심각해짐에
따라 같은 해 6월, ‘중소조선금융실’을 새롭게 설치했다.
2014년 6월에는 정부의 ‘해양·선박금융 강화 종합대책’
에 따라 이를 다시 ‘해양기업개선실’로 확대·개편했다. 그
러나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이원화했던 기존의 기업구조
개선실과 해양기업개선실을 2015년 6월 ‘기업개선단’으

로 통합했다. 그 산하에는 기업구조혁신실을 두고, 대기
업과 중소 조선사 대상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후 수은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대선조선, SPP
조선, STX조선 등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기업구조조
정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대형 조선사 간 협력모
델 제시, M&A 성사, 출자전환 주식매각 등 민간 자본시
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패러다임을 적극 활용했다. 개
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조조정 적용으로 의미 있는 선
례를 만들어 나갔고, 채권 회수율 극대화와 여신자산 건
전성도 제고해 나갔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장기간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대규모 부실방지와 자본확

충 지원에 주력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새 주인
찾기를 모색했다. 그 결과 2019년 3월 현대중공업과 매
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EU집행부의 반대로 M&A가 무
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능력 있는 주인 찾기를 계속했
고, 마침내 2022년 9월 한화그룹에 매각을 성사시킴으
로써 20여 년간의 구조조정을 완결할 수 있었다.

중소조선사의 경우, 성동조선 사례에서는 2015년 8월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했으며, 2020년 5월 M&A 절차 완료로 희생절차 2
년 만에 구조조정을 조기 종료했다. SPP조선은 M&A를
통한 부실여신 감축을 추진, 2019년 매각과 함께 채권
회수 및 손익정산을 완료했다. 대선조선은 소형 컨테이너
등 니치마켓 공략으로 독자생존을 추진했고, 2021년 4
월 M&A 성공으로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에 이어 부실채
권 조기회수를 완료했다. STX조선(현 케이조선)은 매출
50% 축소, 인력 34% 감축, 선종 단순화 등 다운사이징
추진으로 정상화를 도모했으며, 2021년 7월 M&A 성공
과 함께 채권단 공동관리를 종료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은 수은에 또 다른 과제를 부
여했다. 수은은 국내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공
업계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국가 핵심 발전플랜
트기업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먼저 2020년 2월 정부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에 부응해 항
공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대형 항공
사의 경우, 대한항공 사례에서는 2022년 1월 300억 엔
채권발행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 개선에 기여했
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21년 8,800억 원 상당 여신의
만기연장을 제공하는 등 유동성 확보와 자금조달 개선
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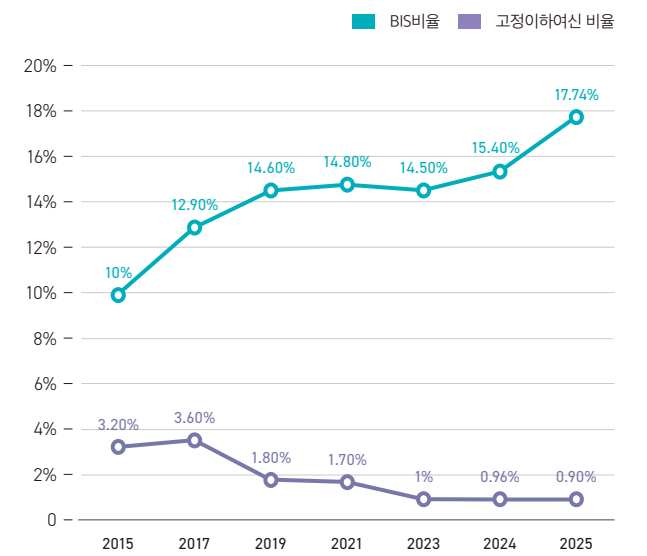
대형 항공사에 이어 저비용 항공사(Low-Cost Carri-
er: LCC) 생존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섰다. 제주항공의 경
우 2020년 12월 ‘코로나19 대응 저비용항공사 금융지
원 방안’으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최초 지원함으

로써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도 대출 만기연장을 통한 유동성 부족 완화로 LCC 생
태계 복원에 기여했다.

코로나19는 항공업은 물론 국가 발전산업 핵심기업인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에도 자금난을 불러왔
다. 수은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3조 원 규모의 운영자
금을 지원했으며, 원활한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이행정보증 만기연장도 제공했다. 그 결과 두
산중공업은 2022년 2월, 당초 목표대비 2배 수준의 자
구안 이행실적을 달성하고 만 23개월 만에 채권단관리
조기졸업에 성공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수
은의 자산건전성에도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은은 선제적 관리활동을 통해 부실여신 규모의 지속적
감축에 성공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로 양호한 건전성·
유동성을 유지한 결과였다. 2025년 말 기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인 17.74%의 BIS비율을 달성했으며, 고정이하여
신비율 역시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인 0.90%를 기록했다.

BIS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2015~2025) 단위: %



제3절

인사관리

1. 인력관리

가. 인사제도의 도입과 발전

1976년 설립 당시 76명의 직원(임원 4명 포함)으로 출발한 수은은 일찍부터 체계적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 인력관리를 운영해 왔다. 1977년 8월 종합평정제도를 도입하고 연공 위주의 인사관리에서 탈피해 근무성과 경력에 조화된 효율적 인사관리체제를 구축했다.

1981년에는 처음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했고, 1982년 2월 전체 정원과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제반 인사관리의 자율화를 계기로 이후 수은은 직무분석을 인력관리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다.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전체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운영하는 등 매년 효과적 인력조정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1985년 총무부 총무과를 확대해 인사부를 신설하고 인사관리의 전문화를 실현했다.

1990년대는 더욱 정교한 인사관리체제가 갖춰지던 시기였다. 1995년 1월, 인사관리정보시스템(Personne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이 완성되면서 인사관리 업무 전산화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승진제도 개선, 인사 혁신방안 등도 마련했다. 먼저 전문직, 사무직으로 구성된 행원 중 사무직에 대해서도 승진제도를 마련했다. 1995년 12월 ‘직원임용규정’을 개정해 사무직원 직급을 1~6급으로 확대했다.

혁신방안으로는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제(Job Posting)을 도입했다. 이때 전문인력 육성계획과 그 시행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1996년부터 직군제를 전격 시행했다. 1999년 5월에는 주요 간부직원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대우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대는 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직군제 보완, 직급체계 개편 등 인사관리체제의 선진화가 이뤄졌다. 먼저 2003년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다면평가는 부서장, 팀장 등 주요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소속부서 또는 소속팀 전문직직원 전원이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상급직원의 하향평가, 동료직원의 수평평가 등으로 발전했고, 효과적인 다면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발해 활용했다. 인력의 고령화와 인사적체, 과다한 인건비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05년 5월 정기인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국책은행 최초의 사례였다.

직군제는 2000년대 들어 지점, 국외 네트워크가 대폭 확충되고 통섭형 인재가 필요해지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졌다. 결국 2007년 직군제를 대체해 부문별 채용, 장기·순환근무 병행, 직무경력경로(Career Development Program: CDP) 관리, 직무유관 연수 확대를 포함한 직원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직원임용규정의 순환근무 이동주기도 3년으로 개정함으로써 빈번한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직급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09년 기존 1~5급의 5단계 직급을 G1~G3 3단계로 단순화했다. 이를 계기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함께 연공 위주의 직급체계를 역량과 성과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이때 이사대우제도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9년 상임이사를 축소하고 기존 이사대우제도를 폐지했다. 그 대신 ‘집행간부제도’를 도입했다.

종합평정 기반의 직급 승진과 별도로 2011년에는 부서장·팀장급 신규 보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본부장 인사권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조직관리자 보임기준’을 제정했다. 2015년에는 ‘본부장 보임제도’를 도입하고 조직관리자 보임기준에 본부장 신규 보임 기준을 추가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채용 방식 역시 2015년부터 채택했다. 이후 수은은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직무설명서 형태로 채용공고에 게재하고 전형 단계별로 해당 역량을 측정해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했다.

이 시기 청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대상 사회형평 채용제도도 적극 운영했다.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직무체험 기회를 확대했으며, 직무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해외

사무소 파견 등 현장감 있는 실무경험 제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장애인, 지방인재,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고졸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사회 취약계층 채용 우대제도’를 운영했다.

나. 인사관리의 고도화

청년인턴, 사회형평 채용 등 사회참여형 인사제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먼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파견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9년 용역직 근로자 자회사 설립과 함께 정규직 전환 대상자 186명의 전환을 완료하고 전환 고용목표 100%를 달성했다.

이후에도 수은은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이 시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도 제고했다.

사회참여형 채용 확대에 이어 인사제도도 고도화했다. 2018년 TF 운영과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2019년 인사제도 혁신안을 마련했다. 연수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직원 주도의 경력개발을 촉진했으며, 개인평가 제도 고도화, 다면평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했다.

이 시기 업적·역량 중심의 인력운용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2017년 10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과 2018년 3월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외부인사의 비상임 이사 선임 등 이사 선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과정을 통해 2019년 1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여성 본부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수은에서 여성직원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부터 높아졌으며, 2000년대 이후 연도에 따라 채용인원의 최고

60%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여성관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그 비중이 21%를 달성했고, 신입행원 중 여성 비율도 67%를 달성했다. 또 다른 채용 공정성 확보 노력으로는 2019년 4월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을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채용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임의적인 변경이 금지됐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은은 정부의 혁신성장 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해 융·복합형 인재 채용을 확대했으며, 아울러 업적·역량 기반의 인력운용 등을 통해 인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나갔다.

융·복합형 인재 채용의 경우 2010년대 중반부터 이공계 채용비중 확대로 혁신성장산업 인적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며, 2021년에는 전기·전자, 화학·생명, 기계 등, 공학분야 금융인재를 최초로 채용했다. 업적·역량 기반 인력운용 측면에서는 2020년 ‘공공기관 시니어인력 활용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임금피크 직원의 경험·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2021년에는 소통·협업 역량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팀원급 직원 간 동료평가를 도입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2023년 TF 운영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성과·전문성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평가제도에서는 역할·업무특성-업무배분-평가 간 유기적 연계와 평가자 피드백을 강화했으며, 승진제도에서는 다면평가의 승진 반영 방식을 개선하고 승진기준 개선과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수립했다. 또 인력운영에서는 직무분석 체계화와 직무별 전문인력 공모제 도입, 그리고 경력개발인프라시스템을 개선해 직무기반 인사관리를 강화했다. 인사제도 개선안과는 별개로 2023년 2월 수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의(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채용·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수은은 2016년 ‘수은 혁신인’ 수립 이후 정원 제약을 딛고, 인력수급계획 범위 내 정·현원차 여유



2026.07.01 제84기 신입행원 소개 현장

분을 최대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총 인원을 확대하며 정부 혁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해 왔다. 더욱이 2024년에는 공급망 안보 지원 등 새로운 정책금융 역할을 뒷받침하고자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인 전문직 신입행원 90명을 채용했다. 총 인원 역시 1,24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인사관리제도 주요 변천(1977~2023)

시기	내용
1977.08	종합평정제도 도입
1981	첫 직무분석 실시
1985	총무부 총무과 확대, 인사부 신설
1995.01	인사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996	직군제 도입
1999.05	이사대우제도 도입
2003	다면평가 실시
2005.05	임금피크제 시행
2007	직군제 폐지, 직원 전문역량 강화방안 마련
2009	직급체계 개선(5단계 → 3단계), 이사대우제도 폐지, 집행간부제도 도입
2011	조직관리자 보임 기준 제정
2015	본부장 보임 제도 도입, 본부장 신규 보임 기준 추가, NCS 채용 방식 도입
201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2019	인사제도 혁신안 마련
2020	‘공공기관 시니어인력 활용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2023	성과·전문성 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채용심의(검증)위원회’ 신설

수은 총 인원 변화(1976~2025)

단위: 명

연도	197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	76	935	977	1,096	1,132	1,148	1,181	1,213	1,191	1,242	1,273

총 인원의 확대와 함께 수은의 직급·직위체계도 더욱 탄탄해졌다. 정부 승인 직급별 정원을 준수하면서 피라미드형의 젊은 인력구조를 유지했으며, 실무능력과 조직관리능력을 겸비한 G2급 젊은 직원의 조직관리자 발탁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 직급·직위체계를 운용했다.

2. 연수관리

수은은 업무특성상 1976년 출범부터 외국어연수를 강화했다. 1977년 8월에는 총무부에 연수과를 신설했고, 이후 연수과(현 인력개발팀)는 인사부문과 긴밀한 협조 아래 연수업무를 전담했다. 외국어연수를 시작으로 수은은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1977년 외부기관 파견 연수, 1978년 업무연수(현 종합업무연수)와 해외사무소 근무연수, 1979년부터는 국외학술연수를 시작했다.

1980년대는 연수체계의 틀이 갖춰지던 시기였다. 1979년 최초로 발행한 업무교본을 바탕으로 1984년 이후 신입대리급 관리자훈련과정, 차·과장급 실천관리자과정 통신연수, 고위간부 고급관리자과정 파견연수 등을 시행했다. 1987년에는 연수체계의 골격인 ‘연수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산업 개편과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해 국제금융·여신심사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외국어연수도 강화했다. 국제금융분야는 1989년부터 해외현지법인에 현장교육(On-the-Job Training: OJT) 연수를 최초로 실시했으며, 기존의 ADB 외에 IFC, USAID 등 국제금융기관 장기연수를 확대했다. 외국어연수 역시 1989년 8월 대만 국립사범대 중국어연수를 시작으로, 이후 프랑스어, 러

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특수 외국어 현지연수를 확대했다.

1990년대 들어서도 수은은 외국어연수를 강화하고 연수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실무연수 내실화를 위해 1992년 업무교본을 전면 개정하고, 1993년 행내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했으며, 1994년 12월에는 여신심사·자금·국제금융분야에 행내 전문 업무연수를 실시했다. 외국어연수의 경우 1993년 9월 연수원 합숙영어연수를 도입하고, 1995년 2월 금융기관 최초로 정식 부서배치 전에 신입 중견행원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연구소에서 6개월 과정의 장기 영어연수를 실시한 것이 일례이다. 이때 국외 업무연수 예정자에 업무연수 전 장기 외국어연수를 병행 시행함으로써 외국어 연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2000년대는 연수제도의 고도화가 이뤄지던 시기였다. 2003년 연수과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개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직무맞춤형·자기선택형 학습체계인 ‘연수이수학점제’를 도입하고 2004년부터 시행했다.



1993.10.22 미국수출입은행으로의 행원 첫 해외연수

2005년에는 기존의 부서자체 업무연수, 부서활성화연수를 실무역량개발학습, 부서혁신역량강화학습으로 재편했다. 이어서 2007년 수은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직무전문연수를 시행했다. 이후 직원대상 행내 맞춤형 직무전문연수는 2013년 KGA(KEXIM Global Academy)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2010년대부터는 온라인연수가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2011년 고급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전문연수, 리더십 개발, 최신 경영정보 학습 등 비금융분야의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 그 효과에 힘입어 2014년부터는 온라인 연수과정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개인 상황에 맞게 리더십, 자기개발 등 직무 외 분야 연수과정을 수강하는

이 제도는 직원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온라인연수와 함께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은은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의 추세를 반영해 전문성과 트렌드를 접목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무역금융 다변화 추세를 반영해 'KGA 무역금융'을 신설하고 직원 실무 역량을 제고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연수 개념이 비대면학습으로 확대됐으며,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한 직원 역량개발도 활성화됐다. 디지털금융 대비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2020년 DT(Digital Transformation) 기본과정, KAIST 디지털금융 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 2021년에는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VR, AR 등 신기술 적용사례 학습의 해커톤연수를 도입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해커톤 연수는 한정된 기간 내 쉽 없이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활동이었다. 이와 함께 2021년 ESG 과정 신설, 젠더 리더십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사적 ESG 마인드 내재화를 도모했다.

비대면학습의 경우 2020년 실시간 라이브 연수, 온라인 콘텐츠 발굴, 마이크로 러닝 등 비대면연수를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전용 온라인 연수 플랫폼 '수(秀)터디룸'을 구축, 현재까지 비대면 지식공유 연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후 수은은 수터디룸을 분야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면서 2022년 PF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상시 학습 기회를 제공 중이다.

제4절

ESG경영

1. ESG경영의 도입

ESG 투자는 2020년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의 연차 서신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화석연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 관심도가 높아졌다. 국내 역시 파리 기후협정의 신기후체제 전환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계기로 기업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ESG경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은은 2021년 7월 ESG경영 선포와 함께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국책은행 최초로 여신·투자, 자금, 기관운영 등 경영전반에 걸친 ESG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We Export Sustainable Growth' 비전 아래 2021년부터 2030년까지 ①우리 기업의 글로벌 ESG 경쟁력 강화 지원 ②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③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ESG경영 내재화와 체계적인 전략 이행을

위한 조직기반도 구축했다. 2021년 7월 ESG경영 총괄과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ESG경영부'를 신설했으며, 곧이어 9월 중장기 ESG전략과 성과를 관리·감독할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ESG위원회는 2021년 11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를 기점으로 이후 ESG경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ESG전략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ESG경영 도입 2년차인 2022년 수은은 ESG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ESG경영을 위해 ESG위원회 산하에 사회공헌운영위원



2021.07.01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ESG경영 선포식

ESG경영 로드맵 및 이행과제(2021.07)



회, 해외현지법인ESG경영협의체를 두었다.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기후리스크를 포함한 제반 리스크 관리현황의 감독과 다양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해외현지 법인ESG경영협의체는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법인의 ESG경영을 지원했다.

2023년부터 수은은 ESG경영 역량강화기로 접어들었다. 이후 수은은 ESG 여신·투자·채권발행 확대, 기후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기관 ESG활동 이행·모니터링 등 ESG전략 내재화와 관리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2024년에는 친환경 여신 155조 원 이상, 사회적 여신 65조 원 이상, 탄소배출 37.4% 이상 등으로 ESG 정량목표를 확대했다.

2025년에는 ESG경영 로드맵 3단계 통합 확산기(2026~2030) 진입에 앞서 최근 정부정책과 글로벌 ESG 동향을 반영한 개편안을 마련해 ESG경영 전략체계를 재정비했다. 개편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포용적 사회를 선도하는 대외정책금융기관’을 미션으로 삼고, ①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수출금융 강화(Export) ②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Embrace) ③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영체계 강화(Execute)를 전략방향으

로 설정했다.

또한 주력수출산업 저탄소화, 기업 간 동반성장 견인, 기후위기 대응 경영 실천 등 각 전략방향에 대한 통합 확산기 중점 추진 분야를 구체화했다.

2. ESG금융과 친환경경영

수은은 국내 대표 외화차입기관으로서 ESG채권 발행시장을 선도하면서 ESG금융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그린본드를 발행한 후 꾸준히 ESG채권을 발행해 왔다. ESG전략과 목표를 수립한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그린본드 18건, 지속가능채권 4건, 블루본드 1건, 소셜본드 1건 등 24차례에 걸쳐 외화약 142억 달러 및 원화 3,500억 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은은 적극적인 ESG금융 지원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경제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 먼저 친환경사업에 대한 중장기 금융지원 목표(2021~2030년 중 총 155

조원 이상)를 설정하고 에너지 구조 재편,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 핵심산업 육성 등에 친환경금융을 제공했다. 또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중장기 금융지원 목표(2021~2030년 중 총 65조 원 이상)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장, 고용창출, 상생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사회적금융을 제공했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ESG금융 지원액은 각각 친환경금융 95.6조 원 및 사회적금융 32.8조 원을 기록했다.

수은은 친환경경영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21년 ESG전략 수립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관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했으며, 2021년 5월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를 선언했다. TCFD 지지 선언 이후 2023년부터 TCFD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기후리스크 관리내용을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등 4개 항목으로 나누어 매년 공시하기 시작했다.

TCFD에 이어 2023년 4월 수은은 금융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금융배출량)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탄소회계금융협의체(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에 가입했다. 이후 2023년부터 금융배출량을 측정·모니

터링해왔으며, 2024년 11월에는 금융배출량 측정 지침 개정에 따라 PCAF 회계표준 개정사항을 측정모형에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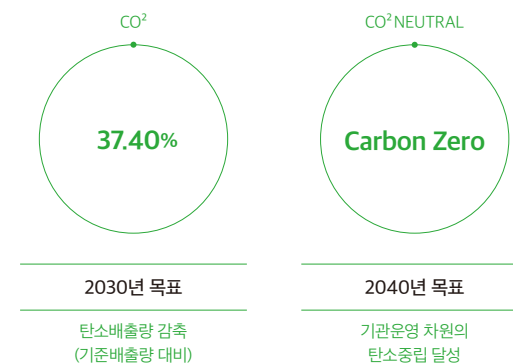
이즈음 탄소감축 목표도 조정했다. 2024년 정부의 개정 지침에 부응해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7.4%의 탄소배출량 감축,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의 새로운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은은 본점 내 빙축열 냉방과 태양광시스템을 운영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왔다. 친환경 차량도 적극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총 보유 차량의 62% 이상을 저공해 차량(전기차 및 하이브리드)로 운영했다. 특히 2025년 6월 개소한 IT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열시스템, 태양광시스템, 에너지 고효율 장비 도입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1++등급),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을 취득했다.

3. 사회공헌활동

수은의 사회공헌활동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과 급여끝전 적립사업이 시작이었다. 설립 초기부터 임직원 개인활동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기후원을 시작했으며, 급여끝전은 매년 연말 불우이웃 성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했다.

봉사활동의 개념이 정착한 시기는 2000년대 중반이었다. 2005년 4월 수은은 ‘수은나눔봉사단’을 창단하고 노숙자 무료급식, 무의탁 아동 돌보기, 취약계층 연탄배달, 글로벌 봉사활동 등 본격적인 사회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단 창단과 함께 2005년 홍천 성수리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일손돕기·의료봉사의 농촌 봉사활동도 전개했다. 이후 1사1촌 봉사는 1사1병영(육군 5군단), 1사1홈(그룹홈 ‘가족’), 개도국1사1촌(캄보디아 붓땡마을), 1사1산(강화도 마니산) 등으로 발전했다.

수은 탄소감축 목표





2022.08.22 몽골 도시빈민 게르 지원 희망씨앗 글로벌 봉사활동



2013.05.24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창단식

수은의 사회공헌 체계는 2010년대 들어 재능기부, 전담조직 신설, 후원금 확대 등을 거치며 더욱 고도화됐다. 먼저 2010년 7월 수은은 임직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프로보노 봉사단’을 창단하고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본격 나섰다. 이후 매년 10~17명의 봉사단원이 사회적 기업을 위한 경영자문, 인사노무, 마케팅, 외국어 번역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2012년 사회공헌 전담조직의 신설은 수은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수은은 후원사업과 수은나눔봉사단을 통합한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업무특성에 맞게 후원대상을 ‘취약계층 자립지원’, ‘다문화가정, 탈북민 등 신 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 ‘글로벌 사회공헌’으로 분류해 각 분야별 후원한도와 후원 방식을 달리 운영함으로써 수은만의 사회공헌 정체성·차별성을 확보했다.

2013년 5월에는 희망씨앗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대학생봉사단을 창단했으며, 곧이어 7월 희망씨앗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은 사회공헌 브랜드를 대외에 널리 공개했다. 이즈음 급여결전 후원사업도 진화했다. 급여결전 이외에도 ‘사랑의 모금함’을 설치하고 거둬들인 후원금에 임직원 자율기부액을 더해 이를 희귀난치성질환 후원기금으로 활용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은은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에 부응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활동에 집중했다. 2018년부터 사회책임조달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생산품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 2019년에는 일자리펀드, 일자리기업 협약보증, 사회적 가치 연대기금,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섰다.

2020년대 초 코로나19 때는 피해기업 지원,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했다. 2020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했으며, EDCF 역시 코로나19 긴급대응차관을 신설하고 개도국에 보건의료물품을 제공했다.

취약계층 긴급 지원활동으로는 쪽방촌 거주민과 독거노인 생필품·방역물품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의 소상공인 물품구매, 단체 헌혈 참여 등을 실시했다. 2021년에는 취약계층·개도국 외에도 코로나19 방역 현장근무 의료종사자에게도 방한용품과 건강식품을 지원했다.

이즈음 수은 사회공헌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건강한 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도심 숲 조성사업 지원이었다. 2021년 희망의숲 1호(안양천)를 시작으로, 2022년 2호(도봉구), 2024년 3호(여의도 무궁화정원), 2025년 4호(도림천변 어울림숲) 조성사업을 지원했다.



2024.05.20 희망의숲 3호 무궁화정원 준공식

수은 사회공헌 관련 주요 활동(1976~2026)

시기	내용
197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급여결전 적립으로 연말 불우이웃 성금 지원
2005	‘수은나눔봉사단’ 창단, 1사1촌 농촌 봉사활동
2010	‘프로보노 봉사단’ 창단
2012	사회공헌 전담조직 신설, ‘희망씨앗 프로그램’ 도입
2013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창단, 희망씨앗 홈페이지 개설, 사랑의 모금함 설치
2018	사회책임조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2019	일자리창출 펀드 조성
2020	코로나19 극복 사회공헌활동 전개
2021	코로나19 방역 의료종사자 지원, 희망의숲 1호(안양천) 조성 지원
2022	희망의숲 2호(도봉구) 조성 지원
2024	희망의숲 3호(여의도 무궁화정원) 조성 지원
2025	희망의숲 4호(도림천변 어울림숲) 조성 지원
2026	창립 50주년 기념 이음정원 조성(서울국제정원박람회), ‘동행의 발걸음 기부런’ 캠페인 진행, 국립공원 식재 봉사

희망의숲 조성과 함께 2024년 수은은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을 확대했다.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부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했으며, ESG 컨설팅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글로벌 ESG 규제 강화 아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제고했다. 특히 지난 50년간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에 힘입어 2024년 수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장 수상, 적십자 아너스 클럽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5년에는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동호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경기 관람 등 정서 교류의 기회도 넓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대한적십자사 표창장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성수리 마을 지원을 확대하고, 홍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특산품을 구매,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1사1지자체 사업에도 동참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6년 수은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행의 발걸음 기부런 캠페인을 실시해 임직원의 사회공헌 참여를 독려하고 나눔의 의미를 확산했다. 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해 서울숲 내 ‘50주년 이음정원’을 조성하고 서울시민과 함께 창립 50주년의 의미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공단과 연계한 월악산 식재 봉사활동을 통해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에 기여했다. 취약계층 지원, 시민친화형 녹지 조성, 생태보전 봉사활동 참여 등 ESG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해보다 돋보였다.

제5절

디지털금융

1. IT부문의 성장과 발전

수은 IT 업무의 출발은 1977년 8월 신설된 업무개선실(현 정보시스템부)이었다. 이후 조직의 명칭은 전산화, 정보화, IT시스템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산실, 전산정보실, 전산정보부 등을 거쳐 2013년 정보시스템부로 변경됐다.

초기 수은은 IT 업무를 외부시스템에 의존했다. 1977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8년 동안 한국전자계산소(현 KCC정보통신) 등 외부용역기관의 시설을 이용해 기초적인 일괄처리(Batch) 방식으로 일부 업무의 개발과 처리를 진행했다. 그 기간의 업무처리 수준 역시 여신 업무를 비롯한 급여 등 기본적인 관리 업무의 계수처리에 머물렀다. 이후 조금씩 부분 전산화가 이뤄져, 1984년 4월 여신 업무, 계리·결산 업무를, 1985년 10월에는 자금 조달, 원화자금 운용, 환거래 등의 업무를 전산화했다.

수은의 본격적인 전산화는 1990년대 자체시스템 도입이 시발점이었다. 1990년대 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을 도입해 여신종합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수은의 전산화업무는 실시간 온

라인 전환을 가속화했다. 또 다양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능을 탑재하면서 정보화에도 속도가 붙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법무정보시스템, 자금종합시스템을 비롯해 예산·자산·급여 등 일반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 시기 수은은 해외투자정보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94년 7월 국내기관 최초로 하이텔, 천리안 등 외부 통신망을 통해 국가별 투자환경, 투자절차, 성공사례 등 해외투자정보를 제공했다. 1999년 5월에는 해외투자통계 업무와 동향분석 업무를 은행연합회에서 이관 받



1977.08 수은 최초 IT 업무시설, 업무개선실

아 고객중심의 활용체제를 구축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웹기반 기술의 발전과 IT기술의 발달로 사회전반에 정보화가 가속화됐고,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수은의 정보시스템도 더욱 진화했다. 2001년 6월 IT부문의 장기발전계획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은은 같은 해 11월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웹 방식의 기업정보포털(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EIP) 구축에 목적을 뒀다.

시스템 개발은 3단계로 진행했다. 먼저 고객종합관리와 국제협력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고객 마케팅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이어서 여신, 자금 등 주요 계정계 업무를 개발했으며, 그다음 여신통계, 리스크관리, 수지분석 등 정보계 업무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03년 4월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수은은 2004년 외환거래시스템 개선, 2005년 해외투자통계 분석업무 수행체계 마련, 2007년 리스크관리시스템 선진화, 2009년 남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10년 기금회계시스템 구축과 ODA 통계분석시스템 확대 개편 등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갔다.

2010년대 접어들어서 해킹, 디도스(DDoS) 공격 등이 빈번해지자 사이버보안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수은은 저장문서 암호화 체제를 도입하고 문서의 생산·유통 과



2003.04.18 차세대 정보시스템 가동식

정에서 정보유출을 사전 차단하는 보안체제를 구축했다.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디도스 공격 대응장비를 갖춘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설치했다.

2. 디지털금융의 진전

2003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수은은 IT시스템의 재구축을 모색했다. 모바일,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소통·협업, 업무전문화 그리고 고도화된 정보 분석·활용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2년 '중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新 EXIM 정보시스템 구축추진반을 구성하고, 여신·경협·남북·자금·회계·인사·예산·통계·리스크 등 전행 업무시스템 재구축 작업을 본격 추진했다.

먼저 계정계 여신·고객·경협·남북·자금·재무 등을 대상으로 논리설계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2016년 4월까지 계정계 시스템 물리설계, 진행 표준체계 수립, 개발용 IT인프라 도입 등 상세설계를 완료했으며, 이어서 계정계 시스템의 단위테스트와 함께 2016년 9월까지 정보계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그다음 6개월간 통합테스트를 실시했고, 2017년 4월 마침내 新 EXIM 정보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디지털전환이 과제로 떠오르면서 수은은 모바일서비스 개선과 디지털워크플레이스 구축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2018년 5월 모바일 메일, 모바일 e-HR 등 모바일 EXIM을 오픈했으며, 2020년 4월에는 EXIMNET 포털 고도화, 지식센터 개발을 통한 지식 큐레이션, 지식의 근황을 알려주는 워크플레이스, 포털과 워크플레이스의 유기적 플랫폼, 사용자 편의성(UX)과 사용성이 고도화된 디지털워크플레이스 구축



2021.06.09 고객 디지털 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

을 완료했다.

2021년은 수은 디지털전환의 원년이였다. 2021년 7월 디지털·IT업무 기획·총괄의 디지털금융단과 함께 디지털전환추진반을 신설하고 디지털금융 체제 본격 이행에 들어갔다. 먼저 디지털 기술혁신과 금융업무 처리의 비대면 추세에 부응해 기업금융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기업금융 전용 플랫폼 메인 페이지

비대면 디지털 방식의 기업금융플랫폼은 승인·약정·집행·사후관리 등 기업금융 업무 전 프로세스에 비대면 신청·서류제출·약정체결·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4월 본격 가동됐다. 이후 수은은 실물서류의 65% 이상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약정체결과 제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금융부문 디지털전환의 모범사례로서 가동 첫해 고객 가입률이 45.1%를 달성하는 등 고객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

그 외 수은은 디지털전환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기술 적용을 통해 2021년 신 기록관리시스템(RMS), 인사 챗봇, 2023년 PF 특화 AI번역, 지능형 AI 챗봇시스템, 2024년 신 통계정보시스템 등 업무 디지털화와 효율화를 지속해 나갔다.

디지털전환과 함께 2020년대 수은 IT부문의 또 다른 큰 변화는 데이터센터 신축과 이전이었다. 수은은 기존 본점 4층 주컴퓨터실의 공간적 한계를 해소하고 노후장

비 교체의 IT인프라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IT센터 신축과 이전을 추진했다. 용인 인재개발원 내에 9,877m²의 부지를 확보하고 IT인프라 구축 사업자를 선정한 데 이어, 2023년 1월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5년 6월 지상 3층 규모의 전산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업무동을 갖춘 IT센터 신축과 이전을 완료했다.

차세대 디지털기술 기반 IT센터 신축을 계기로 수은은 IT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디지털 업무 연속성 개선과 고객기업에 대한 안정적 금융서비스 제공 토대도 마련했다. 특히 AI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실행·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의 PaaS(Platform as a Service) 플랫폼을 도입해 더욱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장애예방이 가능한 IT자산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수은은 AI에 기반한 지능형 워크스페이스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소모적인 서류 검토 등을 줄이고 사업발굴·고객상담·여신심사 등 핵심 심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신심사에 AI를 활용한 서류심사 및 고객기업 분석 등을 도입해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해외투자 신고 프로세스에 대한 AI 가이드 도입 등을 통해 고객기업의 편의성도 제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협업센터, AI 비서, 대화형 검색, 회의록 자동화, 문서 초안 생성 등 5대 기능을 적극 활용해 전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IT 업무 주요 변화

시기	내용
1977	최초 IT조직, 업무개선실 신설
1984	여신업무, 거래·결산업무 전산 개발
1985	자금조달, 원화자금 운용, 환거래 전산 개발
1990년대 초	여신종합시스템 개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도입)
1993~1995	법무정보시스템, 자금종합시스템, 예산·자산·급여 등 일반관리시스템 구축
1994	외부 통신망으로 해외투자정보 제공
2003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2004	SWIFT 자금결제시스템 도입
2005	해외투자통계 분석업무 수행체계 마련
2007	리스크관리시스템 선진화
2009	남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10	기금회계시스템 구축, ODA 통계분석시스템 확대 개편
2012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설치
2017	新 EXIM 정보시스템 구축
2018	모바일 EXIM 오픈
2020	디지털워크플레이스 구축
2021	디지털금융단, 디지털전환추진반 신설
2022	디지털 기업금융플랫폼 구축
2025	IT센터 신축

제6절

자산관리

1. 본점과 인재개발원

1976년 설립 당시 수은은 대우센터빌딩 일부를 임차(약 1,980m²)해 업무를 시작했다. 본점 임대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인원 증가에 따른 공간 협소, 임대료 부담, 무엇보다 임직원 복리증진과 국제금융기관으로서 공신력 제고 등의 명목으로 임대 본점 5년 만에 본점 신축을 추진했다.

1981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여의도동 16-1 소재 사유지 2,756평을 구입하고, 1982년 1월 건축추진위원회 발



1985.09.17 본점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식

족과 함께 총무부 내에 건축추진반을 구성했다. 이후 정림건축을 설계사로,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1982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년 10개월 만인 1985년 9월 본점 건물을 완공했다.

수은은 본점 신축에 이어 연수시설 확보를 추진했다. 1984년 12월 동산토건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중리 39번지의 6필지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 913.14m² 규모의 인재개발원을 건축했다.

이후 사세 확장과 함께 다양한 연수가 시행되면서 기존 시설로는 늘어나는 연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1993.06.01 연수원 증축공사 준공 및 개원식

이 됐다. 수은은 1991년 2월 인재개발원 증축·보수계획안을 확정된 후 건축추진반을 구성하고, 기존 건물에 2층을 증축하는 한편 운동장과 본부석, 관람석도 설치해 1993년 8월 1차 증축을 완료했다.

본점 역시 신축 14년이 경과하면서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1999년 2월 수은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전면적인 보수를 결정하고 종합적인 시설보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현대건설에 종합진단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12월 성능개선공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서 한국종합건축을 설계자로, 창조종합건축을 감리자로, LG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 2003년 6월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이즈음 인재개발원은 2차 증축을 추진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연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3년 11월 구조변경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이후 설계·감리자로 한국종합건축을, 시공사로는 삼성에버랜드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 2004년 10월 2차 증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총 3단 규모의 인재개발원이 완성됐다. 3,442㎡의 면적에 1단에는 주말농장과 주차장을, 2단에 축구장을, 3단에 잔디광장과 테니스코트를 갖추었다. 연수시설 또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관과 지상 4층의 별관을 완비했다.

본점은 전면 리모델링 이후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했다. 2006년 6월 정문 조정시설 개선과 건물주변 환경개선을 실시했으며, 2008년에는 10층 옥상을 일부 증축해 8층에 있던 체육실을 이전했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11년 본점 1층 업무공간을 어린이 집으로 리모델링했다.

그러나 전면 리모델링 이후 다시 8년이 경과하면서 외부 건물인 중소기업중앙회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등 사무공간 부족현상이 한계치를 넘어섰다. 2011년 7월 수은은 본점 사무공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본점 증축을 확정했다. 이후 본점 건물 증축추진 실무자문위



2014.07.01 본점 증축공사 준공식

원회 구성, 각종 인·허가 문제 해결, 설계자·감리자·시공사 선정을 거쳐 2012년 12월 착공에 들어갔고, 착공 1년 6개월 만인 2014년 7월 본점(신관) 증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본점은 대지면적 9,110㎡에 연면적 4만 5,627㎡의 지하 3층 지상 10층의 현대식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변모했다. 빙축열시스템, 지열시스템, 태양열시스템 등 친환경설비에 자동감지·원격조작시설은 물론 CCTV, 적외선 외곽감시시설, 도난방지시설 등의 일괄감시시스템도 구축했다. 그 외 수은은 본점 증축 이후 2015년까지 본점 로비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해 신·구관 안내데스크를 통합하고 고객접견실을 마련했으며, 2018년 어린이집 증축공사도 완료했다. 또 공간이 협소해 이용에 불편을 겪던 본점 체육실 확장공사를 실시해 직원

본점 및 인재개발원 신·증축과정

시기	내용
1976	대우센터빌딩 일부 임차, 본점으로 이용
1981.12	본점 신축부지 확보
1984.12	연수원 부지 확보(용인), 인재개발원 신축
1985.09	본점 신축 완공
1993.08	인재개발원 1차 증축
2003.06	본점 전면 리모델링
2004.01	인재개발원 2차 증축
2014.07	본점(신관) 증축

복지도 증진했다. 2021년에는 본점 1층 일부 공간을 고객상담실(서울회의실 등)과 금고미술관으로 조성했다. 행사·회의·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내외 고객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IT센터 신축

그동안 수은의 데이터센터 기능은 본점 4층에 위치한 주컴퓨터실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계속된 장비 추가로 인한 서버실의 포화, 층고·하중·전력 등 일반 사무용 건물의 보안 취약성, 그리고 다수의 IT장비로 인한 높은 전력 소비량 등으로 본점 주컴퓨터실은 갈수록 데이터센터로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은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공간적 한계를 해소하고자 2019년 데이터센터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데이터센터 이전 후보지 물색에 나섰고, 2020년 2월 예산, 규모, 신축부지 활용성 등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용인 인재개발원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곧이어 LG CNS를 개념설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0년 6월부터 기반시설·설비용량 산정 등의 개념설계도 작성에 돌입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그 후속작업으로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이전방안과 IT인프라 구축계획도 수립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전담반 구성과 함께 신축공사 착공에 이어, 2023년 7월에는 데이터센터이전추진반을 신설했다.

착공 후 공사를 진행 중이던 2025년 2월 인근 주민 및 관할지자체(용인시청)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센터 대신 IT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IT센터 건물에 대한 용인시청의 사용 승인을 얻고 데이터센터 이전작업을 실시했으며, 마침내 착공 2년 6개월 만인 2025년 6월 이전 완료와 함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



신축된 IT센터 전경

적 1만 1,458㎡ 규모의 IT센터(전산동 및 업무동)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수은은 건축과정에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일체형 공조, 소음·매연 저감 설비 등을 도입해 IT센터를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환경친화형 시설로 건축했다. IT장비 역시 주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150여종을 최신 기종으로 교체했다. 190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전력·통신 이중화 구성으로 안전성·확장성·가용성을 대폭 강화해 무중단·무장애 운영 기반을 갖췄다. 특히 실시간 성능·장애 AI모니터링과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플랫폼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IT자원의 운용과 선제적 장애 징후 탐지·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IT센터 신축·이전 과정

시기	내용
2019	데이터센터 이전 추진계획 수립 및 신축 부지 선정
2020.02	데이터센터 신축 기본계획(안) 이사회 의결 (부지 확정, 초기 규모/예산 수립)
2020.06	신축 데이터센터 개념설계 사업자 선정(LG CNS) 및 개념설계 착수
2021	건축설계 실시
2022	이전방안 및 IT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2023.07	데이터센터이전추진반 신설, 신축공사 착공
2025.05	용인시청 사용 승인, 이전 착수
2025.06	IT센터 신축 이전 완료

제1절

정책결정기구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수은법」과 그 시행령, 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지난 50년 동안 이사회 상위 기구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1969년 7월 「수은법」 제정 당시에는 이사회만 있었고, 운영위원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1974년 12월 1차 「수은법」 개정 때 운영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 수은의 업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방향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통상 정부 관련 부처 공무원, 유관 기관 인사와 은행 측 인사로 이뤄졌으나,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2008년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본격화됐다. 이후 수은 은행장, 재정경제부 장관, 외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인, 한국은행 총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그 집행간부 또는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각 1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해 수출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1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그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그리고 민간 운영위원 2인 등 총 14명의 구성체계를 갖추게 됐다.

의장은 수은 은행장이 맡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미리 지정한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1976년 수은 설립 이래 2025년 말까지 296회 개최돼, 7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976.07.02 제1차 운영위원회



1997.12.29 제2차 개정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난 이사회

2. 이사회·경영위원회

이사회는 수은 최초의 정책결정기구로서, 1969년 7월 「수은법」 제정과과정에서 그 설치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1974년 12월 1차 「수은법」 개정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사회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다 1976년 7월 수은 설립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수은 경영진으로 구성된 정책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7년 12월 제2차 「수은법」 개정에서 다시 이사회 설치 규정이 마련됐다. 1980년대 접어들어서는 수은 조직의 안정과 함께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대거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관되면서 이사회가 수은 업무를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났다.

이후 이사회는 정관·업무방법서의 개정, 업무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결산, 이익금·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등 은행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 왔다. 그 구성은 은행장(의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4인)로 이뤄지며,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06년 8월 수은은 이사회 운영 효율성과 업무처리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의결기구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은행장, 전무이사, 본부장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는 출범 초기 이사회 권한을 위임받아 기구조직직제분과, 예비비 사용, 주요 계약 체결 변경 해약, 자산 감가상각 또는 가격변경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2009년 7월에는 은행 경영진 반에 관한 중요사항과 방침만을 남겨둔 채 기타 일반사항을 대폭 이관하는 등 경영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의결사항이 수차례 조정되면서 경영위원회 역할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다. 2010년 7월 직제분과규정, 취업규칙을, 2013년 3월에는 인사·보수·복지 관련 규정 역시 이사회로 다시 이관했다.

수은은 2025년 기준 총 15회의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의 활동내역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또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법·재무

등 필수 지식과 금융감독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3. 기타 주요 위원회

경영위원회 외에도 수은은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 ESG위원회 등 정책결정기구를 두고 은행 경영 전문분야별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왔으며, 인사위원회, 국별신용도평가위원회 등 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해 행내 의사결정을 지원해왔다.

1998년 9월 설치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은행 리스크 관리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은행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환율·금리 등 경제전망에 따른 리스크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왔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도 가능하다.

구성원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2인을 포함해 총 3인이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초기에는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3인으로 운영하다가, 2013년 12월부터 투명성·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비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는 위원회의 과반수를 비상임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마련했다.

2021년 9월 신설된 ESG위원회는 ESG경영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매년 ESG경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전략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계획 심의 등을 수행해 왔다.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도 가능하다.

구성원은 은행장, 비상임이사 2인을 포함해 총 3인이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과반수를 비

주요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원	실무부서	개최주기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 상임이사 (외부) 비상임이사 2명 (간사) 리스크관리부장	리스크관리부	분기 1회
ESG위원회	(내부) 은행장 (외부) 비상임이사 2인 (간사) ESG경영부장	ESG경영부	반기 1회

상임이사로, 위원장 역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인사위원회는 수은 설립과 함께 설치된 은행장 자문기구로서 인사제도, 주요 직원 임면, 직원 포상·징계, 연수계획 등 인사와 연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해 왔다.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본부장,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내용을 은행장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977년 9월 설치된 국별신용도평가위원회는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대상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은행장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상국가의 정치·경제의 안정성, 외채상환능력, 경제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수은 여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구성원은 국별신용도평가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국별신용도평가담당 부서장, 여신기획담당 부서장, 리스크관리담당 부서장, 경험기획담당 부서장, 국별 신용도평가 요청 부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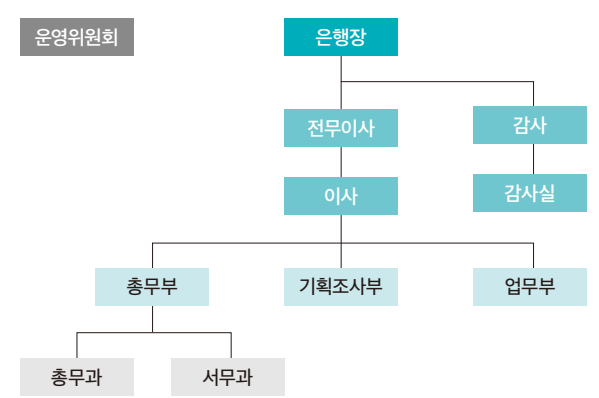
본점 조직과 직제

1. 수출입금융 지원체제 구축(1976~1989)

수은은 설립 당시 업무부, 기획조사부, 총무부, 감사실의 3부 1실에 임원 4명, 책임자급 34명, 남녀 행원 22명, 서무직 20명의 총 80명 임직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했다.

직원의 경우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전문직, 일반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전기·전화·기관·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무직, 그리고 법률·의무·세무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별정직으로 이뤄졌다. 직제에서는

설립 당시 조직도



각 부 또는 실에 1급 또는 2급 직원인 부장과 실장을 뒀으며, 기획·인사·서무 관련 부서에는 부서 업무분장에 따라 과 제도를 두고 3급 직원으로 과장을 보임했다.

설립 당시 본점 조직의 특징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연불수출지원체제였다. 이후 조직이 확대되고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력직원을 특별채용했으며, 설립 이듬해인 1977년 1월에는 수출보험 업무를 인수하면서 대한재보험공사 직원 20명을 신규 직원으로 편입했다.

수은의 주요 업무인 수출입금융 관련 업무는 설립 시 업무부가 담당했다. 업무부는 업무개시와 함께 연불수출금융 지원에 본격 나섰으며, 1977년 1월부터는 심사부와 금융부로 분리돼 업무량 분산과 효율적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이후 대출심사 업무가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대출과 외국금융기관 전대자금대출 업무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1, 2부가 분리됐다.

경영부문의 핵심은 기획조사부였다. 설립 당시 기획조사부는 기획·자금·조사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부서가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처

리 지연 현상마저 나타나자, 1977년 1월 기획조사부가 업무부와 해외투자조사부로 분리됐다. 이때 처음으로 업무부 내에 자금과가 설치됐다. 이후 연불수출 증대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운용, 해외 자금조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78년 2월 자금과를 자금부로 분리 개편했다. 이와 함께 수출관련 계약서의 법적심사 업무 역시 늘어남에 따라 업무부 내 법규과도 법규실로 분리 개편했다.

자본재 연불수출, 직접대출, 전대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에 이어 1980년대 이후 해외 투자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수은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거듭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수탁을 계기로 1987년 6월 경제협력기금부를 신설했다.

1980년대 수출입금융부문의 변화는 조직의 확대와 업무의 세분화였다. 업무량 증가에 따라 1985년 9월 금융부를 금융1, 2부로 분리했으며, 1989년 2월에는 지원대상 품목 확대, 수입자금·해외투자자금 대출수요 증가 등 업무여건 변화에 따라 여신부서의 업무를 자금별로 재조정했다.

경영부문의 특징은 업무의 효율화·전문화와 함께 해외투자조사 업무의 강화였다. 먼저 1982년 3월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 정책에 부응해 법규실을 임원부속실과 통합하는 등 문서부로 개편했다가, 1986년 4월에는 문서부를 다시 법규실과 서무부 소속 임원부속실로 분리해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했다.

조사 업무 강화 차원에서는 1988년 11월 해외투자조사부를 해외투자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소 내에 해외투자조사부, 해외투자정보센터를 뒀다. 이를 계기로 부서장 직제가 부장, 실장, 연구소장으로 확대됐다. 이어 수은은 1989년 2월 해외투자연구소 조직을 한 차례 더 확대 개편했다. 해외투자조사부를 해외조사부와 국별조사부로 분리하고 2부 1실 체제로 전환했다.



1988.12.05 해외투자연구소 헌판식

2. 업무·조직 확대와 효율성 제고(1990~1996)

1990년대 본점 조직은 자금공급 규모 확대, 업무전산화 추진, 플랜트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과 해외투자 지원 확대에 힘입어 크게 확대됐다. 남북협력기금 수탁에 따라 1991년 2월 남북기금부가 설치되고 또 다른 정부 수탁 업무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개도국 차관요청 사업 증가에 따라 1991년 1월 기존 경험기금부가 1, 2부로 확대 개편됐다. 한편으로 1992년 7월 수출보험 업무가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직원 130여 명이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옮겨갔다. 직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95년 3월 팀제가 도입되고, 1996년 2월 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과가 부서 내 팀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수출입금융부문은, 초반에는 기능 확대와 전문화를, 중반부터는 효율화를 진행했다. 1990년 2월 여신제도 개선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여신총괄부를 신설했으며, 전문화 과정에서는 1991년 1월 심사1, 2부와 금융1, 2부를 선박금융부, 산업설비금융부, 해외투자금융부, 수입금융부 등 4개 부서로 재편했다.

이후 1991년 11월 여신총괄부의 명칭을 여신기획부로 변경했으며, 1992년 8월에는 여신기획부 산하에 기술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여신기획부는 1994년 2월 폐지됐다. 한편, 수은은 이때 부서의 전문화를 더욱 가속화했

다. 산업설비금융부와 해외투자금융부를 지역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산업설비금융1, 2부, 해외투자금융1, 2부로 개편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부서를 통합했다. 1995년 2월 해외투자금융1, 2부를 해외투자금융부로 통합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지역별 구분의 산업설비금융1, 2부를 지원품목에 따라 산업설비금융부와 일반기계금융부로 재조정했다. 이즈음 기획·통할 기능의 여신개발실이 부활되면서 그 산하에 중소기업지원팀이 신설됐으나, 이 팀은 설치 6개월 만에 폐지됐다. 그러나 1996년 2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부응해 여신개발부 내에 중소기업지원팀이 재설치됐다.

자금·경영부문도 1990년대에 기능 확대에 이어 효율화가 이뤄졌다. 1991년 1월 외화자금 조달 규모 증가와 전문적인 국제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금융부를 신설했으며, 1995년 8월에는 역외자금 조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제금융부 내에 역외금융팀을 설치했다.

1990년대 초반 기획·통할과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됐다. 1992년 3월 기획부의 명칭을 종합기획부로 변경하고, 그 산하에 홍보실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해외투자연구소의 해외투자정보센터를 해외투자정보부로 확대 개편했다. 1994년 2월 수은은 기획·통할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경영전반에 관한 기획 업무를 통할하는 경영기획실을 은행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종합기획부를 경영총괄부로 개편해 그 산하에 총괄과·제도과·예산과·국제과를 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경영부문 효율화를 진행했다. 1995년 2월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경영전략팀과 해외투자정보팀을 신설했으며, 경영총괄부의 명칭 또한 부서를 기능을 감안해 종합기획부로 재변경했다. 그러나 신설 1년 만에 해외투자정보팀이 폐지되는 등 1996년 2월 이후 경영효율화가 더욱 가속화됐다.



1995.02.10 여신개발실 신설

3. IMF 대응체제 구축과 본부제 도입(1997~2007)

성장가도를 달리던 수은은 IMF 외환위기를 맞아 1998년 6월과 1999년 1월 2차례의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조직 규모를 48%나 축소했다. 1999년 1월 명목상 팀이지만 사실상 과 형태로 운영되던 기획부, 경영지원실, 인사서무부, Risk&ALM부 내의 팀을 과로 전환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구조조정 시기에 부실여신 급증에 대비해 여신총괄부에 특수여신관리팀을 신설했으며, 역외금융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사업금융부에 해외여신관리실도 설치했다. 그 와중에도 중소기업지원팀을 중소기업수출금융부로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했고, 국내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어음 재할인 업무를 시행하면서 자원금융부에 무역금융지원팀을 신설했다.

경협조직도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1997년 1월 경협기획팀을 경협기획실로 확대 개편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맞아 경협기획실을 경협지원부 소속으로 전환했다.

자금부문에서는 1998년 1월 역외금융실을 폐지하고, 1998년 6월 위험관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금부를 해체하고 Risk&ALM부를 신설했다. 경영부문에서



1998.06.04 자원금융부 무역금융지원팀 개설 기념행사

는 1998년 1월 인력개발부와 총무부를 인사서무부로 통합했다. 연구·조사 업무의 경우 1998년 1월 해외투자 연구소를 해외경제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산업경제실과 개도국신평가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빠른 시기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 하면서 2000년 이후 수은의 조직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수출입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조직의 규모가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특히 본부제가 도입되면서 업무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2002년 1월 수출입금융부문에 본부제가 도입되면서 팀제운용의 기본요건을 담은 팀제운용요강이 제정됐다.

수출입금융부문은 IMF 외환위기 극복 이후 먼저 전문화를 도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지원을 강화했다. 2000년 1월 무역금융부, 국제금융부, 구매자금융부의 전대자금 관련 업무를 무역금융부로 일원화했으며, 2001년 2월에는 해외건설사업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건설보증팀·해외리스크전략팀 신설, 금융자문 용역 업무(Export Credit Agency Service: ECAS)를 추가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수출입금융부문은 본부제 도입의 선도적 역할도 수행했다. 2002년 1월 핵심역량 강화와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해 기존 여신부서를 연불수출금융본부·무역금



2011.07.26 신성장산업금융실 회의

융본부·중소기업금융본부·해외투자금융본부의 4개 본부체제로 개편했다.

이후 수은은 2차례 본부제 개편을 통해 수출입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2004년 1월 본부제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본부와 해외투자금융본부를 통합하고 연불금융본부, 무역투자금융본부, 중소기업금융본부의 3본부 4부 3실 체제로 변경했다. 2005년 5월에는 수출입금융부문을 수출입금융 1, 2본부로 재조정했다.

본부제 정착과 함께 업무 전문화·세분화 그리고 포페이팅과 수출팩토링 업무 증가에 대비해 2005년 10월 외환업무실을 무역금융부로 확대 개편했으며, 2007년 1월에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강화 정책에 부응해 자원개발금융실을 신설했다. 특히 이 시기부터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성장산업금융실을 신설하고 지식문화 콘텐츠, 방위산업, 환경산업분야 등에 금융지원을 본격화했다.

본부제는 수출입금융에 이어 경협·남북협력기금으로 확산됐다. 경협조직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계기로 2002년 5월 경제협력기금부와 경협기획실을 경제협력기금1, 2부로 개편해 업무수행의 효율성 확보를 추진했다. 본부제는 2004년 1월 남북협력기금에도 적용됐다. 경제협력본부 아래 경협1, 2실을 뒀고, 남북협력기금 역시 남북협력본부 아래 남북협력1, 2실을 뒀다.

본부제 도입 이후 경협·남북협력본부는 2005년 5월



민원전담부서로 지정된 EXIM 컨설팅센터

경협기획실, 협력기획실을 각각 신설하는 등 기금사업의 기획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경협본부는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체제 개편에 부응해 2005년 5월 공적개발원조 특별대책반, 2007년 1월 경협개발실을 신설하는 등 개발금융체제 전환을 도모했다.

자금·경영부문 역시 IMF 위기극복 이후 활력을 되찾았다. 자금조직의 경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자금관리실→자금부, 국제투자금융실→국제금융부로의 신설과 승격을 거치면서 원화·외자조달 구조의 이원화 체제를 갖췄다. 경영부문 또한 국제협력실 신설(2000), 지식경영 추진(2003), 연수원 리모델링 추진반 구성(2004) 등 IMF 외환위기 극복 이후 조직을 확대해나갔다.

수은은 수출입금융, 경협·남북협력기금에 이어 2005년 5월 자금·경영부문에도 본부제를 전격 도입하며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완료했다. 기능별 통합관리와 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획, 관리, 자금을 기준으로 경영기획본부, 자금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경영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2005년 7월 여신총괄부의 EXIM 컨설팅센터를 민원전담부서로, 감사실을 민원사무통제부서로 각각 분리 지정했다. 자금부문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2007년 12월 금융공학팀을 국제금융부 내에 신설했다.

4. 사업개발 추진과 조직 슬림화 단행 (2008~201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은 조직은 다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2007년 기준 7본부, 13부, 14실, 1연구소 체제에서, 2009년 본점의 조직이 7본부, 1단, 16부, 6실, 1연구소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 해외프로젝트 수주 확대, 해양·선박금융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이 신설됐고, 금융투자 업무도 새롭게 도입돼 지속적인 조직 확대 수요가 발생했다.

이즈음 직급체제와 인력운영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009년 8월 연공위주의 다단계 향아리형 인력구조를 역량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고, 상위직 비율 감축 등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부응해 행원·대리→과·차장→부부장→팀장→부장의 5단계 직급체제를 부서장급 보임의 G1, 팀장·부지점장·선임전문역의 G2, 책임전문역·전문역 보임의 G3 등 3단계로 단순화했다. 2013년 8월에는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른 통합 한국산업은행의 출범에 따라 2014년 12월 정책금융공사의 대외정책금융 관련 인력 29명을 새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 시기 수출입금융부문에서는 신성장산업 조직 확대, 자문·투자 업무 추가,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해양·선박금융 강화 등이 이뤄졌다. 우선 2010년 12월 신성장금융본부·신성장금융실을 신설하고 지식문화 콘텐츠, 방산, 고속철도 등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과정에서는 2012년 12월 기업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상생금융실, 히든챔피언사업실, 중소중견금융부를 설치했다. 2013년 6월에는 히든챔피언사업실과 상생금융실을 통합해 기업성장지원부를 신설했다.

해양·선박금융의 경우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에 부응해 2014년 8월 해양·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해양금

융본부로 분리 신설했다. 수은은 해양·선박금융을 강화하면서 재무건전성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 6월 리스크관리 조직을 리스크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그 산하에 기업개선단을 두어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 시기 수은은 자문·투자 업무를 추가하는 등 사업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2011년 7월 IPO, 증자, 회사채 발행,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M&A 등을 주관하고 자문하는 IB 업무를 신규로 취급하면서 금융자문과 금융주선 전담부서로 금융자문실을 신설했다. 이후 금융자문부(2012), 전략사업부(2014), 사업개발부(2015)로 부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금융자문·주선의 국제협력 업무를 추가했다. 한편 2014년 6월에는 투자 업무 추진 전담조직으로 투자금융실도 신설했다.

경협조직 역시 이 시기 크게 성장했다. 정부의 ODA 확대 정책에 따라 2010년 12월 경협사업부를 경협사업 1, 2부로 분리했고, 2011년 6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책·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협력본부를 경협기획 본부와 경협사업본부로 분할해 2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반면에 남북협력조직은 2009년 1월 남북협력1, 2실이 남북협력사업부로 통합, 축소됐다.

경영부문은 2009년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영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기획관리본부로 통합했다. 이후에는 전문화와 효율화가 계속 이어졌다. 2012년 준법감시팀 신설, 기술환경심의실·법무실·경영전략실의 독립에 이어, 사회공헌 업무를 홍보실로 이관하고, 홍보실을 경영지원부 소속에서 독립실로 전환해 홍보역량을 강화했다.

효율화 과정에서는 2013년 6월 경영전략실을 기획부로 통합했다. 2014년 6월에는 비전 2020 재정립을 계기로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사부, 홍보실 소속인 사회공헌팀, 운영지원팀을 합쳐 인사경영지원단을 설치했다. 해외경제연구소 역시 국별조사실과 산업투자조사실을 폐지하고, 지역연구1, 2팀, 경제연구팀, 산업연구팀

등 총 4개 팀으로 전환했다.

자금부문은 효율화와 기능 확대가 이뤄졌다. 2014년 6월 국제금융부를 자금부와 통합해 원화조달과 외화조달 업무를 일원화했다. 그 대신 국제금융부 내에 있던 외화운용팀을 확대해 국제투자실을 신설했다. 2015년 7월에는 자금부를 자금시장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업무 확대 및 전문화·효율화를 통해 지속 성장하던 수은의 조직은 2010년대 중반 글로벌 경기침체 가속화와 주요 지원산업의 부실화로 또 다시 구조개편을 요구 받았다. 결국 수은은 2016년 10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수은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후 조직 슬림화,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 ‘수은 혁신안’ 이행을 성실히 수행했다.

수출입금융의 경우 2016년 1월 기업금융1~3부를 1, 2부로 축소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단행했다. 2016년 11월에는 해양금융본부와 기업개선단을 통합해 해양·구조조정본부로 격상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강화했다. 또 심사평가부를 심사평가단으로 격상하고 여신 심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사업개발 업무에서는 사업개발부와 국별전략실을 통합해 신시장개척단으로 개편함으로써 수출입금융·EDCF 간 사업개발 기능을 일원화했다.

이후에도 조직 슬림화와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했다. 2019년 1월 해양·구조조정본부를 폐지했다. 그 대신 해양프로젝트금융부를 해양금융단 소속으로 전환해 해양산업 전반의 종합지원체제를 유지했다. 기업구조조정도 가속화했다. 기업개선부와 기업구조혁신실을 기업개선부로 통합한 데 이어, 2019년 7월 기업개선부를 기업구조조정단으로 격상해 대외협회의 시 협상력을 제고했다. 다만, 신성장산업 육성체제는 유지했다. 2019년 1월 신성장금융본부를 혁신성장금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성장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수은 혁신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ODA 확대

정책에 부응해 경협조직의 기능을 강화했다. 2016년 1월 경협총괄본부와 경협사업본부를 통합해 경제협력본부로 재편하기도 했으나, 2019년 7월 사업협력부를 분리해 사업협력부·다자사업부·경협평가부로 재편하는 등 경제협력본부의 기능을 확대했다. 그보다 앞서 2019년 1월에는 경협지원실의 명칭을 사업협력부로 변경하고, MDB·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과 구매절차 지연 해소를 위해 수원국과의 협력 기능을 강화했다.

경영부문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슬림화 과정에서 2016년 1월 인사경영지원단을 폐지하고 인사부를 신설했으며, IT부문 역시 시스템개발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보시스템부에 통합했다. 2018년 1월에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경영부문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2019년 7월 정보시스템부를 정보시스템부·디지털서비스부로 분리했으며, 한편으론 상임이사 직속으로 안전운영부를 신설하고 경영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5. 개발금융·자본시장 조직 확대(2020~2025)

2020년대 들어 수은은 코로나19, ESG경영,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정책금융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코로나19 시기 비상경영체제 가동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이어갔으며, ESG경영을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신속한 조직구성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개발금융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외경제협력은행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수출입금융부문에서는 혁신성장금융에 역량을 집중했다. 2021년 1월 직제 편제를 계열별에서 산업별로 전환하고, 혁신성장산업의 글로벌화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성장금융본부 내 기업금융1·2·서비스산업금

융부를 정보통신·모빌리티·바이오서비스금융부로 변경했다. 특히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제1본부로 배치함으로써 혁신금융산업 지원 의지를 공고히 다졌다. 이와 함께 본부별 총괄 기능 전담조직으로 혁신금융총괄부·해외사업총괄부·중소중견금융총괄부를 설치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영업부를 설치하고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고객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2023년 1월에는 각 총괄부의 본부별 여신 기획·통할 업무를 여신총괄부로 이관하고, 총괄부는 소관산업 여신에 집중하도록 했다. 여신부서의 명칭도 소관산업 조정을 반영해 혁신성장금융본부의 경우 혁신성장금융 1~4부로 변경했다.

경협부문에서는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했다. 2017년 EDPF 도입에 이어, 2020년 7월 경제협력본부를 경협총괄본부와 경협사업본부 2개 본부로 확대했으며, 2021년 1월에는 경협사업1, 2부를 동아시아부·서아시아부·아프리카부 등 3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 더욱이 수은은 2022년 7월 EDPF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경협증진부를 신설했다. 경영부문에서는 내부통제, 디지털경영, ESG경영을 강화했다. 먼저 2020년 1월 여신·자금·경영관리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소속 윤리준법실을 신설하고, 준법법무실 내 준법업무팀을 확대 개편했다. 이를 계기로 준법법무실을 법무실로 변경했다.

디지털 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디지털서비스부를 디지털금융단으로 격상했으며, 정보시스템부와 디지털전환추진반을 단 내에 배치하고 디지털전환 총괄 기능을 부여했다. 2021년 7월에는 경영기획본부 소속으로 ESG경영부를 신설하고 ESG경영을 본격화했다. 특히 수은은 2023년 7월 기능 재편과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안에 부응해 조직체계를 조정했다. 단급 조직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

존 단급인 해외경제연구소를 부로 하향 조정했다. 정보 보호실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최고정보보호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요건 충족을 위해 정보보호단으로 격상했다.

이즈음 수은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비전 2030 제정립을 통해 국제협력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후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개발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업무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아울러 정부 공급망안정화기금 수탁을 계기로 업무영역을 더욱 넓혀 나갔다.

자금·경영부문의 경우 2024년 1월 결제·사후관리 업무 일원화를 통한 운영리스크·사고 최소화를 위해 자금 결제팀을 자금결제실로 확대했다. 2024년 7월에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전략방향 컨트론타워 상설조직으로 경영전략실을 신설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근거가 마련됐고, 수은은 2024년 1월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준비단을 설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준비단을 공급망안정화기금단으로 변경하고 그 산하에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를 신설했다.

수은은 개발금융 활성화 노력도 지속했다. DFI로의 외연 확대를 위해 2023년 5월 PIPP를 도입한 데 이어, 2024년 1월에는 개발금융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발금융팀을 신설했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 PDIF가 도입되면서 수은의 개발금융 기능 내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 업무 확대 역시 수은의 또 다른 성장축이었다. 2025년 7월 수은은 글로벌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글로벌사업개발부, 투자금융부, 자금운용실, 자금부, 자금결제부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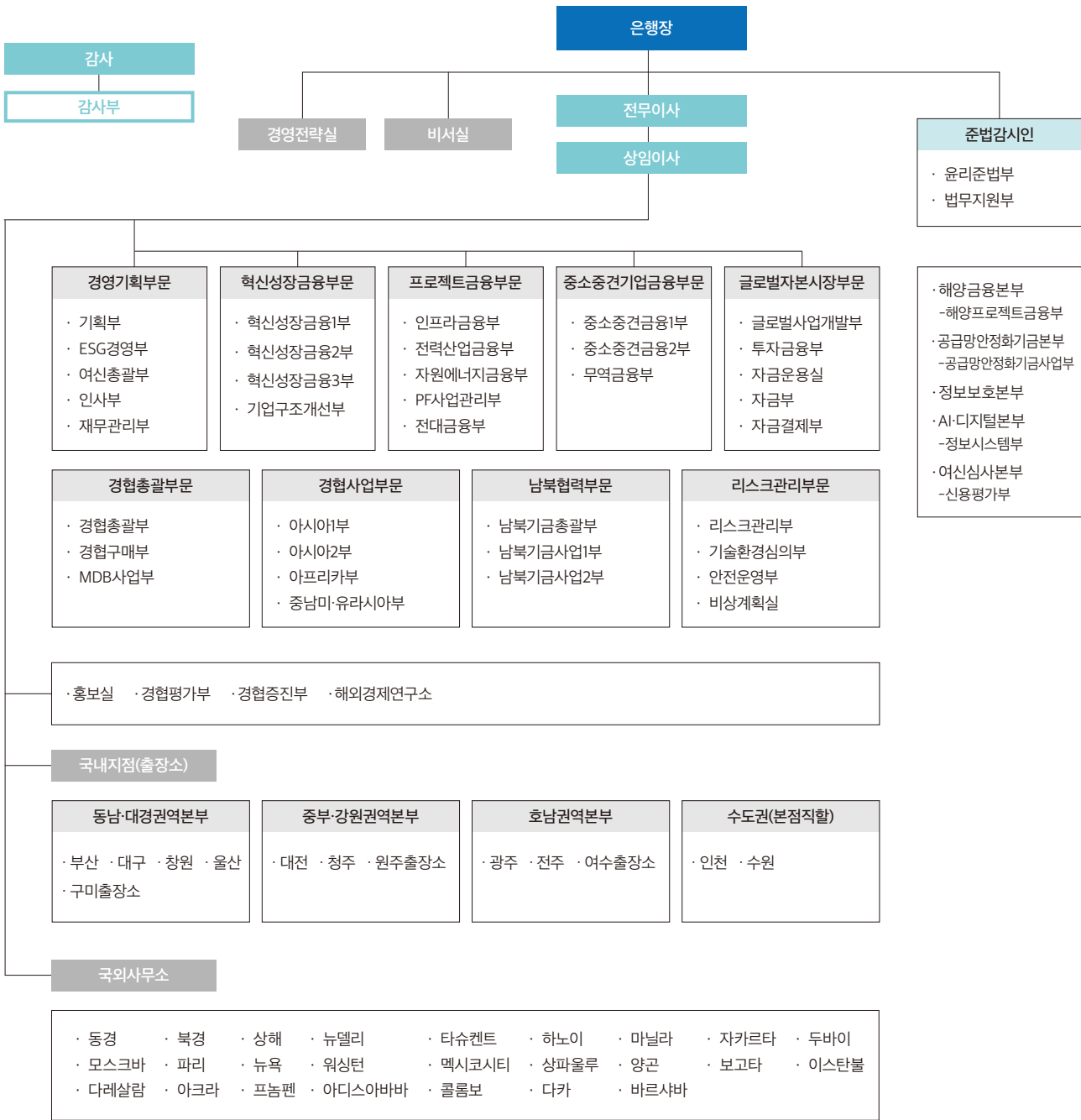
2026년 7월 수은은 지역균형성장, 대·중소중견 상생 등 주요 정책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일부 기능을 통합 및 재배치했다. 이의 일환으로 동남·대경권,호남권,중부·강원권의 3개 권역본부를 신설하고 주요 거점(부산·

광주·대전) 지점장이 각 권역본부장을 겸임토록 해 지역기업 밀착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권역본부 도입에 따

본점조직 주요 변천(1976~2026)

시기	내용
1976.01	업무부, 기획조사부, 총무부, 감사실의 3부 1실로 출발
1977.01	수출보험업무 인수, 대한재보험공사 직원 20명 편입
	업무부, 심사부와 금융부로 분리
1978.02	기획조사부, 업무부와 해외투자조사부로 분리. 자금과 신설
	자금부, 법규실로 확대
1987.0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탁, 경제협력기금부 신설
1988.01	해외투자조사부, 해외투자연구소로 확대 개편
1991.01	국제금융부 신설
1991.02	남북협력기금(IKCF) 수탁, 남북기금부 설치
1992.03	홍보실 신설
1992.07	수출보험 업무 이관, 한국수출보험공사로 130명 이적
1995.03	팀제 도입
1996.02	과 제도 폐지, 전면 팀제로 전환
1998~1999	2차례 구조조정 단행, 조직 48% 축소
2002.01	본부제 도입. 팀제운용요강 제정
2002.02	본부제 경험·남북협력기금으로 확대
2005.05	본부제 자금/경영 등 전 부문으로 확대
2007.01	신성장산업금융실 신설
2009	정부 선진화계획 관련 구조개편 단행, 본점조직 축소
2009	직급체계 개편, G1~G3 체제 전환
2010.12	신성장금융본부, 신성장금융실 신설
2011.07	금융자문실 신설
2014.06	투자금융실 신설
2014.12	정책금융공사 직원 29명 편입
2015.06	리스크관리본부, 기업개선실 신설
2015.07	자금부, 자금시장단으로 확대 개편
2019.01	신성장금융본부, 혁신성장금융본부로 명칭 변경
2019.07	기업개선부, 기업구조조정단으로 격상. 안전운영부 신설
2020.07	경제협력본부, 경험총괄본부와 경험사업본부로 확대
2021.01	직제 관련, 계열별 편제에서 산업별 편제로 전환
2021.07	ESG경영부 신설
2022.07	경험증진부 신설
2023.07	정보보호실, 정보보호단으로 격상
2024.01	자금결제팀, 자금결제실로 확대 개편
2024.07	공급망안정화기금단,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 신설
2025.07	글로벌자본시장본부 신설
2026.07	권역본부(동남·대경권,호남권,중부·강원권) 도입

본점 조직도(2026)



른 조직 명칭 간 혼선을 방지하고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본부를 부문으로, 기존 단을 본부로 조직 편제를 일괄 변경했다. 또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단을 기업구조개선부로 개편해 혁신성장금융본부로 편입했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조선해양 투자 업무

를 투자금융부로 이관해 투자기능을 통합했다. 이로써 수은은 50년 전 업무부, 기획조사부, 총무부, 감사실의 3부 1실로 출발, 2026년 7월 9부문, 5본부, 1연구소, 48부·실 체제를 갖추면서 세계적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3절

국내외 조직

1. 국내지점

수은은 그동안 지방기업의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해 지점·출장소 등의 국내점포를 운영해 왔다. 1977년 1월 개점한 부산지점은 수은 최초의 지방점포였다. 수출보험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인수한 대한재보험공사 부산사무소를 시작으로 수출입금융 전국시대가 열렸다. 인수 당시 부산지점은 출장소로 출발했으나, 내국신용장 매입중개 업무 개시를 계기로 업무량의 크게 늘어나면서 1986년 3월 지점으로 승격됐다.

두 번째 점포는 광주지점이었다. 1987년 12월 출장소로 출발, 이후 광주·호남지역의 지속적인 유망중소기업 발굴을 계기로 1995년 6월 광주지점으로 승격했다. 1990년대 수은의 국내지점은 5개 점포로 늘어났다. 1992년 6월 대구지점을 시작으로, 1994년 4월 창원출장소, 1995년 7월 인천출장소가 개설됐다. 창원·인천출장소는 1996년 5월과 1997년 1월 각각 지점으로 승격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창원지점이 폐쇄되기도 했다.

IMF 외환위기 조기졸업을 계기로 2000년대 들어 수

은의 국내지점은 다시 10개 점포 규모로 성장했다. 2001년 5월 대전출장소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창원지점을



1977 부산사무소



1987.12 광주출장소 개소식



1995.06.23 창원지점

재개점했다. 대전출장소 또한 2003년 10월 지점으로 승격했다. 이어서 2004년 3월 수원지점을, 2005년 5월에는 울산·전주·청주지점을 잇달아 증설했다. 2010년대 들어 수은은 다시 3개 점포를 개설했다. 2013년 3월 구미·여수·원주출장소를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10개 지점, 3개 출장소 체제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즈음 수은은 수출중소기업 지원 특화점포로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도 함께 확보했다. 2013년 7월 중소기업의 금융상담, 마케팅, 컨설팅 제공 등 고객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강남센터를, 2013년 8월에는 시흥·천안센터를 각각 설치했다. 강남센터는 1997년 9월 강남지점으로 출발했다가, 2009년부터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로 전환됐다. 시흥센터와 천안센터는 2013년 개소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밀착 금융지원을 제공하고자 2025년에 의정부센터와 목포센터, 제주센터를 새롭게 개소했다. 이를 통해 현재 수은은 강남, 시흥, 천안, 의정부, 목포, 제주 등 6곳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출입금융과 해외투자금융 상담,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마케팅, 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3개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개설 이듬해인 2014년 수은은 북한·동북아연구센터, 해양금융종합센터 등 특수목적의 금융·연구네트워크를 확보했다. 2014년 4월 개소한 북한·동북아연구센터는 이후 수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지원, 남북한 경제통합 등의 연구를 통해 정부 대북정책을 뒷받침했다.

2014년 9월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과 공동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IFC) 내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개설했다. 정부 해양·선박금융 강화정책에 부응해 출범한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후 조선·해운 등 전통적인 지원산업 뿐 아니라 해양기자재, 해양자원, 인프라, 항만·물류 등 전방위적인 해양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수은 혁신안' 수립을 계기로 일부 지방점포의 폐쇄가 논의되기도 했다. 여신 규모, 고객기업 수, 인근지점 현황 등을 기준으로 창원지점과 구미·여수·원주출장소 폐쇄를 계획했으나, 2019년 4월 정부의 '수은 혁신안'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운영을 지속했다.

오히려 수은의 지역 네트워크는 더욱 확대됐다. 중소·



2014.11.10 해양종합금융센터 개소식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지방 네트워크가 여전히 부족함에 따라, 지방 소재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에 있는 수출기업들의 수는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3월 의정부·목포·제주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수은 국내 네트워크 현황

구분	명칭(설립 시기)
국내점포	부산지점(1977.01), 광주지점(1987.12), 대구지점(1992.06), 창원지점(1994.04), 인천지점(1995.07), 대전지점(2001.05), 수원지점(2004.03), 울산·전주·청주지점(2005.05), 구미·여수·원주출장소(2013.03)
수출중소기업 지원센터	강남센터(2013.08), 시흥·천안센터(2013.09) 제주·목포·의정부센터(2025.03)
그 외	북한·동북아연구센터(2014.04), 해양금융종합센터(2014.09)

2. 국외사무소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권역별 시장 규모와 국내기업 진출 상황 그리고 관련 업무에 따라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국외사무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설립 2년 뒤인 1978년 6월 글로벌 금융중심지 뉴욕·런던·홍콩에 최초의 국외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아시아·유럽·미주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중 홍콩·런던사무소는 이후 현지법인 설립에 따라 자연스레 법인으로 흡수됐다.

최초 해외 네트워크 구축 이후 1970년대에 수은은 미주지역을 확장해 LA사무소를 개소했으며, 1979년 6월에는 또 하나의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도쿄와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소재한 코트디부아르 아비잔에 국외사무소를 개설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미주·아시아·유럽지역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했다. 1981년 9월 칠레 산타아고사무소를, 1982년 11월 자카르타사무소를, 1989년 12월



2004.08.04 워싱턴사무소 재 개소식

에는 파리사무소를 각각 설치했다.

1990년대 수은은 동서 냉전시대의 종식과 정부의 북방외교정책에 부응해 시장경제 편입국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갔다. 1991년 4월 모스크바사무소를, 1992년 11월 호치민사무소를, 1993년 2월에는 북경사무소를 각각 개소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네트워크를 좀 더 넓혀 1997년 5월 상해·하노이사무소를 각각 설치했다. 중국·베트남을 근간으로 한 아시아 네트워크는 1994년 9월 인도 뉴델리, 1996년 8월 필리핀 마닐라사무소 개설로 이어졌다.

이 시기 미주·유럽 네트워크도 확대했다. 미주지역에서는 NAFTA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가 미국 우회수출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1992년 3월 칠레 산티아고사무소를 폐쇄하고, 그 대신 같은 해 8월 멕시코시티사무소를 개소했다. 남미거점 또한 변경했다.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남미진출 지원을 위해 1993년 9월 상파울루사무소를 개설했다.

미국 네트워크에도 변화가 있었다. 1993년 9월 LA사무소를 폐쇄하고, 그 대신 미국수출입은행, OPIC 등의 공적수출신용기관과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소재한 워싱턴에 1994년 2월 해외사무소를 설치했다.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른 거점지역은 독일이었다. 1996년 8월 베를린사무소를 개설했다.



2014.04.15 보고타사무소 재 개소식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외 네트워크가 크게 축소됐다. 1998년 10월 워싱턴·멕시코시티·런던·하노이·파리·뉴델리·베를린·마닐라·아비잔·상해·모스크바 등의 국외사무소가 폐쇄됐다. 독일거점이었던 베를린 사무소가 폐쇄되고 대신 1998년 10월 프랑크푸르트사무소가 개설됐으나, 이 역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폐쇄됐다.

이후 지나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2000년대부터 폐쇄됐던 국외사무소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모스크바(2002.11), 멕시코시티(2003.11), 워싱턴(2004.10), 뉴델리(2004.08), 파리(2005.03), 하노이(2011.05), 마닐라사무소(2011.10)가 다시 수은의 국외 네트워크로 돌아왔다. 2005년 5월 중동의 금융허브로 부상한 두바이에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2007년 12월에는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타슈켄트사무소를 개소했다.

2010년대 들어 수은은 미개척 지역인 아시아·아프리카·남미지역 개도국 진출에 집중했다. 새로운 남미 거점으로는 2014년 4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사무소가 개설됐으며, 같은 시기 유럽진출 교두보로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사무소가 설치됐다. 최대 진출지역인 아시아·아프리카에는 2020년 이전까지 각각 4개 소의 국외사무소를 설치했다. 아시아 신 개척지로 미얀마 양곤



2005.03 파리사무소 개소식



2025.06.19 바르샤바사무소 개소식

(2014.01), 캄보디아 프놈펜(2015.09), 스리랑카 콜롬보(2016.10), 방글라데시 타카사무소(2018.1)를 개설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 다레살람(2014.9), 모잠비크 마푸토(2014.11), 가나 아크라(2014.12),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사무소(2016.05)를 각각 개소했다. 다만 2014년 개설했던 마푸토사무소는 2017년 12월 폐쇄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수은의 전략적 연계성과 환경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외 네트워크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2025년 6월 방산·원전·인프라·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의 대형 수주가 확대되는 주요 전략거점인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국외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로써 2025년 말 기준 수은의 국외사무소는 25개소에 이르고 있다.

3. 현지법인

수은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금융지원, 현지 시장조사 활동 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왔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주선, 유가증권 투자 등 국제금융기관의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

하고 있다.

수은의 첫 현지법인은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KEXIM Asia Limited, 이하 홍콩법인)이다. 당시 홍콩은 수은의 외화자금 조달액의 약 50%가 집중된 외화조달창구이자 이제 막 개방을 시작한 중국시장 진출거점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수은은 1988년 5월 재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1988년 8월 납입자본금 1,000만 달러로 홍콩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홍콩법인은 상업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중심으로 종합금융업을 취급해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 IMF 외환위기 때 잠시 폐쇄되기도 했으나, 2004년 6월 자본금 3,000만 달러로 다시 문을 열었다. 2020년에는 1억 달러의 증자가 이뤄졌으며, 이후 홍콩법인은 홍콩달러 자산, 태양광발전 등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해 나갔으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대출비중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두 번째 해외 현지법인은 수은영국은행(KEXIM Bank(UK) Limited, 이하 런던법인)이었다. 런던법인은 홍콩법인과 마찬가지로 본점의 외화자금 조달 업무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유럽·동구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7월 납입자본금 1,000만 파운드 규모로 설립됐다. 1993년 12월에는 1,000만 파운드 규모로 한 차례 더 증자를 실시했다.



2004.06.25 홍콩법인 재 개설 기념행사

런던법인은 주요 업무인 본점 외화자금 조달 지원, 대출·유가증권 투자 외에 팩토링과 다양한 대리인 역할 수행 등 본점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6,128만 파운드를 증자했으며, 이후 자체 발굴여신 확대, 자금조달 비용 절감, 수수료 수익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세 번째로 설립된 법인은 수은인니금융(PT. KOEXIM MANDIRI FINANCE, 이하 자카르타법인)이다. 당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설비투자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은은 이들에 대한 국산 기계류와 자본재 공급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자카르타법인 설립했다. 자카르타법인은 기존 홍콩·런던법인과 달리 리스금융이 특징이었다. 또 수은 최초의 합작법인이란 특징도 있었다. 이는 합작투자 형태만 허용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독특한 방침 때문이었다. 수은은 1992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은행인 BDN(Bank Dagang Negara)와 합작으로 자카르타법인을 설립했다. 투자비율은 수은 70%, BDN 30%이며, 납입자본금은 150억 루피아였다.

출범 이후 자카르타법인은 리스, 팩토링, 신용카드, 소비자금융, 벤처캐피탈의 5종 영업을 가능한 종합금융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1995년 10월 인도네시아 현지 관련법령 개정으로 벤처캐피탈 업무가 취급대상에서 제



2024.03.26 수은아주유한공사 20주년 기념식

외됐다. 그 대신 자본비율이 다소 늘어났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자유치 강화정책으로 납입자본금이 360억 루피로 늘어났으며, 수은의 합작비율도 78.3%로 높아졌다.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아 합작파트너도 바뀌었다. 인도네시아정부의 금융개혁조치에 따라 BDN을 포함한 4개 은행이 합쳐지면서 합작파트너가 PIM(PT. Pengelola Investama Mandiri)으로 변경됐다. 이후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수은 단독으로 2004년 9월 160억 루피아, 2023년 10월 7,544억 루피아를 출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카르타법인은 선박, 제지,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업종의 신규 여신 발굴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수은 네 번째 현지법인은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KEXIM Vietnam Leasing Co., Ltd, 이하 호치민법인)이다. 자카르타와 마찬가지로 리스금융이 특징이다. 당시 베트남은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으로 국내 사양산업을 이전할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었다. 봉제, 섬유, 신발, 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국산 기계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었다.

수은은 국내 기계류 수출지원의 전진기지로서 1996년 12월 납입자본금 1,000만 달러 규모의 호치민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04년 9월 3,000만 달러, 2020년 8

제4절

노동조합

1. 조합의 출범과 구성

수는 노동조합은 1982년 12월 22일 출범했다. 1982년 12월 24일에는 노동부로부터 조합설립 신고필증을 획득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상급기관은 한국노총으로, 그 산하 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에 가입해 활동했다. 당시 노동조합의 전임간부 구성은 3인(위원장·부위원장·여성부장)이었고, 임기는 2년이였다.

민주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1987년부터는 총무부장 1인을 추가하고 4인 전임간부 체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맞아 노조활동도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일시적으로 부위원장 1인이 비상임으로 전환되면서 전임간부가 2인으로 줄어들었다.

IMF 위기의 먹구름이 지나고 2000년부터는 다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3인 상근체제를 갖췄다. 이때 집행부의 임기도 조합규약 개정을 통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2003년에는 금융노련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수은노조 역시 금융노조 한국수출입은행지부로 전환했다.

수은노조 조합원은 2025년 말 기준 총 1,076명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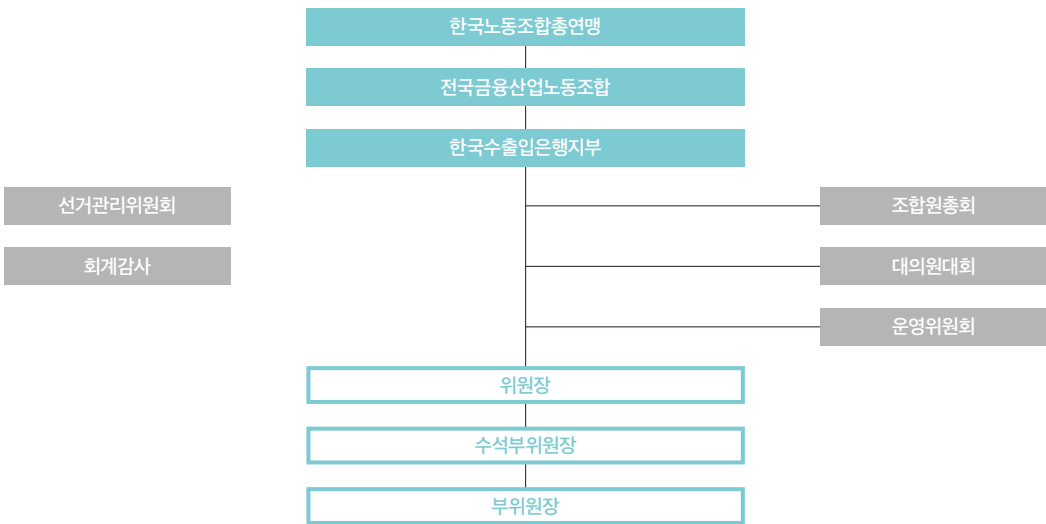
각 부서별로 분회를 구성해 본점과 그 외 지점 등 87개의 분회가 활동하고 있다. 각 부서별 인원에 따라 단수 분회 조합원 수 10인당 대의원 1인을 선출하고 있으며, 단수조합원 5인 이상일 경우 대의원 1인을 추가 배정해 총 87인의 대의원이 대의원대회를 구성하고 있다.

조직 편제에서는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비상임 회계감사 2인, 비상임 운영위원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 운영위원은 조합의 각 부서장을 겸임해 한정된 조직규모를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상근간부 5



1982.12.22 노동조합 출범 기념식

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 조직도



인과 회계감사위원 2인은 전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의결기구로는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원총회, 각 분회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 상임간부·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각 분회총회 그리고 전문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이들 기구는 조합 규약에 정해진 의결권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때마다 소집·운영되고 있다. 그 외 노사 양측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단체교섭위원회, 노사협의회, 근로복지기금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 전담기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수는 노동조합은 1982년 출범 이후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노동조합의 위상 정립과 함께 조합원의 임금·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1980년대에는 조합규약 제정, 임원 선출, 분회 조직 등 기본적인 내부 구조를 정

비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복지,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교섭을 본격화했다.

1990년대 회사 성장과 함께 조합원 수가 증가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조직통합이 추진되며 노사갈등이 심화됐다. 노동조합은 해고 최소화, 임금·복지 축소의 단계적 시행 등을 요구하며 구조조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2000년대 들어 산별체제의 금융노조가 출범했으며, 산별중앙교섭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어 노동시간이 단축됐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 설치,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도 조성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임금 동결,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으로 다시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됐고, 노동조합은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투쟁을 이어나갔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 임원·간부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 직급·직군 간 보상격차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동조합은 2014년 개시된 통상임금 청구소송의 전부 승소를 통해 직원의 보상체계를 개선했다. 2016년 정부의 성과연봉



2025.11.06 제23대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취임식

제 도입 요구 당시에는 강경한 투쟁을 이어나가며, 2017년 법원의 무효 판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2017년 사상 첫 단체협약 정비 그리고 지부보충협약 체결을 통해 지부 운영을 체계화했다.

노동조합은 2016년부터 노동자 추천 이사 선임을 추진했다. 2021년 9월 회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자발적 노조 추천 비상임이사를 선임했고, 특히 수은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은 2022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크게 기여했다.

2022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시행과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수은 역시 인력·예산·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압박에 직면했다.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을 전개했으며, 인력·예산 등의 부당한 정부 지침에 대해 현재까지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역시 총인건비 제도 등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22년 은행 설립 46년 만에 최초의 자행 출신 은행장이 선임됐는데, 이는 노조의 비전문 낙하산 인사 선임 반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힘입은 바 컸다. 이후 2025년에도 자행 출신 행장이 연속 선임되면서 조직에 대한 이해를 갖춘 내부 리더십이 중시되는 인사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수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

하두철 부장

2009년 12월 26일, 전 국민의 99.9%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UAE 원전을 수주한 날이에요. 지금은 '원전의 날'로 기념되기도 하는데 그날 한전 직원들이 환호하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씨앗이 돼 15년 뒤 체코 원전까지 따냈으니 이 사업이 갖는 상징성은 단순한 수주 그 이상입니다.

당시 입찰은 프랑스, 일본, 한국의 3파전이었어요. 지금은 한국 원전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동메달'이다 싶었죠. 유력한 건 프랑스였고 그다음이 일본이었습니 다. 중동은 전통적으로 영국과 유럽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원전은 잘 못 지었다가는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막중한 사업에서 한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서 쌓아온 신뢰, APR-1400 모델의 기술 경쟁력, 거기에 원가 경쟁력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한국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습니 다.

저는 이 사업에 3년을 꼭 채워 관여했습니다. 초반 1년은 거의 내부 규정 정비였어요. 원전 금융은 전 세계 어느 은행도 해 본 적 없는 분야였습니다. 핵 협약, 비핵화 조약, 각종 국제 규정들을 스터디하고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갑자기 이 사업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 다. 그냥 돈을 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고 온갖 쟁점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금리 문제였

습니 다. 당시 UAE, 정확히는 아부다비의 신용등급이 우리나라 보다 한 등급 높았는데, 어떻게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금리에서 역마진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는 국채 금리에 각종 위험 가산율이 붙는 구조이고 단순히 국가신용등급만으로 금리가 책정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설명에도 논란은 계속됐 습니 다.

그 답은 나중에 증명됐습니 다. 어느 날 아부다비 측이 조기 상환을 해 버렸어요. 다른 곳은 금리가 더 낮다며 리파이낸싱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더 낮춰드리기 어렵다고 했더니 전부 갚아 버린 겁니다. 이것이 역마진 논쟁의 가장 명확한 반증이었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1호기인데 1977년 에 지은 겁니다. 그때 설계·시공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벡텔 이 했고 미국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지원했어요. 한국은 현대건설이 하청업체로 들어갔습니 다. 그로부터 30여 년 뒤 한국이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현대건설이 원청업체가 되고 벡텔이 하청으로 들어왔으며 우리 수은이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술과 금융의 비약적인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시 아닐까요. 이 사업을 통해 수은이 원전 파이낸싱 분야에서 어디를 가도 통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실무자로서 가장 뿌듯한 점이었습니 다.

국내 최초 SDG 본드 발행

박세영 부부장

2018년은 SDG와 그린 금융이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책임투자가 급성장하고 전 세계 운용자산의 약 30%인 약 23조 달러 규모가 이 분야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World Bank, HSBC, ANZ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SDG 본드 발행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한국정부 역시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수은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한국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SDG 본드 발행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은은 SDGs(UN의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17개 부문 중 지속가능금융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에 집중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보급 △보건 증진 등 3가지 사업분야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최초 3,500억 원 규모 SDG 본드 발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향후 국내외 SDGs 재원 조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의 첫걸음이었습니다.

SDG 본드는 수은채와 달리 자금의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특수목적채권으로, 자금이 실제로 SDG 분야 지원대상 사업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관리체계 수립과 해당 관리체계가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 발행한 '지속가능성 채권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검토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됐습니 다.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관리체계 수립, 외부 회계법인과의 수익계약 체결 및 검증보고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국내 최초 발급 사례로서 절차 확인 및 이행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 습니 다.

발행 후에는 지원 대상 사업분야, 지원기업 수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사후보고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현재는 ESG 본드가 보편화됐지만, 2018년 당시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유관 부서 및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 및 검증 절차를 하나하나 구축하며 채권 발행을 완수한 경험은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이뤄낸 경험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의미 있게 남아 있습니다.

끝없는 모래 위에서 시작된 UAE 아즈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김성환 부부장

UAE 아즈반 태양광발전사업은 아부다비에서 70km 떨어진 아즈반 사막 지역에 총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1,5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서부발전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 EDF-R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UAE에서 수주한 태양광발전사업이었고 입찰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이었습니다. 완공 시에도 세계 7대 대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축구장 2,850개, 분당신도시 규모의 부지에 태양광 모듈을 깔아 연간 약 4,500G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1년 전력소비량에 맞먹고 원자력발전소 1기의 생산 용량인 1,400MW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이 사업에는 전 세계 유수의 사업 개발자, EPC 기업,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발전된 에너지를 UAE 전력청이 무조건 정해진 가격에 사주는 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 방식이라 수익 구조가 매력적이었고 EPC 기업들에게는 변수가 적고 큰 리스크가 없는 태양광 사업이라는 점이, 금융기관들에게는 ESG 목표 달성과 친환경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 프랑스, 중국, 영국, 일본, 독일, 사우디 등 세계적인 경쟁자 13개를 따돌리고 한국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수은의 역할이 컸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EPC 부문은 대부분 중국계 업체들이 가져가다 보니 건설비용은 컨소시엄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금융비용이거든요. 두바이, 사우디 수는 사무소와 활발히 연락을 취하고 기존 사업에서 형성된 발주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현황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여신의향을 보낼 때도 이 조건이 끝이 아니라 추가 협상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등 유연하고 전략적인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조 단위의 초대형 신재생에너지사

업을 수주하게 된 분수령이 됐습니다.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 발전기업들이 화력발전 해외 수주에서 벗어나 친환경 발전 사업 진출을 꾸준히 시도해 왔는데 이 사업을 계기로 한전이 수주한 사우디 사다위 태양광 1,500MW, 서부발전과 EDF-R이 수주한 UAE 자라프(Zarraf) 태양광 1,500MW 같은 후속 초대형 수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즈반 사업이 그 징검다리가 돼 준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UAE 현지 답사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해서 대형 RV 차량을 타고 사막으로 향하는 도로를 2~3시간 내달렸는데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 너머로 더 황량한 사막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업 부지 앞에는 철조 펜스가 길게 쳐져 있었고 중간중간에 높은 가로등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게 전부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사업을 검토할 때는 대단한 규모의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정도로만 느꼈는데 실제로 그 황무지 앞에 서보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양광발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사량이 얼마나 많은지, 언덕으로 인한 그늘이 자주 생기지 않는 평지인지, 동물이나 사람에 의한 시설 훼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위험이 적은지입니다. 중동 사막은 이 모든 조건에서 환상적인 지형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보면 그 조건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변 10km 내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에 어떻게 인간의 조형물을 만들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사에서 기존에 유사하게 먼저 진행된 사업 현장도 함께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수평에 가깝게 다듬어진 넓은 평야에 태양광 패널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수은 본사만 한 관리동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원전 1기에 맞먹는 발전소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결국 인간의 기술과 의지 그리고 상상력이 만들어낸 일이라는 걸 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 사업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EDCF의 첫 PPP,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 프로젝트

김재철 소장, 김근애 팀장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은 저희가 다자부 협조용자팀에 있을 때 금융 협상을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솔로몬 제도에 EDCF를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고 EDCF가 처음으로 PPP 사업에 대출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른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솔로몬 제도 수도 호니아라 인근에 1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솔로몬 제도는 지금도 전력 대부분을 디젤을 수입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이 kWh당 64센트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체 인구의 약 10%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수도 호니아라 전력 수요의 약 70%를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전기요금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솔로몬 제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총사업비가 약 2억 4,000만 달러인데 EDCF 3,160만 달러를 포함해 세계은행, ADB, 녹색기후기금(GCF), 아부다비개발기금, 호주-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펀드까지 총 여섯 개 기관이 협조용자 방식으로 참여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분 투자와 시공, 30년간의 운영·관리까지 담당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에요.

사실 이렇게 여섯 개 기관이 한꺼번에 뜻을 모아서 진행하는 협조용자는 저희 EDCF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구조였어요. 두세 개 기관도 조율이 쉽지 않은데 여기에 PPP 방식까지 겹치다 보니 기존의 EDCF 표준 차관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금융 계약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차관 협상을 위해 솔로몬 제도를 직접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현지 사업지도 보고 싶었고 솔로몬 정부와 마주 앉아 협상하고 싶었는데 협상 상대방인 솔로몬 재무부 국장이 현지로 오지 말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로 출장을 가서 ADB 시드니 사무소 회의실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솔로몬 재무부 국장 혼자 오신 거예요. 보통은 담당자들이 여럿 나오는데 대신 ADB가 지원해서 선임한 컨설턴트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협상을 해보니까 재무부 국장은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사실상 그 컨설턴트 두 분하고 협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규모 금융이 투입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 경험이 거의 없는 솔로몬 제도 정부에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ADB 같은 국제기구 지원을 받아서 이 PPP 사업 전체를 설계하고 협상을 진행했던 거예요. 통상 이런 PF 사업은 차주 측이나 발주처에서 협상 관련 준비를 다 해오는데 솔로몬 제도는 그런 준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려웠던 점은 댐 사업이다 보니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들의 세이프가드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환경 훼손 이슈에 대한 기준은 높는데 솔로몬 정부는 그 기준을 충족할 역량이 부족했기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에 대한 EDCF 지원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문을 열고 다른 국제기관들과 협력해 이런 사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EDCF 역사상 최초로 PPP 사업에 대출 방식으로 참여한 사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수력발전 기술과 수자원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도 큰 보람이에요.

이런 경험 자체가 앞으로 비슷한 사업을 구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개도국이라도 인프라 사업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이 사업에서 얻은 솔직한 교훈이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오지에서 여섯 개 기관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이런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출금융의 새로운 영역, K-푸드

이승기 차장

삼양식품에는 2020년 무렵까지 대출 지원이 있었지만 이후 상황이 이뤄지면서 한동안 거래가 뜸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24년에 중소중견금융2부로 이동했을 즈음 불닭볶음면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고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운영자금이든 공장 확장을 위한 시설자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일수록 자금의 질과 수요다변화 측면에서 시중은행 외에 당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삼양식품도 그런 맥락에서 연락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공장 설립 일정과 대출 집행 타이밍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자금보다는 수출 관련 운영자금인 수출성장자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부터 상담을 시작해 2024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500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삼양식품 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희망하셨는데 당시 규정상 운영자금 한도가 500억 원이라 맞춰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후 제가 부서를 옮긴 뒤 중견기업 지원 방침과 규정이 개정되면서 한도가 늘어나 현재는 총 1,000억 원이 승인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완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보니 수은이 식품 기업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CJ가 '비비고'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류 문화가 퍼지면서 한국 음식도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국책은행으로서 K-푸드 관련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형성되던 찰나에 삼양식품이 연락을 주신 거지요.

금융지원 성과 면에서는 삼양식품의 수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당행이 제공한 운영자금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라면 매출에서 농심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해외 매출까지 합산하면 오히려 삼양식품의 규모가 더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전년 말 대비 고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금리를 우대해 주는 조건을 적용해 최근 승인에 반영했으니 일자리 증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수출성장자금 지원을 계기로 수은은 농식품부 주도의 K-푸드 플러스 같은 국가 정책과 발맞춰 식품 분야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은이 식품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다소 낯선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K-푸드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당행의 역할도 함께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금융 패키지'의 시작,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프로젝트

한중수 부장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프로젝트는 'K-금융 패키지'라 부를 수 있는 통합 금융지원 모델의 첫 번째 사례예요. 당시에는 복합금융, 혼합금융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던 시기였는데, 한마디로 수은의 여러 금융 수단을 하나의 사업에 패키지 형태로 결합해 지원한 것입니다.

구조를 먼저 설명하자면,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텐주에 위치한 카리안댐에는 EDCF 1억 4,000만 달러가 투입되어 2015년부터 우리 기업이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댐에서 자카르타 서부의 세르퐁 정수장까지 53.1km 도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에는 EDPF 2억 1,000만 달러가 지원됐고요. 정수장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PPP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여기에 수출금융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구조였습니다. 댐·도수로·정수장 3개 사업에 EDCF, EDPF, 수출금융 등 수은의 3가지 금융이 동시에 투입된 최초의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 자카르타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35%에서 82%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협상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인도네시아 국가기획부인 바페나스(Bappenas)가 협상 상대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 쉽게 타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도수로 관 개수 문제였어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단관(單管)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협상과정에서 갑자기 2개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온 거예요. 관을 2개로 하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EDPF는 EDCF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담 역시 인도네시아 측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개월에 걸쳐 설득한 끝에 단관으로 원상 복구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구간 분리발주 문제였어요. 도수로 구간을 6개로 나누자는 요구였는데, 구간을 세분화해야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어요. 나아가 국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현지 업체만 참여하는 입찰로 진행하자는 요구까지 제기됐습니다. EDPF는 안타이드

(untied) 방식이라 국제경쟁입찰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었고, 최종적으로 구간을 6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선에서 타협하되 국제경쟁입찰 원칙은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금리협상도 만만치 않았어요. 바페나스 담당자들이 우리 중장기 금리 체계를 꿰뚫고 있을 만큼 금리에 정통했고, EDPF 금리를 EDCF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EDCF는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양허성 차관이고, EDPF는 시장조달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 구조 자체가 다른데 같은 금리로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점을 반복해서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EDPF팀 근무 2년 중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3개월 내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결국 승인을 보지 못한 채 2022년 1월 부서를 떠났고, 최종 승인은 그해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단순히 3가지 금융을 한 사업에 묶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핵심은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EDCF사업에 더하여 EDPF 자금이 뒷받침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수장 PPP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정책 방향으로 견지해온 해외 민자 사업 개발을 이 사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예요. EDCF로 댐을 짓고, 도수로를 연결하고, 그 인프라 위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수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거두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 내 수자원 인프라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고 다른 국가의 유사사업에도 폭넓게 활용 가능한 금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 OECD 전문가회의 의장 당선

임동준 소장(한국 최초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 의장 재임)

2018년 11월 13일, 기쁜 소식이 한국으로 날아들었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ECG 산하 환경사회전문가회의 의장을 배출해낸 것이었다.

ECG(Working Party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수출신용기구)는 각국의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환경사회심사, 지속가능대출, 뇌물 방지 등을 다루고 있고, 특히 환경사회전문가회의는 각국 ECG에 적용되는 공통 환경·사회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적용사례와 심사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전문가 회의체이다.

당시 임동준 의장은 수은이 오랫동안 육성해온 OECD 전담 환경사회전문 인재였다. 2005년부터 환경사회전문가로 회의체에 참석해 왔고, 이 같은 그의 역량과 활동은 사무국 내 두터운 신임의 배경이었다.

당시 선거전에 나선 후보는 한국 외에 캐나다, 이탈리아가 있었으나, 전임 의장국이 캐나다였던 만큼 선거전의 양상은 한국·이탈리아 2파전으로 흘러갔다.

선거전의 또 다른 변수는 다양성이었다. 회의체 구성원 대다수가 유럽이 주도했고, 그 외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소수그룹이었다. 다양성 차원에서 비유럽 정서가 선거전의 분위기를 주도한 데다, 특히 미국이 공개지지를 선언하면서 한국 최초의 의장당선에 큰 힘이 됐다. 임 의장은 의장선출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로 ECG 의장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후 임 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관련 이슈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코로나19로 한동안 연기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 서울개최라는 성과도 달성했다. 2022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열린 서울회의에서는 25개 국에서 약 50여명의 환경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출신용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사회 영향을 심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임 의장은 코로나19라는 비대면 환경이 길어지면서 2024년까지 보기 드물게 오래 의장직을 맡았다. 의장직에 재임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환경·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축박한 시간과 리스크 사이에서 만든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

이윤미 부장

당초 이 사업은 튀르키예 정부가 일본 ODA 차관을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방향이 바뀝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대신 외국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환한 거죠.

입찰은 한국, 일본, 중국, 튀르키예 이렇게 4개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특이하게 가격이 아니라 '최단 공기'를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2023년이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었고 다르다넬스 해협은 1차 세계대전 때 튀르키예가 유럽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곳이에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고 무조건 2023년에 다리를 개통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한국 컨소시엄이 192개월로 가장 짧은 기간을 제시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습니다. 문제는 2017년 7월 예비 EPC 계약을 맺고 나서 2018년 3월 본 EPC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금융 조달을 완료하지 못하면 일본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시간은 부족한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성상 검토해야 할 리스크는 상당히 많았고 주요 조건들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핵심 쟁점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튀르키예 사업주들이 Equity를 제대로 납입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였어요. 전체 사업비의 일부는 사업주가 자기자금을 직접 투입해야 하는데 튀르키예 사업주들의 신용도가 불안했어요. 당시 튀르키예는 OECD 국가 등급 4등급으로 대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얼마든지 국가 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나라에 속한 민간 건설사들은 국가등급 보다 훨씬 낮은 신용등급 상태였던 거죠.

두 번째는 Termination 조항이었어요. 사업이 잘못됐을 때 튀르키예 관련 사유로 종결되면 튀르키예 정부가 대출 원리금 전부를 보장해 주지만, 차주 귀책으로 종결되면 85%까지만 보장을 해 줍니다. 나머지 15%는 대주단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15%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두 번째 핵심이었어요.

현지에서 며칠 동안 거의 합숙하다시피 협상을 진행했어요. 호텔에 모여서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었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돼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마지막 날 밤에 다시 협상이 열렸고 그때 핵심 조건들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192개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이미 자비를 투입해서 부지 정리 등 기초공사를 선행한만큼 그들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우리 쪽도 리스크를 경감하면서도 반드시 금융을 성사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기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중동을 중심으로 한 정유,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플랜트사업 주수가 부진한 가운데, 인프라 투자개발형 사업이 해외 수주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고, 해외 건설분야 PPP 금융의 대표적인 선례가 됐어요. 또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면서 우리 건설사의 기술력도 입증할 수 있었고요.

튀르키예 현지에 미친 영향도 컸습니다. 예전에 해협을 건너려면 몇 시간이나 걸렸는데 이제는 차로 3분이면 건널 수 있게 됐거든요. 물류나 생활 여건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때 함께 협상했던 튀르키예 건설사 담당자가 그 지역 출신이었는데, 다리가 건설되면 더 이상 배를 탈 필요가 없다고 어머니께 설명을 드렸나 봐요. 그 어머니가 직접 호텔로 찾아오셔서 고맙다며 손수 형견으로 만든 꽃 브로치를 주셨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텃 인근을 강타한 규모 7.8 규모의 대지진과 다수의 여진이 발생했을 때,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차나칼레 대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수한 내진설계 등이 적용된 동 대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공능력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와 디지털 전환, 해외온렌딩 디지털 플랫폼

경지선 팀장, 유재형 팀장

해외온렌딩은 수은이 방대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에게 정책자금을 제공하면 그 은행들이 수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중소·중견기업에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금융 상품입니다. 그런데 수은 내부에서는 한동안 이 상품의 잠재력에 비해 내부적인 주목도가 높지 않았어요. 직접 대출이 아니라 간접 대출 방식이다 보니 상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특히 수출 초기 기업이나 영세한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이 절실했는데 해외온렌딩이 그 수요에 딱 맞는 상품이었어요. 타깃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차등금리도 적용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게 수출 실적 요건도 예외를 두면서 운용했더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프로세스상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만들고 그걸 다시 은행을 통해 수은에 제출해서 적격 여부를 확인받고 회신을 기다려서 대출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영세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만든 상품이기에 복잡한 구비 서류 및 절차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재구성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마침 수은 전체적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던 시점이었어요. 비대면 서비스와 자동 심사, 두 가지 방향으로 디지털화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온렌딩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수은의 IT 시스템은 거의 전부 내부 직원용이었어요. 다른 은행들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은 고객이 쓰는 시스템인데 저희는 직원들만 쓰는 폐쇄적인 구조였거든요. 홈페이지 외에는 고객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없었어요. 해외온렌딩 디지털 플랫폼은 그런 의미에서 수은 역사상 처음으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디지털 전환의 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구축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존 시스템에 상품 하나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용 시스템만 운영하던 환경에서 기업 고객들이 직접 사용하는 대외 시스템을 서버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했죠. 여기에 금융 보안을 위한 망연계 인프라와 전자금융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요건까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갖춰야 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비대면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개발자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100명을 투입해서 진행했는데 밀집된 공간에 100명이 모여 있어 확진자가 나오면 하루에 개발 업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어요. 개발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시스템 완성 후 행정장님께서 직접 최종 시연을 하는 자리에서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채로 진행했어요. 그러다 오류가 나면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사람을 불러서 멀리 앉아서 확인하고 또 바운스를 치면서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비대면이 필요한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정작 개발 과정에서는 너무나 힘들게 사람들을 대면해야 했던 거죠.

해외온렌딩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기업이 중개금융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플랫폼에서 직접 자기가 이 상품을 쓸 수 있는지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어떤 상품이 있는지, 내가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고 방문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수출실적 간편 서비스예요. 온렌딩은 기업의 수출실적에 연동해서 대출 한도를 책정하는 구조인데 이전까지는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어요. 그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뱅크트라스(BankTRASS) 시스템과 전용망으로 연결해서 기업이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 실적이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바꿨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 부담이 사라지고 심사 속도도 빨라지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아시아 금융허브 재진입, 싱가포르법인 설립

유광훈 부장(당시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준비 TF 반장 및 초대 법인장)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던 경영전략 회의장에서 문득 20여 년 전 새내기 행원 시절이 떠올랐다. 굳이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시장에 달리는 늘 부족했고, 유일한 외화공급처인 수은은 그저 공정한 '배분'계획이면 충분했다. 총성없는 전쟁터와 다름없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치열하게 전략을 짜고 고민해야 하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간 2배가 넘게 늘어난 직원 수 이상으로 KEXIM의 역할과 기능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싱가포르법인 설립은 수은의 그 놀라운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 고민의 산물이다.

이 간단한 문구 개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 법개정 이후 수은 해외법인은 비로소 '등'의 해석에 기대서가 아니라, 명확한 법 기반 아래堂堂하게 영업하고, 증자하고, 신규 설립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한국 정부다. 경영진, 노조할 것 없는 전방위 노력과 설득 끝에 설립 동의를 받아냈지만, 핵심 쟁점으로 자본금 규모가 남았다. PF, 신디케이션 시장에 의미있는 플레이어로 활동하기 위한 단일프로젝트 지원 가능 티켓사이즈 1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감안, 최소 3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결국 받아낸 수권자본금 5억 달러! 이는 승인 당시 증자 전 여타 수은 현지법인 자본금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드디어 뭔가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회사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설립 작업은 바다를 건넌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수은이 눈물을 머금고 신생 싱가포르 법인을 철수할때 MAS는 엄중히 경고했다. '이렇게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20여 년 후 돌아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심사과정은 무서울 정도였다. 그 지난한 과정을 다 통과했다고 안도하는 순간 또다른 봉우리가.. MAS는 '법인'이 아닌 '지점' 설립을 권했다. '지점'이면 수은법을 따라야 하고, 시장 중심의 유연한 금융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고 버텼다. 차마 '총 인

건비'라는 현실적 제약은 입을 떼지도 못했다. 법인설립이 안 된다면 철수하겠다는 최후통첩을 MAS와 은행장님 양쪽에 보내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결국 인가서가 날아온 날, Amoi St. 조그만 한식당에서 오후 3시부터 닭갈비를 앞에 두고 우리만의 축하파티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본점의 든든한 지원과 법인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초기 법인은 안정적으로 출발했다. 영업개시 2년 차에 손익분기점(BEP)을 돌파하고, 3년차에는 1,200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수은 현지법인 사상 처음으로 본점 앞 배당도 실시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공급망 등 전략부문에서 본점과의 공동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주선하며 'KEXIM's commercial arm with public mandate'라는 정체성과 역할도 꼼꼼히 수행하고 있다.

임기 막바지 귀국을 준비하고 있던 즈음, 서울에서 철순을 넘은 대 선배님이 찾아오셨다. 20여 년 전 본인이 참여해 설립했던 수은 싱가포르법인을 본인 손으로 문 닫고 와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계셨다. 건강 문제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게 상기된 얼굴로 법인 사무실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만져보시고는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감싼 무언가를 꺼내셨다. 황동색 가위. 옛 법인의 개점식 테이프 커팅에 사용했던 가위였다. 평생 마음 한곳에 지워지지 않던 응어리처럼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었는데, 이제 새롭고 든든한 수은 싱가포르법인의 출범과 함께 그 응어리 같던 '황동가위'를 후배에게 전해주며 훌훌 털어버리며 진심으로 고맙다 하셨다.

이제 시작이다! KEXIM Global Singapore는 실력과 열정 넘치는 우리 수은 직원이 국제금융허브 중심에서 글로벌 IB, DFI, MDB와 경쟁하고 협력하며, 수은이 대한민국 대표 대외거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The 현지법인'으로 굳건히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

* TF 반원으로 함께 일했던 문성록, 박성호, 정재형 행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기가 상수가 된 시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탄생

이동훈 부행장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6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공표됐어요. 시행일은 6개월 뒤인 2024년 6월 27일로 잡혔는데 시스템이나 제도를 다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공급망 위기가 절박하다 보니 더 미룰 수 없었죠. 그렇게 2024년 1월 2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준비단이 출범했고 제가 준비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은은 1년에 두 번 인사를 하는데 시행일이 6월 27일이다 보니 7월 인사에서 준비단이 정식 사업부로 전환됐어요. 인력이 더 충원되고 조직이 정비되면서 공급망안정화사업부가 꾸려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같은 질문을 열 명한테 던지면 일곱여덟 명은 2021년 요소수 사태를 먼저 꺼낼 거예요. 요소수는 의료용 시약으로도 농업 비료로도 쓰이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차량용이었어요.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가깝고 운송비도 적게 드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국내 물류의 핵심인 화물 트럭들이 울 스톱될 위기에 몰렸어요. 이게 도화선이 됐다고들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신호는 있었어요. 2019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어요. 식각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 같은 소재들을 전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막혀버린 거죠. 「소부장법」을 만들고 내재화에 나서서 어느 정도 버텼지만 2년 뒤에 한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위기가 상당히 길어졌을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있어요. 일본 경제가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마비됐고 도요타가 만들어낸 저스트 인타임 생산 방식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그때 드러났죠. 그 이후로 저스트인케이스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공급망 위기를 본격적으로 겪기 10년 전부터 이미 그런 움직임

이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는 모든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됐고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는데 마진이 적은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실제로 멈춰 서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면서 공급망 위기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상수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인건비가 싼 곳에 생산 기지를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위기에 덜 취약한 곳으로 생산 기지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인지하게 된 거죠. 미국은 2022년에 「칩스 앤 사이언스 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었고 일본은 같은 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법과 체계가 굉장히 비슷해요. EU는 2023년에 「핵심원자재법」과 「유럽 판 칩스법」을 잇달아 내놔고 중국은 그전부터 배터리와 전기차 등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우리도 2023년 말 「공급망안정화법」을 만들면서 합류하게 된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달러나 유로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발권을 하면 되는 나라들과 달리 대규모 예산을 특정 산업에 직접 투입하기 어렵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이예요. 정부 예산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연간 한도를 승인하면 정부가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주고 수은이 그 정부 신용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기업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구조예요. 수은 안에 작은 은행 하나가 더 생긴 셈이죠.

준비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국회 설득이었어요. 정부 예산이 1원도 들어가지 않고 정부 보증만 있는 구조

다 보니 국회 일각에서 이게 국회의 관리·감독을 우회하는 편법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되면 매년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또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공급망 위기는 그런 절차를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원유 공급 위기가 갑자기 불거지는데 실제로 위기 전에는 원유가 경제안보 품목 3등급, 그러니까 위기 단계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지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국무회의 의결받고 국회 동의받고 나면 위기는 이미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국회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라 위기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방법이라는 걸 계속 설득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어요.

이 논란은 법 개정 과정에서 한 번 더 불거졌어요. 기금을 1년 정도 운영해 보니 시장에서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수은 기존 대출 금리와 기금 금리의 차이가 0.1%에서 0.5% 수준밖에 안 난다는 거였어요. 금리 경쟁력을 높이려면 조달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본금처럼 비용 없이 쌓을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해요. 자본금은 계속 쌓여서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지만 출연금은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수은이 연평균 5,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 중 일부를 기금에 출연해서 금리 경쟁력을 높이자는 방안이 나왔고 그게 법 개정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또 같은 논리로 반발이 나왔죠. 출연이 들어가면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같은 논리로 대응해서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우려가 또 다른 쟁점이었어요. 기금이 수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면 기존 업무를 잠식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직원들 사이에 상당히 팽배했거든요. 같은 수은이라는 타이틀 아래 금리가 더 좋은 기금이 생기면 기존 부서가 관리하던 고객들이 기금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각 부서마다 업무 목표가 할당돼 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걱정이었어요. 2024년 3월 경영전략회의에서 행장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이 기금이 직원들한테 뭐가 좋은 거냐고요. 처음에는 즉답을 못했어요. 기금이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혜택이 없으니까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말씀드렸어요.

수은은 수출·수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관련 여신이라는 법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요. 수출 비중이 낮은 내수용 국내 공장은 지원이 안 되죠. 그런데 공급

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 품목 내재화 목적이려면 지원이 가능해요. 기존 파이를 잠식하는 게 아니라 수은이라는 집 안에서 지원 영역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또 수은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기금이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수 있고 그 고객이 나중에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없던 차추가 생기는 거니까 고객 기반이 넓어지는 거죠. 게다가 수은은 동일인·동일 계열 여신 한도 제약이 있어서 대기업 한도가 찬 경우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기금은 그런 수은의 제약을 보완해 고객의 자금 수요를 더 충실하게 채워 줄 수 있어요. 행장님이 만족하셨고 그해 5월 노사 간담회에서도 직원들에게 직접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신 부서와 기금 간의 협력 체계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내부의 우려들이 점차 해소됐어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은 2024년 9월 5일에 열렸어요.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위원 추천이 국회에서 늦어지면서 6월 시행일에서 3개월이 밀렸습니다. 출범식 장소를 놓고 직원들은 수은 본점 6층 강당을 제안했는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폐쇄된 공간에서 하면 너무 틀에 박혀 있고 기금과 관련 없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우리끼리만의 행사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로비에서 하자고 했어요. 로비는 3층까지 트인 atrium 구조거든요. 로비행사야 필요한 대형 원형 테이블, 다과와 음료, 행사보조 인력, 조명 시설 등등 다양한 로지스틱스 문제를 외주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가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부총리님과 기재위원장님, 행장님의 말씀이 예코가 돼 울려 퍼지자 2층과 3층 난간에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만들어졌어요. 오페라 하우스 같은 분위기였죠. 기금과 직접 관련 없는 직원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개최한 출범식을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수은에 들어왔다는 걸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입니다.

공급망 위기는 이제 상수입니다. 자연재해, 팬데믹, 미중 패권 경쟁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테일 리스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됐어요. 미국이 주도했던 WTO 중심의 다자주의 무역 체제가 와해되면서 각국이 자국 우선 또는 블록 위주의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지금, 민간 기업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다는 것, 그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가진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중단·무장애 운영기반 구축, IT센터 신축·이전

유연주 본부장

신(新)EXIM 정보시스템 가동, 디지털전환에 따른 IT장비의 지속적 증가로 공간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층고·하중·전력 등 건물의 보안 취약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점 4층에 위치했던 주컴퓨터실의 스페이스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경 IT센터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

이후 수은은 IT센터 부지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본점과의 접근성, 전력공급 문제, 교통 인프라,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쟁점을 살펴가면서 김포, 마곡, 가산디지털단지 등을 탐색했다. 결국 수은이 선택한 지역은 인재개발원 유휴부지였다.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정부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예견됐고, 무엇보다 인재개발원이 있는 용인 인근에는 변전소가 2곳이나 위치하고 있어 전력 안정성 확보에 용이했다.

부지선정, 개념설계, 구축계획 수립에 이어 2023년 1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건축공사에 들어갔으나, 준공일정이 하염없이 길어졌다. 인허가 문제로 실제 착공 승인은 4월에 받을 수 있었고, 공사비 산정문제, 건설공사 안전성 강화, 계절적 요인 등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았다.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혹한기여서 공기가 연장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터파기 과정에서 다량의 매립 쓰레기가 발견되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용인시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반출 절차가 몹시 까다로웠다.

8부 능선을 넘어 용인시청의 IT센터 사용승인 문제도 커다란 쟁점이었다. 인재개발원 인근 주택가 민원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공청회를 통해 전력선 지중화 계획을 밝혀 주민 우려를 해소했고, 전자파 우려에 대해서도 방벽 설치로 민원을 해결했다.

그 같은 노력으로 건축공사 기공식 이후 2년 4개월 만인 2025년 5월 8일 용인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6일 현충일을 기점으로 이전 날짜를 확정할 수 있었다.

IT센터 이전은 통신케이블만 6,000개를 교체하고 105개의 대외회선을 재연결하는 등 복잡한 작업이었다. 약 1,000여 대 장비에 대한 전원 온·오프만도 수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일정이었다. 장비보호를 위해 무진동차량 15대가 동원돼 1시간 간격으로 용인으로 이동했다. 본사 앞마당 회전반경이 좁아 대형 무진동 차량 입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IT센터 이전은 업무시간 외 이뤄지는 작업이어서 IT부서 직원들이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하느라 애환이 많았다.

이전작업이 완료되고 이제 IT센터 가동 순간만이 남았다. 그런데 월요일 가동을 앞두고 하루 전인 일요일 최종점검 과정에서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상상황에 돌입한 IT직원들은 원인파악에 온힘을 쏟았다. 다행히 일요일 자정이 다 돼서야 장애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수은은 네트워크 이슈로 일시 차단된 접속장해를 해소하고 2025년 6월 9일 마침내 IT센터 정상 가동에 성공했다. IT센터는 안전성·확장성·가용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무중단·무장애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직·간접 투자활성화 본격화 「수은법」 개정

김상훈 부장, 이충성 팀장

“직·간접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안이 어제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대출·보증을 연계하지 않은 직접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간접투자 대상이 기존의 지분 시장법상 집합투자에 더해, 벤처투자조합(VC)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발로 뛰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일 황기연 행장이 내부망을 통해 긴급 타전한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말이다. 직·간접 투자활성화는 수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수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했다. 2005년 지분투자 업무조항 신설, 2009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출자근거 신설, 2014년에는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분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하고 펀드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많았다. 직접투자 때는 대출·보증을 연계해야만 했고, 간접투자 역시 정부의 건별 심사·승인으로 투자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후 수은은 정부·국회와 협력해 직·간접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에 총력을 펼쳤다. 2022년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이 발의됐으나, 아쉽게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했다. 2024년에 꺼진 불이 다시 되살아나긴 했으나, 이마저도 국회통과에는 실패했다. 또 한 가지 더, 당시 법안 발의에는 직접투자의 VC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간접투자의 승인방식을 개선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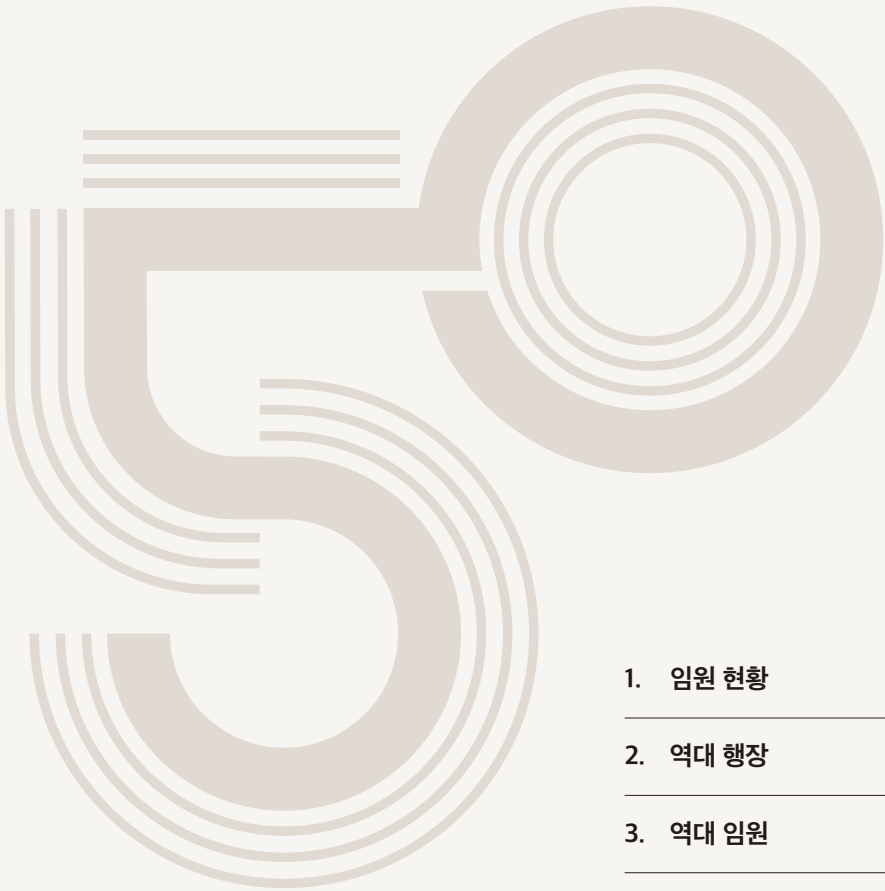
이를 계기로 수은은 다시 한 번 역량을 재결집해 「수은법」 개정에도 도전했다. ①직접투자 대출·보증 연계조항 폐지, ②간접투자 대상의 VC 등 대폭 확대를 목표로 정부·국회와 협력해 마침내 2025년 12월 2일, 직·간접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란 성과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2026년 1월 29일 추가 수은법 개정을 통해 간접투자 승인방식

을 정부의 건별 심사·승인에서 연간 한도 승인방식으로 변경까지 이끌어냄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 등에 대한 신속한 투자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수은법」 개정은 결코 쉽게 얻어낸 성과가 아니다. 2005년 투자 업무 도입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끈기 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수은 투자업무에 대한 인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이 큰 의미이며, 이는 결국 법 개정과 제도화로 이어져 수은업무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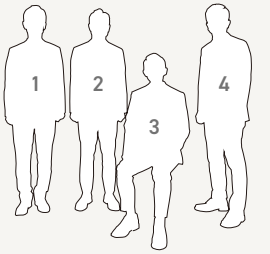
부록

APPENDIX



1. 임원 현황
2. 역대 행장
3. 역대 임원
4. 조직도
5. 조직변화 추이
6. 국내영업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
7. 자본금 구성 현황
8. 요약 대차대조표
9. 요약 손익계산서
10. 연표

- 1 이동훈 이사
- 2 차순오 감사
- 3 황기연 행장
- 4 안종혁 전무





황기연 회장



안양호 이사



박해선 이사



차순오 감사



안종혁 전무



이동훈 이사



강부성 이사



임대웅 이사



신유근 부행장

위찬정 부행장

주상진 부행장



엄성용 부행장

서정화 부행장

이원균 부행장



김진섭 부행장

이동훈 부행장



황정욱 부행장

박희갑 부행장



초대 송인상



2대 양윤세



3대 이태호



4대 박성상



13대 신동규



14대 양천식



15대 진동수



16대 김동수



5대 류돈우



6대 황창기



7대 홍재형



8대 이광수



17대 김용환



18대 이덕훈



19대 최종구



20대 은성수



9대 김영빈



10대 문현상



11대 양만기



12대 이영희



21대 방문규



22대 윤희성



23대 황기연

3

역대 임원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은행장	송인상	1976.05.12	1979.05.11
	양윤세	1979.05.14	1979.12.13
	이태호	1980.01.07	1983.01.06
	박성상	1983.01.27	1986.01.12
	류돈우	1986.01.13	1987.06.25
	황창기	1987.06.26	1990.03.27
	홍재형	1990.03.28	1991.06.04
	이광수	1991.06.05	1993.03.31
	김영빈	1993.04.01	1994.10.01
	문헌상	1994.10.02	1998.04.19
	양만기	1998.04.20	2001.04.19
	이영희	2001.04.20	2003.09.03
	신동규	2003.09.04	2006.09.03
	양천식	2006.09.11	2008.07.17
	진동수	2008.07.18	2009.01.19
	김동수	2009.02.13	2011.01.02
	김용환	2011.02.07	2014.02.06
	이덕훈	2014.03.06	2017.03.05
	최종구	2017.03.06	2017.07.18
	은성수	2017.09.11	2019.09.08
	방문규	2019.10.30	2022.06.07
	윤희성	2022.07.27	2025.07.26
	황기연	2025.11.05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전무이사	이태호	1977.05.12	1980.01.06
	김건	1980.01.08	1980.07.30
	하국환	1980.08.01	1983.07.31
		1983.08.01	1985.09.18
	성욱기	1985.09.19	1988.09.18
		1988.09.19	1991.02.25
	이학성	1991.02.25	1993.05.19
	권승우	1993.05.20	1996.05.19
	이선호	1996.05.20	1999.05.19
	정문모	1999.05.20	2002.05.19
	이규	2002.05.20	2005.03.31
	김진호	2005.04.01	2007.10.02
	김정준	2007.10.03	2009.07.17
	박동수	2009.12.29	2012.12.28
	남기섭	2013.01.09	2015.04.06
	홍영표	2015.05.15	2018.05.14
	강승중	2018.05.15	2021.05.14
	권우석	2021.05.15	2023.12.29
	안중혁	2023.12.30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비상임이사	박우규	2010.02.01	2013.01.31
	최승호	2010.02.01	2013.01.31
	오성익	2013.11.29	2016.11.28
	안영률	2013.11.29	2016.11.28
	김성배	2016.12.30	2019.12.29
	최공필	2016.12.30	2019.12.29
	나명현	2018.06.01	2021.05.31
	유복환	2020.01.06	2023.01.05
	정다미	2020.01.06	2023.01.05
	이재민	2021.09.18	2024.09.17
	윤태호	2021.09.18	2024.09.17
	허장	2023.04.10	2026.04.09
	남혜정	2023.04.10	2025.05.29
	안양호	2024.10.02	
	박해선	2024.10.02	
	강부성	2026.06.26	
	임대웅	2026.06.26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감사	박정재	1976.06.01	1978.05.01
	김건	1978.05.01	1980.01.07
	김종섭	1980.01.08	1980.07.19
		1980.08.20	1982.08.19
	전석두	1982.08.20	1984.08.19
	송무섭	1984.10.02	1986.10.01
		1986.10.02	1988.10.01
	박경동	1988.10.02	1989.04.11
	이학성	1989.04.11	1990.05.12
	장현규	1990.05.12	1992.05.11
	권승우	1992.06.20	1993.05.19
	박창래	1993.05.24	1996.05.23
		1996.05.24	1997.03.05
	지용기	1997.03.15	1999.03.14
		1999.03.15	2002.03.14
	신일성	2002.03.26	2005.03.25
	최정상	2005.04.13	2008.04.12
	이대우	2008.04.13	2011.04.12
	배선영	2011.04.13	2014.04.12
	공명재	2014.08.29	2017.08.28
	조용순	2018.01.18	2021.01.17
	김종철	2021.01.25	2024.01.24
	차순오	2024.07.15	

3

역대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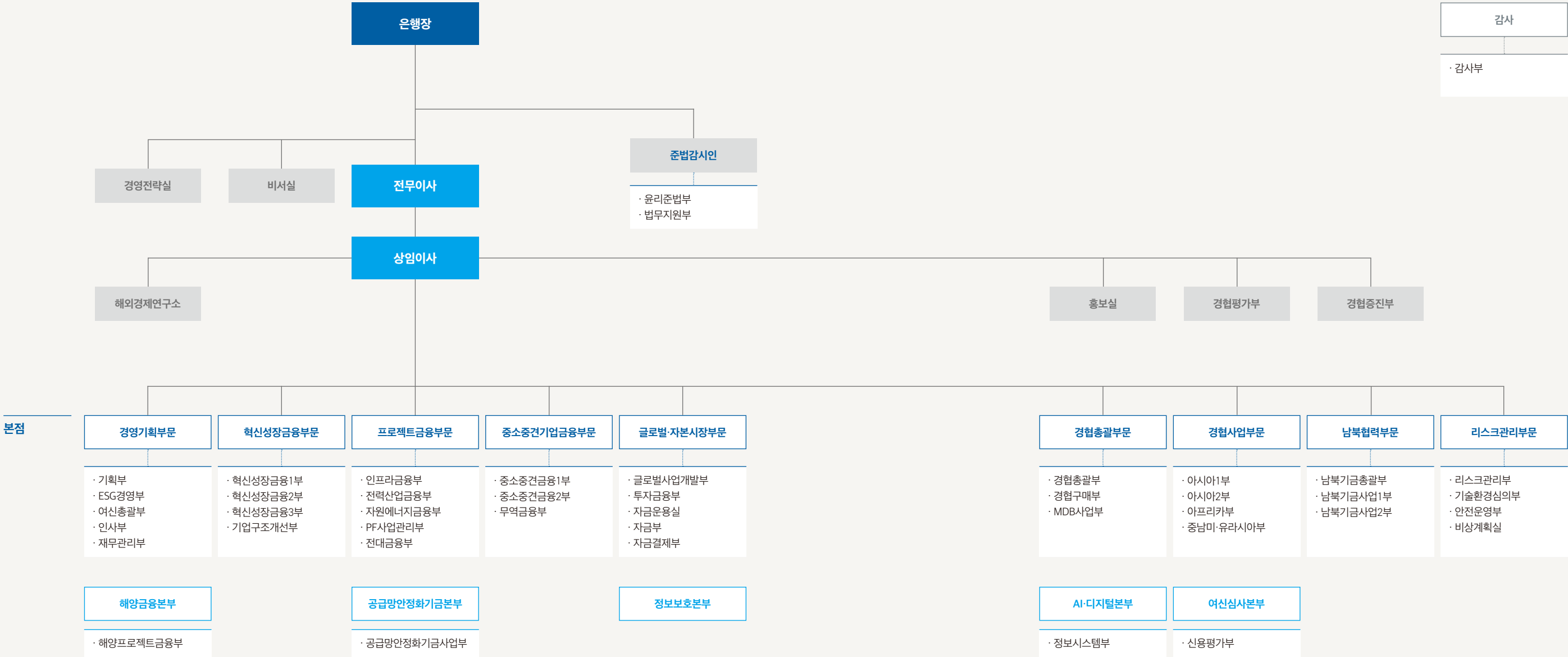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이사	이태호	1976.06.01	1977.05.11
	원유민	1976.06.01	1979.05.31
	전석두	1977.02.03	1980.02.02
	이홍준	1977.05.12	1980.05.11
	최종악	1979.05.07	1982.05.06
	원유민	1979.06.01	1980.07.19
	전석두	1980.02.03	1980.08.19
	이홍준	1980.05.12	1983.05.11
	정훈목	1980.07.07	1981.06.20
	성육기	1980.08.20	1983.08.19
	박병식	1980.08.20	1983.08.19
	선우윤	1981.08.13	1984.08.12
	최종악	1982.05.08	1985.05.07
	박경동	1983.06.30	1986.06.29
	성육기	1983.08.20	1985.09.18
	박병식	1983.08.20	1986.08.19
	선우윤	1984.08.14	1987.08.13
	이중환	1985.05.08	1988.05.07
	이정녕	1985.10.02	1988.10.01
	박경동	1986.06.30	1988.10.01
	이찬구	1986.08.20	1989.08.19
	김택	1987.08.14	1990.08.13
	이중환	1988.05.08	1991.05.07
	이정녕	1988.10.02	1990.05.12
	박춘의	1988.10.02	1991.10.01
	이찬구	1989.08.20	1992.08.19
	김택	1990.08.14	1993.05.19
	채홍식	1991.02.25	1994.02.24
	이선호	1991.05.08	1994.05.07
	박춘의	1991.10.02	1993.05.19
	정병무	1992.08.20	1995.08.19
	진종원	1993.05.20	1996.05.19
	전종배	1993.05.20	1996.05.19
	채홍식	1994.02.25	1997.02.24
	이선호	1994.05.08	1996.05.19
	김성용	1995.08.20	1998.08.19
	강말이	1996.05.20	1998.11.02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이사	최성룡	1996.05.20	1999.05.19
	정문모	1996.05.20	1999.05.19
	황창익	1997.02.25	2000.01.08
	신현철	1999.04.09	2002.04.08
	윤기학	1999.05.20	2002.05.19
	김성규	1999.05.20	2002.05.19
	이규	2000.01.08	2002.05.19
	김진호	2002.04.09	2005.03.31
	김태희	2002.05.20	2005.05.19
	조상균	2002.05.20	2005.05.19
	김동관	2002.05.20	2005.05.19
	신중억	2003.12.22	2006.12.21
	김정준	2005.04.01	2007.10.02
	홍성욱	2005.05.20	2007.11.19
	정태성	2005.05.20	2008.08.26
	최용안	2005.05.20	2008.08.26
	최정하	2006.12.29	2009.12.28
	권두환	2007.10.03	2009.07.17
	이평구	2007.11.20	2009.07.17
	박동수	2008.08.27	2009.12.28
		2008.08.27	2009.12.28
	김진경	2008.08.27	2009.12.28
		2008.08.27	2011.08.26
	남기섭	2011.08.27	2013.01.08
	심섭	2012.06.29	2015.06.28
	설영환	2013.01.09	2016.01.08
	최성환	2015.07.01	2018.06.30
	김성택	2015.07.01	2017.12.19
	강승중	2018.01.18	2018.05.14
	신덕용	2018.01.18	2021.01.17
	권우석	2021.01.18	2021.05.14
	김태수	2021.05.15	2023.09.30
	황기연	2023.10.01	2025.11.05
	이동훈	2026.06.08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부행장(부문장)	이평구	2009.07.18	2010.12.31
	이재민	2009.07.18	2011.07.17
	남기섭	2009.07.18	2011.08.26
	최영환	2009.07.18	2011.07.17
	장정수	2009.12.29	2012.06.28
	노성관	2009.12.29	2012.06.28
	김윤영	2009.12.29	2012.09.27
	심섭	2011.01.01	2012.06.28
	설영환	2011.07.18	2013.01.08
	박일동	2011.07.18	2014.06.25
	변상완	2011.07.18	2012.12.31
	홍영표	2012.06.29	2015.05.14
	장만익	2012.06.29	2014.12.31
	최성환	2012.09.28	2015.06.30
	임성혁	2013.01.09	2016.01.08
	민홍식	2013.01.09	2016.01.08
	김성택	2014.06.26	2015.06.30
	최성영	2014.09.29	2016.09.28
	문준식	2015.01.02	2017.01.01
	강승중	2015.07.03	2018.01.17
	신덕용	2015.07.03	2018.01.17
	김영수	2015.07.03	2018.05.18
	조규열	2016.01.11	2017.12.25
	장영훈	2016.01.11	2018.07.31
	양환준	2018.01.05	2020.07.04
	윤희성	2018.01.05	2020.01.04
	권우석	2018.01.05	2021.01.04
	유승호	2018.01.05	2020.01.04
	백남수	2018.07.23	2021.07.18
	김태수	2018.08.01	2021.05.14
	김경자	2019.01.16	2022.01.15
	박경순	2020.01.05	2023.01.04
	이동환	2020.01.05	2022.07.04
	신경택	2020.07.05	2023.01.04
	이상호	2020.07.01	2022.12.31
	안종혁	2021.01.05	2023.12.29
	김형준	2021.07.19	2024.07.04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부행장(부문장)	박종규	2021.07.19	2024.07.18
	모창희	2022.01.16	2024.01.15
	강정수	2022.07.29	2025.01.15
	정순영	2023.01.13	2025.07.08
	홍순영	2023.01.13	2025.07.08
	황기연	2023.01.13	2023.09.30
	이동훈	2023.10.01	2026.06.07
	주상진	2024.01.08	
	신유근	2024.01.16	
	이원균	2024.07.15	
	엄성용	2024.07.19	
	위찬정	2025.01.16	
	김진섭	2026.01.14	
	서정화	2026.01.14	
	이동훈	2026.01.14	
	황정욱	2026.07.15	

직위	성명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준법감시인	조영조	2018.01.05	2021.01.04
	유연갑	2021.01.05	2023.07.04
	심형보	2023.07.05	2026.01.13
	박희갑	2026.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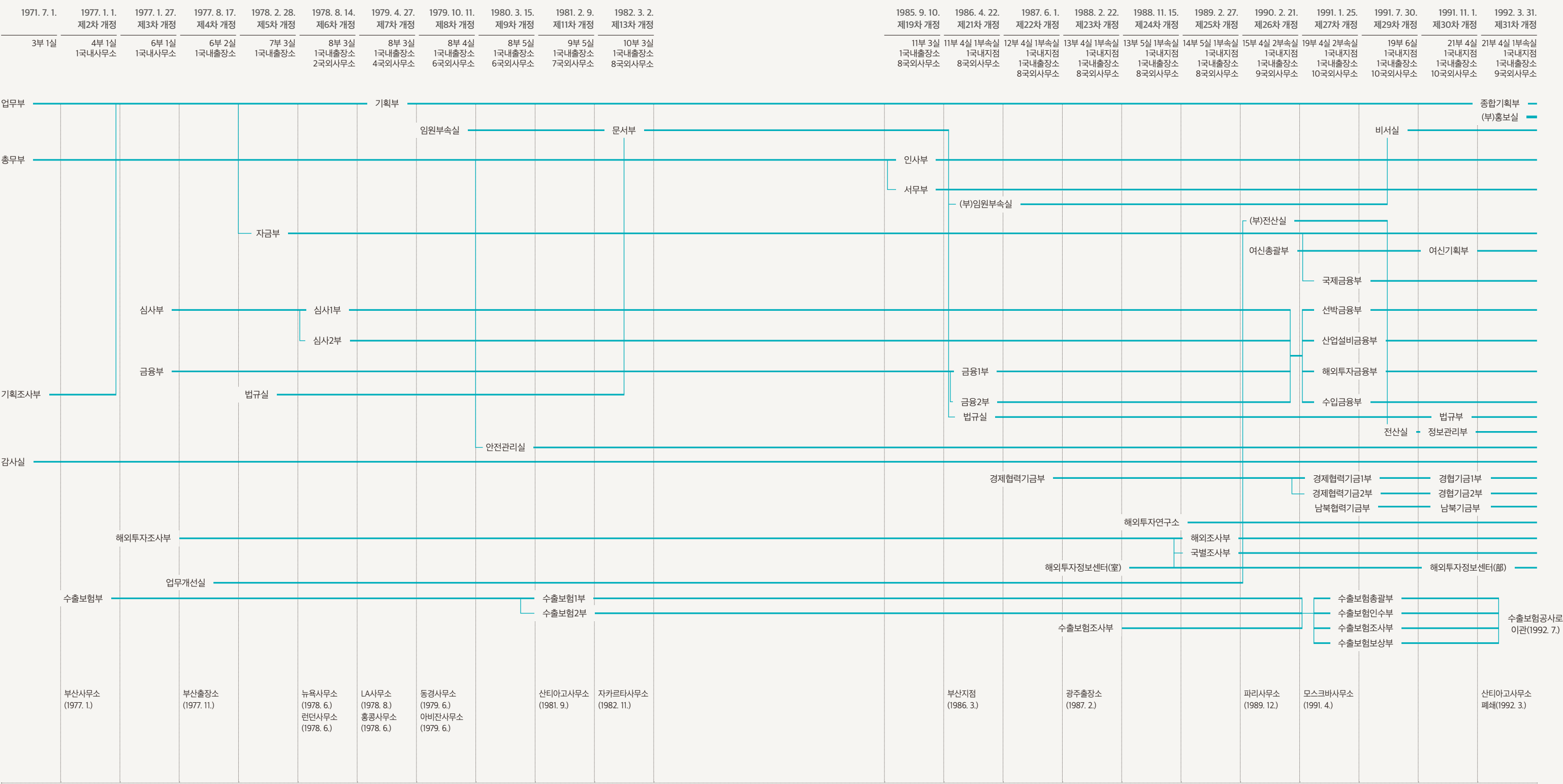
국내지점
(출장소)

동남·대경권역본부: 부산 | 대구 | 창원 | 울산 | 구미(출장소)
호남권역본부: 광주 | 청주 | 여주(출장소)
중부·강원권역본부: 대전 | 전주 | 원주(출장소)
수도권(본점직할): 인천 |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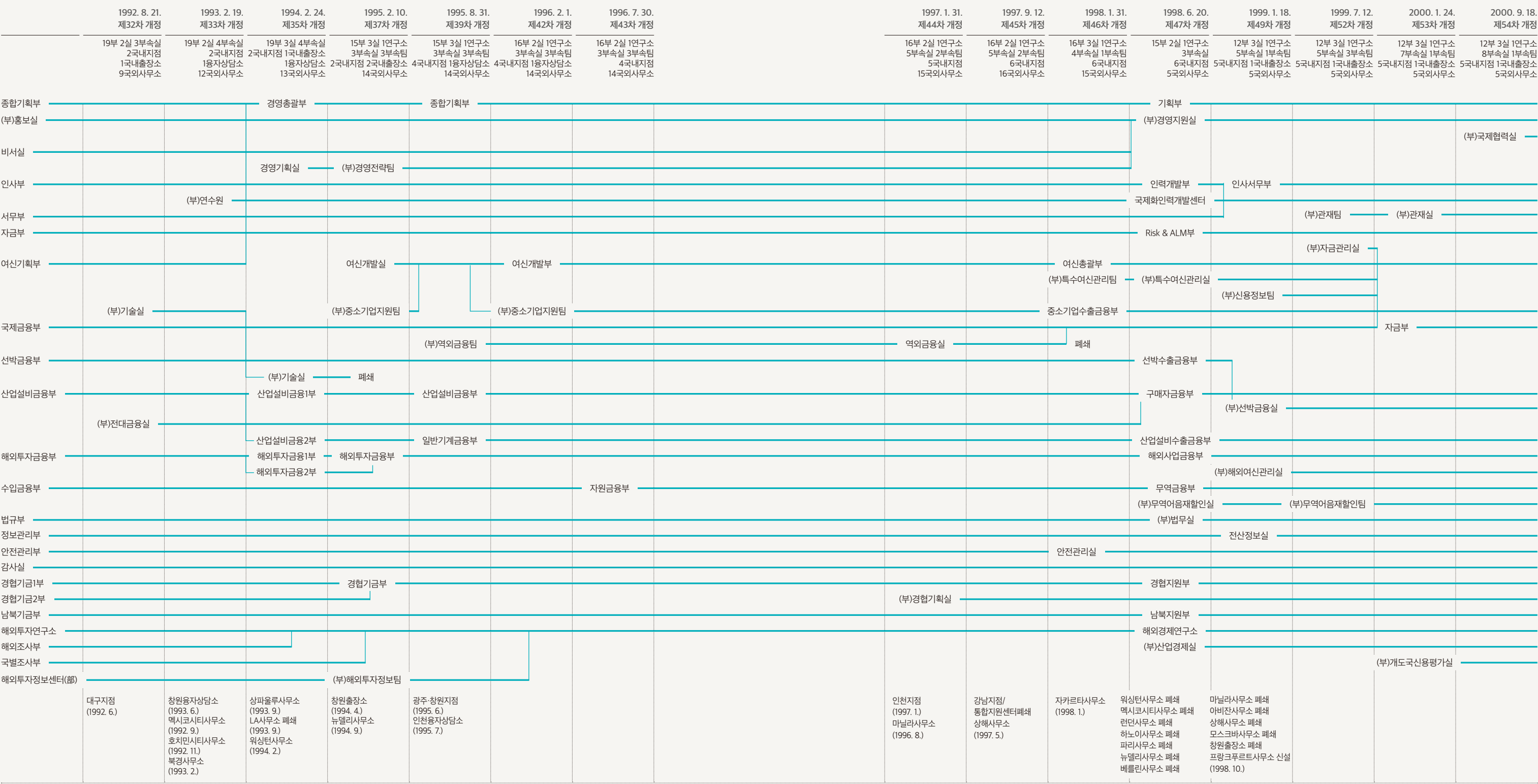
국외사무소

사무소: 동경 | 북경 | 상해 | 뉴델리 | 타슈켄트 | 하노이 | 마닐라 | 자카르타
두바이 | 모스크바 | 파리 | 뉴욕 | 워싱턴 | 멕시코시티 | 상파울루 | 양곤 | 보고타
이스탄불 | 다레살람 | 아크라 | 프놈펜 | 아디스아바바 | 콜롬보 | 다카 | 바르샤바
주재원: 이란 | OECD DAC | 사우디아라비아 | 몽골 | 라오스 | 이집트 | 케냐 | 싱가포르

5
조직변화 추이



5
조직변화 추이



5
조직변화 추이

	2001. 2. 27. 제55차 개정	2001. 6. 27. 제56차 개정	2002. 1. 28. 제57차 개정	2002. 5. 22. 제58차 개정	2003. 2. 10. 제59차 개정	2004. 1. 26. 제60차 개정	2004. 7. 26. 제61차 개정		2005. 5. 20. 제63차 개정	2005. 10. 11. 제65차 개정	2006. 7. 6. 제66차 개정	2007. 1. 11. 제67차 개정	2007. 7. 6. 제68차 개정	2007. 12. 28. 제69차 개정	2009. 1. 6. 제70차 개정	2009. 8. 10. 제71차 개정
	12부 3실 1연구소 7부속실 3부속팀 5국내지점 2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	12부 3실 1연구소 9부속 실 4부속팀 6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	4본부 7부 3실 1연구소 6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	4본부 8부 3실 1연구소 6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	4본부 8부 3실 1연구소 6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7국외사무소	5본부 10부 10실 1연구소 8국내지점 8국외사무소	5본부 10부 11실 1연구소 8국내지점 8국외사무소		7본부 11부 13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2부 12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2부 14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3부 14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3부 14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3부 14실 1연구소 11국내지점 13국외사무소	7본부 16부 6실 1단 1연구소 10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6부 6실 1단 1연구소 10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기획부		(부)홍보실														
(부)경영지원실																
(부)국제협력실		비서실													경영지원부	
인사서무부			인사부									(부)경영전략실				
국제화인력개발센터						(부)연수원	인력개발원									
(부)관제실					(부)관리지원실											
Risk & ALM부			리스크관리부													
			(부)신용평가실												(부)신용평가실	
여신총괄부																
(부)특수여신관리실							(부)기술지원실									
중소기업수출금융부			중소기업금융본부						중소기업금융부	(부)기술심의실					중소기업지원단	
															(부)중소금융1실	
															(부)중소금융2실	
자금부																
					(부)국제투자금융실	국제금융부										
구매자금용부			연보수출금융부	연보금융부			프로젝트금융부		(부)국제협력실		국제협력실					
(부)선박금융실			(부)선박수출금융실		(부)선박금융실	선박금융부								(부)신성장산업금융실	녹색성장금융부	
산업설비금융부						전대금융실	은행전대실		전대금융실							
해외사업금융부			해외투자금융본부													
(부)해외여신관리실	해외리스크전략팀											(부)자원개발금융실	자원개발금융실	자원개발금융부		
무역금융부			무역금융부								일반수출금융부		기업금융부			
				외환업무실		외환업무실					무역금융부				무역금융부	
					(부)수입금융실											
법무실															(부)법무실	
전산정보실													전산정보부			
안전관리실																
감사실																
													경험개발실			경험지원실
경험지원부			경제협력기금부	경제협력기금1부	경제협력1부	경험1실			경험기획실			경험사업1실			경험사업부	
(부)경험기획실				경제협력기금2부	경제협력2부	경험2실						경험사업2실				
남북지원부			남북협력기금부		남북협력부	남북협력1실			협력기획실			남북협력기획실				
					(부)남북교류지원실	남북협력2실									남북협력사업부	
해외경제연구소																
(부)산업경제실					(부)지식경제실											
(부)개도국신용평가실	대전출장소(2001. 5.) 홍콩사무소(2000. 12.)	창원지점(2001. 6.)	(부)국별조사실													
					모스크바사무소 (2002. 11.)	대전지점(2003. 10.) 수원지점(2004. 3.) 멕시코시티사무소(2003. 11.)			울산지점(2005. 3.) 워싱턴사무소(2004. 10.) 청주지점(2005. 3.) 뉴델리사무소(2004. 8.) 전주지점(2005. 3.) 파리사무소(2005. 3.) 두바이사무소(2005. 5.)					타슈켄트사무소 (2007. 12.)	강남지점 폐쇄 프랑크푸르트사무소 폐쇄	

5
조직변화 추이

	2009. 12. 31. 제72차 개정	2010. 4. 21. 제73차 개정	2010. 12. 16. 제74차 개정	2011. 6. 3. 제75차 개정	2011. 12. 16. 제76차 개정	2012. 6. 4. 제77차 개정		2012. 12. 27. 제78차 개정	2013. 6. 17. 제79차 개정	2014. 6. 10. 제80차 개정	2014. 8. 28. 제81차 개정	2014. 12. 8. 제82차 개정	2015. 6. 11. 제83차 개정	2015. 12. 29. 제84차 개정
	7본부 16부 6실 1단 1연구소 10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6부 6실 1단 1연구소 10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7본부 17부 7실 1단 1연구소 10국내지점 12국외사무소	8본부 18부 7실 1연구소 10국내지점 13국외사무소	8본부 18부 7실 1연구소 10국내지점 15국외사무소	8본부 20부 9실 1연구소 10국내지점 15국외사무소		8본부 1단 20부 16실 1연구소 10국내지점 15국외사무소	8본부 22부 13실 1연구소 10국내지점 3국내출장소 15국외사무소	8본부 2단 1연구소 16부 23실 10국내지점 3국내출장소 18국외사무소	9본부 2단 1연구소 16부 23실 10국내지점 3국내출장소 18국외사무소	9본부 2단 1연구소 19부 21실 10국내지점 3국내출장소 21국외사무소	9본부 3단 1연구소 19부 20실 10국내지점 3국내출장소 21국외사무소	9본부 2단 1연구소 19부 19실 10국내지점 3국내출장소 22국외사무소
기획부														
(부)홍보실						홍보실								
경영지원부								경영전략실	비서실					
(부)경영전략실										재무관리부			재무관리실	
										국제투자실				
										인사경영지원단				인사부
인사부														
인력개발원														
(부)관리지원실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부													심사평가부	
(부)신용평가실								신용평가실				여신감리실		
				(부)금융자문실		금융자문부				전략사업부			사업개발부	
					(부)Pf지원실									
여신총괄부				총괄사업부						여신총괄부				
(부)특수여신관리실								기업구조개선실					기업개선탄	
(부)기술심의실													기업구조혁신실	
								기업성장지원단						
중소기업지원단				중소기업금융부				중소중견금융부						중소중견금융2부
(부)중소금융1실				(부)허드렘피언사업실				허드렘피언사업실						중소중견금융1부
(부)중소금융2실								상생금융실	기업성장지원부					
자금부											자금부		자금시장단	
국제금융부														
(부)국제협력실														
프로젝트금융부	플랜트금융부													
녹색성장금융부														
			신성장금융실	미래산업금융실										
선박금융부										미래산업금융부	미래산업금융실	서비스산업금융부		
										조선해양금융부	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기업금융실				
										(부)중소조선금융실	해양기업개선실			
전대금융실														
해외투자금융부											투자금융실			
											기업금융1부		기업금융1부	
											기업금융2부		기업금융2부	
											기업금융3부			
자원개발금융부	자원금융부										자원금융실			
무역금융부											무역금융실			
(부)법무실								법무실				준법법무실		
전산정보부									정보시스템부	(부)시스템개발실	시스템개발실			정보시스템부
						(부)전산개발실								
안전관리실														
감사실														
경협지원실												경협총괄부		
											국별전략실			
경협기획실														
경협사업부			경협사업1부	아시아부										경협사업1부
			경협사업2부	중남미아프리카부										경협사업2부
남북협력기획실														
남북협력사업부								남북협력사업부		남북경협실		남북협력총괄부		
								남북인도협력실		남북교류협력실				
해외경제연구소														
(부)산업투자조사실														
(부)국별조사실														
				하노이사무소(2011. 5.)	마닐라사무소(2011. 10.) 자카르타사무소(2011. 12.)				구미출장소(2013. 8.) 여수출장소(2013. 8.) 원주출장소(2013. 8.)	양곤사무소(2014. 1.) 보고타사무소(2014. 4.) 이스탄불사무소(2014. 4.)		다레실람사무소(2014. 9.) 마푸토사무소(2014. 11.) 아크라사무소(2014. 12.)		프놈펜사무소(2015. 9.)

본점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9층 Tel. 032-235-6114 Fax. 032-235-6110
	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Tel. 031-259-6607 Fax. 031-259-6609
	출장소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신한투자증권빌딩 6층 Tel. 054-462-7103 Fax. 054-462-7105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신사옥 3층 Tel. 061-643-7714 Fax. 061-643-7716
	원주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Tel. 033-748-0536 Fax. 033-748-0538
	해외현지법인
	수은영국은행 3F Moorgate Hall, 155 Moorgate, London EC2M 6XB, United Kingdom Tel. 001-44-20-7562-5500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UNIT 2904-05, 29/F,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China Tel. 001-852-2810-0182
	수은인니금융회사 Equity Tower 50th Floor Suite 50E, SCBD Lot 9,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Indonesia Tel. 001-62-021-5140-0777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9th Fl. Diamond Plaza Bldg., 34 Le Duan Street, Sai Gon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001-84-28-3825-7000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Tel. 051-817-5050 Fax. 051-817-6060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Tel. 053-260-4100 Fax. 053-754-1020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501호 Tel. 055-287-6830 Fax. 055-287-6831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덕양빌딩 4층 Tel. 052-274-5286 Fax. 052-274-5278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Tel. 062-232-6944 Fax. 062-232-6946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고을로 1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 10층 Tel. 063-271-6134 Fax. 063-271-6139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Tel. 042-489-9715 Fax. 042-489-9716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6층 Tel. 043-237-0475 Fax. 043-237-0476	

수은싱가포르 88 Market Street, CapitaSpring #47-04, Singapore Tel. 001-65-6015-0186	
주재원	
이란 P.O. Box : 11155-3581,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No.2, West Daneshvar St., Sheikhbahai Ave., Tehran, Iran Tel. (98-21) 8805-4900	
OECD DAC 4 Place de la Porte de Passy, 75016 Paris, France Tel. 001-33-1-4402-2058	
사우디아라비아 KOTRA Riyadh, 8th Floor Legend Tower, King Fahd Road, Al Olaya, Riyadh 12313, Kingdom of Saudi Arabia Tel. (966-53) 860-9115	
몽골 801, 8th Floor, Park Place (Chinggis Ave-24), 1st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14241, Mongolia Tel. (976) 7700-6604	
라오스 KOLAO TOWER II, 5F, 23 Singha Road, Vientiane, Laos Tel. (865) 21-455-073	
이집트 1A33, Aura Apartment, Cairo Festival City, Cairo, Egypt Tel. (20) 12-2812-5666	
케냐 Delta Corner Annex, 1st Floor, Ring Road, West- lands, Nairobi 40569-00100, Kenya Tel. (254) 11-501-4787	
싱가포르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 Tel. (65) 6715-9740	

국외사무소
동경 Rm. 1904, 19th F Hibiya Daibiru, 1-2-2 Uchisaiwaicho, Chiyoda-ku, Tokyo 100-0011, Japan Tel. 001-81-3-3580-8702
북경 Office A2901, Beijing POSCO Center, 13 Hongtai East Street,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Tel. 001-86-10-6465-3371
상해 Rm. 1203 Aetna Tower, No. 107, Zunyi Road, Shanghai, 200051, China Tel. 001-86-21-6237-5561/5562
뉴델리 Unit No. F-7, First Floor, Commercial Block, Hyatt Delhi Residences, Aerocity 110 037, New Delhi Tel. 001-91-11-4072-5600
타슈켄트 ET DX Campus, 7th Floor Makhtumkuli Street, 100047 Tashkent Uzbekistan Tel. 001-998-71-238-9288
하노이 8th Floor,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r.,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24-3771-7010 (Ext 121)
마닐라 28/F Zuellig Building, Makati Avenue, corner Paseo de Roxas, Makati City, 1225 Metro Manila, Philippines Tel. 63-(0)2-864-0624
자카르타 Plaza Asia, Lantai 26th, Jl. Jendral Sudirman Kav 59,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001-62-(0)21-5140-1018
두바이 P.O. Box 482038, West Wing 4th Floor, The Gate Building, DIFC, Dubai, UAE Tel. 001-971-4-362-0852
모스크바 Office Building 1704A, World Trade Center Entr. 3, 12 Krasnopresnenskaya Nab., 123610, Moscow, Russia Tel. 001-7-495-258-2366

파리 36 Avenue Hoche, 75008 Paris, France Tel. 001-33-1-4953-0405	프놈펜 Keystone Building, 4F, Unit 4D, Plot 100, #146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Cambodia Tel. 001-855-23-999-561
뉴욕 780 3rd Ave. 19th Fl., New York, NY 10017, U.S.A. Tel. 001-1-212-355-7280	아디스아바바 P.O. Box 7720, at Korea Embassy 1st Floor Woreda 05, Kirkos Sub City Addis Ababa, Ethiopia Tel. 001-251-113-85-3035
워싱턴 1300 L Street, N.W. Suite 825, Washington D.C. 20005, U.S.A. Tel. 001-1-202-408-8838/8839	콜롬보 Korea ODA Center 3rd Floor, 9/2 Dudley Senanayake Mawatha, Colombo 8, Sri Lanka Tel. 001-94-11-267-5355
멕시코시티 Av. Pdte. Masaryk 490, Oficina 8C, Polanco II Secc, Miguel Hidalgo, 11530 Ciudad de Mexico, CDMX, Mexico Tel. 001-52-55-5511-8445	다카 I-K Tower, Plot No. CEN(A)-2, North Avenue, Gulshan 2, Dhaka, Bangladesh Tel. 880-13-4896-4012
상파울루 CJ 38, HORIZONTE OFFICE, Av. Presidente Juscelino Kubitschek 1545, Vila Nova Conceicao, Sao Paulo-SP, Brazil Tel. 001-55-11-3283-3021	바르샤바 Warsaw Trade Tower, 25F, Chlonda 51,00867 Warszawa, Poland Tel. +48-728-880-388
양곤 HAGL Myanmar Centre Tower 1, Level 14, Unit 2, 192 Kaba Aye Pagoda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019345623	
보고타 Carrera 9 #113-52, Edificio Torres Unidas 2, Oficina 808, Bogota, Colombia Tel. 001-57-1-364-9921	
이스탄불 Maslak Mah. AOS55 Sok. 42, Maslak Multi Ofis A Kat : 10 Daire : 08-09, Sariyer, Istanbul, Turkey Tel. 001-90-212-286-5224	
다레살람 P.O.Box 13681, Office No. 807, 8th Floor, Alfa Plaza, Plot No. G6, Chabruma Street, Off. Ali Hassan Mwinyi Road, Dar Es Salaam, Tanzania Tel. 001-255-22-292-6579	
아크라 P.O. BOX CT11218, 1st Floor, Gulf House, Adamafio Crescent, Accra, Ghana Tel. 001-233-302-543-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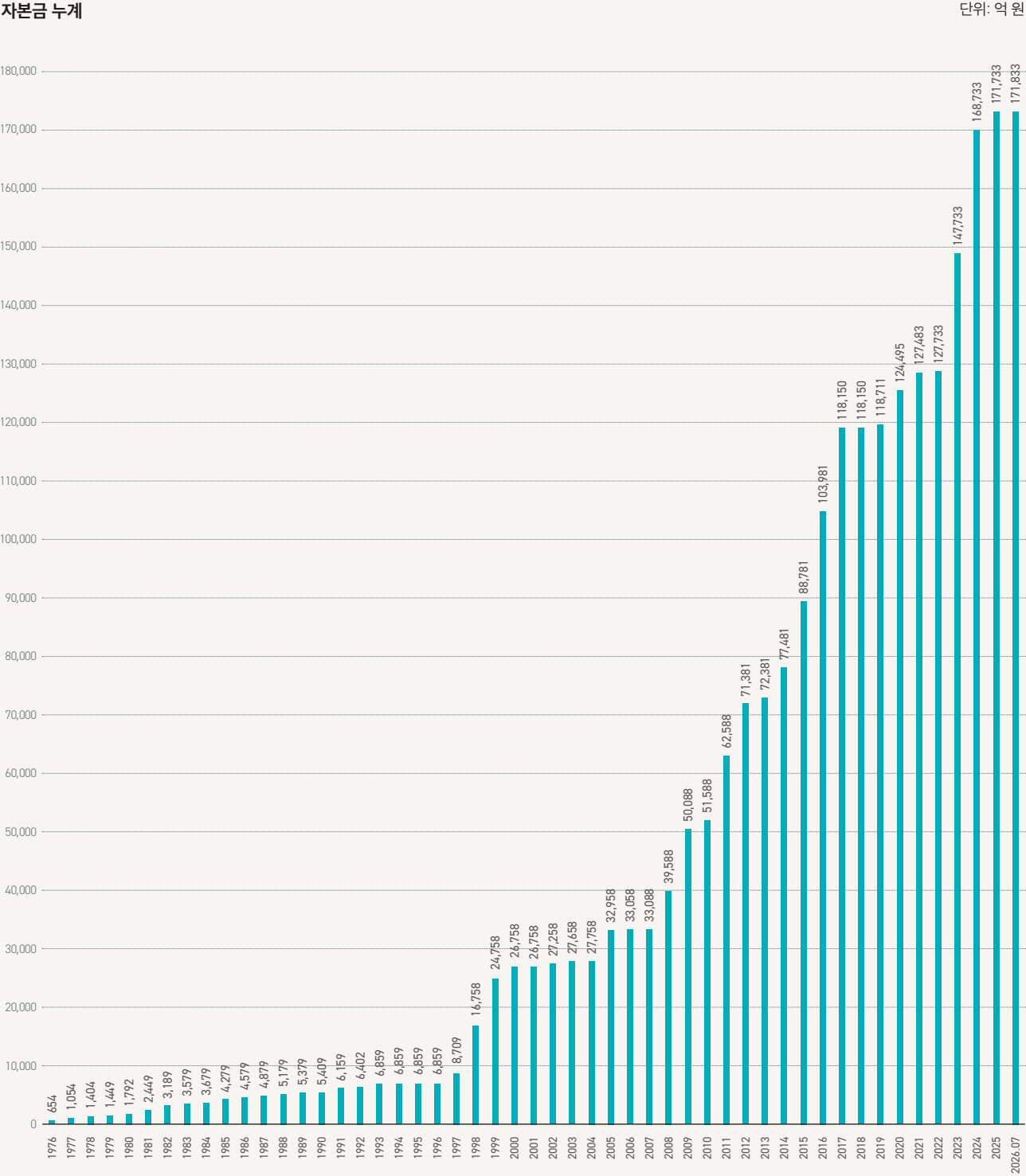
7

자본금 구성 현황

구분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연도별 소계	누계
	출자	누계	출자	누계	출자	누계	출자	누계		
1976	154	154	200	200	300	300	-	-	654	654
1977	200	354	200	400	-	300	-	-	400	1,054
1978	50	404	-	400	300	600	-	-	350	1,404
1979	45	449	-	400	-	600	-	-	45	1,449
1980	43	492	300	700	-	600	-	-	343	1,792
1981	157	649	500	1,200	-	600	-	-	657	2,449
1982	190	839	-	1,200	550	1,150	-	-	740	3,189
1983	190	1,029	200	1,400	-	1,150	-	-	390	3,579
1984	100	1,129	-	1,400	-	1,150	-	-	100	3,679
1985	300	1,429	300	1,700	-	1,150	-	-	600	4,279
1986	300	1,729	-	1,700	-	1,150	-	-	300	4,579
1987	-	1,729	300	2,000	-	1,150	-	-	300	4,879
1988	-	1,729	300	2,300	-	1,150	-	-	300	5,179
1989	50	1,779	150	2,450	-	1,150	-	-	200	5,379
1990	30	1,809	-	2,450	-	1,150	-	-	30	5,409
1991	550	2,359	200	2,650	-	1,150	-	-	750	6,159
1992	243	2,602	-	2,650	-	1,150	-	-	243	6,402
1993	457	3,059	-	2,650	-	1,150	-	-	457	6,859
1994	-	3,059	-	2,650	-	1,150	-	-	-	6,859
1995	-	3,059	-	2,650	-	1,150	-	-	-	6,859
1996	-	3,059	-	2,650	-	1,150	-	-	-	6,859
1997	1,850	4,909	-	2,650	-	1,150	-	-	1,850	8,709
1998	9,199	14,108	-	2,650	-1,150	-	-	-	8,049	16,758
1999	-536	13,572	7,000	9,650	-	-	1,536	1,536	8,000	24,758
2000	-	13,572	2,000	11,650	-	-	-	1,536	2,000	26,758
2001	-	13,572	-	11,650	-	-	-	1,536	-	26,758
2002	500	14,072	-	11,650	-	-	-	1,536	500	27,258
2003	400	14,472	-	11,650	-	-	-	1,536	400	27,658
2004	100	14,572	-	11,650	-	-	-	1,536	100	27,758
2005	5,200	19,772	-	11,650	-	-	-	1,536	5,200	32,958
2006	100	19,872	-	11,650	-	-	-	1,536	100	33,058
2007	30	19,902	-	11,650	-	-	-	1,536	30	33,088
2008	6,500	26,402	-	11,650	-	-	-	1,536	6,500	39,588
2009	10,500	36,902	-	11,650	-	-	-	1,536	10,500	50,088
2010	1,500	38,402	-	11,650	-	-	-	1,536	1,500	51,588
2011	1,000	39,402	-	11,650	-	-	10,000	11,536	11,000	62,588
2012	8,793	48,195	-	11,650	-	-	-	11,536	8,793	71,381
2013	1,000	49,195	-	11,650	-	-	-	11,536	1,000	72,381
2014	5,100	54,295	-	11,650	-	-	-	11,536	5,100	77,481
2015	11,300	65,595	-	11,650	-	-	-	11,536	11,300	88,781
2016	10,200	75,795	-	11,650	-	-	5,000	16,536	15,200	103,981
2017	2,500	78,295	-	11,650	-	-	11,669	28,205	14,169	118,150
2018	-	78,295	-	11,650	-	-	-	28,205	-	118,150
2019	562	78,856	-	11,650	-	-	-	28,205	562	118,711
2020	5,783	84,640	-	11,650	-	-	-	28,205	5,783	124,495
2021	2,988	87,628	-	11,650	-	-	-	28,205	2,988	127,483
2022	250	87,878	-	11,650	-	-	-	28,205	250	127,733
2023	20,000	107,878	-	11,650	-	-	-	28,205	20,000	147,733
2024	21,000	128,878	-	11,650	-	-	-	28,205	21,000	168,733
2025	3,000	131,878	-	11,650	-	-	-	28,205	3,000	171,733
2026.07	100	131,978	-	11,650	-	-	-	28,205	100	171,833
합계	131,978		11,650		-		28,205		171,833	171,833

* 2011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자본금 포함

자본금 누계



8

요약 대차대조표

1976 - 1995

단위: 억 원

구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현금 및 예치금	9	255	235	181	59	83	820	119	1,219		11,149	8,847	2,516	1,449	1,011	1,098	2,057	3,079	2,775	2,072	1,863
유가증권	219	311	465	746	320	700	-	3,400	6,055		300	1,278	1,663	2,053	14	1,305	2,163	1,748	2,275	2,092	1,715
콜론	-	-	-	-	-	-	-	-	-		-	-	-	-	-	-	1,085	460	297	364	345
대출금	562	1,206	1,646	2,255	5,115	9,476	15,639	20,552	26,070		33,499	25,421	20,039	17,153	19,601	23,670	29,311	24,798	32,722	41,155	54,631
지급승낙대충	-	222	293	267	397	3,115	4,393	3,612	4,078		3,723	1,548	2,048	1,850	528	214	1,801	4,060	3,353	2,935	5,720
연불어음매도대충	-	-	-	-	-	-	-	1,326	2,718		2,531	1,803	754	490	350	186	101	52	7	2	-
기타자산	14	22	6	9	7	22	96	137	101		235	302	489	413	316	425	1,269	1,683	2,573	3,274	2,190
업무용고정자산	1	20	37	54	66	101	107	84	157		304	310	314	319	320	312	318	214	221	219	220
이연자산	2	1	-	-	-	-	-	-	7		33	28	10	2	-	30	83	22	8	7	17
자산합계	807	2,037	2,682	3,512	5,964	13,497	21,055	29,230	40,405		51,774	39,537	27,833	23,729	22,140	27,240	38,188	36,116	44,231	52,120	66,701
외국환	-	-	-	-	4	5	20	15	128		25	44	40	3	-	-	-	17	-	42	4
차입금	130	603	741	1,459	3,128	5,882	10,077	13,954	16,243		19,419	14,207	6,916	7,033	7,501	12,574	15,417	10,358	17,713	23,601	30,292
콜머니	-	-	-	-	-	-	-	-	-		-	-	-	-	-	-	-	-	-	710	1,456
발행금융채권	-	-	-	-	-	-	-	-	579		3,699	4,434	4,395	3,396	3,062	3,809	8,632	9,066	10,089	11,598	15,448
지급승낙	-	222	293	267	397	3,115	4,393	3,612	4,078		3,723	1,548	2,048	1,850	528	214	1,801	4,060	3,353	2,935	5,720
연불어음매도	-	-	-	-	-	-	-	1,326	2,718		2,531	1,803	754	490	350	186	101	52	7	2	-
연불어음매각대금	-	79	64	57	64	1,382	2,434	5,745	11,468		15,791	10,148	5,830	2,835	2,039	1,459	1,281	636	397	256	189
미지급 연불어음 매입대금	-	-	-	-	-	-	-	9	193		189	135	7	-	-	-	-	-	-	-	-
수입보증금	-	3	8	8	9	31	21	44	29		22	20	27	22	22	80	54	103	28	22	16
기타부채	8	13	37	58	100	162	373	360	630		791	791	653	763	757	683	1,153	1,213	1,130	982	1,028
충당금 및 준비금	-	25	35	49	108	104	170	201	262		709	945	1,121	1,093	1,172	1,291	1,629	1,613	1,896	2,113	2,430
자본금	654	1,054	1,404	1,449	1,791	2,449	3,189	3,579	3,679		4,279	4,579	4,879	5,179	5,379	5,409	6,159	6,402	6,859	6,859	6,859
적립금	1	15	37	100	166	362	367	378	385		398	596	883	1,011	1,034	1,175	1,470	1,897	2,521	2,718	2,953
당기순이익	14	23	63	65	197	5	11	7	13		198	287	280	54	296	360	492	698	236	282	306
부채 및 자본합계	807	2,037	2,682	3,512	5,964	13,497	21,055	29,230	40,405		51,774	39,537	27,833	23,729	22,140	27,240	38,189	36,115	44,229	52,120	66,701

8

요약 대차대조표

1996 - 2015

단위: 억 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금 및 예치금	2,432	11,904	25,581	21,829	12,836	342	446	1,083	695	440	1,345	1,094	2,317	8,738	16,100	27,076	21,341	22,148	31,140	48,841
유가증권	1,944	3,172	1,379	23,172	18,630	19,442	15,004	16,412	20,060	32,149	25,579	25,348	23,965	32,780	32,053	39,489	44,933	54,035	65,914	77,363
대출증권	74,842	123,755	117,660	91,794	76,000	77,230	71,712	80,327	90,044	112,604	143,577	199,985	318,134	362,052	397,490	460,046	448,937	511,224	608,597	658,341
은행간대출금	61	28,708	8,349	2,691	9,408	10,533	16,306	12,600	6,863	3,509	411	1,008	716	1,413	1,590	1,133	9,655	475	2,988	8,000
지급승낙대출	7,223	34,091	55,380	-	-	-	-	-	-	-	-	-	-	-	-	-	-	-	-	-
연불어음매도대출	-	-	8,558	-	-	-	-	-	-	-	-	-	-	-	-	-	-	-	-	-
대출금매도대출	-	-	2,154	-	-	-	-	-	-	-	-	-	-	-	-	-	-	-	-	-
고정자산	219	210	191	179	176	195	339	442	471	453	434	407	380	382	372	398	518	2,539	2,917	3,000
기타자산	1,851	13,498	25,704	6,441	2,439	2,798	2,258	1,952	3,573	2,403	3,139	8,552	14,307	14,913	19,290	23,191	20,497	18,911	19,181	23,354
자산합계	88,572	215,338	244,956	146,106	119,489	110,540	106,065	112,816	121,706	151,558	174,485	236,394	359,819	420,278	466,895	551,333	545,881	609,332	730,737	818,899
차입금	37,867	55,932	87,466	60,251	40,457	44,493	46,542	34,613	6,920	3,475	12,677	17,267	44,586	28,947	34,990	52,842	27,570	54,885	100,183	119,576
콜머니	2,279	25,820	1,118	-	10,636	2,800	2,377	-	4,066	3,038	5,193	2,216	5,657	12	7,858	679	-	-	-	-
발행금융채권	25,270	70,283	56,339	48,982	37,960	31,347	26,638	42,796	67,440	85,705	100,118	154,640	227,466	304,059	329,321	392,036	400,203	427,098	472,917	532,396
지급승낙	7,223	34,091	55,380	-	-	-	-	-	-	-	-	-	-	-	-	-	-	-	-	-
연불어음매도	-	-	8,558	-	-	-	-	-	-	-	-	-	-	-	-	-	-	-	-	-
대출금매도	-	-	2,153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5,498	16,753	13,517	7,034	3,626	3,823	2,411	3,622	7,839	10,556	8,897	12,915	31,206	22,626	29,497	30,682	32,452	34,847	58,835	56,668
자본금	6,859	8,709	16,758	24,758	26,758	26,758	27,258	27,658	27,758	32,958	33,058	33,088	39,588	50,088	51,588	62,588	71,381	72,381	77,481	88,781
잉여금	3,576	3,750	3,667	4,034	3,078	3,260	3,425	3,866	4,641	6,870	8,416	10,090	10,784	11,042	11,664	13,009	14,162	19,543	20,211	20,278
자본조정	-	-	-	1,047	-3,026	-1,941	-2,586	261	3,042	8,956	6,126	6,178	532	3,504	1,977	-503	113	578	1,110	1,200
부채 및 자본합계	88,572	215,338	244,956	146,106	119,489	110,540	106,065	112,816	121,706	151,558	174,485	236,394	359,819	420,278	466,895	551,333	545,881	609,332	730,737	818,899

8

요약 대차대조표

2016 - 2025

단위: 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현금 및 예치금	38,633	20,919	36,829	48,528	40,257	44,627	99,310	125,911	129,158	76,282
유가증권	91,566	101,448	128,000	122,239	154,171	159,488	175,394	194,802	243,322	305,818
대출증권	728,631	662,982	702,167	715,876	722,112	763,967	889,150	862,982	885,590	889,282
은행간대출금	5,556	19,252	-	-	12,066	10,670	3,886	14,828	1,671	3,542
지급승낙대충	-	-	-	-	-	-	-	-	-	-
연불어음매도대충	-	-	-	-	-	-	-	-	-	-
대출금매도대충	-	-	-	-	-	-	-	-	-	-
고정자산	2,731	2,685	2,661	2,651	2,631	2,704	2,730	2,927	3,260	3,505
기타자산	30,635	32,174	28,336	33,247	44,663	33,062	50,229	52,494	50,398	39,289
자산합계	897,753	839,459	897,992	922,541	975,900	1,014,517	1,220,700	1,253,944	1,313,399	1,317,718
차입금	97,614	60,135	48,935	65,964	60,766	48,063	100,660	55,322	68,540	54,424
콜머니	-	-	-	2,000	-	7,706	468	-	-	-
발행금융채권	621,190	606,851	659,430	671,376	726,418	764,861	877,916	932,565	931,949	915,913
지급승낙	-	-	-	-	-	-	-	-	-	-
연불어음매도	-	-	-	-	-	-	-	-	-	-
대출금매도	-	-	-	-	-	-	-	-	-	-
기타부채	66,749	47,340	54,802	46,285	44,022	40,358	87,300	86,549	99,662	84,418
자본금	103,981	118,150	118,150	118,711	124,495	127,483	127,733	147,733	168,733	171,733
잉여금	5,352	7,080	11,167	13,556	13,489	18,557	20,514	26,387	33,653	46,800
자본조정	67	-1,293	-1,293	-1,295	-1,323	-1,337	-1,338	-1,434	-1,535	-1,5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00	1,197	6,803	5,944	8,033	8,827	7,448	6,823	12,398	45,979
부채 및 자본 합계	897,753	839,459	897,992	922,541	975,900	1,014,517	1,220,701	1,253,944	1,313,399	1,317,718

9

요약 손익계산서

1976 - 1995

단위: 억 원

구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대출금이자	28	65	88	150	263	554	943	1,206	1,861		2,472	2,698	1,902	1,496	1,413	1,718	2,154	2,024	1,863	2,475	3,408
예치금이자	-	1	34	17	19	21	11	7	20		575	979	465	148	98	60	262	538	262	297	311
유가증권이자	1	22	37	47	68	14	11	15	13		4	19	172	274	79	21	183	132	90	112	151
수입잡이자	-	2	29	45	48	44	44	35	132		314	444	625	420	346	273	846	10	4	2	1
수입수수료	0	2	3	1	2	9	24	32	46		48	48	35	32	22	28	48	50	76	106	118
보종료	-	0	0	0	0	4	12	9	7		7	4	2	2	1	1	1	2	3	3	7
외화환산액	0	17	36	17	224	97	110	197	421		787	372	6	0	202	309	155	170	109	100	73
선물거래익	-	-	-	-	-	-	-	-	-		-	-	-	-	-	-	-	331	458	409	292
정부이자보전금	-	-	-	-	-	45	177	162	150		188	-	-	-	-	-	-	-	-	-	-
유가증권매매익	-	-	-	-	-	-	-	48	278		157	-	-	-	-	-	-	-	-	-	-
기타수익	-	-	24	33	45	7	0	1	2		10	162	111	62	10	8	28	108	34	22	51
수익합계	29	109	251	310	669	795	1,332	1,712	2,930		4,562	4,726	3,318	2,434	2,171	2,418	3,677	3,365	2,899	3,526	4,412
차입금이자	10	20	41	69	207	471	827	1,043	1,417		1,577	1,394	751	561	582	766	1,015	776	638	1,135	1,747
콜머니이자	-	-	-	-	-	-	-	-	-		-	-	-	-	-	-	-	-	-	45	78
발행금융채권이자	-	-	-	-	-	-	-	-	18		153	330	321	267	288	280	506	695	747	765	924
기타지급이자	-	5	57	77	105	241	339	502	1,228		1,632	1,619	1,135	732	552	526	789	47	20	16	13
지급수수료	0	7	10	5	2	32	33	59	63		57	44	7	7	1	4	5	3	10	15	8
외화환산손	-	18	25	16	-	-	-	-	50		357	411	318	639	125	24	-	26	4	65	99
선물거래손	-	-	-	-	-	-	-	-	-		-	-	-	-	-	-	-	299	454	443	274
관리업무비	2	9	15	23	31	41	51	63	71		86	98	111	121	138	163	207	248	281	338	393
총당금 및 준비금 전입액	0	24	33	48	105	3	66	33	62		449	399	286	32	83	122	345	189	307	247	406
이연자산상각	1	1	1	-	-	-	-	-	-		18	25	23	9	1	15	39	37	25	5	13
영업외비용	-	-	-	-	-	-	-	-	-		-	-	-	-	2	30	10	20	30	16	0
기타비용	1	0	0	0	0	1	3	2	4		2	3	2	4	4	3	11	9	12	25	7
법인세 등	1	2	5	7	22	1	2	3	4		33	116	84	8	99	125	258	318	135	129	144
비용합계	15	86	187	245	472	790	1,321	1,705	2,917		4,364	4,439	3,038	2,380	1,875	2,058	3,185	2,667	2,663	3,244	4,106
당기순이익	14	23	64	65	197	5	11	7	13		198	287	280	54	296	360	492	698	236	282	306

9
요약 손익계산서

1996 - 2015

단위: 억 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자수익	5,140	8,045	13,210	9,953	8,137	5,980	4,476	3,707	4,112	4,927	7,416	10,370	14,074	14,359	12,885	14,039	17,709	16,983	16,888	18,874
수수료수익	131	225	385	595	532	636	716	1,027	1,494	1,456	1,343	1,465	1,856	2,470	2,698	2,836	3,007	3,426	3,574	3,771
기타영업수익	107	290	1,382	2,254	2,834	1,223	1,523	2,352	3,145	4,811	3,979	11,013	35,251	22,754	25,269	24,376	24,194	34,868	32,550	42,003
영업외수익	6	27	29	1,136	706	91	157	543	364	2,903	53	49	42	129	101	126	182	138	107	132
특별이익	0	0	33	-	-	-	-	-	-	-	-	-	-	-	-	-	-	-	-	-
수익합계	5,384	8,587	15,039	13,938	12,209	7,930	6,872	7,629	9,115	14,097	12,791	22,897	51,223	39,712	40,953	41,377	45,092	55,415	53,119	64,780
이자비용	3,318	6,040	10,278	7,884	6,464	4,763	2,991	2,600	3,193	3,923	4,886	8,169	11,069	12,239	9,465	10,744	14,287	13,357	12,944	12,010
수수료비용	608	663	876	715	474	539	607	745	862	1,012	18	42	31	40	29	81	60	31	49	77
기타영업비용	923	1,517	3,046	5,074	4,856	2,256	2,244	3,278	3,861	6,088	5,533	12,180	38,141	27,038	30,407	28,969	28,768	41,172	39,086	52,236
이연자산상각	29	40	121	-	-	-	-	-	-	-	-	-	-	-	-	-	-	-	-	-
영업외비용	10	21	321	125	227	154	321	391	136	11	37	21	27	55	69	42	107	122	108	102
특별손실	1	0	10	0	-	-	-	-	-	-	-	-	-	-	-	-	-	-	-	-
법인세비용 등	155	68	184	44	51	34	166	174	288	818	634	643	1,015	82	316	73	381	136	264	135
비용합계	5,044	8,349	14,836	13,842	12,072	7,746	6,329	7,188	8,340	11,852	11,108	21,055	50,283	39,454	40,286	39,909	43,603	54,817	52,451	64,560
당기순이익	340	238	203	96	137	184	543	441	775	2,245	1,683	1,842	940	258	667	1,468	1,489	597	668	220

2016 - 2025

단위: 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자수익	22,315	26,837	29,513	30,952	22,887	17,455	30,705	58,565	60,623	52,401
수수료수익	4,567	4,011	3,236	3,547	3,755	3,100	3,630	4,647	4,661	4,200
기타영업수익	44,056	49,103	34,071	51,304	57,607	46,033	97,338	73,541	89,557	76,887
영업외수익	231	150	314	407	251	183	151	199	216	263
수익합계	71,169	80,100	67,135	86,211	84,500	66,771	131,824	136,954	155,058	133,751
이자비용	14,168	16,037	19,684	22,168	14,080	8,410	21,181	49,735	52,986	43,477
수수료비용	84	94	83	151	139	211	262	313	330	235
기타영업비용	54,784	42,118	34,178	44,892	58,917	42,965	99,260	72,931	79,063	64,475
이연자산상각	-	-	-	-	-	-	-	-	-	-
영업외비용	235	154	199	4,670	1,555	150	137	197	197	324
특별손실	-	-	-	-	-	-	-	-	-	-
법인세비용 등	16,769	19,969	7,023	11,315	8,784	9,558	7,114	6,550	12,687	8,390
비용합계	86,042	78,372	61,165	83,195	83,476	61,295	127,954	129,726	145,262	116,901
당기순이익	-14,873	1,728	5,970	3,016	1,024	5,476	3,870	7,228	9,796	16,850

날짜			내용
1976	04	08	재무부,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결정
		10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위원회 구성 및 설립사무국 발족
	05	12	초대 송인상 은행장 임명
	06	21	한국수출입은행 설립등기
	07	01	정관 및 직제분과규정 제정
			한국수출입은행 설립(법정자본금 1,500억 원)
1977	01	01	수출보험 업무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인수
	03	31	제16차 업무방법서 개정(선수금 환급보증조항 신설 등)
	06	15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1억 5,800만 달러)
	12	19	제2차 「수은법」 개정(법정자본금 증액 1,500억 원 → 5,000억 원, 부대 업무 수행 근거조항 신설 등)
1978	06	01	뉴욕 및 런던 사무소 개소
	09	01	홍콩 사무소 개소
	12	07	은행 차관 도입 계약 체결(2억 달러)
1979	02	06	전대자금 신용한도 공여계약 체결(칠레Banco Israelita de Chile)
	06	19	도쿄 사무소 개소
		20	아비잔 사무소 개소
	09	15	연불수출지원 방식을 구매자 신용 방식으로 전환 결정
	11	10	제25차 업무방법서 개정(국내금융기관 협조용자 근거조항 신설 등)
1980	08	20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스웨덴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1,800만 달러)
	12	15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노르웨이 Eksportfinans, 4,100만 달러)
1981	02	06	제28차 업무방법서 개정(대외지급보증업무 취급 근거 신설 등)
	06	01	UBAF 등 40개 국제금융기관과 은행차관 도입계약(2억 달러) 및 WellsFargo은행 등과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2억 달러)
	09	01	산티아고 사무소 개소
1982	03	12	싱가포르 BTC 등 36개 해외 금융기관과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3억 달러)
	05	07	AfDB와 협조용자 등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07	26	산업설비 수출허가 업무 개시
	08	07	국별신용도 평가 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
	11	01	자카르타 사무소 개소
			수출입은행 『조사월보』 창간
	12	17	본점 신축 기공식

날짜	내용		
1982	12	23	노동조합 결성
1983	03	14	LTCB Asia Ltd. 외 6개 해외 금융기관과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3억 4,400만 달러)
	09	19	직원임용규정 개정
	11	30	은행차관 도입(100억 엔)
1984	01	30	연화채권 발행
	07	13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3억 달러)
	11	21	FRN 발행(5,000만 달러)
1985	01	22	유류산업설비의 수출지원 지침 제정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지침 제정
	06	18	DG Bank 외 7개 해외 금융기관과 마르크화 채권 발행계약 체결(1억 마르크)
	08	31	본점 신축
1986	01	20	최초 스위스 프랑 채권 발행(5,000만 스위스 프랑)
	06	09	직무분석 실시
	12	0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31	제3차 「수은법」 개정(법정자본금 증액 5,000억 원 → 1조 원, 결산보고 절차 및 여유금운용방법 자유화 등)
1987	01	30	여유자금운용요강 제정
	05	27	내국신용장 수혜자에 대한 직접대출 실시 결정
	06	01	EDCF 업무 개시
	12	30	정부 최초 EDCF 지원 결정(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및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1988	01	30	1984년 도입 50억 엔 채권 조기 상환
	03	22	수입자금대출 승인 절차 규정 및 지원지침 제정
	08	01	홍콩 현지법인(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설립
		10	
	11	15	해외투자연구소 설립
	1989	03	22
05		29	EDCF 차관 공여계약 체결(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1,000만 달러)
09		15	해외투자 신고수리 업무 취급 개시
10		20	수출입금융채권규정 제정
11		09	수출입금융채권규정 시행요강 제정

날짜		내용	
1989	11	30	최초 EDCF 집행(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12	01	파리 사무소 개소
1990	05	11	1억 5000만 ECU의 외화채권 발행계약 체결
	09	21	FRN 발행(1억 달러)
	12	29	한국은행과 외화자금 예치거래약정 체결 및 외화예치금 운용지침 수립
		31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1	03	22	국내 최초 역이중통화 표시채권 발행
		31	장기발전방안 수립
			IKCF 수탁
	04	12	유로시장에서 신디케이트론 도입(1억2,000만 달러)
		22	모스크바 사무소 개소
	05	01	최초 양키본드 발행(2억 달러)
		20	일본에서 제2차 사무라이 본드 발행(400억 엔)
	06	10	제47차 업무방법서 개정(수출자금 지원조건의 OECD 수출신용협약체제 조정 등)
	07	26	SEC에 채권 일괄 등록(10억 달러)
	08	07	U.S.MTN 발행 프로그램 설정(7억 달러 이내)
	11	28	최초의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12	05	자카르타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 체결
1992	06	01	자카르타 현지법인(수은인니금융) 설립
	07	01	수출보험 업무 한국수출보험공사(現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이관
		15	런던 현지법인(수은영국은행) 설립
	09	15	멕시코시티 사무소 개소
	11	09	호치민시티 사무소 개소
			하노이 사무소 개소
1993	01	13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변동금리부 방식 도입
	02	01	북경 사무소 개소
		03	한국외환은행·일본장기신용은행 등 국내외 4개 은행과 중국 농업은행 앞 협조대출계약 체결(1,900만 달러)
	06	15	재무부, ADB와의 협조융자 기본협정 체결
	09	24	상파울루 사무소 개소
1994	02	01	워싱턴 사무소 개소

날짜		내용	
1994	04	01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직접대출제도 도입
	05	10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외화대출 취급 개시
	08	30	FRN 드래곤본드 발행(2억 달러)
	09	01	뉴델리 사무소 개소
1995	07	18	『EDCF Annual Report』 창간호(1994) 발간
	08	04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신용대출제도 도입
	09	04	대북 쌀지원 관련 IKCF 1차 집행
		27	
1996	02	08	글로벌 본드 발행(5억 달러)
		10	제1차 아시아 ECA 연례 회의 참가
	06	17	유로달러 본드 발행(2억 달러)
		08	21
	22		일본 경제단체연합과 역외금융지원용 30억 엔 차입 서명식
	27		베를린 사무소 개소
	29		마닐라 사무소 개소
	11		05
		06	OECD GOP 회원 가입
		14	양키본드 발행(3억 5,000만 달러)
		22	호치민 현지법인(수은 베트남리스회사) 설립
1997	02	04	글로벌 본드 발행(5억 달러)
	03	14	채권 발행(5억 마르크)
		20	글로벌 본드 발행(6억 5,000만 달러)
	05	15	상해 사무소 개소
		14~16	US 및 유로CP 프로그램 설정
	07	01	해외투자정보시스템 인터넷서비스 개시(주요 56개 국)
	11	06	유로MTN 프로그램 설정
1998	01	13	제5차 「수은법」 개정(법정자본금 1조 원 → 2조 원 증액 등)
	03	27	IBRD 차관 도입(5억 달러)
	05	27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도입(1,300억 엔)

날짜		내용	
1998	06	01	무역어음 제한인제도 시행
	09	16	제6차「수은법」개정(법정자본금 2조 원 → 4조 원 증액 등)
	10	14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
	11	19	리스크관리위원회 발족
	12	30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3억 달러 규모의 ABS 발행
1999	03	09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500억 원)
		19	최초 대북 비료 지원 결정(5만 톤)
	04	08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2,000억 원)
		13	ADB와 협조융자 의향서 교환
	06	16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07	01	해외투자통계 분석 업무 개시
	08	06	해외투자통계시스템 구축
	11	22	경영혁신 최우수상 수상
2000		15	북한 경수로사업 지원을 위한 차관 협정 체결
	03	17~21	2000년 국제금융 박람회 참가
	05	22	DCR, 수은신용등급 상향 조정(BBB → BBB+)
	08	01	해외경제정보시스템(OEIS) 출범
	09	09	경의선 철도 및 국도 1호선 연결사업 지원(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 의결)
2001	10	04	대북 식량차관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50만 톤)
	11	21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신용대출제도 도입 등)
	02	28	EDCF 발전 대토론회 개최
2002	03	27	중소기업 앞 포괄수출금융제도를 중견기업까지 대상 확대
	06	29	금강산 관광사업 대출승인(차주 : 한국관광공사)
	07	11	개도국 무역촉진 프로그램 전담작업반 구성
	08	25	WB와 협조대출 기본협약 체결
	12	31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대출금리체계 개편 등)
2003	01	28	여신부문 본부제 및 팀제 도입(본점 5개 여신부서 → 4개 여신본부 개편 등)
	04	01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 선박 직접대출제도 도입
	06	25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 선박 직접대출 최초 지원
	09	16	대북 식량차관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40만 톤)

날짜		내용	
2002	09	17	동해선 철도 및 국도 7호선 연결사업 지원
		30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지원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계약 체결
	10	08	중소기업 수출 특례신용 대출제도 도입
	11	28	제8차「수은법」개정(자금대출, 어음할인, 채무보증의 요건완화 등)
	12	05	모스크바 사무소 재개소
2003	02	06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중소기업신용대출 특례대출 도입 등)
	03	17	IBRD 차관 조기 상환(10억 7,800만 달러)
	09	08	남북 간 청산결제 업무 취급기관 지정
	11	13	대전출장소 지정 승격
	12	31	EDCF에 대한 정부 출연 6년만에 재개(800억 원)
			멕시코시티 사무소 재개소
2004	01	01	연수 이수확점제 도입
		02	2004~2006 중기경영 로드맵 수립
		28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북한소재자산제공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 등)
	03	15	IBRD 차관 잔액 조기상환(9억 달러)
	05	14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
	06	25	『유로머니지』로부터 최우수 차입자로 선정
			상해 사무소 재개소
			남북 청산결제 은행간 합의서 체결
		30	북한경제연구학술지 『수은북한경제』 창간
	07	16	대북 식량차관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40만 톤)
2005	08	11	홍콩 현지법인 설립
		27	뉴델리 사무소 재개소
	09	01	EDCF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세부기준 제정
		23	대북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 시행
	12	17	보수체계 개편(임금피크제 및 직무가치 중심형 임금상한제 도입)
		21	『IFR』, 『Finance Asia』, 『The Asset』 등 3대 세계 금융전문지로부터 2004년도 최우수 차입기관으로 선정

날짜			내용
2005	02	03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북한소재 투자자산담보 인정 등)
		10	IDB와 업무협약 체결
	03	03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1,600억 원)
		08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1,000억 원)
			워싱턴 사무소 개소
		09	글로벌 본드 발행(10억 달러)
			울산지점 개점
		10	청주지점 개점
		16	전주지점 개점
	04	04	파리 사무소 개소
		11	한국, EU의 한국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보조금 소송에서 승소
	05	01	제1회 한·중·일 수출입 은행장 회의
		23	조직 및 인사개편 단행(전면적 본부장제 도입, 직위공모 확대 및 임금피크제 본격 실시 등)
		31	두바이 사무소 개소
	07	01	신 CI 선포 및 수출입은행 경영이념(EXIM WAY) 정립
	08	07	개도국 개발차관 프로젝트 컨설턴트풀 제도 시행
	09	19~24	제1회 해외고객 초청 컨퍼런스
		26	제10차 「수은법」 개정(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방식의 지원근거 마련 등)
	10	25	일사일촌 결연(홍천군 동면 성수리)
		28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개성)
	11	10	AfDB와 양해각서 체결
		15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수립 발표
		21	해외직접투자통계 정보시스템(ODISIS) 가동
2006	01	03	정부,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2006~2009 EDCF 운용전략계획 수립
	03	0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출범
	04	03	IIC와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18	수출전망지수 개발
		24~30	제1차 KOAFEC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최
	06	30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개정(경쟁입찰 원칙 도입)
	10	31	Moody's, 수은신용평가등급 3단계 상향 조정(A3 → Aa3)

날짜			내용
2007	02	15	소액차관 도입
		26	해외직접투자통계 업무 전반 확대 수탁
	06	15	비구속성 차관 도입 로드맵 수립
		07	EDCF 최초의 기본약정 체결(베트남)
	08	21	인도 ICICI와 최초 투스텝복합금융 한도계약 체결(2억 달러)
	09	16~18	2007년 한·중남미 무역 투자 포럼
	10	18	대북 투자통계 업무 시행
	12	24	민자사업 차관 도입
2008	01	16	『The Asset』으로부터 2007년도 최우수 차입기관으로 선정
	07	11	Offtake Financing 지원제도 도입
	10	27~31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컨퍼런스(KOAFEC)
	11	04	정부 외평기금(250억 달러) 수탁 업무 개시
	12	21	『IFR Asia』로부터 2008년도 최우수 차입기관으로 선정
		31	연간 승인 규모 1조 원 최초 돌파(1조 2,373억 원)
2009	01	13	글로벌 본드 발행(20억 달러)
	04	01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최초 집행
	06	30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시행약정 체결
	08	10	직급체계 축소 개편
	11	25	OECD DAC 가입
2010	01	07	제14차 「수은법」 개정(법정자본금 증액 4조 원 → 8조 원, 정부 현금출자로 자본금 2,600억 원 증자)
		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06	22	글로벌 본드 발행(12.5억 달러, 리먼브라더스사태 이후 한국계 기관 최초 10년 만기 달러화 채권 발행)
2011	01	28	우리다시 본드 발행(400억 엔)
	03	14	MDB와 공동컨설팅을 위한 KSP 최초 계약 체결
			KSP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총괄기관 선정
	05	02	우리 기업 최초 투자개발형 해외 수력발전사업에 PF 금융 지원(파키스탄 파트린드 민자 수력발전사, 1.1억 달러)
	06	28	한국계 기관 중 사상 최대 사무라이 본드 발행(800억 엔)
	07	14	금융자문·추선 업무 도입
	08		쌍방향 인사시스템 구축과 본부장 권한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03	마닐라 사무소 개소

10

연표

날짜		내용	
2011	08	11	한국계 기관 최초 담석 본드 발행(6,200만 달러 상당)
	12	22	자카르타 사무소 개소
2012	01	05	한국계 사상 최대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22.5억 달러)
	05	15	국내 건설사 최초 해외 수처리기업 이니마 인수에 금융지원(GS건설, 1,800억 원)
	11	15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지원하는 프로그램 차관 사업 최초 승인
	12	11	OECD DAC 동료평가 최초 실시
2013	01	04	『PFI』로부터 2012년 최우수 ECA 국제기구에 선정
			호주 이치스 LNG, 튀르키예 유라시아 해저터널 등 4건의 자원사업 올해의 프로젝트상 선정
	02	28	중소·중견기업 앞 상생협력대출 도입
	04	10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05	27	국내 10개 금융기관과 미국 사빈패스 LNG 플랜트사업에 liF 금융지원(15억 달러)
	07	04	『TFM』으로부터 2013년 최우수 아시아-태평양 수출신용기관으로 선정
	08	08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남북경제협력보험금 지급 개시
	09	30	선박채권보증 세계 최초 도입(스콜피오탱커스 앞 직접대출 1.75억 달러, 선박채권보증 1.25억 달러)
	12	31	누적 승인 규모 10조 원 돌파
2014	01	13	『The Asset』으로부터 2013년 아태지역 최우수 조달기관, 2013년 아태지역 최우수 국책기관, 한국 최우수 채권 발행으로 선정
	04	15	북한개발연구센터 개소
		30	원주·구미·여수출장소 개소
	06	01	세계국가편람 모바일 앱 출시
		26	투자금융실 신설
	07	01	본점 증축공사 준공
		15	제19차 「수은법」 개정(법정 자본금 증액 8조 원 → 15조 원, 업무조항 포괄화, 출자·펀드 투자제한 완화 등)
	10	01	수은 최초 직접투자 승인
2015	01	02	서비스산업금융부 신설
		13	사상 최대규모 글로벌본드 발행(22.5억 달러)
	02	10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10억 위안)
2016	03	26~29	IDB 한국총회 개최

날짜		내용	
2015	03	30	종합수지관리시스템 가동
	05	15	최초 PPP사업 지원
	06	03	담석 본드 발행(12.5억 위안)
	07	02	리스크관리단을 리스크관리본부로 확대·개편
			국내 8개 금융기관과 미국 사빈패스 LNG 플랜트사업 PF 금융지원(17.5억 달러)
	08	05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기금 지원
	09	12	민간협력차관, 섹터개발차관, 국제개발기구 앞 차관 제도 도입
		22	해외온렌딩 자금 첫 집행
	12	22	해외경제정보 모바일 앱 출시
		31	개발금융 도입
			이스탄불 사무소 개소
2016	02	01	EDCF 세이프가드 공식 도입
		25	『Post-Sanction 이란 경제 전망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발간
	03	08	유로화 채권 발행(7억 5,000만 유로)
	04	26	『이란의 주요 산업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발간
	05	19	사상 최대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25억 달러)
	10	14	글로벌본드 발행(25억 달러)
		20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에 금융 지원(31억 달러)
		28	콜롬보 사무소 개소
	31		수은 혁신안 발표
2017	11	22	한국전력공사 수주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발전사업에 PF 금융 지원(1억 2000만 달러)
	12	31	누적승인 규모 15조 원 돌파
	01	17	CABEI와 EDCF 협조용자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체결
		07	캥거루본드 발행(5억 호주 달러)
	04	24	신(新) EXIM 정보시스템 가동
	05	22	유로화 채권 발행(7.5억 유로)
	06	23	프랑화 채권 발행(2.5억 스위스 프랑)
	09	28	EDPF 대출 취급규정 제정
2018	03	18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 건설·운영사업 금융 지원(6억 유로)
	03	25	ADFD와 수출금융제도 구축 컨설팅 계약 및 개도국 개발사업 협조용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날짜			내용
2018	06	21	아시아 기관 역대 최대 규모 사무라이 본드 발행(1,200억 엔)
	07	03	비전 2030 발표
	08	29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3호선 전동차 공급사업에 EDCF 차관 공여계약 체결(2억 4,300만 유로)
	12	06	국내 최초 SDG 본드 발행(총 3,500억 원 규모)
2019	08	02	ECA 최초 멕시코 현지서 채권 발행(70억 멕시코 페소)
		19	네팔 수력발전사업에 EDPF 최초 지원
	11	26	영국 런던 실버타운 터널 건설·운영사업 PF 금융 지원(1.9억 파운드)
		28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에 EDCF 지원(3,160만 달러)
2020	01	03	2020 세계국가편람 모바일 서비스 개시
		14	윤리준법실 신설
	02	06	코로나 쇼크 속 글로벌본드 한국물 발행
	03	25	코로나19 피해기업 위한 긴급 금융지원(20조 원)
	04	20	미달러화(7억 달러)·유로화(7억 유로) 채권 동시 발행
	05	20	캥거루 본드 발행(7억 호주 달러)
	06	26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최초 계약 체결
	08	13	아일랜드 ESS 프로젝트 PF 금융 지원(5,620만 유로)
		19	국내 금융기관 최초 SOFR 채권 발행
	10	06	국책은행 최초 ISO 37001 국제 인증 획득
	11	23	수은 미래발전방안 수립
2021	02	04	역대 한국 외화공모채권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글로벌 본드 발행(15억 달러)
		22	글로벌 ESG펀드 조성(2,000억 원 규모)
	04	01	현대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시장 선점 위한 산업금융 지원협약 체결(3조 원)
		14	TXF, 2020년 최고 ECA 선정
	05	27	CABEI와 EDCF 제공 차관 공여계약 체결(국제개발금융기구에 최초 직접 지원, 5,000만 달러)
	06	17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으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 지원(7.6억 달러)
		23	글로벌본드 발행(한국계 금융기관 최초 20년 만기 장기물 포함, 20억 달러)
	07	01	국책은행 최초 ESG 경영 로드맵 발표
		15	ESG경영부 신설
			영국 풍력발전시장 진출기업에 금융 지원(세아제강지주에 대출 450억 원, 영국 현지법인에 100억 원 지분투자)
		19	디지털 공급망금융으로 의류수출기업에 유동성 공급(3,000만 달러)

날짜			내용
2021	07	25	차세대 모빌리티분야에 1,000억 원 출자 발표(차세대 동력장치 등 9개 분야)
	09	03	개도국 수출환어음 매입(포페이팅) 업무 개시
	09	22	이집트 철도현대화 사업에 최초 복합금융 지원(EDCF와 EDPF 함께 제공, 3억 1,225만 달러)
	10	29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성장 협력 업무협약 체결
	11	24	제1차 ESG위원회
		25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구축
	12	01	해외온렌딩 디지털 플랫폼 가동
2022		06	싱가포르 트레이딩기업 Trafigura에 최초 공급실적 유지조건부 금융지원(1억 5,000만 달러)
	01	06	역대 최대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30억 달러)
		16	UAE ADNOC과 기본여신 약정계약 체결(50억 달러)
		21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사업에 EDCF 차관 지원 공여계약 체결(2억 5,000만 달러)
	02	23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분야 펀드 조성(1,000억 원)
	03	24	노르웨이 고속국도사업에 PF 현지화 금융 지원(3,700억 원)
	04	11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 가동
		21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건설사업에 EDPF 지원(2.1억 달러)
	05	18	한국계 기관 사상 최대 규모 유로화 글로벌본드 공모 발행(15억 유로)
	07	19	포스코케미칼과 F/A 체결(1조 원)
	08	23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싱가포르 법인 설립
	09	25	UAE 해저 초고압직류 송전망사업에 PF 금융 지원(12억 달러)
	10	24	제46차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 개최
	11	21	더존비즈온과 간접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공급망팩토링 업무협약 체결
		25	2022 개발협력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12	28	대한적십자사에 한헬버스 3대(9억 원 상당)와 후원금 5억 원 전달
2023	01	04	역대 최대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35억 달러)
	03	01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분야 중점투자펀드 조성에 출자(1,500억 원)
		07	ARAMCO와 기본여신 약정계약 체결(60억 달러)
		10	EDCF 성과공유 워크숍(캄보디아)
	16		IDB Invest와 중남미 수출금융 제공 위한 전대금융 보증계약 체결
		28	제24차 「수은법」 시행령 개정(대외채무보증 제약 완화)

10

연표

날짜		내용	
2023	05	15	해외민간투자촉진 프로그램(PIPP) 도입
	06	20	역대 최대 규모 캥거루 본드 발행(8.5억 호주 달러)
		22	베트남 현지법인 하노이 영업소 개소
	06	28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분야에 정책금융 집중 지원(45조 원)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에 출자(1,500억 원)
	08	23	『2022 EDCF 평가연보』 최초 발간
	10	11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에 출자(총 500억 원)
	11	26	한국계 금융기관 역대 최대 규모 신디케이트론 도입(8억 달러)
	12	06	오만 마나1 태양광 발전 사업에 PF 금융 지원(1.7억 달러)
		31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4	02	22	『PFI』로 부터 Deal of the year 2023 선정
	03	19	제27차 「수은법」 개정(법정 자본금 증액 15조 원 → 25조 원)
		25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펀드 조성(1조 원)
	05	20	희망의 숲 3호 조성(서울 영등포구)
		23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석유화학설비 건설사업에 PF 금융 지원(10억 달러)
	06	14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에 EDCF 차관공여계약 체결(1억 8,519만 유로)
		27	방글라데시 카르나폴리 철도·도로·교량 건설사업에 차관 제공(8.1억 달러)
	07	02	호주 희토류광산 개발에 PF 금융 지원(1억 5,000만 달러)
		08	UAE 아즈반 태양광발전사업에 PF 금융 지원(1억 5,000만 달러)
	08	07	필리핀 두마게떼 신공항 건설사업에 차관 지원(2억 6,000만 달러)
	09	05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2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1조 원)
		27	제2차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30	개도국 민간투자자금대출 취급규정 제정
			해외사업의 개도국 개발효과 검토 기준 제정
	10	04	최초 공급망안정화기금 원화채권 발행
		09	한국물 최초 미 달러화 개발금융채권 발행
	11	05	대한적십자의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30억 클럽 선정(누적 30억 5,000만 원 후원)
		14	EDCF 기후주류화(Climate Mainstreaming) 세미나 개최
	12	12	EDCF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필리핀)

날짜		내용	
2025	01	07	글로벌 본드 발행(30억 달러)
		23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및 시행
	02	16	첨단전략산업 중점 투자 펀드 조성에 출자(2,000억 원)
	03	21	한국물 최대 규모 캥거루 본드 발행(10억 호주 달러)
	04	11	수출위기 대응 위해 정책자금 지원(약 20조 원)
	06	17	사우디아라비아 사다위 태양광발전사업에 PF 금융 지원(2억 2,500만 달러)
		18	바르샤바 사무소 개소
		21	전국 11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11대(3억 원 상당) 후원
		25	수은 IT센터 개소
	07	01	스틸링 본드 발행(채권 만기 3년 4개월, 3억 파운드)
		03	대만 장화2 해상풍력발전사업에 PF 금융 지원(45억 대만 달러)
		07	국내기관 최초 완탕본드 발행(채권 만기 3년, 24억 홍콩달러)
		17	개도국에 EDCF 청년지역전문가 44명 파견
	08	12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펀드에 2000억 출자
	09	16	15억 달러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
		28	KAI의 인도네시아 훈련기 수명연장사업에 4500만달러 지원
	11	05	제23대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25	셀트리온 미국 생산시설 M&A 3,500억 원 지원
2026	03	02	6개 시중은행과 함께 글로벌 진출 K금융협의체 출범
	04	02	공급망안정화기금 첫 글로벌본드 발행(5억 달러)
		19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KEXIM AI 구축 착수
	05	19	공급망 4사와 공급망 상생금융 플랫폼 본격 가동
	07	01	창립 50주년 기념식

한국수출입은행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소장
반장	유재형	팀장
간사	금혜민	책임조사역
총무	유지윤	조사역

편찬 위원	강동호	선임심사역	박은수	팀장	이민호	책임전문역
	공명우	선임전문역	박현희	선임조사역	이성우	책임조사역
	권진영	선임심사역	백용재	소장	이승훈	팀장
	김규동	선임조사역	석진오	팀장	이자예	선임조사역
	김대울	선임심사역	송국진	선임심사역	이재우	교수위원
	김동현	선임홍보역	송준우	책임비서역	이주은	선임심사역
	김성진	책임심사역	송호석	선임조사역	이지훈	팀장
	김성호	선임조사역	오경일	팀장	이현정	선임조사역
	김수인	책임조사역	오상균	선임조사역	이효선	선임심사역
	김예리	팀장	오영완	선임심사역	이희진	선임심사역
	김윤래	책임전문역	유묘진	선임심사역	정동욱	선임심사역
	김은경	책임조사역	유영상	법무전문위원	정호진	책임조사역
	김인중	선임심사역	윤인섭	선임조사역	조정은	책임심사역
	김현기	선임심사역	이경원	책임조사역	진수형	선임조사역
	노경수	책임전문역	이광희	선임정보역	채정민	책임심사역
	류소현	책임전문역	이기혁	선임심사역	천세영	팀장
	문승진	책임조사역	이동욱	팀장	최홍석	선임비서역
	박보연	선임정보역	이동혁	선임심사역	홍정택	책임조사역
	박세영	책임조사역	이동현	선임조사역	황민진	책임심사역

감수위원	고희원	팀장
	서밀희	소장
	양정수	팀장
	이재원	팀장
	전용준	팀장
	최민	팀장
	최정훈	팀장

도움주신 분들	조정화	권역본부장
	도병훈	팀장
	오단비	조사역
	김예지	조사역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제작	(주)사사연
	서울 강남구 논현로86길 32 4층
	TEL. 02-569-4409
	http://www.sasayeon.com

제작총괄	이언배
기획진행	송미경, 김가원
원고집필	오명근, 윤종욱, 엄경호
디자인	이병길, 신미경, 김영은, 고경훈
사진촬영	신한호, 백인승
인쇄제작	넥스프레스(031-908-7958)

한국수출입은행 50년사

50th Anniversary Korea Eximbank

1976 ————— 2026

인쇄일 2026년 8월 14일
발행일 2026년 8월 31일
발행인 황기연
발행처 한국수출입은행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www.koreaexim.go.kr
Tel. 02-3779-6114 Fax. 02-784-1030

비매품

Published by Korea Eximbank.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 전송,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인용과 발췌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의 및 수락이 필요합니다.